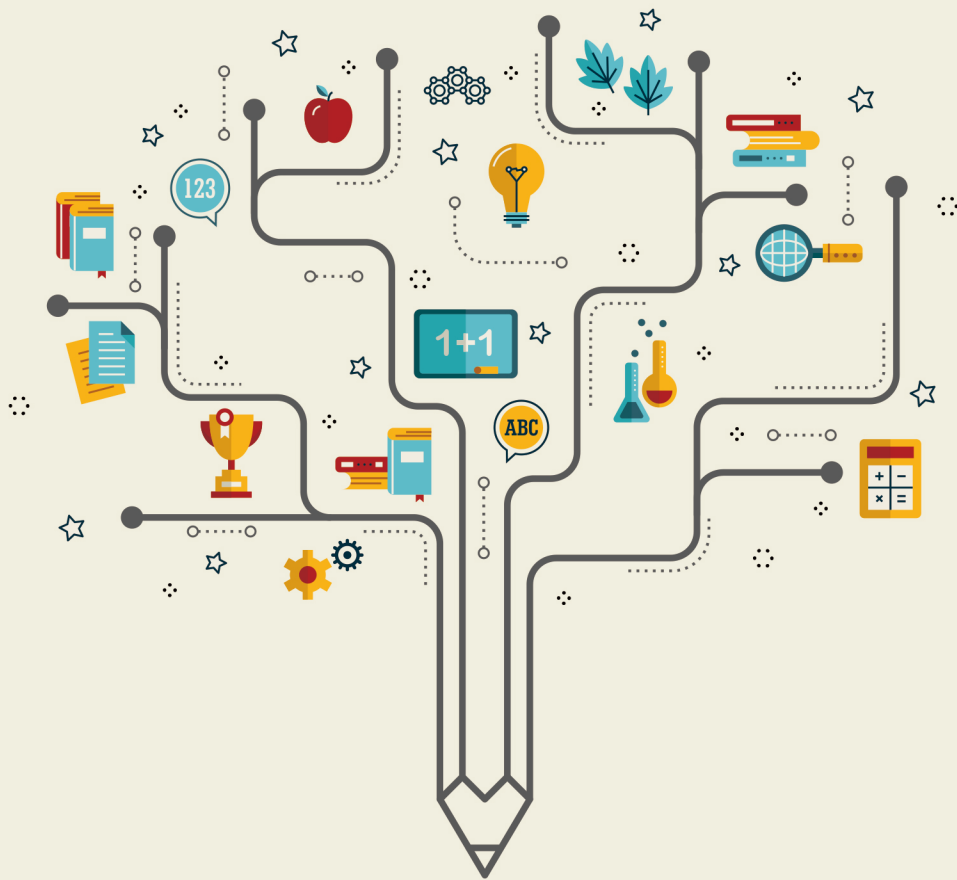


2016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017. 8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2016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017. 8.

지역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목 차

제1부 총괄	1
제1장 경제여건의 변화와 지역경제 동향	3
제1절 2016년의 국내외 경제	3
1. 세계경제	3
2. 국내경제	4
제2절 2016년 지역경제동향	6
1. 지역경제동향 개관	6
2. 생산동향	7
3. 수출동향	9
4. 고용동향	11
제2장 지역발전정책 추진경과 및 실적	13
제1절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	13
1. 지역발전정책 추진경과	13
2. 지역희망 프로젝트(HOPE)	15
3. 2단계 지역희망 프로젝트(HOPE+)	18
제2절 지역발전정책 추진실적	20
1. 「지역발전 5개년계획」의 5대 분야별 추진실적	20
2. 주민체감형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의 추진실적	27
3. 주요 지역발전정책의 추진실적	31
제3장 지역발전시책의 예산·평가 체계	36
제1절 지역발전특별회계 편성체계 및 주요 내용	36
1. 지역발전특별회계 편성체계	36
2.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절차	37
3. 2016년 지역발전특별회계 주요 내용	40
제2절 지역발전사업의 평가체계	42
1. 평가목적 및 방향	42
2. 평가 대상사업 및 평가등급	43
3. 평가체계 및 절차	45
4. 평가결과 및 활용	48

제2부 부문별 시책53

제1장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55
제1절 지역주도 협력사업 확충.....	55
1. 지역간 자율적인 협력체계 구축·강화.....	55
2. 창조적 마을 만들기.....	59
3. 지역공동체 활성화	68
제2절 주민 체감 생활인프라 구축.....	82
1. 생활체감 도시 인프라 정비.....	82
2. 농어촌 및 취약지역 정주환경 개선.....	95
3.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실현.....	107
4. 안전한 지역환경 만들기.....	118
제3절 지역 중심지 활력 증진.....	125
1. 지역 중심지 활력 증진.....	125
제4절 지역 교통·물류망 개선.....	139
1. 전국 간선도로망 및 대도시권 교통완화를 위한 도로 구축.....	139
2. 전국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망 구축.....	155
3. 항만 인프라 개선.....	161
4. 교통·물류 원활화 지원.....	167
 제2장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170
제1절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대표산업 육성	170
1.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산업 육성	170
제2절 지역투자 촉진 기반 확대.....	203
1. 기업의 지역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강화.....	203
제3절 산업단지 고도화로 창조경제 구현.....	209
1. 노후산단 창의·혁신공간 전환.....	209
2. 입주기업 혁신역량 강화 및 정주여건 조성.....	219
제4절 지역기반 연구 활성화로 창조경제 지역확산.....	225
1. 창조경제 패러다임의 지역 확산.....	225
2. 지역 R&D 기반구축 및 역량강화.....	229
3.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연구성과 사업화 촉진.....	233
제5절 지역성장 거점도시 조성.....	242
1. 과학기반 혁신거점지구 조성.....	242
2. 행복도시를 명품도시로 조성.....	250

3. 혁신도시를 지역발전거점으로 육성.....	255
4. 새만금 기반시설 조기 구축 및 개발 가시화.....	259
5. 기업도시 활성화로 지역경제 기여.....	264
6. 국제자유도시 조성지원으로 외자유치 촉진.....	268
제6절 농산어업 경쟁력 강화.....	271
1.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6차산업화 및 일자리 창출.....	271
2.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283
3. 도농상생 및 귀농·귀어·귀촌을 통한 농어촌 활력 증진.....	334
제3장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	336
제1절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	336
1. 특성화를 통한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336
2. 지역산업과 연계한 산학협력 강화	343
제2절 일과 학습 병행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348
1.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	348
제3절 100세 시대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	352
1.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352
2. 인문학 진흥 강화	356
제4장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359
제1절 지역 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 발전 지원.....	359
1. 지역문화체계 특화지역 조성.....	359
2. 지역 고유자원의 재발견 및 재창조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361
제2절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	366
1. 생활문화 및 공동체 지원.....	366
2.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368
3. 문화소외 및 취약지역 문화접근성 향상.....	372
제3절 지역 관광산업 육성	374
1.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관광거점 육성.....	374
2. 창조적 지역문화관광 활성화.....	380
3. 생태·역사·문화 콘텐츠 중심의 고품격 관광자원 개발.....	384
제4절 생태·자연환경 보존·활용	392
1. 도시 생태자원의 복원·확충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392
2. 하천·산림생태 보전·복원으로 융합적 가치 창출.....	393
3. 자연자원을 활용한 지역의 경제적 기반 및 환경 개선.....	395

제5장 사각 없는 지역복지·의료	400
제1절 지역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400
1. 주민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400
2. 지역수요를 반영한 주민체감형 건강증진사업 강화	406
제2절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	410
1. 수혜자 특성을 고려한 주민지원 시책 확대	410
2.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417
제3절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420
1.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통한 의료취약지 해소	420

제6장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	425
제1절 추진배경 및 현황	425
제2절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분야별 추진효과	427
1. 개관	427
2.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인구증가효과	427
3.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세수증대효과	430
4.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사회문화적 효과	435
5.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사회 연계효과	439
제3절 기대효과 및 향후과제	443

제3부 지역별 시책 445

제1장 서울특별시	447
제1절 서울특별시 경제 현황	447
1. 일반 현황	447
2. 산업 현황	448
3. 혁신활동 현황	449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450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452
1. 발전비전	452
2. 추진전략	453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454
1. 지역생활권 활성화	454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456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458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460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462
제4절 향후 추진계획 및 과제	463
제2장 부산광역시	464
제1절 부산광역시 경제 현황	464
1. 일반 현황	464
2. 산업 현황	465
3. 혁신활동 현황	466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467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469
1. 발전비전	469
2. 추진전략	470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471
1. 지역생활권 활성화	471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473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474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475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477
제4절 향후 추진계획 및 과제	479
제3장 대구광역시	481
제1절 대구광역시 경제 현황	481
1. 일반 현황	481
2. 산업 현황	482
3. 혁신활동 현황	484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485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486
1. 발전비전	486
2. 추진전략	487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488
1. 지역생활권 활성화	488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490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491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492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493
제4절 향후 추진계획 및 과제	494
제4장 인천광역시	495
제1절 인천광역시 경제 현황	495
1. 일반 현황	495
2. 산업 현황	496
3. 혁신활동 현황	498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499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500
1. 발전비전	500
2. 추진전략	501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503
1. 지역생활권 활성화	503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505
3.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	506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506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507
제4절 향후 추진계획 및 과제	509
제5장 광주광역시	511
제1절 광주광역시 경제 현황	511
1. 일반 현황	511
2. 산업 현황	512
3. 혁신활동 현황	514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515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516
1. 발전비전	516
2. 추진전략	517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519
1. 지역생활권 활성화	519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521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522
4. 지역 문화 융성·생태 복원	523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525
제4절 향후 추진계획 및 과제	527

제6장 대전광역시	528
제1절 대전광역시 경제 현황	528
1. 일반 현황	528
2. 산업 현황	529
3. 혁신활동 현황	530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531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533
1. 발전비전	533
2. 추진전략	534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535
1. 지역생활권 활성화	535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537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539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540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541
제4절 향후 추진계획 및 과제	543
제7장 울산광역시	545
제1절 울산광역시 경제 현황	545
1. 일반 현황	545
2. 산업 현황	546
3. 혁신활동 현황	548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549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550
1. 발전비전	550
2. 추진전략	551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552
1. 지역생활권 활성화	552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554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556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557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558
제4절 향후 추진계획 및 과제	559
제8장 세종특별자치시	560

제1절 세종특별자치시 경제 현황	560
1. 일반 현황	560
2. 산업 현황	561
3. 혁신활동 현황	563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564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565
1. 발전비전	565
2. 추진전략	566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567
1. 지역생활권 활성화	567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569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570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571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572
제4절 향후 추진계획 및 과제	574

제9장 경기도 575

제1절 경기도 경제 현황	575
1. 일반 현황	575
2. 산업 현황	576
3. 혁신활동 현황	577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579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580
1. 발전비전	580
2. 추진전략	581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582
1. 지역생활권 활성화	582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584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586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587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588
제4절 향후 추진계획 및 과제	589

제10장 강원도 590

제1절 강원도 경제 현황	590
1. 일반 현황	590

2. 산업 현황	591
3. 혁신활동 현황	592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593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595
1. 발전비전	595
2. 추진전략	596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597
1. 지역생활권 활성화	597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599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600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601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602
제4절 향후 추진계획 및 과제	603
제11장 충청북도	604
제1절 충청북도 경제 현황	604
1. 지역경제 일반현황	604
2. 지역산업현황	605
3. 혁신활동 현황	607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608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609
1. 발전비전	609
2. 추진전략	610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611
1. 지역생활권 활성화	611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613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616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617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618
제4절 향후 추진계획 및 과제	619
제12장 충청남도	622
제1절 충청남도 경제 현황	622
1. 일반 현황	622
2. 산업 현황	623
3. 혁신활동 현황	625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626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627
1. 발전비전	627
2. 추진전략	628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629
1. 지역생활권 활성화	629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631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633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634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635
제4절 향후 추진계획 및 과제	636
제13장 전라북도	637
제1절 전라북도 경제 현황	637
1. 일반 현황	637
2. 산업 현황	638
3. 혁신활동 현황	639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640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642
1. 발전비전	642
2. 추진전략	643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644
1. 지역생활권 활성화	644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647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649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650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653
제4절 향후 추진계획 및 과제	655
제14장 전라남도	657
제1절 전라남도 경제 현황	657
1. 일반 현황	657
2. 산업 현황	658
3. 혁신활동 현황	659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660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662

1. 발전비전	662
2. 추진전략	663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664
1. 지역생활권 활성화	664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666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668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669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670
제4절 향후 추진계획 및 과제	671
제15장 경상북도	673
제1절 경상북도 경제 현황	673
1. 일반 현황	673
2. 산업 현황	674
3. 혁신활동 현황	675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676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678
1. 발전비전	678
2. 추진전략	679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680
1. 지역생활권 활성화	680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682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684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685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686
제4절 향후 추진계획 및 과제	688
제16장 경상남도	690
제1절 경상남도 경제 현황	690
1. 일반 현황	690
2. 산업 현황	691
3. 혁신활동 현황	693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694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695
1. 발전비전	695
2. 추진전략	696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697
1. 지역생활권 활성화	697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699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701
4. 지역문화 융성, 생태복원	702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703
제4절 향후 추진계획 및 과제	704
 제17장 제주특별자치도	705
제1절 제주특별자치도 경제 현황	705
1. 일반 현황	705
2. 산업 현황	706
3. 혁신활동 현황	707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708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710
1. 발전비전	710
2. 추진전략	711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712
1. 지역생활권 활성화	712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714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715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716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717
제4절 향후 추진계획 및 과제	718

표 목차

제1부 총괄

<표 1-1-1> 주요 세계 경제지표.....	3
<표 1-1-2> 주요 국내 경제지표.....	5
<표 1-1-3> 지역별 생산동향.....	7
<표 1-1-4> 지역 내 주요 제조업종별 2016년 생산동향.....	8
<표 1-1-5> 지역별 수출동향.....	9
<표 1-1-6> 지역 주요 품목별 2016년 수출.....	10
<표 1-1-7> 지역별 고용동향(취업자).....	11
<표 1-1-8> 지역 산업별 2016년 취업자.....	12
<표 1-2-1> 지역발전정책 추진경과.....	14
<표 1-2-2> 2000년대 이후 지역발전정책 비교.....	14
<표 1-2-3> 주요 추진시책(6대분야 17대 추진과제).....	17
<표 1-2-4> 「지역발전 5개년계획」의 ‘5대분야 - 20개 실천과제’	20
<표 1-2-5>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분야의 주요 성과(2016년 실적).....	21
<표 1-2-6>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제고’ 분야의 주요 성과(2016년 실적).....	23
<표 1-2-7>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 분야의 주요 성과(2016년 실적).....	24
<표 1-2-8> ‘지역문화 융성, 생태복원’ 분야의 주요 성과(2016년 실적).....	25
<표 1-2-9>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분야의 주요 성과(2016년 실적).....	26
<표 1-2-10>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의 2016년 선정결과(30개).....	28
<표 1-2-11> 새뜰마을사업의 대상지 선정결과(2016년).....	30
<표 1-2-12> 생활권발전계획 수립 현황.....	32
<표 1-3-1>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이전)와 지역발전특별회계(현재)의 편성체계 비교.....	36
<표 1-3-2> 포괄보조사업 지원 대상.....	38
<표 1-3-3>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	40
<표 1-3-4>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계정별).....	41
<표 1-3-5>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분야별).....	41
<표 1-3-6> 2016년 지역사업 평가제도의 전년 대비 주요 개편사항.....	43
<표 1-3-7> 경제계정 평가대상 - 부처별 사업수 및 예산.....	44
<표 1-3-8> 생활계정 평가대상.....	45
<표 1-3-9> 생활계정 평가 결과.....	50
<표 1-3-10> 생활계정 시도별 포괄보조사업 최종평가 결과 (단위: 개).....	51

제2부 부문별 시책

<표 2-1-1> 주민만족도 조사 결과	56
<표 2-1-2>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현황.....	56
<표 2-1-3>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연도별 지원 시·군 현황.....	57
<표 2-1-4> 성장촉진지역 지정 현황(2014년 9월 25일 기준).....	59
<표 2-1-5> 개발촉진지구(낙후지역형) 지정 현황.....	60
<표 2-1-6> 주민만족도.....	62
<표 2-1-7>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대상지역 현황.....	62
<표 2-1-8> 2016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추진실적.....	63
<표 2-1-9> 2017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추진계획.....	64
<표 2-1-10> 2016년 신규 선정사업 예산 내역.....	65
<표 2-1-11> 2016년 신규 선정사업 현황(19개).....	66
<표 2-1-12> 농촌공동체회사 지원 현황.....	68
<표 2-1-13> 농촌공동체회사 유형.....	69
<표 2-1-14> 농촌 현장포럼 추진 마을 수.....	70
<표 2-1-15> 추진성과 성과.....	75
<표 2-1-16> 연도별 유형별 자율관리어업 참여 공동체 수.....	76
<표 2-1-17>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동 경제적 효과(한국수산물 수산정책연구소, 2016).....	77
<표 2-1-18>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	77
<표 2-1-19> 마을기업 현황.....	80
<표 2-1-20>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유형별 지원 현황.....	83
<표 2-1-21>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현황.....	84
<표 2-1-22> 재정비촉진지구 현황(61개 지구).....	85
<표 2-1-23> 입체화사업 추진 현황.....	87
<표 2-1-24> 지역별 광역상수도 공급현황.....	90
<표 2-1-25> 연도별 마스터플랜 수립 개소.....	91
<표 2-1-26> 연계사업 추진성과.....	92
<표 2-1-27> 지자체 한옥공공건축물 지원 현황.....	93
<표 2-1-28> 저상버스 도입보조 추진성과(2013 ~ 2016년).....	94
<표 2-1-29>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추진성과(2013 ~ 2016년).....	95
<표 2-1-30> 유통구조 비교(LPG용기 vs. LPG소형저장탱크).....	96
<표 2-1-31> 2013년~2016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지원실적.....	97
<표 2-1-32> 용자 지원 절차 및 사업규모/지원 조건.....	98
<표 2-1-33> 도시가스 보급 추이.....	98
<표 2-1-34>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 현황.....	100
<표 2-1-35> 도·농간 상수도 보급률 비교.....	101
<표 2-1-36> 전국의 연안여객선 기항지 현황.....	103

<표 2-1-37> 최근 5년간 기항지 접안시설 개선사업 현황.....	103
<표 2-1-38> 연도별 화장물 변동 추이.....	104
<표 2-1-39>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현황.....	105
<표 2-1-40>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 현황.....	106
<표 2-1-41> 가축분뇨자원화율 현황.....	108
<표 2-1-42> 연안정비사업 추진.....	108
<표 2-1-43> 방치선박 정리 추진실적(2013~2016년).....	110
<표 2-1-44> 하수도 보급률 현황.....	111
<표 2-1-45>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2016).....	111
<표 2-1-46> 하수도 보급률 현황.....	113
<표 2-1-47>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2015).....	113
<표 2-1-48> 하수도 보급률 현황.....	114
<표 2-1-49> 클린하우스 설치현황(06~'16년).....	115
<표 2-1-50> 도·농간 상수도 보급률 비교.....	117
<표 2-1-51> CCTV설치사업의 효과(지역주민의 범죄불안감 감소).....	118
<표 2-1-52> 지방도 위험도로 개량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119
<표 2-1-53> 도시침수 대응 하수도인프라 확충 사업비 계획.....	120
<표 2-1-54> 고령인구 비중.....	120
<표 2-1-55> 농업안전보건센터 진료서비스 확대.....	121
<표 2-1-56>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현황.....	121
<표 2-1-57> 최근 3년간 사업효과.....	122
<표 2-1-58> 최근 3년간 사업효과.....	122
<표 2-1-59> 주민만족도.....	126
<표 2-1-60> 연도별 예산 지원액.....	128
<표 2-1-61> 도시활력증진지역 현황 (143개 시·군·구).....	128
<표 2-1-62>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절차도.....	130
<표 2-1-63>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 현황(2016년도).....	131
<표 2-1-64> 광역도로 현황 및 소요사업비(총 72개).....	139
<표 2-1-65> 광역도로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140
<표 2-1-66> 국가지원지방도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141
<표 2-1-67> 제주도 구국도 건설 연차별 투자비 현황.....	141
<표 2-1-68> 광주순환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142
<표 2-1-69> 대구순환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143
<표 2-1-70> 울산-화태 국도건설공사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144
<표 2-1-71> 동해-삼척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144
<표 2-1-72> 거제-마산 국도건설공사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145
<표 2-1-73> 부산순환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145
<표 2-1-74> 상주-영덕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146

<표 2-1-75> 압해-암태, 화양-적금 국도건설공사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146
<표 2-1-76> 영남-적금 국도건설공사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147
<표 2-1-77> 울산-포항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147
<표 2-1-78> 월전-중군 국도건설공사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148
<표 2-1-79> 수도권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추진현황.....	148
<표 2-1-80> 주문진-속초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149
<표 2-1-81> 춘천(동홍천)-양양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149
<표 2-1-82> 포항-영덕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150
<표 2-1-83> 함양-울산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150
<표 2-1-84> 화양-소라 국가지원지방도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151
<표 2-1-85> 교통혼잡비용 추이.....	151
<표 2-1-86> 대도시권 혼잡도로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152
<표 2-1-87> 특정지역 현황.....	154
<표 2-1-88> 광역철도 제도개선 주요내용.....	156
<표 2-1-89> 광역철도사업현황.....	156
<표 2-1-90> 원주-강릉 철도건설 예산투입 현황.....	160
<표 2-1-91> 도시철도 개통현황.....	161
<표 2-1-92> 추진성과 성과(국비 지방비 포함)	169
<표 2-2-1> 지역별 주력산업분야.....	171
<표 2-2-2> 추진성과.....	173
<표 2-2-3> 추진성과.....	175
<표 2-2-4> 주요 사업.....	176
<표 2-2-5> 추진성과.....	176
<표 2-2-6> 사·도 경제협력권산업 선정결과(17개)	177
<표 2-2-7> 세부사업 유형별 추진내용.....	178
<표 2-2-8> 내역사업 유형별 추진방안	180
<표 2-2-9> 2013~2015년 SW융합기술고도화 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현황.....	182
<표 2-2-10> 지역SW산업진흥지원사업의 네트워크 구축 현황.....	183
<표 2-2-11> 추진성과.....	188
<표 2-2-12> 연도별 선박관리척수	190
<표 2-2-13>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수.....	192
<표 2-2-14> 중소기업청 산학협력 기술개발사업의 정책 변천과정.....	193
<표 2-2-15> 창업보육센터 운영 주체별 지정 현황.....	195
<표 2-2-16> 창업보육센터 지역별 지정 현황.....	195
<표 2-2-17> 창업보육센터 계속입주기업 운영성과.....	195
<표 2-2-18>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내역사업 (단위: 천원)	199
<표 2-2-19>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절차.....	203
<표 2-2-20> 2016년 외국인투자유치사업 지원 내용.....	207

<표 2-2-21> 2009~2016년 외국인직접투자 실적(신고기준).....	207
<표 2-2-22> 전국 산학연합의체 현황 (Mini Cluster : MC).....	209
<표 2-2-23> R&BD 공동 협력과제 지원현황.....	209
<표 2-2-24> 기업성장지원센터 지원현황.....	209
<표 2-2-25> 연도별 예산 지원액.....	212
<표 2-2-26> 노후산업단지 현황 (준공 후 20년 경과, 2016년말 기준).....	213
<표 2-2-27> 노후산단 재생사업 지구별 현황.....	215
<표 2-2-28> 산업단지 재생사업 절차도.....	217
<표 2-2-29>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사업 추진 현황.....	220
<표 2-2-30>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표준모델.....	221
<표 2-2-31>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지원.....	222
<표 2-2-32> 산업단지 진입도로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222
<표 2-2-33>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 연도별 지원 현황.....	223
<표 2-2-34> 새만금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연차별 사업비(국고) 현황.....	224
<표 2-2-35> 지역연구개발지원단 현황.....	228
<표 2-2-36> 국토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분야 지원 현황 및 투자계획(2013 ~ 2020년).....	230
<표 2-2-37> 국토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운영 현황.....	230
<표 2-2-38> 지역특화기술개발 분야 지원 현황(2005 ~ 2015년).....	232
<표 2-2-39> 대학 TMC(TLO) 연도별 기술이전 실적.....	234
<표 2-2-40> 대학 TMC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설립 실적.....	234
<표 2-2-41> 산학연합력 클러스터 지원사업 실적.....	235
<표 2-2-42> 산학연공동연구법인 설립 현황.....	239
<표 2-2-43> 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황.....	242
<표 2-2-44> 연도별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예산 추이.....	243
<표 2-2-45> 연구개발특구 주요 통계.....	244
<표 2-2-46> 연구개발특구육성(R&D) 사업의 세부내용.....	244
<표 2-2-47> 연구개발특구운영 및 인프라 지원 사업 주요내용.....	245
<표 2-2-48> 행복도시 광역도로 건설사업 성과.....	250
<표 2-2-49> 이전대상 공공기관 현황.....	255
<표 2-2-50> 시·도별 이전기관 배치결과(전체 154개 기관).....	256
<표 2-2-51> 혁신도시 입지선정현황.....	256
<표 2-2-52> 새만금지구 내부개발 추진성과.....	261
<표 2-2-53> 고군산군도 연결도로건설공사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262
<표 2-2-54> 기항지 현황.....	262
<표 2-2-55> 최근 3년간 지역 기여도.....	264
<표 2-2-56> 기업도시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266
<표 2-2-57> 기업도시 기반시설 국고지원 현황 및 계획.....	267
<표 2-2-58> 제주국제자유도시 주요 프로젝트 추진현황 사업별 추진실적.....	270

<표 2-2-59> 농식품 ICT 결합형 모델.....	271
<표 2-2-60> 2016년도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주요 추진 성과.....	273
<표 2-2-61> 농촌관광 방문객 현황.....	276
<표 2-2-62> 농촌축제지원 현황.....	276
<표 2-2-63> 연도별 예산 지원액(제주포함).....	277
<표 2-2-64> 자연휴양림 이용객 추이 (2007~2016년).....	279
<표 2-2-65> 치유의 숲 이용객 추이 (2009~2016년).....	281
<표 2-2-66> 숲길조성관리 투자액.....	282
<표 2-2-67>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성과	284
<표 2-2-68>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추진성과.....	285
<표 2-2-69>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추진성과.....	286
<표 2-2-70> 과실브랜드 육성지원사업 추진 현황.....	286
<표 2-2-71>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추진성과.....	287
<표 2-2-72> 농업기반정비사업 내역사업별 주요내용.....	288
<표 2-2-73> 농업기반정비사업 추진성과.....	289
<표 2-2-74> 친환경농업지구 신규조성 현황.....	290
<표 2-2-75>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신규조성 현황	291
<표 2-2-76> 임대농기계 이용률 현황.....	292
<표 2-2-77> 경기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연차별 예산투입 실적	293
<표 2-2-78> 전남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연차별 예산투입 계획.....	293
<표 2-2-79> 인삼 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 지원 현황.....	295
<표 2-2-80>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추진성과.....	297
<표 2-2-81> 지역전략식품산업 사업단 매출액 조사결과.....	298
<표 2-2-82> 향토산업육성사업 선정 · 지원현황.....	300
<표 2-2-83> 2016년도 향토산업육성사업 주요 추진 성과.....	301
<표 2-2-84> 제주지역 국가어항 기반 조성 실적.....	301
<표 2-2-85> 연도별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 실적.....	302
<표 2-2-86> 단위노력당 어획량(CPUE).....	302
<표 2-2-87> 수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 연도별 국고 지원현황.....	303
<표 2-2-88>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연도별 국고 지원현황.....	304
<표 2-2-89> 수산어업 행정지원 실적.....	305
<표 2-2-90> 어업인교육훈련(제주) 지원실적.....	306
<표 2-2-91> 농식품가공체험기술보급사업의 주요 성과.....	306
<표 2-2-92> 2016년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시범사업 추진실적	310
<표 2-2-93> 2016년 생활만족도 조사 결과.....	312
<표 2-2-94> 지역별 2016년 사업예산.....	314
<표 2-2-95> 2015년 농촌지도기반시설 지원 현황.....	317
<표 2-2-96> 2016년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추진 현황.....	318

<표 2-2-97> 2016년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 사업 예산 및 연구기반 구축 건수.....	320
<표 2-2-98> 2016년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 및 지역농업연구기반 조성 사업을 통한 주요 성과	320
<표 2-2-99> 2016년 지역전략작목 산학연사업 광역화 성과분석.....	321
<표 2-2-100> 목재문화체험장 이용객 (2013~2016년).....	323
<표 2-2-101>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현황 (2013~2016년).....	323
<표 2-2-102> 2017년 임도시설 추진계획.....	324
<표 2-2-103> 국산식재료 직거래 금액.....	325
<표 2-2-104> 우수 외식업지구 지정 현황('12~'15).....	326
<표 2-2-105> 연안정비사업 추진(지자체 보조).....	327
<표 2-2-106> 최근 5년간 해양관광 기반시설 조성사업 지원 예산 현황(국비기준).....	328
<표 2-2-107> 연도별 예산 지원액.....	329
<표 2-2-108> 사업시행체계.....	329
<표 2-2-109>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실적(2013 ~ 2016년).....	330
<표 2-2-110>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처리 실적(2013~2016년).....	330
<표 2-2-111>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현황(2013~2016년).....	331
<표 2-2-112> 연도별 예산 지원액(제주포함).....	331
<표 2-2-113> 전국 로컬푸드직매장 운영현황.....	335
<표 2-3-1> 지방대학 특성화사업(CK) 특성화분야 여건 개선 현황.....	337
<표 2-3-2> NASEL을 활용한 교수·학습 역량 진단 (교육개발원 측정).....	337
<표 2-3-3>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SCK) 주요성과.....	339
<표 2-3-4>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SCK) 지원 현황.....	339
<표 2-3-5> BK21 플러스 사업 지원 현황.....	340
<표 2-3-6> BK21 플러스 평가구조 개편.....	340
<표 2-3-7> BK21 플러스 참여인력 연구역량 향상.....	340
<표 2-3-8> 지방대학원 BK21 참여와 미참여 사업단(팀) 소속 대학원생 취업률 비교...	341
<표 2-3-9> 지방대학원 BK21 참여와 미참여 사업단(팀) 소속 대학원생의 사업 효과 인식	341
<표 2-3-10>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지원 현황.....	342
<표 2-3-11> 2014년도 ACE 선정 대학 대학생 핵심역량 향상도(K-CESA).....	343
<표 2-3-12>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4년제) 지원 현황.....	344
<표 2-3-13> 2016년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4년제) 주요 성과.....	345
<표 2-3-14> 2016년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주요성과.....	346
<표 2-3-15> 학교기업 지원사업 지원 현황.....	349
<표 2-3-16>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연구인력양성 현황.....	351
<표 2-3-17>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주요성과.....	351
<표 2-3-18>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연도별 지원 현황.....	351
<표 2-3-19> 지역 평생교육 추진체제 구축현황.....	353
<표 2-3-20> 2016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성과 조사 결과.....	354
<표 2-3-21>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 사업 추진 경과.....	355

<표 2-3-22>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 전환내용.....	355
<표 2-3-23>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 사업 성과.....	356
<표 2-3-24>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 사업 성과.....	356
<표 2-3-25> 연도별 인문학대중화 세부사업별 지원현황.....	357
<표 2-3-26> 연도별 인문사회분야 성과확산을 위한 일반시민 참여자 수 현황.....	358
<표 2-4-1> 2016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지원 현황.....	359
<표 2-4-2>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 주요시설.....	363
<표 2-4-3>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전국 설립 현황.....	364
<표 2-4-4> 2016년 국제영화제 지원현황.....	364
<표 2-4-5> 2016년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지원 현황.....	365
<표 2-4-6> 종합형 스포츠클럽 공모요건.....	370
<표 2-4-7> 클럽운영과정.....	371
<표 2-4-8> 운영장소 : 전국 434개소.....	372
<표 2-4-9> 연도별 실적.....	372
<표 2-4-10> 연도별 작은영화관 지원 현황.....	373
<표 2-4-11> 산업관광 육성 사업 지원 규모.....	374
<표 2-4-12> 박람회장 방문객 및 수익.....	377
<표 2-4-13> 연도별 기항지 크루즈 관광객 입항 현황.....	378
<표 2-4-14> 관광두레 조성사업 지원 현황 (2016.12월 현재).....	380
<표 2-4-15> 최근 5년간 해안누리길 활성화 사업 지원 현황(국비기준).....	382
<표 2-4-16> 연차별 투자금액 현황(국비기준).....	383
<표 2-4-17> 등대 해양문화공간 조성 실적.....	389
<표 2-4-18> 생태하천복원 조성사업 추진성과	393
<표 2-4-19> 국가하천정비사업 투자현황.....	394
<표 2-4-20> 경관직불보전제 연차별 사업추진 내역.....	396
<표 2-4-21> 경관보전직불제를 통한 지역축제 등 방문객 현황.....	396
<표 2-4-22> 방문객 현황.....	397
<표 2-4-23> 국가농업유산지정 및 다원적자원활용사업지구 현황.....	397
<표 2-4-24> 농촌다원적자원활용사업지구 현황.....	398
<표 2-4-25> 생태관광지역 지정 현황.....	398
<표 2-4-26> 추진성과	399
<표 2-5-1>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세부내용.....	401
<표 2-5-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지원 추진성과.....	402
<표 2-5-3> 연도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계획.....	404
<표 2-5-4>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연도별 추이.....	409
<표 2-5-5>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지원 규모(편성기준).....	412
<표 2-5-6>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내용.....	413
<표 2-5-7> 연령별 이용아동 현황('16.12월말 기준).....	413

<표 2-5-8>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개요.....	415
<표 2-5-9> 청소년수련시설 현황(2016년 12월 31일 기준).....	416
<표 2-5-10> 2016년도 청소년시설 확충사업 지원현황.....	416
<표 2-5-11>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도서비스 운영 실적(2013~2016).....	418
<표 2-5-12> 연도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 현황.....	421
<표 2-5-13> 연도별 의료취약지 사업 선정 및 지원 현황.....	423
<표 2-5-14> 연도별 분만취약지 사업 선정 및 지원 현황.....	424
<표 2-6-1> 광역지자체별 이전대상 공공기관 수 및 직원 수.....	426
<표 2-6-2> 혁신도시 인구 현황.....	428
<표 2-6-3> 혁신도시 내 전입 세대 및 인구 현황.....	429
<표 2-6-4> 이전공공기관 법인세 현황.....	431
<표 2-6-5> 지역별·유형별 지방세 납부 현황 ('16.12월 말 기준).....	432
<표 2-6-6> 이전공공기관과 지역대학 MOU체결 현황.....	435
<표 2-6-7> 기관별 지방대학 연계·인재 양성 및 MOU 체결 주요 내용.....	436
<표 2-6-8> 지자체별 지역인재 채용 현황.....	437
<표 2-6-9> 지방자치단체별 부동산 가격 관련 현황.....	438
<표 2-6-10> 기관별 업무협약 체결기관 현황.....	440
<표 2-6-11> 기관별 경제적 지원 및 봉사활동 현황.....	441
<표 2-6-12> 지역 업체 및 중소기업 지원.....	442

제3부 지역별 시책

<표 3-1-1> 서울특별시 경제 일반현황.....	447
<표 3-1-2> 서울특별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448
<표 3-1-3> 서울특별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449
<표 3-1-4> 서울특별시 혁신활동 현황.....	450
<표 3-2-1> 부산광역시 경제 일반현황.....	464
<표 3-2-2> 부산광역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465
<표 3-2-3> 부산광역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466
<표 3-2-4> 부산광역시 혁신활동 현황.....	467
<표 3-3-1> 대구광역시 경제 일반현황.....	481
<표 3-3-2> 대구광역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482
<표 3-3-3> 대구광역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483
<표 3-3-4> 대구광역시 혁신활동 현황.....	484
<표 3-4-1> 인천광역시 경제 일반현황.....	495
<표 3-4-2> 인천광역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496
<표 3-4-3> 인천광역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497

<표 3-4-4> 인천광역시 혁신활동 현황.....	498
<표 3-5-1> 광주광역시 경제 일반현황.....	511
<표 3-5-2> 광주광역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512
<표 3-5-3> 광주광역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513
<표 3-5-4> 광주광역시 혁신활동 현황.....	514
<표 3-6-1> 대전광역시 경제 일반현황.....	528
<표 3-6-2> 대전광역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529
<표 3-6-3> 대전광역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530
<표 3-6-4> 대전광역시 혁신활동 현황.....	531
<표 3-7-1> 울산광역시 경제 일반현황.....	545
<표 3-7-2> 울산광역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546
<표 3-7-3> 울산광역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547
<표 3-7-4> 울산광역시 혁신활동 현황.....	548
<표 3-8-1> 세종특별자치시 경제 일반현황.....	560
<표 3-8-2> 세종특별자치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561
<표 3-8-3> 세종특별자치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562
<표 3-8-4> 세종특별자치시 혁신활동 현황.....	563
<표 3-9-1> 경기도 경제 일반현황.....	575
<표 3-9-2> 경기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576
<표 3-9-3> 경기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577
<표 3-9-4> 경기도 혁신활동 현황.....	578
<표 3-10-1> 강원도 경제 일반현황.....	590
<표 3-10-2> 강원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591
<표 3-10-3> 강원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592
<표 3-10-4> 강원도 혁신활동 현황.....	593
<표 3-11-1> 충청북도 경제 일반현황.....	604
<표 3-11-2> 충청북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605
<표 3-11-3> 충청북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606
<표 3-11-4> 충청북도 혁신활동 현황.....	607
<표 3-11-5> 선도사업 연계·협력 프로젝트 현황 및 성과(2016 신규).....	612
<표 3-12-1> 충청남도 경제 일반현황.....	622
<표 3-12-2> 충청남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623
<표 3-12-3> 충청남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624
<표 3-12-4> 충청남도 혁신활동 현황.....	625
<표 3-13-1> 전라북도 경제 일반현황.....	637
<표 3-13-2> 전라북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638
<표 3-13-3> 전라북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639
<표 3-13-4> 전라북도 혁신활동 현황.....	640

<표 3-14-1> 전라남도 경제 일반현황.....	657
<표 3-14-2> 전라남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658
<표 3-14-3> 전라남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659
<표 3-14-4> 전라남도 혁신활동 현황.....	660
<표 3-15-1> 경상북도 경제 일반현황.....	673
<표 3-15-2> 경상북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674
<표 3-15-3> 경상북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675
<표 3-15-4> 경상북도 혁신활동 현황.....	676
<표 3-16-1> 경상북도 혁신활동 현황.....	690
<표 3-16-2> 경상남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691
<표 3-16-3> 경상남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692
<표 3-16-4> 경상남도 혁신활동 현황.....	693
<표 3-17-1> 제주특별자치도 경제 일반현황.....	705
<표 3-17-2> 제주특별자치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706
<표 3-17-3> 제주특별자치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707
<표 3-17-4> 제주특별자치도 혁신활동 현황.....	708

그림 목차

제1부 총괄

<그림 1-2-1> 지역발전정책(HOPE)의 비전과 추진전략.....	16
<그림 1-2-2> 2단계 지역희망 프로젝트(HOPE+)의 중점 추진방향 및 과제.....	19
<그림 1-2-3> 14개 시·도별 지역전략산업 선정 결과.....	34
<그림 1-2-4> 신기술·융복합 분야의 규제특례제도 흐름도.....	35
<그림 1-3-1> 지자체 자율편성사업 예산 편성 절차(2016년 기준).....	37
<그림 1-3-2> 부처편성사업 예산편성 절차.....	39
<그림 1-3-3> 지역발전사업 평가체계.....	45

제2부 부문별 시책

<그림 2-1-1> 농촌형 교통모델 개념도.....	57
<그림 2-1-2> 마을사업 추진 체계.....	70
<그림 2-1-3> (2017-2021)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16.11.21).....	75
<그림 2-1-4> 전국 슬레이트 용도별 현황 및 주택등록 현황(' 13.12월).....	101
<그림 2-1-5> 사업추진 절차.....	116
<그림 2-1-6>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개요.....	126
<그림 2-1-7> 원주-강릉 철도건설 노선도.....	159
<그림 2-2-1> 지역산업육성정책 추이.....	171
<그림 2-2-2> 지역특화산업육성(기술개발) 추진체계.....	172
<그림 2-2-3> 지역특화산업육성(기업지원) 추진체계.....	174
<그림 2-2-4> 세부사업 구성 및 지원대상(비즈니스협력형).....	178
<그림 2-2-5> 세부사업 구성 및 지원대상(경제협력형).....	179
<그림 2-2-6> 신산업창출을 위한 SW융합기술고도화 사업 기획보고서 중.....	181
<그림 2-2-7> SW융합기술지원센터 조감도 및 층별 활용계획.....	181
<그림 2-2-8> 2016년도 SW융합기술고도화 기반조성 사업 주요성과현황.....	182
<그림 2-2-9> 지역소프트웨어산업 발전기여도 및 파급효과.....	184
<그림 2-2-10> 창업인프라 사업 프로그램.....	196
<그림 2-2-11> 창의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추진체계.....	197
<그림 2-2-12> 소재부품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추진체계.....	198
<그림 2-2-13>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추진체계.....	200
<그림 2-2-14> 예비타당성조사의 기본적 수행체계.....	202
<그림 2-2-15> 지방이전투자 지원과 지방 신·증설투자 지원 비중.....	204

<그림 2-2-16> 수도권 인접지역과 비인접지역의 지원실적 비중.....	205
<그림 2-2-17>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현황	226
<그림 2-2-18>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 성과.....	227
<그림 2-2-19> 지역연구개발지원단 지원 체계.....	228
<그림 2-2-20> 국토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분야 주요 성과(2016년).....	231
<그림 2-2-21> 지역특화기술개발 분야 주요 성과(2015년).....	232
<그림 2-2-22>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체계.....	237
<그림 2-2-2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개념도.....	248
<그림 2-2-24> 새만금 농생명용지 이용계획도.....	260
<그림 2-2-25> 스마트팜 도입농가 생산성 분석('16.11월).....	272
<그림 2-2-26>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례.....	279
<그림 2-2-27> 2016년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추진성과.....	309
<그림 2-2-28> 2016년 사업 생활 만족도 및 프로그램 참여도.....	312
<그림 2-2-29>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 사업 추진 절차.....	319
<그림 2-2-30> 전남 순천시 나무은행 운영 사례.....	323
<그림 2-2-31> 직거래 일반 및 로컬푸드직매장 생산자·소비자 효용.....	335
<그림 2-3-2> 학교기업 지원사업 1단계('10 ~ '14) 사업 성과.....	350
<그림 2-4-1> 추진체계.....	371
<그림 2-4-2> 사업추진 체계도.....	371
<그림 2-4-3> 해안누리길 BI.....	381
<그림 2-5-1> 지자체와의 협력 추진체계 구축.....	403
<그림 2-5-2> 정신건강 종합대책('16.2.25)	409
<그림 2-5-3>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체계 및 서비스지원 절차 등	410
<그림 2-5-4> 연도별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생산액.....	419
<그림 2-5-5> 세부영역별 식품안전체감도.....	419
<그림 2-5-6>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원 사업 추진체계	422
<그림 2-6-1> 이전 공공기관 법인세 및 지방세 종류.....	430
<그림 2-6-2> 이전지역 인재 채용률 변화 추이('16.12월 말 기준).....	437

제3부 지역별 시책

<그림 3-1-1> 서울특별시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452
<그림 3-1-2> 서울특별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454
<그림 3-2-1> 부산광역시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469
<그림 3-2-2> 부산광역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471
<그림 3-3-1> 대구광역시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486
<그림 3-3-2> 대구광역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488

<그림 3-4-1> 인천광역시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500
<그림 3-4-2> 인천광역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503
<그림 3-5-1> 광주광역시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516
<그림 3-5-2> 광주광역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519
<그림 3-6-1> 대전광역시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533
<그림 3-6-2> 대전광역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535
<그림 3-7-1> 울산광역시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550
<그림 3-7-2> 울산광역시 공간별 창조도시 추진전략.....	551
<그림 3-7-3> 울산광역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552
<그림 3-8-1> 세종특별자치시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565
<그림 3-8-2> 세종특별자치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567
<그림 3-9-1> 경기도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580
<그림 3-10-1> 강원도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595
<그림 3-10-2> 강원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597
<그림 3-11-1> 충청북도의 발전 비전 및 목표.....	609
<그림 3-11-2> 충청북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611
<그림 3-12-1> 충청남도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627
<그림 3-12-2> 충청남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629
<그림 3-13-1> 전라북도 발전 비전 및 목표.....	642
<그림 3-13-2> 전라북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644
<그림 3-14-1> 전라남도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662
<그림 3-14-2> 전라남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664
<그림 3-15-1> 경상북도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678
<그림 3-15-2> 경상북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680
<그림 3-16-1> 경상남도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695
<그림 3-16-2> 경상남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697
<그림 3-17-1> 제주특별자치도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710
<그림 3-17-2>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712

제1부 총괄

제1장 경제여건의 변화와 지역경제 동향

제2장 지역발전정책 추진경과 및 실적

제3장 지역발전시책의 예산·평가 체계

제1장 경제여건의 변화와 지역경제 동향

제1절 2016년 국내외 경제¹⁾

1. 세계경제

2016년 세계경제는 선진국 성장세가 둔화됨에도 불구하고 전년 수준에 근접한 성장세를 보였다. 미국경제는 소비와 투자가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전반적인 부진으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유로지역은 통화정책 대응과 고용개선 등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냈고, 일본도 소비 및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흥국경제는 전년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갔다. 중국이 소비호조 등에 힘입어 성장목표에 부합하는 성장세를 지속한 가운데, 화폐개혁의 부작용 등으로 인도의 성장세는 둔화되었다. 브라질, 러시아 등은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성장 부진은 다소 완화되고 있다.

세계교역 신장세는 글로벌 투자 부진, 자원수출국 등 신흥국 수입수요 둔화, 중국의

표 1-1-1 주요 세계 경제지표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경제성장률 (%)	전 세계	3.4	3.2	3.1
	선진국	1.9	2.1	1.6
	미국	2.4	2.6	1.6
	유로지역	1.2	2.0	1.7
	일본	0.3	1.2	1.0
	신흥국	4.6	4.1	4.1
	중국	7.3	6.9	6.7
	브라질	0.5	-3.8	-3.6
	인도	7.2	7.9	6.6
세계교역신장률(%)		3.8	2.7	1.9
원유가격(\$/bbl)		96.7	51.2	41.2

자료 : IMF, 한국은행 「2015년 연차보고서」에서 재인용

1) 한국은행의 「2016년 연차보고서」(2017년 3월) 내용을 많은 부분 참조하였다.

성장구조 전환 등에 기인하여 전년 수준보다 축소되었다. 공급과잉 우려 등으로 2014년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한 국제유가는 2016년 들어서는 셰일오일 생산 감소, OPEC의 감산합의 등으로 연초 수준보다는 상승하였으나, 연평균 기준 2015년보다는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2. 국내경제

2016년 우리 경제는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고정투자가 호조를 보였으나 여전히 부진한 수출 신장세로 전년대비 2.8%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수요부문별로 최종소비자는 민간 및 정부소비 모두 전년 수준보다는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민간소비는 가계의 원리금상환 부담 가중과 일자리 창출의 미흡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정부의 소비활성화 대책 등이 긍정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으며, 정부소비 증가폭 확대에는 건강보험지출 상승이 크게 기여하였다.

고정투자는 수출 부진, 기업구조조정 등에 기인한 설비투자의 감소세 전환에도 불구하고, 주택부문을 중심으로 건설투자의 높은 증가세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 부문에 대한 건조한 R&D 투자 증가세로 전년대비 5.2%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재화와 서비스를 합한 총수출(실질 기준)은 스마트폰 및 PC 고사양화에 따른 반도체 수요 확대, 저유가에 따른 단가 하락, 신증설 설비 가동 등으로 화학제품·석유제품 수출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다만 신종 스마트폰 단종 조치로 인한 무선통신기기의 수출 부진과 해외생산 확대와 완성차 업체 파업 등에 의한 자동차 수출 감소세로 2.1% 증가에 머물렀다. 총수입(실질 기준)은 설비투자 부진으로 기계류 수입은 줄어들었으나, 저유가의 영향으로 석유류 제품 수입이 크게 늘어나 전년대비 증가세는 확대되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국내총생산 증가율을 하회하였으나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10.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제조업은 지난해에 이어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는데 조선업 구조조정에 의한 운송장비 부진과 신흥국에 대한 수출이 부진하였던 자동차 등의 여파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서비스업의 낮은 성장률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호조를 보인 반면, 금융 및 보험업, 사업서비스업 등의 성장세가 큰 폭으로 둔화된 데 기인한다.

고용은 취업자 수가 경기부진 등으로 연간 30만 명 증가에 그쳐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 취업자 수는 감소한 반면, 음식숙박업, 보건사회복지업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폭은 확대되었다. 실업률은 전년의 3.6%에서 3.7%로 높아졌다.

소비자물가는 기상악화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가격이 상승하였으나, 석유류제품의 가격하락과 도시가스요금 및 전기료 인하 등으로 여전히 낮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매매가격은 전년 수준과 비교하여 오름세가 크게 둔화되었는데, 이는 가계대출 부실 해소와 부동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 대책, 공급물량 증가 등에 주로 기인하였다. 국제수지에 있어서 상품수지는 수출이 부진하였으나, 국제유가 하락, 설비투자 부진 등으로 수입도 동반 위축되면서 전년 수준에 근접한 1,204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반면 서비스수지는 해외여행객 증가세 지속으로 여행수지가 적자를 보인 가운데, 해운사 구조조정과 세계 물동량 둔화, 해외건설 수주 감소 등으로 각각 운송수지와 건설수지 등도 적자를 나타냄에 따라 적자규모는 전년보다 늘어난 17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표 1-1-2 주요 국내 경제지표

(단위 : %, 억달러)

구분		2015	2016				
			연간	1/4	2/4	3/4	4/4
국민 소득1)	국내총생산	2.8	2.8	2.9	3.4	2.6	2.4
	최종소비	2.4	2.9	2.9	3.7	3.1	2.0
	민 간	2.2	2.5	2.3	3.5	2.7	1.5
	정 부	3.0	4.3	5.0	4.3	4.5	3.6
	고정투자	5.1	5.2	2.9	5.2	5.3	7.1
	건 설	6.6	10.7	9.0	10.6	11.2	11.6
	설 비	4.7	-2.3	-4.6	-2.9	-3.9	2.0
	수 출	-0.1	2.1	1.3	2.6	3.4	1.2
	수 입	2.1	4.5	3.4	4.8	6.5	3.3
산업 생산1)	제 조 업	1.8	2.3	2.4	2.7	1.4	2.7
	건 설 업	5.7	10.5	10.6	11.6	9.9	10.1
	서 비 스 업	2.8	2.3	2.5	2.8	2.3	1.8
고용	취업자 수1)	1.3	1.2	1.1	1.1	1.2	1.2
	실 업 륜	3.6	3.7	4.3	3.8	3.6	3.2
물가	소비자물가1)	0.7	1.0	0.9	0.8	0.7	1.5
	주택매매가2)	4.4	1.4	0.2	0.2	0.4	0.6
국제 수지	상 품 수 지	1,222.7	1,204.5	289.5	335.3	282.7	296.9
	서비스수지	-149.2	-176.1	-39.2	-39.1	-56.6	-41.2

주 : 1) 전년 또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 전기말월대비 증감률

자료 : 한국은행 「2016년 연차보고서」, 한은경제통계시스템(ECOS)

제2절 2016년 지역경제동향

1. 지역경제동향 개관

수도권에서는 경기와 인천 지역경제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생산·고용 등에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수출은 연간 기준으로는 줄어들었으나 반도체 등 전자부품 수출 호조로 하반기에는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서울은 생산 증가세가 전국 수준을 상회하였지만 수출실적은 부진하였으며, 제조업과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등 고용상황은 성과에서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다. 인천은 기계, 철강 등의 상대적인 호조로 생산 감소폭은 크게 둔화되었고, 반도체 수출 실적이 크게 개선되며, 제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고용상황은 악화되었다.

충청권에서 충북은 고용성고가 두드러지게 개선되지는 않았지만,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전국 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생산·수출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충남은 생산이 완만하게 늘어났으며 수출은 연간 실적이 줄어들었으나 하반기 들어서 개선되었으며,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용성고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전은 생산·수출이 전년 수준을 하회하고 있으며, 자영업자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상황이 악화되었다.

호남권에서 전남은 지역 주력산업 생산이 고르게 늘어나고 수출도 하반기에 개선되었으며, 고용은 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지만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광주·경북은 생산이 비교적 양호하고 하반기 수출은 개선되었으나, 제조업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고용상황이 악화되었다. 전북은 생산·수출 등에서 모두 전년수준을 하회하는 등 권역 내에서 지역경제 침체 정도는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경권과 동남권의 지역경제는 생산·수출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생산은 대구를 제외한 권역 내 모든 지역이 전년보다 줄어들었으며 특히 부산과 경남은 각각 기계장비, 조선을 중심으로 부진 정도가 컸다. 수출도 지역 주력 수출품을 중심으로 권역 내 모든 지역의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특히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자동차부품을 중심으로 경북·울산·부산의 수출이 크게 줄었다. 고용은 대구를 제외하고 취업자 수는 완만하게 늘어났으나, 동남권의 제조업 고용상황이 악화되었다.

강원은 생산·수출이 동반 부진하였으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상황은 개선되었으며, 제주는 생산·수출이 호조를 보였으며 취업자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등 고용상황도 개선되었다.

2. 생산동향

2016년 들어 전국 기준 산업생산은 전반기에는 전년의 감소세가 이어졌으나 하반기부터 회복되어 연간 기준으로는 증가세로 전환된 가운데, 지역별로는 산업생산 증감이 뚜렷이 구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남(14.3%), 충북(9.0%), 경기(5.7%), 충남(3.5%)의 산업생산은 하반기로 갈수록 호조를 보여 전년보다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며, 제조업 비중은 낮지만 제주(12.7%)의 산업생산도 크게 늘어났다.

표 1-1-3 지역별 생산동향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연간	1/4	2/4	3/4	4/4
전국	0.2	-0.3	1.0	-1.2	-0.1	0.9	3.1
서울	5.9	-2.7	2.0	0.7	0.4	-2.5	-1.6
부산	2.4	7.7	-6.2	7.1	3.2	-2.6	-3.3
대구	2.6	-2.9	0.0	-4.8	-1.1	-2.8	-2.9
인천	-0.3	-4.7	-0.2	-9.0	-6.1	-4.7	0.5
광주	8.9	1.6	1.3	-4.5	-1.6	6.5	11.6
대전	7.6	3.2	-1.3	8.3	-0.1	-4.2	3.9
울산	-1.7	-3.3	-1.3	-2.1	-4.8	-6.8	-5.0
세종	-5.2	3.3	-6.7	1.9	-5.4	-8.5	-2.4
경기	4.1	4.4	5.7	5.8	8.7	12.6	14.0
강원	-2.0	-1.2	-5.2	-10.3	-7.8	-4.9	-2.2
충북	1.9	6.6	9.0	15.2	11.7	12.8	24.7
충남	0.5	1.6	3.5	1.6	2.1	5.0	11.1
전북	-0.6	-2.9	-2.1	-6.8	-4.2	-6.5	-2.4
전남	-4.3	9.2	14.3	20.6	26.9	30.9	21.0
경북	0.3	-3.8	-2.4	-8.3	-8.0	-3.8	-4.3
경남	-1.9	-5.7	-4.9	-9.8	-9.4	-12.0	-10.1
제주	1.1	7.6	12.7	20.6	22.0	48.3	0.1

주 : 지역별 산업생산지수(2010=100)의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반면, 지난해 산업생산이 늘어났던 부산(-6.2%)은 큰 폭의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경남(-4.9%)도 여전히 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 들어서 부진의 정도는 커졌다. 그 외 강원(-5.2%)과 대전(-1.3%)도 부진의 폭이 확대되거나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다만 경북(-2.4%), 전북(-2.1%), 울산(-1.3%), 인천(-0.2%) 등은 산업생산 부진이 금년에도 지속되고 있으나 전년보다는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산업생산 동향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2016년 산업생산이 크게 감소한 부산과 경남은 지역의 대부분 주력업종이 부진한 가운데 비중을 고려할 때 부산은 기계장비(-24.1%), 경남은 조선을 포함한 기타운송장비(-7.6%)가 지역 산업생산 부진을 주도하였다. 그 외 강원은 음료품(-21.4%), 대전의 고무플라스틱(-3.1%), 경북의 전자부품(-6.2%), 울산·전북·인천의 자동차(각각 -2.8%, -8.6%, -0.3%)의 부진도 지역 산업생산 감소에 기여하였다.

반면, 산업생산이 비교적 호조를 보였던 지역들에서는 경기와 충북의 전자부품(각각 9.9%, 14.9%), 충남의 화학제품(7.5%), 전남의 조선(103.6%), 제주의 비금속제품(15.4%)의 업종이 이들 지역 산업생산 증가를 주도하였다.

표 1-1-4 지역 내 주요 제조업종별 2016년 생산동향

(단위 : %)

	업종	증감률	업종명	증감률	업종명	증감률	업종명	증감률
서울	의복	-4.3	전자부품	9.5	인쇄	-4.4	기계장비	24.4
부산	철강	-1.4	금속제품	-6.7	기계장비	-24.1	자동차	6.8
대구	자동차	5.6	기계장비	-6.6	금속제품	-1.1	섬유제품	-2.3
인천	기계장비	2.8	철강	2.8	자동차	-0.3	금속제품	-3.6
광주	자동차	-5.6	전기장비	-3.7	고무플라스틱	-3.4	기계장비	1.8
대전	고무플라스틱	-3.1	기계장비	-3.6	전자부품	-23.6	화학제품	9.6
울산	자동차	-2.8	석유정제	5.5	화학제품	5.8	기타운송장비	-15.0
경기	전자부품	9.9	자동차	-3.3	기계장비	15.2	금속제품	2.3
강원	비금속	8.8	식료품	4.1	음료품	-21.4	자동차	-12.4
충북	전자부품	14.9	식료품	2.4	전기장비	5.3	자동차	-1.7
충남	전자부품	-1.6	자동차	1.1	화학제품	7.5	석유정제	17.8
전북	자동차	-8.6	화학제품	-1.9	식료품	5.9	철강	1.6
전남	화학제품	2.0	석유정제	2.6	철강	5.3	기타운송장비	103.6
경북	전자부품	-6.2	철강	0.0	자동차	-3.5	화학제품	-1.6
경남	기타운송장비	-7.6	기계장비	-4.2	금속제품	-18.4	자동차	-2.9
제주	식료품	-14.1	음료품	-0.5	비금속제품	15.4	고무플라스틱	9.9

주 : 1) 지역별 산업생산지수(2010=100)의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 '주요업종'은 생산지수 가중치 3위내 업종.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3. 수출동향

2016년 수출은 감소폭은 줄어들었지만 전년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4,954억 달러를 기록하며 5.9%의 감소율을 기록한 가운데, 전반기에 수출 부진이 집중되었고 하반기 들어서는 개선되어 4분기에는 전년대비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경기(19.8%)가 981억 달러로 가장 높은 수출 실적을 기록하였고, 충남(13.4%), 울산(13.2%)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년대비로 수출 실적이 개선된 인천(14.8%), 세종(9.0%), 제주(6.5%), 충북(5.2%)은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 수출이 늘어났다. 수출실적이 줄어든 전북(-20.9%), 경북(-11.4%), 강원(-11.8%), 충남(-1.4%)은 대중국, 울산(-10.5%), 부산(-9.7%), 경기(-7.4%)는 대미국, 경남(-3.7%)은 대유럽 수출이 각각 줄어든 것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다만 시기별로는 전반기에 대체로 수출 부진이 집중되어 있으며, 하반기 들어서 4분기에는 전북을 제외하고는 모두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표 1-1-5 지역별 수출동향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14	2015	2016						
			수출 금액	지역간 비중	전년 또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연간	1/4	2/4	3/4	4/4
전국	572,665	526,757	495,426	100.0	-5.9	-13.7	-6.7	-5.0	1.8
서울	62,329	60,273	53,428	10.8	-11.4	0.8	-0.5	-22.6	-20.8
부산	14,702	15,579	14,074	2.8	-9.7	-8.9	-14.5	-11.3	-3.7
대구	7,807	7,090	6,915	1.4	-2.5	-6.7	0.0	0.8	-3.8
인천	30,003	31,198	35,819	7.2	14.8	26.8	22.9	21.5	-4.5
광주	16,258	15,305	14,699	3.0	-4.0	-8.5	-7.9	-6.7	8.3
대전	4,732	4,307	4,163	0.8	-3.3	-7.5	-0.6	-4.2	-0.8
울산	92,400	72,907	65,259	13.2	-10.5	-28.3	-4.6	-1.4	-5.0
세종	1,020	929	1,012	0.2	9.0	-8.9	8.9	30.5	10.0
경기	111,641	105,908	98,091	19.8	-7.4	-21.4	-15.8	-3.2	13.7
강원	2,070	1,881	1,660	0.3	-11.8	-21.4	-20.3	-7.5	4.2
충북	14,196	15,210	16,004	3.2	5.2	-5.7	-0.7	10.0	17.3
충남	65,112	67,123	66,211	13.4	-1.4	-6.6	-4.0	-3.5	7.9
전북	8,556	7,952	6,291	1.3	-20.9	-14.6	-30.7	-22.9	-14.9
전남	39,112	30,494	27,880	5.6	-8.6	-13.5	-11.5	-12.8	5.2
경북	51,476	43,458	38,518	7.8	-11.4	-19.9	-19.4	-7.8	3.4
경남	51,142	47,020	45,274	9.1	-3.7	-20.3	0.3	-1.1	10.0
제주	106	121	129	0.0	6.5	22.4	14.2	-3.7	-1.4

자료 : 한국무역협회

지역 내 주요 품목별 2016년 수출 실적을 살펴보면, 수출 신장세가 가장 컸던 인천과 충북은 반도체(각각 78.6%, 7.0%), 세종은 플라스틱 제품(187.4%), 제주는 어류(10.0%)가 지역 수출에 크게 기여하였다. 수출이 줄어든 지역 중 전북은 자동차와 자동차부품(각각 -35.2%, -16.2%), 경북은 철강판과 디스플레이(각각 -9.7%, -22.9%), 강원은 자동차부품과 합금철(각각 -17.4%, -29.8%), 충남은 디스플레이와 무선통신기기(각각 -17.8%, -13.5%), 울산은 자동차와 석유제품(-12.5, -20.2%), 부산은 자동차부품(-43.3%), 경기도는 반도체(-20.3%), 경남은 조선(-13.5%)의 수출 부진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 1-1-6 지역 주요 품목별 2016년 수출

(단위 : %)

	품목명	비중	증감률	품목명	비중	증감률	품목명	비중	증감률
서울	자동차부품	11.0	-7.3	무선통신기기	8.7	-8.3	반도체	7.2	-2.0
부산	자동차	15.7	0.9	자동차부품	9.4	-43.3	철강판	5.9	8.1
대구	자동차부품	16.6	-0.6	인조장섬유직물	6.7	-5.3	기구부품	4.2	6.6
인천	반도체	16.6	78.6	자동차	12.7	6.3	철강판	7.2	2.3
광주	자동차	40.2	-1.7	반도체	27.3	-1.5	냉장고	7.5	-12.9
대전	기호식품	14.6	15.6	원동기및펌프	9.8	0.3	공기조절기및냉난방기	9.6	4.8
울산	자동차	21.7	-12.5	석유제품	19.0	-20.2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16.2	-27.1
세종	기구부품	18.6	7.2	플라스틱 제품	10.1	187.4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9.1	-37.5
경기	반도체	21.7	-20.3	자동차	9.7	-15.7	무선통신기기	7.4	-10.3
강원	전자응용기기	17.8	-3.6	자동차부품	13.8	-17.4	합금철선철및고철	11.6	-29.8
충북	반도체	39.2	7.0	건전지및축전지	9.3	22.7	플라스틱 제품	7.0	19.6
충남	반도체	27.7	12.6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18.2	-17.8	무선통신기기	11.5	-13.5
전북	자동차	17.8	-35.2	자동차부품	9.0	-16.2	합성수지	7.5	14.4
전남	석유제품	26.1	-20.7	합성수지	23.8	-10.0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14.9	39.2
경북	무선통신기기	22.7	-4.0	철강판	18.4	-9.7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13.3	-22.9
경남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39.0	-13.5	자동차부품	6.7	-7.4	원동기및펌프	3.7	11.4
제주	반도체	28.3	-5.6	어류	23.9	10.0	기호식품	7.8	27.1

주 : MTI 3단위 기준으로 지역 내 수출금액 순위 3위내 품목

자료 : 한국무역협회

4. 고용동향

2016년 전국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1.2% 늘어난 2,624만 명을 기록하였다. 지역별로는 제주(6.0%), 충남(2.8%), 경기(2.4%), 인천(2.3%) 순으로 크게 늘어난 가운데, 제주와 경기는 상용근로자 증가폭이 컸던 반면 충남과 인천은 임시근로자²⁾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 지역 간 고용 개선의 질적 차이가 존재하였다. 한편 광주(-0.3%), 대전(-0.3%), 서울(-0.2%)은 취업자가 줄어든 가운데, 대전과 서울은 경기침체로 인한 자영업자 감소가 컸으며, 광주는 임금근로자가 전년에 비해 줄어든 것이 고용 부진의 주된 원인이다.

표 1-1-7 지역별 고용동향(취업자)

(단위 : 천명, %)

구분	2014	2015	취업자 수	지역간 비중	2016				
					전년 또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연간	1/4	2/4	3/4	4/4
전국	25,599	25,936	26,235	100.0	1.2	1.1	1.1	1.2	1.2
서울	5,146	5,135	5,124	19.5	-0.2	-0.5	0.0	-0.3	0.0
부산	1,667	1,657	1,660	6.3	0.2	0.2	0.4	0.2	-0.1
대구	1,215	1,234	1,234	4.7	0.0	-0.8	-0.2	1.1	0.1
인천	1,469	1,488	1,522	5.8	2.3	3.2	2.5	2.5	1.0
광주	736	740	738	2.8	-0.3	0.6	0.7	-1.6	-0.9
대전	765	777	775	3.0	-0.3	0.0	-0.1	-0.5	-0.4
울산	546	561	570	2.2	1.6	2.8	1.2	0.9	1.6
경기	6,226	6,364	6,518	24.8	2.4	1.7	2.3	3.0	2.7
강원	711	731	743	2.8	1.6	2.5	2.0	-0.3	2.3
충북	810	828	830	3.2	0.2	2.7	0.1	-0.5	-0.9
충남	1,158	1,194	1,228	4.7	2.8	2.1	2.0	3.3	3.8
전북	875	894	909	3.5	1.7	1.4	1.6	2.1	1.7
전남	909	924	929	3.5	0.5	-1.0	0.3	1.9	0.6
경북	1,420	1,412	1,420	5.4	0.6	1.5	0.1	0.3	0.4
경남	1,632	1,663	1,682	6.4	1.1	2.5	0.6	0.5	1.1
제주	316	333	353	1.3	6.0	6.6	6.1	5.3	5.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 상용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고용계약 미설정 시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해 입사하여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임시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거나 고용계약미설정시 일정한 사업(완료 1년 미만)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경우에 해당된다.

산업별로는 전체 취업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업과 서비스업 취업자가 늘었으나 17.1%를 차지하는 제조업 취업자 수는 줄어들어 최근 3년 중에 가장 낮은 취업자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지역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제조업의 경우 취업자 수가 증가한 지역은 전남(9.0%), 대전(5.0%), 충남(4.7%) 등이었으며 줄어든 지역은 광주(-6.4%), 전북(-5.1%), 경남(-3.7%), 울산(-2.4%) 등이 대표적이다. 건설업 취업자 수는 인천(32.0%), 제주(10.7%), 울산(7.3%) 등은 증가한 반면 전북(-10.1%), 전남(-6.3%)에서는 줄어들었다. 서비스업 취업자는 대부분 지역에서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제주(6.3%), 충남(5.6%), 전북(4.8%)이 특히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대구(-1.8%), 대전(-1.0%), 서울(-0.1%)에서는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8 지역 산업별 2016년 취업자

(단위 : 천명, %)

	제 조 업			건 설 업			서 비 스 업		
		지역내 비중	전년대비 증감률		지역내 비중	전년대비 증감률		지역내 비중	전년대비 증감률
전국	4,481	17.1	-0.1	1,845	7.0	1.2	18,604	70.9	1.8
서울	478	9.3	-4.2	339	6.6	4.6	4,301	83.9	-0.1
부산	283	17.0	-4.7	123	7.4	-0.8	1,243	74.9	1.1
대구	246	19.9	4.7	93	7.5	5.7	874	70.8	-1.8
인천	345	22.7	3.0	132	8.7	32.0	1,038	68.2	0.6
광주	102	13.8	-6.4	70	9.5	2.9	550	74.5	1.1
대전	81	10.5	5.2	62	8.0	-1.6	623	80.4	-1.0
울산	207	36.3	-2.4	44	7.7	7.3	309	54.2	2.7
경기	1,292	19.8	1.2	453	6.9	-6.0	4,655	71.4	3.7
강원	52	7.0	2.0	58	7.8	5.5	544	73.2	2.6
충북	173	20.8	0.6	54	6.5	0.0	518	62.4	1.6
충남	287	23.4	4.7	77	6.3	0.0	736	59.9	5.6
전북	112	12.3	-5.1	62	6.8	-10.1	593	65.2	4.8
전남	109	11.7	9.0	74	8.0	-6.3	528	56.8	1.7
경북	280	19.7	0.7	88	6.2	2.3	831	58.5	2.6
경남	422	25.1	-3.7	87	5.2	2.4	1,007	59.9	2.7
제주	14	4.0	7.7	31	8.8	10.7	252	71.4	6.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제2장 지역발전정책 추진경과 및 실적

제1절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

1. 지역발전정책 추진경과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한 지역발전정책은 크게 2000년대 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수 있다. 2000년대 이전은 다시 1960~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960~1970년대에는 빈곤의 탈피와 자립경제의 기반구축을 위해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추진되면서 특정지역에 국가산업단지 및 수출산업단지가 조성되었다. 1980년대에는 경제발전과정에 나타난 지역간 불균형 발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는 한편 지방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었다. 1990년대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법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는 한편,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는 생산적·자원절약형 국토형성과 국토환경의 보전이 강조되었다.

국내에서 지역발전정책이 특별법, 특별회계, 추진체계(대통령 자문위원회 등)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2000년대 들어 참여정부부터라고 할 수 있다. 참여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핵심적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혁신주도형 발전과 다극분산형 발전을 위해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추진하였다. 이명박정부는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다’라는 인식하에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화 정책과 지방분권 정책을 도입하였다. 2013년에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체감형 지역발전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지역행복생활권을 도입하는 한편, 지역의 자유포연계, 부처 간 협업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지역발전정책을 돌이켜 보면, 초기에는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경제성장의 기반 구축에 정책적 관심이 집중되었지만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면서 지역 간 균형발전, 사회통합,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발전정책의 방향과 전략

이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표 1-2-1 지역발전정책 추진경과

시기		배경·목표	주요정책
1960~197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곤의 악순환 탈피 · 자립경제기반 구축 · 공업화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년) · 지방공업개발법 제정(1970년) · 공업단지 및 수출산업단지 조성
198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과 복지의 조화 · 수도권 집중억제 · 지방중소도시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 ·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년)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 제1차 수도권정비계획(1984~1996년)
199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분산형 국토골격 형성 · 생산적·자원절약형 국토형성 · 국토환경의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년) ·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1997~2011년)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법(1994년) · 8개청 3개 기관을 대전청사로 이전
2000년대	참여정부 (2003~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균형발전으로 국민통합 · 혁신주도형 발전 · 다극분산형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2004년) ·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 및 수정계획(2006~2020년) ·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2004~2008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 ·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균형정책
	이명박정부 (2008~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 · 광역화와 연계협력 활성화 · 특화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09) · 지역발전5개년계획 수립(2009~2013년)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운영 · 광역경제권·기초생활권·초광역개발권 3차원 정책 ·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사무국) 구성·운영
	박근혜정부 (2013~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의 정책 체감도 제고 · 행복한 삶의 기회 균등 보장 · 자율적 참여와 협업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14) · 지역발전 5개년계획(2014~2018년) 수립 · 지역발전특별회계 운영 · 지역(행복)생활권 및 경제협력권 도입 · 포괄보조금 확대 등 지역자율성 제고

표 1-2-2 2000년대 이후 지역발전정책 비교

구분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정책주도	· 중앙정부 주도	▶ 주민·지자체 주도
정책단위	· 5+2 광역경제권	▶ 지역행복생활권
추진방식	· 하향식 정책	▶ 상향식·주민체감 정책
지원방식	· 부처별 산발적 지원	▶ 맞춤형·패키지 지원(부처협업)

2. 지역희망 프로젝트(HOPE)

(1) 비전 및 추진전략

박근혜정부 지역발전정책의 비전 및 추진전략은 2013년 7월 18일에 개최된 제1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를 통해 제시되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 주기 위한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를 지역발전정책의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지역희망 프로젝트는 주민이 현실 생활에서 행복과 희망을 체감(Happiness)하고, 행복한 삶의 기회를 고르게 보장받고(Opportunity), 자율적 참여와 협업(Partnership)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는(Everywhere) 정책의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지역발전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은 반세기만에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최근에는 문화, 스포츠, 외교 등 여러 분야에서 국가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지만, 국내적으로 보면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인 지방도시와 농촌이 함께 쇠퇴하면서 성장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등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문화·교육·보건·의료 등 삶의 질 분야에서 지역간의 발전격차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들은 중후장대형 발전사업보다는 일상생활에서 본인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역사업과 행정구역을 넘어서 전개되는 통근, 통학, 여가, 쇼핑 등 생활권에 토대를 둔 지역사업에 높은 선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책 환경의 변화와 기 추진했던 지역발전정책의 평가를 토대로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설정하게 되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행복생활권 구현, 맞춤형·패키지 지원, 지역주도 및 협력 강화를 3대 추진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첫 번째 전략은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전략으로서, 지역행복생활권은 마을, 읍면, 도시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면서 기초 인프라부터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 등 고도수준의 서비스까지 충족되는 생활공간을 의미한다. 시·군이 인구분포,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생활권을 설정하고 발전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유형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두 번째 전략은 맞춤형·패키지 지원 전략으로서 중앙정부는 주민·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행복과 희망증진 효과가 높은 과제를 집중적으로 지원

하고, 부처 협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부처의 시책을 조정하여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다. 세 번째 전략은 지역주도 및 협력강화 전략으로서 사업기획, 집행의 과정에서 지역의 자율과 책임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참여와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그림 1-2-1 지역발전정책(HOPE)의 비전과 추진전략



(2) 주요 추진시책

이러한 비전과 추진전략에 따라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시책으로 6대 분야 17개 추진과제가 제시되었다. 첫 번째 분야는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으로서 지역 중심지 활력 증진, 주민체감 생활환경 개선, 지역주도·협력 발전체계 구축을 추진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두 번째 분야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로서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지역산업정책의 전환, 지역투자 촉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산업단지를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육성, 농어촌 일자리 확충을 추진과제로 제시하였다. 세 번째 분야는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으로서 지방 초중고교 교육여건 개선, 지방대학 특성화, 지역인재와 기업의 선순환 성장을 추진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네 번째 분야는 지역문화 육성 및 생태 복원으로서 지역 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 발전 지원,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생태·자연환경 보전·활용을 추진과제로 제시하였다. 다섯 번째 분야는 사각 없는 지역의 복지·의료로서 지역 맞춤형 복지 지원, 취약지역 공공 의료체계 정비를 추진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여섯 번째 분야는 지역균형발전 시책의 지속 추진으로서 혁신도시·세종시의 보완 발전, 지역공약 이행 지원을 추진과제로 제시하였다.

표 1-2-3 주요 추진시책(6대분야 17대 추진과제)

①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 ① 지역중심지 활력 증진 ② 주민체감 생활환경 개선 ③ 주민 주도·협력 발전체계 구축	②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회복 ④ 일자리 창출중심으로 지역산업정책의 전환 ⑤ 지역투자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⑥ 산업단지를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육성 ⑦ 농어촌 일자리 확충
③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⑧ 지방 초중고교 교육여건 개선 ⑨ 지방 대학 특성화 ⑩ 지역인재와 기업의 선순환 성장	④ 지역문화 육성 및 생태 복원 ⑪ 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 발전 ⑫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⑬ 생태·자연환경 보전·활용
⑤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⑭ 지역 맞춤형 복지 지원 ⑮ 취약지역 공공의료체계 정비	⑥ 지역균형발전 시책 지속 추진 ⑯ 혁신도시·세종시 보완 발전 ⑰ 지역공약 이행 지원

3. 2단계 지역희망 프로젝트(HOPE⁺)

(1) 추진 배경

2013~2014년 기간동안 박근혜정부는 지역희망 프로젝트(HOPE)에 근거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주민의 행복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였다. 지역발전정책의 토대가 되는 지역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였고, 지자체 자율로 63개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하고 이들 생활권별로 지역행복생활권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동시에 지역경제, 교육, 문화, 복지·의료 분야 등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시·도별로는 지역특성과 산업생태계를 고려한 지역특화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2015년에는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7월 22일)를 끝으로 전국에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설치가 완료되어 창조경제의 지역별 실행 기구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도의 상향식 지역발전방식이나 정부의 맞춤형 패키지 지원이 충분히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지역행복생활권을 통해 각 지자체가 주변 지역과 연대하여 상생하려는 노력이 증대되고 있으나 아직 당초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지역발전위원회는 2015년 하반기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지역발전정책의 장점은 살리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2단계 지역희망 프로젝트(HOPE⁺)를 마련하였다.

(2) 중점 추진방향 및 과제

지역발전위원회는 2단계 지역희망 프로젝트(HOPE⁺)의 실현을 위해서 행복생활권 정책 고도화를 통한 ‘국민행복체감시대의 실현’, 창조경제 확산 및 지역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의 새로운 도약’, 국민통합과 공동체의식 회복을 통한 ‘선진한국 기반 확립’ 등을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9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국민행복체감시대의 실현’을 위해 (과제 ①) 국민들이 행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을 확대하고 그 성과를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과제 ②)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선정·추진(Top-Down)되고 있는 지역발전사업을 재편하여 지역사회의 의견수렴 및 수요를 반영하여 추진(Bottom-Up)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과제 ③) 지역발전사업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특회계의 범위와 운용방식을 재정비하는

등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이다.

‘지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과제 ④) 창조경제기반의 지역특화발전 추진, (과제 ⑤) 지역문화와 산업·기술의 창조적 융합, (과제 ⑥) 혁신도시를 지역발전의 교두보로 육성, (과제 ⑦)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생활권 사업 간 협업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였다.

‘선진한국 기반 확립’을 위해 (과제 ⑧)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낙후지역 지원 강화 및 지역격차 해소를, (과제 ⑨) 도시와 지역 간 유대감 강화를 위한 「고향희망심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림 1-2-2 2단계 지역희망 프로젝트(HOPE+)의 중점 추진방향 및 과제



제2절 지역발전정책 추진실적

1. 「지역발전 5개년계획」의 5대 분야별 추진실적

「지역발전 5개년계획」에 따른 2016년도 부문별 시행계획(21개 중앙부처의 5대 분야 - 20개 실천과제 - 263개 단위사업)의 체계적 추진 및 부처간 협업 추진을 통해 달성한 2016년도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표 1-2-4 「지역발전 5개년계획」의 '5대분야 - 20개 실천과제'

5대 분야	20개 실천과제	주관부처	협업부처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 지역주도 협력사업 확충	행자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 주민 체감 생활인프라 구축	국토부	농식품부, 행자부 등
	▪ 지역 중심지 활력 증진	국토부	농식품부
	▪ 지역 교통·물류망 개선	국토부	행자부, 해수부 등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제고	▪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대표산업 육성	산업부	미래부, 고용부, 해수부
	▪ 지역투자 촉진 기반 확대	산업부	-
	▪ 산업단지 고도화로 창조경제 구현	산업부	국토부
	▪ 지역기반 연구 활성화로 창조경제 지역확산	미래부	국토부
	▪ 지역성장 거점도시 조성	국토부	미래부, 인행부, 농식품부 등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	▪ 농산어업 경쟁력 강화	농식품부	해수부, 농진청, 산림청
	▪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	교육부	-
	▪ 일과 학습 병행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교육부	-
지역문화 융성, 생태복원	▪ 100세 시대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	교육부	-
	▪ 지역 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 지원	문화부	문화재청
	▪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	문화부	-
	▪ 지역 관광산업 육성	문화부	농식품부, 해수부, 문화재청
사각없는 지역 복지의료	▪ 생태·자연환경 보전·활용	환경부	농식품부, 국토부, 산림청
	▪ 주민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복지부	-
	▪ 수혜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	복지부	여가부 등
	▪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복지부	-

(1)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분야

지역 주민의 실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행복 증진에 필수적인 기초 생활 인프라 확충하기 위한 분야로서 세부적으로는 '지역주도 협력사업 확충', '주민체감 생활인프라 구축', '지역 중심지 활력 증진', '지역 교통·물류망 개선' 등 4개의 실천과제를 추진하였다.

동 분야의 2016년도 주요 성과로는 첫째,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의 29개 신규 선정, 창조지역사업 114개소(누적), 사회서비스 제공형 농촌공동체회사 30개 등을 통해 마을기업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기반을 강화하였다. 둘째, 농어촌 면지역의 상수도 보급률 76.3%, 하수도 보급률 67.1%, 도시가스 보급률 81.9%,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46개소 신·증설 등을 실현하고, 또한 BIS도입률 64.2%, 저상버스 도입률 23.3%, 주차환경개선지원 58개소, CCTV 26,117개소(누계) 등을 통해 농어촌 및 취약지역의 주민체감 생활인프라를 대폭 개선하였다. 셋째, 농촌 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 18개소 신규 지정(누적 33개소), 새뜰마을사업 66개소 신규 선정(누적 151개소), 도시재생지구 33개소에 대한 국비지원 확정 등을 통해 지역중심지의 활력을 증진하였다. 넷째, 동해-삼척, 상주-영덕 등 4개 고속도로의 개통, 광역도로 38개 사업(175.9km) 완료, 도시철도 30.9km 신규 확충 등 지역 교통·물류망 개선을 통해 주민 편의가 증진되었다.

표 1-2-5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분야의 주요 성과(2016년 실적)

실천과제	주요 성과
지역주도 협력사업 확충	생활권 선도사업 선정 확대(누적) : ('15) 110개 → ('16) 139개(29개 증)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및 확산 : ('15) 8개소 → ('16) 10개소
	창조지역사업 추진건수(누적) : ('15) 95개소 → ('16) 114개소(19개 증)
	마을기업 매출액 : ('15) 103억원 → ('16) 770억원
	사회서비스 제공형 농촌공동체회사 : ('15) 17개 → ('16) 30개
	귀농귀촌 교육 인원 수 : ('15) 2,387명 → ('16) 2,500명
주민 체감 생활인프라 구축	전국지자체 BIS도입률 : ('10) 40.1% → ('16) 64.2%
	저상버스 도입률(저상버스/ 시내버스) : ('13) 16.4% → ('16) 23.3%
	주차환경개선지원 : ('15) 29개소 → ('16) 58개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 '16년까지 농어촌 마을 96개소 지원
	도시가스 보급률 : ('15) 80.1%(750억원) → ('16) 81.9%(650억원)
	슬레이트지붕 철거(누적) : ('11) 2,372동 → ('16) 105,391동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 ('11) 58.8% → ('16) 76.3%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 : ('11) 62.1% → ('15) 67.1%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 46개 시설(5.7천㎡/일) 신·증설 중

지역 중심지 활력 증진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CCTV) : '16년까지 26,117개소 설치
	농촌중심지활성화 선도지구 지정 : ('15) 15개소 → ('16) 18개소(누적 33개소)
지역 교통·물류망 개선	새뜰마을사업 선정(누적) : ('15) 85개소 → ('16) 151개소
	고속도로('16년 개통) : 동해-삼척, 상주-영덕, 울산-포항, 주문진-속초
	광역도로 : '16년까지 72개 사업(348.7km) 중 38개 사업(175.9km) 완료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원주~강릉 철도(추진률) : ('15) 60.9% → ('16) 77.9%
	도시철도망 확충 : ('15) 643.5km → ('16) 674.2km(+30.7km)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분야

지역의 특성과 산업생태계를 고려하여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분야로서, 세부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대표산업 육성', '지역투자 촉진 기반 확대', '산업단지 고도화로 창조경제 구현', '지역기반 연구 활성화로 창조경제 지역확산', '지역성장 거점도시 조성', '농산 어업 경쟁력 강화' 등 6개의 실천과제를 추진하였다.

2016년도 주요 성과로는 첫째, 기술개발 및 패키지형 지원을 통한 지역특화산업육성, 시·도간 자율적 연계협력을 통한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추진 등 지역대표산업육성을 통해 신규고용은 7,712명, 사업화 매출액은 3,172억원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둘째, 기업의 지방이전 및 신증설 투자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 결과, 2016년까지 지방투자 기업(585개)을 통해 고용 34,481명, 총투자 10조 9,415억원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셋째, 생산 중심의 산업단지를 개방형 창조경제 혁신단지로 전환하기 위한 산학융합지구 조성을 통해 산업단지로 이전한 대학/학과/학생 수가 2016년까지 14개 대학, 32개 학과 8,260명으로 증가하였다. 넷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연계한 지역별 특화모델을 통해 2016년 창업보육 기업 수와 투자유치액이 3,870개사, 4,329억원에 이를 정도로 성과 창출이 본격화되고 있다. 다섯째, 연구개발특구의 연구소기업이 2015년 160개에서 2016년 339개로 급증하였고, 혁신도시의 이전기관과 연관된 기업유치가 263개사에 달하는 등 지역 거점도시의 성장이 가시화되고 있다. 여섯째, 6차산업 창업 경영체 561개소(누계), 농식품 ICT 결합형 모델개발 30개소(누계) 등을 통해 농가의 매출과 소득이 크게 증가하였다.

표 1-2-6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제고' 분야의 주요 성과(2016년 실적)

실천과제	주요 성과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대표산업 육성	지역특화산업 : 고용 3,158명(R&D)+3,744명(비R&D), 매출 2,507억원(R&D)+665억원(비R&D)
	경제협력권산업 : 고용 810명(R&D)+71명(비R&D)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 ('15)13,464명 → ('16)17,497명 취업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도입 후 고용률 : ('15) 65.7% → ('16) 66.1%
지역투자 촉진 기반 확대	지역 SW산업 : 매출 206조원(전년대비 12.7% 증가), 고용창출 1,235명(간접고용 포함)
	지방투자 기업 유치 : '16년까지 585개 기업(총투자 10조 9,415억원, 신규고용 34,481명)
산업단지 고도화로 창조경제 구현	FDI 유치 : ('15) 209억 달러 → ('16) 213억 달러
	산학연협업체(MC)수/참여자(누적) : ('15) 78개/8,035명 → ('16) 85개/9,582명
	산학융합지구 : '16년까지 14개 대학, 32개 학과 8,260명, 기업연구소 202개 이전완료
	고용부, 산업부, 국토부, 미래부 4개 부처 합동 공모로 25개 산단 지원
지역기반 연구 활성화로 창조경제 지역확산	다목적 복합시설인 종합비즈니스센터 2개 센터(울산, 광주) 준공, 8개 센터 운영(누계)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 '16년까지 544km 건설(누계)
	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지원 기업 수 : ('15) 1,119개 → ('16) 3,870개
	창조경제혁신센터 투자유치액 : ('16) 4,329억원
	지역 연구개발지원단 : ('15) 15개 → ('16) 17개 시도로 확대하여 지역 R&D조사·분석 수행
	산학연 공동연구법인 : ('15) 7개 → ('16) 10개(42.9% ↑)
지역성장 거점도시 조성	대학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수 : ('15) 271개 → ('16) 426억원(57.2% ↑)
	대학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신규채용 건수 : ('15) 487명 → ('16) 673명(38.2% ↑)
	연구개발특구 연구소기업(누계) : ('15) 160개 → ('16년) 339개(신설 179개)
	세종테크노벨리 산업용지 공급 : 수도권 기업 등 33개사 유치
	공공기관(154개) 혁신도시 이전(누계) : ('15) 136개 → ('16) 143개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 이전기관 연관기업 263개사 유치
농산어업 경쟁력 강화	새만금 방수제 축조(공정률) : ('15) 80% → ('16) 87%
	새만금 신항만 개발 : 신항만 방파제 3.1km 완공
	첨단과학기술단지 : 133개 기업 입주(100% 분양)
	농식품 ICT 결합형 모델개발(누계) : ('15) 8개소 → ('16) 30개소
	6차산업 창업 경영체 육성(누계) : ('15) 472개소 → ('16) 561개소
	6차산업 시범농가 매출액 증가율 : ('15) 35.5%(103백만원) → ('16) 43.1%(148백만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 ('15) 870만명 → ('16) 1,001만명(연평균 15% ↑)
	로컬푸드직매장 확대(누계) : ('15) 103개소(매출액 1,659억원) → ('16) 148개소(2,560억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누계) : ('15) 1,105개소 → ('16) 1,174개소(지구내 인증면적 32.0%)
	과실브랜드 육성 지원 : ('15) 18개소 → ('16) 20개소(브랜드 유통비율 18.4%)
	수산물가점단지 2개소 완공(누계 9) : 고창(풍천장어웰빙센터), 포항(과메기산업화가공)
	특성화지원 농가소득 증가율 : ('15) 26.9% → ('16) 31.2%(부가가치 향상율 32.4%)

(3)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 분야

지역의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의 혁신을 통해 인재들이 지역에서 교육받고 지역을 위해 일하는 선순환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분야로서 세부적으로는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 '일과 학습 병행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100세 시대 지역 평생 학습체제 구축' 등의 3개 실천과제를 추진하였다.

2016년도 주요 성과로는 첫째, 지방의 대학(전문대) 및 대학원의 교육·연구 역량 제고 및 창의적 인재 육성을 통해 BK21플러스 지원 대학원생은 2015년 11,400명에서 2016년 17,100명으로, 산학협력 선도대학(전문대)의 현장실습 이수학생 비율은 2015년 70.6%에서 2016년 80.7%로 향상되었고, 그 결과 특성화분야 지방대학과 지방전문대학의 취업률이 각각 77.0%, 70.8%에 달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둘째, 지역기업의 기술수요에 부응하는 우수 연구인력, 현장인력 육성을 통해 특허등록 대비 기술이전 실시율이 34.9%로 증가하였고, 연구비 1억원당 취업자수 또한 2015년 0.67명에서 2016년 0.94명으로 상승하였다. 셋째, 지역사회 구성원의 평생학습 욕구충족과 평생교육 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사업 추진을 통해 성인학습자 전담 단과대학이 9개 대학 31개 학과로 확대되었고, 행복학습센터는 2015년 276개에서 2016년 670개로 대폭 확대되는 등 지방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표 1-2-7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 분야의 주요 성과(2016년 실적)

실천과제	주요 성과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	BK21 플러스 지원 대학원생(누계) : ('15) 11,400명 → ('16) 17,100명
	(4년제) 특성화 분야 졸업생 취업률 : ('15) 74.1% → ('16) 77%
	(전문대) 특성화 분야 졸업생 취업률 : ('15) 69.8% → ('16) 70.8%
	평생직업교육대학 1교 1명품 비학위과정 운영 : ('15) 11,480명 → ('16) 15,943명
	(전문대) LINC 현장실습 이수학생 비율 : ('15) 70.6% → ('16) 80.7%
일과 학습 병행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4년제) LINC 산업체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 ('15) 1,650건 → ('16) 1,906건
	특허등록건수 대비 기술이전 실시율 : ('15) 20.3% → ('16) 34.9%
	연구비 1억원당 취업자수 : ('14) 0.67명 → ('15) 0.94명
100세 시대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	학교기업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 ('15) 73점 → ('16) 75.5점
	지역 인문자산 발굴·활용 인문도시 : ('15) 25개 → ('16) 31개
	행복학습센터 수 : ('15) 276개 → ('16) 670개

(4) '지역문화 육성, 생태복원' 분야

지역의 문화·자연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별 특화된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하고, 맞춤형 문화서비스와 생태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분야이며, '지역 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 지원',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 '지역 관광산업 육성', '생태·자연환경 보전·활용' 등의 4개 실천과제를 추진하였다.

2016년도 주요 성과로는 첫째, 문화도시 17개소, 문화마을 29개소 지원을 통해 문화특화지역 조성으로 지역의 특화된 문화자원을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였고, 대구 패션디자인업체(33개), 부산 국제영화제(6개) 등의 지원을 통해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재발견 및 재창조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둘째,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27개 지역, 생활문화센터 37개소 지원을 통해 문화 소외지역의 생활문화 공동체를 형성하고 기존 문화시설 및 유휴공간을 활용한 생활문화 공간을 확충하였다. 셋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관광거점 육성, 창조적 지역문화관광 활성화 및 고품격 관광자원 개발 등을 추진한 결과, 동북아 해양관광레저특구의 방문객 304만명, 크루즈 관광객 195만명 등의 각종 성과를 달성하였다. 넷째, 다양한 생태자원의 보전·복원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한 결과, 2016년까지 자연마당 8개소 조성, 생태놀이터 54개소 조성 등을 통해 도시 생태자원을 복원·확충하였고, 2016년까지 생태하천 1,250km 복원, 국가생태문화탐방로 2,009km 조성,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5ha 복원, 지방하천 48.6%(3,773개, 26,789km) 정비 등 하천·산림생태를 보전·복원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표 1-2-8 '지역문화 육성, 생태복원' 분야의 주요 성과(2016년 실적)

실천과제	주요 성과
지역 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 지원	문화도시 : ('15) 7개소 → ('16) 17개소 문화마을 : ('15) 13개소 → ('16) 29개소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 ('15) 27개 지역 → ('16) 27개 지역 생활문화센터 : ('15) 34개소 지원 → ('16) 37개소 지원 공립박물관 13개관(154억원), 공립미술관 5개관(61억원), 작은도서관 31개관(17억원)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 227개 단체, 3,100회 순회공연, 관람객 72만명
지역 관광산업 육성	동북아 해양관광레저특구 방문객 : ('15) 318만명 → ('16) 304만명 크루즈 관광객 : ('15) 88만명 → ('16) 195만명
생태·자연환경 보전·활용	생태놀이터 조성(누적) : ('15) 35개소 → ('16) 54개소 녹색환경지원센터 기업환경기술지원 : '16년까지 12,583개 업체 기업환경기술지원 국가중요 농업유산 지정(누적) : ('15) 6개소 → ('16) 7개소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분야

전국 어디에 살든 기본적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역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생활의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분야로서 세부적으로는 '주민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수혜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등 3개의 실천과제를 추진하였다.

2016년도 주요 성과로는 첫째, 지역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38,576명을 창출하였다. 그리고 210개 시군구, 1,094개 읍면동을 복지허브기관으로 개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2,224명 확충, 읍면동 단위 인적 안전망의 구성 완료(229개 시군구) 등을 통해 주민밀착형 찾아가는 서비스 및 촘촘한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였다. 지역수요를 반영한 주민체감형 건강증진사업의 강화를 위해 만성질환 위험군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10개 보건소, 1천명 대상)을 시작하였고, 정신건강증진센터 225개소를 운영하였다. 둘째, 수혜자 특성을 고려한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8만 6,681가구, 13만 4,853명의 취약계층 아동이 서비스 수혜를 받았으며, 지역아동센터 4,054개소(전년 대비 33개소 증가), 방과후 아카데미 250개소, 청소년 문화의집 31개소 등을 확대 운영하여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셋째,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형 산부인과 35개소, 응급의료기관 108개소 등을 통해 취약지역의 생활의료 기반 강화에 기여하였다.

표 1-2-9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분야의 주요 성과(2016년 실적)

실천과제	주요 성과
주민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읍면동 단위 인적 안전망 : ('15) 214개 시군구 → ('16) 229개 시군구(전국 100% 완료)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 ('15) 1,644명 선발 → ('16) 2,224명 선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실적 : ('15) 32,882명 → ('16) 38,576명
	정신건강증진센터 확충(누적) : ('15) 224개소 → ('16) 225개소
수혜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	드림스타트 수혜 아동·임산부 수 : ('15) 127,758명 → ('16) 134,853명
	지역아동센터 지원 : ('15) 4,021개소 → ('16) 4,054개소
	방과후 아카데미 : ('15) 244개소/9,490명 → ('16) 250개소/9,745명
	다문화가족 언어발달교육 참여 확대 : ('15) 15,253명 → ('16) 15,379명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분만산부인과(누적) : ('15) 33개소 → ('16) 35개소(신규 2개소)
	필수의료 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 : ('15) 3개소 → ('16) 4개소(신규 1개소)
	지역 응급의료기관 : ('12) 71개소 → ('16) 108개소

2. 주민체감형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의 추진실적

(1)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박근혜정부는 이전 정부의 기능 분산형 균형발전정책(세종시 건설, 혁신도시·기업도시 건설 등)과 광역경제권 정책(30대 선도프로젝트, 광역경제권선도산업 육성 등)이 매년 심화되고 있는 지역간 양극화 등 지역 문제 해결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고, 지역의 주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정책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것으로 지역발전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HOPE프로젝트(2013년 7월)을 통해 주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6대 중점 추진방향을 중심으로 17개 실천과제가 확정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이다.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 지역 주민이 어디서나 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기초인프라를 확충하고, 일자리, 교육·문화·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행복생활권’ 즉, 인접한 기초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구성한 생활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의미한다.

지역발전위원회는 2014년 3월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을 본격 추진하기에 앞서 중추도시권 20개, 도농연계권 14개, 농어촌권 21개, 수도권시범생활권 8개 등 63개 지역행복생활권의 구성을 완료하였다. 지역행복생활권은 종전 ‘5+2 광역경제권’처럼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지자체 간의 자율적 협의에 의한, 즉 시·군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인근 지역 및 시·도 협의를 거치는 지역 주도의 상향식으로 구성되었다.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은 기초지자체가 발굴한 주민 불편해소 과제를 중점 지원함에 있어서 기존의 개별 부처별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별 협의를 통해 각종 사업을 조정, 패키지 지원하는 방식을 지향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사업 추진주체 또는 지원내용에 따라 ①지역생활권과제(기초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 기초지자체 단독사업), ②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③새뜰마을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사업선정 및 지원을 직접 수행하며, 2013년부터 5대 중점분야(NIMBY 해소, 응급의료, 주민안전, 일자

리 연계, 상하수도·가스 등의 생활인프라)를 중심으로 각종 시설·서비스연계, 지역자원의 공동 개발·관리 등을 포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처럼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은 지자체간 장벽을 허물어 주민에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3년 32개, 2014년 35개, 2015년 42개 과제를 선정·지원하였고, 2016년에도 30개 사업을 추가로 선정함으로써 2016년말 현재 총 139개 사업을 선정·지원하였다.

표 1-2-10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의 2016년 선정결과(30개)

시도명	사업명	참여 지자체
서울경기	조선왕릉, K-GLocal의 시작	구리시, 남양주시, 서울노원·성북구
부산	사회적약자 스마트 위치관리시스템 구축	양산시, 부산시, 김해시, 울주군
인천	아라천 해양생태문화 창조벨트 조성	인천 서구·계양구, 김포시
광주	무등산권 전통문화지구 조성사업	광주시, 북구, 전남 담양군
대전	소규모식품 파일럿 플랜트구축 청년일자리 지원	유성구, 옥천군, 논산시
울산	계남기반 바이오메디컬 산업 육성	울산시, 밀양시
세종	금강르네상스 조성	공주시, 세종시
경기	꽃할배 행복도시 프로젝트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강원	북한강유역 6차산업 활성화 청소년 드림 꾸러미 사업	춘천시, 홍천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충북	항공인프라 활용 '비상의 꿈' 프로젝트	청주시, 보은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당뇨 바이오 치유벨트 조성	충주시, 제천시
	지역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글로벌 꿈나무 창의공작소"	진천군, 증평군, 괴산군, 음성군
충남	천안아산 동반성장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아산시, 천안시
	홍성·예산 통하는 생활가로 개선	홍성군, 예산군
	내포관광 창조지원센터 조성 운영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전북	쌀수탈 근대역사 교육벨트 조성	군산시, 김제시, 완주군
	골든타임사수! 서남부권 광역응급의료 체계구축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농촌특화자원 활용 MICE 산업 육성	순창군, 남원시, 임실군
전남	건강기능차 6차산업화 지원	보성군, 여주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구곡담 벌산업 활성화 생태계 조성	곡성군, 담양군, 구례군
	상생나무 행복디자인 사업	영암군, 장흥군, 강진군
경북	백두대간 황태 미니클러스터 일자리 창출	예천군, 상주시, 문경시
	꿈앳그린 도시프로젝트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농촌 일손부족 해소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청송군, 의성군, 영양군
경남	거함산 곤충산업 친환경 항노화 산업화 지원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다미다색 상생일자리 창출	합천군, 의령군, 창녕군, 밀양시
	도농한마을 일자리 창출 지원	함안군, 창원시, 김해시
제주	FAO 세계중요농업유산 제주밭담을 활용한 농촌마을 6차산업화	제주시, 서귀포시
도경계	소백산권 3도 접경 상수도설치 사업	충북 단양군, 경북 영주시, 강원 영월군

출처 : 지역발전위원회 보도자료(2016년 2월)

(2) 새뜰마을사업

새뜰마을사업(전국민 대상의 명칭 공모전(2015년 5월)을 통해 기존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프로젝트'를 새뜰마을사업으로 변경)은 박근혜정부의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의 일환으로서 위험잠재지역(건물, 축대 등의 노후붕괴 위험지역, 산사태, 상습침수 등 자연재해 우려지역), 생활환경이 비위생적인 지역, 생활인프라가 미흡한 지역(상하수도, 소방도로, 급경사, 재래식 화장실 등의 문제가 있는 지역) 등 주거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삶의 질'을 개선할 목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전국 354개의 달동네, 쪽방촌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2013년, 지역발전위원회·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결과, 128만 가구가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이같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은 주거환경, 생활인프라, 안전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에 대한 주민 체감도 제고 차원에서 취약지역(농어촌지역에 1,200개, 도시지역에 350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 지원을 강화·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제10차 지역발전위원회(2014년 9월)'에서 지역행복생활권·특화발전프로젝트와 함께 새뜰마을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다. 이후 동 프로젝트의 대상지 선정 등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15년부터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반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였다.

새뜰마을사업의 추진방식과 관련하여 지역행복생활권 내 '취약지역'은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제안하고,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자체가 제안된 지역(농어촌지역, 도시지역) 중에서 일정한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국고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상향식 공모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국고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안전 확보, 생활·위생인프라, 일자리·문화, 복지 등 휴먼케어, 집수리 지원, 주민역량 강화 등과 관련한 사업 예산을 일정 기간(도시지역 4년, 농어촌지역 3년) 지원한다. 취약지역별로 최고 70억원 이내(사업비의 70%, 지방비 30% 매칭)에서 마을(가구수)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200가구 이상 지역 최대 70억원, 100가구 최대 35억 원 등)하고, 사업의 세부 내역별로 지원한도(예: 농어촌지역의 빈집 철거 시, 일반주택은 동당 1백만원 이내, 슬레이트주택은 동당 2.4백만원)를 적용한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새뜰마을사업 대상지로 2015년에 85개소(농어촌 55개소, 도시 30개소)를 선정하였고, 2016년에도 66개소(농어촌 44개소, 도시 22개소)를 추가 선정하였다. 2016년 새뜰마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의 특징을 살펴보면,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읍면소재지와 거리가 먼 낙후마을이나 섬 지역 등 지리적 여건이 불리한 지역이 다수 포함되었고, 중심지에 위치하면서도 그 동안 개발에서 소외되어 주변과 생활 격차가 커졌던 마을(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강화 강화읍 신문리, 고창 고창읍 동부리 등)도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한편, 도시 지역의 경우는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 등에 의해 조성된 산비탈 달동네(부산 금정구 부곡동 희망숲속마을, 전남 여수시 충무동 충무마을 등)가 많으며, 공단이나 공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마을(군산시 산북동 개원마을/미창마을, 전남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 등)도 선정되었다.

표 1-2-11 새뜰마을사업의 대상지 선정결과(2016년)

시도	대상지역	
	농어촌(44개소)	도시(22개소)
부산(3)	-	금정구, 남구, 동구
인천(2)	강화	동구
광주(1)	-	서구
울산(2)	-	동구, 북구
경기(1)	이천	-
강원(10)	양구, 영월, 인제, 정선, 평창, 화천, 홍천	동해, 삼척, 태백
충북(6)	괴산, 단양, 옥천, 음성, 제천	영동
충남(4)	논산, 예산, 태안	부여
전북(9)	고창, 남원, 순창, 임실, 장수, 진안	군산, 익산, 전주
전남(11)	광양, 곡성, 구례, 보성, 완도, 장흥, 함평, 해남	목포, 여수, 장성
경북(9)	고령, 군위, 상주, 성주, 영천, 예천, 의성	안동, 영주
경남(8)	고성, 밀양, 창원, 하동, 함안, 합천	진주, 통영

출처 : 지역발전위원회 보도자료(2016년 2월)

2016년에 선정된 66개소를 비롯한 전국 151개 새뜰마을에 대해서 지역발전위원회가 컨트롤타워가 되고, 농식품부와 국토부가 각각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을 맡아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 대상지별 취약요소와 우선순위에 따라 안전 확보, 생활·위생인프라 확충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3. 주요 지역발전정책의 추진실적

(1) 지역행복생활권 운영체계의 점검·평가

박근혜정부는 163개 시·군 지자체 간의 과당 경쟁 및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생활 서비스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상생발전, 주민 복리증진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 간 자율과 협의에 따라 상향식으로 전국적으로 63개 생활권을 설정(2013년 12월)하고, 해당 생활권에 필요한 ‘주민체감형’ 사업, 즉 생활권 사업(국비지원 생활권과제, 생활권 선도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을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추진하였다.

지역위는 지자체 주도의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을 내실 있게 실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15년 10~11월 기간에 63개 생활권을 대상으로 생활권 운영체계 및 생활권 사업 전반에 대해 시범 점검을 실시하였다. 지역행복생활권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여부, 협의체 운영 여부, 사업발굴 노력 등 운영 전반을 점검하였는데, 생활권발전계획 수립을 완료한 생활권이 48개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생활권협의회·협의체 등 추진체계의 운영 부진, 생활권 내 시·군 간의 연계·협력 미흡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지역위는 「균특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지역행복생활권 운영체계 평가 계획(2016년 5월 2일) 등에 근거하여 2015년 점검 이후의 개선조치사항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성과 우수사례를 선정하기 위해 2016년 6~9월 기간동안 17개 시도 및 63개 생활권을 대상으로 생활권 운영체계(71개) 및 생활권 사업(158개 사업, 2014~2016년 5월 실적)을 대상으로 심층평가를 실시하였다. 생활권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26명)이 5개 분과³⁾로 나누어 1차 심층평가(6월 22일 서면평가, 6월 23~24일 대면평가), 2차 심층평가(7월 6일, 이의신청 과제에 한함), 우수사례 현장실태조사(7월 13~22일)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평가 결과를 도출하였다.

평가 결과, 박근혜정부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인 지역행복생활권 기반이 대부분 구축되어 성과 창출을 위한 지역자원의 공동활용 및 생활권 내 공동수요에 대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평가대상 71개(도 8개 + 생활

3) 도(8개), 특광역시·제주(9개), 중추도시·수도권시범생활권(20개), 도농연계생활권(13개), 농어촌생활권(21개)

권 63개) 운영체계 중 도에서는 전남, 충남, 생활권에서는 부산+김해+양산+울주, 광주+나주+담양+화순+함평+장성, 천안+아산, 홍성+예산 등 12개 생활권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표 1-2-12 생활권발전계획 수립 현황

연도	중추도시 생활권	도농연계 생활권	농어촌 생활권	수도권시범 생활권	합계 (누적진척률)
2014	11	3	10	2	26(41.3%)
2015	9	6	10	0	25(81.0%)
2016	0	5	1	6	12(100%)
합계	20	14	21	8	63

출처 : 지역발전위원회 내부자료(2016년 12월)

(2)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국토 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 소재 154개 공공기관(정부소속기관 44개, 정부산하 기관 11개)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이를 수용할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을 2005년 6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관련하여 혁신도시 입지 선정(2005년 12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2007년 2월), 혁신도시 부지 조성(2007년 9월부터) 등을 추진하였고, 이후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이 2012년 12월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2016년말 현재 총 154개 기관 중 143개 기관이 지방 이전을 완료한 상태이며, 미이전 11개 기관 중 인터넷진흥원 등 8개 기관은 2017년에 이전하고, 나머지 3개 기관은 2018년 이후에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공공기관이 입주할 혁신도시 조성은 전체 10개 혁신도시 중 강원4)을 제외한 9개 혁신도시가 준공된 상태이며, 10개 혁신도시에 아파트 5.7만호, 학교 31개,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 23개 등을 공급하여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였다.

이전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지역의 혁신주체(대학, 연구소, 기업지원기관 등)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업지원 등을 추진하는 한편, 정부와 지자체가 연간 30여회의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한 결

4) 강원은 군부대 이전구간을 제외한 3단계공사를 2016년 12월에 준공하였고, 2017년 12월에 최종 준공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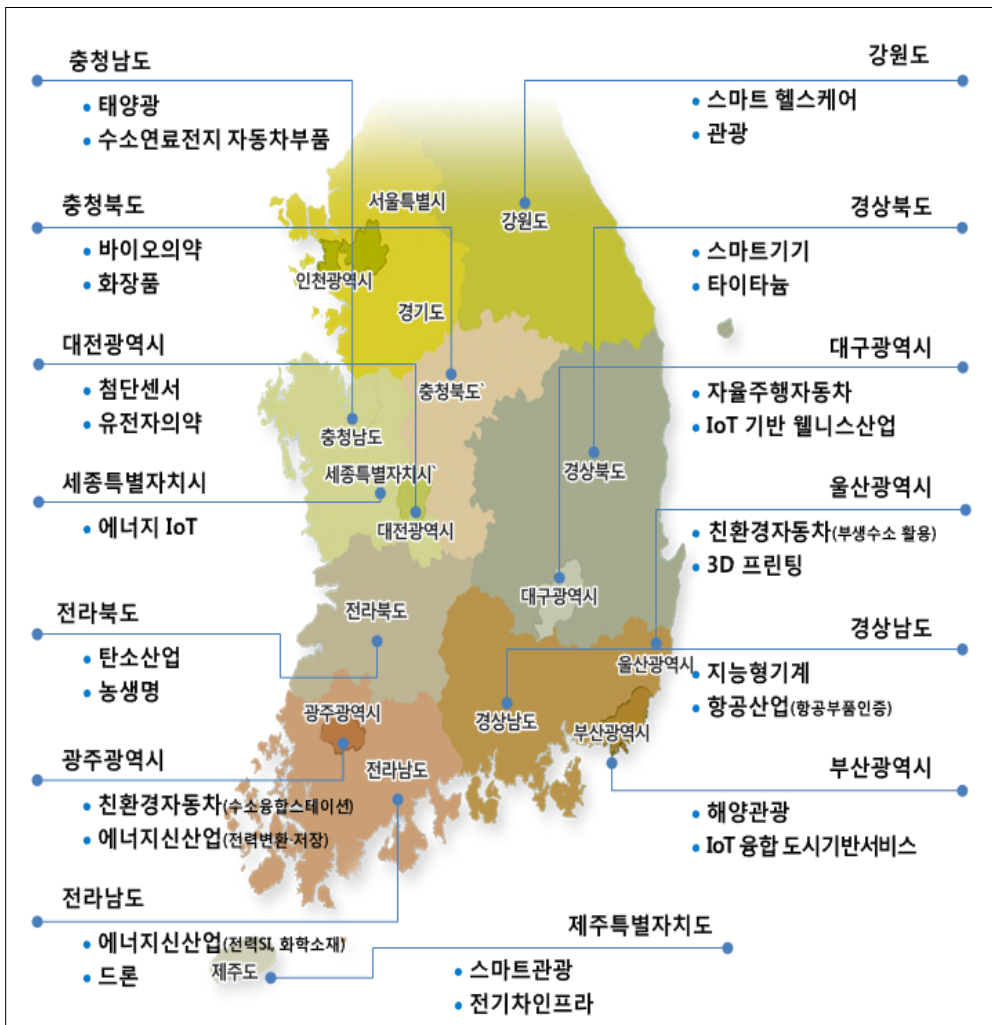
과, 2016년말까지 혁신도시 클러스터 내 271개 기업을 유치하였다.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2012년 2.8%에서 2016년 13.3%로, 혁신도시 인구가 2014년말 59,205명에서 2016년말 149,570명으로, 이전 지역의 지방세 수입이 2013년 534억원에서 2015년 7,442억원으로 급증하는 등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성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6년 12월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10개 혁신도시 관할 시·도 주관하에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추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주체별 역할 및 실행방안을 담은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3)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추진

그간의 지역경제 대책이 재정지원에 대한 높은 의존,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 경직된 규제와 잔존, 기업 투자 유치의 차별성 부족 등으로 실질적 성과 창출에 한계를 보임에 따라, 정부는 2015년 12월에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지속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시·도가 잘 할 수 있는 산업(지역전략산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세계적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부응하여 정부는 맞춤형 패키지 지원 및 규제완화를 집중 실시하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2015년 10월)에서 시·도별 지역전략산업(2개씩)을 상향식으로 선정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핵심 규제를 해당 지역에 한정하여 폐지하는 ‘규제프리존’ 도입이 제안되었다.

이에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시한 ‘지역전략산업 선정 및 규제특례(안)·재정지원사업(안) 제출 가이드라인(2015년 11월 2일)’에 의거하여 39개의 지역전략산업(안)을 제출(2015년 11월 30일)하였고, 중앙부처(산업별TF 구성·운영)는 기업 및 인프라 분포 등 지역의 산업경쟁력, 국가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미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분야의 우선 선정, 시·도간 산업의 중복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27개 산업으로 조정하였다. 이성과 같이 ‘산업 선정 가이드라인 제시(중앙→시·도) → 지자체 선정·제출(시·도→중앙) → 관계부처 조정(중앙↔시·도) → 최종 선정(지역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의 절차를 통해 시·도별로 2개(세종시 1개)의 지역전략산업이 최종 선정되었다.

그림 1-2-3 14개 시·도별 지역전략산업 선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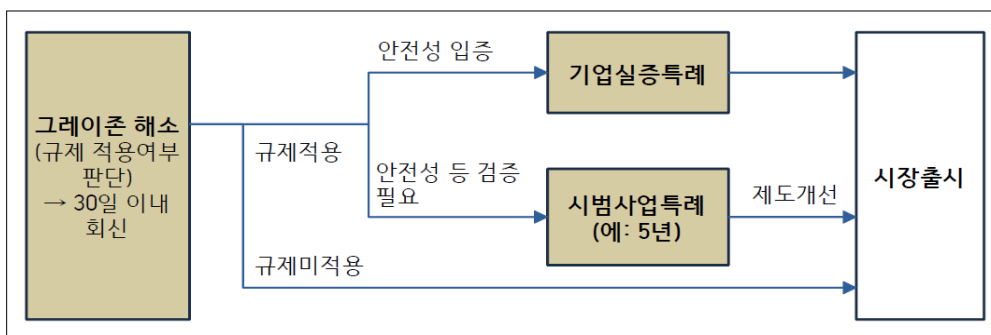


2016년 5월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로서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⁵⁾이 발의되었는데, 동 법은 산업맞춤형 규제완화를 일정 지역(규제프리존)에 한정하여 시행하고, 기존규제·신설규제 등 지역전략산업 관련 주요 유형별 규제에 대해 네거티브 규제개선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역의 투자 매력도를 제고할 수 있는 혁신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5) 특별법은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 수립, 특별위원회(규제프리존 정책의 총괄·운영기구)의 심의·의결, 규제프리존 지정 및 운영, 규제특례 사항(Positive방식), 규제특례의 제안절차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기술·융복합 분야에 특화된 규제특례로서 첫 번째, (그레이존 해소) 기존 규제 적용여부가 불분명한 신기술·융복합 분야의 경우 기업이 소관부처에 규제 적용여부를 문의하면 소관부처는 규제부처와 협의하여 규제 적용여부를 조속히(예: 30일 이내) 회신하도록 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기업실증특례) 기존 규제로 인해 사업화 또는 시장 출시가 어려운 신기술·융복합 분야의 경우 기업이 안전성 확보 조치를 포함하여 규제 특례를 요구할 경우 정부 심의를 거쳐 해당 기업에 대해 규제 특례를 인정할 계획이다. 세 번째는 (시범사업 규제특례) 시장 출시 전 안전성 검증 등이 필요한 신기술·융복합 분야의 기술·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예: 5년 이내) 시범사업을 허용해줄 계획이다.

그림 1-2-4 신기술·융복합 분야의 규제특례제도 흐름도



이러한 규제프리존은 일본이 2013년부터 도쿄, 간사이 등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단위의 규제특례 허용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전략특구’와 유사한 제도라 할 수 있는데, 특별법 통과 즉시 규제프리존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도별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안)’ 수립을 병행 추진하였다.

그러나 특별법에 대한 국회 심의가 지연됨에 따라 지역위는 14개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간담회를 개최(2016년 8월 10일)하는 등 특별법의 조속 입법 촉구를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정부에서도 특별법이 그간 중앙이 주도해왔던 지역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미래를 지역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발상의 전환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특별법 제정을 2016년 하반기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하였다.

제3장 지역발전시책의 예산·평가 체계

제1절 지역발전특별회계 편성체계 및 주요 내용

1. 지역발전특별회계 편성체계

지역발전특별회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15년 1월 1일 시행) 이후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등 4개의 계정으로 운용되고 있다. 생활기반계정은 시·도 및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으로 구성되며, 경제발전계정은 부처편성사업으로 이루어진다.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경우 제주자율편성사업, 특별지방행정기관이관사무수행경비사업, 부처편성사업 등 3개 사업군으로 구분하고,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경우는 세종자율편성사업, 부처편성사업 등 2개 사업군으로 구분하여 종전 시·도자율편성사업과 부처편성사업 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지자체의 재정운용 자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표 1-3-1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이전)와 지역발전특별회계(현재)의 편성체계 비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계정	사업	계정	사업
지역개발계정	① 시·도자율편성사업 ② 시·군·구자율편성사업	생활기반계정	① 시·도자율편성사업 ② 시·군·구자율편성사업
광역발전계정	③ 부처편성사업	경제발전계정	③ 부처편성사업
제주특별 자치도계정	④ 제주자율편성사업 ⑤ 특행기관 이관사무 ⑥ 부처편성사업	제주특별 자치도계정	④ 제주자율편성사업 ⑤ 특행기관 이관사무 ⑥ 부처편성사업
(신설)		세종특별 자치시계정	⑦ 세종자율편성사업 ⑧ 부처편성사업

2.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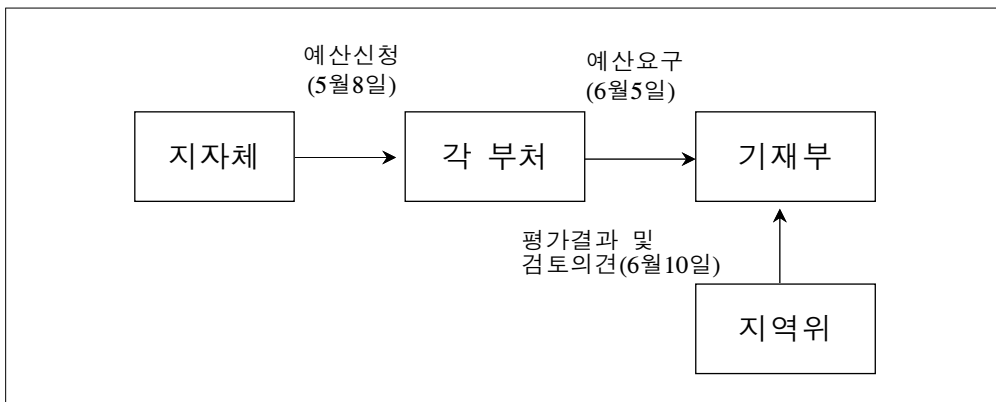
(1) 지자체 자율편성사업

생활기반계정의 시·도 자율편성사업과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제주계정의 제주자율편성사업, 세종계정의 세종자율편성사업은 지자체가 사전에 주어진 예산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토록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시·도 협의를 거쳐 시·도/시·군·구별 예산신청한도를 결정·시달하고, 시·도는 신청 한도 내에서 관할 시·군·구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신청사업의 우선순위를 명시한 예산신청서를 소관 부처에 제출한다.

각 부처는 지자체의 예산신청(안)에 대하여 국가정책과의 정합성·중복성 및 사업타당성을 점검하고,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구한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 및 지역발전위원회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지자체와 협의·보완 후 예산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한다.

그림 1-3-1 지자체 자율편성사업 예산 편성 절차(2016년 기준)



지자체 자율편성 사업은 36개의 포괄보조금 사업으로 운영되는데 그 중 30개 포괄보조사업은 시·도 자율편성, 낙후지역 개발 등과 관련된 6개 사업은 시·군·구 자율편성으로 운영된다. 시·도는 신청한도 내에서 30개 포괄보조사업 중 선택하여 자원배분

을 하며, 시·군·구는 신청한도 내에서 해당 지역별 기초생활권 개발사업 등을 선택하여 재원 배분을 하게 된다.

표 1-3-2 포괄보조사업 지원 대상

	부처	포괄보조 사업명	2016년 예산 내역사업
시·도 자율 편성 사업	문체부	①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 박물관, 문예회관 등
		②관광자원 개발	· 관광지 개발 등
		③체육진흥시설 지원	· 생활체육공원 등
		④지역문화산업기반 지원	·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등
		⑤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	·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
	문화재청	⑥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	· 지역문화유산 개발
	농식품부	⑦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 농촌체험관광 지원 등
		⑧농업기반정비	· 밭기반 정비 등
		⑨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 향토산업육성 등
	해수부	⑩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 어촌체험 관광지원 등
		⑪어업기반정비	· 지방어항 등
		⑫해양 및 수자원 관리	· 연안정비 등
		⑬수산물산지가공시설	·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농진청	⑭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 농촌지도기반 조성 등
	산림청	⑮산림경영자원 육성	· 임산물 수출촉진 등
		⑯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 숲길 조성·관리 등
		⑰임도시설(국유림 제외)	· 임도시설
	산업부	⑱지역특성화산업 육성	· 지역산업마케팅지원 등
	중기청	⑲전통시장 및 중소기업물류 기반지원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등
	여가부	⑳청소년시설 확충	· 청소년시설 확충
	환경부	㉑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등
		㉒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	· 지역생태계 복원 등
		㉓생태하천복원	· 생태하천 복원
	국토부	㉔대중교통 지원	· 하물차 공영차고지 건설 등
		㉕지역거점 조성지원	·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등
		㉖주차환경개선지원	· 공영주차장건설지원
	새만금청	㉗공업용수도 건설지원	· 새만금 공업용수도 건설
	행자부	㉘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	·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
	고용부	㉙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복지부	㉚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시·군·구 자율 편성 사업	국토부	㉛성장촉진지역 개발	· 지역개발 지원 등
		㉜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 주거지경 개선 등
	행자부	㉝특수상황지역 개발	· 기초생활기반 확충 등
	농식품부	㉞일반농산어촌 개발	· 기초생활기반 확충 등
		㉟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 63개 행복생활권 대상 등
	안전처	㊱소하천정비	· 소하천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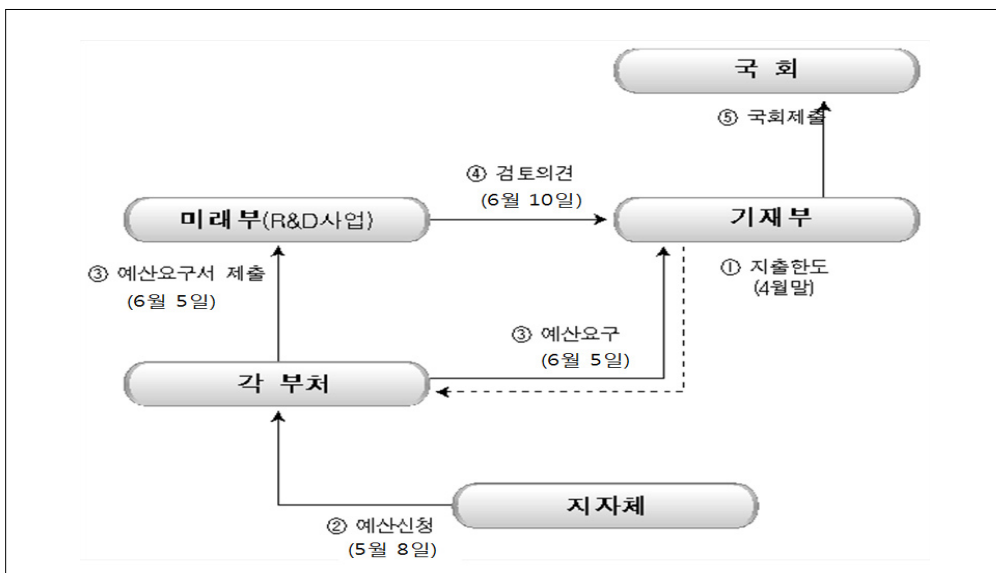
(2) 부처편성사업

경제발전계정 및 제주·세종계정의 일부 사업(부처직접편성사업)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총액 한도를 부여하고, 한도 내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예산을 편성한다.

기획재정부는 부처별로 지출한도를 결정하여 시달하고, 지자체는 자체 계획을 토대로 5월 8일까지 소관 부처에 예산을 신청한다. 각 부처는 사전에 주어진 한도 내에서 지자체 예산신청을 검토하여 작성한 예산요구서를 6월 5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R&D예산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에도 예산요구서를 6월 5일까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의 예산요구에 대해 지역발전위원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검토의견 등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한다. 다만, 지역발전위원회는 종전의 예산안 사전검토 대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8조제4항에 의거하여) 지역발전시책의 투자방향에 관한 의견과 전년도 지역발전사업 평가결과를 5월 31일까지, 평가결과 등을 고려한 예산편성에 관한 검토의견을 6월 5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림 1-3-2 부처편성사업 예산편성 절차



3. 2016년 지역발전특별회계 주요 내용

(1) 2016년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입 예산

2016년 세입은 주세(33.0%), 일반·특별회계 전입금(59.9%)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주세 세입은 3조 2,921억 원으로 전년대비 1.2% 증가(32,523→32,921억원)하였고, 일반·특별회계 전입금은 5조 9,743억원으로 전년대비 6.2% 감소(63,686→59,743억원)하였다. 부담금 등 기타 수입은 7,076억원으로 전년대비 1.4% 감소(7,180→7,076억원)하였다.

표 1-3-3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

(단위 : 억원)

구분	2015년 예산	구성비	2016년 예산	구성비	증감	%
합 계	103,389	100.0	99,740	100.0	-3,649	▽3.5
주세 100%	32,523	31.5	32,921	33.0	398	1.2
전입금(일반+특별)	63,686	61.6	59,743	59.9	-3,943	▽6.2
개발부담금 등 기타	7,180	6.9	7,076	7.1	-104	▽1.4

(2) 2016년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출 예산

2016년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생활기반계정 4조 5,901억원, 경제발전계정 4조 9,184억원, 제주특별자치도계정 3,618억원, 세종특별자치시계정 1,037억원 등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3.5% 감소한 9조 9,739억원으로 편성되었다.

2016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의 주요 특징을 보면 경제발전계정이 8.4% 감소한 반면에 생활기반계정은 2.0% 증가하였다. 한편, 분야별로는 일반·지방행정, 문화 및 관광, 교통 및 물류, 통신 등 4개 분야의 투자가 증가하였을 뿐, 그 외 분야는 모두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가장 많은 증가는 문화 및 관광 분야로 7.7% 증가(2015년 7,393억원 → 2016년 7,964억원)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도 2.3% 증가(2015년 16,561억원 → 2016년 16,945억원)하였다. 반면에 보건 분야는 22.5%(2015년 632억원 → 2016년 49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7.7%(2015년 13,615억원 → 2016년 11,199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2.7%(2015년 3,112억원 → 2016년 2,1716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5.9%(2015년 15,432억원 → 2016년 14,521억원) 감소하였다. 농림수산 분야가 전체 세출의 20.9%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통 및 물류(17.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14.6%) 등의 순이다.

표 1-3-4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계정별)

(단위: 억원)

구분	2015년 예산	구성비(%)	2016년 예산	구성비(%)	증감	%
합 계	103,389	100.0	99,739	100.0	-3,650	▽3.5
생활기반계정	44,981	43.5	45,901	46.0	920	2.0
경제발전계정	53,686	51.9	49,184	49.3	-4,502	▽8.4
제주특별자치도계정	3,701	3.6	3,618	3.6	-83	▽2.2
세종특별자치시계정	1,022	1.0	1,037	1.0	15	1.5

표 1-3-5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분야별)

(단위: 억원)

구분	2015년 예산	구성비(%)	2016년 예산	구성비(%)	증감	%
합 계	103,389	100.0	99,739	100.0	-3,650	▽3.5
일반·지방행정	2,253	2.2	2,338	2.3	85	3.8
공공질서 및 안전	3,112	3.0	2,716	2.7	-396	▽12.7
교육	8,869	8.6	8,830	8.9	-39	▽0.4
문화 및 관광	7,393	7.2	7,964	8.0	571	7.7
환경	8,742	8.5	8,387	8.4	-354	▽4.1
사회복지	4,019	3.9	3,875	3.9	-144	▽3.6
보건	632	0.6	490	0.5	-142	▽22.5
농림수산	21,038	20.3	20,857	20.9	-181	▽0.9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5,432	14.9	14,521	14.6	-911	▽5.9
교통 및 물류	16,561	16.0	16,945	17.0	383	2.3
국토 및 지역개발	13,615	13.2	11,199	11.2	-2,417	▽17.7
과학기술	1,683	1.6	1,554	1.6	-129	▽7.7
통신	40	0.0	65	0.1	25	62.5

제2절 지역발전사업의 평가체계

1. 평가목적 및 방향

지역발전사업 평가는 지역발전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주체의 바람직한 지역발전사업 추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2004년 추진실적에 대한) 2005년의 첫 평가 이후 매년 상반기에 실시하고 있다. 동 평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제12조~제14조의 2)에 근거하여 부문별 시행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 등의 추진실적을 종합 평가함으로써 지역발전사업을 정기적·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데 의의가 있다.

2016년에는 2015년 지역발전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기존 평가제도의 틀이 대폭 개편되었다.

첫째, 생활계정의 경우, 포괄보조사업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주체, 즉 지자체에게 평가 자율성을 확대해주는 방향으로 평가방식이 대폭 개편되었다. 구체적으로 지자체별로 지역발전위원회가 사전에 제시한 평가지침에 따라 자기 지역의 포괄보조사업에 대해 직접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의견·등급을 부여하고, 그 다음 지역발전위원회가 지자체 자체평가 결과의 적절성 여부를 점검하여 자체평가가 적절한 경우는 지자체의 평가결과를 그대로 인정하고 부적절한 경우는 사업별로 확인(평가의견 및 등급 조정)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수행하였다.

둘째, 경제계정의 경우, 통합재정사업평가 제도의 도입에 따라 사업 수행부처가 소관 사업(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사업, 즉 일반재정사업, 연구개발사업, 지역사업 등)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지역발전위원회는 수행부처의 지역사업 자체평가에 대하여 메타(상위)평가를 실시하였다. 일반재정사업, 연구개발(R&D)사업, 지역사업 등 분야별 칸막이식으로 운영되던 기존의 평가제도 즉, 지역발전사업평가(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9조), 재정사업자율평가(국가재정법 제8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연구성과평가법 제8조) 등을 통합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활용할 목적으로 통합재정사업평가가 첫 실시되었다.

셋째, 사업단위 평가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지역발전정책 분야 단위의 종합성과를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정책제언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발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을 최초로 실시하였다. 다만, 중앙부처의 부문별 시행계획과 17개 광역자치체의 시도 시행계획을 대상으로 한 첫 평가라는 점을 고려하여, 점검 및 컨설팅 위주로 실시하였다.

넷째, 생활계정과 경제계정 모두 피평가자의 평가업무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 축소(생활계정 6개, 경제계정 4개), 증빙자료 최소화(점검항목별 2페이지 내외), 평가등급 간소화(5등급 → 3등급) 등을 실시하였다.

표 1-3-6 2016년 지역사업 평가제도의 전년 대비 주요 개편사항

추진전략		2015년 평가제도	2016년 평가제도
성과중심 평가체계	1. 지역발전 시행계획 점검	• 미실시	• 부문별·시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2. 심층평가 확대	• 생활권 선도사업	• 지역위 핵심 추진사업 - 생활권 선도사업, 생활권 운영체계 등 • 평가결과 연속 부진사업 등
지역 주도성 강화지원	3. 지특회계 자체평가 강화	• [생활] 지자체 자체평가 (점수만 부여)→지역위 종합평가 • [경제] 부처 자체평가(점수· 등급부여)→지역위 상위평가	• [생활] 지자체 자체평가(점수·등급부여)→지 역위 상위평가 • [경제] 부처 자체평가(점수· 등급부여)→지역위 메타평가
	4. 피평가자 평가부담 경감	• [등급] 5단계(S·A·B·C·D) • [지표] 12~14개 • [증빙자료] 분량제한 없음	• [등급] 3단계(우수·보통·미흡) • [지표] 4~6개로 축소 • [증빙자료] 30페이지 이내
	5. 자체평가 지원	• [생활] 지자체 자체평가 예산 지원	• [생활] 지자체 자체평가 예산 지원 확대 (0.6억원→1.5억원)

2. 평가 대상사업 및 평가등급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지역발전위원회의 평가 대상은 '시행계획 등의 추진실적'으

로서 시행계획에 담긴 모든 사업(일반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기금, 지방비 및 비재정 사업)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나, 평가의 중복 방지, 평가 일정, 평가 실익 등을 고려하여 2015년 지특회계(경제계정, 생활계정, 제주계정, 세종계정)로 지원된 사업에 한정하였다. 다만, 사업단위 평가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지역발전정책 분야 단위의 종합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부문별 시행계획의 경우는 20개 실천과제 단위, 시도 시행계획의 경우는 시도별 5대 분야 단위를 대상으로 점검 및 컨설팅을 함께 실시하였다.

상술한 바와 같이 평가대상사업을 2015년에는 지특회계로 지원된 부문별·시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들로 경제계정, 생활계정, 제주계정 및 세종계정의 4개 계정 사업에 대해 평가를 하였다. 사업체계는 2016년 지특회계 예산작성지침(2015년 4월)의 체계에 따라 경제·제주계정은 세부사업 단위로 총 58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생활·제주·세종계정의 시·도 자율편성 30개 포괄보조사업과 시·군·구 자율편성 5개 포괄보조사업을 대상으로 각 지자체가 수행하는 823개 포괄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평가등급은 3단계(우수, 보통, 미흡)로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예산기준으로 우수 20% 이하, 보통 65% 내외, 미흡 15% 이상 등으로 평가등급을 강제 부여하도록 하였다. 경제·제주계정은 소관 부처별 평가대상사업 간 비교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였고, 생활·제주·세종계정은 지자체 내 포괄보조사업 간 비교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였다.

경제계정 사업 중 2015년도 신규사업(사업 착수 2년 이하), 종료사업(평가연도 포함 이전 완료사업), 지역발전정책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관련기관 지원사업, 제주계정 사업 중 특별행정기관 위임사무 관련 사업 등 평가 실익이 낮은 59개 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 1-3-7 경제계정 평가대상 - 부처별 사업수 및 예산

구 분	미래부	교육부	행자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사업수(개)	9	4	1	4	1	12	1	11
예산(억원)	2,153	3,361	190	1,841	115	8,045	73	21,289
구 분	해수부	경찰청	농진청	산림청	중기청	새만금청	안전처	복지부
사업수(개)	3	1	3	2	2	1	2	1
예산(억원)	357	157	555	603	1,827	16	1,202	585

표 1-3-8 생활계정 평가대상

구분	시·도 자율편성	시·군·구 자율편성	합계
사업수(개)	400	423	823
2015년 예산(억원)	29,576	16,388	45,964

3. 평가체계 및 절차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개정(2009년 4월) 이후 지역발전사업 평가는 지역발전위원회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평가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평가계획 수립, 평가 및 평가결과 통보 등 지역발전사업 추진실적 종합평가(메타(상위)평가)를 총괄하였다. 중앙행정기관은 전년도 부문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역위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지자체는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역위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평가자문단(2016년 109명 - 경제계정 37명, 생활계정 71명)은 지역발전사업 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으로 구성, 평가 자료를 토대로 종합평가하도록 하였다. 전문평가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지역위 종합평가 및 관련 기관 자체평가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그림1-3-3 지역발전사업 평가체계



평가방법의 경우, 기존 평가제도의 대폭적인 개편으로 전년도와 달리 경제계정 평가, 생활계정 평가, 2015년도 지역발전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정책진단) 등 3개의 평가 영역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첫째, 경제계정 평가의 경우, 통합재정사업평가 제도의 도입에 따라 ①부처의 실적보고서(사업별 자체평가보고서, 부처별 종합보고서) 작성, ②각 부처별 자체평가, ③지역위 메타평가(지역발전사업 분야의 평가), ④메타평가위원회(기재부(일반예산사업)·미래부(국가R&D사업)·지역위(지역발전사업) 등 3개 메타평가부처로 구성)를 통해 부처별 메타평가 등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부처별 자체평가는 사업관리의 적절성(관리단계), 목표달성 및 성과 우수성(결과단계) 등 2개 평가항목 아래 4개의 공통평가지표⁶⁾를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 결과는 부처의 평가대상사업 전체에 대해 ‘예산 규모 기준’으로 상대평가, 즉 우수(20% 이하), 보통(65% 내외), 미흡(15% 이상) 3단계로 등급화하였다. 다만, 평가사업 수가 8개 미만이거나 사업간 예산규모의 편차가 커서 예산 규모 기준 상대평가를 실시하기 곤란한 부처는 ‘사업 수 기준’ 상대평가를 실시할 수 있었다. 한편, 일반재정, R&D, 지역발전 등 분야별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하여 분야별(일반재정, R&D, 지역발전)로 우수비율은 최소 10%, 미흡비율은 최대 30%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지역위 메타평가는 부처의 지역발전사업 자체평가에 대해 평가과정의 충실도, 평가결과의 적정성, 지출구조조정의 적정성 등 3개의 평가항목, 6개 평가지표⁷⁾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사업별 확인·점검은 실시하지 않고) 분야별 메타평가 점수를 산출하였다. 메타평가위원회의 부처별 메타평가는 분야별 메타평가 점수를 종합하여 각 부처별 메타평가 점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생활계정 평가의 경우, ①지자체의 포괄보조사업별 자체평가보고서, 시·도별 종합보고서 작성, ②지자체의 자체평가(시·도 자율편성사업은 점수·등급 부여,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은 등급 없이 점수만 부여), ③지역위 상위·종합평가(시·도 자율편성사업에 대해서는 상위평가,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에 대해서는 종합평

6) 일반재정, R&D, 지역발전 사업의 평가지표를 통합하여 (1-1)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1-2)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사업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2-1)계획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2-2)사업의 성과는 우수하고, 사업의 내용과 방식은 효과적이었는가? 등 4개 공통평가지표를 사용하였다.

7) (1-1)자체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의 적절성, (1-2)자체평가 위원회 운영의 적절성, (2-1)성과계획에 따른 평가실시 여부, (2-2)상대평가 준수여부, (3-1)지출구조 조정규모 달성도, (3-2)지출구조조정 내역의 적정성

가) 등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지자체의 자체평가(시·도 자율편성사업)는 시도별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기획, 사업집행, 사업성과 등 3개의 평가부문 아래 6개의 평가지표⁸⁾를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 결과는 지자체별 평가대상사업 전체에 대해 '예산 규모 기준'으로 상대평가, 즉 우수(지자체별 예산기준 20% 이하), 보통(지자체별 예산기준 65% 내외), 미흡(지자체별 예산기준 15% 이상) 3단계로 등급을 부여하였다. 다만,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는 시·군·구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별 점수를 부여하고, 자체평가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시·도 자율편성사업에 대한 지역위의 상위평가는 지자체별 자체평가에 대해 평가과정, 평가근거, 평가결과 등 3개의 항목 아래 6개의 점검항목⁹⁾을 기준으로 배점의 70% 이상인 경우는 자체평가를 '적절'한 것으로, 70% 미만인 경우는 '부적절'로 판단하였다. 지자체의 자체평가가 '적절'하고, 사업별 확인·점검 결과도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자체평가 결과로 상위평가 결과를 같음하였으며, 자체평가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경우, 해당 지자체의 사업 전체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별 점수 및 평가등급을 조정하였다. 한편,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방식대로 지역위가 포괄보조사업별로 지자체간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별 점수 및 평가등급을 부여하는 종합평가를 실시하였다.

셋째, 2015년도 지역발전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정책진단)의 경우, 사업단위 평가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지역발전정책 분야 단위의 종합성과를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정책제언을 강화할 목적으로 실시하였는데, 시행계획 단위의 첫 평가라는 점을 고려하여 성과목표¹⁰⁾ 달성도(자체평가결과)를 정성적으로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부문별 시행계획의 평가는 20개 실천과제별 2015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자체평가보고서를 토대로 성과목표 달성도를 점검하였고, 시·도 시행계획 평가는 17개

8) ①포괄보조사업의 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한가? ②포괄보조사업의 계획수립이 지역사회와의 합의형성 과정을 통해 적절히 수립되었는가? ③포괄보조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이 적절한가? ④포괄보조사업 집행·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⑤포괄보조사업 단위의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가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 ⑥목표 대비 포괄보조사업 성과가 적절하고 지역내 파급효과가 충분한가?

9) ①포괄보조사업 성과평가체계 및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②자체평가위원회 운영실적, ③근거자료의 양적·질적 충실성, ④자체평가 의견의 구체성·명확성, ⑤평가의견과 부여 등급과의 부합성, ⑥자체평가 결과의 적절성 여부

10) 2015년 시행계획 수립 시, 실천과제 및 사·도 단위의 성과목표·지표를 최초로 설정하였으나, 평가의 준거로 활용하기에는 적정성이 다소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어 평가를 위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2016년 시행계획에 반영된 성과목표·지표를 2015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를 위한 준거로 활용하기 위해) 성과목표·지표 점검을 사전에 실시하였다.

시도별 전체 및 5대 분야의 성과목표 달성도를 점검하였다. 부문별 및 시도 시행계획의 2차 평가는 지역위의 사전 서면평가(1차 평가)를 통해 최종 확정된 성과목표·지표를 기준으로 성과 달성도, 성과 우수성, 개선조치 적정성 등 3개의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점검하였다.

평가 절차의 경우, 경제계정 평가는 ‘부처 자체평가 → 지역위 메타평가(1차 평가 → 1차 이의제기 → 2차 평가)’, 생활계정 평가는 ‘지자체 자체평가 → 지역위 상위평가(1차 평가 → 1차 이의제기 → 2차 평가 → 2차 이의제기 → 3차 평가)’ 등의 절차로 진행되었다. 다만, 2015년도 지역발전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의 경우는 (피평가자 부담 완화 차원에서) 2015년도 시행계획상의 자체평가 결과를 부처 및 시도의 자체평가로 갈음하여 지역위 종합평가(1차 평가(성과목표·지표 점검) → 2차 평가(성과목표 달성도 점검))를 실시하였다. 이후 2015년 지역발전사업 추진실적 평가결과는 정책기획·평가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였다. 확정된 평가결과는 사업별 성과 및 개선의견, 중점이슈 사항을 중심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또한, 평가결과 평가대상 사업별 등급을 공개하였다.

4. 평가결과 및 활용

2015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부처·시도별 자체평가는 비교적 적절하나,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에 부합하는 주민체감형 성과가 창출되도록 종합적 성과관리 및 포괄보조단위의 사업추진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경제계정의 경우, 2016년에 첫 실시된 통합재정사업평가 지침에 따라 성과중심의 자체평가를 적절히 이행하였으며, 전략적 왜곡 없이 지출구조조정 목표액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전반적으로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상대평가 기준 및 지출구조조정 규모 준수 등은 우수하였으나, 예산집행 및 사업시행 과정상 발생한 문제와 관련한 외부 지적사항 미기재, 성과목표 달성에 대한 근거자료 미제시, 성과계획서상 지표 미반영 등에 대한 성과관리 제고 방안 등이 향후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부처의 자체평가 평가점수는 82.3점이며, 등급별 비율은 ‘우수’ 19.0%(11개), ‘보통’

60.3%(35개), '미흡' 20.7%(12개)로 평가되었으며, '미흡' 사업(12개)에 대하여 8개 부처에서 총 1,055억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 계획(11개)과 성과관리개선 대책(1개)을 제시하였다. 전년대비 상대평가의 기준 강화(미흡등급 비율 10%→15%)로 전년대비 '우수' 등급 비율은 43.3%p 감소('15년 62.3% → '16년 19.0%)한 반면, '미흡' 등급 비율은 15.8%p 증가('15년 4.9% → '16년 20.7%)하였다. 2년 연속 우수사업은 1개(신산업창출을 위한 SW융합기술 고도화), 2년 연속 부진사업은 3개(외국교육연구기관유치지원, 연구개발특구육성(비R&D), 학교기업지원사업), 전년대비 우수등급 상향사업은 4개(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조성, 임대시설, 한반도생태평화벨트조성)로 평가되었다.

지역위의 메타평가는 평가대상 16개 부처 중 지역분과가 있는 7개 부처의 메타평가점수는 1차 평가에서 83.3점에 머물렀으나, 2차 평가에서는 평균 95.9점으로 상승하였다. 부처별로는 산업부가 99점으로 가장 높고, 국토부(98점), 농진청(98점), 해수부(97.5점), 교육부(94점), 미래부(93점), 문체부(92점) 순으로 평가되어, 지역분야 우수부처로 산업부를, 미흡부처로 문체부를 후보군으로 선정하여 메타평가협의회에 추천하였다.

메타평가협의회의 최종 평가는 지역발전, 일반재정, R&D 등 분야별 메타평가 등급을 종합하여 각 부처별 최종등급을 산출한 결과, 우수부처로 산업부, 농식품부, 산림청, 미래부 등 4개 부처가 선정되었으며, 문체부의 경우 지역분야에서 미흡으로 평가되었으나, 일반재정분야에서 우수로 평가되어 최종 '보통'으로 평가되었다.

생활계정의 경우, 사업기획 단계에서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이해관계자간 소통 강화 등을 통해 효율적 집행 및 사업실적이 향상되는 등 포괄보조사업 단위로의 전환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사업 추진 및 성과는 여전히 기존 내역사업 단위로의 운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향후에는 지역 주도의 포괄보조단위 사업추진 강화 및 연계협력을 통한 시너지 제고 등을 위해 사업집행·성과중심의 평가지표 강화, 지자체 자체평가 지속 강화 등 관리체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시·도 자율편성사업 자체평가에 대한 적절성 점검결과,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전남, 전북, 제주, 충남 등 8개 시·도에 대해서는 자체평가를 적절로 판단하여 자체평가등급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나, 그 외 부적절로 평가된 9개 시·도에 대해서는 사

업별 재평가를 실시하였다.

자체평가 '부적절'로 평가된 9개 시·도의 포괄보조사업(총 195개)에 대해 기획·집행·성과의 세부 평가지표별로 1차 평가를 실시한 결과, 시도 자체평가 시의 평균 점수 80.7점이 지역위 평가에서 66.7점으로 14점(17.3%) 하락하였다.

1차 평가에 대해 이의 제기된 27개 사업(13.8%)에 대해 2차 평가를 실시한 결과, 사업별 평균점수가 67.6점으로 1차 평가 대비 0.9점 상향 조정되었다.

최종적으로 자체평가 '적절'로 인정받은 8개 시·도의 사업(205개)과 '부적절'로 재평가를 받은 9개 시·도의 사업(195개)을 모두 합한 400개 사업의 평균점수는 67.6점으로 평가되었다. 평가등급별로는 우수 53개(14.6%), 보통 216개(63.0%), 미흡 131개(22.4%)로 최종 확정되었다.

표 1-3-9 생활계정 평가 결과

자체 평가의 적절성 점검결과		사업별 평가결과(등급별 비중 및 사업수)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적절 시·도 (8개)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자체평가 결과	16.2%(3.5개)	67.1%(15개)	16.7%(7.1개)
부적절 시·도 (9개)	대전, 서울, 세종, 울산, 인천, 강원, 경기, 경북, 충북	상위평가 결과	13.3%(2.8개)	59.3%(10.7개)	27.4%(8.2개)

* 시·도 등급별 평균 예산비중 및 사업수 기준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자체평가에 대한 상위평가는 1차 평가에서 총 423개 사업을 기획, 집행, 성과의 각 세부 평가지표별로 지자체의 자체평가 결과를 검토¹¹⁾한 결과, 지자체의 자체평가 결과는 평균 89.8점이었으나, 1차 평가 결과 평균 65.9점으로 23.9점(26.6%) 하락하였다. 2차 평가는 1차 이의 제기된 263개 사업에 대해 평가한 결과, 68.6점으로 1차 평가 대비 2.7점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이 점수에 근거하여 포괄보조사업별로 지자체간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평가등급을 부여하였다. 3차 평가는 2차 이의 제기된 7개 사업을 검토한 결과, 2차 평가 결과를 조정할 만한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2차 평가결과 원안을 확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전체 평가 대상 423개 사업의 평균점수는 68.6점이고, 평가등급별로는 우수 81개(19%), 보통

11) 평가지표별로 1차 검토 후, 사업별로 지표별 검토결과를 취합하여 종합평가결과를 작성하였다.(지표 담당위원과 사업별 담당위원 Cross-Check)

276개(65%), 미흡 66개(16%)로 최종 확정되었다. 대구·울산은 수행 중인 모든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이 '보통' 등급(100%) 이상인 반면, 서울·광주는 모두 '보통' 이하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1-3-10 생활계정 시도별 포괄보조사업 최종평가 결과 (단위: 개)

시·도 자율편성사업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시도	우수	보통	미흡	합계	시도	우수	보통	미흡	합계
서울	1	5	4	10	서울		3	1	4
부산	3	12	10	25	부산	3	9	4	16
대구	3	16	2	21	대구	4	5		9
인천	2	16	5	23	인천	3	6	3	12
광주	3	10	6	19	광주		4	1	5
대전	1	9	7	17	대전	1	2	1	4
울산	3	10	7	20	울산	1	5		6
세종	1	5	12	18	세종		2		2
경기	6	10	10	26	경기	8	34	5	47
강원	5	14	8	27	강원	6	24	9	39
충북	3	13	9	25	충북	4	19	3	26
충남	4	16	7	27	충남	3	23	14	40
전북	2	18	8	28	전북	11	22	5	38
전남	4	14	8	26	전남	16	37	7	60
경북	3	14	12	29	경북	6	45	8	59
경남	4	18	5	27	경남	14	33	3	50
제주	5	16	11	32	제주	1	3	2	6
합계	53	216	131	400	합계	81	276	66	423

2015년도 지역발전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정책진단)의 경우, 부문별 시행계획과 시·도 시행계획의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부문별 시행계획은 첫째, 20개 실천과제 전체의 공통 성과지표 제시가 미흡하고, 실천과제 차원의 성과지표와 단위과제의 성과지표간 연계 또한 부족한 바, 향후에는 부문별 시행계획의 목적에 맞게 실천과제와 단위과제의 성과지표를 연계하는 성과 환류체계의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점검되었다. 둘째, 실천과제별 자체평가보고서를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협업부처와 협의·조정해야 하나, 지역발전시행계획의 단순 취합에 머무르는 한계가 지속되고 있는 바, 향후에는 단위사업간 연계성과 유사사업간 사업주체의 협력방안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셋째, 질적지표(Outcome)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제시하지 않고 단순 과정지표(Input)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제

시하고 있는 바, 향후에는 실천과제 및 단위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질적지표 발굴, 사업비 규모 및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성과지표 설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시·도 시행계획은 첫째, 개별 사업단위에서의 성과관리는 양호하나, 실천과제 단위에서의 통합적 성과관리는 미흡한 바, 「계획수립-점검-성과평가-환류」를 총괄하는 성과관리체계 구축과 실천과제 목표와 연계된 핵심 질적 지표 발굴·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점검되었다. 둘째, 지역특성을 반영한 계획수립, 체계적 성과관리 등이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에는 시도별로 특성화된 성과지표 및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절성, 객관성, 지속성 등에 대한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점검되었다. 셋째, 전년도 성과목표와 실적관리 간 연계성이 미흡하고 성과지표·목표치의 소극적인 설정이 여전한 바, 전년도 계획과의 연계성, 성과지표의 연속성을 강화하고 성과목표를 도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점검되었다.

제2부

부문별 시책

제1장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제2장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제3장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

제4장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제5장 사각 없는 지역복지의료

제1장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제1절 지역주도 협력사업 확충

1. 지역간 자율적인 협력체계 구축·강화

(1)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과거 외형중심의 지역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개선을 위주로 한 HOPE 프로젝트 제시로 2013년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을 신설하여 추진하였다. 2014년부터는 박근혜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의 주요 사업으로서 행정구역을 넘어 주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인프라,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 등 기본 생활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을 위해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확대·개편하였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은 지자체 주민의 생활권 관점에서 단일 시·군 내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산업·복지·교통·관광 등의 서비스 확충을 위해 2개 이상 지자체간 공동 사업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근 시·군 간의 연계협력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56개 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자체간의 협력사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역행복생활권’정책의 확산·촉진을 위한 시드 머니(Seed Money)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생활권 내 사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한편 지원분야에 있어서 생활권사업으로서의 차별성을 확보하였다. 이로 인해 기초 인프라 등 생활권에 꼭 필요한 ‘주민체감형’ 사업이면서 생활권 협력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였다. 특정 생활권 및 생활권 내 특정 시·군을 중점 지원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생활권 내 균형적으로 지원하였다.

동 사업은 시·군구 자율편성 포괄보조사업으로 3개년 이내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한도 내에서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게 지자체가 자유롭게 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 예산사업에 없는 창의적인 사업, 다(多)부처적 사업 등 주민 복지 증진이 가

능한 사업을 우선 지원하였으며, 지역발전위원회가 중심이 되고 사업 관련 부처들이 컨설팅-모니터링 등에 참여함으로써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제고하였다.

표 2-1-1 주민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 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주민만족도	-	81.1	81.8	82.1

표 2-1-2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현황

시도	생활권 구성 현황
서울(1)	서울+의정부+남양주+양주+구리+고양+파주+부천+성남+하남
부산(1)	부산+김해+양산+울주
대구(1)	대구+영천+경산+군위+청도+고령+성주+칠곡+합천
인천(1)	인천+부천+김포
광주(1)	광주+나주+담양+화순+함평+장성
대전(1)	대전+옥천+금산+계룡+논산
울산(1)	울산+양산+경주+밀양
세종(1)	세종+공주
경기(11)	고양+파주+김포 / 안산+시흥 / 군포+의왕 / 안양+과천 / 성남+용인+광주+하남 / 수원+용인 / 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연천 / 평택+안성 / 광주+이천+여주+양평+가평 / 오산+화성 / 포천+연천+강원철원
강원(5)	춘천+홍천+화천+철원+양구 / 강릉+동해+삼척+태백 / 영월+평창+정선 / 속초+고성+양양 / 인제+양구 /
충북(5)	청주+증평+보은+괴산+진천 / 충주+제천+음성 / 제천+단양 / 옥천+보은+영동 / 음성+진천+증평+괴산
충남(6)	천안+아산 / 홍성+예산 / 당진+서산+태안 / 공주+부여+청양 / 논산+계룡+금산 / 보령+서천
전북(4)	전주+군산+익산+김제+완주 / 정읍+고창+부안 / 남원+임실+순창 / 무주+진안+장수
전남(6)	목포+무안+신안+해남+진도 / 여수+순천+광양+보성+고흥 / 나주+화순 / 영암+장흥+강진+완도 / 장성+영광+함평 / 담양+곡성+구례
경북(11)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 구미+김천+칠곡 / 안동+예천+의성+청송+양양 / 영주+봉화 / 상주+문경+예천 / 경산+청도+영천 / 의성+군위 / 성주+고령 / 울진+영양+영덕 / 김천+충북영동+전북무주 / 영주+충북단양+강원영월
경남(5)	창원+김해+합안 / 진주+사천+남해+하동 / 통영+거제+고성 / 창녕+의령+밀양+합천 / 거창+함양+산청
제주(1)	제주+서귀포(특광역시+제주 분과)

2013년도 33개 사업을 선정하여 30,000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35개 사업 선정 및 65,000백만원을 지원하여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을 통한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였다. 2015년도에는 생활권을 63개로 확대하고, 42개 사업을 선정하여 65,000백만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도에는 30개 사업을 선정하여 65,020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도에도 35개 사업을 선정하여 65,020백만원을 지원하여 기초인프라 등을 확충하여 생활권 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할 계획이다.

(2)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은 버스노선이 폐지되거나 감축되어 교통수단이 부족한 지역의 주민 또는 집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가 멀어 이동이 불편한 배후마을의 주민 등이 읍면 거점지역의 의료·문화·복지 등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완적·대체적 대중교통 수단이다. 2013년도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14년부터 시범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은 지역 공동체 중심의 교통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공공서비스 거점과 배후마을 간 접근성 향상 및 지역 활력 창출을 통해 주민의 체감복지를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표 2-1-3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연도별 지원 시·군 현황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13개소(12개 시·군)	21개소(20개 시·군)	18개소(17개 시·군)
계속지원	버스형	-	양평군, 춘천시, 완주군, 순천시, 예천군, 울진군	창녕군, 청주시, 홍천군
	택시형	-	안성시, 부안군, 완주군, 무안군, 의성군, 성주군, 함양군	고창군, 봉화군, 의령군, 해남군, 합천군
신규지원	버스형	양평군, 춘천시, 완주군, 순천시, 예천군, 울진군	창녕군, 청주시, 홍천군	보성군, 순천시, 춘천시, 정선군, 여주시
	택시형	안성시, 부안군, 완주군, 무안군, 의성군, 성주군, 함양군	고창군, 봉화군, 의령군, 해남군, 합천군	성주군, 천안시, 포항시, 청주시, 아산시

그림 2-1-1 농촌형 교통모델 개념도



도로망+수요+통행행태+배후지 기능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

2014년도에 선정한 12개 시·군에 이어 2015년도 8개 시·군을 추가로 선정하여,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에서 가까운 거리의 버스환승 정류장 또는 읍·면 소재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환승거점 연계형 15개소, 농산물 직거래·농촌관광 등과 연계를 통해 지역 주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경제활동 지원형 2개소, 보건소, 목욕탕, 병원, 우체국 등 거점 복지시설과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복지서비스 접근형 4개소 등 총 20개 시·군 21개소 사업을 지원하였다. 2016년도에는 2015년 선정한 8개 시·군에 대한 지속 지원과 함께 신규로 선정한 10개 시·군까지 총 18개 시·군 19개 사업을 지원하였다.

2014년부터 그해 지원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매해 농촌형 교통모델 이용객 대중교통 만족도 조사를 추진하여, 사업 시행 이후 대중교통 만족도가 각각 2014년 88.6점, 2015년 89.1점, 2016년 90.5점으로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6년도 추진성과로는 농촌형 교통모델 이용객의 대중교통 서비스 만족도(도입전 41.6점 → 도입후 90.5점)가 2배 이상 증가하고 버스정류장까지 접근 보행시간(도입전 평균 32.8분 → 도입후 4.5분)과 버스 대기시간(도입전 평균 18.9분 → 6.2분)이 각각 86.3%, 67.2% 감소되는 등 교통사각지대에서 생활하는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농촌 교통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을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향상시켰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2015년 제작하여 배포한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사례집 및 가이드북 등을 통해 농식품부 주관 지원 사업 외에 지자체 자체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어 2014년 9개이던 자체 도입 운영 시·군이 2016년에는 94개로 크게 늘어났다.

2. 창조적 마을 만들기

(1) 성장축진지역 개발사업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가 도입되면서 기초생활권(163개 시·군)을 특성별로 도시활력증진지역, 농산어촌지역, 특수상황지역 등 3개 지역으로 분류해 유사·중복적으로 추진되던 지역개발사업을 지역 특성과 부처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하고 포괄보조금제를 도입하여 지원체계를 단순화하였다. 이 중 낙후도가 심한 지역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성장축진지역으로 지정(70개 시·군, 2009년 9월)하고 2010년부터 도로 등 기반시설설치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70개 시·군 중 66개 시·군은 기존의 개발축진지구 시·군과 동일하나 개발축진지구로 지정되지 않았던 옥천군, 예산군, 정읍시, 밀양시 등 4개 시·군이 성장축진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4년 9월 성장축진지역 재지정시에는 각 2개 시·군이 지정(홍천군, 태안군) 및 제외(정선군, 무안군)되었다.

표 2-1-4 성장축진지역 지정 현황(2014년 9월 25일 기준)

시·도	성장축진지역
강원	태백시 삼척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홍천군 양양군(7)
충북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옥천군(5)
충남	서천군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6)
전북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정읍시(10)
전남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영광군(16)
경북	상주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영천시 영주시(16)
경남	의령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밀양시(10)
합계	70개 시·군

『도서개발축진법』에 의한 372개 개발대상도서 중 성장축진지역 내 187개 도서에 대하여 생산·문화·생활 등 성장기반시설을 지원하여 왔다. 2013년에는 성장축진지역에 2,201억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2016년 동안 해마다 2,09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도에도 성장축진지역에 2,09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2015년부터 지역간 경쟁을 통한 양질의 지역개발사업 발굴과 지역거점 육성을 위하여 2개 공모사업을 최초 시행하여 지역수요맞춤지원 26개 사업을 선정, '16년에는 22개 사업을 선정하여 총 15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투자선도지구는 2015년 발전촉진형 및 거점육성형 각 2개 지구를 선정하여 발전형 투자선도지구에 각 3억원씩 총 6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에는 발전촉진형 및 거점육성형 각 2개 지구와 KTX 지역경제거점형 1개를 선정하였다.

참고로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은 대규모 SOC사업 위주에서 탈피,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창조융합 사업을 지원하여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도입하였으며, 투자선도지구는 민간투자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내 파급효과가 큰 지역개발 또는 신규 추진 지역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규제특례, 조세감면(발전형),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발전형), 부담금 감면, 100억원 범위 내 재정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제도다.

표 2-1-5 개발촉진지구(낙후지역형) 지정 현황

구분	지구 시·군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07~’09)	7차 (’09~’10)	8차 (’11)	’13	’14
계 (7개도)	60	7	7	6	6	7	6	8	4	2	7
	78	16	11	11	10	9	6	8	4	2	7
강원	7	탄광지역 (태백·삼척·영월·정선)	영월·화천	평창·인제·정선	양구·양양	횡성	고성	-	철원		
	12										
충북	5	보은	영동	-	-	단양/괴산	-	증평	-		
	5										
충남	7	청양	홍성	태안	보령	-	서천/금산	-	-	부여	예산
	7										
전북	8	진안·임실	장수	순창	고창	무주	-	남원/김제	부안		정읍
	9										
전남	9	신안·완도	곡성·구례	장흥·진도	보성·영광	화순·강진	장성	함평	고흥	무안	담양/나주/해남
	14										
경북	11	소백산주변 (봉화·예천·문경)	산악휴양형 (영주·영양)	중서부평야 (상주·의성)	안동호주변 (안동·청송)	동해연안 (울진·영덕)	영천/울릉	청도/군위/고령	성주		
	17										
경남	6	지리산주변 (하동·산청·함양)	의령·합천	남해·하동	합천·산청	함양	-	거창	-		창녕/고성
	7										

(2) 일반농산어촌개발(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제외)

2009년까지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은 농림수산물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하여 각 부처별 특성에 따라 전 국토를 대상으로 세부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행정 구역단위 분산투자, 중앙부처의 과도한 간섭, 지역 간 유사·중복사업 추진 등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일반농산어촌지역 117개 시·군을 대상으로 2009년 이전에 각 부처에서 시행하던 15개 세부사업을 포함하는 4개 사업유형으로 개편하였다. 4개 사업유형은 첫째,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둘째,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셋째, 신규마을 조성사업, 넷째, 기초생활인프라 정비사업(농촌생활환경정비, 농업업기반정비, 지역창의아이디어) 등이다. 사업내용은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등 4개의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유형별 사업의 목적을 살펴보면,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읍·면소재지를 경제·사회·문화적 기능을 갖춘 농산어촌지역의 거점으로 육성하여 농어촌 주민들의 정주서비스 기능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이며,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해 쾌적한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농촌 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촌 지역 활성화를 도모함이며,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사업은 일반농산어촌의 종합적인 정비, 농업경쟁력 강화, 농촌용수 확보 및 지역의 유·무형 자산을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지역정책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일반농산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수준을 보장하고, 도시민들의 농촌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산어촌의 인구 유지 및 지역별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시·도, 시·군에서 수립하는 시·도발전계획,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등 상위 계획과 연계하여 「농업·농촌 종합발전계획(2015~2019년)[중전의 시·군단위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서 예산한도 내에서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고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을 지자체가 자유롭게 기획·시행하도록 하였다.

표 2-1-6 주민만족도

(단위: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비고
주민만족도	80.5	81.1	81.8	82.1	

표 2-1-7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대상지역 현황

구분	123개 시·군
경기	평택시,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강원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양양군
충북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충남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북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남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울릉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경남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합천군,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제주	제주시, 서귀포시
세종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동 사업이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참고 자료 제공, 계획수립 및 사업집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등을 통해 시·군의 사업추진에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2012년에는 120개 시·군, 1,114개 내역사업에 9,304억원을 지원, 2013년도 117개 시·군, 1,151개 내역사업에 9,182억원, 2014년도 117개 시·군, 1,381개 내역사업에 8,723억원 지원, 2015년도 116개 시·군, 1,515개 내역사업에 8,733억원 지원, 2016년도에는 123개 시·군, 1,548개 내역사업에 8,72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123개 시·군, 1,634개 내역사업에 8,723억원을 지원하여 농산어촌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 및 기초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수준의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3) 특수상황지역 개발지원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은 남북분단 및 도서의 지리적 여건 등으로 지역발전에서 소외된 주민의 복리증진 및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도입(2009년 4월)에 따른 포괄보조금제도 시행으로 그동안 소관부처에서 개별법에 의해 단위사업별로 추진해오던 사업을 관할지역별 부처가 통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행정자치부는 접경지역 15개 성장촉진지역을 제외한 개발대상 185개 도서를 대상으로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은 사업별 중장기계획에 따라 국토의 불균형발전에 의한 소외·낙후지역 해소에 중점을 두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균형발전기반 조성에 주력하였다. 2016년에는 287건의 사업에 대해 국비와 지방비를 합하여 총 2,551억 원을 투자하였다.

표 2-1-8 2016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비			
	계	국비(광특회계)	지방비	기타
계	255,072	189,401	65,671	
기초생활기반확충	162,390	117,362	45,028	
지역소득증대	64,737	49,862	14,875	
지역경관개선	25,861	20,463	5,398	
지역역량강화	2,084	1,714	370	

2010년 이후 특수상황지역(접경, 도서)에 꾸준한 예산투자로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특수상황지역 공무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사업만족도가 83.8%로 2015년에 비해 0.5%p(2015년 83.3%) 증가하였다.

2017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은 2,615억원을 투자하여 276건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특수상황지역의 문화·관광자원 개발과 각종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지역 여건과 특성을 감안하여 특성화·차별화된 사업추진으로 주민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표 2-1-9 2017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건 수	사 업 비		
		계	국비(광특회계)	지방비
계	276	261,534	189,401	72,133
기초생활기반확충	152	174,458	127,045	47,413
지역소득증대	85	64,082	44,414	19,668
지역경관개선	32	21,431	16,692	4,739
지역역량강화	7	1,563	1,250	313

(4) 창조지역 사업

창조지역사업은 “①지역의 유·무형 자산을 토대로, ②창의적 발상으로, ③지역 주민의 참여하에, ④일차적으로 주민의 행복을 위해 이루어지는, ⑤장기적 관점의 지역사업”으로서, 광의적이면서 동태적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창조성과 지역보유자원을 기초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부가가치의 창출’에 목적이 있으며, 내발성·주민참여·상향식 사업추진 등을 특징으로 한다.

창조지역사업은 2011년도부터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의 포괄보조 신규예산(지역계정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일부를 활용하여 매년 40억원 내외 규모로 20여개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사업대상은 문화예술, 자연자원, 첨단산업, 스포츠 이벤트, 관광자원, 농식품 등 ‘새로우면서 차별성이 있고 독특한 창조적 아이디어’를 지역개발에 적용시키는 일체의 지역개발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사업선정기준은 사업 적합성(20%), 내용의 창조성(30%), 효과성(25%), 타당성(15%), 추진체계(10%) 등이며, 제외되는 사업의 경우는 H/W 비중이 30% 이상 사업, 주민참여가 전혀 없거나, 미미한 관 주도 사업, 창조성·차별성이 낮은 사업(지역내 또는 타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어 경쟁이 심하고,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정부보조금 종료 후에 사업 지속가능성 및 파급효과가 적은 사업을 들 수 있다.

국고예산 지원현황은 2015년말 기준으로 95개 사업에 국비 587억원의 예산이 지원되었다. 연도별로는 2011년 13개 사업, 2012년 16개 사업, 2013년 18개 사업, 2014년 27개 사업, 2015년 21개 사업이 추진되었다. 지역별로는 전북 17개, 전남 14개, 경북 12개, 경남 10개, 충남 10개, 강원 10개, 충북 9개, 경기 3개, 대구 3개, 제주2개 등이

며, 서울, 대전, 세종, 광주 등이 각각 1개 사업이다.

2016년 창조지역사업(2015년 선정)은 각 지자체에서 121개 사업을 공모 신청하였으며, 지역발전위원회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및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19개 사업을 선정하여 24억원을 반영하였다.

표 2-1-10 2016년 신규 선정사업 예산 내역

사업구분	소관부처	선정건수	'16년 지원액(3년간 지원액)
특수상황지역개발	행정자치부	1건	3.3억원(4.3억원)
일반농산어촌개발	농림축산식품부	16건	20억원(71.2억원)
도시활력증진	국토교통부	2건	0.4억원(3.6억원)
합 계		19건	23.7억원(79.1억원)

표 2-1-11 2016년 신규 선정사업 현황(19개)

권역별		사업명	사업내용	비고
경기권	경기	○(파주시) 법원읍 오감만족 희망 빛 만들기 사업	▪ 집창촌을 재정비하여 전통등가(빛 돌레길)와 전통등 전시관 조성, 장단콩 두부촌 조성 등	행자부
	강원	○(영월군) 영월 장돌뱅이 5일장 육성사업	▪ 장돌뱅이 시장 순례행사, 5일장 체합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통시장 노후환경 개선 등	농식품부
충청권	대전	○(서구) 사람과 자연이 만나는 행복 갑천 만들기	▪ 갑천누리길 스토리텔링 및 디자인 개발, 갑천누리길 조성 및 커뮤니티 센터 운영 등	국토부
	충북	○(영동군) 금강과 함께하는 삼도 삼미 삼락 사업	▪ 특산물로 음식체험 상품, 디저트, 도시락 개발, 3개군 연계 푸드 투어 시범코스 개발	농식품부
		○(증평군) 도깨비 이야기 학당(學堂) 만들기	▪ 도깨비 관련 체험학습장, 활동무대, 놀이터 조성, 훈장 양성, 구멍가게 설치 등	농식품부
		○(괴산군) 한국형 창조농업 개발사업	▪ 미션나무를 활용하여 절임배추 및 미션포크 개발, 미션나무 재배 전업농 육성 등	농식품부
	충남	○(서산군) 문화예술 향기를 머금은 솔마당 창조마을 만들기	▪ 노인대상 사진동아리, 마을디자인 대학, 사진관 카페 운영 등	농식품부
호남권	전북	○(정읍시) 읍시 창조 문화·관광 활성화 위한 전통문화 재생산 플랫폼 구축	▪ 한옥숙박 및 전통문화예술 체험, 토속음식 판매(할머니 부엌), 지역민 수공예 교실 및 장터 운영, 문화축제, 전통주(가양주) 복원·상품화 등	농식품부
		○(순창군) 동네목수 양성소 (마을 건축학교)	▪ 마을건축학교 운영(체험 프로그램, 교재 개발 및 보급), 친환경 건축자재 개발 등	농식품부
	전남	○(강진군) 음악으로 하나되는 '하모니 강진' 만들기	▪ 하모니 어울마당(음악축제) 개최, 하모니 버스킹(이동음악회), 강진시장 내 라디오 방송국 운영, 하모니 음악센터 조성 등	농식품부
		○(구례군) 야화(野花)의 베일을 벗기다. 야생화 오감만족 프로젝트	▪ 야생화 체험 및 탐사 프로그램 운영, 야생화 재배 및 상품화 지원, 꽃나물 명가 육성, 야생화 전문인력 양성, 야생화 전시회 등	농식품부
		○(완도군) 섬, 주민, 관광객이 함께 만드는 주민공동체 '완도 섬 여행등대'	▪ 섬과 섬을 잇는 연계관광 상품개발, 주민, 관광객과의 쌍방향 여행정보 시스템 구축 등	농식품부
		○(순천시) 생태창조체험의 메카, 유유낙락(遊遊樂樂) 향림골 만들기	▪ 생활밀착형 마을학교 운영, 마을신문 및 마을역사 책자 제작, 생태창조체험 프로그램 및 그린투어리즘 운영 등	국토부
영남권	경북	○(안동시) 벽화마을 재생 프로젝트-날아라! 달동네	▪ 할매네 백화점(실버 프리마켓) 운영, 할매 연극단 구성·운영, 지역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농식품부
		○(상주시) 느림의 미학 국제슬로시티 『상주명주 전승 및 명품화 사업』	▪ 상주명주 전통기법 육성·전승, 명주짜기 실습장 건립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명주한복 패션쇼, 명주테마공원길 조성 등	농식품부
		○(봉화군) 천년의 숨결을 되살린다! 『춘양목 나무사랑 학교』 운영	▪ 목공예 체험프로그램, 힐링 스테이 프로그램, 생활목공지도자 양성 등	농식품부
	경남	○(고성군) 공룡콘텐츠를 활용한 활력 넘치는 공룡나라 만들기	▪ 공룡인형극 제작·공연, 공룡콘텐츠 상품개발 등	농식품부
		○(합천군) 전국 유일의 "대평 군물" 농촌 전통문화 콘텐츠 사업	▪ '군물' 복원 및 재현, '군물'을 활용한 공연·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 학술연구, 스토리텔링 개발 등	농식품부
제주권	제주	○(서귀포) Archtrail - 아름다운 서귀포 건축기행	▪ 건축기행 운영, 건축기행 네트워크 구축, 건축기행 상품 개발 등	농식품부

그동안 지역발전위원회에서는 매년 지자체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실시하고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창조지역사업 취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모범이 될 만한 사례도 여러 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창조지역사업으로 2013년에 전북 완주군이 추진한 ‘두레농장사업’은 농촌 어르신들께 일자리를 마련해 드림으로써 소득 증가뿐 아니라, 건강과 자신감까지 찾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완주군의 ‘두레농장사업’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돼 오던 농장을 네트워크화 함으로써 농작물의 독자 브랜드화를 실현하였고, 공동포장재 및 CI 개발, 공동 마케팅을 통한 직거래 판로 확보를 통해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해 가고 있다.

2014년에 충남 금산군이 추진한 ‘목조건축문화학교’ 사업은 금산 산림문화타운 및 목재문화체험장과 연계한 차별화된 목조건축 체험·교육사업을 운영함으로써 도시민의 전원주택에 대한 관심 충족과 귀농귀촌에 대한 대안 제시, 목조건축의 전문인재 양성,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지역주민 및 귀농귀촌 희망자에 대한 주거, 직업, 교육 등 관련 문제를 해소하고 삶의 행복을 지향하고 있다. 성인 및 청소년 대상 5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일자리 창출, 귀농귀촌 지원, 각종 경시대회 수상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 성공사례들이 축적되고 각종 경험 공유의 자리들이 마련되면서 창조지역사업의 이념과 철학에 대해 공감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늘어나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주민들의 실생활과 맞닿은 소프트웨어 중심 사업 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었다.

창조지역사업의 성과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들도 있다. 사업 주관부처를 단일화하고 적정한 예산규모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사업예산 확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더욱 중요한 과제는 창조지역이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발전시키고 공감대를 더욱 넓혀나가는 일이라 할 것이다. 하드웨어 중심의 지역발전사업을 보완하기 위해 창의적인 소프트웨어를 콘텐츠로 하는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일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정책방향이기 때문이다.

지자체 및 중앙부처 공무원, 지역주민들, 유관기관 사이에 창조지역사업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차별화된 사업과제를 적극 발굴하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정보 공유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지역공동체 활성화

(1)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농정 패러다임 역시 중앙정부 주도에서 주민 참여 중심으로 전환되는 정책 환경의 변화에서 인구감소, 고령화 심화 등에 따른 농촌 활력 저하에 대응하고자 2011년부터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정책을 도입하게 되었다.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은 농촌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농촌공동체회사 사업을 지원해 농가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농촌에 필요한 각종 사회서비스 제공 등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2011~2013년까지 지자체를 통해 우수 농촌공동체회사를 공모하여 매년 54개소를 선정하였고, 개소당 5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25%, 자부담 25%)을 시제품개발, 홍보 등의 용도로 지원하였다. 2013년 11월 사회서비스제공형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공공서비스 부족 등 지역 복지문제의 주민주도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제공형 농촌공동체회사를 집중 육성하는 방향으로 사업추진방향을 개편하였다. 이에 2014년 우수 농촌공동체회사 사업 공모시 소득사업유형과 사회서비스제공형을 구분하여 선정하였고, 신규 농촌공동체회사의 경우 사회서비스제공형 농촌공동체회사만 선정함으로써 2013년 1개소에서 2014년 13개소를 발굴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표 2-1-12 농촌공동체회사 지원 현황

(단위:개소)

구 분	2013	2014	2015	2016	총계
농촌공동체회사 지원 (사회서비스유형 지원)	54 (1)	60 (13)	60 (17)	62 (24)	236 (55)

표 2-1-13 농촌공동체회사 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자원부족, 접근성 등으로 인한 농촌의 사회서비스 공급 부족 등 농촌사회문제해소를 위하여 복지·교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유형
복합형		사회서비스제공형과 소득사업유형의 사업을 함께 수행
소득 사업 유형	농식품 산업형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영농 지원 및 식품산업 육성 활동
	도농 교류형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 도시민의 농촌 방문·체류 촉진 활동
	지역 개발형	생활 환경개선, 지역역량강화, 향토자원 발굴·상품개발 등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활동

2014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은 양적·질적 확대를 가져왔다. 우선 소득사업 유형과 사회서비스 유형을 합쳐 60개소(전년대비 6개소 증가)를 지원하였고, 소득사업에 치중되었던 지원을 사회서비스제공형 회사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농촌지역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복지서비스를 주민주도로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2015년에는 2014년과 동일하게 60개소를 지원하였는데, 사회서비스제공형의 확대, 역량강화 컨설팅 및 교육을 통해 대형 유통채널 진입 및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질적 확대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2014년 13개소였던 사회서비스제공형 회사를 2015년도에는 17개소 발굴하였고, 2014년 13개소를 지원한 경영컨설팅을 22개소로 확대하였으며, 농촌공동체회사 및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농촌공동체회사의 발전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농촌지역주민 5인 이상 참여하고, 지역 주민의 50% 이상 참여한 법인 또는 단체로 농촌공동체회사의 지원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농촌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농촌지역 활력 증대라는 사업 목적에 맞는 농촌공동체회사를 발굴·지원하게 되었다.

2016년에는 62개소의 농촌공동체회사를 지원하고, 그 중 사회서비스 제공형(복합형 포함) 농촌공동체회사 24개소를 발굴·지원함으로써 농촌지역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공동체회사를 육성·확대하였다는 정책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초기 영세하고, 체계화 되지 않은 농촌공동체회사를 육성·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함으로써 농촌공동체회사의 역량 강화에 집중하였다.

향후 농촌에 증가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제공형 농촌공동체회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며, 농촌지역 고령화와 소득격차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농촌 고령자를 고용하는 농촌공동체회사를 육성·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맞춤형 역량 제고를 위해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고, 모니터링 및 홍보 지원 등을 통해 농촌공동체회사가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 농촌 공동체 활성화 지원(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여러 부처에서 다양하게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많은 재원을 지역에 투입하여 마을의 정주여건이 개선되는 등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제한되고 마을리더, 전문가 및 시·군 담당공무원 등 일부의 주도하에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문제점도 있다. 일부 마을의 경우 사업 추진단계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사업 추진 후에도 주민들의 관심 및 참여 부족으로 인해 일부 시설물이 방치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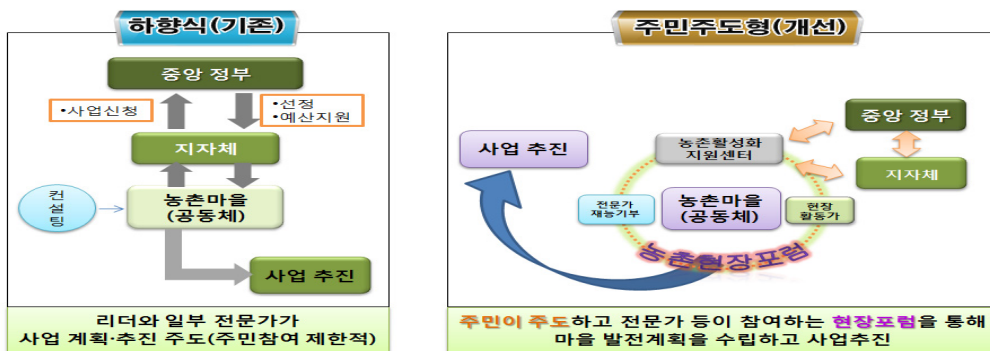
이를 개선하고자 2011년부터 도농상생과 국토 균형발전을 목표로 농촌마을을 마을마다 특색이 살아있는 색깔마을로 가꾸어 나가도록 추진하게 되었으며, 그 핵심과제 중 하나가 주민주도의 마을 만들기이고,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농촌 현장포럼이다.

표 2-1-14 농촌 현장포럼 추진 마을 수

(단위 : 개)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총계
농촌현장포럼 추진 마을 수	37	234	350	418	418	1,457

그림 2-1-2 마을사업 추진 체계



농촌 현장포럼이란 주민이 현장활동가,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마을이나 권역의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과 역량을 분석·진단하고, 주민들이 참여하여 마을의 발전계획이나 마을에 필요한 자율적 결과물 도출을 목표로 한 주민 참여형 공동체 역량강화 프로그램이자 주민협의 프로그램이다. 2012년 37개 마을 시범운영을 거쳐 매년 그 규모를 확대하여 농촌 현장포럼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개발사업을 기존의 하향식 마을개발사업에서 주민이 주도하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포럼을 통해 마을 공동과제 수행으로 주민결속 및 공동체 의식을 향상하여 마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주도형 마을 개발사업으로 개선하여 추진하고 있다.

농촌 현장활동가란 농촌현장포럼 기획 등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에 필요한 지자체 정책 기획, 마을 역량강화 등을 지원하는 행정 전문인력으로 마을만들기 업무관련 공무원,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육성 및 관리하고 있다. 2016년의 경우 초급과정 4회 25명, 중급과정 5회 43명, 고급과정 1회 25명, 사업주체과정 12회 160명이 수료하였으며, 고급과정 수료자에 대해서는 농어촌퍼실리테이터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 현장밀착형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색깔있는 마을 육성 등 농촌지역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대학과 전문기관을 연계하여 컨소시엄 형태로 도별 1개소씩 총 9개소의 농촌 활성화지원센터를 구축하였다.

(3) 귀농귀촌 정착지원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외환위기·IMF, 경기침체, 전원생활 등 사회·구조적 변화, 농업·농촌에 대한 가치 재인식에 따라 귀농귀촌이 200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고 사회 트렌드가 됨에 따라, 정부는 2009년 4월과 2012년 2월에 그때마다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이후 본격적인 귀농귀촌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15.7.21 시행)」을 마련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2017-2021)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16.11.21)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기존의 인구 유입 위주의 양적 확대 정책에서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농촌활력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질적 성장 중심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귀농·귀촌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2013년부터 ‘귀농귀촌활성화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사전 준비단계에서는 정보제공·상담·교육을, 실행단계에서는 농업·농촌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귀농인의 집·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조성을 추진 중이며, 정착단계에서 이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귀농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농지 확보 지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농산업 창업도 본격적으로 정책화 하고 대책을 수립·추진 중이다.

귀농·귀촌 지원 정책은 조기퇴직, 은퇴 등으로 인생 2막을 새롭게 시작하는 도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농식품산업 관점에서는 타 산업분야의 경험과 지식·기술·자본력을 보유한 유능한 인력의 유입을 통해 미래성장산업으로서의 농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농지·멘토-멘티 사업 우선·우대 지원 등 참신한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농촌의 관점에서는 고령화·노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인구 유입을 통해 문화, 관광, 서비스 분야 등 파생효과를 통해 지역 공동체의 활력 증진에 기여하는 바 크다.

청년, 도시민 등 (예비)귀농귀촌인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귀농귀촌종합센터(‘14.7월, 수원→서울)를 이전하여 콜센터 상담원 확대·교육시설 확충 등 귀농귀촌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영농기술, 농지, 주거, 창업자금 등 귀농·귀촌 관련 정보·상담을 One-stop으로 제공하는 한편, 귀농귀촌아카데미, 소그룹 강의, 찾아가는 귀농귀촌 one day 특강, 지자체의 상담·교육 운영 등을 통해 귀농·귀촌에 관한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귀농귀촌종합센터의 기능을 강화 하였다. 또한 2011년 이래 매년 ‘귀농·귀촌 박람회’ 개최를 통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다양한 정보와 상담·체험 기회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컨설팅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귀농·귀촌 인구의 유입으로 지자체 인구가 증가하여 폐교 위기의 학교가 활성화 될 뿐만 아니라, 귀농·귀촌인의 다양한 경력과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공동체의 리더 역할 수행 사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정책적 뒷받침의 일환으로 귀농·귀촌인에게 관심 단계부터 실행, 정착 단계에 필요

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귀농·귀촌 준비 단계별로 교육과정을 분류·편성하는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천안연암대학, 서해영농조합법인 등에서는 실습전문 합숙교육 과정을 운영하였다.

교육 효과성 제고 및 교육생 동기부여를 위해 30% 수준의 자부담 비율은 유지하되 교육생 여건 및 환경에 따라 교육생 자부담 비율을 차등 지원하였으며, 2030세대 젊은 층의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하였다. 또한, 교육 기관 평가를 통해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교육·상담·체험 및 홍보를 지원하여 귀농귀촌인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2007-2009) 후 2010년부터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을 확대(22개 시·군 → 50개 시·군)하는 등 도시민 유치 활성화를 지원하였다. 아울러 시·군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귀농·귀촌 활성화 워크숍 및 현장점검 등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또한 가족과 함께 일정기간 체류하면서 농촌적응, 영농교육·실습, 농촌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은 '13년부터 '17년까지 총 8개소 건립을 목표로 '16년까지 금산, 제천, 영주는 완공되어 운영중이고, 나머지 5개는 '17년 준공 예정으로 건립 중에 있다. '2014.3월 금산센터가 처음 준공이후 입교자 모집·운영을 시작으로 '16년 영주, 제천센터가 준공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입주자들에게 일손부족 농가를 중심으로 농가실습교육을 알선하고 이를 마을 주민과의 자연스러운 교류 확대로 이끌어 해당 지역의 정착을 유도하였다.

귀농 초기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통하여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였다. 지원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농지구입, 시설건립 등 영농기반 마련 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2억→3억)하고, 융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지 등 구입을 위한 융자 조건을 개선(3%→2%)하였다. 창업자금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귀농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15.1.20)하였다. 동 법률의 제정으로 귀농·귀촌인에 대한 정의,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귀농·귀촌 실태조사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향후 체계적인 귀농·귀촌 정책을 추진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든든한 초석을 마련한 셈이다.

귀농·귀촌 관련 정부의 정책 지원은 귀농·귀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고 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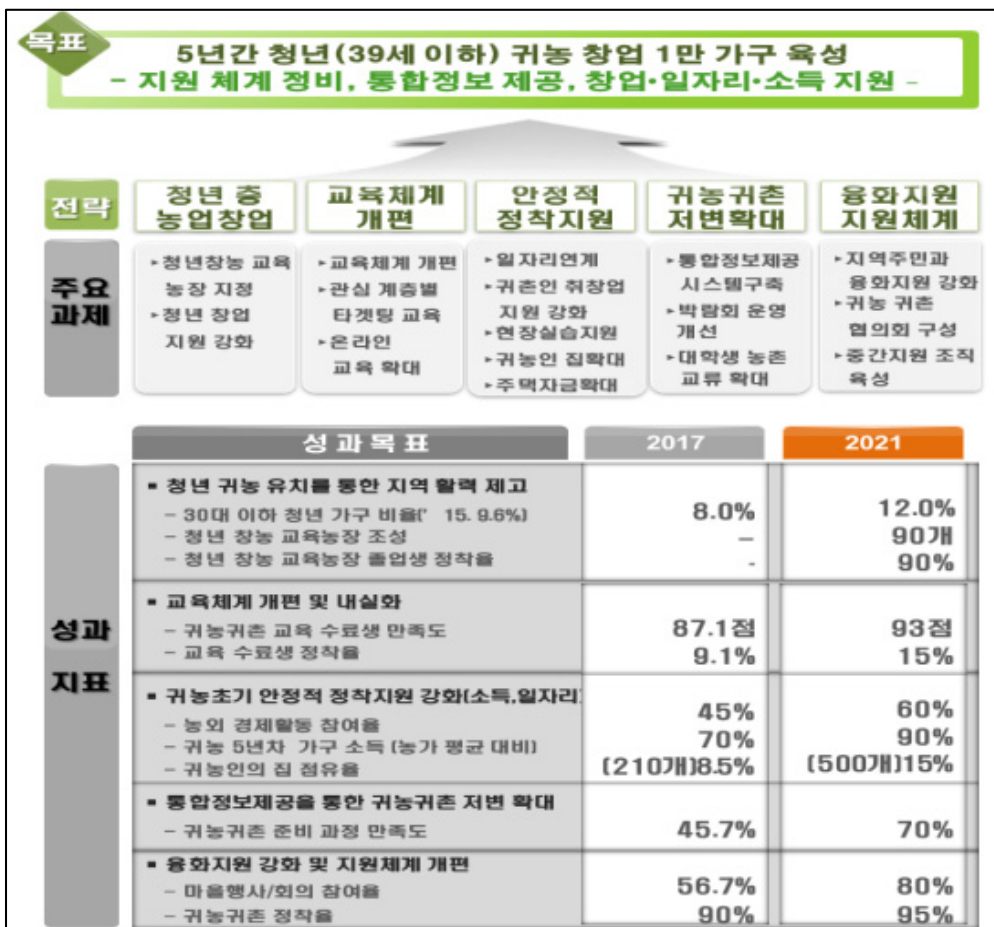
농·귀촌 실행 전에 충분한 사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한 농업·농촌의 신규 인력 확보와 농촌지역 농식품산업 활성화,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베이비 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 전원 생활을 통한 다양한 가치 추구 경향 확산 등으로 귀농·귀촌 추세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농식품부에서는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 지원 추진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정보 제공, 교육·실습, 자금 지원 등 맞춤형 정책을 확대·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표 2-1-15 추진성과 성과

(단위:%)

구 분	2013	2014	2015	2016	비 고
귀농 가구수 증가율(목표)	5.5	5.5	2.0	8.5	'16년 실적은 '17.6
실 적	1.7	0.4	9.0	(8.5p)	월말 통계청에서
달성율	30.9	7.3	450.0	100.0	발표 예정

그림 2-1-3 (2017-2021)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16.11.21)



(4)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자율관리어업은 어업인 스스로 자체규약을 정해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부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을 통해 수산자원 및 어장환경 관리 역량, 어업 경영 능력 제고 및 어촌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자율관리어업을 하고자 하는 공동체는 사업 신청 후에 자체 규정을 근거로 하여 금어기 및 금지채장 등을 실천하여 자원을 조성하고 해안가 쓰레기 줍기, 폐어구 자체 수거 등을 통해 어장환경을 조성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매년 이러한 공동체 활동실적을 평가 받아 최종적으로 우수공동체로 선정된 경우 인센티브 형식의 사업비를 지원 받는다.

정부 주도의 수산자원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어업인의 자율적인 수산자원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자율관리어업은 2001년 63개의 공동체로 시작하여 2016년에는 총 1,160개 공동체로 증가 하는 양적성장을 보였다.

표 2-1-16 연도별 유형별 자율관리어업 참여 공동체 수

구분	'11	'12	'13	'14	'15	'16
공동체(개소)	932	989	1,039	1,086	1,131	1,160
(전년대비 증가율, %)	(8.0%)	(6.0%)	(5.0%)	(5.0%)	(4.1%)	(2.5%)
마을어업	465	490	502	518	539	551
- 양식어업	89	96	98	98	102	102
- 어선어업	175	183	200	207	219	224
복합어업	153	165	176	189	193	199
내수면어업	50	55	63	74	78	83
참여어업인(명)	63,860	66,410	67,687	69,098	70,672	71,762
(전년대비증가율, %)	(4.8%)	(4.0%)	(2.0%)	(2.0%)	(2.3%)	(1.6%)

그동안 자율관리어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대회 개최(2003년), 자율조정협의회(2004년), 자율관리 공동체 등급화 도입(2005년), 자율관리어업 평가위원회(2006년) 운영 및 민간건설턴트, 명예홍보위원 제도 도입(2007년) 등을 하였다. 2009년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4조(어업의 자율관리 지원)를 제정하였고, 2011년에는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2014-177)을 제정하여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

었다.

또한, 수산자원의 공유자원적 성격으로 인한 관리체계인 규제와 처벌에서 탈피하여 어업인 스스로 자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어업인의 의식개혁 등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확산에 노력하였다. 그 결과 자발적으로 조업질서를 형성하고 불법조업을 예방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관리규약을 제정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 구축과 수산자원관리에도 상당한 성과를 창출하였다. 이와 더불어 브랜드화, 생산물 판매망 구축, 자체자금 적립 등 경영개선을 통해 약 1,002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17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동 경제적 효과(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2016)

구분	최소	최대	중간값
합계	862억 원	1,142억 원	1,002억 원
어장관리	55	102	79
자원관리	269	495	382
경영개선	528	528	528
질서유지	10	17	14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은 크게 육성사업비 지원,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지원, 확산교육비 지원으로 나뉘며 2016년 전체 사업비(국비 기준)는 7,592백만원이다. 개별 공동체가 자체적인 자율관리 규약에 따라 자원을 관리 조성하면 매년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동체 등급(선진·자립·모범·협동·참여) 부여 및 육성사업비가 지원된다. 2016년에는 11개 지자체 126개소의 우수공동체에 총 12,244백만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이 지원되었다.

표 2-1-18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

사업명	'13	'14	'15	'16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13,563	13,564	13,869	7,592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자율관리어업의 지속적인 참여 독려 및 의식 개선을 위해 1,024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교육·홍보 사업을 민간기관(한국수산회, 수

협)에 위탁 실시하고 있으며 성공사례 현장방문, 차기지도자양성, 소식지 발간 및 신문 잡지 홍보, 전국대회 개최, 컨설팅 운영 등을 추진 중이다. 또한, 156백만원을 확보하여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 실시를 통해 참여 공동체의 확산과 내실화를 유도하여 공동체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그동안 자율관리어업은 수산자원의 공유자원적 성격으로 인한 관리체계인 규제와 처벌에서 탈피하여 어업인 스스로 자발적 노력을 통한 자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어업인의 의식개혁 등 양적성장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기존의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우수공동체로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잘하는 공동체는 육성사업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미흡한 공동체는 정상화를 유도하여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평가점수(500점 미만)를 기준으로 부진공동체를 별도로 관리하여 현장 방문형 1:1컨설팅 및 전문분야 교육을 실시하고 개선여력이 없는 공동체의 경우 공동체 등록을 취소하여 성과중심으로 자율관리 공동체를 재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우수공동체 성공요인, 위기극복 방법 등의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고 공동체 고령화 정도 및 자율적인 수산자원관리라는 당초 정책 목적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평가항목을 재조정하여 제도적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5) 어촌 6차산업화지원

어촌특화란 어촌의 공동체가 특화어촌의 수산물·자연·문화 등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수산식품의 생산·가공 등 제조업과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재화와 용역을 융합·연계함으로써 특화어촌에서 생산·공급되는 물품 및 용역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그간 어촌경제는 어업생산 활동 중심의 단순구조였으나, 최근 수산물 가공, 어촌관광 등 어촌경제구조 다변화 시도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어촌 6차산업화를 위한 정부재정지원을 통해 어촌의 수산물, 우수한 경관을 이용한 산업화 지원·유도로 어업 외 소득 증대를 통한 지속 가능한 어촌특화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어촌 주민들의 자발적 의지와 역량에 따라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과 구역의 지정, 어촌특화위원회 구

성,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 상향식 자율적 어촌발전 모형 유도를 위해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어촌특화발전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2014년부터 2년간 전국 5개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당 총 사업비 10억원(국비 50%)을 지원하여 수산물 가공·판매, 어촌관광 산업화 추진을 위한 ‘어촌 6차산업화 1차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2016년부터는 ‘어촌 6차산업화 2차 시범사업’으로 전국 5개 어촌마을을 선정하여 3년간 마을 당 총 사업비 15억원(국비 50%)을 지원하여 어촌 6차산업화에 필요한 수산물 가공·판매, 어촌체험시설 등 필수 기반시설과 사업역량 제고, 홍보·마케팅, 연구개발, 브랜드개발 등의 S/W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어촌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자원 발굴, 자원지도 만들기, 어촌마을 리더교육, 선진지역 견학, 어촌특화사업계획 구상과 수립 등 어촌 6차산업화 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어촌특화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어촌주민들이 신뢰와 협동을 바탕으로 자생적으로 성공적 어촌특화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창업·경영컨설팅, 어촌특화상품 연구개발, 판매·유통·홍보지원, 교육·연수 등 어촌특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현장 밀착형 전담기구인 ‘어촌특화지원센터’를 2016년에 2개소를 지정·운영하고 2021년까지 전국 12개 연안·내수면 광역시·도 단위로 확대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어촌 6차산업화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낙후되고 고령화된 어촌과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었으며, 어촌 고유의 역사, 문화, 경관 등을 통해 조성된 관광어촌에 도시민들이 찾아오는 힐링과 소비의 공간이 마련됨으로서 어업 외 소득 증대를 통한 어촌의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6) 마을기업 육성사업

외환위기 이후 계속된 고용 없는 성장의 구조화와 재정건전화 기조 속에서 새로운 대안 및 블루오션을 전략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간 마을만들기 사업 등은 관 주도 지원방식으로 추진되어 불요불급한 사업추진 및 서비스 과잉공급 등을 초래하였다. 행정에서는 간접적으로만 지원하고 주민주도로 내실있는 경영을 통

해 지역문제와 과제해결을 위한 유도가 필요하였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사업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행정자치부에서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2011년도부터 시행하였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마을단위의 기업이다.

마을기업은 '16년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1,446개의 마을기업이 육성되었다.

표 2-1-19 마을기업 현황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마을기업 수(누적)	550개	787개	1,119개	1,249개	1,342개	1,446개
국비	124억	100억	175억	100억	90억	89억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고용인원 (평균고용)	3,145명 (5.7명)	6,533명 (8.3명)	10,177명 (9명)	10,281명 (8명)	11,513명 (8.6명)	16,101명 (11명)
매출액 (평균매출)	197억 (35.8백만원)	492억 (62.5백만원)	737억 (65.8백만원)	1,003억 (80백만원)	1,183억 (88백만원)	1,266억 (88백만원)

마을기업은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한 법인(최대출자자 지분 30%미만)을 대상으로 최장 2년간 8천만원 한도(1차년도 5천만원, 2차년도 3천만원)에서 사업비를 지원한다(국비50%). 예비마을기업은 1천만원 별도 지원한다. 지정절차는 시·군·구에서 마을기업 신청기관 적격검토, 시·도에서 심의 및 행자부 추천, 행자부에서 최종심의 및 지정으로 이루어진다.

마을기업은 '16년말 기준으로 16,101명의 일자리와 1,266억원의 매출이 발생되었다.

마을기업 1·2차 지원종료후 우수마을기업을 선정·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하였다. '11년도부터 총73개를 선정하여(매년 10여개, 1천~7천만원) 제품 품질개선 및 브랜드화, 경영능력 제고 등 마을기업 질적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하였다.

마을기업의 매출 증대와 국민적 관심 제고를 위해 '12년도부터 마을기업 박람회를 추진하였다('12년 경북 문경, '13년 전남 순천, '14년 경남 진주, '15년 강원 춘천, '16년 세종시). 5년간 박람회를 통해 834개 마을기업이 참여하였고, 방문객은 260,000여명, 참여 마을기업의 매출은 828백만원이 발생되었다.

마을기업의 온·오프라인 판로지원을 강화하였다. 마을기업 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유통형 마을기업을 '14년도부터 설립 추진하였다('14년 전남 순천, '15년 경기 화성, '16년 충남 아산). 현재 3개의 유통형 마을기업이 설립·운영 중이고 연매출 약 1,100백만원이 발생되고 있다. 온라인페어(G마켓·옥션, '16.6.27~7.26)를 통해 250개 마을기업이 참여하였고, 농협하나로마트에 '16년말기준으로 9개 직영점에 27개의 마을기업이 입점하였다. 우체국 쇼핑몰에는 현재 20여개 마을기업이 입점되었다.

'15년부터 6개시도(세종, 광주, 경기, 강원, 전남, 경북)에서 1~2천만원 범위 내에서 예비마을기업을 육성·지원하였다. '17년부터는 행자부에서 준비된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비마을기업을 선정·지원한다. 1천만원 한도내에서 교육·마케팅 및 컨설팅 등 마을기업 설립 준비 등을 지원한다.

현재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마을기업 육성 등)」이 국회계류 중이며,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법 등 근거법 제정이 필요하다. 육성단계에서는 민간·타부처와의 협업사업, 신유형사업 발굴 등 질적 제고를 자립단계에서는 온·오프라인 마케팅 확대 및 판로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대형 쇼핑몰 등 오프라인 판매점 입점 다양화와 농협a마켓 온라인쇼핑몰에 '17년 중 마을기업 150여개 입점 예정으로 상품 이미지, 상세정보 등을 준비 중이다. 또한 지하철 광고, 전광판 등 홍보수단 다양화를 통해 마을기업을 홍보할 계획이다.

제2절 주민 체감 생활인프라 구축

1. 생활체감 도시 인프라 정비

(1)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정부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되, 개발제한구역의 엄격한 규제로 도시주변이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완화하고 지원 및 보상대책의 일환으로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제16조에 의거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주민지원사업에는 ① 주민의 생활편익과 소득증대, 복지증진 및 생활비용 보조 등을 위한 지원사업과 ② 개발제한구역 여가공간 확충을 위한 누리길, 여가녹지 등 환경문화사업, ③ 개발제한구역 보전과 관리를 위한 훼손지 복구사업이 있다. 주민지원사업은 2001년 생활편익사업과 복지증진사업을 시작으로 현재는 소득증대사업, 생활비용보조사업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1977년까지 5,397km²가 지정되었으나 현재는 제도개선을 통한 구역조정에 의해 14개 시·도에 3,853.8km²(2016년 12월말 기준)가 유지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시설 등의 무분별한 입지를 억제하고, 보존과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제21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징수한 부담금은 구역 내 토지를 매입하거나 주민지원사업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구역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녹지축 유지에 필요한 토지를 국가가 매수하는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제도를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16년 12월까지 정부는 5,97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1,533필지, 24.3km²의 토지를 매입하였다. 매입한 토지는 친환경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맞게 보존·관리하고 있으며, 일부 토지는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가녹지조성 사업 등에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생활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매수사업 외에 개발제한구역의 엄격한 규제로 도시주변이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주민들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생활편익사업을 통해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으며, 누리길, 여가녹지 등 환경·문화사업을 통해 구역 내 주민들과 인근 도시민들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학자금 및 각종 공과금 등 구역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비용 보조를 통해 생활보장 대책 마련 및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하고 있다. 2016년까지 총 2,827건, 9,367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원항목별 집행건수는 생활편익사업 2,399건(7,454억원)으로 가장 많이 지원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환경·문화사업 274건(1,436억원), 복지증진사업 93건(268억원), 소득증대사업 55건(165억원), 연구조사사업 6건(12억원)이며, 생활비용 보조사업으로 5,272세대(32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2-1-20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유형별 지원 현황

(단위:억원)

구 분		합 계		2001-2012		2013		2014		2015		2016	
전 체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827	9,367	2,138	6,376	173	755	197	766	166	751	156	719
생 활 편 익	소계	2,399	7,454	1,984	5,758	101	474	117	452	96	371	101	399
	도로	1,231	4,397	1,047	3,516	42	207	46	219	53	258	43	197
	상하수도	73	134	71	129	1	4	-	-	-	-	1	1
	하천및교량	263	621	205	412	12	46	16	60	16	53	14	50
	농배수로	565	826	452	606	27	45	37	80	17	29	32	66
	소공원	58	461	37	199	11	150	5	61	1	9	4	42
	기타	209	1,015	172	897	8	22	13	32	9	22	7	43
복 지 증 진	소계	93	268	58	165	16	50	10	20	4	10	5	23
	마을회관	76	213	46	130	13	38	10	20	3	5	4	20
	어린이놀이터	17	55	12	35	3	12	0	0	1	5	1	3
소 득 증 대	소계	55	165	19	55	7	23	11	24	13	47	5	16
	공동작업장	45	117	14	39	6	18	11	24	10	24	4	12
	자연생태마을	10	48	5	16	1	5	0	0	3	23	1	4
환 경 문 화	소계	254	1,386	72	368	48	204	39	220	52	318	43	276
	여가녹지	69	431	27	156	8	33	12	69	13	86	9	87
	누리길	106	523	30	141	21	89	14	81	21	113	20	99
	경관	65	361	10	47	17	74	10	58	14	92	14	90
	전통문화	14	71	5	24	2	8	3	12	4	27	-	-
	연구조사	6	12	4	11	0	0	0	0	0	0	2	1
생활비용		5,272	32	3,950	20	707	3			615	5	529	4
생활공원		20	50					20	50				

(2) 재정비촉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해 추진되는 재정비촉진사업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도시재정비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를 개정하여 도시영세민 집단이주지역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만으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와 해당 시·군·구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이하인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낙후된 구시가지의 낙후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정비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재정비촉진사업의 주된 목적인 것이다.

특히, 2014~2016년까지 재정비촉진지구 61개 지구 중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취경지구 등 24개 지구에 국비 지원(2,246.3억원)을 하였으며, ‘16년에는 국비 및 지방비를 활용하여 기반시설(도로, 공원, 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공사(138,694㎡) 및 보상(73,808㎡)을 시행하였다. ’ 17년도에는 국비 234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재정비촉진사업 10개 지구에 예산을 지원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개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표 2-1-21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세 부 내 용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지구 수	32
국비 지원 금액	5,381
사업 기간	2009년 ~ 계속
지원 비율	10 ~ 50%
사업시행주체	지자체

표 2-1-22 재정비촉진지구 현황(61개 지구)

시·도	지 구	최종면적 (천㎡)	최종 유형	지구지정일
서울시	① 은평 은평	3,492	주거지형	'06.10.19
	② 성북 길음	1,249	"	"
	③ 용산 한남	1,110	"	"
	④ 노원 상계	645	"	"
	⑤ 은평 수색·증산	893	"	"
	⑥ 서대문 북아현	900	"	"
	⑦ 금천 시흥	697	"	"
	⑧ 영등포 신길	1,465	"	"
	⑨ 동작 흑석	871	"	"
	⑩ 관악 신림	529	"	"
	⑪ 송파 거여·마천	1,043	"	"
	⑫ 동대문 이문·휘경	1,010	"	"
	⑬ 성북 장위	1,873	"	"
	⑭ 중랑 상봉	505	중심지형	"
	⑮ 광진 구의·자양	385	"	"
	⑯ 강동 천호·성내	275	"	"
	⑰ 종로·중구 세운	438	"	"
	⑱ 중랑 중화	510	주거지형	'06.12.21
	⑲ 양천 신정	697	"	"
	⑳ 강서 방화	508	"	"
	㉑ 동작 노량진	736	"	"
	㉒ 동대문 전농·답십리	906	주거지형	'08.12. 2
	㉓ 강북 미아	980	"	'08.12.11
	㉔ 동대문구 청량리	370	중심지형	'09.09.10
	㉕ 서대문구 가재울	1,077	주거지형	'09.12.10
	㉖ 영등포구 영등포	226	중심지형	'10.01.21
	㉗ 마포구 합정	297	"	'10.01.21
	㉘ 마포구 아현	1,088	주거지형	'10.08.19
	㉙ 서대문구 홍제	200	중심지형	'10.12.16
	㉚ 강동구 천호	409	주거지형	'14.07.31
	㉛ 종로 돈의문	199	주거지형	'15.06.11
	㉜ 성동 왕십리	337	중심지형	"
	㉝ 성북·강북 미아중심	478	"	"
부산시	㉞ 금정구 서·금사	1,524	주거지형	'07.05.23
	㉟ 진구시민공원주변	896	중심지형	"
	㊱ 영도구 영도제1	590	주거지형	"
대구시	㊲ 동구 신암	1,085	"	'07.05.21
	㊳ 서구 평리	689	"	'10.11.22
인천시	㊴ 동구 동인천역	310	중심지형	'07.05.21
	㊵ 남구 주안 2,4동	1,274	주거지형	'08.05.26
대전시	㊶ 동구 대전역세권	887	중심지형	'06.12.29
	㊷ 대덕구 상서·평촌	2,595	"	'07.07.31

시·도	지 구	최종면적 (천㎡)	최종 유형	지구지정일
	㉔ 서구 도마·번동	2,213	주거지형	'07.08.31
	㉕ 중구 선화·용두	743	"	'07.11.09
	㉖ 유성구 유성시장	338	중심지형	'07.12.28
	㉗ 대덕구 신탄진	470	"	'07.12.31
	㉘ 동구 신흥	678	주거지형	'08.03.28
	㉙ 유성구 도룡	501	"	'08.09.12
경기도	㉚ 구리 인창·수택	2,072	주거지형	'07.06.04
	㉛ 광명 광명	2,281	"	'07.07.30
	㉜ 고양 원당	1,130	"	'07.09.10
	㉝ 고양 능곡	843	"	'07.11.05
	㉞ 남양주 덕소	636.8	"	'07.11.26
	㉟ 고양 일산	612	"	'07.12.31
	㊱ 남양주 도농	329.5	중심지형	'08.06.02
	㊲ 김포 재정비	2,008	주거지형	'09.01.16
강원도	㊳ 춘천 약사	728	주거지형	'08.08.29
	㊴ 춘천 소양	856	주거지형	"
충남도	㊵ 아산 온양중심상권	224	중심지형	'07.12.10
전남도	㊶ 목포 서산·온금	388	주거지형	'09.11.27
경북도	㊷ 포항 동빈내항복원	591	주거지형	'09.02.12

(3) 철도건널목 입체화

철도와 도로가 평면교차하는 건널목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건널목개량촉진법 제6조(건널목개량의 실시)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도로관리청이 건널목개량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건널목을 입체교차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2-1-23 입체화사업 추진 현황

평면건널목	입체화대상	기시행(16년까지)	추진중	잔여
1,001	34	24	3	7

주: 미사용 또는 입체화사업 완료로 인해 평면건널목은 59개소가 폐지되었으며('15년:1,060개소 → '16년:1,001개소) 건널목 교통량을 분석한 결과 현실적으로 입체화가 가능한 7개소에 대하여 개량건널목 지정 추진

철도 건널목 입체화 사업은 열차운행빈도 증가 및 속도향상 등 대외여건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열차의 안전운행 및 도로통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널목입체화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도로관리청)는 재정상황 열악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에 소극적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이해를 구하고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등 철도 건널목입체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적정 예산확보를 위해 예산당국과 적극 협의하고, 투자 우선 순위에 따른 사업추진의 실행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을 통하여 건널목 사고요인이 근원적으로 제거되므로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의 손실을 방지하는데 동 사업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4) 광역버스 정보체계 구축

2001년 이래, 버스이용 확대 및 ICT 기술의 발달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버스정보시스템(BIS : Bus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하였으나, 개별 지자체 단위로 추진되어 버스정보서비스가 제공 지역이 당해 행정구역에만 국한되는 한계점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4년부터 '광역BIS 지원' 사업을 통해, 광역버스를 운행하는 노선과 관계되는 모든 지자체가 행정구역에 관계없이 실시간 대중교통정보를 공유·제공할 수 있도록 BIS의 광역적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2016년까지 91개 지자체에 대하여 73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각 지자체가 생산·제공하는 대중교통정보를 국가대중교통정보센터(TAGO)와 연계하여 민간(인터넷포털사, 이동통신사)에게 제공하고 국민에 개방하는 등 대민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5) 광역상수도 건설사업

우리나라는 강우량의 계절적 편중과 지역적 편중이 매우 심한 편으로 1960년대 이후 4대강 유역종합개발사업을 실시하여 4대강 본류에 다목적댐과 하구둑 등 대단위 수자원 시설을 집중적으로 건설하여 홍수예방은 물론 연중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량의 수자원을 확보하였다. 이렇게 확보된 안정적인 수자원을 대규모 수요지역까지 공급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역간 수자원 분배시스템이 광역상수도이다. 즉, 다목적댐과 하구둑이 수자원의 계절적 편중을 극복하기 위한 인프라로 볼 수 있다면, 광역상수도는 수자원의 지역적 편중을 극복하기 위한 인프라인 것이다.

경제 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1970년대 이후 용수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하천수질은 크게 악화되었다. 따라서 지자체들이 자체 상수원을 확보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짐에 따라 지자체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는 간선 및 분배 기능인 광역상수도 도입 확대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광역상수도를 확충하고 기존시설 여유량을 전환·공급하는 급수체계조정사업을 지원 중이며, 2017년에는 대청권광역상수도 등 6개 사업에 507억원을 투입하여 급수혜택이 필요한 지역에 적기 용수공급을 추진 중이다.

1970년대 들어 경제발전과 대도시 인구집중 등으로 수돗물 수요는 급증했으나 지방상수도가 지자체의 재정부족 등으로 적기에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자, 수돗물 보급확대를 위해 소매로 지역주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지방상수도와 별개로 지자체 등에 원수를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사업을 도입하였다. 1973년 팔당호를 취수원으로 하여 서울, 성남, 부천, 인천 등 4개 도시에 120만 m^3 /일의 용수를 공급하는 수도권(Ⅰ)광역상수도 착공 이래, 1976년 금강광역상수도, 1977년 수도권(Ⅱ)광역상수도, 1979년에는 낙동강 광역상수도가 착공되었다.

2016년 말 국토교통부(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중인 광역상수도는 35개 시설로 시설용량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계통이 8,285천 m^3 /일로 전체 시설용량의 59.7%를 차지하고, 기타 지역이 40.3%를 차지한다. 급수량을 보면 전체 급수량 8,269천 m^3 /일 중 수도권계통(수도권Ⅰ~Ⅵ, 일산권)이 55.3%, 기타 지역에서 44.7%를 공급하고 있다.

표 2-1-24 지역별 광역상수도 공급현황

(단위 :천㎥/일)

사업명	시설용량				공 급 량			
	소계	원수	정수	침전수	소계	원수	정수	침전수
광역상수도	13,882	6,112	6,941	830	8,269	3,217	4,542	510
수도권광역(Ⅰ ~ Ⅵ)	8,285	4,898	3,008	379	4,384	2,213	1,957	213
구미권광역(Ⅰ, Ⅱ)	250		250		146	3	143	
태백권광역(광동,달방)	367		218	149	233		172	61
대청권광역(Ⅰ, Ⅱ)	110	40	70		34	9	26	
남강댐광역(Ⅰ, Ⅱ)	1,010		754	256	800	153	496	151
일산권광역	325		325		189		189	
섬진강광역	90		90		39		39	
부안댐광역	87		87		65		65	
금호강광역	376	325	51		302	261	41	
주암댐광역(Ⅰ, Ⅱ)	596	496	100		323	281	42	
보령댐광역	285		285		257		191	66
전주권광역	700		700		468		468	
충주댐광역	250		230	20	198		195	3
밀양댐광역	150		150		102		102	
포항권광역	161	99	62		144	96	47	
감포댐광역	5	5			4	4		
동화댐광역	52		52		28		28	
원주권광역	100		100		82		82	
울산권광역	220	220			180	180		
전남남부권광역	200		200		116		116	
전남서부권광역	30		30		31		31	
영남내륙권광역	44		18	26	36		21	15
충남중부권·금강광역	163	29	134		92	17	75	
금산무주광역	27		27		17		17	

(6) 건축문화 진흥

①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

2007년 「건축기본법」 및 「경관법」이 제정되어 경관 향상을 위한 제도적 여건은 마련되었으나, 그동안의 경제성·기능성 위주의 토지이용 등으로 국가 위상에 비해 국토 경관 형성 및 관리는 열악한 수준이었다. 또한 경관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경관관리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은 지자체의 디자인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품격 높은 공간 환경을 조성하여 개별적·산발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들의 연계를 강화하고 종합적으로 구상함으로써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은 계획수립 지원을 원칙으로 하여 통합마스터플랜 수립과 디자인 관리체계 도입을 위해 지자체당 1.5억원의 국비를 정액지원하고 있다. 지원사업 대상 선정은 경관개선 효과가 크고, 타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우선 고려하여 진행한다.

2009년부터 지원사업을 진행해온 결과, 2009년 마스터플랜 10개소 수립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총 38개 지자체에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다.

표 2-1-25 연도별 마스터플랜 수립 개소

(단위 : 개소)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38	10	6	2	4	3	4	6	3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시공비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타부처 또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신청시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한다. 현재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지자체의 연계사업 추진성과는 아래와 같다.

표 2-1-26 연계사업 추진성과

(단위 : 백만원)

연도	지자체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연계사업 추진 성과	
		마스터플랜 수립	내용	투입 예산
'09	대구 남구	함께 소통하는 공간으로 미군부대가로환경 정비사업(100, '09)	▶ 앞산 맛둘레길 사업('10~'14) ▶ 문화·예술 생각대로 사업('11~'15)	10,000
	대전 중구	대전 문화흐름 "중교통" 조성 사업(100, '09)	▶ 산소충만 생생도시 재창조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 ('11~'14)	9,080
	전남 목포	목포 근대역사문화타운 내 신파의길 시범가로 조성사업(200, '09)	▶ 근대역사문화 예술공원 조성사업('11~'12) ▶ 유달산 주변 구도심 공폐가 활용 예술인마을 조성('14~'17)	11,300
	경기 안산	공공디자인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들의 상록수(100, '09)	▶ 상록수역 공공디자인사업	200
	경북 영주	새롭게 열리는 역사의 통로(200, '09 / 500, '10)	▶ 1940-50년대 형성된 근대시장(후생시장, 중앙시장)과 舊 철도역사 주변 재생	10,000
	강원 춘천	경춘선 철도교량 하부 녹색 공간 조성(200, '09)	▶ (경춘선)하부공간 소공원 조성사업	7,000
	충북 충주	도심 속 녹색생활공간 조성 사업(200, '09)	▶ 충주생태하천 복원사업('10~'15)	42,000
'10	강원 철원	자연과 소통하는 청정 철새마을 문화기반 시설조성 시범사업(150, '10)	▶ 소이산 생태숲 녹색길 조성사업 ▶ DMZ 철새평화타운 조성사업('13~'15)	3,000
	경남 김해	호계천 주변 창의적인 네트워크 사업(200, '10)	▶ 가야 역사문화 공공디자인 정비사업('10~'15)	15
	경북 포항	해양강국으로 가는 느낌표! 국립 등대박물관 및 호미곶 주변일대 Redesign 사업(150, '10)	▶ 호미곶 해맞이광장 경관디자인 명소화 사업	2,500
	부산 중구	영주동 '오름길 문화 만들기'(150, '10)	▶ 중구 오름길 문화만들기 실시설계 - 중구 오름길 모노레일 설치('14.06.12. 준공)	2,194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 워터프런트 디자인 리노베이션 프로젝트(200, '10)	▶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1차~3차)	173
	충북 청주	빛이 흐르는 아름다운 경관조명 사업(150, '10)	▶ 관아지 옛길 정비사업	78
	경남 거창	공공건축 · 공공공간 네트워크 창조도시 거창조성 사업(150, '11)	▶ 아카데미파크 조성 실시설계('14.06~) ▶ 201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거창여고, '14~'15) ▶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15~'17)	8,489
'12	충남 홍성	역사도시 홍성도심 활성화 계획(150, '11)	▶ 천년아문길정비사업('13~'14)	150
	경북 울진	울진 보부상 옛터의 재조명(150, '12)	▶ 울산보부상 문화거리 조성사업 ▶ 전선지중화 사업('14~'15) ▶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14~'15)	10,200
	부산 동래	부산 고(古) 도심의 개발여건 변화에 따른 통합 재생정비 방안을 통한 동래 재창조(100, '12)	▶ 동래 고도심 재창조 동래방래 사업('13~'15) ▶ 도시재생 R&D 복합개발형 테스트베드 사업('13~'15)	10,391
	경기 안성	역사 문화의 정체성과 조화되는 주거지 경관 형성(150, '12)	▶ 일죽·죽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13~'16)	7,000

'13	경남 하동	공공공간·공공시설을 활용한 도심의 중심성 활력강화 프로젝트(150, '13)	▶ 서부권 개발사업 균형발전사업('14~'23)	42,000
	전북 완주	신타리지 고산만들기 사업(150, '13)	▶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14~'17) - 택리지신도시사업 설계 용역('14.08 완료 예정)	6,300
	부산 대청 로	부산 대청로 지역대표거리 조성사업(200, '13)	▶ 용두산공원 스텝가든 및 문화오름길 조성	300
'14	경북 김천	대한민국 행복중심 김천 업문화특화가로 조성(150, '14)	▶ 김천 시립도서관주변 유해환경개선사업('15~'16)	430
	경기 수원	파장초등학교 주변 안전마을 만들기(150, '14)	▶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16~'19)	6,000
	충남 공주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마을“송산마을” 만들기(150, '14)	▶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15~'18)	2,857

② 한옥건축지원사업

최근 우리 고유 건축인 한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고가의 건축비 등으로 국민들의 생활 속 건축양식으로 널리 자리잡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동 사업은 한옥 건축물의 확산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 한옥을 보다 쉽게 체험하고 그것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한옥건축지원사업에서는 가급적 많은 지역 주민들이 한옥을 즐길 수 있도록 한옥 공공건축물 조성 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사업비 규모는 사업 당 약 1~2억원으로, 이는 일반 건축물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한옥의 건축비를 감안하여 그 추가비용을 보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매년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진행하여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36개소의 지자체에 54.8억원의 한옥공공건축물 조성사업비를 지원하였다.

이러한 정부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공공건축물을 한옥으로 짓도록 유도하여 한옥에 대한 국민적 인식제고 및 한옥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표 2-1-27 지자체 한옥공공건축물 지원 현황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53.3억원 (35개소)	2.5억원 (2개소)	5억원 (5개소)	5억원 (2개소)	5억원 (3개소)	9억원 (5개소)	8억원 (5개소)	8.5억원 (6개소)	7.3억원 (5개소)	3억원 (2개소)

(7)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① 저상버스 도입보조사업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제3항에 의거 시장이나 군수가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저상버스를 도입할 경우 국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저상버스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저상버스는 지자체 재정여건, 교통약자 현황, 수요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2013 ~ 2016까지 국비 1,278억원을 지원하여 2,234대를 도입하였다. 2016년말 기준, 전국의 저상버스는 총 7,572대로 전국 시내버스 32,552대의 23.3%를 차지하고 있다.

표 2-1-28 저상버스 도입보조 추진성과(2013~2016년)

(단위 : 백만원, 대,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지원액(국비)	28,214	31,627	33,987	33,994
누적대수	5,338	6,026	6,751	7,572
도입률	16.4	18.5	20.7	23.3

②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사업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1항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장이나 군수는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인 특별교통수단을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이상 운행하여야 한다. 국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6항에 의거 특별교통수단의 확보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특별교통수단은 지자체의 도입계획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2013 ~ 2016까지 국비 215억원을 지원하여 794대를 도입하여 전국기준으로 2016년에 법정기준 보급대수 100%를 달성하였다. 2016년 12월 기준, 전국의 특별교통수단은 총 2,820대로 법정기준 보급대수 2,731대의 103.3%를 도입하고 있다.

표 2-1-29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추진성과(2013~2016년)

(단위 : 백만원, 대,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지원액(국비)	5,000	5,500	5,800	5,228
누적대수	2,026	2,298	2,588	2,820
도입률	72.8	82.5	92.9	103.3

(8) 주차환경 개선지원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 및 세종계정, 제주계정의 포괄보조사업으로 각 시·도가 지출한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으로 지역실정과 주민수요에 따라 적재적소에 맞춤형 주차장 조성 및 주차정보제공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지역의 주차난을 완화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①공영주차장 조성 지원, ②노상무인주차기 설치 지원, ③실시간 주차정보 시스템 구축 지원, ④이륜차 및 관광버스 주차장 설치 등이 있다.

2015년에 11개 시·도 29개소에 224억원을 시작으로 2016년에 14개 시·도 58개소에 51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에는 14개 시·도 70개소에 61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 농어촌 및 취약지역 정주환경 개선

(1)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취사 및 난방용 연료로 경제적이고 편리한 도시가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나, 전국 단위 주배관망의 연장과 주배관망에 접속되는 공급배관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므로 지리상 도시가스 공급이 극히 곤란하거나 인프라 투자비용이 과다하여 경제성이 떨어지는 지역이 많다. 이와 같이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지 않은 지역은 공급지역에 비해 주민소득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취사·난방용 연료는 더 비싸고 불편한 용기

LPG, 등유, 화목 등을 사용하고 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소득 역진적 연료비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고 벌크로리로 LPG를 공급받는 형태로 유통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과 농어촌 마을은 그 초기투자 비용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 비용을 보조할 필요가 있다.

표 2-1-30 유통구조 비교(LPG용기 vs. LPG소형저장탱크)

LPG용기		LPG소형저장탱크
3단계 (수입·생산→용기 충전→판매)	(유통단계)	2단계 (수입·생산→벌크충전)
잔량 부족시 수시 교체	(공급빈도)	사전계획에 따라 가끔 대량 배송
교체하는 동안 사용 중단	(중단여부)	중단 없이 계속 사용

정부는 2013년 사회복지시설, 2014년 농어촌 마을 단위에 대하여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LPG 소형저장탱크와 옥내·외 배관 설치비용의 80%를 지원하고 있다(사용자 부담은 20%). 농어촌 마을의 경우 30세대 이상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공동 LPG소형저장탱크와 마을내 지하매설 배관망 설치비용 50% 범위 내에서 마을 당 최대 1.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지방비 40%, 사용자부담 10%).

사회복지시설 지원은 한국LPG산업협회에서, 농어촌 마을단위 지원은 각 지자체에서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주민의견 수렴, 시공업체 선정, 시공 감독·관리, 가스공급자 선정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16년에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내 노인·장애인·아동 사회복지시설 247개소에 LPG 소형저장탱크 및 옥내·외 배관 시공을 완료하여, 사업을 시작한 2013년 이래 총 1,122개소(2013년 339개소, 2014년 151개소, 2015년 385개소)를 지원하였다. 한편 농어촌마을은 2014년 18개 마을에 이어 2015년 47개 마을, 2016년 31개 마을에 공동 소형저장탱크, 지하매설 배관망 등을 시공 완료하여 총 96개 마을을 지원하였다.

2017년에는 사회복지시설 225개소와 함께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한 농어촌 20개 마을을 지원할 예정이다.

표 2-1-31 2013년~2016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지원실적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예정)
사회복지시설 지원	339개소	151개소	385개소	247개소	225개소
농·어촌 마을단위 지원	-	18개 마을	47개 마을	31개 마을	20개 마을

(2) 도시가스공급배관 용자사업

농어촌, 지방 등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조기 구축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도시가스사업자 입장에서는 투자 효율이 낮아 정상적인 배관 투자가 곤란한 고지대·재래시장 등 소외지역에도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적인 사정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일반 수요자를 대상으로 서민가게 안정화 및 에너지 복지 확대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공급시설(공급배관 등) 구축은 사업 초기 시설투자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며, 자본 회임기간이 길고, 각 수요처의 시설 설치를 위한 투자 부담으로 민간기업인 도시가스사업자는 자체 자금에 의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많은 어려움이 겪은 것이 사실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융자금으로 지원해주는 도시가스 공급배관 용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을 통해 도시가스 미공급·소외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도시가스 신규 보급가구에 대한 사용자시설(보일러, 내부 배관 등) 설치비도 지원함으로써 에너지 취약계층의 복지 확대에 힘쓰고 있다. 2014년에는 740억원, 2015년에는 750억원, 2016년에는 650억원을 각각 지원하였고, 2017년도 35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6년말 기준으로 도시가스배관 총연장이 42,714km, 전국 도시가스 수요가구수가 17,979천개, 도시가스 공급량은 22,235백만 m^3 가 공급되었다. 이에 따라, 전국 도시가

스 보급률이 81.9%(2016년말)를 달성함으로써 서민들의 보편적 에너지 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표 2-1-32 용자 지원 절차 및 사업규모/지원 조건

- 용자 지원 절차
(공급배관 건설) 지침 수립(산업부) → 용자신청·추천(도시가스사업자, 시·도) → 지원대상 선정(산업부)
→ 용자추천서 발급(도시가스협회) → 용자대여(시중은행)
(사용자시설설치비 지원) 지침 수립(산업부) → 용자신청·추천서 발급(사용자, 시·군·구) → 용자대여(농협)
- 2016년 사업규모
(공급배관 건설, 326억원) 도시가스사의 배관 건설 총 투자비의 일부(약 6.3% 수준)를 지원
(사용자시설 설치비, 30억원) 도시가스 신규 사용가구의 시설 비용(가구당 4백만원 수준)을 지원
- 지원조건: 용자 대출
(공급배관 건설) 대출 이자율(변동)은 국고채 3년물 대표금리-1.25%P
(사용자시설 설치비) 대출 이자율(고정)은 1.5%

표 2-1-33 도시가스 보급 추이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p)
수요가수(천개)	14,536	15,160	15,760	16,379	16,883	17,392	17,979
공 급 량(백만 m³)	21,954	22,951	24,605	24,942	23,027	21,595	22,235
사업권역내보급률(%)	72.4	74.9	76.5	78.6	79.4	80.8	81.9
배 관연장(km)	32,919	34,520	36,344	38,087	39,696	41,235	42,714

주 : 1) 보급률은 주민등록세대수(행자부 자료) 기준

2) p는 잠정치

(3)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국민 1인당 GDP 3만불 시대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도 경제성장에서 소외된 낙후마을이 전국 곳곳에 많이 있어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

이러한 낙후마을의 생활여건을 개선할 목적으로 2014년 9월 제10차 지역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전국 어디서나 기본적인 서비스 향유 및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하는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에 낙후마을의 기초생활인프라를 정비하는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

12) 도시가스 용도별 공급량 총계

사업을 지역행복생활권 내역사업으로 반영하여 2015년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국고 550억원)하였다.

본 사업은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national minimum)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기본적인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활여건개선 효과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내용은 주민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슬레이트 지붕 주택 개량, 집수리, 재래식화장실 정비, 담장정비, 마을안길정비, 마을주변 위험경사지 보강, 상하수도 정비 등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기초생활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이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의와 참여가 필요함에 따라 주민주도·체감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율·책임하에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역량 강화를 중점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지원·주민부담·연계사업을 융복합화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고, 지역의 전통·문화·생활관습을 담은 특색 있는 마을만들기가 되도록 전문가 컨설팅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015년에는 처음으로 총 85개 지구(농어촌 55, 도시 30)를 선정하여 국비 550억원(농어촌 300, 도시 250)을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였다

2016년도에는 2015년도에 시작한 85개 지구에 국비 500억원(농어촌 275, 도시 225)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였으며, 2015년도에 이어 신규지구로 66개 지구(농어촌 44, 도시 22)를 선정하여 200억원(농어촌 110, 도시 90)을 지원하여 기본조사·세부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 등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7년도에는 2015년과 2016년도에 공사를 착수한 151개 지구(농어촌 99, 도시 52)에 대해 79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신규지구 51개 지구(농어촌 35, 도시 16)를 선정하여 100억원(농어촌 60, 도시 40)을 지원하여 기본조사·세부설계 및 시행계획 등 공사착수를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

본 사업은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national minimum)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기본적인 생활인프라 확충하는 만큼 지역 여건과 특성을 감안하여 특성화·차별화된 사업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표 2-1-34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 현황

(단위: 개소,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총계
취약지역사업 목표달성율(누적) (총 1,400지구)	-	-	3.9% (55개소)	7.0% (99개소)	11.0% (154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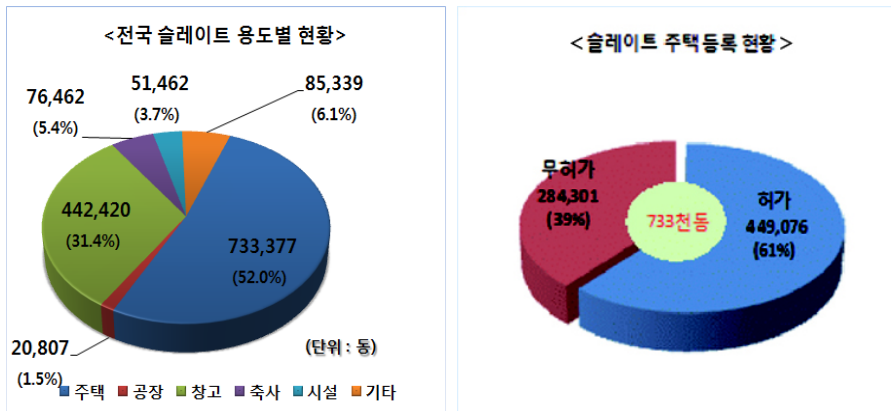
(4) 슬레이트지붕 철거지원사업

정부는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국민건강 피해 가능성이 증대되고, 처리비용 과다로 처리지연 및 불법처리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슬레이트의 조속한 철거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 (2011년~2021년)'을 수립함으로써 슬레이트 처리기반을 마련하였다.

환경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2011년 9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사업 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슬레이트 지붕의 조속한 철거를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을 통해 2011년에 국고 28억원을 투입하여 2,372동, 201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국고 55억원을 들여 8,290동, 2013년에는 국고 192억원을 투입하여 17,942동, 2014년에는 국고 288억원을 들여 22,320동, 2015년에는 국고 369억 투입하여 27,746동, 2016년에도 국고 343억원을 들여 26,721동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였다. 또한, 2017년에도 국고 341억원을 들여 20,300동에 대한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림 2-1-4 전국 슬레이트 용도별 현황 및 주택등록 현황('13.12월)



(5) 농어촌 상수도시설 확충

우리나라의 상수도 보급률은 2015년 기준으로 특·광역시시의 경우 100.0%, 시지역은 99.4%에 이르고 있으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면지역 및 도서지역 등 취약지역은 76.3% 수준에 불과하여 일시적인 가뭄에도 상습적인 식수난을 겪고 있다.

표 2-1-35 도·농간 상수도 보급률 비교

(단위: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도시지역(A)	98.8	98.9	98.8	98.7	-	-
농어촌(面)지역(B)	58.8	62.2	69.0	71.4	73.1	76.3
차이(A-B)	40.0	36.7	29.8	27.3	-	-

정부에서는 농어촌지역의 생활용수공급 확대를 위해 1994년부터 2015년까지 농어촌 및 도서지역에 총 4조 7,862억원(국고 3조 4,191억원)을 투자하여 전국 농어촌 및 도서지역 1,242개소(농어촌생활용수개발 982개소, 도서지역상수원개발 309개소)에 상수도시설 설치를 추진하였다.

2016년에는 농어촌생활용수개발 238개소에 국고 268,170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은 30개소에 국고 26,561백만원을 투자하여 상수도 보급 확충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6) 접경지역 성장기반 조성

DMZ 인근지역은 생태 자원이 우수한 청정지역으로 저탄소 녹색산업 위주의 산업 구조 전환이 필요하고, 향후 통일시대를 대비한 경제·사회적 통합 완충지대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경제 성장을 유도하고 지역녹색성장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육성, 자동차 테마파크 조성, 첨단신소재부품단지, 의료복합 휴양시설 조성, 첨단 국토클러스터, 대학·산학연구시설, 국회·대학·민간 등 연수시설 유치 등이 필요하다.

행자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지역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수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2011~2030년)」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도에는 국회의정연수원을 고성에 유치함에 따라 의정연수원 공사를 착공하였고, 연수원 진입도로개설을 위하여 설계를 진행하였고 2015년에는 착공하여 토지보상, 토공작업 등을 진행하였다. 2017년도까지 연수원 시설공사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단지조성(강화, 춘천 봉명), 철원 플라즈마 산단 조성, 연천 첨단 국토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접경지역의 신성장동력을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지역 인지도를 제고함으로써 접경지역 성장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 기항지 접안시설 개선사업

전국의 연안여객선 기항지는 육지와 도서지역을 포함하여 총 352개소이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항만 내 40개소, 어항 내 151개소, 그 외 「항만법」 및 「어촌어항법」을 적용받지 않는 소규모 항포구 161개소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지자체 등이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항포구는 전체 기항지의 45.7%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관심 및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접안시설 등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표 2-1-36 전국의 연안여객선 기항지 현황

(단위: 개소)

합계	항만		어항				소규모 항포구
	무역항	연안항	국가	지방	어촌정주	마을공동	
352	21	19	36	51	48	16	161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도서민 등 여객선 이용객의 승하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편의를 증진하고자 2012년부터 기항지 접안시설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012년 장자도(군산) 및 가사도(진도)의 접안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총 27개소, 133억원을 지원하여 낙후된 접안시설을 개선하였다.

표 2-1-37 최근 5년간 기항지 접안시설 개선사업 현황

구 분	합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개소	27	2	4	8	6	7
사업지역	장자도 등 27개소	장자도, 가사도	말도, 쉬미, 옥도, 백아도	굴업도, 광도, 격포, 연화도, 위도, 옥도, 관매도, 저동	삼목, 울도, 관사, 하노대, 동거차, 성남도	미법, 소이작, 연흥, 송고, 산등, 하왕등, 수치도
지원예산(억원)	133	10	30	33	31	29

또한, 기항지 접안시설 개선사업은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선박 및 이용객의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도서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여 관광객 증가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낙후된 소규모 항포구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 도서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도서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접안시설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8)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사회 구조의 변화로 가족 중심의 묘지 관리의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방치되는 묘지가 증가하고 있고, 묘지가 가지는 국토잠식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국민인식의 변화로 인하여 장례문화가 점차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 결과, 화장률은 그간 급속히 증가하여 2015년 말 기준 80.8%를 기록하였으며, 앞으로도 매년 1~2%p 정도의 증가폭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표 2-1-38 연도별 화장률 변동 추이

구 분	1970년	1991년	2001년	2002년	2005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화장률(%)	10.7	17.8	38.5	42.5	52.6	58.9	61.9	65.0	67.5	74.0	76.9	79.2	80.8

이러한 화장수요 증족을 위한 공설 화장시설 및 봉안당 신축, 화장로 개보수 및 자연장지 조성 등 화장시설 확충 및 시설물 현대화를 위해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화장시설 신·증축에는 m^2 당 150만원을, 화장로 신·증설에는 기 당 3억 6,000만원을, 자연장지 조성은 m^2 당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전국의 장사시설 개소수는 2016년 12월말 기준으로 공설·법인묘지 490개소, 화장시설 58개소(화장로 337로), 봉안시설 392개소, 공설·법인자연장지 96개소, 장례식장 1,089개소이다.

연간 최대 화장능력을 감안할 때 화장시설 개소수는 수급상 큰 문제는 없지만, 지역별 화장시설 접근성(이동시간) 및 비용 문제 등으로 이용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단계에서 지역주민의 반발과 설치기간의 장기화(2~3년) 등으로 인하여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전체 화장시설 중 47%가 1990년대 이전에 설치되어 시설이 노후화되고, 오염방지시설 및 편의시설 등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생활권역을 고려해 장사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장사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노후화되고 오염방지시설이 미비한 화장시설의 재건축 및 설비보완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가 공동으로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을 설치·조성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법령을 개정(2016년 1월)하여 광역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장사시설 설치 시 입지선정 과정에서도 주민이 참여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절차적 근거 등을 마련하여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

한편, 묘지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자연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연장지 조성 면적 및 구역 등에 대하여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2013년 2월)하였고, 개인·가족

자연장지에 한하여 일반주거지역 등 일부 지역에 자연장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설치제한 지역을 완화(2013년 6월)하였으며, 자연장지 및 수목장림의 표지 면적을 확대(2015년 7월)하였으며, 산림보호구역 중 생활환경보호구역 등 일부 구역에서는 그 편의시설 등이 산림보호구역 밖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일정 규모의 수목장림을 설치·조성할 수 있도록(2016년 1월) 개정하였다. 그리고 자연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장년, 노인층을 대상으로 지역별 순회교육 등을 2014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사설자연장지 및 장례식장에서 이용자에게 시설물이나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유업인 장례식장영업을 신고제로 전환하여 일정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2016년 1월) 개정하였다.

(9)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 조성

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역경제의 뿌리인 전통시장의 상권이 대형마트의 확산과 소비자의 구매형태 변화 등 유통산업 환경변화·시설 노후화 등으로 위축되고 있어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상권의 위축방지 및 상권 활성화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2002년부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착수하여 2016년까지 1,184개 시장에 대하여 아케이드, 주차장 및 노후시설 개·보수 등에 국비 1조 9,550억원을 지원하여 3,856건의 시설을 개선하였다. 2016년에는 284개 시장에 아케이드 79건, 진입로 6건, 기타 노후시설 및 안전시설, 고객편의시설 284건 등 808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2-1-39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현황

(단위 : 억원, 건)

구 분	2002~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지원 금액	4,948	1,616	1,968	1,749	1,572	1,660	1,606	1,430	1,388	805	808	19,550
지원 건수	890	227	281	261	259	383	330	308	330	303	284	3,856

2016년 지원성과를 살펴보면 시설현대화를 실시한 시장의 매출이 11.1% 증가하였고, 고객 수는 4.9% 증가하였다. 반면, 미개선 시장의 경우는 매출이 0.4% 하락하였으며, 고객 수는 1.2% 하락하였다.

앞으로 중소기업청은 전통시장을 근본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시장 고유의 특성을 살리는 전략을 추진하여 상인, 고객, 정부 및 지자체와 공동으로 경쟁력 있는 시장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②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조성

유통구조의 개선 및 물류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정부는 2003년부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이하 ‘물류센터’라 함)의 건립을 지원하고 있다. 본 사업은 그동안 지식경제부에서 지원하다가 2009년 5월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되었으며, 대부분이 지역 슈퍼마켓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다. 건립비용은 정부·지자체·민간이 6:3:1의 비율로 분담하고 있다(2009년 5월 이전, 3:4:3 매칭비율로 전환).

물류센터에 대하여는 도매배송장, 검품장, 보관창고, 저온창고 등 유통시설 및 장비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정보화 시스템 등을 1~3년에 걸쳐 지원하고 있다. 2003년부터 2016년까지 37개소에 총 780.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서산 신규 1곳과 고흥 계속 1곳에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센터는 부산, 제주 등 전국에 34개소가 운영중이며 고흥 등 3개소가 현재(2017년 4월) 건립 중에 있다.

표 2-1-40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금액	67	78	69	40	13	3	25	140	125	161	34	17.5	7.8	780.3

센터를 통해 기존의 복잡한 유통구조(제조업체, 대리점, 중소유통업자 등)를 공동구매와 직거래로 개선하였고, 이를 통해 저렴하게(3%) 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센터를 이용하는 회원수는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2016년도 실태조사에서 1년 이상 운영중인

센터의 전체 매출액도 3,259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8.3%정도 증가하였다.

향후 물류센터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등 활용성을 높이고 지역 확충을 통해 가격 경쟁력 제고 등 물류기능의 효율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3.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실현

(1)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2012년 1월 1일 가축분뇨 해양배출 중단에 따른 육상처리 방안 강구하고 개별농가 시설에서의 가축분뇨처리 효율 저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을 지원하여 가축분뇨 공동처리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공동자원화시설의 운영 개선,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구축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공동자원화(에너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축협 등을 대상으로 퇴액비시설은 톤당 4,000만원(국비 40%, 지방비 30%, 융자30%), 에너지시설은 톤당 9,000만원(국비 50%, 지방비 20%, 융자 20%, 자담 10%)한도 내에서 가축분뇨를 1일 70톤 이상 퇴비·액비·에너지 등으로 자원화 처리할 수 있는 시설·기계·장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개발행위,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 이행, 민원 해결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동자원화사업은 다수의 가축분뇨(주로 양돈분뇨)를 수거하여 퇴비·액비를 생산 후 농경지에 환원하는 체계로 가축분뇨처리를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생산비 절감, 환경오염 방지 등 지속가능한 친환경 가축사육기반을 조성하고, 농업부문에서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감축, 생산량 증대 품질향상 등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다. 2015년 12월 말기준으로 퇴액비화시설 114개소, 에너지시설 10개소를 선정하여 퇴액비화시설 80개소, 에너지시설 4개소를 설치·완료하였으며, 2017년까지 퇴액비화시설 150개소, 에너지시설 21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표 2-1-41 가축분뇨자원화율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가축분뇨자원화율 (자원화 물량/전체가축분뇨 발생량) × 100	89.2	89.5	90.2	90.6

(2) 쾌적한 연안공간 조성사업

연안정비사업은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연안의 지표가 깎이거나 모래 등이 유실되는 등 훼손된 연안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고 보전·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연안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연안침식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이상 고파랑의 내습 증가, 연안개발에 따른 인공구조물 설치 증가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그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적 공통현상이기도 하다. 연안정비사업은 이러한 연안침식의 심각성이 다각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국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자 관광자원인 연안을 보전하고 국민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0년도부터 꾸준히 시행하여 왔다.

연안정비사업에 대한 수요예측 및 조정, 지역별 사업계획 검토 및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수립된 제2차 연안정비기본계획(2010~2019년) 및 제2차 연안정비(변경)기본계획(2010~2019년)에 근거하여, 2013년도에는 516억원(일반회계 466억원, 책특회계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강릉시 남항진리 등 16개소, 2014년도에는 543억원(일반회계 499억원, 책특회계 4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강원 속초해수욕장 등 15개소, 2015년도에는 575억원(일반회계 522억원, 책특회계 5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등 19개소, 2016년도에는 659억원(일반회계 606억원, 책특회계 5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울진 월송지구 등 21개소에 대한 국가시행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2-1-42 연안정비사업 추진

(단위: 억원, 개소)

구 분	2013	2014	2015	2016
예산	516	543	575	659
정비사업	16	15	19	21

2016년도까지 11개소(강릉 남항진리, 부산 다대포해수욕장, 서천 선도지구 등)에 대한 국가시행 연안정비사업이 완료되어 대형 태풍 등 이상기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유실을 방지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연안정비사업은 통상 수년에 걸쳐 비교적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17년에도 641억원(일반회계)의 예산을 투입하여 울진 월송지구 등 18개소에 대한 국가시행 연안정비사업이 진행 될 예정이다. 면밀한 연안침식 원인분석과 적절한 대응방안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연안정비사업을 통하여 연안침식 피해가 최소화되고 연안공간의 유실이 방지되어 국민이 소중한 연안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방치선박 정리 지원사업

연안해역 및 해안가에 장기간 방치되어 해양오염을 유발하거나 선박의 안전항해를 저해하고 있는 선박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방치선박 정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방치선박은 주로 선령이 오래되거나 어획부진 등으로 폐업 또는 장기간 방치하고도 처리비용 부담 등 이유로 소유자가 스스로 폐선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런 경우 선명 및 어선표지판 등 소유자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시설이 없어 소유자 파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방치선박을 처리함에 있어 소유자가 확인된 것은 소유자에게 제거명령을 내려 자체 처리토록 하고,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방치선박을 처리하고 있다.

2013년도에 21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의 사업비로 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방치선박 200척을 처리하였으며, 2014년에는 212백만원을 투입하여 170척을, 2015년에는 200백만원으로 178척, 2016년에는 212백만원으로 196척을 처리하였다. 또한 2017년도에는 204백만원을 투입하여 6개 광역지자체에서 방치선박 200여척을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방치선박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방치선박 실태를 조사하여 데이터를 관리하고, 수협에서 실시하는 어업인 교육 등을 이용하여 선장 및 어선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방치선박 발생 예방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표 2-1-43 방치선박 정리 추진실적(2013~2016년)

(단위 : 백만원, 척)

구 분	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비	834	136	-	-	-	80	120	424	-	40	34
처리척수	744	59	11	3	33	19	80	465	13	41	20

* 지방청 실적 포함

(4)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1991년부터 국고를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물환경관리계획과 연계하여 수계별로 수질보전의 필요성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하고 있다. 2016년말 기준 전국에 104개 시설(12.1천m³/일)이 가동되고 있고, 46개 시설(5.7천m³/일)이 신·증설 중에 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2016년에는 수질오염물질(BOD기준) 54,406천톤/년을 유입처리하여 51,762천톤/년을 제거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물질 저감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5)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어촌 지역에 마을단위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시설용량 500톤/일 미만)을 설치하여 농어촌 마을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초기단계에서 정화함으로써 하천·상수원 등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까지 농어촌지역 하수도보급률을 77%까지 제고시키기 위해 2013년도부터 2020년까지 농어촌 및 도서지역 하수도 정비사업에 국고 2조 6,615억원(신·증설 1,033개소, 개량 1,901개소)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농어촌지역의 하수도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2016년까지 농어촌 및 도서지역에 총 국고 2조 4,951억원(1995년부터 2004년까지 지방양여금 4,877억

원, 2005년부터 2016년까지 국고보조금 2조 74억원)을 투자하여 전국 농어촌 및 도서 지역에 3,282개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도시설(시설용량 500톤/일 미만, 2015년말 기준)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농어촌 지역 하수도보급률이 67.1%(2015년말 기준)로 제고되었다.

표 2-1-44 하수도 보급률 현황

(단위 :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국평균	88.6	89.4	90.1	90.9	91.6	92.1	92.5	92.9
시 지역	92.5	93.4	93.8	94.2	94.6	94.9	95.0	95.1
농어촌 평균*	49.1	52.6	56.0	59.5	62.1	63.7	65.9	67.1
읍지역	76.1	73.5	77.9	82.2	83.5	84.6	84.7	85.0
면지역	25.1	29.3	38.1	38.7	41.9	44.0	47.3	49.0

* 농어촌 평균 : 읍·면지역 (군지역 읍, 면지역)

2016년에는 경기도 가평군 등 12개 시·도에 310,832백만원을 투자하여 하수도 확충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2-1-45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2016)

(단위 : 백만원)

계	인천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310,832	5,655	2,750	300	2,759	10,115	21,834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19,692	36,604	40,419	63,288	55,625	51,791	-

(6)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1994년에 농업정책심의회(농어촌생활여건개선분과위)에서 농어촌의 공업화에 대비한 폐기물처리시설 확보를 촉구하면서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을 공포하여 농어촌특별세지원 대상사업에 “농어촌폐기물처리 지원사업”을 포함하였으며, 1995년도에 최초로 사업을 시작하였다.

2003년에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이 개정되어, 사업기간을 2014년까지

연장하였으며,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중 농수산부 등 소관사업 외의 사업에 대해서도 보조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2007년 1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이 폐지되어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지원 등 관련 사업들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승계되었다.

2016년에는 농어촌 매립시설, 소각시설 등 총 14개소에 79억원의 국고를 지원하는 등 열악한 42지방재정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단위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재정을 지원하여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도·농 간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다.

(7)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2015년 기준으로 도시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은 95.1%이고, 농어촌 및 도서지역 등은 67.1% 수준이다. 그 중 특히, 면지역은 하수도보급률이 49.0%에 불과하여 하천 수질오염 등에 취약한 실정이다. 본 사업은 UR협상 타결에 따라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및 수질오염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1995년부터 농어촌특별세의 일부를 지원하여 농어촌지역의 면지역에 하수도설치 사업을 지원하게 되었다.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어촌 지역의 면단위에 공공하수처리시설(시설용량 500톤/일 이상)을 설치하여 농어촌 마을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초기단계에서 정화함으로써 하천·상수원 등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면단위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지역 하수도보급률 제고를 위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존치시점(2024년)까지 하수도 확충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① 단위사업 전체의 추진 경과(현황) 및 성과

정부에서는 농어촌지역의 하수도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2016년까지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국고 총 1조 2,860억원을 투자하여 농어촌 면지역의 하수도보급률이 49.0%(2015년말 기준)로 제고되었다.

표 2-1-46 하수도 보급률 현황

(단위 :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국평균	88.6	89.4	90.1	90.9	91.6	92.1	92.5	92.9
시 지 역	92.5	93.4	93.8	94.2	94.6	94.9	95.0	95.1
농어촌 평균*	49.1	52.6	56.0	59.5	62.1	63.7	65.9	67.1
읍지역	76.1	73.5	77.9	82.2	83.5	84.6	84.7	85.0
면지역	25.1	29.3	38.1	38.7	41.9	44.0	47.3	49.0

* 농어촌 평균 : 읍·면지역 (군지역 읍, 면지역)

② 각 시·도별(또는 광역권별) 지원 현황 및 성과

2016년에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전라남도 강진군 등 8개 시·도에 93,638백만원을 투자하여 하수도 확충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2-1-47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2015)

(단위 : 백만원)

계	인천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93,638	6,596	2,945	3,144	13,551	6,457	37,350	9,977	13,618

(8) 하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제주)

2015년 기준으로 도시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은 95.1%에 이르고 있으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및 도서지역 등은 67.1%(읍면지역) 수준에 불과하여 하천 수질오염 등에 취약한 실정이다. 본 사업은 하수도 보급률이 낮은 농어촌 지역의 하수도 시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과 사업내용이 같으며,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제주특별자치도 계정)로 편성되는 사업이다.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어촌 지역(제주)에 마을단위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시설용량 500톤/일 미만)을 설치하여 농어촌 마을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초기단계에서 정화함으로써 하천·상수원 등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와 농촌간의 하수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하수도 시설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① 단위사업 전체의 추진 경과(현황) 및 성과

정부에서는 농어촌지역의 하수도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2016년까지 제주도 지역에 총 국고 269억원을 투자하여 2015년말 기준 제주지역 하수도보급률이 91.4%로 제고되었다.

표 2-1-48 하수도 보급률 현황

(단위 :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국 평균	88.6	89.4	90.1	90.9	91.6	92.1	92.5	92.9
농어촌 평균*	49.1	52.6	56.0	59.5	62.1	63.7	65.9	67.1
제주도 평균	82.0	84.8	87.1	88.0	89.2	89.5	91.1	91.4

* 농어촌 평균 : 읍·면지역 (군지역 읍, 면지역)

② 각 시·도별(또는 광역권별) 지원 현황 및 성과

2016년에 하수도 시설 확충 및 관리(제주) 사업에 제주도 2개 시·군에 3,835백만원 (서귀포시 3,030백만원, 제주시 805백만원)을 투자하여 농어촌 하수도 확충사업을 추진 하였다.

(9)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의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국고에서 지원함으로써, 쓰레기의 위생적·안정적 처리기반을 조성하여 국민 복지를 증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위한 사업이다.

대도시의 쓰레기 처리시설 확보로 대도시의 위생적인 조성을 목표로 1997년에 소각 시설 확충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였으며, 1998년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1998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등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16년도에는 매립시설, 소각시설, 음식물처리시설, 매립지정비 등 총 33개소에 669억원의 국고를 지원하여 지역별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10)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제주)

클린하우스 사업은 2005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6년부터 시행하여 2016년말 기준 비가림 클린하우스 1,536개소, 거치대 1,100개소를 설치·운영하였다. 이후,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은 설치 전('01~'05) 48%에서 설치 후('15) 57%로 증가하였다. 또한, 클린하우스 설치로 생활환경이 쾌적해져 주택지역의 미관 개선 및 주민들의 환경 복지가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주민 만족도도 92%로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표 2-1-49 클린하우스 설치현황(06~'16년)

(단위:개소)

구분	클린하우스 설치현황			CCTV 설치현황
	계	비가림시설	거치대	
계	2,636	1,536	1,100	766
제 주 시	2,013	1,066	947	483
서귀포시	623	470	153	283

농촌폐비닐 수거사업은 폐비닐 방치에 따른 토양오염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소각에 따른 대기오염을 방지하여 건전한 토양과 쾌적한 농촌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2010년 1월 1일 농어촌폐비닐 수거지원사업 업무 이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으로 폐기물 적정 수거 처리를 위한 국고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2016년에도 4,873톤을 수거하였다.

농어촌·단독주택 지역의 재활용률 향상 및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 정부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제주도에 중앙 정부의 차별화된 적극적 지원으로 생활폐기물 재활용 제고에 지방자치 단체의 노력과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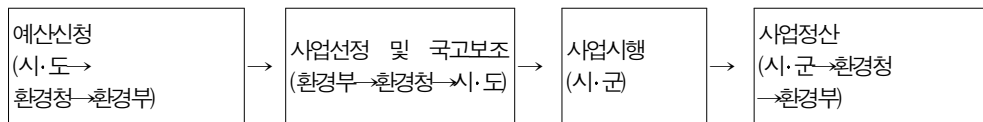
(11) 비점오염저감사업

하천 환경변화,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 증가, 강우특성 변화 등으로 수질과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위해 비점오염물질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도시 및 농촌지역, 도로 등 비점오염원(Nonpoint Source)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하천 수질개선과 생태

적으로 건강한 물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위한 사업이다.

강우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여 수질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비점오염저감시설(자연형·장치형 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고, 효과적인 도시 비점오염원관리를 위하여 사전예방 차원에서의 발생원 관리방법인 저영향개발(LID) 기법을 적용한 물순환선도도시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림 2-1-5 사업추진 절차



2016년에 비점오염저감시설 55개소 설치를 지원하여 도시, 농촌 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통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에 기여하였으며, 공공청사 등 12개소에 그린빗물인프라 사업을 추진하여 강우유출 저감을 통해 비점오염원을 관리함으로써 물순환구조를 개선하고 경관가치를 향상하는데 기여하였다.

앞으로 수질 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위해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고 도시지역의 물순환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토양 침투 및 수질 정화를 거쳐 유출되는 저영향개발(LID) 기법을 적용한 물순환선도도시 조성사업(대전시 등 5개 지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12)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우리나라의 상수도 보급률은 2015년 기준으로 특·광역시 경우 100.0%, 시지역은 99.4%에 이르고 있으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면지역 및 도서지역 등 취약지역은 76.3% 수준에 불과하여 일시적인 가뭄에도 상습적인 식수난을 겪고 있다.

표 2-1-50 도·농간 상수도 보급률 비교

(단위 :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도시지역(A)	98.8	98.9	98.8	98.7	-	-
농어촌(面)지역(B)	58.8	62.2	69.0	71.4	73.1	76.3
차이(A-B)	40.0	36.7	29.8	27.3	-	-

이에 정부는 농어촌지역의 생활용수공급 확대를 위해 1994년부터 2015년까지 농어촌 및 도서지역에 총 4조 7,862억원(국고 3조 4,191억원)을 투자하여 전국 농어촌 및 도서지역 1,242개소(농어촌생활용수개발 982개소, 도서지역상수원개발 309개소)에 상수도시설 설치를 추진하였고, 2016년에는 농어촌생활용수개발 238개소에 국고 268,170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은 30개소에 국고 26,561백만원을 투자하여 상수도 보급 확충사업을 추진하였다.

(13)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고온현상 등으로 인해 조류 개체수가 증가하여 먹는 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고도정수처리방식 도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지방상수도의 영세성, 비전문성으로 인한 도·농간 서비스 불균형도 해소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9년부터 지역발전특별회계(생활·제주계정)로 지방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총 사업비 1,179억원(국고 585억원)을 지원하여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시범사업(5개소)을 실시하고 있다.

4. 안전한 지역환경 만들기

(1)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 인프라 구축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CCTV) 사업은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환경 제로 구축” 국정과제(협업과제)로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CCTV를 설치하여 각종 범죄 및 사고로부터 안전한 어린이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왔다.

2016년까지 총 5,425억원(국비 2,621, 지방비 2,804)을 투자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26,117개소에 CCTV 설치를 완료하였다.

사업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경찰청과 협업을 통해 범죄분석 프로그램(GeoPros)을 활용, CCTV 설치로 인한 범죄 발생 증가율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설치된 CCTV 4,132개소 반경 100m 이내에서 5대 강력범죄가 2013년 상반기 2,479건에서 2015년 상반기 1,820건으로 26.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CTV 설치장소 지역주민 2,21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CCTV 설치 후에 장소별, 주·야간별 범죄 불안감이 ‘불안’(평균 3.71점)에서 ‘안전’(평균 2.49점)으로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CCTV설치사업의 효과들이 직·간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1-51 CCTV설치사업의 효과(지역주민의 범죄불안감 감소)

(단위 : 점)

구 분	평균	정류장		차 로 큰 길		골목길		공 원 놀이터		어 린 이 보호구역		유 흥시 설 주 변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설치 전	3.71	3.13	3.67	3.08	3.57	3.93	4.26	3.56	4.05	3.43	3.84	3.86	4.18
설치 후	2.49	2.28	2.46	2.25	2.41	2.55	2.75	2.38	2.62	2.34	2.53	2.58	2.76
증 감	△ 1.22	△ 0.85	△ 1.21	△ 0.83	△ 1.16	△ 1.38	△ 1.51	△ 1.18	△ 1.43	△ 1.09	△ 1.31	△ 1.28	△ 1.42

(2)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급커브, 급경사, 노폭협소 등 구조적으로 사고위험이 높은 지방도로에 대하여 선형개량, 경사완화, 도로 폭·확장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0개년

중장기 사업계획(제1차 2004~2013년, 제2차 2014~2023년)에 따라 2004년부터 연차별로 추진 중에 있다.

제1차 위험도로 구조개선 중장기 사업계획에 따라 전국 1,692개소의 위험한 지방도로에 1조 7,484억원을 투자하여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4년도에 제2차 위험도로 구조개선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총 723개소에 1조 4,078억원을 투자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17년에는 600억원(국비 300억원)을 투입하여 91개소의 위험한 지방도로를 개선할 계획이다.

표 2-1-52 지방도 위험도로 개량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 : 개소, 억원)

구 분		계	2004~2016년 실적	2017년 계획	2018년 이후
사업량		2,415	1,755	91	569
사업비	합 계	31,562	19,706	600	11,256
	국 비	15,781	9,853	300	5,628
	지방비	15,781	9,853	300	5,628

(3) 도시침수 대응사업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하나 하수관거 용량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여 매년 도시침수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0년간 연간 강수량은 17%, 향후 2050년까지 15.6% 증가할 전망이다. 본 사업은 상습침수지역에 대하여 하수도시설을 정비하여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상습침수 지역에 대해 우수관로와 펌프장 등을 확충하여 통수능력을 확보하고 하수관로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하수저류시설을 설치하여 침수 예방을 통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정주여건 제공하며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정비대책을 마련하고 도시침수 대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① 도시침수 대응 시범사업 추진

정부에서는 도시규모, 하수도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6개 지역에 침수대응 하수도시

설 확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시범사업의 경험(설계, 공사 등)을 하수도정비중점관리 지역 지정 지역의 하수도정비대책 추진과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 김해·천안·부천·안동시, 보성·서천군 등 6개소(사업기간 : '13~'15, 총사업비 : 2,327억원)

② 침수대응 하수도정비 사업 추진

2013년부터 하수 범람으로 침수피해 발생 또는 우려가 있는 지역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예산을 중점 지원하여 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 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 중이다.

*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은 2016년까지 53개 지역을 지정

표 2-1-53 도시침수 대응 하수도인프라 확충 사업비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합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사업비 규모	8,831	1,787	1,804	1,844	1,819	1,577

* '14~'16년 까지 도시침수대응 사업으로 총 6,206억원 기투자

* '17년도 이후 사업비는 중기재정계획을 토대로 산출

(4)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농업인의 고령화 추세 및 안전사고 증가 등으로 의료복지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비농업종사자에 비해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농업은 3대 위험산업(광업>농어업>건설업)에 속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증가하고 있으나, 농작업과 만성질환과의 관련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하고 사전예방을 위한 노력도 부족하였다.

표 2-1-54 고령인구 비중

(단위: %)

구 분	2010년	2015년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	31.8	38.4
전체가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	11.3	13.1

주 : 고령인구 비중=(65세 이상 인구÷총인구)×100 (2015 농림어업총조사)

농업인의 직업성 질환에 대한 조사·연구와 예방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농업안전보건센터를 지정하여 지원(개소당 300백만원)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농업인 농약중독 질환과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조사·연구가 실시되도록 2개소를 추가 지정하였고, 2015년에는 농업인 손상 발생에 대한 연구를 위해 1개소를 추가 지정하였다.

2015년 까지 농업인 전문 질환에 대한 연구결과 과수농가의 상지근골격계 질환 유병률 등 특정분야 농업인의 유병률 및 농작업과의 상관관계 일부를 규명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2016년에는 센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2014년 지정된 센터에 대하여 3개년 사업추진 실적평가를 추진하였으며, 131개마을 44백명 농업인 대상 ‘찾아가는 무료 건강검진’을 개시하여 농업인에게 실제 체감으로 다가가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향후에도 농업인의 직업성 질환에 대한 조사·연구 및 예방교육 활동 등과 더불어 도서·벽지 고령농업인을 위한 진료서비스 추가 제공 등을 통해 농업안전보건센터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표 2-1-55 농업안전보건센터 진료서비스 확대

(단위:개소)

구 분	2013	2014	2015	2016	총계
농업안전보건센터 진료 서비스 확대(누적)	-	-	1	2	3

표 2-1-56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현황

지정기관	연구 주제	지정시기
강원대 농업안전보건센터	농작업 허리질환	2013년
조선대 농업안전보건센터	농업인 무릎관절염 질환	2013년
경상대 농업안전보건센터	농업인 상지 근골격계 질환	2013년
단국대 농업안전보건센터	농약중독 질환	2014년
동국대 농업안전보건센터	농업인 감염성 질환	2014년
제주대 농업안전보건센터	농업인 손상감시체계 구축	2015년

(5)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교통사고를 심층적으로 분석, 원인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도로구조,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대시설물 등 주변 교통환경을 정비·개선함으로써 교통사고를 감소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해 왔다.

제1~5차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결과, 13,865개소를 개선하였고, 2012년부터 시작된 제5차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계획에 따라 2012년에 272개소(279억원), 2013년 267개소(299억원), 2014년에 139개소(114억원), 2015년에 78개소(48억원), , 2016년에는 33억원을 투입하여 52개소를 개선·정비하였다.

2017년부터 제6차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계획에 따라 102개소(106억원)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2010년부터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불필요하게 신호대기 시간이 길고 신호통제성이 낮은 교차로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2010년 87개소(172억원), 2011년 97개소(250억원), 2012년 85개소(184억원), 2013년 96개소(260억원), 2014년 54개소(146억원), 2015년 24개소(67억원), 2016년 18개소(50억원)를 설치하였으며, 2017년에는 65억원을 투입하여 23개소의 회전교차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표 2-1-57 최근 3년간 사업효과

(단위: 건, %)

세부추진과제	‘14년			‘15년			‘16년		
	개선전	개선후	효과	개선전	개선후	효과	개선전	개선후	효과
교통사고 잦은 곳	2,871	1,721	40.1	3,579	2,020	43.6	2,116	1,338	36.8
회전교차로 설치	116	71	38.8	100	52	48	65	27	59

②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보·차도 분리, 보도 단절구간 연결, 보행 장애물 제거 등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

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565억원(국비 2,283억원)을 투자하여 191개소를 정비하였다.

2013년에는 52개소에 618억원(국비 309억원)을 투자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였으며 특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2012년 8월)에 따라 보행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사업방식을 기존의 선개념에서 지구개념으로 전환하고 공모를 통해 '보행환경 개선지구 시범사업' 10개소를 추진하였다. 공모사업은 교통·안전·도시계획·시민단체 등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된 '보행사업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함으로써 객관성, 전문성,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더욱 신중을 기하였다.

2014년에는 378억원(국비 189억원)을 투자하여 공모사업 18개소와 일반사업 2개소를 정비하였고, 2015년에는 308억원(국비 154억원)을 투자하여 공모사업 10개소와 일반사업 4개소를 정비하였다. 2016년에는 246억(국비123억)을 투자하여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14개소의 안전한보행환경 조성지구를 정비하였으며, 2017년에는 106억(국비53억)을 투자하여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8개소의 안전한보행환경 조성지구를 정비할 계획이다.

표 2-1-58 최근 3년간 사업효과

(단위: 건, %)

세부추진과제	'14년			'15년			'16년		
	개선전	개선후	효과	개선전	개선후	효과	개선전	개선후	효과
안전한보행환경조성	435	197	54.7	263	162	38.4	37	28	24.3

(6) 소하천정비

소하천은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지 않은 하천 중 평균하폭 2미터 이상, 연장 500미터 이상의 하천이 지정 대상이며, 전국적으로 22,823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수해위험이 높은 미 정비된 소하천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4,223억원(국비 2,115, 지방비 2,108)을 투입하여 504개소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였다.

소하천정비는 과거 치수중심의 단면 확장 및 제방축조로 자연하천 고유기능 상실, 획일적 소하천 직선화 정비로 하류지역 홍수피해 부담 가중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

였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0년부터 아름답고 안전한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에는 전국에서 공모한 52개 소하천을 대상으로 1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서면심사, 현장심사, 최종심사)를 거쳐 14개 지구를 선정하였으며,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기관표창과 ‘17년 소하천 정비에 필요한 국비 89억원을 추가로 지원하였다.

국민안전처에서는 매년 공모전을 통해 아름답고 안전한 소하천을 선정하고 이를 홍보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천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과 생활공간이 조화된 소하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3절 지역 중심지 활력 증진

1. 지역 중심지 활력 증진

(1)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농촌중심지¹³⁾에 대한 정책은 1972년부터 소도읍가꾸기, 소도읍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해 오던 행정자치부가 2003년부터 읍급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소도읍육성사업을 도입하면서 본격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면소재지를 대상으로 하는 거점면 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을 도입함에 따라 이원적으로 추진되었다. 이후 2010년부터 기초생활권 발전정책과 포괄보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일반농산어촌지역, 특수상황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 등의 지역유형별 주관부처에 의해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그 중심지 정비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일반농산어촌지역에 있어서 농촌중심지 관련 정책·사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읍(동)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등 308지구를 추진하여 읍·면의 기초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서비스 기능을 확충하였다. 다만, 사업이 농촌중심지 체계상의 위계 및 기능과 관련성이 낮고, 도로 및 시가지 정비 등 H/W 중심 추진으로 활성화의 한계에 부딪혔다. 또한, 新지역발전 핵심시책인 중심지 활력 증진 등을 통한 ‘지역행복생활권’ 정책과 농촌 지역개발정책 개편(2013년 12월)을 통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정책화하였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농촌 중심지를 그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고 농촌 중심지를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연결 거점으로서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기능은, ①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의 중심지, ② 배후 농촌마을의 발전을 선도하는 발전 거점, ③ 도시와 농촌을 매개하는 교통·정보 결절, ④ 학교·지역사회단체·공공시설 등이 집중된 지역공동체 활동의 거점이다.

13) 농촌 중심지 : 도농복합시와 군지역의 읍·면소재지 중에서 주민들에게 교육·문화·복지 등 일상생활 서비스의 공급 중심지 및 경제활동과 지역공동체 활동의 거점 역할을 하는 곳이다.

표 2-1-59 주민만족도

(단위: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비고
주민만족도	80.5	81.1	81.8	82.1	

그림 2-1-6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개요



농촌 중심지의 활성화를 통해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생활권 구현을 목표로 하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4가지 전략은 다음과 같다. ① 농촌 주민의 생활서비스의 원활한 증축, ② 농촌 경제활동의 다각화 및 새로운 경제 활력 창출, ③ 공동체 활동 거점기능의 강화, ④ 고유 자원의 보전 및 활용 등이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추진방식은, [추진체계]→[계획수립]→[통합적 접근]→[투자 효율성]→[계획적 투자]의 단계로 추진되며 각 단계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추진체계]거버넌스(읍면발전협의회, 추진위원회, 총괄계획가)의 확장 및 역할강화, ② [계획수립]주민주도형 농촌 중심지 활성화 계획 수립, ③ [통합적 접근]타 사업·계획과 연계한 장소중심 통합적 접근, ④ [투자 효율성]개별 중심지별 테마 중심으로 투자 집중, ⑤ [계획적 투자]선택과 집중으로 중심지 선정 및 계획에 반영 등이다.

2015년도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개편한 후 처음으로, 선도지구 15개 지구 11,374백만원, 일반지구 63개 지구 31,131백만원을 지원, 2016년도에는 선도지구 32개

지구 29,833백만원, 일반지구 131개 지구 73,679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도에도 선도지구 49개 지구 51,540백만원, 일반지구 218개 지구 163,956백만원을 지원하여 농촌 주민의 생활서비스 증진 및 경제 활력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2)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그 동안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은 2007년부터 매년 1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자체나 마을에 사업비의 50%를 보조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시범도시 7개소, 시범마을 16개소 및 성공모델지원사업 3개소에 144억원을 지원하였다. 이와 관련 지역발전위원회(옛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광역화·특성화를 기조로 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을 수립·추진하였다(균특법 개정, 2009년 4월 22일).

이에 따라 2010년부터는 국토교통부 소관사업인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포함하여 타 부처에서 추진해 오던 전원마을 조성, 농촌생활환경정비, 어촌종합개발 사업 등 17개 시·군·구 자율 편성 사업을 통합하여 국토교통부 책임 하에 “포괄보조금 지원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따라 지자체 스스로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 도시활력증진지역 99개 지자체(특·광역시 군·구, 인구 50만 이상 시지역 등)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도시 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 및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함으로써 도시환경의 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활력증진 및 지역 커뮤니티 복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도시활력증진지역에 연평균 약 1,000억원을 지원하였다.

‘16년부터 도시활력증진지역 대상을 143개 지자체(특·광역시 군·구 및 일반시, 도농복합시의 동지역)로 확대하였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이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에 통합되어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일반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의 5개 내역사업으로 개편하고, 1,452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표 2-1-60 연도별 예산 지원액

(단위 : 백만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101,337	96,400	96,396	108,597	103,167	104,167	145,167
계속사업	86,396	83,608	85,996	91,850	84,862	91,788	135,550
신규사업	14,941	12,792	10,400	16,747	18,305	12,379	9,617

표 2-1-61 도시활력증진지역 현황 (143개 시·군·구)

구 분	개 수	도 시 명
서울	25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부산	16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대구	8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인천	8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광주	5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	5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	5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경기	22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평택시,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강원	6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충북	3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충남	8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전북	6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전남	5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경북	10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경남	8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세종	1	세종시
제주	2	제주시, 서귀포시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일반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도시생활환경개선, 지역역량강화 5개의 내역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다. 첫째,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은 공공의 선투자를 통해 민

간투자를 유발하여 민·관 합동으로 경제거점을 형성하고, 주변 노후 도시지역 등과 상생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둘째,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은 원도심 등 중심시가지의 행정·업무, 상업, 역사·문화·관광, 공공복지, 도심주거 등의 기능 증진과 회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셋째, 일반근린형 도시재생사업은 낙후된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공동체 회복하기 위한 사업이다. 넷째,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은 소규모 마을단위의 생활기반시설 확충, 거주환경 개선, 골목상권 개선 등과 함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다섯째, 지역역량강화 사업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지역주민 등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이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은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향상을 중심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주민 모두에게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의 틀과 질적 측면의 도시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경제성·효율성만을 중시한 도시정책에서 탈피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자체는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발전을 유도하여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주민 차원에서는 주민참여형 정책추진으로 수요자 지향형 도시정책을 촉발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기반시설 설치 위주 지원사업에서 지역자산(수변공간, 공·폐가, 특산물 등)을 활용한 지역맞춤형 활력증진사업으로 전환하여 주민들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하였다.

표 2-1-62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절차도

절차	주관부서	내용
예산신청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 마련(→ 중앙, 광역시·도)
	↓	
	국토교통부	예산신청가이드라인 마련, 지자체 교육
	↓	
	시·군·구	예산신청
	↓	
	시·도	예산신청서 취합 제출(→ 국토부)
예산배분	국토교통부	예산신청 신규사업제안서 설명회 (지자체 : 사업제안 설명, 국토부 : 평가위원회 평가)
	↓	
	국토교통	예산신청 검토의견서 및 예산배분 요청(→ 기재부)
	↓	
	기획재정부	지자체별 예산배분
	↓	
	시·도, 시·군·구	지자체 매칭 차년도 예산반영
사업계획 수립	국토교통부	사업계획수립 가이드라인 마련
	↓	
	시·군·구	사업계획 수립
	↓	
	시·도	사업계획서 취합 제출(→ 국토부)
사업수행	시·도, 시·군·구	사업 착공보고(→ 국토부)
	↓	
	국토교통부	사업추진 관리 및 지원
	↓	
	시·도, 시·군·구	사업 완료보고
사업평가	시·군·구	사업성과 자율평가 및 평가보고서 제출
	↓	
	시·도	자율평가 보고서 취합 제출(→ 지역위)
	↓	
	국토교통부	추진실적 검토의견 제출(→ 지역위))
	↓	
	지역발전위원회	사업성과 평가
	↓	
	기획재정부	인센티브 결정, 차년도 예산반영

표 2-1-63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 현황(2016년도)

지자체		내역사업	세부사업(230개 사업)
광역시	기초		
강원	태백	근린재생 일반형(도시재생)	태백 통리지역 도시재생선도 사업
강원	춘천시	근린재생 일반형(도시재생)	호반도시 춘천, 소양 관광문화마을/열린장터 만들기 사업
경기	부천시	도시경제기반형(도시재생)	수도권 창조경제의 거점 부천 허브렉스
경기	수원시	근린재생 일반형(도시재생)	세계문화유산을 품은 수원화성 르네상스
경기	성남시	근린재생 일반형(도시재생)	아직도 뜻있는 주민들이 함께 만드는 언덕 위 태평성대 도시재생사업
경기	부천시	근린재생 일반형(도시재생)	성주산을 품은 주민이 행복한 마을
경남	창원시	근린재생 중심사거지형(도시재생)	천년항구 마산포 르네상스 사업
경남	김해시	근린재생 중심사거지형(도시재생)	가야문화와 세계문화가 상생하는 문화평야 김해
경북	영주시	근린재생 중심사거지형(도시재생)	'영주 역전, 역전 사업
경북	김천시	근린재생 중심사거지형(도시재생)	자생과 상생으로 다시 뛰는 심장. 김천 원도심!
경북	안동시	근린재생 중심사거지형(도시재생)	재생두레를 통한 안동웅부 재창조계획
광주	동구	근린재생 중심사거지형(도시재생)	문화전당과 함께하는 상가활성화
광주	광산구	근린재생 일반형(도시재생)	전통의 맛과 멋이 한미당 되는 활기찬 광주송정역세권 재생
광주	서구	근린재생 일반형(도시재생)	오감따라 천따라 마을따라, 오천마을 재생 프로젝트
대구	남구	근린재생 일반형(도시재생)	꿈을 이야기하다, 대명 행복 문화마을 조성사업
대구	서구·북구	도시경제기반형(도시재생)	"경제·교통·문화 Hub" 조성을 통한 서대구 재창조
대구	서구	근린재생 일반형(도시재생)	오늘의 신화와 문화가 살아있는 원고개 날뫼마을
대전	중구·동구	도시경제기반형(도시재생)	원도심 쇠퇴의 상징에서 희망의 공간으로
부산	동구	도시경제기반형(도시재생)	원도심 재창조를 위한 창조경제 플랫폼 구축사업
부산	영도구	근린재생 중심사거지형(도시재생)	영도대통전수방(大通傳授房) 프로젝트
부산	중구	근린재생 일반형(도시재생)	보수 Plus: 책방골목과 언덕배기, 보수동 사람들
부산	서구	근린재생 일반형(도시재생)	내일을 꿈꾸는 비석문화마을 아미·초장 도시재생프로젝트
부산	강서구	근린재생 일반형(도시재생)	낙동강과 김해평야의 관문 신장로 전원교향곡
서울	종로구	근린재생 중심사거지형(도시재생)	창신·송인 뉴타운해제지역 도시재생 사업
서울	도봉구·노원구	도시경제기반형(도시재생)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도시재생사업
서울	구로구	근린재생 일반형(도시재생)	G-valley를 품고 더하는 마을 가리봉
서울	용산구	근린재생 일반형(도시재생)	서울 용산구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울산	중구	근린재생 중심사거지형(도시재생)	울산, 중구로다(中具路多)
울산	동구	근린재생 일반형(도시재생)	방어진항 재생을 통한 원점지역 재창조사업
울산	북구	근린재생 일반형(도시재생)	노사민의 어울림, 소금포 기억 되살리기
인천	중구·동구	도시경제기반형(도시재생)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지자체		내역사업	세부사업(230개 사업)
광역시	기초		
인천	강화군	근린재생 일반형(도시재생)	왕의 길을 중심으로 한 강화 문화 가꾸기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전남	목포시	근린재생 중심사업(지역도시재생)	목포시 도시재생(선도지역)사업
전남	순천시	근린재생 일반형(도시재생)	자연을 씨줄과 문화의 날줄로 엮어내는 천가지로
전남	나주시	근린재생 일반형(도시재생)	나주읍성 살아있는 박물관도시 만들기
전북	군산시	근린재생 중심사업(지역도시재생)	내항지구와 연계한 근대역사문화지구 활성화 사업
전북	전주시	근린재생 중심사업(지역도시재생)	전주,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
전북	남원시	근린재생 일반형(도시재생)	문화,예술로 되살아나는 도시공동체 "죽동
제주도	제주도	근린재생 중심사업(지역도시재생)	같이 두드림 다시 올레!
충남	천안시	근린재생 일반형(도시재생)	천안 원도심, 복합문화 특화거리
충남	공주시	근린재생 일반형(도시재생)	백제왕도의 숨결이 살아있는 이야기길 만들기
충북	청주시	도시경제기반형(도시재생)	산업기능 이전적지를 활용한 창조경제 중심지구 조성
충북	충주시	근린재생 중심사업(지역도시재생)	충주 원도심, 문화창작도시으로 도약
충북	제천시	근린재생 중심사업(지역도시재생)	응답하라 1975! 힐링재생 2020!
강원	동해시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	빈집정비사업
강원	동해시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	햇빛 어울거리 조성
강원	속초시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	제3단계주거환경개선사업(금호3지구)
강원	속초시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	사람을 그리워 하는 아바이 마을 희망가꾸기
경기	광명시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	소하동 구도심 행복한 우리 마을 만들기
경기	남양주시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	남양주그린베이스조성사업
경기	남양주시	도시생활환경개선	주민참여를 통한 내각마을 재생사업
경기	남양주시	도시생활환경개선	도심속군장마을 활활 재생 프로젝트
경기	부천시	도시생활환경개선	원도심문화복합기초시설'판타박스'조성
경기	부천시	도시생활환경개선	사람중심도시 문화플랫폼 조성사업
경기	부천시	도시생활환경개선	부천시원미공원(역곡지구) 조성
경기	성남시	도시생활환경개선	행복 UP 활력 UP "DAN(丹)"
경기	수원시	도시생활환경개선	거북시장(느림보타운)조성재래시장활성화사업
경기	수원시	도시생활환경개선	매산동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경기	수원시	도시생활환경개선	파장초등학교 주변 안전마을 만들기
경기	시흥시	도시생활환경개선	재생,도시에 활력을불어넣다
경기	시흥시	도시생활환경개선	ART&ECOCUBEProject
경기	시흥시	도시생활환경개선	등기소~하상동간 종단선형 개량공사
경기	시흥시	도시생활환경개선	도일, 그 되살림의 이야기
경기	안양시	도시생활환경개선	명학공원 산책로 포장정비

지자체		내역사업	세부사업(230개 사업)
광역시	기초		
경기	안양시	도시생활환경개선	나”로부터 시작하는 건강한 인덕(仁德)마을
경기	오산시	도시생활환경개선	테마가 있는 오뎬장터 만들기
경기	오산시	도시생활환경개선	남촌마을 맞춤형정비사업
경기	용인시	도시생활환경개선	낙후된농촌지역생활환경정비
경기	용인시	도시생활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사업, 마평1구역
경기	의정부시	도시생활환경개선	추동 ‘웰빙 공원’ 조성사업
경기	화성시	도시생활환경개선	기계화경작로확포장
경기	화성시	도시생활환경개선	농촌생활환경정비
경기	화성시	도시생활환경개선	소규모옹수개발
경기	화성시	도시생활환경개선	어촌종합개발사업
경남	김해시	도시생활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사업(어방구역)
경남	김해시	도시생활환경개선	진영소도읍재활사업
경남	김해시	도시생활환경개선	진영좌곤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경남	창원시	도시생활환경개선	행복의창 만들기
경남	창원시	도시생활환경개선	노후주거지재생기반확충사업
경남	창원시	도시생활환경개선	에코뮤지엄시티진해
경남	창원시	도시생활환경개선	월영광장조성사업
경남	창원시	도시생활환경개선	월영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경남	창원시	도시생활환경개선	창원들녘지표수보강개발사업2단계
경북	영주시	도시생활환경개선	구성 노인안전 돌레마을 조성사업
경북	포항시	도시생활환경개선	포항원도심재생사업
경북	포항시	도시생활환경개선	기계화경작로확포장
경북	포항시	도시생활환경개선	농촌생활환경정비
광주	남구	도시생활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사업(양림학강)
광주	남구	도시생활환경개선	푸른길공원주변도시재생
광주	남구	도시생활환경개선	농촌생활환경정비
광주	남구	도시생활환경개선	월산덕림 주거환경개선사업(달뎬 공동체 마을 조성)
광주	동구	도시생활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사업(지원4구역)
광주	동구	도시생활환경개선	농촌생활환경정비
광주	동구	도시생활환경개선	지표수보강개발
광주	동구	도시생활환경개선	학운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광주	북구	도시생활환경개선	천지인문화소통길조성
광주	북구	도시생활환경개선	도동 풍물마을 만들기

지자체		내역사업	세부사업(230개 사업)
광역시	기초		
광주	서구	도시생활환경개선	지표수보강개발
광주	서구	도시생활환경개선	마록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광주	광산구	도시생활환경개선	기계화경작로확포장
광주	광산구	도시생활환경개선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광주	광산구	도시생활환경개선	농촌생활환경정비
광주	광산구	도시생활환경개선	지표수보강개발
광주	광산구	도시생활환경개선	도산7통 주거환경개선사업
광주	광산구	도시생활환경개선	서동주거환경개선사업
대구	남구	도시생활환경개선	2000배행복마을만들기
대구	남구	도시생활환경개선	마음을 연결하는 앞산 행복마을
대구	동구	도시생활환경개선	농촌생활환경정비(동구)
대구	동구	도시생활환경개선	안심창조밸리조성사업
대구	동구	도시생활환경개선	천연기념물 ONE 도동문화마을 조성사업
대구	북구	도시생활환경개선	농촌생활환경정비(북구)
대구	북구	도시생활환경개선	연암 서당골 여·행
대구	북구	도시생활환경개선	라 스타트 칠성, “별별 상상” 여·행
대구	서구	도시생활환경개선	행복한날외골만들기
대구	중구	도시생활환경개선	남산화원둘레길조성
대구	중구	도시생활환경개선	술술술,빨간구두속보물찾기
대구	중구	도시생활환경개선	남산대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대구	중구	도시생활환경개선	동인·삼덕지구 생태·문화 골목길 조성사업
대구	달서구	도시생활환경개선	“레드블록”젊음과다문화를담은원룸촌재창조
대구	달서구	도시생활환경개선	미로마을 조성 사업
대구	달서구	도시생활환경개선	Red & Green carpet project [성서아울렛타운 활성화 사업]
대구	달성군	도시생활환경개선	기계화경작로확포장
대구	달성군	도시생활환경개선	농촌생활환경정비(달성군)
대구	달성군	도시생활환경개선	도동복합문화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 “창조문화비람 Hidden 현풍”
대구	달성군	도시생활환경개선	하빈PMZ평화기념마을 조성
대구	수성구	도시생활환경개선	농촌생활환경정비(수성구)
대구	수성구	도시생활환경개선	수성 명품단독주택지 조성사업
대구	수성구	도시생활환경개선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
대전	동구	도시생활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사업(대동3구역)
대전	동구	도시생활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사업(홍도구역)

지자체		내역사업	세부사업(230개 사업)
광역시	기초		
대전	중구	도시생활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사업(보문3구역)
대전	중구	도시생활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사업(보문1구역)
대전	중구	도시생활환경개선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
대전	대덕구	도시생활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사업(장동,육골구역-계속)
대전	유성구	도시생활환경개선	농촌생활환경정비
부산	남구	도시생활환경개선	문현터널 상부공간 연결 공원화 사업
부산	동구	도시생활환경개선	산복도로초량동마을활력증진사업
부산	동구	도시생활환경개선	가마외마을 재생사업
부산	서구	도시생활환경개선	대학캠퍼스&임시수도로재창조
부산	서구	도시생활환경개선	아미4 주거환경개선사업
부산	중구	도시생활환경개선	큰마루터기상사업
부산	중구	도시생활환경개선	원도심국가임시수도 상징거리 조성사업
부산	중구	도시생활환경개선	영화 메모리얼 스트리트 조성
부산	강서구	도시생활환경개선	금수현거리조성사업
부산	금정구	도시생활환경개선	농촌생활환경정비
부산	금정구	도시생활환경개선	금정구 부산대학교 일원 주거지 재생사업
부산	기장군	도시생활환경개선	농촌생활환경정비
부산	부산진구	도시생활환경개선	수정터널상부공간연결사업
부산	부산진구	도시생활환경개선	범천2 주거환경개선사업
부산	부산진구	도시생활환경개선	당감 행복한 마을 만들기
부산	부산진구	도시생활환경개선	부암동 철길마을 메디컬 빌리지 조성사업
부산	사상구	도시생활환경개선	사상광장로 가로환경개선사업
부산	사상구	도시생활환경개선	온골마을 철로변 소통 프로젝트
부산	사상구	도시생활환경개선	엄궁동 통통길 조성사업
부산	사하구	도시생활환경개선	지성이면감천문화마을조성사업
부산	사하구	도시생활환경개선	다대동 창조 커뮤니티 존 조성
부산	수영구	도시생활환경개선	응답하라! 수영 팔도 이야기 : 좌수영성 일원 재창조 사업
부산	영도구	도시생활환경개선	봉래길보행환경개선사업
부산	영도구	도시생활환경개선	흰여울 문화마을 재생 프로젝트
부산	해운대구	도시생활환경개선	반송창조문화그린웨이조성
부산	해운대구	도시생활환경개선	반여동 이야기가 있는 무지개길 조성
서울	강서구	도시생활환경개선	살기좋은 개화마을 만들기
서울	중구	도시생활환경개선	중심도심거리 활극

지자체		내역사업	세부사업(230개 사업)
광역시	기초		
서울	구로구	도시생활환경개선	구로디지털단지도시생활성화를위한가로경관개선사업
서울	구로구	도시생활환경개선	오류 행복마을 조성사업
서울	마포구	도시생활환경개선	경의선(선형의 숲)공원 조성사업
서울	성북구	도시생활환경개선	천사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서울	성북구	도시생활환경개선	샬터, 쉼터, 공동체가 공존하는 살기좋은 안전마을
서울	서대문구	도시생활환경개선	홍제권 리빙랩기반 의료산업특화 및 주민건강증진사업
서울	용산구	도시생활환경개선	취약지역 도시재생을 위한 기초생활기반 확충
울산	남구	도시생활환경개선	남산근린공원수변광장조성
울산	남구	도시생활환경개선	선암지구 생활환경개선사업
울산	동구	도시생활환경개선	방어진항 국제건축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울산	북구	도시생활환경개선	호계지구 주거지재생
울산	중구	도시생활환경개선	달빛누릿길조성사업
울산	중구	도시생활환경개선	함월드림게이트
울산	중구	도시생활환경개선	이야기와 숨쉬는 공간의 만남 조성사업
울산	울주군	도시생활환경개선	어촌종합개발사업
인천	남구	도시생활환경개선	인천 남구 제물포 역세권 활성화사업
인천	동구	도시생활환경개선	화수부두 주변 수산 관광발전 기반시설 확충
인천	서구	도시생활환경개선	신현동회화나무주변구역 저층주거지관리사업
인천	중구	도시생활환경개선	담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 사업
인천	계양구	도시생활환경개선	계양지구 농촌생활환경정비
인천	남동구	도시생활환경개선	소래구역기반시설 확충사업
인천	남동구	도시생활환경개선	주거밀집지역 주차공간조성사업 (문화서로, 용천로)
인천	부평구	도시생활환경개선	서부간선수로 경관개선 보강사업
인천	연수구	도시생활환경개선	농원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
전남	목포시	도시생활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사업(만호구역)
전남	목포시	도시생활환경개선	근대역사테마길조성
전남	순천시	도시생활환경개선	동외동지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전북	전주시	도시생활환경개선	천사마을가꾸기사업
전북	전주시	도시생활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사업(강당재구역)
전북	전주시	도시생활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사업(풍남초교인근)
전북	전주시	도시생활환경개선	보행중심 테마거리 조성사업
전북	전주시	도시생활환경개선	동산동 우리마을 가꾸기 사업
제주	서귀포시	도시생활환경개선	중문동 회수지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지자체		내역사업	세부사업(230개 사업)
광역시	기초		
제주	제주시	도시생활환경개선	이호동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충남	천안시	도시생활환경개선	명동거리활성화조성사업
충남	천안시	도시생활환경개선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장면)
충남	천안시	도시생활환경개선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풍세면)
충남	천안시	도시생활환경개선	중앙거리 활성화 조성사업
충북	청주시	도시생활환경개선	안덕벌 예술의거리 상권활성화 사업
충북	청주시	도시생활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사업(영운구역)
충북	청주시	도시생활환경개선	문화예술특성화를위한중앙동상권활성화사업
충북	충주시	도시생활환경개선	녹색쉼터 서흥 창조적 마을만들기
강원	태백시	지역역량강화	도롱골 산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경기	과천시	지역역량강화	「과천에서 행복하게 더 살지」 프로젝트
경기	남양주시	지역역량강화	마을활력발전소'학습등대'
경기	부천시	지역역량강화	움직이는 문화공간 3.0
경기	수원시	지역역량강화	희망수원의창조경제일자리거버넌스구축
경기	시흥시	지역역량강화	천지인마을만들기
경기	안산시	지역역량강화	사이좋은 사2동 마을만들기
경기	안산시	지역역량강화	세월호 피해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경기	안양시	지역역량강화	사람중심의 소프트파워로 날자
경기	오산시	지역역량강화	배우면서가르치는숨쉬는교육도시조성
경기	오산시	지역역량강화	행복한다문화가족구현
경남	밀양시	지역역량강화	용평 창조적 마을만들기
경남	사천시	지역역량강화	구미마을 창조적 마을만들기
경남	창원시	지역역량강화	마을학교 운영
광주	남구	지역역량강화	오카리나주민참여형크로스컬처문화복지도시조성
광주	남구	지역역량강화	지역경제순환형 공동체 일자리 창출 및 CB&M을 디자인 축제
광주	광산구	지역역량강화	다시 쓰는 농촌, 일상·경험·마을을 더하는 '더하기 지구' 사업
대구	남구	지역역량강화	생생체험,창조드림피아
대구	달성군	지역역량강화	달성3색 문화창조 도시브랜드 구축
대전	서구	지역역량강화	사람과 자연이 만나는 행복한 갑천 만들기
서울	중구	지역역량강화	Urban Health City Community
울산	중구	지역역량강화	울산동백이 피는 온새미로 마당
울산	울주군	지역역량강화	금곡마을 '활력' 가득 사업
전남	순천시	지역역량강화	생태창조체험의 메카, 유유낙락 향림골 만들기

지자체		내역사업	세부사업(230개 사업)
광역시	기초		
전북	전주시	지역역량강화	원도심 지역공동체 주민주도 활성화계획 수립

제4절 지역 교통·물류망 개선

1. 전국 간선도로망 및 대도시권 교통완화를 위한 도로 구축

(1) 광역도로 건설

광역교통권역인 시·도간을 연결하는 도로는 지역간 접근이 편리하도록 도로기능을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으나 시·도간 이견 및 예산부족으로 도로확장, 개설, 포장 등 개선사업이 조속히 시행되지 못한 점이 있다. 그러므로 시·도간 접근성 편의를 제공하고 이동시간 단축 등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시·도간 연결도로의 확장 등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1997년 4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된 이후 단계별로 광역도로를 지정, 지자체간 의견을 조정한 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총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국비를 지원하는 등 광역도로 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표 2-1-64 광역도로 현황 및 소요사업비(총 72개)

구분	사업 수	연장거리	사업비
수도권 1차(1999~2003년)	18	61.83km	16,352억원
수도권 2차(2004~2008년)	11	50.76km	8,052억원
지방권 1차(2002~2006년)	15	88.46km	9,868억원
대도시권광역교통 1차(2007~2011년)	14	74.8km	14,426억원
대도시권광역교통 2차(2012~2016년)	9	47.1km	7,597억원
대도시권광역교통 3차(2017~2020년)	5	25.7km	7,541억원

광역도로로 지정된 총 72개 사업(348.7km)중 38개 사업(175.9km)을 2016년 12월 현재 완료하였고, 17개 사업(85.2km)은 2020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연차별 설계 및 공사를 시행중에 있다. 현재 미착수중인 17개 사업(87.6km)은 국가재정 및 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 등 지역의 여건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경제성이 확보될 경우

연차별로 착수해 나갈 예정이다.

사업효과를 조기에 실현하고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무엇보다 사업기간의 단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준공 예정사업과 추진이 원활한 사업에 예산을 적극 지원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예산부족으로 인해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예산확보를 위해 예산당국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광역교통권역인 시·도간 연결도로 중 교통정체 발생 등 서비스 수준이 저하된 도로에 대하여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광역도로를 지정하고,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서비스 수준 향상, 이동시간 단축, 물류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실현되어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표 2-1-65 광역도로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광역도로	2,305	2,472	1,492	1,483	1,322	779	826	663

(2)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국가지원 지방도는 지방도 중 주요 도시, 공항, 항만,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고속국도·국도로 이루어진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로서 1996년 처음 도입되었다. 국가지원지방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에서 노선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조사·설계를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건설재원의 경우 2015년 신규로 건설되는 사업부터 국가에서 공사비의 70%(2015년 이전 100%),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비의 30%와 보상비 및 유지관리비를 부담하고 있다.

국가지원 지방도는 도로법에 의거한 5년 단위의 중장기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제4차 국지도 건설 5개년('16~'20)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국가지원지방도는 1996년 사업을 착수한 이후 2014년까지 총 123건, 798km를 완료하였고, 2015년도에는 67건, 547km에 5,45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으며, 2016년도에

는 61건, 567km에 4,951억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다.

표 2-1-66 국가지원지방도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1996 ~ 2001 년	2003 년	2005 년	2007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국지도	14,047	5,600	5,426	6,039	5,865	6,285	5,943	6,072	6,404	5,442	5,450	4,951

(3) 제주구국도건설

제주지역 구국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지방국도관리청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2006년 7월)된 국도로써, '국도 대체우회도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1997년 9월)' 및 '제2차 국도건설 5개년(2006~2010년) 계획수립(2003년 12월)'에 의거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교통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본 사업은 제주지역 시내권 교통량 분산으로 도심지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제주 구국도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건설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다. 2009년까지 2,268억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에는 신촌-함덕 등 3개 사업(21.7km)에 2,350억원을 투자하여 준공·개통하였으며, 아라-회천 등 2개 사업(8.0km)에 1,765억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다.

표 2-1-67 제주도 구국도 건설 연차별 투자비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2009년 까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2,268	730	752	803	536	519	220	243
제주구국도건설	2,268	730	752	803	536	519	220	243

(4) 광주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

고속도로는 국가 간선교통망의 중추로서, 전국 차원에서 발생하는 교통수요를 충족

하고, 국민 이동성 보장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주요 국가교통시설이다. 고속도로 건설은 1968년 경부선 건설 이래 국가 및 한국도로공사가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 조사설계를 국가가 수행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건설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건설재원은 국가에서 공사비의 40%, 보상비의 100%를,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공사비의 60%를 부담하고 있다.

광주순환 고속도로는 급증하는 대도시권 교통량의 효과적인 수용 및 혼잡비용 감소를 통한 광주외곽지역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07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확보된 본량-진원 구간(B/C=1.05) 총 16.15km의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고속도로는 도로법에 의거한 국가도로종합계획(10년) 및 고속도로 건설계획(5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주순환 고속도로는 국토간선도로망계획(7×9+6R) 중 6R(6개 대도시 순환망)에 해당되는 노선으로 2014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5년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다.

표 2-1-68 광주순환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단위 : 억 원)

연 도	총사업비	2015년까지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예 산	2,216 (4,475)	384 (414)	320 (553)	502 (685)	1,009 (2,822)

주 : ()는 도로공사 부담분 포함

(5) 대구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

대구순환 고속도로는 급증하는 대도시권 교통량을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도시 교통과 지역간 교통을 분리하여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2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B/C=1.14)한 후 지천-상매 구간 총 32.4km의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국토간선도로망계획(7×9+6R) 중 6R(6개 대도시 순환망)에 해당되는 노선으로 2013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2014년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다.

표 2-1-69 대구순환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총사업비	2015년까지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예 산	7,002 (12,746)	3,195 (4,277)	1,348 (3,156)	1,001 (1,376)	1,448 (3,928)

주 : ()는 도로공사 부담분 포함

(6) 대도시권 광역환승센터 구축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간 연계성과 보완성이 부족하여 연계·환승 거리가 길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며, 특히 주요 환승 발생 지점 중심의 연계·환승 교통체계 구축이 미흡하여 대중교통 이용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하철, 버스 등 교통수단간 빠르고 편리한 환승이 이루어지도록 주요 환승 발생 지점에 교통특성을 고려한 대중교통 환승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 구축하고 있다.

서울 도봉산역(2013년), 경기 산곡2교(2013년), 부산 덕천역(2013년), 경기 송내역(2015년) 환승시설 완공하였으며, 수원 1개소, 오산 1개소, 부산 1개소 등 3개소를 구축 중에 있다. 이들 환승센터가 완공되면 통행자의 통행시간 및 환승시간 감소, 대중교통 이용객 흡수, 개인교통수단의 도심지 진입 억제 등으로 교통수요를 감소시켜 교통난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7) 돌산-화태 국도건설공사

국도77호선 미개통구간 연도교 건설로 해상에서 육상으로의 교통수단 전환을 통한 접근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간 운행거리 및 시간단축을 도모하고자 2002년 5월에 본 사업 추진이 계획되었다.

돌산-화태 구간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3년 2월에서 2004년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04년도에 사업을 착공하여 2015.12월에 개통하였다.

표 2-1-70 돌산-화태 국도건설공사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2015년까지	2016년	2017년	장래
돌산-화태	159,882	156,667	3,215	-	-

(8) 동해-삼척고속도로 건설사업

동해-삼척 고속도로는 강원권 관광사업 발달에 따른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응하고, 상대적으로 간선도로망 구축이 더딘 강원 북부권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2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여(AHP=0.652) 총 18.6km의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국토간선도로망계획(7×9+6R) 중 남북 7축(간성-부산)에 해당되는 노선으로 2008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9년 착공, 2016년에 개통하였다.

표 2-1-71 동해-삼척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총사업비	2015년까지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예 산	3,057 (5,995)	2,805 (5,348)	183 (494)	-	-

주 : ()는 도로공사 부담분 포함

(9) 거제-마산 국도

2006년 7월 경상남도는 지역균형발전과 남해안 관광산업활성화 차원에서 국도 5호선 연장조정을 건의하였으며, 2008년 11월 국도 5호선에 거제시 연초면~마산 월영동 구간을 포함하여 541.6km 연장 계획하였다.

2008년 9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마산-창원-거제를 연결하는 Ring Road를 구축하여 지역 연계 개발을 강화하고 산업클러스터 형성 등의 목적으로 본 사업을 광역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선정하였다.

거제-마산 구간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9년 6월에서 2012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2년도에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다.

표 2-1-72 거제-마산 국도건설공사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2015년까지	2016년	2017년	장래
계	374,035	151,353	45,461	39,660	137,561
거제-마산2	183,894	82,355	21,775	19,850	59,914
거제-마산3	190,141	68,998	23,686	19,810	77,647

(10) 부산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는 대도시권의 광역화, 부산 신행 개발에 따른 교통량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08년 30대 광역발전 선도프로젝트의 하나로 지정되어 진영-기장 구간 총 48.8km의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한다.

국토간선도로망계획(7×9+6R) 중 6R(6개 대도시 순환망)에 해당되는 노선으로 2010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2011년에 착공하여 2017년에 개통할 예정이다.

표 2-1-73 부산순환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총사업비	2015년까지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예 산	12,623 (23,001)	8,721 (13,691)	2,212 (5,320)	1,478 (3,684)	-

주 : ()는 도로공사 부담분 포함(12) 상주-영덕고속도로건설사업

(11) 상주-영덕고속도로 건설사업

상주-영덕 고속도로는 간선도로망 구축이 되어있지 않은 경북 북부 내륙과 동해권을 연결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북 북부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 30대 광역발전 선도프로젝트의 하나로 지정되어 상주-영덕 구간 총 107.6km의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국토간선도로망계획(7×9+6R) 중 동서 4축(당진-영덕)에 해당되는 노선으로 2009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0년 착공하여 2016년에 개통하였다.

표 2-1-74 상주-영덕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총사업비	2015년까지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예 산	12,849 (26,809)	10,455 (20,905)	2,239 (5,671)	-	-

주 : ()는 도로공사 부담분 포함

(12) 서남해안 연육교(압해-암태, 화양-적금)

신안군 도서지역 연결을 위한 국도 미개통구간의 연도교 건설로 해상에서 육상으로의 교통수단 전환을 통한 접근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간 운행거리 및 시간단축을 도모하고자 본 사업이 추진되었다.

압해-암태 구간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9년 3월에서 2010년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0년도에 사업 착공하여 사업 진행 중에 있다.

화양-적금 구간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10년 12월에서 2011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2년도에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다.

표 2-1-75 압해-암태, 화양-적금 국도건설공사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2015년까지	2016년	2017년	장래
합 계	938,622	478,425	135,833	159,248	165,116
압해-암태	563,869	313,900	72,029	98,834	79,106
· 1공구	261,275	165,618	29,411	36,855	29,391
· 2공구	302,594	148,282	42,618	61,979	49,715
화양-적금	374,753	164,525	63,804	60,414	86,010
· 1공구	73,591	30,774	11,731	9,670	21,416
· 2공구	102,581	40,255	16,162	17,976	28,188
· 3공구	143,321	67,654	26,136	19,677	29,854
· 4공구	55,260	25,842	9,775	13,091	6,552

(13) 영남-적금 국도

국도77호선 미개통구간 연도교 건설로 해상에서 육상으로의 교통수단 전환을 통한 접근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간 운행거리 및 시간단축을 도모하고자 2002

년 5월에 본 사업 추진이 계획되었다.

영남-적금 구간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3년 2월에서 2004년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04년도에 사업 착공하여 2016.12월에 개통하였다.

표 2-1-76 영남-적금 국도건설공사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2015까지	2016년	2017년	장래
영남-적금	277,483	267,164	10,319	-	-

(14) 울산-포항고속도로 건설사업

울산-포항 고속도로는 부산-울산 고속도로와 연계하여 부산항-울산공업단-포항을 연결하는 화물 수송로를 확보하고, 부산 신항 개발 등 지역개발 가속화에 따른 배후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해 2000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타당성을 확보(B/C=1.09)하여 울산-포항 구간 총 53.7km의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국토간선도로망계획(7×9+6R) 중 남북 7축(간성-부산)에 해당되는 노선으로 2009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0년 착공하여 2015년 양남터널 구간(11.6km)을 제외한 42.1km를 개통하였으며, 2016년에 전 구간(53.7km) 완전 개통하였다.

표 2-1-77 울산-포항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단위:억원)

연 도	총사업비	2015년까지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예 산	10,422 (20,117)	10,175 (19,498)	201 (502)	-	-

주 : ()는 도로공사 부담분 포함

(15) 월전-중군 국도

국도2호선 여수-순천간 국대도이며,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배후도로로서 목포-광양 고속도로, 여수-순천 도로와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지역균형 개발을 촉진하고자 본 사업이 추진되었다.

월전-중군은 월전-세풍, 세풍-중군 2개 구간으로 나뉘 추진되었으며, 월전-세풍은

2001년 착공, 2011년 준공하여 현재 개통 중에 있다.

세 풍-중군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3년 7월에서 2005년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06년도에 착공하여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다.

표 2-1-78 월전-중군 국도건설공사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2015년까지	2016년	2017년	장래
계	417,782	356,384	18,281	24,738	18,379
월전-세 풍	122,938	122,938	-	-	-
세 풍-중군	294,844	233,446	18,281	24,738	18,379

(16)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

수도권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수도권 광역화에 따라 급증하는 교통량에 대응하고, 정체가 심해지는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를 대체하는 순환축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김포-파주 구간 등 총 12개 구간 254.2km,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한다.

국토간선도로망계획(7×9+6R) 중 6R(순환2축)에 해당되는 노선이며, 구간별로 재정 사업 또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표 2-1-79 수도권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추진현황

(단위: 억 원)

노 선 명	현 황	노 선 명	현 황
오산-봉담	공용 중(민자, '09개통)	파주-포천	착공 예정(재정, '17)
봉담-송산	착공 예정(민자, '17)	포천-화도	착공 예정(민자, '17)
송산-안산	공용 중(민자, '13준공)	화도-양평	공사 중(재정, '14착공)
안산-인천	민자적격성검토 중	양평-양평	공용 중(재정, '12개통)
인천-김포	공용 중(민자, '17개통)	양평-이천	실시설계 중(재정)
김포-파주	착공 예정(재정, '17)	이천-오산	착공 예정(민자, '17)

(17) 주문진-속초고속도로 건설사업

주문진-속초 고속도로는 강원권 관광사업 발달에 따른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응하고, 상대적으로 간선도로망 구축이 더딘 강원 북부권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2008년 30대 광역발전 선도프로젝트의 하나로 지정되어 현남-속초 구간 총

43.4km의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한다.

국토간선도로망계획(7×9+6R) 중 남북 7축(간성-부산)에 해당되는 노선으로 2004년에 착공한 현남-하조대 구간은 2009년 개통하였고, 잔여구간(하조대-양양)은 2009년 착공하여 2016년에 개통하였다.

표 2-1-80 주문진-속초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총사업비	2015년까지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예 산	5,155 (9,482)	4,833 (8,642)	265 (699)	-	-

주 : ()는 도로공사 부담분 포함(19) 춘천-양양고속도로건설사업

(18) 춘천-양양고속도로 건설사업

춘천-양양 고속도로는 강원권 관광사업 발달에 따른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응하고, 수도권과 상대적으로 간선도로망 구축이 더딘 강원 북부권을 연결하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3년 타당성제조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B/C=1.44)한 후 춘천-양양 구간 총 88.8km의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한다.

국토간선도로망계획(7×9+6R) 중 동서 8축(인천-양양)에 해당되는 노선으로 2004년 착공한 춘천-동홍천 구간은 2009년 개통하였고, 2008년 착공한 동홍천-양양 구간은 2017년에 개통할 예정이다.

표 2-1-81 춘천(동홍천)-양양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총사업비	2015년까지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예 산	11,586 (24,182)	9,225 (18,351)	1,649 (4,110)	650 (1,644)	-

주 : ()는 도로공사 부담분 포함

(19) 포항-영덕고속도로 건설사업

포항-영덕 고속도로는 동해안 종축 노선 구축을 통해 동해안권 도로망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 30대 광역발전 선도프로젝트의 하나로 지정되어 포항-영덕 구간 총 30.9km의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

한다. 국토간선도로망계획(7×9+6R) 중 남북 7축(간성-부산)에 해당되는 노선으로 2015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6년 하반기 착공하였다.

표 2-1-82 포항-영덕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총사업비	2015년까지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예 산	5,641 (12,853)	380 (395)	453 (1,109)	879 (879)	3,929 (10,470)

주 : ()는 도로공사 부담분 포함

(20) 함양-울산고속도로 건설사업

함양-울산 고속도로는 간선도로망 구축이 되어있지 않은 경남 북부 내륙과 동해권을 연결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남 북부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 30대 광역발전 선도프로젝트의 하나로 지정되어 함양-울산 구간 총 107.6km의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한다.

국토간선도로망계획(7×9+6R) 중 동서 2축(함양-울산)에 해당되는 노선으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밀양-울산 구간은 2014년 착공, 창녕-밀양 구간은 2016년 착공하였으며, 함양-창녕 구간은 2017년 착공할 계획이다.

표 2-1-83 함양-울산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총사업비	2015년까지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예 산	26,663 (60,402)	3,485 (4,699)	1,529 (3,184)	2,143 (3,138)	19,506 (49,382)

주 : ()는 도로공사 부담분 포함

(21) 화양-소라간 국지도확포장사업

화양-소라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은 국지도22호선으로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에서 소라면 덕양리를 연결하며 현재 공사 시행중인 국도77호선 화양-적금 국도 확포장공사와 연결되는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로서 2009년 10월에 착공하였다.

화양-소라간 사업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5년 12월에서 2008년 8월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09년도에 전라남도에서 2개 구간(화양-나진 10.24km, 나진-소라 11.64km)으로 사업 발주하여 착공하였다.

2009년 사업착공 이후 2015년까지 국비 130,174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27,000백만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다.

표 2-1-84 화양-소라 국가지원지방도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총사업비(국고)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장래
계	194,370	4,213	16,600	23,976	23,600	24,785	22,600	14,400	27,000	37,196
화양-나진	103,972	2,107	8,300	11,279	9,500	11,785	14,500	8,100	18,000	20,401
나진-소라	90,398	2,106	8,300	12,697	14,100	13,000	8,100	6,300	9,000	16,795

(22) 대도시권 혼잡도로 건설

고속도로, 국도 등 광역 교통시설의 지속적 확충으로 지역 간 교통난은 완화되고 있으나, 도시부 교통난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 기준으로 전국 교통혼잡비용의 63.8%가 도시부에서 발생 중이며, 도시부 비중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표 2-1-85 교통혼잡비용 추이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증가율 (%)
전국 교통 혼잡비용 (십억원)	계(A)	23,540	24,621	26,172	26,903	27,706	28,509	29,097	30,315	31,420	32,385	33,350	3.54
	지역간	9,094	9,180	9,684	9,881	10,064	10,436	10,742	11,130	11,418	11,737	12,057	2.86
	도시	14,446	15,441	16,488	17,022	17,641	18,073	18,355	19,185	20,002	20,647	21,293	3.96
GDP(B, 조원)		919.8	966.1	1,043.3	1,104.5	1,151.7	1,265.3	1,332.7	1,377.5	1,428	1,483	1,542	5.30
GDP 대비 비중 (A/B, %)		2.56	2.55	2.51	2.44	2.41	2.25	2.18	2.20	2.20	2.18	2.16	-

자료 : 2015년 전국교통혼잡비용 산출과 추이분석(교통연, 2015년)

이에 따라 2004년 7월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도시권 투자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다. 또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 수립 연구용역(2004년 1차

(2006~2010년), 2009년 2차(2011~2015년), 2016년 3차(2016~2020년), 교통연)을 시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 및 예산당국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동 기본계획에 따라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을 위하여 자치단체에 국고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2010년 1건(대구-포항고속도로 진입로), 2011년 1건(유등천좌안도로), 2013년 1건(상인-범물), 2014년 1건(신천좌안도로(상동교-가창)), 2015년 4건(울산국가산업단지 진입로, 울산대교, 일곡~용전, 제2창원터널), 2016년 1건(계백로우회도로)을 준공, 2016년 실시설계 5건(식만-사상, 상무-첨단, 문전교차로, 용두-담양, 동천제방 우안제), 예타 1건(월전동-무진로)을 추진 중에 있으며 9개 사업을 시행 중이다.

표 2-1-86 대도시권 혼잡도로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	427	311	335	456	1,158	1,290	1,423	778	950

(23) 거점지역(구 특정지역) 도로건설지원

1963년에 제정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근거하여 최초 특정지역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는 당시 우리나라는 경제개발을 추진하면서 에너지를 비롯한 기초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성장잠재력이 있고 개발효과가 큰 특정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국가 전체의 경제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거점개발방식의 채택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특정지역계획은 1963년 10월에 제정된 「국토건설종합계획법」과 1980년 1월에 제정된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랐으나(1993년 6월 11일, 백제 문화권지정), 국토의 균형적 개발촉진이용을 위하여 1994년 1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광역권개발계획 및 개발촉진지구제도가 도입되고, 특정지역제도는 폐지되었다. 이후 지방자치제의 발전으로 지역 간 연계개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소득수준의 향상과 함께 문화·관광분야 등에서 지역개발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성장거점방식의 광역권 개발계획, 낙후지역 개발수단인 개발촉진지구만으로 지역개발수요를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2002년 1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특정지역제도를 재도입하였으며, 백제 문화

권은 2010년 종료되어 운영되고 있다.

특정지역은 개발제도간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개발촉진지구의 지정면적(150㎢)과 광역개발권역의 지정면적(3,000~9,000㎢)인 점을 감안하여 그 중간규모인 500㎢이상으로 하고, 과도한 지정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시·도별 1개소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특정지역제도는 상기 근거법의 폐지와 지역개발지원법의 시행으로 거점형 지역개발계획으로 전환되었으며, 각 도별로 거점형 지역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상기 근거법에 따른 특정지역 8개 문화권에 대하여 접근교통망(연계도로), 문화유적 정비사업, 관광휴양시설 확충사업 등에 대해 소관 부처별 지원을 하고 있으며, 국토부에서는 2013년 156억원, 2014년 317억원, 2015년 560억원, 2016년 629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에는 549억원을 투입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표 2-1-87 특정지역 현황

명칭	지정지역	면적 (km ²)	지정일 (사업기간)	총사업비	주요사업
계		6,819.34		- 7조 9,925.2억원 · 국비 3조 5,999.3 · 지방비 2조 5,152.9 · 민자 1조 8773	- 총 275개 사업 · 역사문화자원정비(120) · 관광레저개발(77) · 기반시설 확충(67) · 정신문화창달 등 기타(11)
내포 문화권	충남 서산·보령·홍성·예산· 당진·태안·서천·아산	1,036.73	'04.12. 9 ('05 ~ '20)	- 6,404억원 · 국비 2,320 · 지방비 3,958 · 민자 125	- 총 63개 사업 · 정신문화창달(6) · 역사문화유적정비(41) · 관광휴양시설확충(6) · 기반시설확충(10)
영산강 유역고대 문화권	전남 나주·담양·화순·해남· 영암·무안·함평·장성	809.38	'05.12.30 ('06 ~ '15)	- 1조 1,301억원 · 국비 5,304 · 지방비 5,542 · 민자 455	- 총 42개 사업 · 문화재정비(9) · 문화유적 전승(10) · 관광휴양시설 확충(16) · 기반시설 설치(7)
해양농경 역사 문화권	전북 김제·정읍·부안·고창	1,066.43	'09.12.21 ('09 ~ '19)	- 7,213억원 · 국비 2,874 · 지방비 2,203 · 민자 2,136	- 총 30개 사업 · 역사문화자원정비(11) · 관광레저개발(17) · 기반시설 확충(2)
중원 문화권	충북 충주·제천·단양	975.75	'09.12.23 ('09 ~ '19)	- 1조 7,404억원 · 국비 8,617 · 지방비 3,756 · 민자 5,031	- 총 29개 사업 · 역사문화자원 복원·정비(8) · 관광자원 정비·조성(8) · 정주환경개선(2) · 기반시설(11)
동남내륙 문화권	울산	693.70	'10.6.17 ('10 ~ '19)	- 1조 536억원 · 국비 3,566 · 지방비 3,389 · 민자 3,581	- 총 25개 사업 · 역사문화자원 복원·정비(10) · 관광자원 정비·조성(5) · 정주환경개선 및 자연보전(3) · 기반시설 설치(7)
	경남 양산·밀양				
가야 문화권	대구	931.90	'10.12.24 ('10 ~ '19)	- 9,062억원 · 국비 6,541 · 지방비 2,330 · 민자 191	- 총 37개 사업 · 역사문화자원 복원·정비(16) · 관광자원 정비·조성(9) · 기반시설 설치(12)
	경북 고령·성주				
	경남 거창·합천·의령· 창녕·함안				
설악단오 문화권	강원 강릉·속초·고성·양양· 인제	536.94	'11.7.27 ('11 ~ '20)	- 1조 2,120억원 · 국비 4,073 · 지방비 1,283 · 민자 6,764	- 총 18개 사업 · 역사문화자원복원·정비(3) · 관광자원 정비·조성(5) · 도로·교통기반시설 설치(10)
임진강 평화문화 권	경기 김포·파주·연천 ·포천·동두천	768.51	'14.10.13 ('14 ~ '23)	- 5,886.2억원 · 국비 2,704.3 · 지방비 2,691.9 · 민자 490.0	- 총 31개 사업 · 역사문화자원복원·정비(12) · 관광자원 정비·조성(11) · 도로·교통기반시설 설치(8)

2. 전국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망 구축

(1) 광역철도 건설

수도권은 신도시 개발 등으로 대도시 생활권이 확대됨에 따라 교통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교통체증이 심화되는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장기 종합계획의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광역철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2007년 1월)을 통하여 5년 단위의 대도시 광역교통 시행계획수립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 계획과 지자체 계획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도로와 더불어 광역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접근 틀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되었다.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광역철도의 지원대상은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인천권, 광주권, 대전권 등 대도시권의 주민이며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교통시행계획에서 지정하며 사업별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국토교통부가 사업주체가 되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분을 분담하는 구조인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가와 지자체간 사업비 분담에 대한 이견이 있었으며, 광역화 추세에 미치지 못하는 표정속도와 획일적인 광역철도 연장 제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여 시대적 여건에 맞게 광역철도 건설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2013년 12월 30일 개정, 2014년 3월 31일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2014년 3월 28일 개정, 2014년 3월 31일 시행)을 개정하여 광역철도 사업비 분담비율을 개선하고, 광역철도 지정요건을 합리화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표 2-1-88 광역철도 제도개선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사 업 비 분담비율 개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비 75%, 지방비 25% ○ 지자체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비 60%, 지방비 40% (서울은 국비 40%, 지방비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비 70%, 지방비 30% ○ 지자체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비 70%, 지방비 30% (서울은 국비 50%, 지방비 50%)
광역철도 속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정속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km/h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정속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km/h 이상
광역철도 지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구간이 50km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도시권의 중심지*로부터 반경 40km이내일 것 * 수도권은 서울시청 또는 강남역, 부산·울산권, 대구권 등은 광역시청

앞으로도 광역철도는 단계별로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 주변의 광역철도망을 구축하여 철도의 수송분담률을 향상시킴으로써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하여 심화된 교통체증을 해소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광역철도로 지정된 사업은 중앙선(청량리-덕소) 등 19개 사업이며, 2022년까지 국비 17조 1,977억원을 투자하여 총 연장 630.1km를 구축할 계획으로 2015년까지 6조 8,763억원을 집행하는 등 광역교통난이 심각한 수도권을 위주로 광역철도 교통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광역철도 사업은 1993년 처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2005년 12월 개통한 중앙선(청량리~덕소, 18.0km)을 시작으로 2006년 12월 경원선(의정부~동안, 22.3km)을 개통하여 경기 동북부 지역인 동두천, 남양주, 양주시 권역을 전철 통근지역으로 넓혀나갔다.

표 2-1-89 광역철도사업현황

(단위 : km, 억원)

사 업 명	연장(km)	사업기간	총 사업비	기투입	2016년 예산	2017년 이후
계	630.1		171,977	68,763	5,873	97,341
청량리~덕소 복선전철	18.0	1993-2010 년	5,724	5,724	0	0
의정부~동안 복선전철	22.3	1995-2007	6,090	6,090	0	0

사 업 명	연장(km)	사업기간	총 사업비	기 투입	2016년 예산	2017년 이후
		년				
왕십리~선릉 복선전철	1.8	2000-2012 년	5,192	5,192	0	0
망우~금곡 복선전철	17.9	1997-2013년	4,653	4,653	0	0
신분당선(강남~정자)	18.5	2005-2011년	1,913	1,913	0	0
오리~수원 복선전철	24.5	2000-2014년	8,905	8,905	0	0
용산~문산 복선전철	48.6	1996-2016년	18,051	18,051	0	0
수원~인천 복선전철	52.9	1995-2018년	12,972	9,855	1,467	1,650
신분당선(정자~광교)	12.8	2005-2016년	2,477	2,477	0	0
신안산선 복선전철	49.4	2006-2022년	30,735	1172	500	29,063
별내선 복선전철	12.9	2007-2022년	7,434	750	705	5,979
신분당선(용산~강남)	7.5	2008-2017년	4,543	52	0	4,491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130.9	2014-2021년	34,016	72	20	33,924
진접선 복선전철	14.8	2012-2019년	7,052	1185	1030	4,837
하남선 복선전철	7.7	2011-2020년	4,000	1090	1300	1,610
삼성~동탄 복선전철	9.8	2014-2021년	5,283	1578	354	3,351
신분당선(광교~호매실)	11.1	2014-2019년	4,632	4	1	4,627
도봉산~옥정	15.0	2014-2023년	4,436	0	0	4,436
논산~계룡	83.1	2016-2021년	1,427	0	40	1,387
안심~하양	8.7	2015-2021년	1,871	0	288	1,583
구미~경산	61.9	2016-2021년	571	0	168	403

주 : 사업비는 국비 기준임

2009년 7월에는 용산~문산 복선전철 DMC~문산 구간(40.6km)을 우선 개통하여 파주, 고양시의 광역교통 편의를 제공하였고, 2010년 10월에는 수도권 동부지역인 경춘선 망우~금곡(17.9km)구간을 개통하였다.

2011년 12월에는 오리~수원 복선전철 사업 죽전~기흥 구간(5.9km) 및 신분당선(강남~정자) 등을 개통하여 분당, 용인, 수원지역까지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광역철도망을 구축하였다.

2012년에는 수인선 복선전철 오이도~송도구간(13.1km) 및 왕십리~선릉 복선전철(6.8km), 오리~수원 복선전철 사업의 기흥~망포(7.4km), 용산~문산 복선전철의 DMC~공덕구간(6.1km)을 각각 개통하였다. 2013년 12월에는 오리~수원 복선전철의 망포~수원구간(5.2km)을 개통하여 분당선 전 구간을 개통하였으며, 2014년 12월에는

용산~문산 복선전철의 용산~공덕구간(1.9km)을 개통하였고, 2016년 1월에는 신분당선(정자~광교) 복선전철 정자역~광교역(12.8km)을 2016년 2월에는 수원~인천 복선전철의 송도~인천구간(7.3km)을 개통하였다.

(2) 대곡-소사-원시 간선철도

① 대곡-소사

대곡~소사 복선전철은 소사~원시구간과 연계 운행하는 노선으로 수도권 서북부지역(고양시, 서울시 강서구, 부천시)을 남북방향으로 연계하고, 장래 남북철도망 연결에 대한 간선철도 기능수행을 목적으로 추진 중으로, 사업구간은 고양 대곡~김포공항~부천 소사, 총 18.36km(고양시 6.00km, 서울시 5.97km, 부천시 6.39km)이며 총사업비 1조 634억원(2009년 6월 기준 불변가)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원래 일반철도로 계획되었고, 2005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후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면서 당시 예산이 광특회계로 편성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광역철도사업으로 고시 되었다. 이후 2008년 BTL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09년 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해 같은 해 12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고시 되었다. 그간 관련 지자체는 이 사업이 대곡~군산을 연결하는 일부구간이므로 일반철도 전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일반철도사업으로 고시되었고, 2014년까지 예산안 편성협의를 진행하여 2015년 12월 18일 실시협약을 체결후 2016년 6월에 착공하였으며, 2016년 12월 기준으로 공정률은 0.3%에 이르고 있다.

② 소사-원시

소사-원시 복선전철은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남서부와 남북을 연결하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인선·안산선 환승 및 대곡~소사선·신안산선·서해선과 직결되는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 연장 23.3km, 1조 7,88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며, 2002년 7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2011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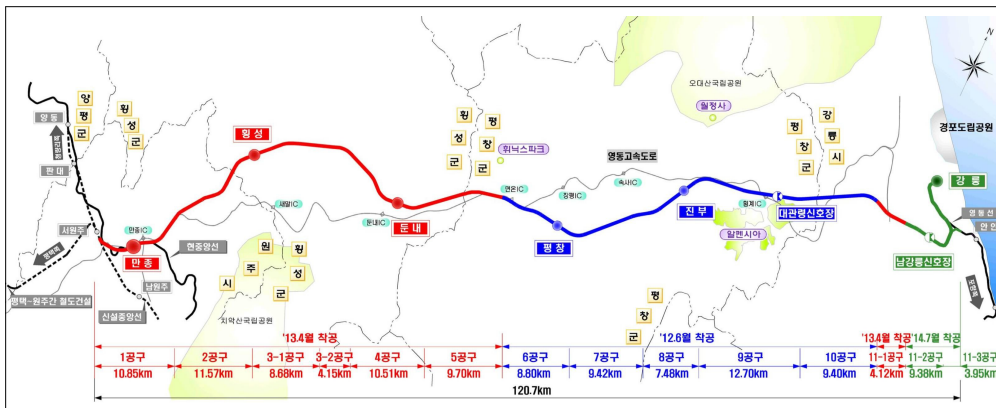
월에 착공하였으며, 2016년 12월 기준으로 공정률은 79.5%에 이르고 있다.

이 사업은 민간투자방식(BTL)으로 국고 2,387억원, 민간자본 15,495억원이 투입되었다.

(3) 원주-강릉 철도건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지원과 중부~동부간을 횡축으로 하는 철도망 구축 및 강원도 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해 추진 중인 원주~강릉 복선철도(120.7km, 3조 7,614억원) 건설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2010년 8월~2012년 12월)하고, 2012년 6월 평창~강릉구간 우선착공 이후 노반 총 14개 공구로 분할 발주하여 전 공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본선구간 주요 구조물은 '17. 1월 완료 되었다. 또한 2015년 6월 착공한 궤도공사는 '17. 3월 전 구간 공사를 완료하였다. 한편, 후속 공정인 시스템분야(2015년 5월~), 건축분야(2016년 5월~) 또한 순차적으로 착공하여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수송 지원을 위해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올림픽 개최 전인 2017년 12월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림 2-1-7 원주-강릉 철도건설 노선도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은 총예산 3조 7,614억원으로 2016년도까지 총 3조 3,857억원을 투입(2017년 예산 3,040억원)하여 '17. 3월말 기준 총 공정율 88.0%로 전 분야 개통공정에 차질 없도록 건물·전력·신호·통신 등 집중공사 추진 중에 있다

표 2-1-90 원주-강릉 철도건설 예산투입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총사업비	2015년까지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예 산	37,614	25,050	8,807	3,040	717

(4) 도시철도

도시철도는 도시교통난 해소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핵심 운송수단으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도시철도는 1974년 8월 15일 개통된 종로선(1호선 서울역~청량리역) 구간이다. 이후 도시철도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1979년 4월 지하철건설촉진법이 제정되었으며, 지자체 중심의 도시철도 사업을 국가가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하철건설촉진법은 1990년 도시철도법으로 개정되었다.

이후 도시철도법은 수차례의 개정을 반복하다가 2014년 1월 보다 체계적인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도시철도 내 각종 부대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도시철도시설의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전부 개정되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도시철도는 41조 6,340억원이 투입되었으며, 전국 총 23개 노선으로 총연장은 674.2km에 이른다. 지자체별로는 서울시가 총 331.6km로 총연장의 49%를 차지하며, 부산 108km, 대구 83km 등이 뒤를 잇는다. 도시철도를 운행하는 차량은 5,619량(2015년 기준)으로 연간 33억명(수송인원, 2015년 기준)을 실어 나르고 있으며 2011년 30억명에서 지속적으로 수송인원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수송분담률 또한 공로 87.5%(승용차 포함) 다음인 8.3% 수준(2014년 기준)으로 승용차 등 차량을 제외한 교통수단 중 가장 많은 인원을 수송하고 있다. 또한 도시철도의 철도의 분담률인 4.1%의 2배에 이르고 있어 도심교통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2017년 기준으로 총 10개 노선 총 147.1km(총사업비 9조 4,712억원)의 도시철도가 건설 또는 설계 중에 있으며, 이 중 부산 1호선연장(신평~다대)은 2017년 4월에 새롭게 개통된다.

표 2-1-91 도시철도 개통현황

구분	노 선	연 장 (km)	역수	구 간	사업비 (억원)	개통일 (최초)
합계	23개	674.2	655		416,340	
서울 (9)	소 계	331.6	307		172,797	
	1호선	7.8	10	서울역~청량리	984	'74.08.15
	2호선	60.2	50	성수~성수	11,171	'80.10.31
	3호선	38.2	34	지축~오금	13,798	'85.07.12
	4호선	31.7	26	당고개~남태령	8,315	'85.04.20
	5호선	52.3	51	방화~상일, 마천	30,215	'95.11.15
	6호선	35.1	38	응암~봉화산	25,496	'00.08.07
	7호선	57.1	51	장암~부평구청	39,676	'96.10.11
	8호선	17.7	17	암사~모란	8,502	'96.11.23
부산 (4)	9호선	31.5	30	개화~종합운동장	34,640	'09.07.24
	소 계	107.8	108		68,314	
	1호선	32.5	34	노포~신평	9,751	'85.07.19
	2호선	45.2	43	장산~양산	28,552	'99.06.30
	3호선	18.1	17	대저~수영	17,395	'05.11.28
대구 (3)	4호선	12.0	14	안평~미남	12,616	'11.03.30
	소 계	81.2	89		56,247	
	1호선	28.4	32	설화명곡~안심	17,555	'97.11.26
	2호선	31.4	29	문양~영남대	26,147	'05.10.18
인천 (2)	3호선	23.9	30	동호~범물	14,913	'15.04.23
	소 계	58.9	56		48,910	
	1호선	29.4	29	계양~국제업무지구	24,320	'99.10.06
광주	2호선	29.1	27	검단오류~운연	24,590	'16.07.30
	1호선	20.5	20	녹동~평동	16,658	'04.04.28
대전	1호선	20.5	22	판암~반석	18,931	'06.03.16
부산-김해	부산-김해	23.2	21	사상~가야대	13,241	'11.09.17
의정부	의정부	11.1	15	발곡~탑석	6,767	'12.07.01
용인	용인	18.1	15	기흥~전대	7,278	'13.04.26

3. 항만 인프라 개선

(1)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조성사업

서귀포항 크루즈터미널 조성사업은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입항하는 크루즈 관광객의 편의제공과 친수문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해군기지 기능과 국제관광을 연계한 크루즈항 기능이 조화롭게 개발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는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이

조성되어 있다.

크루즈터미널 조성사업에는 총사업비 531억원이 투입될 계획에 있으며, '11.12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3.4월 실시계획을 공고, '14.6월에는 공사에 착수하여 크루즈터미널 및 친수공원 조성, 진입도로 개설 등을 위한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였다.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공정추진이 부진하였으나, 다각적인 노력과 주민설득 끝에 '16.3월 공사가 재개되어 현재는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

크루즈터미널 조성 사업은 2018년도 상반기에 완공되어 운영될 계획이다. 서귀포 크루즈터미널이 완공되면 제주 남부지역의 크루즈관광 거점지역으로 발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제주항 건설

제주항은 제주지역의 연안화물 및 국내외 해상여객 운송을 위한 핵심 교통 인프라이자, 관광 및 수산물 유통 등이 이루어지는 지역 경제의 거점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항만으로 제주도내 항만물동량의 70%이상을 처리하고 있다.

제주항은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3.10월 착수한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신축공사'를 '15년 7월 준공·개장하였고, 외항 지역에는 연안화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11.12월부터 시행한 '철재부두 축조공사'(2만톤급/1선석)가 '15.3월에 준공되었으며, '15.6월부터 화물부두 2선석(2만톤) 및 해경전용부두를 확충하기 위하여 기초자료조사 및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탐동지역의 월파피해 방지를 위한 방파제건설(L=1,100m)을 위해 '14~'15년에 기본설계를, '15~'16년에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였고, '17년에는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향후 제주항 건설이 마무리되면 제주경제 발전의 전략거점 및 국제 경쟁력을 갖춘 동북아권역의 관광 거점항만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3) 항만 재해예방사업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태풍 강도 증가로 우리나라의 항만 및 배후지역의 침수 피해가 우려되며, 항내 정온도 확보를 위해 항만 외곽에 축조한 방파제는 설계파

고 증가로 인해 취약성이 대두됨에 따라 항만시설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재해에 대비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2011년)하고, 단계별 보강 계획에 따라 2030년 완료 목표로 2012년부터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침수피해 방지사업은 마산항 구항 방재언덕 사업 외 4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1단계로 2020년까지 10개 항만을 완료하고 이후 2030년까지 22개 항만을 완료할 계획이다. 설계과고 증가에 따른 방파제 보강사업은 2016년까지 28개소를 완료하였고, 여수항 동방파제 등 24개소를 추진 중으로 2020년까지 71개소를 완료하여 재해에 안전한 항만을 구축할 계획이다.

(4) 항만 친수시설 조성사업

“항만친수공간”이란 항만구역 내에 존재하는 개방적인 수변공간으로서, 시민들의 상시 접근이 가능한 여가공간으로 해상구역과 육상구역을 포함하는 공간을 말한다. 마산, 목포, 제주, 광양 등의 항만친수시설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국민들에게 편의시설 제공하는 동시에 해양관광지로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산항 가포B지구 친수문화공간 조성사업’은 ‘11.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2.10월 공사 착공, ‘14.6월에 공사 준공하였고, ‘목포북항 친수문화공간 조성사업’은 ‘11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 ‘12.4월 공사 착공, ‘14.8월 공사 준공하였다. 제주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및 친수공원 조성사업’은 ‘14.6월에 공사 착공하여, ‘18.2월 공사 준공하여 운영 예정이며, ‘광양항 친수시설 부지조성사업’은 ‘13.5월부터 ‘14.8월 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였고, ‘15.1월 공사 착공, ‘19.1월 공사 준공할 예정이다. 또한, ‘마산항 서항지구 친수공사 조성사업’은 ‘12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15.5월에 착수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16.9월에 마무리하여, ‘17.5월 공사 착공 예정이다.

(5) 부산항 특화 개발

부산항 신항은 국제 경쟁력 차원의 국가중심 항만으로서의 부산항 역할 제고, 기존 항만의 확장만으로는 급증하는 물동량 처리에 한계가 있어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95

~'25년까지 19조 3,015억원(정부 8조 5,261억원, 민자 10조 7,754억원) 투자 계획으로, 현재(2017년 4월) '권'부두 21선석(1,245만TEU), 일반부두 2선석을 운영 중에 있다.

부산항 신항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서"권"부두(2-5단계) 5선석을 2012년 8월부터 2021년까지 9,092억원(BPA), 남"권"부두(2-4단계) 3선석을 2015년 12월부터 2021년까지 4,409억원(민자) 투자 계획으로 시행중에 있으며, 부산항 신항 발생 준설토 적기처리를 위하여 2014년 12월부터 송도 준설토 투기장조성(호안 2.65km)에 1,231억원을 투자하여 2015년 4월 완료하였다.

선박대형화에 대비하여 18천TEU급 이상 선박의 상시 입·출항이 가능하도록 신항 전수역 중심(2단계) 준설토(15→17m)를 2014년 12월부터 600억원을 투입하여 2017년 9월, 항로확장 준설토를 2015년 4월부터 256억원을 투입하여 2017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토도제거 사업은 3,431억원을 투입하여 2017년 9월 착공하여 2020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항만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14년까지 1,472억원을 투입하여 주간선 도로(안골대교) 및 '17년 1월에는 3,499억원이 투입된 제2배후도로를 완료하였다.

장래에는 "부산항 신항 3단계 개발 사업"을 통한 세계 2대 환적 거점항 도약을 위해 '25년까지 부산항 신항에 전용터미널을 단계적으로 37선석까지 확충하고 잡화 등 일반부두 등(7선석)도 수요에 맞춰 개발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생산 유발 7조 5,870억원, 부가가치 유발 2조 5,500억원, 고용창출 효과 4만 4,000명이 발생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산북항 재래부두를 국제적 해양관광, 비즈니스·물류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개발을 2008년 12월 착공하여 국제여객부두(크루즈부두 포함) 및 국제여객터미널 개장('15.1) 등을 통해 국제관광 거점항만 조성기반을 마련하였고, 향후 2019년 12월까지 부산북항 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북항 내 항만시설 보호와 항만기능 제고를 위해 노후된 조도 및 오류도 방파제 보강을 2013년 3월부터 1,825억원을 투입하여 2021년에 완료할 계획이며, 크루즈 선박 대형화 추세에 대비하고 글로벌 크루즈 시장에서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삼 크루즈부두 확충을 2015년 4월부터 322억원을 투입하여 2018년에 완료할 계획이다.

감천항의 경우에도 입·출항 선박 대형화 및 이용선박 증가에 따라 이용도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해 감천항 정온도 향상 외곽시설 설치공사를 2013년 12월까지 1,188억원을

투자하여 완료 하였고, 외해에 노출되어 있는 다대포항의 정온도 확보를 위한 다대포항 외곽방파제 축조공사는 2015년 11월까지 1,064억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다.

(6) 광양항 특화 개발

광양항은 수심 20m의 천연수로와 산과 섬으로 구성된 자연 방파제에 둘러싸여 있어 정온수역을 유지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춘 항만이나, 배후산업기반과 항만 연관 산업 취약 및 정기항로 부족 및 한진해운 법정관리('16. 9. 1 → '17.2.17 파산 선고) 등의 영향으로 항만시설 능력 대비 물동량 처리실적이 미흡(2016년 222만 TEU 처리)하였다.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광양항 특화 발전전략을 수립('15.10)하여 지속 추진중에 있으며, 광양항을 산업 클러스터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울춘지구 항만매립지를 조기 개발하고 묘도 준설토 매립지를 미래 신소재 산업, 복합에너지 물류 및 발전시설 등이 집적되는 신성장 산업단지로 개발하고 있으며, 광양항을 국제 자동차 환적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컨테이너 부두를 자동차 부두로 전환하는 등 광양항만의 특화된 발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주요 사업추진 성과로는 울춘2산단 전면항로 준설통사를 완료('13.3~'15.10)하고, 광양항 특정해역 준설탁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16.4) 받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시행하고 있으며, 광양항 선박에 대한 역무서비스 강화를 위한 여수신북항 외곽시설('15.5~'19.5) 및 계류시설('16.3~'21.3) 축조공사, 울춘1산단 지역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항행안전 및 항만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울춘1산단 진입항로 준설통사('16.9~'18.9), 묘도 준설토 매립지를 신소재 산업으로 개발하기 위한 묘도 재개발 진입도로 건설공사('14.4~'17.6)를 추진하고 있다.

(7) 울산항 특화 개발

울산항을 동북아 오일허브 거점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신항 북방파제를 2014년 8월에 완공하였고, 남항 2단계 외곽시설을 2013년 12월부터 지속 추진 중이며, 신항 북항 및 남항지역에 유류부두 8선석 및 2,840만 배럴 규모의 저장시설 등 오일허브 구축사업계획을 2010년부터 수립하여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오일허브 1단계 사업을 포함한 북항지구의 정온수역 확보를 위해 북방파제(2.2km)는 3,838억원을 투자하여 2014년 8월에 완공하였고, 북항 방파호안(0.6km)은 2016년 4월 착공하여 948억원을 들여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다.

신항 남항지구의 오일허브 2단계와 민자부두(5선석)사업의 원활한 개발 및 운영을 위한 남항 2단계 외곽시설을 총 사업비 1조 111억원을 들여 2023년까지 건설할 계획으로써, 남방파제 2단계(3.1km) 1공구(0.9km)는 2013년 12월 착공하여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2공구(1.3km)는 2017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고, 3공구(0.9km)는 2018년 설계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신항 남측에서 내습하는 파랑을 차단하기 위한 남항 방파호안(1.4km)도 2016년 11월 착공하여 2021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

동북아 오일허브 거점항 육성을 위한 오일허브 1단계(하부시설) 사업은 1,123억원을 투자하여 접안시설 5선석을 2017년 상반기까지 완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다. 장래 오일허브 2단계 사업도 2017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2017년 기본 설계, 2018년 실시설계를 거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8) 인천항 특화 개발

인천항은 수도권 산업단지 수·출입 지원 및 유통기지 역할 강화와 對 중국교역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신항 「컨」 부두를 2017년까지 6선석, 2020년까지 12선석(최대 4천TEU급) 건설을 추진하고, 「컨」 부두 개장에 따른 부족한 복합물류단지 조성 및 국내·외 기업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항만물동량 창출을 위한 항만배후단지(1단계) 조성사업을 2015년 설계에 착수,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내항 및 남항지역 항만공간의 해양관광산업 발전 거점화를 위해 시민 친수 공간(내항 1·8부두) 및 크루즈·국제전용부두 확보(남항) 사업을 2012년 착수하여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추진 성과로는 남항 배후단지간 연결을 위한 교량(동측 및 북측)공사 준공('16.10), 남항 카페리부두 3만톤급 2선석을 준공('15.12)하였으며, 영종도 2단계 준설토 투기장 조성공사('13.8~'17.3), 신항 「컨」 대형선박(8천TEU급) 유치를 위한 항로증심(14→16m) 준설토공사('16.1~'17.5), 남항 국제여객터미널 신축공사('16.12~'19.5), 북항 배후

단지 및 청라투기장 배후교통망 확보를 위한 남청라 연결도로('15.10~'18.10), 남향 항만배후단지(아암물류 2단지) 배후교통망(교량 및 진입도로 개설) 건설공사('13.8~'17.10)를 추진하고 있다.

(9) 연안항 인프라 개선

전국 연안항에 종합적인 중장기 항만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경제성장에 따른 전국 각 권역별 연안물동량의 증가추세에 대비한 물류유통기지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연안여객수요변화에 따른 해상교통중심기지 및 어업근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도서민 정주기반구축 및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중국 불법조업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해양영토 수호 및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국가관리연안항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13.12)을 통해 전국 11개 국가관리연안항을 조기에 구축하고, 5천톤급 대형 해양경비선 등 해경 전용부두 및 국가어업지도선 부두 조성을 통해 해양주권을 거점기지화 하고 지속적인 안보위협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보안부두를 확충하고 있다.

4. 교통·물류 원활화 지원

(1) 교통물류 원활화(BRT 구축)

간선급행버스체계(BRT : Bus Rapid Transit)는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의 버스체계에 철도시스템의 운영 도입으로 통행속도, 정시성 등의 서비스를 지하철 수준으로 향상시킨 저비용·고효율의 새로운 대중교통시스템이다. BRT가 도입될 지역의 범위에 따라 2개 시·도 이상을 연결하는 광역BRT와 단일 도시에 구축되는 도시BRT로 구분하고 있다.

2005년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특히 2011년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광역BRT사업의 재정지원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였다. 2014년도에는 효율적인 BRT 구

축을 위해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광역BRT는 2013년 7월 인천 청라~서울 강서(L=19.8km) 구간을 개통하였으며, 2016년 7월 세종시와 연결되는 대전 대전역~와동IC(L=11.51km) 구간도 개통하였다. 도시BRT는 서울·경기 지역에 30.5km를 개통하였으며, 현재 서울·부산에서 28.6km 구간을 공사 중에 있다.

BRT 개통 결과, 버스통행속도 증가 및 정시성 확보 등 버스서비스의 고급화로 버스이용객이 증가하였으며, 버스이용객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2)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화물차의 주차시설 부족으로 도로변, 주택가에 불법 주·박차 문제가 심각하여 인근 주민의 민원제기와 교통사고 발생 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고 영세한 화물운송업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4년에 ‘화물차 공영·공동차고지 확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고, 2014년에는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종합계획’을 보완 수립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다.

2005년 2개 지역(대구, 제주)에 지원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12개 시·도 26개 지역(부산 노포·회동, 대구 금호·신서, 인천, 대전, 광주 진곡·북구, 강원 춘천, 전북 고창·정읍·남원·전주, 전남 광양·순천·목포(용해, 대양산단)·강진·나주·구례, 경남 진해·거창·진주, 제주, 충남 서천, 경북 경주)에 1,611억원을 지원하였다. 2009년 3월 제주에 공영차고지가 준공된 이후 2016년에는 전남 광양 등 15개소를 준공·운영 중에 있다. 2017년에는 인천 계양IC, 대구 달성, 경기 수원, 충남 아산, 전남 장성 등 신규사업(5개소)을 포함하여 총 10개소에 155억원을 지원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3) 대중교통지원(군산 물류단지 진입도로)

군산 물류단지는 제2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서 군산권은 광양권과 함께 호남권에서 물류단지 공급이 최우선적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권역으로 선정되었고, 2014년 2

월 확정 발표된 지역발전 5개년계획(2014~2018) 상 전북 중추도시권으로서 새만금 국가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지역교통 물류망개선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2014년 4월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위원회를 통과하여 물류단지 규모는 전북 군산시 개사동 일원 392,452㎡이며, 단지조성 사업비는 약 838억원, 그 중 물류단지 진입도로의 사업비가 48억원이며, 연장 0.767km, 폭원 8~24m로 진입도로가 조성된다. 2016년 8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6년말 현재 3.3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019년 12월까지 물류단지 진입도로 조성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표 2-1-92 추진성과 성과(국비 지방비 포함)

(단위:억원)

사업명	전체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비고
군산 물류단지 진입도로	48	-	-	-	3.3	10	34.7	

제2장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제1절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대표산업 육성

1.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산업 육성

(1)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은 지역균형발전 시책의 부문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산업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1999년부터 수립된 지역전략산업진흥계획(현 지역산업진흥계획)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시·도, 시·군·구에 특화된 산업분야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집중 지원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 기업 매출신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의 사업이다.

1995년부터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원하던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은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이 종료(1999~2012년)됨에 따라 이를 계승한 新특화산업육성사업(2013~2014년), 주력산업육성사업(2015년~)으로 지속 개편하여 추진하고 있다. 개편된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은 기존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지원된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지역혁신센터조성사업은 유지하되, 광역 시·도 단위의 수요와 집적도, 특화도 및 육성의지를 반영하여 선정된 63개 주력산업 지원 비중을 점차 확대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림 2-2-1 지역산업육성정책 추이

구 분	1999~2002년 (국민의 정부)	2003~2007년 (참여정부)	2008~2012년 (이명박정부)	2013~2016년 (박근혜정부)
시·도	4개 지역 1단계 (1999~2003년)	4개 지역 2단계 (2004~2008년) 9개 지역 1단계 (2002~2007년)	Post 4+9 지역 전략산업	新특화 특화 (주력산업)
시·군·구			지역 특화산업(2004년~)	특화 (지역연고산업)

표 2-2-1 지역별 주력산업분야

지역	주력산업	지역	주력산업
대전	<u>무선통신융합</u> , 로봇자동화, 금속가공, 메디바이오, 지식재산서비스	대구	<u>스마트지식서비스</u> , 스마트분산형에너지, 정밀성형, 소재기반바이오헬스, 의료기기
충남	<u>디스플레이</u> , 자동차부품, 인쇄전자부품 동물식의약, 디지털영상콘텐츠	경북	<u>디지털기기부품</u> , 모바일융합, 에너지소재부품, 성형가공, 기능성바이오소재
세종	자동차부품, 바이오소재	부산	<u>디지털콘텐츠</u> , 지능형기계부품, 초정밀융합부품, 금형열처리, 바이오헬스
충북	<u>바이오의약</u> , 반도체, 전기전자부품, 태양광, 동력기반기계부품	울산	<u>에너지부품</u> , 정밀화학, 조선기자재, 자동차, 환경
광주	<u>디자인</u> , 스마트가전, 초정밀생산가공시스템, 생체의료융소재부품, 복합금형	경남	<u>항공</u> , 기계소재부품, 지능형생산기계, 풍력부품, 항노화바이오
전남	<u>바이오식품</u> , 석유화학기반고분자소재, 에너지설비, 금속소재·가공	강원	<u>웰니스식품</u> , 세라믹신소재 스포츠지식서비스
전북	<u>건강기능식품</u> , 기계부품, 복합섬유소재, 해양설비기자재, 경량소재성형	제주	<u>물응용</u> , 관광디지털콘텐츠 청정헬스푸드, 풍력·전기차서비스

주 : 밑줄 굵은 글씨는 시도 특화발전프로젝트 해당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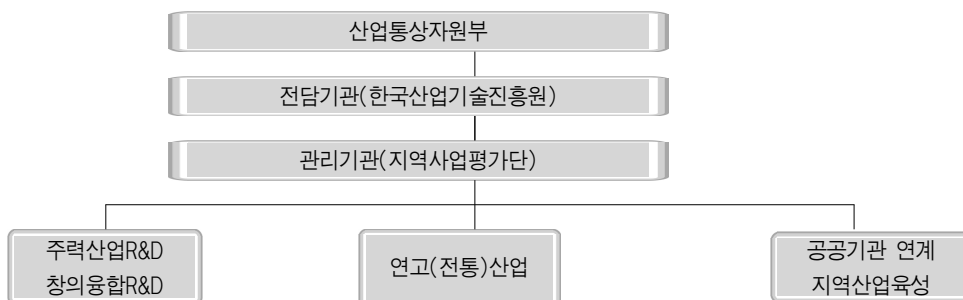
또한 미래성장동력 배양을 위해 시·도별 발전비전과 전략에 부합하는 '특화발전프로젝트'를 시·도별로 1개씩 선정하여 2015년부터 해당분야의 기술개발 과제를 집중 지원 중에 있으며, 같은 해부터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지역별 주력산업분야에 창의성을 접목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창의융합R&D'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정부는 2014년부터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기업, 대학 등 지역혁신주체를 연계한 지역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의 일부로 ‘공공기관연계 지역산업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기관연계 지역산업육성사업’은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최초의 R&D사업으로, 이전 공공기관의 기능과 혁신역량을 활용하여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산업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직·간접적인 참여를 전제로 기술개발·기업지원·인력양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기술개발은 구매조건부R&D, 공공기관-기업간 공동R&D, 기술이전형R&D등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의 다양한 기관들 간의 협력촉진과 지역협력과제 등을 발굴하기 위하여 충남 등 12개 시·도의 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은 중앙-지역 간 협업을 통해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이 지역 성장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처-전담기관-관리기관-수행기관으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015년 12월, 연간 지역산업육성사업 시행계획인 ‘2016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근거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정부는 주력산업 기술개발 545개 과제(846억원), 창의융합R&D 158개 과제(264억원), 풀뿌리기업육성 62개 과제(341억원), 지역연고산업육성 33개 과제(181억원), 지역혁신센터조성 16개 과제(76억원), 41개 과제(120억원) 등 총 718개(1,828억원) 기술개발과제를 지원하였다.

그림 2-2-2 지역특화산업육성(기술개발) 추진체계



한편, 2016년 지역특화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으로 신규고용 3,158명(사업기여율을 반영한 신규고용은 1,542명)이 창출되었으며, 당해 사업화매출액은 2,507억원으로 정부 지원금 10억원당 14.3억원의 사업화 매출실적이 발생하였다. 이 외에도 지역특화산업 육성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특허 출원 764건, 등록 257건, 기술인증 44건 등 가시적인 기술·경제적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지역기업의 수출활성화를 위해 신규과제 선정시 수출가점제도를 도입하고 수출효과를 별도로 평가하여 475개의 수출연계형 기술개발 과제를 신규 지원하였다.

표 2-2-2 추진성과

(단위 : 명, 억원)

구 분	2014	2015	2016	총계
순 신규고용(명)	1,352	1,464	1,542	4,358
사업화매출액(억원)	1,321	2,156	2,507	5,984

(2)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지역특화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은 지역에 구축된 인프라 및 혁신자원을 활용하여 특화산업분야 지역기업에 기술지도, 사업화 지원, 디자인, 마케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성장을 유도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목적의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04년 대구, 부산, 광주, 경남 등 4개 지역에 실시된 2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부터 세부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체계화되기 시작하였으며, 광역 시·도 차원에서 추진되던 지역전략산업이 2012년에 종료됨에 따라 지역 내 기업 지원에 대한 높은 수요를 지속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는 新특화산업육성사업, 2015년부터는 주력산업육성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미래성장동력 배양을 위해 시·도별 발전비전과 전략에 부합하는 ‘특화발전프로젝트’를 시·도별로 1개씩 선정하여 2015년부터 연관 산업분야 기업지원서비스를 확대하여 중점 지원 중에 있다. 2015년부터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지역기업이 보유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이 신속히 사업화될 수 있도록 기업에 윈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화 신속지원사업’이 추가되었으며, 2016년부터 조선업 위

기극복을 위한 사업다각화 지원을 사업화 신속지원사업에서 함께 지원하고 있다. 지역 제조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지역별 주력산업 전·후방 연관기업을 대상으로 ICT기술을 접목한 공정혁신을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산업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지역의 정책기획 기능과 지역산업지원사업을 총괄 연계·중개하기 위한 기업지원 플랫폼 기능을 동시에 지원하고 있다. 정책기획 및 기업지원플랫폼 기능을 수행하는 18개 테크노파크를 거점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산업정책 수립 등을 위한 기초통계자료로 지역기업 채용 및 구직정보, 지역인력양성정보 등의 지역혁신자료를 조사·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업지원종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업 활동 전주기를 지원하는 등 지역별 전략사업을 지원하고,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비R&D 지원사업 연계 및 신규사업기획 등 지역강소기업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그림 2-2-3 지역특화산업육성(기업지원) 추진체계



2015년 12월, 연간 지역산업육성사업 시행계획인 2016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근거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정부는 주력산업 기업지원 292개(700억원), 사업화신속지원 17개(147억원), 스마트공장보급확산 6개(29억원),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지원 20개(142억원) 등 총 335개(1,018억원) 기업지원 과제를 지원하였다.

주된 성과로, 2016년 지역특화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을 통해 신규고용 3,744명(사

업기여율을 반영한 신규고용은 1,466명)이 창출되었으며, 사업기여율을 반영한 신규 고용인력 1,466명 중 정규직 91.3%(1,339명), 청년 42.9%(629명), 여성 33.7%(494명)로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또한 665억원의 사업화매출액과 특허출원 430건, 등록 47건, 기술인증 99건 등의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2016년에 정부 지원 전·후 기업성장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지역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RIPS)을 구축하였고, 2017년부터는 RIPS를 통해 지역 내 다양한 기업지원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업지원서비스 통합공고'를 시행하여 기업 친화적인 원스톱 온라인 신청·접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표 2-2-3 추진성과

(단위 : 명, 억원)

구 분	2014	2015	2016	총계
순 신규고용(명)	1,203	1,340	1,465	4,008
사업화매출액(억원)	-	564	665	1,229

(3) 지역특성화산업육성(포괄보조금사업)

지역특성화산업육성 사업은 지역특성화 자원을 활용한 산업구조 고도화 및 투자유치의 촉진·집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속적 특성화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도가 기획재정부로부터 배정받은 예산 한도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크게 사업기간이 1년인 경상보조사업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등 다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는 자본보조사업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를 좀 더 세분화하면 지역 특성화 자원을 활용한 중소·중견기업 제품의 국내외 판로 마케팅지원 사업, 지역 내 특성화 자원을 활용한 전시회 개최 등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개최 행사 지원 사업, 지역 특성화산업 생산 단계에서 제품의 부가가치 창출 및 신기술의 제품화 제고 등 사업화 지원 사업, 특성화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구축으로 연구역량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이 있다.

표 2-2-4 주요 사업

사업유형	주요 내역사업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해외 유명·전문 전시회 참가,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수출기업 외국어 통·번역 지원 등
지역 맞춤형 개발 사업	국내 전문 전시회 개최, 대구패션페어,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제천한방바이오 박람회 개최 등
지역산업 사업화 지원	해양플랜트 기자재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역 우수기업 브랜드화, 신기술사업화 프로젝트 육성, 로봇산업 시장창출 및 부품경쟁력강화,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뿌리산업 활성화 지원 등
지역산업 인프라 구축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한방 바이오타운 구축, 실크산업혁신 센터 건립, 양산 첨단 하이브리드 기술지원센터 건립 등

2016년 지역특성화산업은 경상보조 84개 사업, 자본보조 9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의 중·소기업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의 특성화 역량을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다.

표 2-2-5 추진성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총계
지역특성화산업육성 -경상보조-	38,378	41,626	65,101	63,845	208,950
지역특성화산업육성 -자본보조-	20,959	11,860	21,990	23,450	78,259
소계	59,337	53,486	87,091	87,295	287,209
지역특성화산업육성(제주)	270	379	340	355	1,344
지역특성화산업육성(세종)	-	-	200	150	350
합계	59,607	53,865	87,631	87,880	288,903

(4)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R&D)

정부는 시·도 간 자발적 협력을 통해 구성된 경제협력권 내 핵심 대표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2015년부터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을 추진하였다.

2013년 7월 'HOPE 프로젝트'에서 인위적 광역경제권을 탈피하여 자율·협력·융합에 기초해 지역산업을 육성기로 결정한 이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14년 1월)으

로 제도 정비를 완료하고 경제혁신3개년계획(2014년 2월)을 통해 시·도 간 협력사업을 선정·지원키로 결정하였다.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2014년 3월)의 의결을 거쳐 14개 시·도간 자율협의를 통해 산업생태계를 반영한 총 17개 경제협력권(시·도별 3개 이내)이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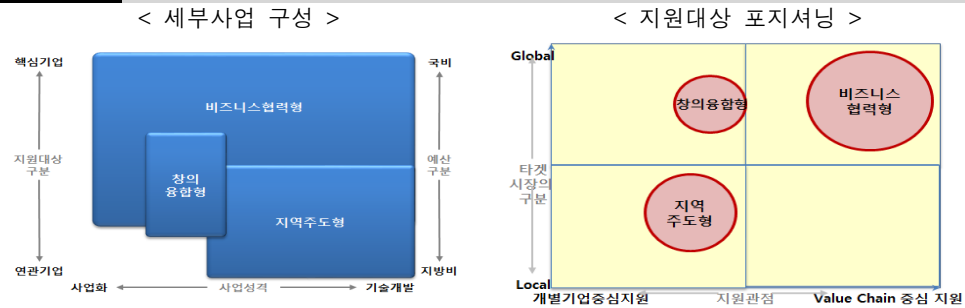
표 2-2-6 시·도 경제협력권산업 선정결과

경제협력권산업	협력시도		경제협력권산업	협력시도	
	주관	참여		주관	참여
① 조선해양플랜트 I	경남	전남	⑩ 이차전지	충남	충북
② 조선해양플랜트 II	부산	울산	⑪ 기능성화학소재	대전	충남
③ 화장품뷰티	충북	제주	⑫ 지능형기계	경북	대구, 대전
④ 의료기기	강원	충북	⑬ 에너지부품	광주	전북
⑤ 기계부품	충남	세종	⑭ 바이오활성소재	전남	전북, 강원
⑥ 광·전자융합	광주	대전	⑮ 자동차융합부품	경북	대구, 울산
⑦ 기능성하이테크섬유	대구	경북, 부산	⑯ 차량부품	부산	경남
⑧ 친환경자동차	전북	광주	⑰ 나노융합소재	울산	경남, 전남
⑨ 휴양형 MICARE	제주	강원			

동 사업은 비수도권 14개 시·도를 대상으로 2~3개의 시·도가 1개의 협력산업을 선정하여 공동 육성하는 17개 경제협력권으로 구성된다. 협력권 내 산업생태계 육성 및 지역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분야 기업에게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서비스(시제품제작·디자인·마케팅 등)를 병행 지원하고 있다.

협력시도는 각 시도별 산업생태계조사와 혁신자원조사 결과를 토대로 협력산업 내 중점 지원대상인 유망품목을 선정하고 유망품목에 속하는 제품개발을 위해 5개 내외의 연관 기업이 참여하는 비즈니스협력형 과제, 지역기업이 보유한 창의적 아이디어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한 창의융합형 과제, 중소·벤처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주도형 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비즈니스협력형 과제는 개발제품의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전·후방 연관기업 및 사업화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비즈니스협력컨소시엄(Supply-Chain)을 대상으로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패키지로 지원하고, 창의융합형 과제는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력하여 창의제품 개발을 지원한다. 지방비로 지원되는 지역주도형 과제는 기업 밀착형 지원 및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주도형 과제를 지원한다.

그림 2-2-4 세부사업 구성 및 지원대상(비즈니스협력형)



2015년은 1,642억원(국비 1,234억원, 지방비 408억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에는 282억원이 증가된 1,924억원(국비 1,434억원, 지방비 490억원), 2017년에는 25억원이 증가된 1,949억원(국비 1,456억원, 지방비 493억원)을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2016년에는 기술개발 과제를 통하여 668개의 기업이 참여하는 196개의 비즈니스협력 컨소시엄을 발굴하여 유망품목의 개발을 2018년까지 지원하고, 144개의 지역기업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57개의 창의융합형 과제를 지원하며, 지역 내 455개 중소·벤처기업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173개의 지역주도형 과제를 지원하였다. 2016년에는 810명의 신규고용 창출 등의 성과가 있었고, 2017년에는 지역 내 고용 및 매출 등 경제적 성과 창출을 위하여 고용창출형 과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개발 성과가 매출과 직결될 수 있도록 사업화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경제협력권사업을 통해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고용, 매출 등 부가가치가 확대되고 지역의 기술혁신형 강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에 기반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2-7 세부사업 유형별 추진내용

유형	사업목적	지원사항	출연금
기술개발	비즈니스 협력형 (지정공모)	비즈니스 협력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유망품목의 개발·사업화 ▶ 과제당 연차별 10억원내외 ▶ 3년 이내 지원 ▶ 중소·중견기업 컨소시엄	국비 100%
	창의 융합형 (자유공모)	시도간 협력산업에 창의성을 접목하여 제품화 및 시장진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 개발 ▶ 과제당 연차별 3억원내외 ▶ 3년 이내 지원 ▶ 중소·중견기업 컨소시엄	
	지역 주도형 (자유공모)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한 지역강소기업 육성 ▶ 과제당 연차별 4억원내외 ▶ 3년 이내 지원 ▶ 중소·벤처기업 컨소시엄	지방비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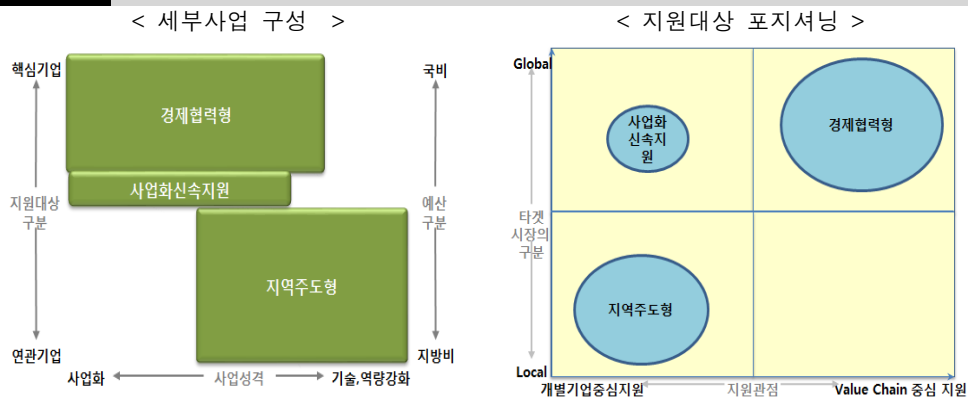
(5)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비R&D)

동 사업은 17개 경제협력권 내 산업생태계 육성 및 지역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분야 기업에게 기업지원서비스(시제품제작·디자인·마케팅 등)를 지원한다.

협력시도는 각 시도별 산업생태계조사와 혁신자원조사 결과를 토대로 협력산업 및 협력산업 내 중점 지원대상인 유망품목을 선정하였다. 협력산업 생태계 조성 및 지역 기업의 사업화·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내 혁신기관을 중심으로, 지역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경제협력형 과제, 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한 신속한 사업화를 위한 사업화신속지원 과제, 기술 및 재직자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주도형 과제를 지원한다.

경제협력형 과제는 협력산업 전·후방 연관기업의 제품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화전문기관을 통한 사업화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사업화신속지원 과제는 지역기업이 보유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신속히 사업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력하여 지원한다. 지방비로 지원되는 지역주도형 과제는 지역 기업의 기술 및 인력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역량강화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그림 2-2-5 세부사업 구성 및 지원대상(경제협력형)



2015년은 741억원(국비 457억원, 지방비 284억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에는 추정 20억원이 증가된 761억원(국비 477억원, 지방비 284억원), 2017년에는 58억원이 감소된 703억원(국비 419억원, 지방비 284억원)을 지원하여 협력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2015년부터 56개의 기업지원 과제를 통하여 896개의 지역기업을 대상으

로 1,378건의 서비스를 지원하였고, 2016년에는 1,538개의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2,492건의 기술 및 사업화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였다. 2016년에는 303억원의 사업화매출과 71명의 신규 고용 창출 등 직접적 경제적 성과가 발생하였고, 2017년에는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지역 내 기업지원기관 협의체 운영, 수출지원 강화 등 지역기업 밀착형 지원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표 2-2-8 내역사업 유형별 추진방안

유형	사업목적	지원내용	출연금
기업지원	경제협력형 (지정공모)	▶ 과제당 연차별 8억원내외 ▶ 3년 이내 지원 ▶ 2개 내외 컨소시엄	국비 100%
	사업화 신속지원 (정책지정)	▶ 과제당 연차별 6억원내외 ▶ 1년 이내 지원	
	지역주도형 (지정공모)	▶ 기업수요에 따른 합리적 예산규모 ▶ 3년 이내 지원	지방비 100%

(6) 신산업창출을 위한 SW융합기술 고도화

본 사업은 예타 신청전 기획부터 진행된 과제로서¹⁴⁾, 기획단계부터 2017년 SW융합 산업 5대강국 진입을 비전으로 설정(2012년 사업착수 기준)하고 이를 위하여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 및 SW융합 기반 및 응용·상용화 R&D 계획을 추진하여 지역내 SW융합거점을 구축하고, 핵심 중소기업 육성 및 융합 신산업을 창출하는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본 산업을 통하여 SW산업의 서울편중 문제해결 및 SW산업 규모 확대를 위하여 전략산업을 보유한 지역내 SW융합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중소SW기업 대상 관련 인프라 및 R&D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내 SW융합 新시장 및 일자리 등 창출 기여를 위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14) 예비타당성 조사결과(2012년 9월 20일, KISTEP), B/C는 1.03, AHP는 0.705였다.

그림 2-2-6 신산업창출을 위한 SW융합기술고도화 사업 기획보고서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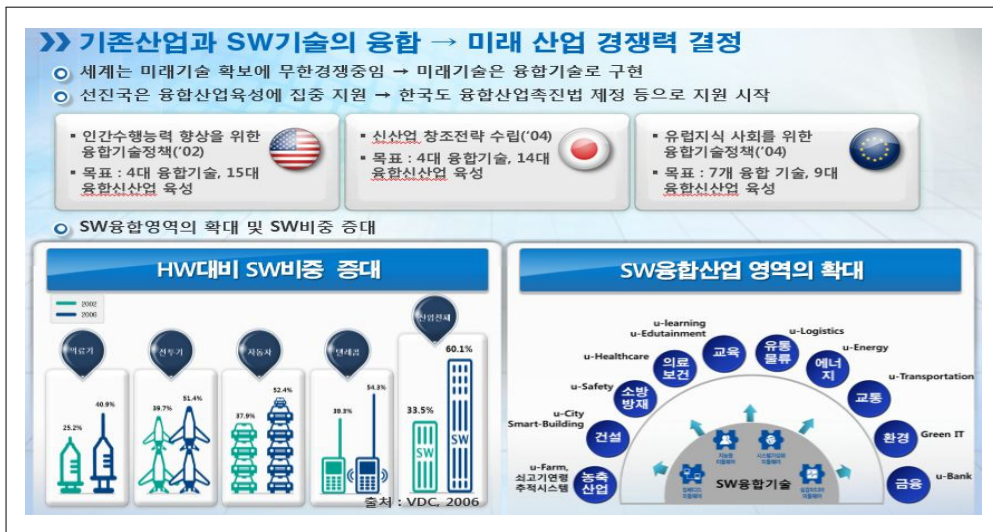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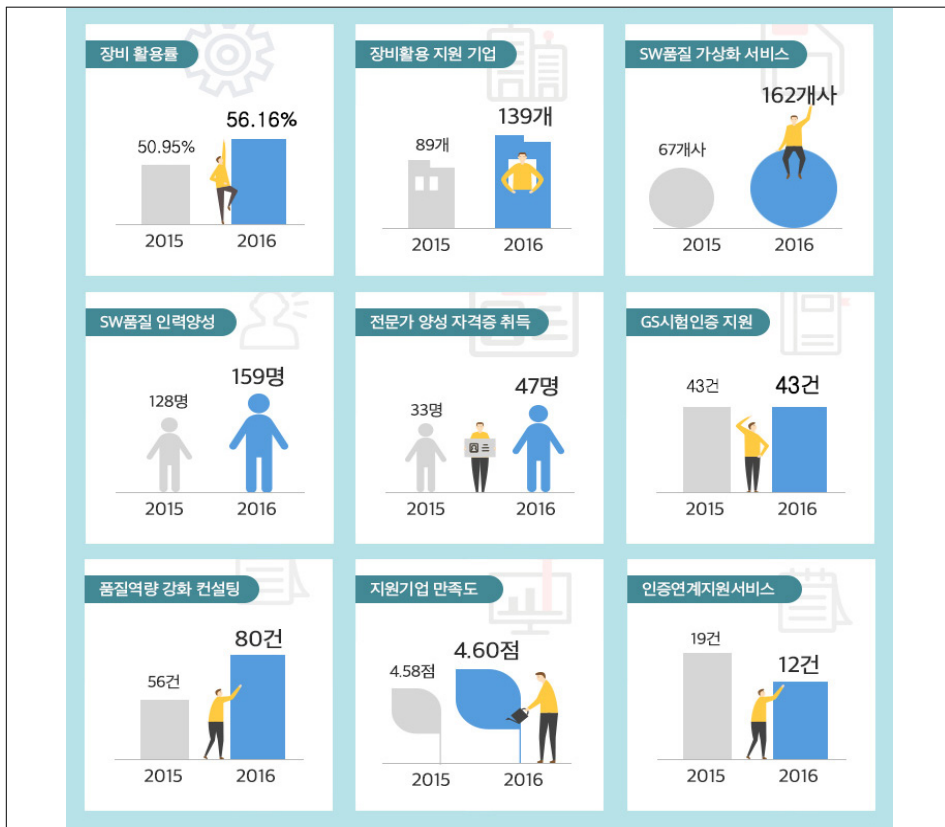


그림 2-2-7 SW융합기술지원센터 조감도 및 층별 활용계획



2016년 SW융합기술고도화 주요 사업 성과로는 첫째, 지역 전통산업에 SW융합을 통한 신산업 창출 및 지역거점 기반의 융합 SW 품질 보증 등 요구 해소를 위해 SW 융합 기반이 우수한 대구 지역에 SW융합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기업 지원을 통해 장비활용률 56.16%, SW 테스트 139개사, GS인증 43건, 품질시험 가상화서비스 162개사, SW품질컨설팅 80건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그림 2-2-8 2016년도 SW융합기술고도화 기반조성 사업 주요성과현황



두 번째 성과로는 2013~2016년까지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지역 중소SW기업 대상으로 SW융합 기반기술에 지역산업을 융합한 기술개발 지원(44개 과제)을 통해 신규 고용 창출 304명, 사업화율 53%, 논문 30건, 특허 76건, SW등록 40건, 기술이전 3건 등의 지역SW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표 2-2-9 2013~2015년 SW융합기술고도화 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현황

(단위 : 억원, 개, 명, %, 건)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과제 지원	지원과제 수	6	25	30	20
	지원금액	29.5	96	113.5	82.19
주요성과	신규고용	-	115	189	115
	사업화율	-	24	53	50
	논문	-	20	30	28
	특허	-	16	76	49
	SW등록	-	7	40	30

본 사업은 2014년 지역발전사업 평가 A등급(지역발전위원회), 2015년 통합재정사업 미래부 자체평가 우수(9개사업중 2위) 등 지역 SW산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신시장, 신산업을 계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성과제고 노력에 주력할 것이다.

(7) 지역SW산업진흥지원

지역SW산업진흥지원 사업은 정부의 지역 소프트웨어(이하 SW)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1998년부터 소프트웨어 기업의 창업 지원을 위한 지역소프트웨어융합센터, SW품질역량센터 등을 설치하고, 소프트웨어 및 멀티미디어 공용장비를 지원하는 등 하드웨어 중심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2006년 이후부터는 단순지원 사업에서 벗어나 성과·기업 중심 사업으로 개편하여 지역 SW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해외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제품 상용화 등 다방면으로 지원영역을 확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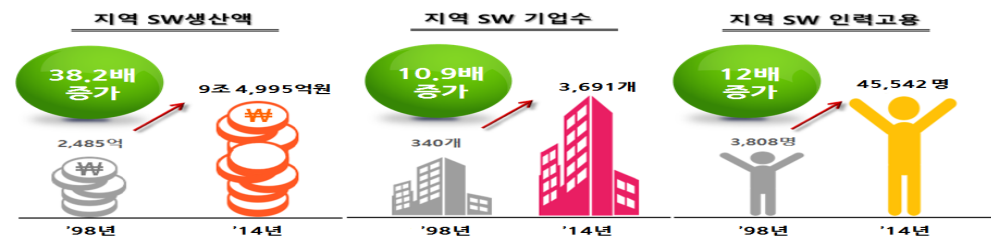
표 2-2-10 지역SW산업진흥지원사업의 네트워크 구축 현황

지역소프트웨어융합센터	IT특화연구소	지역SW품질역량센터	지역SW지원 네트워크 현황
19개 지역 IT·SW산업진흥/기업 전문 지원	지역내 기반산업과 연계한 IT·SW융합 R&D 지원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테스트 지원 기능	
1998년 ~ 계속	2006 ~ 2012년	2011년 ~ 계속	

이러한 지원정책을 펼친 결과로 지역 내 SW산업은 1998년 대비 생산액 38.2배, 기업수 10.9배, 고용 12배 등 지속적인 성장을 하였다. 이러한 성장으로 서울과 지역 간 격차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SW산업은 서울에 편중되어 있어(생산액 74.7%, 기업수 55.2%, 고용 71.8%) 인프라 구축을 넘어 관련 산업의 생태계 조성 및 정착,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 SW산업 육성 정책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림 2-2-9 지역소프트웨어산업 발전기여도 및 파급효과

(단위 : 억원, 개, 명)



구분	1998년			2014년		
	서울	지역	전체	서울	지역	전체
생산액	42,979 (94.5%)	2,485 (5.5%)	45,464	280,184 (74.7%)	94,995 (25.3%)	375,179
기업수	1,768 (83.9%)	340 (16.1%)	2,108	4,556 (55.2%)	3,691 (44.8%)	8,247
종사자수	41,623 (91.6%)	3,808 (8.4%)	45,431	115,907 (71.8%)	45,542 (28.2%)	161,449

자료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원(KEA), 2014년 ICT산업실태조사

이에 19개 지역의 지자체 및 지역소프트웨어융합센터와 협력하여 SW기업들이 창업,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지역의 기반산업과 연계하여 SW융합 활성화 중심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추진 중에 있다. 세부 분야로 지역SW기업 성장지원, 지역 SW융합 제품 상용화 지원, 지역SW품질 경쟁력 강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SW기업 성장지원 사업은 지역 내 중소 SW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력양성, 마케팅, 기술지원, 네트워크 등 지원하고 있으며, SW융합 제품 상용화 지원 사업의 경우 지역 기반산업과 연계한 SW융합 신규 서비스 발굴 및 제품화를 위한 33개 과제를 발굴·지원하였다. 나아가 기업의 SW품질관리 체계와 제품 품질 향상을 위해 지역SW품질역량센터에서는 테스트, 컨설팅, 인증취득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책기획·집행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SW정책 로드맵 수립, 지역 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정책·기술 최신동향 정보제공, 지원과제의 품질관리 지원 등을 실시함으로써 성과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상의 사업을 통해 2016년에는 국비 149억원을 투자하여 19개 지역의 636개 중소 SW기업을 지원, 수혜기업 매출 2.06조원(전년대비 12.7% 증가), 신규고용 1,235명, 전문인증 259건, 소프트웨어인력양성 프로그램 1,675명 수료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8)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지방화·분권화 추세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기획된 고용·능력 개발 정책으로는 지역수요에 적합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지역의 관점에서 지역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제고하고, 지역 간 고용기회의 불균형 해소를 도모하기 위한 지역고용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지역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설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2006년부터 실시되어 왔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공모내용에 따라 통상 5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인 일반 지역산업맞춤형 사업, 광역자치단체 주도의 대규모 프로젝트인 지역혁신 프로젝트, 정부부처 합동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기숙사통근버스 임차 지원 사업 그리고 고용위기 지역을 지원하는 구조조정 지원사업으로 분류된다.

사업내용에 따라 인력양성위주의 교육훈련 사업과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을 촉진하는 취업연계 사업, 산업단지 등에 기숙사 임차 및 통근버스 임차 방식으로 지원하는 고용환경개선 사업으로 구성되며 그 밖에 지역 내 고용 관련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하여 지역의 고용이슈를 발굴 및 공론화시키는 포럼 사업 등 다양한 패키지 지형대로 자치단체 주도의 지역일자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2015년도에 공모를 통해 특화사업 497건, 연구사업 37건, 패키지 사업 33건 등을 선정, 868억원을 지원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13,464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2016년도에는 10개 자치단체에 혁신프로젝트 사업을 최초로 선정하였고, 조선업 구조조정 위기를 지원하는 조선업희망센터 4개소를 설치 지원하였으며 총 486개 사업을 선정,

968억원을 지원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17,497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또한 중앙과 지역 간의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함으로써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공동 노력을 위한 목적으로 2016년에 지역고용정책협의회를 2회 개최하였다. 2016년 6월 23일부터 1박 2일간 충청북도 단양에서 개최한 협의회에서는 지역고용사업의 현황과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2016년 11월 17일부터 7월 18일까지 강원도 홍천에서 개최한 협의회에서는 2017년 지역고용사업의 개편 내용,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고용거버넌스 개편 및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향후 지역수요에 부응하는 고용지원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 중앙과 지역의 협업체계를 통해 전략적 지역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지역고용혁신선도사업을 집중 발굴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행기관 중심의 개별사업 지원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혁신프로젝트(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고용정책이 반영된 복수의 사업들로 구성) 지원을 강화하고, 인력양성사업 위주에서 신규고용창출, 고용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사업형태를 다양화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평가결과 2년 연속 C등급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사업을 배제하고,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9)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란 자치단체장이 임기 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할 일자리 목표와 일자리 대책을 공시하면 중앙정부가 그 대책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정책의 성과를 높이는 지역고용활성화 전략이다.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 기초 226) 장이 고용노동부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고용심의회(지역노사민정협의체), 지역고용전략 개발포럼 등 지역 내 고용관련 기구와의 협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수립하고 지역 언론, 자치단체 홈페이지, 주민대상 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공시한다. 이때, 일자리 목표는 고용률 증가, 취업자 수 증가 등 통계 조사를 통해 확인 가능한 공통 목표와 함께 일자리 창출, 일자리 유지 및 미스매치 해소, 직업능력 개발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분야별 목표를 수립하게 된다.

2010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2009년 12월) 및 제1, 3차 국가고용전략회의(2010년 1

월 3일)에서 대통령께 보고함으로써 도입되었고, 지역별 일자리 공시제 도입을 위한 의견 수렴 및 협의(2010년 3월~5월), 관련 연구용역 추진(2010년 4월~9월)을 거쳐 2010년 7월에 사업계획을 확정·공표하였다.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가 도입된 이후 자치단체는 공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자리 전담부서를 신설하거나 인력을 보강하고, 일자리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등 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의지를 바탕으로 지역 일자리 부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였다. 또한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참여 자치단체의 일자리 대책 수립·추진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일자리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고, 일자리 담당자의 업무역량도 향상되었다.

이에 2014년도에는 고용률이 최초로 65%대를 넘어서고(65.3%), 2016년도에는 243개 전 자치단체가 참여하여 2016년 일자리창출 목표 및 대책을 공시하였으며('16.12. 월말),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2015년 고용률보다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일자리창출에 노력하였다.

향후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내실화하기 위해 지역 내 일자리 문제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고용문제를 협력하고 조율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 간 고용네트워크 강화와 더불어 지역고용 거버넌스 통합에 따른 시너지 극대화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중복성을 해소하고, 컨설팅을 통해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10) 사회적기업육성(포괄보조금사업)

우리나라에 사회적기업이 등장하게 된 것은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고용 없는 성장과 그로 인한 실업문제의 구조적 고착화, 소득불평등의 심화로 인한 일자리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면서부터이다. 더불어 저출산 고령화, 여성의 사회진출의 증가와 같은 사회구조적 변화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게 되었고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라 사적영역에서 제공되던 돌봄서비스의 사회화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급확대를 통한 적극적 고용창출 전략으로 2003년부터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이 추진되었

다.

그러나 외환위기 시 추진된 공공근로사업이나 자활사업 등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사회적일자리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이라는 양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유럽형 사회적기업 제도 도입이 논의되었다. 그 결과 2007년 1월3일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되었으며, 2007년 7월1일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되면서 2007년 10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사회적기업이 등장하게 되었다.

2010년부터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자치단체에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사회적기업을 통한 일자리창출사업 등 다양한 재정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그간 자치단체에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을 시작한 이래 2,842개소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발굴·지정하였고 그 중에서 1,035개소를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였다. 또한, 작년 한 해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1,550개소의 사회적기업이 참여하여, 저소득가정, 결혼이민자 등 취업 취약계층 7,551명에게 안정적 일자리 제공하였고, 그 결과 자치단체에서 일자리창출사업을 시작한 이래 사회적기업에서 5만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이뤘다.

사회적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기업 종사자가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54%(‘10년)에서 0.127%(‘15년)으로 높아졌고,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035%(‘10년)에서 0.126%(‘15년)으로 높아졌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 비중은 낮은 편이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61.6%이고,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수혜비율이 41.3%임을 감안할 때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통합문제와 사회서비스 배제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한 패러다임이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표 2-2-11 추진성과

(단위 명)

구 분	2016	2015	2014	2013	2012	-
일자리창출 수	2,842	2,474	2,037	1,548	981	...

(11) 선박관리산업 육성 지원

선박관리산업은 선원관리, 선용품 공급, 선박수리, 금융, 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서비스산업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며, 다른 연관 해운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가 큰 산업이다.

최근 세계 해운업의 경향은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박에 대한 소유와 관리를 분리하고 있는 추세로서 선진 해운국인 유럽과 미국, 홍콩, 싱가포르 등은 다양한 해운 정책과 제도를 통하여 선박관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선박관리산업은 선진 해운국에 비해 영세한 수준이며 국제화가 미흡한 실정으로 1984년 선박관리업이 도입된 이후 2016년말 기준 406개의 선박관리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업체가 중소기업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12년 7월 국내 선박관리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선박관리산업 발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선박관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시스템이 구축되었다. 현재 추진 중인 선박관리산업 육성지원은 선박관리전문가의 양성을 통한 전문역량강화, 복잡다양한 선원 및 선박 등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영비용 절감 및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으로 해외시장 확대에 목적을 두고 있다.

급변하는 해운환경에 능동적인 대처와 선박관리 업무의 전문성이 강화되는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여 양질의 선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선박관리전문가 양성 시급함에 따라 2012년 선박관리사업협회를 교육기관으로 지정, 교육과정을 양성과정(7개 세부과정)과 심화과정(6개 세부과정)으로 구분하여 2013년부터 매년 약 150명의 양성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금융기관의 선박보유량 증가와 국제협약의 복잡성으로 해운업이 소유와 경영으로 분리되는 추세에서, 선박관리산업 수요의 지속적 증가로 선박유치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중소형 개별기업이 진출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업계와 정부가 공동으로 해외마케팅 활동 추진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3년과 2015년, 2016년에는 일본, 2014년에는 그리스 등 상선을 많이 보유한 해운 선진국을 대상으로 해외투자 설명회를 적극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16년 우리나라 선박관리업체의 선박관리척수 2,015척 중 60.9%인 1,228척이 외국선박인 성과를 이루었다.

2017년에는 우리나라 선박관리산업과 비즈니스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선박관리산업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선박관리산업은 향후 조선산업과 연계되거나 해운S&P(Sale and Purchase)산업 등과도 연계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인적역량 강화, 해외진출 활성화 및 선진 선박관리 시스템 구축 등 산업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표 2-2-12 연도별 선박관리척수

(단위: 척,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선박관리척수	2,020	2,048	1,946	1,985	2,015
(외국선박비율)	(57.9)	(58.3)	(57.6)	(56.8)	(60.9)

(12) 실감미디어산업 R&D기반구축 및 성과확산

실감미디어산업 R&D기반구축 및 성과확산 사업은 실감미디어 산업 핵심기술개발, 품질인증, 인력양성 등 산업 기반 조성을 통해 국내 실감미디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중심의 실감미디어 산업 기반을 조성하여 경북, 전남의 지역 경제 발전의 모멘텀을 창출할 목적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로 83,674백만원(국비 50,694, 지방비 26,413, 민자 6,567)을 투입하였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각 센터에 구축된 장비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시작품 제작 지원, 산업재산권 출원, 기술지도·상담,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화 지원 등 총 99건의 기업지원을 하였으며, 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체 인력 맞춤형 재교육 등을 통하여 1,369명을 양성하였다. 국내외 논문 57건, 국제 특허 출원·등록 8건, 74건의 국내 특허 출원·등록하는 등 국내 다양한 콘텐츠, S/W 및 장비 분야 중소·중견기업이 창의력을 기반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실감미디어 인프라 구축 및 국내 융합형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

(13) 해외 통신사업자 인증랩 구축

동 사업은 글로벌 이동통신사 및 네트워크 장비 제조사로부터 해외 인증 권한을 국

내에서 획득하여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세계적 수준의 인증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수출향 모바일 융합 디바이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웨어러블, 사물인터넷(IoT), 미래이동통신(5G)등 관련 산업 지속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벤처 위주의 차세대 스마트 디바이스 지원체계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럽, 중국 등으로 수출하는 글로벌 이동통신사 전용 디바이스에 대한 노키아, 차이나 모바일 인증랩을 구축하고 인증권한을 획득하여 시험인증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2015년 6월에 사업을 시작해서 2020년 5월까지 세계 Top 네트워크 장비사업자인 노키아 인증랩 구축을 시작으로 이동통신사업자 시험인증 교두보를 마련하고, 중국 최대 이동통신사업자인 차이나모바일 인증랩 구축 및 유럽·중국 스마트 디바이스 및 다양한 IoT 기기 시험인증 서비스를 지원 할 계획이다.

2016년 7월에는 노키아 2G(GSM) / 3G(WCDMA) 전문 기술교육을 통한 인증권한을 획득하여 8월에 정식으로 해외통신사업자 인증랩을 개소하였고, 현재 노키아 2G, 3G에 대한 시험인증을 지원하고 있다.

해외통신사업자 인증을 통해 해외 시험인증 대비 제품 당 약 3.3억의 인증비용이 절감, 장기 대기 및 부적합 시 추가 소요기간 2~3개월 최소화를 통한 제품 개발 기간 단축, 제품 출시 전 해외 현지 인증 시 발생할 수 있는 디자인 및 핵심 기능 정보 유출 방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지역 내 산업기반인 정보통신, 전기·전자 등의 분야에서 해외통신사업자 인증랩 구축사업을 중심으로 지역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제도약을 추진, 향후 전후방산업 연계효과를 통한 스마트 기기 산업 시장 확대에 따른 지역 중소기업들의 제품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통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의 성과가 기대된다.

(14) 지역공동체일자리(포괄보조금사업)

행정자치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지원 사업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저소득 노인, 다문화 가정, 장년 실직자 등 소득 및 재산기준이 일정수준 이하인 취약계층에게 단기 지원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안정 및 생계를 지원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의 휴업·폐업이 증가하고, 취약계층이 늘어남에 따라 서민생활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민생경제를 정상화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하였다.

2009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실시된 희망근로사업에는 약 35만 명의 취약계층을 참여시켜 서민생활에 도움을 주었다. 「희망근로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급격한 고용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과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는 2010년 하반기 5만 명, 2011년 5만 명, 2012년 3만 명, 2013년 3만 명, 2014년 2만 명, 2015년 1만6천 명이 참여하는 등 2015년까지 약 19.6만 여명이 참여하였다.

2016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총사업비 44,304백만 원(국비 50%, 지방비 50%)을 투입하여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자를 참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연인원 9천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3월부터 10월까지 상·하반기 각각 4개월씩 나누어 실시한 결과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쪽방촌 주민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13,402명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에 기여하였다.

또한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제공으로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로의 전락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한편, 취약계층이 지역공동체 일원으로서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과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역현안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지역공동체 회복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7년에도 생산성·지속성·공동체성 제고를 위한 주민 공동작업장 육성(마을공방, 공동작업장) 강화를 통하여 기술습득 및 민간취업 기반을 마련하고, 참여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중소기업 참여자 지원금 개선을 통한 임금인상,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표설정 등 청년 참여 확대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표 2-2-13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수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총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수 (포괄보조사업, 국비)	34,733 (75,100)	20,080 (28,616)	16,226 (23,952)	13,402 (22,152)	84,441 (149,820)

(15) 산학연협력기술개발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의 우수인력, 장비 등을 활용하여 공동으로 현장애로기술을 해소하고 신기술, 신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1993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중소기업 산학연 협력사업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올해로 25년째 이어져오고 있는 산학연 사업은 현재까지 특허출원 건수가 5천여건, 3만여건의 기술개발 등 국내 중소기업의 R&D 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켰고 매출 중대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표 2-2-14 중소기업청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의 정책 변천과정

구분	주요제도 및 세부내용
1993	「공업발전법」에 의거 사업 시행(4년제 지방대학만 참여)
1996	중소기업청 개청으로 사업 이관
1998	전국컨소시엄제도 신설 : 사업참여 대상을 전문대학, 연구기관까지 확대
2004	주관기관 자체평가제도 도입 : 과제선정시 자체평가 20% 반영
2005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산학연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신청·접수 기관을 대학에서 중소기업청으로 전환 대학 실험·실습실을 [산학연협력실]로 지정하여 기술개발과 취업연계를 통한 인력양성을 시범 추진
2007	현장애로 과제와 기술혁신형로 구분 지원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 개선
2008	단기 위주의 현장애로 과제의 단계적 축소 및 선도형 과제 도입 국제산학연협력 R&D과제 신설
2009	선 기획 - 후 지원과제 도입 전자협약시스템 도입(처리기간 단축 30일→ 10일)
2011	창업기업(창업 5년 이내) 전용 R&D신설
2012	지역과제를 “창업”, “첫걸음”, “일반”과제로 개편하여 진행
2013	건강관리시스템 도입 저변확대형으로 개편됨에 따라 전국과제 및 기업부설연구소 사업 폐지 “첫걸음”과 “도약”과제로 개편 연구마을 사업 시범운영
2014	자율편성형 산학협력기술개발사업(첫걸음, 도약) 시행 기업부설연구소 사업 부활

구분	주요제도 및 세부내용
2015	자율편성형 예산 배정 확대 연구마을 신청자격 기존의 대학에서 연구기관으로 확대
2016	주관기관 변경 : 대학 · 연구기관 → 중소기업 기술바우처 제도 도입 사업화 지표 강화(사업성의 고용지표, 수출지표 설정)

2013년 중소기업청 R&D지원사업에 대한 전면 개편을 실시한 결과, 산학연공동기술 개발사업과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이 통합되었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R&D역량을 강화하는 첫걸음R&D와 연구역량이 미흡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도약R&D 사업 신설되었다.

2014년에는 국가연구개발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확대 및 산업별로 특화된 연구기관의 참여를 위한 산연전용과제를 신설하여 현재까지 758억원, 396개 과제를 지원하였고 묶음예산 지원방식을 통해 연구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성과위주의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자체 R&D 인프라를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연구기반을 갖춘 대학 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이를 집적하는 형태의 연구마을 사업을 2013년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700억원, 599개 과제를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지역별, 산업별 분포등을 고려한 24개 거점형 연구마을을 구축하여 중소기업 R&D특성화를 추진하였다.

2016년 하반기부터는 수요자 중심의 산학연 R&D 수행을 위해 주관기관을 대학 · 연구기관에서 중소기업으로 개편하였고, 기업의 의사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바우처제도를 시범 등도 도입하였다.

중소기업청 R&D에 있어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은 기술력이 상대적인 열악한 중소기업이 공동R&D를 통해 기술력을 확보하고 독자적인 R&D 수행이나 한단계 높은 정부R&D로 갈 수 있는 바탕이 되는 사업으로 향후 지속적인 대상 확대 등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밑거름이 되도록 계획 중이다.

(16) 창업인프라지원

정부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사업화 능력이 취약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기업에게 사업공간을 제공하고, 전문 인력을 통한 보육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1998년부터 창업보육(Business Incubating)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6년 말 전국에 266개 창업보육센터(대학 199, 연구소 17, 정부/지자체 10, 기타 등 40)가 지정되어 운영 중이며 기술창업의 산실 및 창업지원의 핵심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표 2-2-15 창업보육센터 운영 주체별 지정 현황

(단위 : 개)

합 계	대 학	연구소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기 타
266	199	17	10	9	31

표 2-2-16 창업보육센터 지역별 지정 현황

(단위 : 개)

합 계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266	36	19	33	25	33	49	4	16	14	15	18	4

2016년에는 총 8개 BI에 일반건물의 BI전환, 노후시설 개선 등의 리모델링 35억 원을 지원하여 보육공간 확충 및 환경개선을 추진하였다.

또한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인건비 및 교육훈련비, 입주기업 사업화 지원비 등 운영비 122억원과 창업보육센터별 보육역량 강화 및 입주기업의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한 멘토링, 브랜드 개발 등 자율 보육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총 81억원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결과 2016년 266개 BI에 입주한 계속기업(3,915개)은 평균 매출액 33.4% 및 평균 고용인원 20.3%가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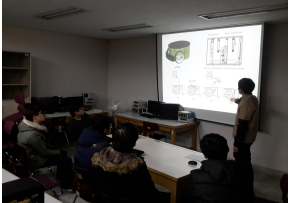
표 2-2-17 창업보육센터 계속입주기업 운영성과

(단위 : 개,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속 입주기업	3,140	3,718	4,089	3,915
평균 매출 증가율	27.9	34.7	42.3	33.4
평균 고용 증가율	14.1	20.3	21.9	20.3

아울러, 창업보육센터의 운영내실화를 위해 평가체계 재정비를 통한 창업보육센터간 경쟁력 향상을 유도, 운영이 부실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또는 지원중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보육과 투자를 연계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액셀러레이터 전환을 촉진하여 창업보육센터의 보육역량강화 및 선진화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림 2-2-10 창업인프라 사업 프로그램

		
창업보육센터 건립지원	입주기업 멘토링	사업화 성공 입주기업 제품

(17) 창의산업거점기관지원

창의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은 지역의 신산업 창출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창의 관련분야(바이오, 나노, 에너지, 기계, 로봇, 자동차, 항공, 전자전기 등) 산업경쟁력 향상의 지원기반이 되는 지역산업기술거점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의 창의 신산업 육성 및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사업은 기술개발과 기반조성의 두 분야로 구성되며, 기술개발은 전국단위 공모를 통한 지역 신산업·주력산업분야의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제품화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기반조성의 경우에는 지역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기관 등이 지자체가 제공하는 부지 혹은 유휴공간에 건축 및 장비를 구축하여 테스트베드, 시험인증, 기술개발지원 등을 기업에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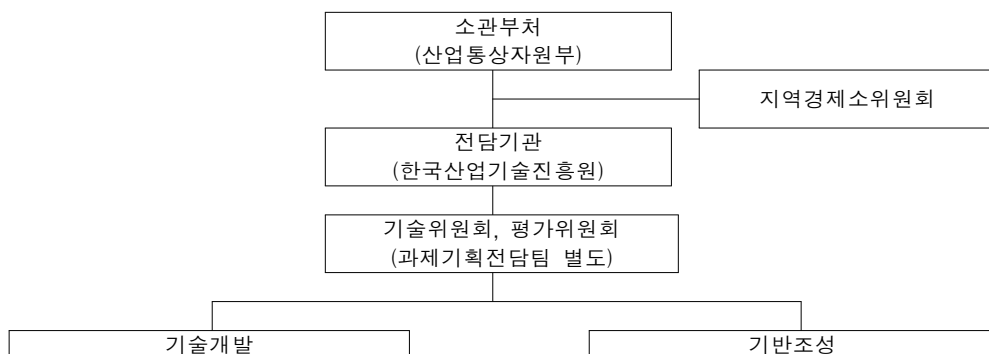
2016년부터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단위사업) 내 R&D 예산 과목 구조가 산업분류와 사업유형이 혼합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관리 효율화를 위해 3개 세부사업(창의, 시스템, 소재)으로 재편되어 추진되었다. 2016년 기준으로 36개 내역사업에

1,185억원 투자하였다.

기술역량이 취약한 지역 중소기업에 장비 등의 인프라 및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여 사회·경제적 성과 제고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여 우수한 성과를 도출하였다. 센터 건축을 토대로 구축된 장비를 활용하여 기업지원 및 애로기술 해결, 연계협력 강화, 사업화 지원 등의 성과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사업화를 활성화하였다. 그리고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으로 지역기업의 기술역량 확보와 제품화 및 시장진출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매출증대,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였다(2016년 139명).

향후에도 기반조성을 통해 지역기업의 기술개발·사업화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지원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지속성장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그리고 기술개발을 통해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지역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고 사업화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별·분야별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 방안, 사업 추진방향, 사업간의 연계성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그림 2-2-11 창의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추진체계



(18) 소재부품산업거점기관지원

소재부품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은 소재부품 분야 산업경쟁력 강화 기반이 되는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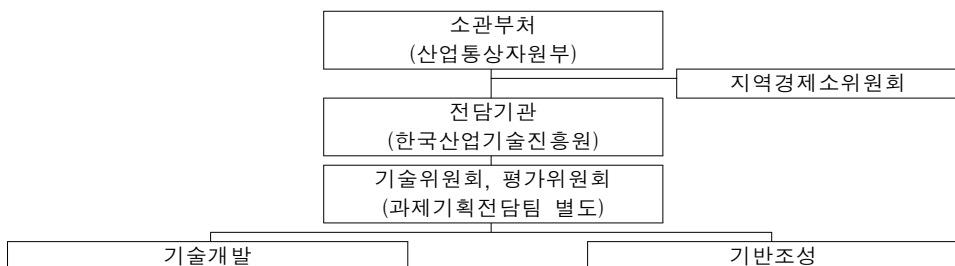
기반시설을 지역거점센터를 통해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산업기술 혁신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동 사업은 지역산업 거점기관 조성을 통해 연구시설, 장비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개발에 필요한 인프라의 독자적 구축이 어려운 소재부품 관련 중소기업에게 시제품 제작, 시험, 인증 등의 기술서비스를 제공한다.

2014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비 지원을 받고 있던 지역성장기반구축사업, 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사업 등 출연연 수행사업(일반회계)을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이관 후, 2016년 사업의 목적성 및 추진관리의 체계성 제고를 위해 사업구조가 산업유형별로 통합 재편되어 소재부품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창의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으로 재편되었으며 2016년에는 소재부품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9개 내역사업에 426억원의 국고를 투입하였다.

그간 지역의 신성장동력 창출과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지역에 연구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기업지원을 통하여 새로운 지역 클러스터를 구축함으로써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장비구축으로 구축장비 활용이 증대되고, 기업지원 활동이 다각화, 활성화되어 기업 성장 및 경쟁력 제고 및 제품화에 기여하였다. 2016년 기준으로 장비활용도와 장비가동률이 2014년 대비 각각 10배가 넘게 대폭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간 기술개발과제를 통해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으로 제품화 및 시장진출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매출증대,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향후 내역사업의 다양한 성과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성과목표의 효율성 검토 및 지역 및 전국의 관련 중소중견기업들이 구축된 장비를 적극 활용해 기술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활용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림 2-2-12 소재부품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추진체계



(19)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은 국가기간산업인 시스템 분야(기계, 로봇, 자동차, 항공, 전자전기, 조선, 해양플랜트 등) 산업경쟁력 향상의 지원기반이 되는 지역산업기술 거점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의 시스템 신산업 육성 및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사업은 기술개발과 기반조성의 두 분야로 구성된다. 기술개발은 전국단위 공모를 통한 지역 신산업·주력산업분야의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제품화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기반조성의 경우에는 지역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기관 등이 지자체가 제공하는 부지 혹은 유휴공간에 시험장 등을 건축하고 및 장비를 구축하여 테스트베드, 시험인증, 기술개발지원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2016년부터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단위사업) 사업관리 효율화를 위해 3개 세부사업(창의, 시스템, 소재)으로 재편되어 추진되었다. 2016년 기준으로 11개 내역사업에 1,278억원 투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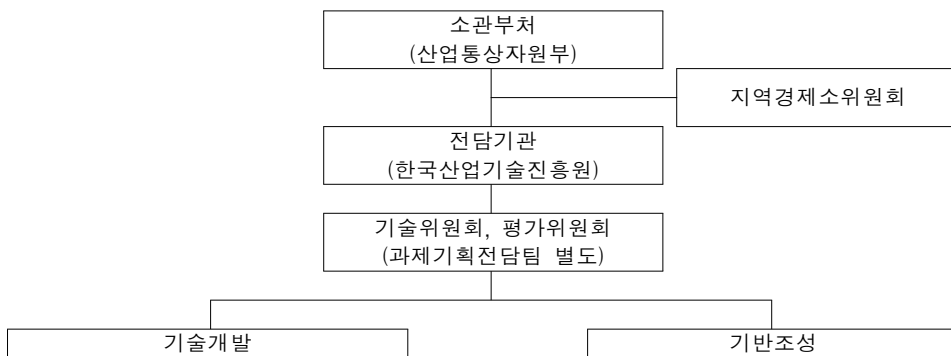
표 2-2-18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내역사업 (단위: 천원)

1	전자의료기기부품소재산업화기반구축	10,000,000
2	로봇비즈니스벨트조성사업	6,000,000
3	High-Tech 베어링산업 기반구축	3,000,000
4	로봇산업클러스터조성	21,676,000
5	차세대건설기계부품특화 단지조성	22,001,000
6	디자인융합Micro-모빌리티신산업생태계구축사업	5,700,000
7	수출전략형미래그린상용차부품기술개발	11,500,000
8	차부품고급브랜드화연구개발사업	10,167,000
9	초광역연계3D융합산업육성	33,770,000
10	항공분야 극한 전자기 환경 극복 기술 시험평가 기반 구축	2,000,000
11	3D 휴대용 스캐너 개발	2,000,000

기술역량이 취약한 지역 중소기업에 장비 등의 인프라 및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여 사회·경제적 성과 제고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여 우수한 성과를 도출하였다. 센터 건축을 토대로 구축된 장비를 활용하여 기업지원 및 애로기술 해결, 연계협력 강화, 사업화 지원 등의 성과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사업화를 활성화하였다. 그리고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으로 지역기업의 기술역량 확보와 제품화 및 시장진출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매출증대,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였다. 특히 지역 일자리 창출에 있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2014년 70명, 2015년 171명, 2016년 185명)

향후에도 기반조성을 통해 지역기업의 기술개발·사업화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지원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지속성장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그리고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지역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고 사업화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별·분야별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 방안, 사업 추진방향, 사업간의 연계성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그림 2-2-13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추진체계



(20)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센터구축

석유화학 산업은 생산액 112조원(2013년 국내제조업 3위), 무역흑자 318억 달러(2014년)를 기록한 국가 기간산업으로써 우리 경제·산업발전을 주도하고 있으며, 석유화학업계의 안전사고는 수출 및 무역흑자에 치명적 손실로 직결된다. 최근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 폭발, 누출사고의 잇따른 발생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 안전·예방’ 실현이 대두되고 있고, 화학분야 기술인력은 부족률 3.6%(평균대비 1.6배), 부족인원 4,593명(평균대비 2.2배)으로 12대 주력산업 중 인력공백이 가장 심각하여 현재 석유화학산업의 중심인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거 정년퇴직에 대비하여 체계적 교육을 통한 숙련인력 양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센터구축사업은 이러한 석유화학산업분야의 숙련기술인력 부족으로 인한 공정운전 안전사고 예방과 중소기업 중심 전문인력 육성 지원을 목적으로 2015년 5월부터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가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은 2019년 4월까지 총 4년간 사업비 250억원(국비 150억원,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담금 10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교육센터 및 장비 구축,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5년 당초 지원예산은 지역발전특별회계인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내에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센터구축사업(R&D)’으로 추진되었으나, 2016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R&D사업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인 ‘산업기반시설안전관리지원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재편되었다.

현재 조선산업 위기로 지역 경제 위축이 우려되어 석유화학 업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센터 조기 구축을 추진 중이며, 향후 주요 장비 구축 및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는 2018년 3월 임시개원 예정으로 2020년부터는 신규인력 年 300명, 재직자 교육 年 1,000명의 인력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석유화학산업분야의 관련 교육기관이 전무한 상황에서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센터구축을 통해 우수한 자질과 역량을 보유한 기술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석유화학산업 기술인력 순력도 제고를 통한 플랜트 대형사고 예방 및 기업체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지원 등 종합전문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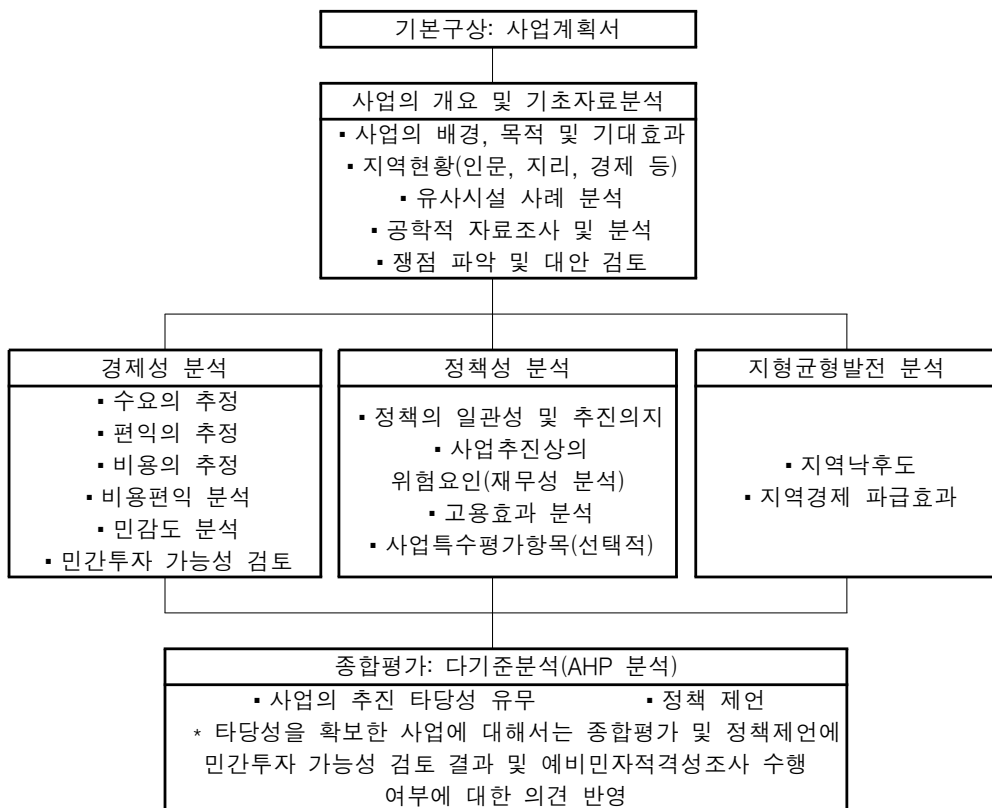
(21)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산업기술박물관 건립사업은 우리나라 산업화의 역사를 간직한 울산에 산업기술의 체계적 전시와 보존, 연구, 홍보, 교육체험관과 복합문화공간이 융합된 산업기술박물관을 건립하여 기술인의 자부심 고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사업은 총사업비 1,865억원, 건축연면적 28,800㎡ 규모로 2015년 2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면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그림 2-2-14 예비타당성조사의 기본적 수행체계



제2절 지역투자 촉진 기반 확대

1. 기업의 지역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강화

(1) 지역투자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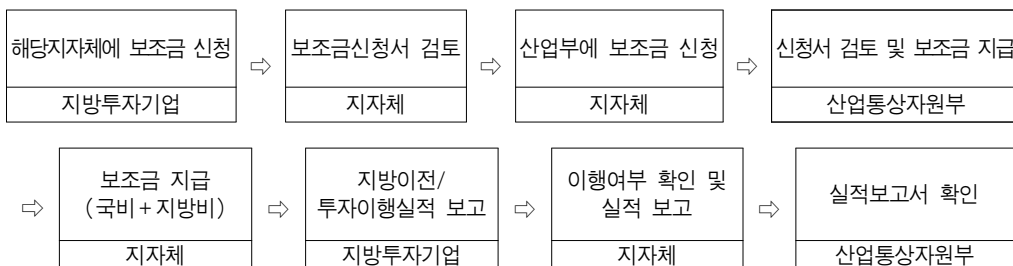
1) 기업 지방이전 촉진

1999년부터 세제·금융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을 시행하였으나 그 효과가 미흡하였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발전적 분업구조 형성과 상호협력을 통한 지역 간 동반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지원기준을 근거로 재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 온 기업으로서(부동산업, 소비서비스업, 건설업은 제외)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한다.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지원보조금 종류는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이 있다. 2004년부터 2016년까지 585개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치하기 위해 총 5,700억원(국비)의 지방이전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총 10조 9,415억원의 지방투자과 34,481명의 신규고용(계획기준)을 창출했다.

표 2-2-19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절차



* 신증설 기업, 국내복귀기업, 개성공단 입주기업지원 등 지원대상에 구분없이 동일한 절차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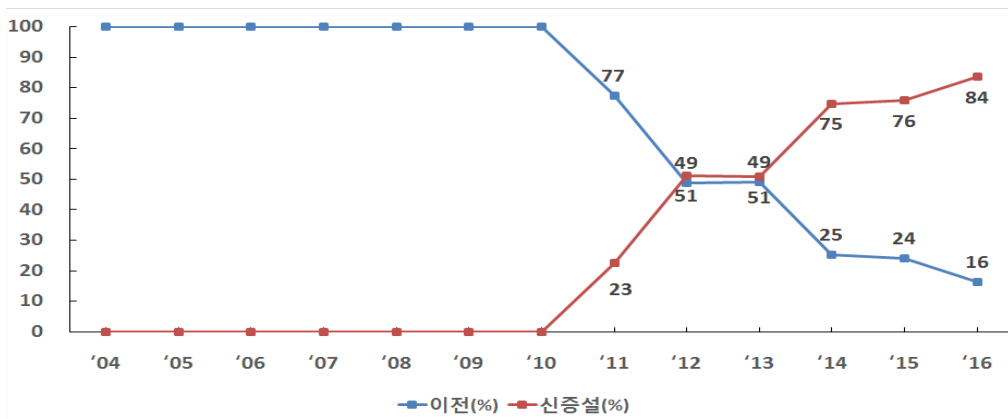
2) 지방 신·증설기업 지원

종전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이전보조금, 법인세 감면, 종전부지 매입지원, 금융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해왔으나, 지방에 소재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이 부족하여 투자 및 고용 유인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비수도권 소재 지방기업에 대해서도 신규투자를 통한 고용을 창출한 경우 신·증설 보조금을 지원하여 지역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산증대의 선순환을 도모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344개 지방 신·증설기업에 3,627억원(국비)을 지원함으로써 5조 8,686억원의 투자를 유도하고, 13,157명의 신규고용(계획기준)을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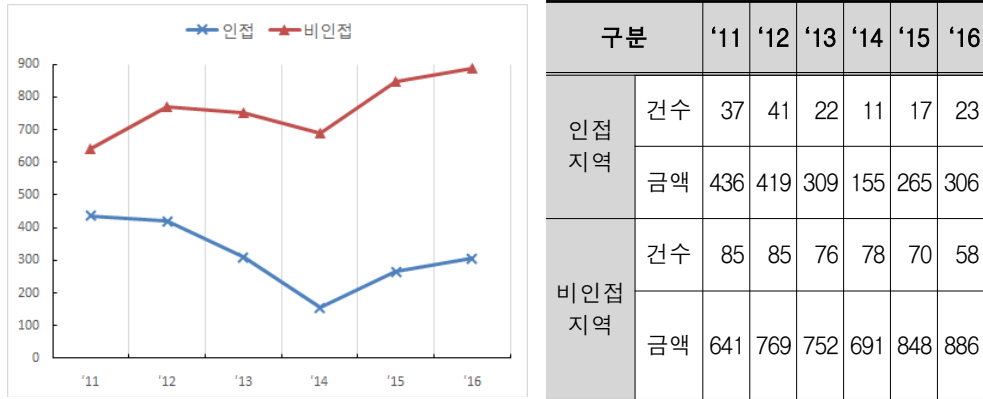
그림 2-2-15 지방이전투자 지원과 지방 신·증설투자 지원 비중



또한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이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집중되었던 것에 반해 기업의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한 지원은 그 외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져 수도권 인접지역과 그 외 지역간 지원규모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림 2-2-16 수도권 인접지역과 비인접지역의 지원실적 비중

(단위 : 억원)



* 강원·충북·충남 지원비중 : ('04) 85% → ('11) 40% → ('13) 29% → ('15) 24% → ('16) 26%

3) 국내복귀기업 지원

2012년 하반기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U턴 기업)에 대해서도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 지원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에서 해외사업장에서의 상시고 용인원 30명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2016년까지 36개 국내복귀기업에게 160억원(국비)을 지원하여 1,497억원의 지방투자를 유치하고, 2,025명의 신규고용(계획기준)을 창출했다.

4)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지원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남북관계 영향과 같은 외부적 환경요인에 따라 생산활동이 중단되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방에 백업공장 구축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요구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협력사업 승인을 받거나 신고 수리를 통해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기업 중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2014년부터 시작하여 1개 기업이 11억원을 지원받았다.

2016년 2월에는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조치로 인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국내 대체

투자를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개성공단 중단조치 당시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123개 기업의 국내 대체투자를 지원하는 제도가 시작되었다. 이 보조금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더 높은 보조율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 투자도 지원대상으로 허용하였다. 이 보조금을 통해 2016년 한해 동안 10개 기업에 129억원(국비)을 지원하여 841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344명의 신규고용(계획기준)을 창출하였다.

5) 지방기업의 공장스마트화 지원

2015년 ‘제조업 3.0 혁신전략’에 따라 지역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정책이 시행되었고, 지역투자촉진사업을 통해서 지방기업의 공장 스마트화를 지원하게 되었다.

이 사업을 통해 총 186개 업체의 스마트공장 구축에 60억원(국비)을 지원하였으나 정부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의 구조 재편에 의하여 지역투자촉진사업을 통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은 2016년을 끝으로 종료되었다.

(2) 투자유치기반 조성

투자유치기반 조성사업은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한 첨단기술 도입, 일자리 확보 등의 효과를 창출하여 우리나라 산업기반 고도화 및 지속적 경제성장을 도모하고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 1994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토지매입, 현금지원, 투자유치활동 등을 지원한다. 외투기업의 높은 지가부담을 완화하여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 제공하고, 고도기술 수반 및 고용창출 효과가 큰 전략적 프로젝트 유치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주한상의 간담회, 외투기업 경영실태 조사,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외국인투자유치 현황을 점검, 이를 제도 개선 및 예산에 반영하고 있다.

표 2-2-20 2016년 외국인투자유치사업 지원 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원금액	시행기관	지원형태
부지매입비	43,947	산업통상자원부	직접수행
현금지원	6,051	산업통상자원부	민간보조
투자유치활동비	7,479	KOTRA, 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등	민간보조
임대료지원	400	산업통상자원부	자치단체보조
국내복귀기업지원	729	KOTRA 유턴기업지원센터 등	민간보조
정책연구비 등	305	산업통상자원부	직접수행
합 계	58,911		

2016년에는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총 589억원이 지원되었다. 분야별로는 외투기업의 지가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부지매입비 439억원, 전략적 프로젝트 유치를 위해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제공하는 현금지원 61억원, 투자유치단 파견, 투자가 초청, 투자환경 개선 등 투자유치활동비로 75억원이 지원되었으며, 정책연구용역 및 국내복귀기업지원 등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적극적 투자유치 활동의 결과로 2016년도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213억 달러로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이는 기존 최고 실적이었던 2015년 209억 달러 대비 1.9% 증가한 성과이다.

표 2-2-21 2009~2016년 외국인직접투자 실적(신고기준)

(단위 : 백만 달러)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1,484	13,071	13,673	16,286	14,548	19,003	20,909	21,299

이는 한·중 FTA 활용, 정상외교 등을 포함한 적극적 투자유치활동, 각종 규제개선, 글로벌 헤드쿼터와 연구개발센터 유치 노력 등 국내 투자 및 기업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특히, 외국인투자기업 최고경영자 간담회 및 주요국 대상 한국투자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한 현 정부의 친화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가 성과로 연결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7년에는 미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 및 통상정책, 영국의 EU탈퇴 후속 협상, 동북아 정세 등 투자유치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나, 미국의 견조한 성장세를 바탕

으로 세계경제의 원만한 회복 전망, 한·중 FTA 효과 및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에 대한 지속적 노력으로 국가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글로벌 기업 헤드쿼터, R&D센터, 핵심소재부품, 고도기술수반, 고부가 서비스 등 중점유치 분야 위주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제3절 산업단지 고도화로 창조경제 구현

1. 노후산단 창의·혁신공간 전환

(1)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선진국을 따라잡는 형태인 기존의 Catch-up 전략으로는 발전에 한계가 있어 공정 혁신, 자체 기술개발 등을 통한 기술집약 제품을 생산하는 혁신주도형 성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원천적인 기술·지식을 창출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과 이런 기술·지식을 실제로 제품에 적용하는 산업현장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 즉, 산·학·연이 서로 상호 긴밀한 협조관계 속에서 혁신이 창출되는 혁신클러스터 공간이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표 2-2-22 전국 산학연합의체 현황 (Mini-Cluster : MC)

(단위 : 개사,명)

구 분	기업	대학	연구소	지원기관	합계	비 고
개사(명)	7,804	765	281	732	9,582	85개 MC

표 2-2-23 R&BD 공동 협력과제 지원현황

(단위 : 건)

연도	R&D	시제품	산재권	마케팅	교육	기타	기관연계	합계
2015	232	-	192	226	22	47	276	995
2016	223	76	222	226	15	87	153	1,002

표 2-2-24 기업성장지원센터 지원현황

(단위 : 개사,건)

집중 육성기업 지원				입주기업 지원(육성기업 외)			
구 분	2015	2016	합계	구 분	2015	2016	합계
육성기업수	82	84	166	지원기업수	783	1,411	2,194
컨설팅건수	360	381	741	컨설팅건수	1,740	1,783	3,523

산업단지가 생산중심의 공장 등이 밀집되어 생산기능은 뛰어난 반면 연구개발 역량은 매우 취약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R&D역량 강화와 산업주체간 연계를 통해 산업

단지를 지식, 정보가 교류되고 창조혁신이 선순환되는 혁신클러스터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이 시작되었다.

2005년 4월 창원, 구미, 울산, 반월·시화, 광주, 원주, 군산 등 7개 단지를 시범단지로 하여 진행되었으며, 2007년 말에 남동, 오창, 성서, 녹산, 대불 등 5개 단지가 추가 지정된 후, 2010년 4월부터는 5+2 광역경제권 정책에 따라 전국의 산업집적지로 사업 범위를 확대되었다. 최초에는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사업’이라는 명칭이 사용되다가 광역경제권 개편 이후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R&BD 네트워크 구축·운영, 산단 기업성장지원센터를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2016년 예산 587.2억원).

R&BD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산학연협의체인 미니클러스터(Mini-Cluster, MC)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미니클러스터란 업종별·기술 분야별로 기업을 중심으로 대학, 연구소, 지원기관 등으로 구성된 소규모 협의체로서 문제인식을 통해 애로 및 해결사항을 발굴해 과제화하고, 이를 MC에 참여하는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통해 과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016년 12월말 전국에 총 85개의 미니클러스터가 구성되어 있으며, 9,582명의 산학연 관계자가 활동하고 있다. 교류활동을 통해 발굴된 과제는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 사업비 지원을 통해 협력과제로 진행하며, 2016년 기준 1,002건의 공동 협력과제를 진행하였다.

지난 10여년 이상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에서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으로 변신, 확대해 온 동 사업은 이제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IoT, 스마트공장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정부 핵심사업으로 다시 한번 재도약을 위한 변신을 해야 할 때이다.

(2) 산학융합지구구성

2011년부터 산학융합지구구성사업을 추진하였다. 동 사업은 산업단지에 대학과 기업연구소를 유치하여 청년들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공간(산학융합지구)을 조성하고, 조성된 산학융합지구를 중심으로 산업현장에서 맞춤형 교육과 R&D, 취업활동이 연계·선순환되는 산업인력 양성의 선도모델을 만드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특히 산업단지 내에 대학 캠퍼스 조성 및 산업단지 관련 학과를 직접 산업단지로 이전하여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직장생활과 대학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先취업-後진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즉,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 해결 및 기업활성화에 도움이 됨을 물론, 생산 중심의 산업단지를 생산, 교육, 문화가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으로 재창조하여 근로자에게 평생 교육의 기회 확대 및 QWL(Quality of Working Life)를 향상시켜 산업단지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1년도에는 반월·시화(경기), 구미·왜관(경북), 군산새만금(전북), 2012년도에는 대불(전남), 오송(충북), 울산, 2013년도에는 당진(충남), 2014년에는 창원(경남), 2015년에는 부산, 여수(전남), 2016년에는 제주, 인천, 나주(전남)를 선정하였다.

동 사업은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추진 중에 있으며, 양 부처는 대학의 산업단지 이전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학융합지구 지정을 통해 지구 조성비 및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비 일부를 민간자금과 매칭하여 지원하고, 교육부는 대학이 산업단지에 캠퍼스를 조성할 경우 토지 및 시설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2016년까지 시화·군산·구미·대불(전남)·오송, 당진 등 6개 지구에서 총 14개 대학 32개 학과 8,260명, 기업연구소 202개소가 이전을 완료하여 대학중심으로 산학 공동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학공동연구 성과로 R&D 244건, 사업화 프로젝트 107건 등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혁신과 더불어 총 1,186명의 학생이 참여기업 취업에 성공하였다. 아울러, 기 재직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계약학과 19개 학위과정에 5,425명이 참여하여 891명 학위 취득, 비학위 115개 과정을 통해 14,085명에게 현장 직무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었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2014년 9월 산업단지 50주년 행사를 통해 발표된 「노후산단의 스마트혁신단지化」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실질적인 산학융합을 통해 현장맞춤형 인력양성, 근로자평생학습, 기업지원 등 산업단지 내 대학에서 이론 교육과 현장실무를 병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여 사업성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3)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지원사업

1980년대 이전에 조성된 노후 산업단지는 산업중흥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조성 후 시간 경과에 따라 도로와 주차장,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과 지원·편의

시설이 부족하여 생산활동에 장애가 되거나, 도시 확산으로 산업단지가 도시 내부로 편입되어 주거지 등과 인접하면서 공해·소음으로 인근 주민과의 마찰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노후화된 산업단지들이 새로운 기업 수요 및 도시기능에 맞게 현대화된 산업단지로 재생될 수 있도록 산업기능과 기반시설 등을 시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으나, 기반시설의 설치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지자체의 재정 여건상 자체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하고, 수익성이 낮아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업종 전환, 기반시설 정비, 지원시설 확충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 함으로써 첨단 산업단지로의 재정비 및 도시 기능의 종합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06년부터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타당성 분석 연구 및 실태조사, 그리고 재정비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09년에는 노후 산업단지 재생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으며, 같은 해 9월 시범사업지구 4개소(대전, 대구, 부산, 전주)를 선정하였다.

2010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재생사업에 산업단지 주변과 공업지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산업단지와 같이 재생사업단지도 조세와 부담금을 감면토록 하였으며, 산업단지 지원지침을 개정(2011년)하여 재생단지 내부도로 등 국비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재생사업에는 시행계획 수립비, 도로·주차장 등 필수 기반시설 비용의 50%를 국비 지원한다.

표 2-2-25 연도별 예산 지원액

(단위 : 백만원)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예산	3,000	-	-	4,000	4,300	27,500	38,500	26,900	27,000

이들 시범사업지구 네 곳에는 사업완료(2026년)까지 국비 3,200억원 가량을 투자하여 낙후된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첨단 업종의 산업단지로 개편할 계획이다. 2014년도에 선정된 2차 사업지구 4개소(춘천, 안산, 구미, 진주)도 재생지구 지정(2017~2018년) 및 사업 타당성 분석을 거쳐 순차적으로 국고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5년도에 추가

선정된 3차 사업지구 10개소(성남, 인천남동, 청주, 광주하남, 익산, 양산, 대구성서, 서울온수, 순천, 대구염색)는 2016년부터 계획수립비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2017년 상반기에도 5개소(4차)를 선정하여 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노후 산업단지의 경제적 중요도, 혁신역량, 기반시설 노후도, 기업 및 근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후한 산업단지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젊은 인재가 모이는 활력있는 산업단지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한편, 재생사업의 추진속도를 높이고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민간공모 재생사업 도입,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 강화 등을 골자로 2015년 8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으며, 주택도시보증기금 출범에 맞추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표 2-2-26 노후산업단지 현황 (준공 후 20년 경과, 2016년말 기준)

구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단지 수	입주 업체
	단지명	개발년도	입주업체	단지명	개발년도	입주업체	단지명	개발년도	입주업체	단지명	개발년도	입주업체		
국가산업단지	여수	69	283	한국수출 구미1	74	10,715	옥포	80	1	울산·미포	91	859	20	42,244
				익산1	73	1,327	죽도	85	1	포항 (2연관)	92	101		
				창원	74	208	고정	85	43	대덕연구1	92	60		
					79	2,707	광양 (원관)	89	151	시화	93	18,082		
							보은 (1차)	89	1	반월				
							진해 (1공구)	89	3	온산	94	357		
							남동 (1단계)	89	6,731	군산	95	190		
										구미2,3	95	369		
										북평	95	56		
일반산업단지	대구3 [재생]	68	2,498	원주	70	21	양산	81	105	신평·	90	488	68	20,021
	전주1 [재생]	69	123	우산	71	176	정읍1	81	7	장림 (협업)				
	후평 [재생]	69	81	인천 기계	71	187	진주	81	515	송탄	91	150		
				서울	71	187	상평			하남1-3	91	457		
				온수	71	187	소촌	83	45	(3차)				
				인천	73	456	달성차	83	322	문막	91	20		
				대전1	73	124	강릉	83	45	신평	92	5		
				[재생]	73	124	중소			조치원	92	19		
				사상	75	2,818	하남1-3 (1차)	83	206	천안2	92	71		
				[재생]	75	551	오천	83	49	상수	92	10		
	대구			대구	75	551	본촌	83	154	성서2	92	1,073		

			검단 성남 서대구 [재생] 대전2 [재생] 대전 주변 지역[재생]	76 78 79 79	3,177 2,225 96 41	송 암 신평· 장림 (기존) 향남 제약 안성1 순천 전주2 반월 도금 대구 염색 성서1 하남1-3 (2차) 문평 청주	83 84 85 85 86 87 88 88 88 88 89 89 89 89	66 145 54 49 37 22 104 125 898 330 8 399	왜 관 (기존) 안성2 충주1 상봉암 평택 경산1 강화 화점 완주 외동 문발1 현도 고령1 정읍2 부강 공도 인천 서부 도하 건천1 가울 원곡 익산2 동향 마정 대풍	92 93 93 93 93 94 94 94 94 94 94 95 95 95 95 95 96 96 96 96 96 96 96 96	273 56 43 5 63 194 15 88 22 15 4 68 69 13 4 256 1 7 2 6 167 14 74 10		
합계	4	2,985	15		24,829	28		10,616	41		23,835	88	62,265

* 개발년도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망 산업단지 준공일 기준으로 산정(1996년 12월말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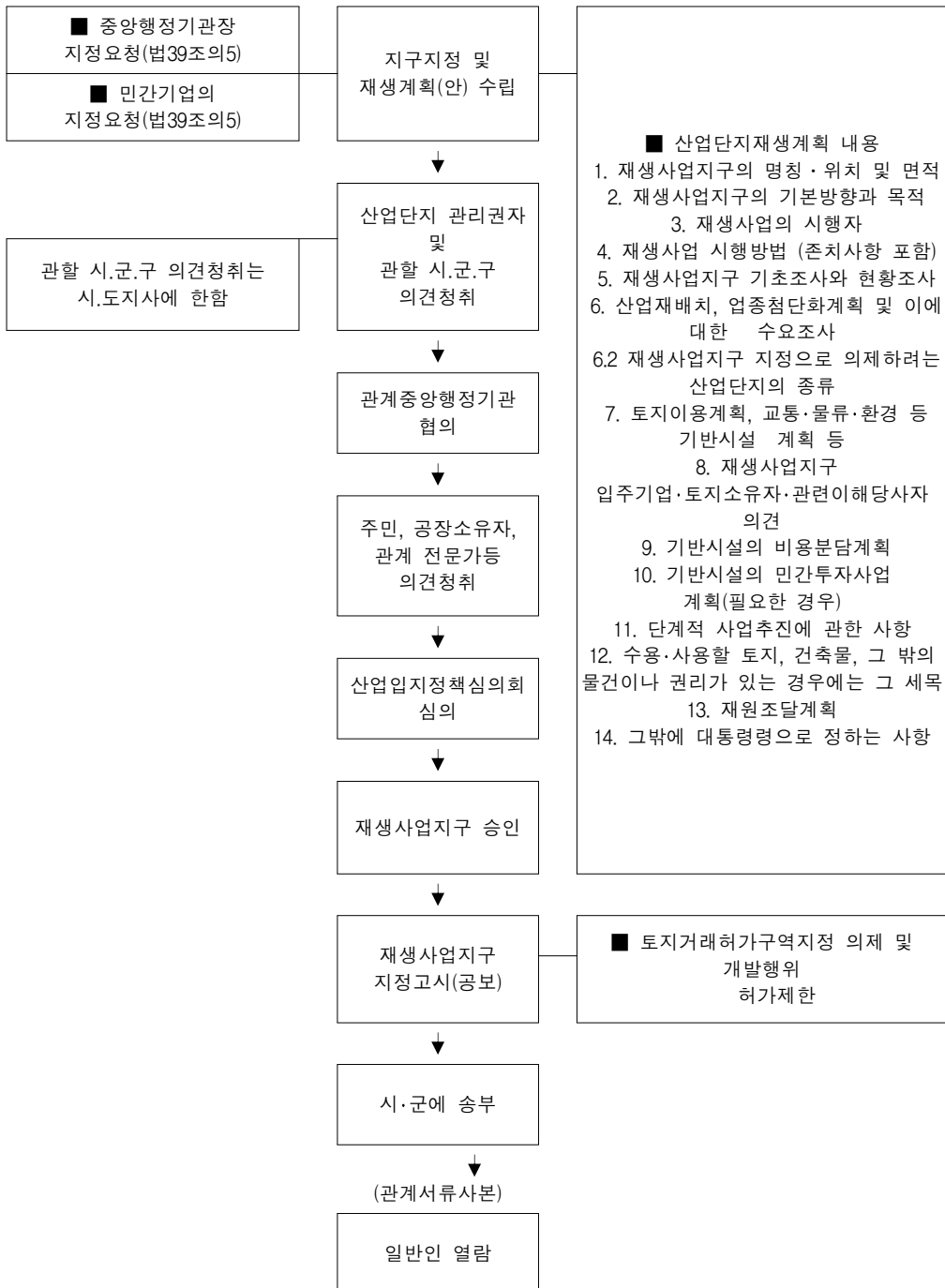
* 입주업체 : 산업통상자원부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2016년 12월말 자료 중 입주계약업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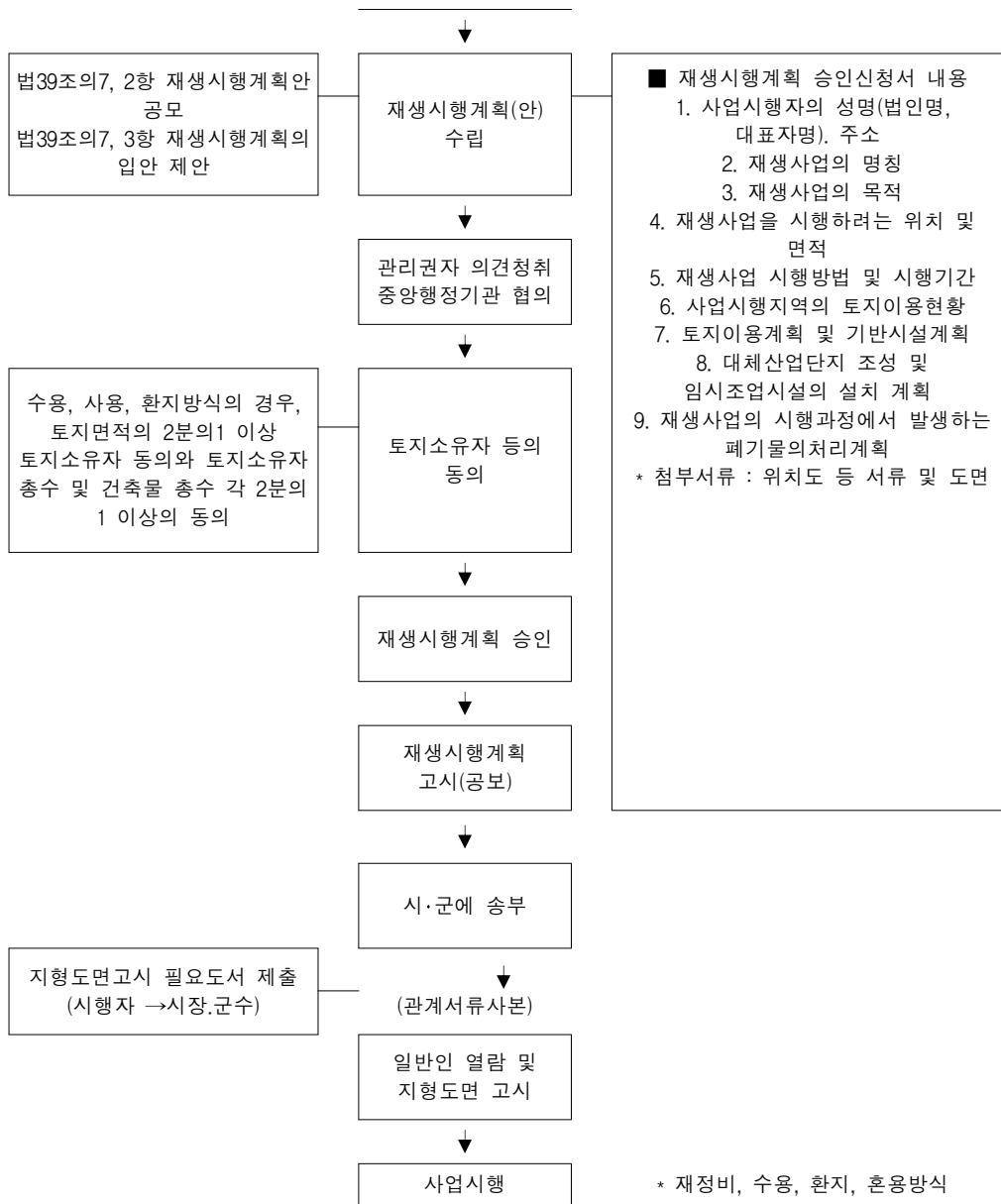
표 2-2-27 노후산업 재생사업 지구별 현황

명칭		지구지정 / 조성기간	규모 (천㎡)	주요 사업 내용(안)	비 고
【 1차 지구 】					
대전 1·2		'12.9 / '10~'20	2,318	· 기존 핵심산업(기계·장비) 집적화 · 성장유망업종(컴퓨터·정밀기계) 유치 ·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 · 환경유해업체 이전 유도 · 선도사업구역 개발(LH)	
대구	3 공단	'13.12 / '09~'24	1,679	· 기존 우세업종 고도화 · 신성장동력산업(뿌리산업 그린복합지구, IT· 융합부품, 안경·광학 등) 유치 ·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서 대구	'13.12 / '09~'24	2,662	· 기존 핵심산업 첨단화(신소재 섬유, 차세대 기계·금속 등) ·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 선도사업구역 개발(LH)	
전주 1		'12.6 / '10~'20	1,805	· 기존 전략산업(탄소)과 연계하여 첨단업종 (전자·전기 등) 유치 · 행복주택 및 지원시설용지 조성 ·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부산 사상		'15.4 / '10~'20	3,021	· 기존업종(금속가공, 신발제조 등) 집적화 · 특화업종(IT, 전자부품, 정밀기계, 출판, 영상 등) 유치 ·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 2차 지구 】					
춘천 후평		'17.상 / '15~'24	477	· 도로확충 및 녹지 확보 · 바이오연구소 유치 · 지식산업·물류센터 건립	
안산 반월		'17.상 / '15~'25	1,754	· 융·복합단지 조성 · 노후 수도권,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 · 공원 및 지원시설 조성	
구미 1		'17.상 / '14~'24	10,223	· 성장유망산업(IT융합, 탄소섬유, 기계, 그린에너지 등) 유치 · 주차장 및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 도로 정비, 자전거도로 설치	
진주 상평		'17.하 / '14~'25	2,135	· 도시형첨단업종, R&D 산업 도입 · 컨벤션, 지식산업센터 건립 · 도로 확장, 주차장 확충, 공원 조성	

명칭	지구지정/ 조성기간	규모 (천 ㎡)	주요 사업 내용(안)	비고
【 3차 지구 】				
성남 일반	'17.상 / '15~'25	1,763	· 디자인산업을 테마로 하여 지식산업 중심의 도심형 복합 산업단지로 재편	
남동 국가	'17.하 / '15~'25	9,574	· R&D역량 강화 및 노후화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융복합 창조산업의 메카로 육성	
청주 일반	'17.3.16 / '16~'24	4,099	· Inno-Square(혁신지원공간)와 Eco-Square(산업집적공간) 조성을 통해 오송·오창·세종의 혁신 거점으로 육성	
하남 일반	'18.상 / '16~'21	5,967	· 기업지원, 문화·편의시설 확충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해 청년이 중심이 되는 창의혁신기반 구축	
익산 국가	'18.상 / '16~'20	1,336	· 주력산업의 고도화 및 유망 신산업 창출을 위한 혁신 플랫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양산 일반	'17.상 / '16~'27	1,528	· 주변지역을 산단에 편입시켜 교통체계 효율화 및 부족한 산업공간 추가 확보하고 혁신역량 강화	
성서 1·2	'17.상 / '16~'20	7,437	· 교통·물류기반 확충, 유망산업 등의 집적화를 통해 지역경제 혁신거점으로 육성	
서울 온수	'17.상 / '16~'25	158	· 제조업 기반의 기술(ICT) 융합형 산업단지 (Industry 4.0)로의 점진적 고도화	
순천일 반	'17.하 / '16~'20	582	· Green Network 구축 사업과 住·商·工 거점 개발을 연계하여 산단 활력 증대	
대구염 색	'18.상 / '16~'20	846	· 염색업체 집적화 및 공동시설(물류센터, 발전소, 폐수처리장) 확충을 통해 염색산업 첨단화	
【 4차 지구 】				
천안 일반2	'18.하 / '17~'22	823	· 진입도로 확장 등 재생사업과 비즈니스센터 건립 등 구조고도화사업으로 경쟁력 강화	
원주문 막	'18.하 / '17~'28	410	· 산단주변 도로정비 및 주차장 개선, 어린이집 등 지원시설 설치 등으로 근로환경 개선	
여수오 천	'18.하 / '17~'23	220	· 산단도로 확장, 체육시설,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시화국 가	'18.하 / '17~'22	2,246	· 차로정비, 주차빌딩 설치, 소공원설치 및 지식 산업센터 건립 등으로 지역특화산업 육성	
창원국 가	'18.하 / '17~'26	25,302	· 진입교량 등 노후교량 정비, 공영주차장 확충 및 지능형 기계문화화조 선도지구 구성 등	

표 2-2-28 산업단지 재생사업 절차도





2. 입주기업 혁신역량 강화 및 정주여건 조성

(1) 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

2016년도 산단환경개선펀드사업은 창원국가산업단지, 익산국가산업단지, 남동국가산업단지, 청주일반산업단지의 4개단지 내 유희부지를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출자금 600억원과 민간투자 유치 등을 통해 총 2,697억원(민간 2,097억원)의 신규투자를 창출하였다. 이로써 6년간('11~'16) 정부예산 1,410억원을 마중물로 근로자용 지식산업센터 및 기숙사, 근로자 오피스텔, 복합시설(지식산업센터+복지·편의시설(업무, 문화집회, 근생)) 등 11개 사업에 총 6,199억원의 투자를 창출하여 지원 중이다. 이 시설들은 산업단지 입주 희망업체에 대한 입지 제공 및 근로자들의 근로·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도부터 혁신지원기관을 단지 내로 집적화하는 혁신지원센터 건립사업에 부평, 창원, 대불, 여수, 양산의 5개 혁신산업단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출연금 200억원(각 센터별 40억원/3차년도 사업)을 지방·민간비 등 256억원과 매칭하여 총 456억원 규모의 혁신지원센터 5개소 건립을 추진 중이다. 지역별 특화산업의 육성과 기업성장 지원 등을 통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및 업종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단지 내 부족한 정주여건의 개선을 위해 추진한 산업단지 편의시설 확충사업('14~'15)은 서울디지털 및 창원, 대불, 반월시화, 구미,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근로자 기숙사 7개와 주차장 확충 및 교통체계 개선 3개 등 총 10개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 출연금 165억원에 지방·민간비 등 328억원을 매칭하여 총 493억원 규모로 추진 중이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산업단지 내로 청년 인력의 취업 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산업단지 경쟁력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정부 부처별 산업단지 지원 사업들을 지자체를 대상으로 합동공모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다. 2016년도에는 25개 산단(33건)에 4개 부처(고용부, 산업부, 국토부, 미래부) 10개 사업(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산재예방시설, 산단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등)으로 국비 433억원을 지원하였다.

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의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노후 산업단지가 젊은이들이 일하고 싶은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되고, 혁신적인 기업입지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표 2-2-29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사업 추진 현황

구 분	산 업 단 지	총 투자액(정부 투자금)	투자 대상
2011년	반 월	606억원(150억원)	호텔 및 오피스텔
2012년	시 화	394억원(160억원)	PCB·도금업종 집적화공장
2013년	창 원	428억원(100억원)	근로자 오피스텔
2014년	구 미	580억원(130억원)	근로자 오피스텔
2015년	시 화	521억원(100억원)	근로자 오피스텔
	부 평	512억원(85억원)	공장, 업무시설 등 복합시설
	성 서	461억원(85억원)	지식산업센터 및 기숙사
2016년	창 원	904억원(150억원)	복합지식산업센터
	익 산	543억원(220억원)	지식산업센터, 호텔&컨벤션
	남 동	470억원(80억원)	복합지식산업센터
	청 주	780억원(150억원)	복합지식산업센터
소 계		6,199억원(1,410억원)	11개 사업

(2) 종합비즈니스센터

최근 들어 산업생산 패러다임의 변화로 기업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산업환경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으나, 1980년대 이전에 조성되어 노후화된 산업단지는 생산기능 위주의 단순 공업집적지에 불과해 기업 활동에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단지 내에서 제공받기 어렵다. 특히,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는 기업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필요한 지원기능을 개별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지고 생활의 편리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산업단지 내의 후생복지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에서 산업단지 근로자 이·퇴직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입주기업의 인력난 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산업단지 내 근로자를 위한 문화·복지기능 확충을 통해 근로 불안요소를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산단 내 비즈니스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및 쾌적한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서 기업지원 서비스,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목적 복합시설인 종합비즈니스센터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비즈니스센터의 기능상 공공서비스, 창업보육, 시험·연구시설, 회의장 등 기업지원을 위한 비수익성 사업이 대부분으로 민간사업으로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어 사업의 필요성과 공익성을 감안하여 최소범위에서의 정부 자본보조를 센터 당 40억원 정액으로 자치단체 지원과 자치단체 지방비 40억원이상 1:1매칭을 통해 센터 당 총사업비가 최소 80억원 이상 200억원 내외 규모로 건립하여 자치단체가 운영한다.

종합비즈니스센터는 표준모델을 준용하여 기업지원 및 문화복지시설 등을 조성한다. 산단 내에 부족한 기업지원기관, 편의시설 입주, 회의공간 마련 등으로 해당 산업단지 내에 기업 및 근로자 지원 기능을 확충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표 2-2-30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표준모델

구 분		내 용
공공시설	컨벤션	국제회의장, 세미나실, 전시·홍보관
	창업·R&D, 교육·연수	BI, 기업연구소, 유아보육시설, 근로자지원센터 등
	주차장	주차장
기업지원시설	공공서비스	출입국, 환경, 노동사무소, 중진공 등
	컨설팅 서비스	법무사, 세무사, 공증인, 회계사 등
	지식기반 서비스	정보통신서비스, S/W, 전자상거래, 광고 등
문화복지시설	숙박시설	게스트하우스
	체육문화	피트니스, 수영장, 공연장
상업시설	금융 등	은행, 증권사, 보험사, 창투사
	근린시설	스카이라운지, 구내식당, 레스토랑, 매점 등

본 사업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인천, 대구, 시화, 구미, 군산, 김해, 청주, 울산 8개 센터가 완공되어 운영중이며, 2017년 3개 센터(광주, 익산, 제주) 공사가 마무리 되면 총 11개 센터가 건립되어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다.

표 2-2-31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지원

(단위 : 억원)

종합비즈니스센터 (국비/지방비/민간)		'07~'11	'12	'13	'14	'15	'16	계	'17	비고
			43.5	46.5	57	29	39		40	
인천	370(40/330/0)	40	-	-	-	-	-	40		준공
구미	87(40/47/0)	40	-	-	-	-	-	40		준공
시화	231(40/90/101)	40	-	-	-	-	-	40		준공
성서	196(40/49/107)	40	-	-	-	-	-	40		준공
군산	180(40/140/0)	25	13.5	1.5	-	-	-	40		준공
김해	313(40/273/0)	-	20	20	-	-	-	40		준공
청주	125(40/40/45)	-	10	5	25	-	-	40		준공
울산	120(40/80/0)	-	-	10	15	15	-	40		준공
광주	80(40/40/0)	-	-	-	5	6	29	40		준공
익산	175(40/40/95)	-	-	10	7	1	5	23	17	공사중
제주	100(40/40/20)	-	-	-	5	7	5	17	23	공사중

(3)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사업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 사업은 산업단지의 분양가 인하 및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1997년부터 국가산업단지 및 50만㎡ 이상의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 진입도로 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2005년부터 산업용지의 공급확대를 위하여 산업단지 진입도로 국고지원 대상을 국가 산업단지 및 30만㎡ 이상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1997년 사업에 착수한 이후 2016년까지 총 176건, 544km를 완료하였고, 2017년에는 3,821억원을 투자해 65건, 100km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표 2-2-32 산업단지 진입도로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단위 : 억달러)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총계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	73,087	7,629	7,960	4,948	93,624

(4) 지역거점조성지원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지역거점조성지원사업은 국가경쟁력 높이기(10%) 일환으로 지방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 사업비를 국고로 지원하여 산업단지 분양가를 인하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인 용수공급시설(용수공급관로, 배수지, 정수장 등)을 1998년부터 국고로 전액 지원하여 설치중이며, 사업시행은 시·도 자율편성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다.

2016년까지 160개 산업단지에 공업용수도건설지원(국고지원 10,788억원)을 하였고, 2017년에는 39개 산업단지에 공업용수도건설지원(국고지원 868억원)을 추진 중이다.

표 2-2-33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 연도별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지원단지수	사업비	누계사업비
1998	9	15,500	15,500
1999	12	21,383	36,883
2000	10	21,383	58,266
2001	11	20,641	78,907
2002	7	1,898	80,805
2003	8	6,775	87,580
2004	8	10,742	98,322
2005	10	15,970	114,292
2006	11	37,180	151,472
2007	12	34,320	185,792
2008	16	47,064	232,856
2009	22	50,684	283,540
2010	49	101,234	384,774
2011	63	155,971	540,754
2012	68	135,708	676,453
2013	64	119,134	795,587
2014	51	106,563	902,150
2015	51	89,065	991,215
2016	44	87,616	1,078,831
2017	39	86,764	1,165,595

(5) 새만금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

새만금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 사업은 새만금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공업용수 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시설물(배수지 및 배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새만금산업단지 입주기업에 공업용수를 제공하여 기업 활동을 지원해줄 뿐만 아니라 시설물 설치 시 지역 내 자재·장비·인력 사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본격적인 입주가 예상되는 산업단지 준공(2018년) 전 공업용수도 건설을 완료하기 위해 2013년 사업에 착수한 이후 2015년에 배수관로(2.5km)를 우선 완료하였으며, 2017년에는 배수지 1개소($V=32,000\text{m}^3$)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2018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표 2-2-34 새만금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연차별 사업비(국고) 현황

(단위 : 억 원)

구분	총사업비	2013년	2014년	2015년	2015년	2017년
예산	250	54	35	40	50	36

제4절 지역기반 연구 활성화로 창조경제 지역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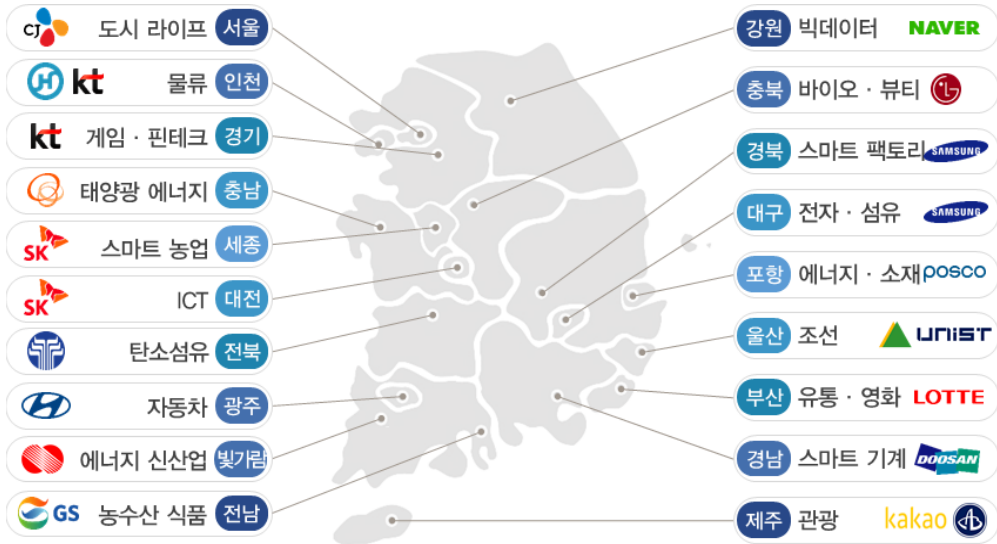
1. 창조경제 패러다임의 지역 확산

(1)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2014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가 구축되었다. 이전에도 민·관이 협업하여 지속적으로 창업 기반을 확대해 왔으나, 대부분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 인재의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연결되기 위한 지역별 창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했다. 또한, 그간 지역에의 꾸준한 투자를 통해 갖추어진 지역 혁신 인프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수단을 연계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발전 모델을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역의 부족한 역량 보완을 위해 생산·마케팅 역량과 자금·기술력을 갖춘 대기업이 지역의 창조경제 생태계 구성에 촉매제 역할을 할 필요가 있었다.

2015년 1월에는 민간자율형 혁신센터 모델이 기획되어 포스코가 참여하는 에너지, 환경, 소재 분야의 혁신거점으로 '포항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운영을 개시하였다.

그림 2-2-17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현황



혁신센터는 대기업·중소기업·창업기업 간 유기적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자체·지역유관기관·지역주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지역 인재의 아이디어 사업화·창업 및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창업 허브로서의 임무를 수행해 왔다. 또한, 혁신센터는 지역 특화산업 육성 및 청년일자리 매칭 등을 지원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매김하였다. 또한, 모든 지역별로 창업생태계 및 지역 혁신의 거점이 마련되어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혁신센터를 방문하여 상품 개발에서부터 투자지원, 판로개척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16년 10월에는 혁신센터가 성과 창출을 극대화하고 지속가능한 창조경제 플랫폼으로 뿌리내리기 위해 주요 특화기능 강화, 대규모 창업거점 구축, 전담기업 체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혁신센터 맞춤형 발전방안’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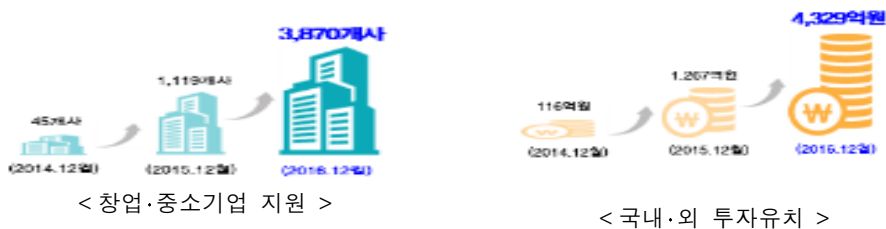
주요 특화 기능별로는 부산·충남센터를 중심으로 혁신센터 상품에 대한 국내 판매에서 해외 수출까지 국·내외 종합 판로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공동 상품발굴, 국내외 판로 개척 다양화 등을 지원하고, 경기센터를 중심으로 글로벌 진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하였다. 대규모 창업거점 구축을 위해 서울은 민간 창업지원과 연계·협업, 경기는 판교창조경제벨리의 중심 거점 기관화, 대구는

옛 제일모직 부지에 건설된 ‘(가칭)대구삼성창조캠퍼스’를 활용한 대규모 창업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권역별로 창업 거점화한다는 내용이다.

전담기업 체제 강화를 위해 인천센터에 KT(‘16년 12월), 울산센터에는 울산과학기술원(UNIST, ‘16년 12월)을 전담기관으로 추가함으로써 새로운 자원과 역량을 활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였다. 2017년 2월에는 한국전력이 참여하는 두 번째 민간자율형 혁신센터로 전남 나주에 에너지신산업 분야 혁신거점인 ‘빛가람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개소하였다.

2016년 말 기준, 혁신센터는 3,870개에 달하는 창업·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하여 4,329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창출하였다.

그림 2-2-18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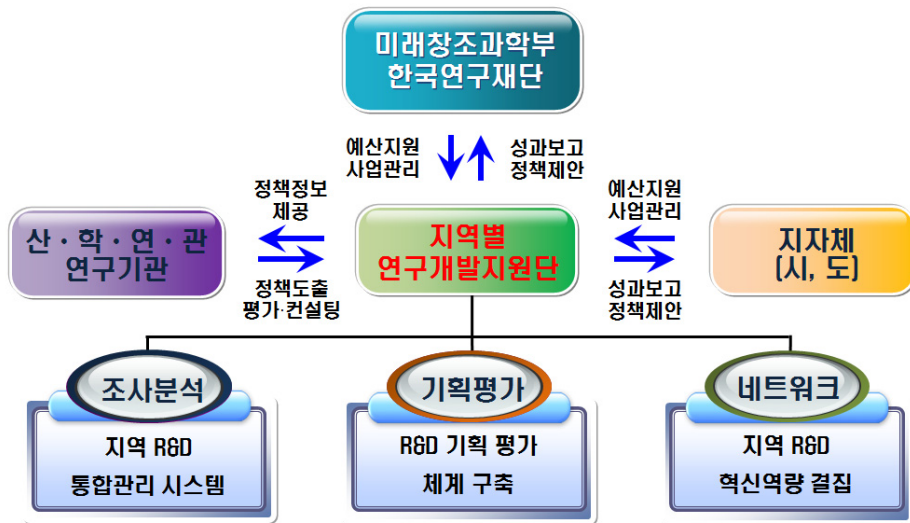


(2) 지역연구개발지원단 육성

정부는 지방 R&D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역 R&D 조사·분석, 기획, 평가 전담기관을 지정·육성하기 위해 2007년 7월 ‘지역별 R&D 전담 추진기구 설치·운영 방안’을 수립·추진하였다. 국가·지자체가 추진하는 지역 R&D사업의 지역 내 확산과 효율성 강화를 통해 지역 R&D 기반의 창조생태계 조성을 도모하였다.

연구개발지원단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50 대 50 비율의 매칭 펀드(matching fund) 방식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내 R&D 사업의 조사·분석, 지역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 지원, 지역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관리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07년 12월 부산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연구개발지원단을 지정·육성하고 있다.

그림 2-2-19 지역연구개발지원단 지원 체계



2007년 부산을 시작으로 충북(2008년), 대구·전북(2009년), 경기(2010년), 광주(2012년), 강원·경남·경북·인천·전남(2013년), 대전·울산·제주·충남(2014년), 서울·세종(2016년) 등 17개 지역 연구개발지원단을 지역 R&D 사업의 통합·조정을 위한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로 육성하였다. 지역 R&D 전담기구로 육성함으로써 지역 R&D 정책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 중심 R&D 조사·분석·기획 역량을 높였다.

표 2-2-35 지역연구개발지원단 현황

지정년도	권역	주관기관
2007	부산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8	충북	충북지식산업진흥원
2009	대구, 전북	대구테크노파크, 전북테크노파크
2010	경기	경기과학기술진흥원
2012	광주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2013	강원, 경북, 전남, 경남, 인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전남테크노파크, 경남테크노파크, 인천테크노파크
2014	충남, 울산, 제주, 대전	충남테크노파크, 울산테크노파크, 제주테크노파크, 대전테크노파크
2016	서울, 세종	서울산업진흥원, 세종지역산업기획단
계	17개 지역	17개 연구개발지원단

연구개발지원단은 지역 내 R&D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분석, 지역 특성에 맞는 과학기술 전략 발굴 및 기획지원, 지역 산업 주체 간 네트워킹 강화, R&D 사업성과 분석 등을 통해 지역 R&D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2015년 9월에는 전국 연구개발지원단 협의회를 발족하여 지역별 연구개발지원단, 지자체 등이 협업하여 지역연구개발 활성화 및 가속화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였으며, 공동·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R&D 역량강화 및 지역 R&D 이슈와 정책추진 방향 제안을 위한 세미나, 포럼 및 교육훈련 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지역 R&D 투자에 대한 표준화된 조사·분석을 통해 전국 17개 지역별 R&D 투자현황을 분석한 공동 조사·분석 보고서를 2015년에 처음으로 발간하였으며, 17개시·도 과학기술 인프라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도 과학기술 가이드 맵(guide map)을 발간·배포하여 지역 R&D 지원 체계를 강화하였다.

2. 지역 R&D 기반구축 및 역량강화

(1) 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R&D)사업(국토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수도권에 집중된 국토교통 분야 연구 인프라를 지역에 분산시키고, 지역의 국토교통 분야 현안해결, 지역 전문인력 양성, 연구 네트워크 구축, 연구성과 홍보, 기술사업화 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의 국토교통 R&D 허브”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舊 지역기술혁신사업) 내 국토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를 선정하여 운영중에 있다.

국토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는 전국을 6대 권역으로 구분하여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205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하였으며, 장기계속사업 일몰제 적용으로 2019년도 사업 일몰이 지정되어 2020년 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표 2-2-36 국토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분야 지원 현황 및 투자계획(2013~2020년)

(단위 : 백만원)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정부예산	1,104	4,136	6,572	8,670	8,163	8,163	6,440	874	44,122

표 2-2-37 국토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운영 현황

착수연도	구분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2013년	충청권 건설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박형근
	강원권 건설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강현찬
	동남권 건설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윤경구
2014년	호남권 건설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김화중
	대경권 건설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영상
	제주권 건설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고기원

권역별 국토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에서는 지역의 산업발전과 연계한 특성화주제를 발굴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중이며,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애로기술 발굴 및 지원을 비롯하여 지역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4년간('13~'16)의 과학 기술적 성과로 총 278건의 논문과 204건의 특허를 창출하였으며, SCI급 논문 게재는 2013년도 8건 대비 2016년도 28건으로 양적 성과증대는 물론, 28건 중 mrnIF¹⁵⁾ 80 이상의 논문이 13건(46%)으로, 국토교통 R&D 사업의 평균인 31%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의 질적 우수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연구성과 지역활용·적용 및 기술사업화와 관련된 사업 성과목표의 최근 4년간 달성도는 연평균 135.4%로,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의 실제적 활용에도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2016년도 6개 권역의 주요 경제적 성과로, 각 권역 내 참여 기업은 150억원 이상 기술사업화효과(매출액 및 비용절감액)를 이루었으며, 7천5백만원의 기술료 수입을 달성하였다. 또한, 2015년도 대비 160% 증가한 특허등록 건수(10건→16건) 및 약 200% 증가한 특허등급의 평균지수(1.9→3.5)는 지역거점센터가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의 효과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성과에서 나타듯이 지역거점센터는 지역의 R&D 허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강원권에서 개발한 기후대응형 기능성 콘크리트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봅슬레이 트랙 건설에 적용되었으며('15.2), 동일한 연구과제에서 개발된 셀룰라 숏크리트를 이용한 경사지 경관 구조물 공법은 국민안전처의 방재신기술 제91호로 지정되어 권역내

15) mrnIF(순위보정영향력지수) : 순위보정지수의 최소값을 0, 최대값을 100으로 표준화한 것으로 지수값이 큰 저널일수록 해당분야 내에서 위상이 높음

15개 공사현장에 적용되었다. 2016년도 국토교통 R&D 우수성과 20선¹⁶⁾중 2개가 지역 거점센터에서 선정되었고, 이 중 충청권의 성과인 ‘수재생 지하저류조를 이용한 스마트 관수 공급시스템’은 기존의 지하저류조 대비 시공비 40% 절감과 과실의 성장률 약 35% 증가의 효과를 이루었으며, 모바일, PC를 통한 모니터링 및 용수공급 제어를 가능하게 하여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편의를 도모하였다. 그 외에도 제주권 지질주상도 작성매뉴얼, 제주도 하천의 홍수범람 예측 자동화 기술 및 동남권의 산업부산물을 활용한 건설재료 개발, 호남권의 새만금 지역 기후변화로 인한 수재해 대응 기술 개발 등 각 권역별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그림 2-2-20 국토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분야 주요 성과(2016년)



< 붐슬레이트랙 현장적용 >



< 스마트 관수공급 시스템 >

국토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는 앞으로도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역의 연구인프라 조성 및 지역 산업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2) 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R&D)사업(지역특화기술개발)

지역의 자연재해, 기후변화, 환경문제 등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의 낙후된 건설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舊 지역기술혁신 사업) 내 지역특화기술개발 분야를 추진하였다.

16) 2016년에 수행한 국토교통 R&D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동아일보 및 한국일보 등에 보도됨 ('17.2.1)

표 2-2-38 지역특화기술개발 분야 지원 현황(2005~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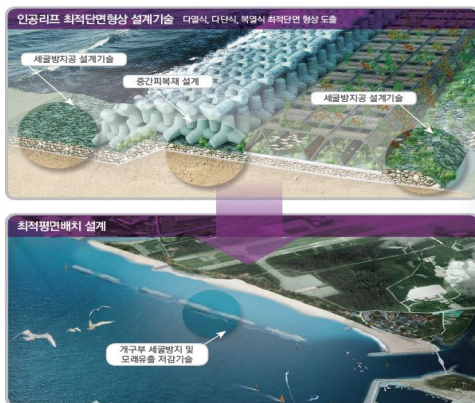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연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정부 예산	2,000	4,000	8,000	6,270	7,000	7,000	7,000	6,300	5,196	3,864	1,310	57,940

지역특화기술 분야는 전국을 7대 권역(5+2 광역경제권)으로 구분하여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총 579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하였다. 2015년도 최종지원을 끝으로 2016년도에 종료되었으나, 6개 권역의 지역거점센터에서 총괄하여 지역에 특화된 국토교통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나갈 예정이다.

지역특화기술개발 분야의 2013~2015년 4개 지원과제의 주요 성과로 35건의 특허를 등록하였으며, 28명의 석/박사 학위취득자를 배출하여 지역의 연구인력 양성에도 기여하였다. 특히, “높은 파도에 따른 해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중 구조물 개발(경북대학교, 김화중)”과제에서 개발된 인공리프 기술이 속초·양양 연안정비사업의 설계에 시범 적용되어 약 3.1억원의 현장적용 비용절감 효과를 창출하였다. 개발된 인공리프는 기존의 테트라포드와 비교하여 절반길이의 설치로 유사한 파랑 저감율을 얻을 수 있어 설치비용의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인공리프 제작을 위한 해양건설재료의 기술확보를 통해 제철 부산물을 활용하여 연간 약 100억원 규모인 철강 슬래그 처리 비용의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2-21 지역특화기술개발 분야 주요 성과(2015년)



< 개발된 인공리프 설계기술 이미지 >



< 해양건설재료 기술 개발 >

마지막으로 지역특화기술개발 분야는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 주관 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에서 국토교통부 연구개발사업 중 유일하게 ‘우수’ 등급(2015년 5월)을 획득함으로써, 그간의 지역특화기술개발 분야의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3.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연구성과 사업화 촉진

(1) 산학연협력활성화(대학 보유기술 이전 및 직접 사업화 촉진, TMC)

정부는 대학에서 개발된 기술의 민간으로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커넥트 코리아(Connect Korea) 사업의 일환으로 대학 TLO지원 사업을 통해 대학 산학협력단 내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 Technology Licensing Office)을 설치하여 지식재산권의 창출, 유지 관리 등 지식재산권 관리와 관련된 업무 및 우수 기술의 발굴, 마케팅, 기술이전 등을 포함한 기술사업화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2011년까지는 교과부와 지경부가 공동으로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사업관리체계 단순화 및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대학 TLO 지원사업은 교과부(현재 미래창조과학부)가 전담토록 조정하였다.

2013년부터는 자체적인 TLO조직 구성 및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소규모 대학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존 TLO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E-TLO(External Technology Licensing Office)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소규모 대학의 기술이전을 촉진시키고 있다.

한편, 정부에서는 대학 보유기술의 직접사업화 촉진 및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2007년부터 기술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기술지주회사를 통한 대학의 직접사업화 기반 구축 및 역량 확보를 위해 2010년부터 추진한 제1기 대학 기술지주회사 지원사업을 통해 11개 기술지주회사를 지원하였고, 제1기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제2기 대학 기술지주회사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2013년부터 2014년까지

7개 기술지주회사 및 후발 기술지주회사 지원하였고, 2015년부터는 15개 기술지주회사 및 후발 기술지주회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였다.

2016년부터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대학 TLO 지원사업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술지주회사 지원사업을 통합·개편하여 대학의 기술이전 및 직접사업화 촉진을 위해 대학 TMC(Technology Management Center) 지원사업으로 일원화하여 미래창조과학부가 전담토록 조정하였다. 19개 대학 TMC 및 후발 TMC 공동지원사업 지원을 통해 64개 대학, 48개 기술지주회사를 지원하여 기술이전·사업화 거버넌스를 체계화하고, 의사결정 구조를 간소화하는 등 대학의 기술이전·사업화 역량을 극대화하였다.

대학 TMC를 통해 이루어진 대학 보유기술의 기업이전 건수 및 기술료 수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6년에는 기술이전 3,426건을 기록하였고, 기술이전 수입료 역시 높은 비율로 성장하여 2016년도에는 647억원을 기록하였다.

표 2-2-39 대학 TMC(TLO) 연도별 기술이전 실적

(단위 : 건, 억원)

구분	제1기 TLO(2006~2010년)					제2기 TLO(2011~2015년)					TMC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건수	314	507	564	680	693	1,123	1,152	1,295	1,605	1,953	3,426
수입료	64	118	181	205	249	376	447	370	400	490	647

또한,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설립·편입 및 성장 지원을 통해 2016년도에는 기술지주회사 12개와 자회사 155개를 신규 설립(편입)하였고, 743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였다.

표 2-2-40 대학 TMC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설립 실적

(단위 : 건, 누적)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기술지주회사	16	23	26	35	36	48
자회사	74	118	145	201	271	426

(2) 산학연협력활성화 지원(산학연협력 클러스터 지원)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사업은 산·학·연 및 관련 기술전문가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술·정보교류, 과제기획활동 등을 통해 핵심융합아이템을 발굴하여 후속 R&D를 지원하는 연구개발의 선순환 구조 확립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2002년 과학기술진흥기금의 '기업연구클러스터사업'으로 지원을 시작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클러스터'에서 도출된 과제가 기술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핵심 애로기술개발'을 추가하고 일반회계의 민간연구기관 맞춤형 R&D 컨설팅 사업을 통합하여 '산학연협력 우수연구실 사업'으로 확대하였다.

2013년에는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의 세부사업으로 2009년부터 추진된 '산학협력 연계망구축사업'을 통합하여 산학연 연구협력 네트워크인 '지식클러스터 지원'과 '핵심융합기술개발 지원'으로 구성·운영되었다.

'지식클러스터 지원'을 통해 2개 이상 기술분야의 산·학·연 및 관련 기술전문가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기술·정보교류, 기업수요의 단기 애로기술 개발 및 기술로드맵 구축, 융합아이템 및 단기사업화과제 발굴을 지원하였다. 또한 '핵심융합기술개발 지원'으로 지식클러스터 활동을 통해 발굴한 융합아이템 및 단기사업화과제에 대한 공동연구를 지원하여 기업수요 중심의 산·학·연 공동연구 및 기업주도의 자발적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있다.

표 2-2-41 산학연협력 클러스터 지원사업 실적

연 도		2002~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지원 분야							
예산(백만원)		10,440	2,400	2,400	2,400	2,400	17,640
지식클러스터 지원	지원과제(개)	324	16	18	20	23	378
	과제기획(건)	2,668	81	67	150	86 (진행중)	2,966
	정부사업(건)	878	124	85	85	81 (진행중)	1,172
	공동연구 등(건)*	1,031	116	65	144	99 (진행중)	1,356
	기술로드맵(건)	-	14	14	7	9 (진행중)	35

핵심애로기술개발 지원	지원과제(개)	49	5	7	8	7 (진행중)	69
	지식창출**						
	논문(건)	-	11	18	20	11 (진행중)	29
	특허(건)	-	15	18	12	10 (진행중)	33
맞춤형 R&D컨설팅***	지원과제(개)	219	-	-			219
	컨설팅(회)	1,240	-	-			1,240

* 협동연구, 기술지도, 기술이전, 개발용역, 단기애로기술해결 등

** 지식창출(논문, 특허) 수행기간: 2013년~계속

*** 맞춤형 R&D컨설팅 수행기간: 2009~2012년(UNITEF)

(3) 산학연협력활성화 지원(산학연공동연구법인 설립지원)

대학·출연(연)이 연구개발을 통해 산출한 연구성과는 사업화되기에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고, 추가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의 death valley 극복이 필요하다. 또한, 중소·중견 기업들은 3~4년 이후의 주력제품 발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나 핵심 원천기술과 중장기 R&D 투자 수행 여력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대학·출연(연)·기업이 함께 공동연구법인 설립을 통해 기초·원천기술의 활용·확산 강화, 기업의 신산업 발굴, 전주기적 R&D 투자 효율성 제고, 기술지주회사 활성화 및 산학협력 촉진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학·출연(연)이 보유한 기술의 직접사업화를 견인하고, 연구개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학협력 촉진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동법 제17조(협동·융합연구개발의 촉진), 국정과제 17(산·학·연·지역 연계를 통한 신산업 창출 기능 강화)을 근거로 하여, 2011년 ‘산학연공동연구법인 기본계획’을 수립(11.7)하였고, 2016년까지 총 10개의 ‘산학연공동연구법인’을 설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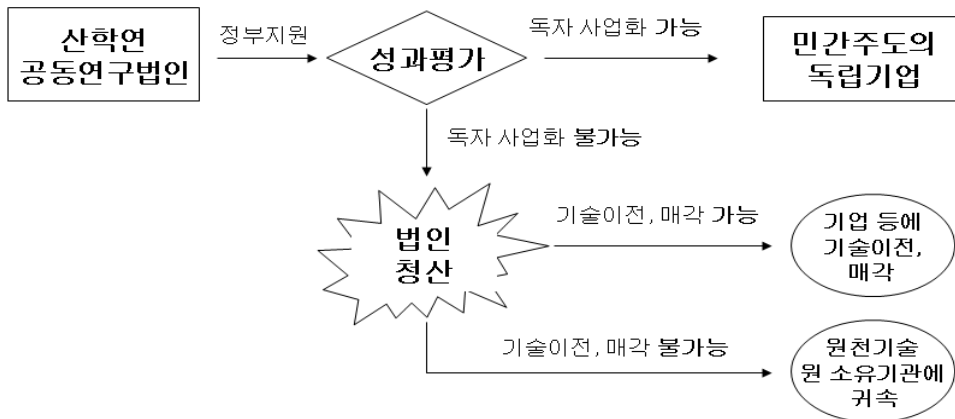
대학·출연(연)의 보유기술 중 차세대 먹거리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기초·원천기술을 대상으로 시제품 개발·제작까지의 상용화를 지원하고, 기술의 사용자인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 설립 시 투자·공동연구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상용화 성

공률을 극대화 하고 지역산업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사업의 추진 절차는 Tech-BM Workshop 사업에 대학·출연(연)이 제출한 BM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통해 1차 후보과제를 선정하고, 이후 후보과제의 BM고도화 작업을 거쳐 상용화 가능성 및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최종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제안된 사업화 계획에 따라 산학연 공동연구법인이 설립되면 후속 연구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완료 후에는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상용화에 성공하였거나 성공가능성이 높은 경우 민간 주도의 독립적 계속기업으로 전환(M&A, IPO 등 포함), 단독으로 사업화 추진이 곤란할 경우 연구성과물을 민간기업에 기술이전 또는 매각 추진, 기술이전·매각이 불가능할 경우 원천 기술의 원 소유기관 귀속의 3가지 방안으로 후속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림 2-2-22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체계



본 사업을 통해 2012년에는 아이씨엠(주)(연세대), (주)인지바이오(광주과학기술원), 2013년에는 (주)지안산업(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주)노코텍(충남대), 2014년에는 (주)탐앤씨(한밭대), 2015년에는 (주)커넥스, 쓰리디아이즈(주)의 공동연구법인이 설립되어,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신체변화 고감도 바이오센서, 표층처리용 무기결합제, 이온선택성 소재 및 부품, 리튬 2차전지 파우치 분야의 후

속연구개발과 모바일 의료검진 장치 개발, 스마트기기용 3차원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개발이 추가로 진행되고 있다. 2016년에는 (주)원프레딕트, (주)큐바이오센스, (주)이신테크놀로지 등 3개 신규 공동연구법인을 설립되었다.

현재까지 총 10개의 산학연공동연구법인이 설립되었으며, 이를 통해 총 60명의 신규인력이 채용되었다. 설립된 공동연구법인은 최대 5년의 후속연구개발이 진행 중이며, 후속연구개발 및 상용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향후 매출발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통해 기초·원천 연구성과의 활용, 고용창출, 중소·중견 기업 이익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학협력 촉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표 2-2-42 산학연공동연구법인 설립 현황

구 분	연세대기술 지주회사 연구법인	광주과기원 연구법인	전북지역대학연합 기술지주회사 연구법인	충남대 연구법인	한밭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연구법인
법 인 명	아이씨엠(주)	(주)인지바이오	(주)지안산업	(주)이노캠펙	(주)탐앤씨
대 표	김 대 원	김 민 곤	김 희 숙	강 경 석	김 동 수
사업분야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개발	신체변화 고감도 바이오센서 개발	표층처리용 무기결합재 개발	이온선택성 소재 및 부품 개발	리튬 2차 전지 파우치
설립 자본금	13.6억원	16.87억원	5.95억원	1.84억원	4.05억원
출자기관 (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대원(48.5%) ○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16%) ○ 연세대(13.5%) ○ 슈프리마인베스트먼트(10.7%) ○ 임직원 (1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과기원 (34.07%) ○ 생명연(36.88%) ○ (주)인포피아 (29.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기술지주 (35%) ○ 씨엠디기술단 (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대학교 (45.6%) ○ (주)시온텍 (27.2%) ○ 코아텍(주) (2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밭대기술지주회사 (63%) ○ (주)플렉스피이 (37%)
설 립 일	'12.09.18	'12.09.26	'13.07.03	'13.05.08	'14.08.07
소 재 지	연세대학교 과학원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기술 연구소	우석대학교 본관 806호	충남대학교 산학협력지원센터 106호	한밭대학교 S9동 101-102호
후속연구개 발 과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골세포 기초활성 제어를 통한 퇴행성 관절염 예방 및 치료기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감도/ 고속/ 다중 화학 발광법 POC진단 바이오센서 개발(심근경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부산물을 활용하여 2차 환경오염이 없는 고성능 지반 건설 재료 제조기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온선택성 Membrane, 이온교환 Binder, 다공성 이온교환 Sheet, 다공성 이온교환 Tube 등 제조기술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쇄전자용 초정밀 투를 장비기반 이차전지의 고 신뢰성 파우치 사업화
연구책임자	김대원 교수 (연세대)	김민곤 교수 (GIST)	서세관 연구소장 (지안산업)	황택성 교수 (충남대)	김동수 교수 (한밭대)
연구기간	5년 (3년+2년)				
연구비	매년 3.5억원 ~ 5억원				

구 분	서울과학기술 대학교 연구법인	울산과학기술 원 연구법인	서울대학교 연구법인	광주과학기술 원 연구법인	충남대학교 연구법인
법 인 명	쓰리다아이즈(주)	(주)커넥스	(주)원프레딕트	(주)큐바이오센스	(주)이신테크 놀로지
대 표	윤현식	신재혁	윤병동	양성	양창환
사업분야	스마트 기기,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개발	모바일 내시경, 모바일 통합의료장치개 발	스마트공장 품질증대 및 이상상태 진단/예측 기술개발	노로바이러스 등 의료/보건 측정기기 개발	돼지 질병 실시간 진단 측정기기 개발
설립 자본금	5억원	2억원	5억원	5.21억원	2.84억원
출자기관 (지분)	○ 서울과기대(70%) ○ 계룡환경(주)(25%) ○ (주)애플(5%)	○ 울산과기원(44%) ○ 에이딕(10%) ○ 기타(55%)	○ 서울대학교(96%) ○ (주)리프라텍(4%)	○ 광주과기원(63%) ○ (주)라디안(37%)	○ 충남대(65%) ○ (주)한일사이메드(35%)
설 립 일	'15.11.30	'15.11.13	'16.10.26	'16.10.25	'16.11.14
소 재 지	서울과학기술대 학교 창업보육센터	울산과학기술원 경영관	서울대 연구공원본관	광주과기원 창업진흥센터	대전 유성구 한신에스메카
후속연구 개발 과제명	○ 스마트기기용 3차원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및 실감 콘텐츠 개발	○ 모바일디바이스 기반 통합형 의료검진 장치 개발	○ 건전성 예측 및 관리기술 개발	○ 노로바이러스 검출장치 개발	○ 돼지질병 진단용 미세유체기반 종이칩 개발
연구책임 자	윤현식 교수 (서울과기대)	정웅규 교수 (울산과기원)	윤병동 교수 (서울대)	양성 교수 (광주과기원)	이창수 교수 (충남대)
연구기간	5년 (3년+2년)				
연 구 비	매년 1.5억원 ~ 3억원				

(4) 산학협력활성화 지원(특화전문대학원 지원)

특화전문대학원 지원 사업은 2008년 7월 ‘대학과 연구기관의 협력 활성화’를 새정부 국정과제로 설정한 것을 계기로 사업이 기획되었다.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개발활동을 대학 교육과 연계시켜, 대학·정부출연연구소의 교육·연구 역량

을 상호 보완하여 연구개발과 인재양성이라는 협력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대학원 구성원(대학 교수, 출연(연) 연구원,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학연협력에 의한 기초원천 연구를 활성화하고 정부출연연구소의 현장연구경험을 활용하여 이론과 경험을 겸비한 창의적 고급연구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2012년에 고려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공동으로 설립한 고려대학교 그린스쿨전문대학원을 에너지·환경 기술정책 융합분야 특화전문대학원으로 추가 선정하였다. 신규 선정된 특화전문대학원에는 출연(연)과 대학의 공동연구개발비, 교육과정개발·운영비, 전문대학원 운영비 등에 소요되는 연구비를 2012년에 10억원, 2013년에 30억원을 지원하였다. 3차년도까지 지원한 후 2015년에 3월에는 단계평가 실시한 결과, 학연 공동연구를 통해 “박막태양전지” 기술의 경우는 세계 최고 효율을 달성하였으며, 미세조류를 활용하여 플라스틱을 생산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2012년 10억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30억원을 지원하여 총 130억원을 지원하였다. 그린스쿨전문대학원은 학연 공동연구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자립화에 필요한 10대 과제를 완수함으로써 정부 지원 종료 이후에도 에너지·환경 기술정책 융합 분야의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 할 예정이다.

그린스쿨전문대학원은 2012년 첫 졸업생 3명, 2013년 17명, 2014년 9명, 2015년 23명, 2016년에는 17명 등 총 69명을 배출하였으며, 이중 15명을 제외한 54명이 진학(6명)과 취업(48명)하였다. 에너지환경분야의 국외 SCI논문 게재는 2016년까지 164편, 현재 미국 델라웨어대학교, 러시아 무기모대학교(에너지)에 대학원생을 파견하는 등 국제 협력교육을 강화하고, 2015년 5월에는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환경 관련 국제기구)로 부터 개도국 공무원 교육프로그램 과제를 수주하는 등 에너지·환경 기술정책 융합 분야에서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또한 2016년 10월 「2020년 이후 新기후변화체제에 대한 국제적 대응(Global Responses for Post 2020 Climate Change Regime)」을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꾸준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활동을 지속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다.

제5절 지역성장 거점도시 조성

1. 과학기반 혁신거점지구 조성

(1) 연구개발특구 육성(R&D)

연구개발특구는 대학,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토대로 신산업을 창출하여 지역에 새로운 기업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조성된 지역이다. 2005년 지정된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시작으로 2011년 광주·대구연구개발특구, 2012년 부산연구개발특구 및 2015년 전북연구개발특구를 추가 지정하여 특구별 비교우위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확산, 글로벌 혁신클러스터로 도약, 일자리 창출, 국가·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과학기술역량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표 2-2-43 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황

구 분	대덕특구	광주특구	대구특구	부산특구	전북특구
지정연도	2005년 7월	2011년 1월	2011년 1월	2012년 11월	2015년 8월
범 위	대전시 유성구·대덕구 일원	광주시 광산구·동구·북 구 및 전남 장성군 일원	대구시 동구·북구·달서 구·달성군 및 경북 경산시 일원	부산시 강서구·금정구· 남구·영도구·사 하구·부산진구· 연제구 일원	전주시 완산구·덕진구 및 정읍시 일원
면 적	총 67.4km ²	총 18.7km ² (광주 15.0km ² , 장성 3.7km ²)	총 22.2km ² (대구 16.2km ² , 경산 6.0km ²)	총 14.1km ²	총 16.3km ²
특화분야	·IT 융복합 ·바이오메디컬 ·나노융복합 ·신재생에너지	·광기반 융복합 ·차세대전지 ·친환경 자동차 부품 ·스마트케어가전	·스마트 IT 융합기기 ·의료용 융복합기기 ·그린에너지 융복합 ·메카트로닉스 융복합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및 서비스 ·조선해양플랜트 기자재 ·그린해양기계	·융복합소재부 품 ·농생명융합

연구개발특구는 공공기술의 공급, 활용 측면에서 국가 R&D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지역혁신생태계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추진하는데 최적화된 기반을 보

유하고 있다. 정부는 특구별로 집적화된 혁신자원을 활용, 공공 연구성과의 창업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사업과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은 특구내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과 상호협력을 활성화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창업을 지원하여 국가기술 혁신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특구법 제1조).

이를 위해 「연구성과 사업화 기반 미래성장 선도지역으로 도약」이라는 비전하에 '⑴특구 성장 환경 최적화, ⑵전략적 공공기술 사업화, ⑶지역의 성과확산 체계 구축'을 3대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표 2-2-44 연도별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예산 추이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 연구개발특구역육성(R&D)	7,508	13,800	24,070	25,517	34,110	33,116	33,116	34,706	34,706	38,706	40,706	81,725
1. 특구 연구성과 사업화	4,500	9,880	18,500	20,982	26,325	26,416	27,216	28,906	28,206	32,406	35,726	63,425
2. 특구창업·글로벌지원	3,008	3,910	5,570	4,535	7,785	6,700	5,900	5,800	6,500	6,300	4,980	18,300
□ 추가연구개발특구역육성(R&D)	-	-	-	-	-	-	10,000	14,000	27,000	30,000	30,200	-
1. 특구 연구성과 사업화	-	-	-	-	-	-	9,200	12,450	24,000	26,000	27,500	-
2. 특구창업 지원	-	-	-	-	-	-	800	1,550	2,940	3,940	2,700	-
□ 연구개발특구운영 및 인프라 지원	2,492	11,224	25,930	35,983	31,890	10,602	13,502	29,046	52,909	17,839	20,711	27,306
1. 특구기반시설 구축	-	6,000	19,000	30,000	25,500	4,000	5,000	20,740	42,880	8,000	10,650	15,800
2. 특구재단 운영·지원	2,492	5,224	6,930	5,983	6,390	6,602	8,502	8,306	10,029	9,839	10,061	11,506
□ 특구 기술사업화 투자지원	-	-	-	-	-	-	-	10,000	10,000	5,000	-	-
계	10,000	25,024	50,000	61,500	66,000	43,718	56,618	87,752	124,615	91,545	91,617	109,031

연구개발특구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글로벌 혁신클러스터로서 비약적으로 성장해왔다. 특구가 지정된 2005년 입주기업수는 687개에 불과했으나 2015년말 4,468개로 약 550% 증가했으며, 매출액은 2.5조(2005년)에서 44.6조(2015년)로, 코스닥 상장 기업수는 2005년 11개에서 2015년 77개로 약 600%가 증가하는 등 외형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성장하였다. 혁신역량 측면에서도 연구개발비 투입규모가 1.8조원(2005년)에서 9.6조원(2015년)으로 약 433% 확대되었으며, 연구인력은 16,759명(2005년)에서 68,932명(2015년)으로 약 311% 증가하였다.

표 2-2-45 연구개발특구 주요 통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	2015년	증 감(%)
입주기업 수 (개)	687	4,468	550
입주기업 매출 (조원)	2.5	44.6	1,684
연구개발비 (조원)	1.8	9.6	433
연구인력 (명)	16,759	68,932	311

1) 연구개발특구역성(R&D), 추가연구개발특구역성(R&D)

정부는 특구의 우수한 공공 R&D 역량을 활용, 기술-창업-성장이 선순환될 수 있는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특구역성(R&D)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술발굴·이전매칭→출자(이전) 및 창업→사업화 및 성장지원'에 이르는 차별화된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유망 공공기술의 적시 사업화 및 사업화 성과의 조기 창출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표 2-2-46 연구개발특구역성(R&D) 사업의 세부내용

구 분	사 업 명	세부내용
연구개발특구역성(R&D) 추가연구개발특구역성(R&D)	특구연구성과 사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찾기 포럼 및 기술이전 촉진사업 등 기술발굴·연계 공공기술이전 및 연구소기업·특구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이전 사업화 연구소기업 설립지원, 사전기획, 기술가치평가 등을 통한 전략육성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연구성과 사업화 촉진
	기술창업·글로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 엑셀러레이터 기능 강화 및 창업 아이템 검증 고도화 특구별 특화성장 육성사업을 통해 특구기업 체질강화 및 특화사업 추진 기술, 기업의 해외진출과 글로벌 자금의 특구유지 촉진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투자지원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투자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특구 펀드 출자 및 운영·관리 특구내 기술금융 활성화 및 투자

* 추가연구개발특구역성(R&D)은 2011년 추가특구(광주·대구) 지정과 함께 신설된 사업으로, 기존 대덕특구의 연구개발특구역성(R&D)과 사업구조 및 지원내용이 유사한 사업으로 2016년부터 해당 2개 사업을 통합·운영 중

사업지원 측면에서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성과와 파급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성과 사업화 및 창업·글로벌 지원의 경우 지난 11년(2005년~2016년)간 5,129억원을 지원하여 3,053건의 기술을 이전하였으며, 기술이전금액 1,571억원을 달성하였다.

특히, 공공기술을 직접 사업화하는 특구만의 고유한 모델이자 창조경제 실현의 대표적인 성과로 주목받고 있는 연구소기업 설립이 크게 증가하여 2016년까지 339개(신설 179개)를 등록했고, 제1호 연구소기업인 콜마BNH가 연구소기업 최초로 코스닥에 상장(2015년 2월, 시가총액 1조 276억원)되는 등 연구소기업의 성공사례가 본격적으로 창출되고 있다.

기술사업화 투자지원의 경우 2012년 10월, 1,25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2016년말 현재까지 총 78개 기업에 투자를 집행하였다. 또한 2008년~2016년까지 개발도상국 등을 대상으로 한국형 STP 모델 조성 및 운영에 대한 교육훈련을 총 17회(68개국, 331명 참여) 실시, 3개국을 대상으로 전략컨설팅을 지원했고, 해외 기술사업화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특구기업의 해외투자유치(2014~2016년 9개사, 562만 달러 투자유치) 및 글로벌시장 진출(2016년 7개사, 424만 달러 수출계약)을 지원하여 지속성장 및 성공가능성을 제고하였다.

2) 연구개발특구운영 및 인프라 지원

연구개발특구 지원시설 등의 인프라 구축 및 특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연구개발기능과 생산기능이 결합된 혁신클러스터 사업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특구운영 및 인프라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2-2-47 연구개발특구운영 및 인프라 지원 사업 주요내용

구 분	사 업 명	세부내용
연구개발특구운영 및 인프라 지원	특구기반시설 구축	▪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효율적 인프라 제공으로 기업환경 개선 등 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특구진흥재단 운영·지원	▪ 특구의 효율적 육성관리를 위한 기관운영 및 기관고유사업 추진

2005년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이후 특구정책 및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광주, 대구, 부산 및 전북특구 등 총 5개 특구를 지정했다.

또한 산학연 혁신주체간 교류 및 연구개발성과의 비즈니스 연계를 위한 인프라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는 대덕특구의 대덕테크비즈센터와 연구생산집적시설, 광주특구의 광주이노비즈센터가 준공되어 활용중이며, 부산·대구·전북특구의 관련시설도 각각 착공·설계·설계공모단계에 있다. 이를 통해 연구성과 사업화 촉진, 네트워크 활성화를 지원하여 특구내 벤처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2)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은 단지의 지정 및 지원을 통하여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의 상호협력에 의한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함으로써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2005년 10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추진 방침이 결정되고, 2008년 3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적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2009년 8월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에서 대구 신서와 충북 오송 등 2개 지역을 복수로 선정하였으며, 2010년 1월 2개의 단지가 상호 보완적으로 특성화 될 수 있도록 의료산업의 중점 육성분야와 지역의 산업 역량 및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성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2010년 12월 각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법인으로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하였으며 2011년 3월에는(제7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핵심시설 건립,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 우수한 연구인력(기관) 유치 및 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1차 종합계획(2010~2013년)을 수립 추진하였다. 또한 시설, 장비, 제도 등 인프라 조성에 주력했던 1차 종합계획과 달리 2차 종합계획(2014~2016년)에서는 충북단지 안정화를 위해 우수인재 및 기관 유치, R&D지원 확대 및 기획기능 강화를 중점 추진내용으로 포함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일원 105만㎡와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113만㎡ 부지에 기업·대학 등이 보유하기 힘든 핵심인프라 시설을 구축하고,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함과 아울러 공동연구개발체계를 마련하여 첨단제품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단지 내에는 핵심인프라 구역과, 연구지원시설구역, 연구기관입주구역, 편의시설구역이 조성되었다.

첨단제품 개발과정의 가장 취약한 인프라를 제공하게 될 핵심인프라 구역에는 신약 후보물질 평가·최적화, 산·학·연 공동연구를 위한 신약개발지원센터와, 첨단의료기기 설계·시제품 제작·성능평가를 위한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등이 입지해 있다. 신약·의료기기 개발에 필요한 동물자원 및 임상시험시료 공급을 담당하게 될 연구 지원 시설 구역에는 실험용 동물사육·관리 및 동물실험을 지원하는 실험동물센터와 임상 시험용 신약을 생산·공급하게 될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가 건립되어 있다. 연구기관 입주구역에는 국내외 연구기관, 연구중심 벤처기업 등이 입주하게 되고, 편의시설 구역에는 연구원들의 연구 성과를 높이기 위한 편의시설 등이 제공 된다.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신약의 경우 합성신약, 의료기기의 경우 IT기반첨단의료기기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는 신약의 경우 바이오신약, 의료기기의 경우 BT기반첨단의료기기로 각각 특성화하였고, 특성화 방향에 따라 시설, 장비 등을 구축하되 필요시 타분야 연구개발 및 융·복합 연구지원도 수행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정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핵심시설 건립을 위해 총 4,375억 원을 투자, 2011년 10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 12월 완공하였으며, 2014년부터 핵심연구지원 인프라의 본격 가동을 통해 신약 및 의료기기 분야의 연구개발 지원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16년 1월에는 첨단의료단지법을 개정함으로써, 단지 내 생산시설 설치 허용, 입주심의절차 간소화, 생산센터 수탁사업범위 확대 등 단지활성화 및 재단 재정자립화의 기반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첨복단지 제3차 종합계획(2017~2019)’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조성기(1차, 2011~2013) 및 정착기(1차, 2014~2016)의 성과를 기반으로 수요자 맞춤형 연구개발과 제품화 지원, 전략적 기업 지원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하고 운영을 효율화하여 자립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단지조성 및 첨단제품 연구개발 기반을 활용

하여, 향후 10년 이내에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이 가능한 첨단제품 개발을 뒷받침하며, 궁극적으로 첨단의료 복합단지를 첨단의료산업 분야 최고 역량을 갖춘 글로벌 R&D 허브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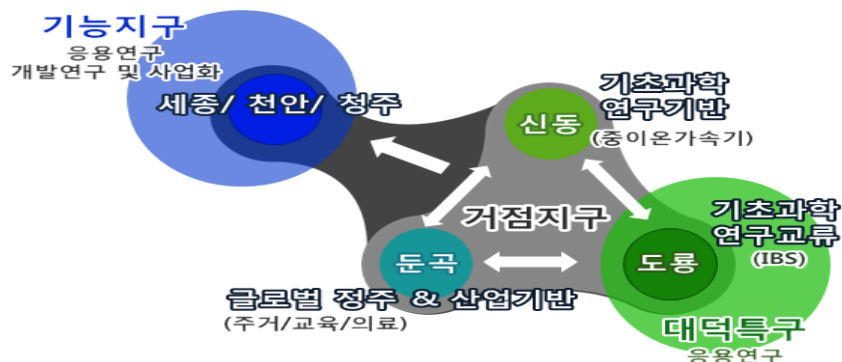
중장기적으로 단지 내외 연구기관 및 연구자와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선진 클러스터와도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내외 우수한 연구기관과 기술공유 및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국내외 컨퍼런스를 통해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운영성과를 활용하고 전파해나갈 계획이다.

(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우리나라는 그동안 선진국들의 지식과 기술을 활용한 추격(Catch-up) 전략으로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었으나 기초·원천기술의 부족으로 성장한계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는 대외 의존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신개념의 국가성장거점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기초연구와 비즈니스를 융합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기초연구분야의 거점기능을 수행하는 거점지구(대전시 유성구 신동·둔곡동·도룡동), 그리고 거점지구와 연계하여 응용연구·개발연구 및 사업화 등을 수행하기 위한 기능지구(세종시·천안시·청주시)를 연계한 지역을 말한다.

그림 2-2-2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개념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총 5조 7,471억원을 투입하여 기초과학연구원 건립 및 운영, 중이온가속기 구축, 거점지구 조성 및 기능지구 지원을 추진 중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은 2011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그리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와 기능지구의 입지선정으로 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입지선정 후 정부와 지자체간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의 부지 비용부담 주체 문제로 사업추진이 지연 되었다.

2013년 들어 그 동안 사업 지연요인이었던 거점지구의 부지매입비 문제를 미래부와 대전시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중이온가속기 부지는 국고로 매입하고, 기초과학연구원 부지는 대전시가 무상제공하는 것으로 매듭짓고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였다.

2016년 5월에는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건립공사를 대전 엑스포공원(도룡동)에서 착공하였고, 2016년 9월에는 중이온가속기 시설건설 설계가 착수되었으며, 2016년 12월에는 중이온가속기 핵심장치인 초전도가속관을 세계 8번째로 설계·제작에 성공하고, 구축과정에 국내산업체 참여확대로 국내 연관산업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기초과학연구원은 세계 정상급 과학자의 연구참여로 세계적 연구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 2016년말 기준, 세계 Top 1% 과학자 204명의 연구 참여로 우리나라 R&D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있고, 2012년 연구착수 이후 세계 최고 수준의 우수성과 창출(SCI급 논문 2,022건) 및 네이처사 글로벌 기초과학계 ‘라이징 스타’ 11위에 선정(2016년 7월)되었다.

또한 기능지구에 산·학·연 협력의 공간적 거점인 「Science-Biz 플라자」 건립(2016년 12월 착공) 및 기능지구 기업·대학을 중심으로 연구성과 사업화를 위한 R&D 지원(2016년 96억원) 등을 통해 과학기반 산업 육성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은 기초과학의 획기적 진흥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과 세계일류 국가로 도약하는 선도거점으로서 2021년까지 기초과학연구원 및 중이온가속기 등 기초연구환경을 구축 완료할 계획이고, 세계 Top 1% 과학자 500명 연구참여 등 세계적 두뇌가 모이는 연구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Science-Biz 플라자」를 2018년 6월 완공하여 사업화 거점으로 활용하고 기능지구 사업화 역량강화를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 행복도시를 명품도시로 조성

(1) 행복도시 광역도로 건설사업

행복도시 광역도로 건설사업은 행복도시와 수도권, 영·호남권 등 주요 도시 간 접근성 강화를 위해 주요 교통거점을 연결하는 18개 광역도로망(118km)을 단계적으로 건설 추진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직접 수행한다.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한 후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이후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진행하고 용지 보상을 통해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2016년 말에는 행복도시 광역교통망 노선 구축을 위해 청주 및 남청주IC 연결도로를 개통하여 행복도시와 인근 도시의 접근성 및 이동성 강화로 인적 및 물적 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청주 연결도로 10km 구간을 4차로로 신설하고, 남청주IC 연결도로 3.3km는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 개통하여 정부세종청사에서 청주시 이동시간을 60분에서 30분으로 단축하였다.

2017년도 말에는 행복도시~공주 연결도로를 개통할 예정이다. 주요 공종(교차로입체화, 구조물 등) 공사 추진 시 안전점검 강화 및 현안사항(민원 등) 조기 해결하여 적시에 개통 추진할 예정이다.

표 2-2-48 행복도시 광역도로 건설사업 성과

성 과 목 표	성 과 지 표	2016년 목표	검증방법
청주 및 남청주IC 개통	보상 집행율	100%	집행비 / 총사업비
	공사 진행율	100%	집행비 / 총사업비

(2) 행복도시 국가행정시설

정부세종청사 기능보완과 방문객과 이전공무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건립하는 복합편의시설은 국조실,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설계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2016년 3월)하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2016년 11월)하여

건립공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선관위청사는 제로에너지건축물로 건립하기 위해 설계공모를 실시(2016년 7월)하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완료(2017년 4월)되어 공사착공 예정이다.

(3) 행복도시 도시행정시설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후 행복도시내 인구유입의 급속한 증가에 맞추어 도시정착지원을 위해 경찰서, 시청사 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직접 도시행정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의회동 설계중에 수요기관인 세종시의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2개층 추가 증축 요구가 있어 설계변경을 통해 증축하여 시공하였으며 2016년 12월 준공하였다. 2017년에는 세종시의회 행정서비스를 개시하여 세종시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하였다.

경찰서는 사업규모 및 시기, 건립주체 등 직제신설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완료(2016년 8월)하여 수시배정이 해소(2016년 9월)되었으며 2017년 설계공모를 시행할 예정이다.

(4) 행복도시 문화시설

행복도시 건립 2단계 원년을 맞아 도시의 자족기능 확충 및 도시민들의 고품격 문화생활 영위 등 도시기능 향상을 위해 문화시설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아트센터는 그 동안 협의 중이었던 규모조정을 완료하였으며, 신규 문화사업인 국립박물관단지 건립이 시작되었다.

아트센터는 행복도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다양한 계층이 함께 공유하여 지역 공동체·문화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연장과 전시·미술실·영상관 등을 향유·체험·창작하는 예술문화시설이다. 아트센터의 건립 추진 중 국회, 지역주민, 언론 및 공연예술전문가 등의 규모 확대 요구 및 세계적 문화예술공연 등을 고려하여, 건립규모를 확대하기로 결정하였고, 이것의 반영을 위해 운영기관인 세종시와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2016년 10월 대형 기획 공연이 가능하도록 건립규모 조정(대극장 700석→1,000석)과 총사업비 조정(857억 → 905억)을 완료하였다. 도시

상징광장과 독락정 역사공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중앙공원, 박물관 단지를 어우르는 35천㎡ 부지 위에 친환경적이고 이용에 편리한 최적의 공연시설을 도출하기 위해 그 간 중단되었던 잔여 기본설계 완료하였고, 실시설계를 착수할 예정이다. 세종시의 위상에 걸맞은 세계적 수준의 복합공연이 가능한 대형공연 전문시설 건립을 통해 지역민의 문화욕구 해소와 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국립박물관단지는 행복도시의 위상 제고 및 도시에 대한 시민들의 자긍심을 확보하고, 수준 높은 문화생활 영위를 위해 전액 국비를 투입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직접 건립할 계획이다. 국립박물관단지 조성 사업은 2단계로 나뉘어 건립될 예정이며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중앙공원과 금강이 접한 19만㎡ 부지에 다양한 박물관을 집약하여 건립하는 사업이다. 1단계 사업(7.5만㎡, 4,552억원, 연면적 7.5만㎡, 2016년~2023년)은 5개의 개별박물관(어린이박물관, 도시건축박물관, 국가기록박물관, 디자인박물관, 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과 2개 통합시설(통합운영센터, 통합수장고)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5.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으며, 2016.11월 국립박물관단지 전체 부지에 대해 국제공모를 통해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을 완료하였다. 수립된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2017년 국립어린이박물관부터 기본설계를 추진하는 등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될 예정이다.

(5) 행복도시 주민편의시설

행복도시의 행정, 문화, 복지, 체육시설 등 공공·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생활의 편의 및 정주여건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광역복지지원센터의 건립 추진, 2006년~2026년(총 21년) 사업기간 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다.

2016년에는 입주민을 위한 종합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1-1(A)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16.10월), 3-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16.12월)를 준공하였고, 1-1(B)·2-2·3-1·3-3 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 2-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설계 착수를 통해 주민 커뮤니티의 매개체 역할을 수행토록 하였다. 또한 문화·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입주시기에 맞춰 2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준공('16.12월) 및 3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의 설계를 착수함으로써 세종시민에 대한 복지증진을 실현하였다.

2016년까지 총 22개소의 복합커뮤니티센터 중 7개소를 완료, 7개소 공사 및 설계 시행 중이며, 총 6개의 광역복지지원센터 중 2개소를 완료, 1개소 설계 중으로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6) 행복도시 자족기능 확충사업

수도권 과밀완화와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건설되는 행복도시의 자족기능 유치 지원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직접 수행한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종테크밸리 산업용지 공급을 통해 첨단기술을 보유한 IT·BT·ET 기업을 유치하고, 공동캠퍼스 등 대학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캠퍼스 건립 방식을 제공하여 우수대학을 유치하고 병원, 공공기관, 편의시설 등 주민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도시기능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행복도시 건설 특별법」을 개정(2013년 8월)하여, 핵심 자족시설에 대한 건축비(25%) 지원 등 인센티브(자족시설 유치지원 기준) 규정을 제정하였다(2014년 8월). 도시 내 앵커시설에 대한 탄력적 토지공급방안을 마련(2013년 6월)과 주택특별공급대상인 ‘기업’범위를 확대(2013년 12월) 하였다. 행복도시에 대한 국민 관심도를 제고하고, 도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여 기업유치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행복도시 세종박람회’(2014년 11월)를 개최하였다. 행복도시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4생활권을 대상으로 ‘산학연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2014년 9월)하고, BT·ET·IT 융복합 중심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거점 마련을 위하여 4생활권 일부(약 75만㎡)를 도시첨단 산업단지로 지정(2015년 6월)하고, 첨단 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의 입주 및 창업 지원 등을 위하여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의 건축공사를 발주(2016년 12월)하였다. 기업 종사자 및 대학생 등을 위한 도심형 임대아파트인 행복주택 건립(1,500호)에 착수하였다(2015년 6월 사업승인, 2019년 입주)

자족시설 유치를 위해 우선 기업과 관련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기업 설명회 개최 등 기업유치를 위한 노력을 거쳐 4·2생활권 세종테크밸리(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용지를 분양(2016년 6월(1차), 12월(2차))하였고, 33개사를 입주 예정기업으로 확정하였다. 대학은 카이스트, 고려대 등 개별형 캠퍼스 유치를 위한 협의 진행 및 공동캠퍼스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대학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병원은 입주인 생활편

익 증진을 위하여 세종충남대병원과 토지공급 계약(2015년 5월)을 체결하고 2018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외국대학·연구기관으로는 아일랜드 국립 Tyndall 연구소 및 Cork 대학과 산학연클러스터 내 생명과학 협력 등의 MOU를 체결(2015년 10월)하였으며, 행복청-코크대 약대-고려대 약대 간 연구개발 협력 등에 대한 MOU도 체결(2016년 3월)하였다. 미국 코넬대에서 뇌과학연구, 헬스케어 분야의 상호 협력을 위한 LOI를 제출(2016년 1월)받았다. 산학연클러스터의 산학융합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서울대 공과대학(3월) 및 행정대학원(10월), KAIST 창업원(9월) 등과 MOU를 체결(2016년)하였으며, 아일랜드 트리니티대(7월), 오스트리아 프로이드대(9월), 체코 브르노예술원(9월) 과도 공동학위 개설 및 산학협력 등의 MOU를 체결(2016년)하였다. 또한 행복도시 최초의 대기업으로 한화에너지와 MOU를 체결(2016년 7월)하여 본사가 이전을 완료(2017년 1월)하였다. 행복도시내 기업, 대학, 연구소, 지원기관들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세종 Bio-IT융복합 미니클러스터를 결성(2016년 6월)하여, 기업성장 및 산업단지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공공기관은 3개가 이전을 완료하였고, 5개가 입주 확정되었으며 향후 추가 수요조사를 통해 2차 집적화단지를 조성 추진할 예정이다.

정주인구 부족, 산업기반 열악 등 도시 초기의 부족한 투자유치 여건에도 불구하고 투자기반을 마련하였으나, 향후에는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능동적 활동이 필요하다. 세종테크밸리 우수 기업 유치, 공동캠퍼스 조성 등 창조형 캠퍼스 구축, 국내외 투자유치 네트워크 확보와 연계한 맞춤형 투자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3. 혁신도시를 지역발전거점으로 육성

(1) 혁신도시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우리나라는 과거 일극중심의 불균형 발전전략에 따른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낙후된 지방 경제를 지역 특화발전을 통해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정부는 2005년 이후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11개 광역시·도에 10개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03년 6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방침을 발표하고 2004년 4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법적·제도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정과 함께 2004년 8월 공공기관 이전방안의 기본원칙과 추진방향을 발표함에 따라 정부와 12개 시·도지사간의 '중앙·지방간 기본협약'(2005년 5월) 및 '노·정간 기본협약'(2005년 6월) 체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5년 6월 24일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전 대상기관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2005년 6월 24일) 발표 당시 전체 공공기관(409개) 중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345개)을 대상으로 기관의 성격 및 수행기능 등을 분석하여 수도권 잔류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기관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75개 기관을 선정하였으며, 이후 농촌진흥청과 수도권에 신설·분리된 관세국경관리연수원 등 4개 기관이 추가되고,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부처의 내부조직 성격이 강한 23개(위원회 12개, 내부조직 성격 11개) 정부 소속기관이 제외되었다. 또한, 2008년 8월에 공기업 선진화 방안 등에 따른 통폐합 등으로 12개 기관이 감소되었고, 2012년과 2013년, 2014년에 농림수산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7개 기관이 추가되어 최종적으로 154개 기관이 지방이전대상 기관으로 확정되었다.

표 2-2-49 이전대상 공공기관 현황

(단위 : 개소)

이전대상기관 (합계)	지방이전대상		
	혁신도시	개별이전	세종시
154	115	19	20

자료 :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기관별 직제개편전 기준)

표 2-2-50 시·도별 이전기관 배치결과(전체 154개 기관)

지역	이전기관	지역	이전기관
부산 (13)	대한주택보증, 한국자산관리공사 영화진흥위원회 등 13개 기관	대구 (11)	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학술진흥재단 등 11개 기관
광주/ 전남 (16)	한국전력, 한전KPS, 한국전력거래소 등 16개 기관	울산 (9)	한국석유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국립방재연구소 등 9개 기관
강원 (12)	한국광물자원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관광공사 등 12개 기관	충북 (1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 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등 11개 기관
전북 (12)	농촌진흥청, 한국식품연구원, 국민연금공단 등 12개 기관	경남 (11)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국방기술품질원 등 11개 기관
경북 (12)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기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12개 기관	개별 이전(19)	국방대학교, 국립경찰대학, 경찰수사연구원 등 19개 기관
제주 (8)	한국국제교류재단,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8개 기관	세종시 (20)	한국개발연구원, 법제연구원 등 20개 기관

자료 :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발표(2005.6.24) 이후, 공기업선진화방안(2008.8) 등으로 인하여 일부 기관들은 통폐합되어 이전지역 등이 변경되고 이전기관은 154개로 확정되었음.

혁신도시는 지방이전 공공기관 및 산·학·연·관이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 정주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를 말한다. 정부는 각 시·도에 구성된 혁신도시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2005년말 10개 혁신도시의 입지선정을 마무리하고, 혁신도시별로 특색있고 차별화된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혁신도시 개발 기본구상을 수립(2006년 2월~12월)하였다.

표 2-2-51 혁신도시 입지선정현황

강 원	원 주	경 남	진 주
충 북	진천·음성	대 구	동 구
전 북	완주·전주	울 산	중 구
광주·전남	나 주	부 산	해운대구 등
경 북	김 천	세 주	서귀포

자료 :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또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건설을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 특별법」이라 함)을 제정·시행(2007년 2월 12일)하였으며, 이후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내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 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 시행토록 하는 규정도 신설(법 제47조의 2, 2007년 10월) 하였다.

정부는 혁신도시건설을 위해 관련 절차를 거쳐 10개 혁신도시를 모두 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여 확정, 고시하였으며(2007년 3월~4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개발절차를 모두 수립 완료(2007년 5월~2008년 12월)하였다. 이와 함께 10개 혁신도시의 용지보상은 2014년 10월에 마무리 되었다. 혁신도시 부지조성공사는 혁신도시별로 2~9개 공구로 구분하여 공사를 발주하여, 혁신도시별로 우선 1공구 조성공사에 대해 2007년 9월 제주와 경북을 시작으로 2009년말까지 10개 혁신도시 42개 전공구를 착공하여 2016년 12월말 기준 전체 평균공정률 99.9%로 2017년 완공목표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꾸준한 추진에 의거 혁신도시 부지조성과 진입도로, 상수도 등 혁신도시 기반시설이 대부분 완료됨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되어 2016년까지 143개(92.9%)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다.

아울러, 혁신도시에서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전기관이 이전지역 인력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법 제29조의 2, 2013년 3월)하였다. 또한, 이전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2012년도부터 지역별 합동채용설명회를 매년 시행중에 있으며, 2016년에는 총 12회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결과 2012년에 2.8%였던 지역인재 채용률이 2015년에는 12.4%, 2016년에는 13.3%로 점차 증가하였다.

정부는 혁신도시 건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총 154개 공공기관 중 나머지 11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2017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혁신도시별 채용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인재 채용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혁신도시로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전직원 가족 및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핵심 정주여건인 주거·교육시설과 생활서비스 시설인 각종 의료·어린이집·행정시설·편의시설 등을 적기 공급하고, 생활가이드 앱 개발·보급 등으로 생활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2)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이전 공공기관과 관련있는 기업·대학·연구소 등을 혁신도시에 유치하여 혁신도시를 지방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2007년부터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중에 있다. 2012년까지 지자체 중심의 혁신도시별 특화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4년에는 이전기관과 연계성이 높고 파급효과가 큰 핵심 산업 위주로 수요를 분석하고 유치전략을 검토하여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수정·보완하였다.

2014년 5월에는 혁신도시특별법을 개정하여 혁신도시 내로 입주하는 연구기관, 국제기구, 대학, 종합병원에 건립비 지원, 고용보조금 등 우선지급,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등 감면규정 완화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2014년 12월에는 세제혜택 등을 위해 클러스터 부지의 도시첨단산단 중복지정을 완료(대구, 충북)하였다.

2015년 12월에는 혁신도시특별법을 개정하여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목적에 적합한 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입주승인, 양도제한, 승인취소 등 사전·사후적 관리방안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한편 정부는,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각 혁신도시별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전 공공기관과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 혁신도시와 인근지역간의 연계발전, 지역 및 관련 기관간 자율적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활동지원을 목적으로 2007년부터 혁신도시 소재 시·도별로 담당공무원으로 센터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 5월에는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을 통해 센터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현재 충북과 경북혁신도시가 센터를 건립·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혁신도시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산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10개 혁신도시 11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에 304억원의 국비를 지원하였으며,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통한 혁신도시 지역성장거점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혁신도시는 2017년까지 공공기관 이전을 대부분 마무리하고, 2단계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는 단계에 있다. 하지만 혁신도시 전체 용지 분양률(2016년 12월 기준 92.0%)에 비해 클러스터 용지 분양률(2016년 12월 기준 57.1%)은 다소 저조하나 클러스터 조성은 꾸준히 증가 추세이다. 따라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등을 적극

적으로 활용하여 용지 분양률을 높이고, 기업들의 조기입주를 독려하여 클러스터를 활성화 해 나갈 필요가 있다. 향후 센터가 이전기관·유치기관 간 네트워크의 장이자 유치기업 입주 공간 제공 등도 담당할 수 있도록 타 혁신도시도 센터건립을 지원하여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각 부처의 산학협력·R&D사업, 지자체의 지역발전사업 등을 혁신도시에 적극 유치해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4. 새만금 기반시설 조기 구축 및 개발 가시화

(1) 새만금 내부개발

새만금사업은 1991년 전북 군산~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 33.9km를 축조하여 공유수면 40,900ha를 토지 29,100ha와 담수호 11,800ha로 개발하여 대단위 간척농지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방조제공사는 1991년에 착공하여 2010년에 준공하고 2009년부터 내부토지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방조제공사는 총사업비 2조 9,420억원을 투입하여 방조제 33.9km, 배수갑문 2개소 등 주요시설물을 설치하고 2010년 준공식을 가졌다.

2009년에는 사업 착수이후 국내외의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새만금지역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개발’하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하고 농지개발 면적비율을 축소(농지 72%→30%)하는 한편, 새만금 내부토지의 70%는 산업·관광·복합도시·신재생에너지·생태환경 등 다양한 용도로 개발하는 것으로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을 변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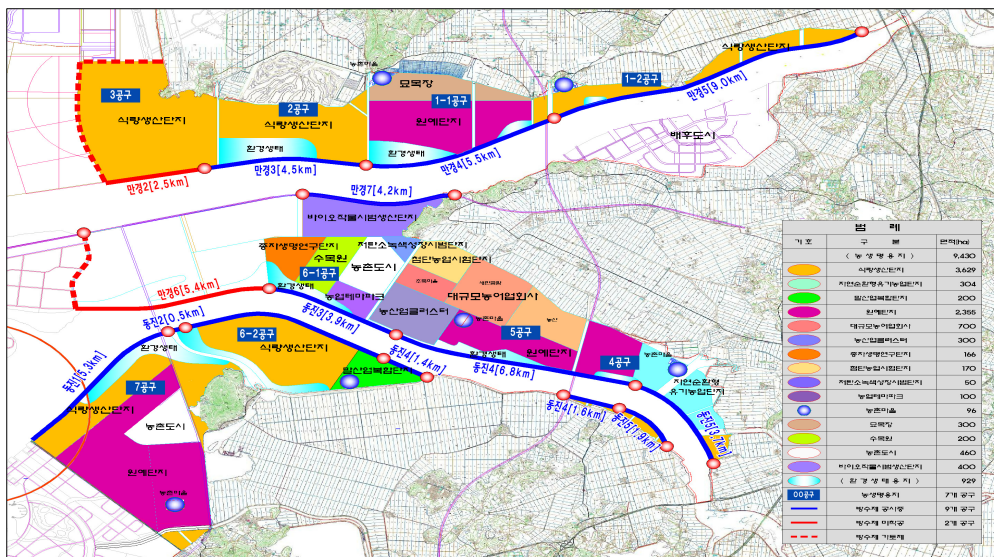
이에 따라, 2010년에는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구상의 개발방향과 목표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문가 간담회, 새만금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을 수립(2011년 3월) 및 보완(2014년 9월)하였다.

동 계획에는 내부토지의 개발을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 복합도시 개발, 방조제 및

다기능부지 명소화사업 추진, 매립토 조달사업, 농생명용지 조성 구간의 방수제공사 조기 착공, 만경·동진강 하천종합정비사업 등을 5대 선도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새만금 전체 내부개발토지(29,100ha)의 30%에 해당하는 9,430ha는 2020년까지 농생명용지로 개발하기로 함에 따라, 농생명용지 조성 구간의 방수제공사를 선도사업으로 선정하여 조기 착공하기로 한 것이며, 방수제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농업용지조성 공사를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림 2-2-24 새만금 농생명용지 이용계획도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조제공사 준공을 앞둔 2009년에 농생명용지 조성 구간의 방수제 62.1km, 농생명용지 9,430ha 및 생태환경용지 929ha 등을 개발을 위한 총 사업비를 확보하고, 농생명용지 조성 구간의 방수제 62.1km 중 2016년까지 선도사업 구간 54.2km를 완료하였으며, 2016년말 현재 공정률 73%(방수제 11개 공구 사업비 11,206억원 대비 2016년까지 8,227억원 투입) 수준까지 추진하였다.

농생명용지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저탄소 녹색성장의 복합농산업·수출전진기지로 조성하기 위해 고품질 첨단농업, 수출농업, 녹색성장, 농업생태관광을 지향하는 농산업 모델로 개발해 나갈 예정으로 2013년부터 2020년 완료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농생명용지 중 개발여건이 양호한 5공구 1,513ha는 2013년에 착수하였고, 2017년까지 농업특화단지 700ha 등 5공구 전체면적을 농업용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농생명용지를 조기 개발함에 따라 새만금지구내 산업·도시 및 관광용지 등에 대한 투자를 유발하는 등 타 용지 개발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머지 농생명용지도 2015년부터 연차적으로 착공하여 2020년까지 친환경적이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룬 고품질 첨단농업, 수출농업, 농업생태 공간 등 경쟁력있는 다양한 농산업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같이 새만금지구의 첨단 농산업단지 개발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성장동력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2-2-52 새만금지구 내부개발 추진성과

(단위 : km, ha)

구 분	2013	2014	2015	2016	총계
방수제(62.1km)	시행 중 53.7 신규 0.5	시행 중 54.2	시행 중 4.2 준공 50.0	준공 4.2	준공 : 54.2km 미착수 : 7.9km
농생명용지(9,430ha)	신규 1,513	시행 중 1,513	시행 중 1,513 신규 3,522	시행 중 5,035	시행 중 : 5,035ha 미착수 : 4,395ha

(2)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건설

새만금복합단지와 고군산군도를 연계한 국제해양 관광벨트화 및 도서지역 주민 등 도로 이용자의 교통편의제공,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본 사업이 추진되었다.

고군산군도 연결도로는 익산방국토관리청에서 2008.2~2009.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3개 구간으로 나눠 2009년도에 착공하였다.

2016년도에 2개 공구가 준공하여 개통 중에 있으며, 나머지 공구는 2017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 진행중에 있다.

표 2-2-53 고군산군도 연결도로건설공사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2015년까지	2016년	2017년	장래
계	296,777	259,542	25,746	7,609	0
고군산군도1	49,122	44,448	4,674	0	0
고군산군도2	117,974	117,974	0	0	0
고군산군도3	129,681	97,120	21,072	7,609	0

(3) 새만금 신항만 개발사업

새만금 신항은 서해 중부권 물류 거점항으로 새만금 배후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물동량 처리를 위해 2030년까지 총 2조 5,482억원(재정 1조 4,102억원/민자 1조 1,380억원)을 투자하여 안벽 18선석, 호안 14.4km 등을 단계적으로 건설해 하역능력 17,291천RT/년을 확보할 수 있는 항만시설을 구축함으로써 국제적인 항만의 비즈니스 및 물류, 관광레저 등의 복합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표 2-2-54 기항지 현황

구 분	선박규모	총 계		2020년(1단계)		2030년(2단계)	
		선석수	계획연장	선석수	계획연장	선석수	계획연장
자 동 차	2만 DWT	1	225	1	225	-	0
일반잡화	2만 DWT	14	2,970	2	420	12	2,550
컨테이너	2천 TEU	2	515	1	265	1	250
크 루 즈	8만 GT	1	405	-	-	1	405
합 계	-	18	4,115	4	910	14	3,205

새만금 신항 개발은 2011년 항내 정온 수역을 확보하기 위한 방파제 축조공사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약 2,883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2016년도에 251억원을 투입하여 방파제 3.1km를 완공하여 항만 내부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5년도에는 방파제 축조공사 후속사업으로 새만금 방조제와 신항만을 연결하는 진입도로 및 북측방파호안 축조공사의 실시설계, 2016년에는 부두개발 위한 가호안 및 매립호안 축조공사 기본조사 설계를 완료하여 본격적인 항만 내부개발 사업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2017년도에 진입도로 및 북측 방파호안 축조공사와 가호안 및 매립호안축조공사로

나뉘어 발주할 계획임에 따라 신항만 내부개발이 입체적으로 병행 추진되어 신항 개발의 조기 구축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이며, 입찰방법이 각각 대안입찰과 일괄입찰로 결정됨에 따라 공기 단축 등 사업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 신항만 1단계 건설로 인해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항만 건설투자와 항만운영의 지역경제효과로서 2조 1,729억원으로 추정되었으며, 고용 유발효과는 1만 5,822명의 고용유발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새만금 신항의 2단계 사업에는 8만톤급 크루즈선이 정박할 수 있는 전용부두를 건설할 계획임에 따라 신시도 고군산 마리나 항만, 고군산 군도를 비롯해 새만금 방조제 등을 연계한 물류와 관광이 복합된 항만으로 건설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환황해권 경제 공동체의 중심지로서 국가 경쟁력 제고와 신성장 엔진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새만금 국제관광단지 기반조성

새만금 복합도시용지 등 내부개발에 선행하여 새만금 상설·부대공연 등 이벤트 개최, 생태체험공간, 어린이 생태체험 학습랜드 조성 등을 통해 관광객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하는 등 새만금을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관광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1년 새만금 문화관광 콘텐츠 발굴 및 사업화 방안마련 및 새만금 관광특성화를 위한 문화관광전략을 수립하고, 2013년 새만금 관광명소화 방안을 의결하여 새만금 생태체험공간 사업시행, 새만금 상설공연개최, 어린이 생태체험 학습랜드 조성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 하였다.

2016년에는 새만금 관광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상설공연 127회, 방조제 거점거리공연 30회를 실시하여 방문객 32,000여명을 동원하였다. 해당 사업은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문화 향유 기회 제공, 지역브랜드 제고, 지역관광사업 발전 등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표 2-2-55 최근 3년간 지역 기여도

(단위 : 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3.95(78.0점)	4.08(81.6점)	5.95(85점)
문화향유 기회 제공	4.00(80.0점)	4.23(84.6점)	질문내용 변경
지역 브랜드 제고	3.99(79.8점)	4.12(82.4점)	6.00(85.7점)
지역관광사업 발전기여	4.02(80.4점)	4.23(84.6점)	6.04(86.3점)

* 「2016 새만금 관광활성화 지원」 사업 종합평가 발췌

5. 기업도시 활성화로 지역경제 기여

(1) 기업도시 기반시설 지원사업

우리나라는 지난 40년간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산업 등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지속되어 왔다. 그 결과 산업·금융 등 경제활동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방은 인구감소를 겪는 실정으로 산업공동화에 따른 소득 감소 및 실업증가로 지방의 자립기반이 크게 약화되었다.

이에 정부는 민간기업을 국내 투자촉진과 지역발전의 견인차로 활용할 방안으로 2004년 12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기업도시는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해 민간기업 주도로 개발되는 도시로서 기업 자신이 필요한 용지를 개발하여 생산·연구개발 등 유관 산업과의 연계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정주에 필요한 주택·교육·의료 등 자족적 복합기능을 가진 도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기업도시 건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하여 지자체의 관심을 제고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2005년 1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고시한 결과 8개 지역이 신청하였으며, 이에 대한 현지조사 및 평가, 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충주·원주(이상 지식기반형), 무안(산업교역형), 태안·무주·영암·해남(이상 관광레저형) 등 최종 6개 시범사업이 같은 해 7~8월 선정되었다. 선정된 시범사업은 각 사업별 참여기업과 지자체 주도로 전담 기업을 설립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거쳐 2007년 10월 태안기업도시의 착

공을 시작으로 2008년 충주(6월), 원주(7월), 2013년 영암·해남 구성지구(1월)가 사업을 착공하였으나, 국제금융위기 및 국내경기 침체에 따른 경영악화에 의해 사업시행자의 사업포기로 2011년 1월 무주 사업이 취소된 이후 무안 기업도시도 주 출자자인 중국측의 철수, 특수목적법인(SPC)의 청산 등으로 2013년 2월 사업이 취소되는 등 기업도시 사업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실정이었다.

정부는 부진한 기업도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3년도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 무역투자진흥회의 안전상정을 통하여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양도·양수가격 기준 마련, 면허권 양수대금 분할납부(3년 거치 7년 상환) 시 이행보증증권 제출 면제, 이자율 하향조정(5%→2.65%)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였고, 2014년도에는 영암해남 기업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유수면 매립후 총사업비 정산을 위한 토지가격 평가시 평가기준을 기업도시 지정당시 현실이용상황으로 평가하는 공유수면 특례도입을 추진하였고, 기업도시 공원녹지 확보율을 완화하여 기업도시 사업시행자의 사업성을 향상하였다.

표 2-2-56 기업도시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단위 : 만㎡, 억원)

구 분		면적	총사 업비	사업추진 현황	분양 및 입주현황	참여기업
총 주		701	5,343	준공 (2012년12월)	분양률 87.5% 17개사 입주완료 9개사 공장설계중	포스코건설, 주택공사, 임광토건, 엠코, 동화약품, 농협 등
원 주		529	9,722	착공 (2008년 7월) 1단계 준공 (2015년 8월)	공정률 73% 분양률 51.2% 10개사 입주완료	롯데건설, 경남기업, 벽산건설, 하나금융투자, IBK투자증권 등
무 안		-	-	-		사업취소(2013년 2월)
태 안		1,547	12,084	착공 (2007년10월)	공정률 37.8% 골프장 4개소 완료 및 운영	현대건설
무 주		-	-	-		사업취소(2011년 1월)
영 암 · 해 남	삼 호	866	6,339	개발계획승인 (2009년10월)	공유수면 매립공사 및 골프장 공사 추진	에이스회원권거래소, 한국관광공사, 전라남도 등
	구 성	2,096	9,835	착공 (2013년 1월)	공유수면 매립공사 및 골프장 공사 추진	보성건설, 한양, 전남개발공사, 전라남도 등
	삼 포	429	4,402	개발계획 승인 (2010년 10월)	1단계 F1 경기장으로 기사용	SK건설, 전남개발공사, 전라남도 등
	부 동	-	-	-		* KDI 사업타당성 분석결과(2011년 12월), B/C 율 1미만으로 반려(2012년 1월)

* 영암해남기업도시 중 부동지구는 시범사업 외 추가사업임.

또한 2005년도에 도입된 기업도시 제도에 대한 문제점, 사업추진현황 등을 분석하고 기업의 신규참여 확대를 위해 맞춤형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으며, 기업도시 민간 참여 지원을 위해 2015년에 기업도시법 및 기업도시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입지규제완화, 개발유형통합, 최소개발면적 축소, 주된용지율 완화, 거점확장형 개발방식도입, 개발이익환수제 완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도 도입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2016년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업계 등을 대상으로한 세미나 및 간담회를 실시하여 기업도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바

탕으로 기업도시에 대한 지자체 및 민간기업의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업도시 개발사업 주 진입도로 건설비의 50%를 국고보조(2016년까지 864억원 지원)하여 충주기업도시 개발사업은 준공(2012년 12월)하였고, 원주기업도시는 1단계 준공(2015년 8월)으로 개발사업의 공정률 73%(2016년 12월 기준)를 달성하였으며, 영암·해남 기업도시 구성지구 및 삼호지구는 공유수면 매립공사와 골프장건설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태안 기업도시는 골프장 4개소를 완공하여 운영하는 등 기업도시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기업도시 조성에 따라 충주기업도시는 3만명의 고용유발효과와 3조원의 직·간접적 생산효과가 예상되고, 원주기업도시는 1만명의 고용유발효과와 8,7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되는 등 기업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일자리 창출효과도 기대된다.

정부에서는 2015년 법률과 시행령 개정 완료로 영암·해남 기업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특례 도입과 기업의 신규참여 확대를 위해 마련한 기업도시 맞춤형 제도개선이 완료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기존 시범사업 활성화 및 신규 참여확대가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표 2-2-57 기업도시 기반시설 국고지원 현황 및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계	1,908	508	38	67	136	1,159	
원주	289	166	25	18	36	44	
충주	143	143					
태안	199	199					
영암·해남	1,308	-	13	49	100	150	996

* 충주, 태안, 2012년 이전 지원완료, 원주는 2016년 지원완료

6. 국제자유도시 조성지원으로 외자유치 촉진

(1)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지원사업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전략은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고,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도 무사증 입국 대상을 190개 국가로 확대하였으며, 투자진흥지구 도입 및 첨단과학기술단지 등을 조성하였다. 또한 법인세, 소득세 및 지방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해외자본 유치를 위하여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를 도입하여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3년 또는 5년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영주권을 부여하여 부동산의 간접투자를 도모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2년 제주공항과 항만에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하였고, 2005년에는 제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고 2006년에는 평화사업 추진을 위한 국제평화재단을 설립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도 전역을 국제회의 개최 도시로 지정하였다.

정부는 위와 같은 다양한 시책의 지속 추진뿐 아니라 새로운 시책 발굴로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IT·BT 등 첨단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제주도를 금융과 물류가 결합된 종합적 대외거점이자 동북아시아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는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국제 비즈니스 클러스터로 육성하여 홍콩, 싱가포르 같은 국제적인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며, 성공적인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 중인 사업의 단지 외 기반시설(진입도로) 건설비를 지원을 하고 있다.

국가산업단지인 첨단과학기술단지는 제주지역의 첫 번째 산업단지로서 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여 원활한 단지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용수시설 약 25억원, 진입도로시설에 총사업비 약 400억원(L=4.4km, B=20m)을 투입하여 2013년에 완공하였다. 현재 첨단과학기술단지의 산업시설용지는 100% 분양 완료되었으며 카카오, 이스트소프트 등 133개 기업이 입주하였다.

제주헬스케어타운조성은 국내외 기업유치 및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자유도시 핵심사업으로서 글로벌 의료 환경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진입도로에 약 144억원(L=2.24km, B=20~24m)을 투입하여 2017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2016년까지 약 130억원을 지원하였다.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은 2013년 9월 중국 랑정그룹과 투자계약을 체결하여 2015년 A지구, 2016년 H지구 건축공사를 착공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서귀포관광미항 조성사업은 국가지정 항만인 서귀포항을 비롯한 주변지역을 정비·개발하는 사업으로 진입도로는 총사업비 약 280억원(L=2.6km, B=20~25m)을 투입하여 2016년에 완공하였다. 영어교육도시는 1단계 시범학교 개교에 맞춰 2013년까지 사업비 약 283억원(L=8.2km, B=20~27m)을 투입하였다. 현재 영어교육도시에는 3개 국제학교가 개교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4번째 국제학교 SJA Jeju도 2017년 개교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2021년까지 약 9천여명의 학생 수용과, 완전한 도시로서 자리매김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할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제주도를 국제적인 관광 휴양도시, 첨단지식산업도시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국제자유도시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진행 중인 다양한 프로젝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제문화복합단지 조성 사업, ECO 개발사업 등 신규 프로젝트도 적극 발굴·추진하고, 국제학교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등 규제 개선사항도 적극 발굴하여 제주도가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표 2-2-58 제주국제자유도시 주요 프로젝트 추진현황 사업별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 규모	기반시설 국고지원	추진실적
영어교육도시 (2008~2021년)	17,810억원 3,792천 m ²	28,3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1년 09월 : NLCS 및 KIS 국제학교 개교 2012년 10월 : BHA 국제학교 개교 2012년 12월 : 1단계 부지조성공사 준공 2016년 05월 : SJA 국제학교 착공
헬스케어타운 (2006~2018년)	15,214억원 1,539천 m ²	13,0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1년 12월 : 부지조성공사 착공 2012년 10월 : 녹지그룹(中) 본계약 체결 2012년 11월 : 1단계 건축공사 착공 2014년 08월 : 1단계 건축공사 준공 2014년 10월 : 2단계 건축공사(의료시설 포함) 착공 2016년 04월 : 외국인 의료기관 건축공사 착공 2016년 09월 : 부지조성공사 준공
신화·역사공원 (2006~2018년)	24,129억원 3,985천 m ²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2년 03월 : 부지조성공사 준공 2013년 09월 : 람정그룹(중) 투자계약 체결 2014년 04월 : 항공우주박물관 개관 2015년 02월 : A지구 건축공사 착공 2016년 12월 : H지구 기숙사 착공
첨단과학기술단지 (2003~2021년)	5,800억원 1,099천 m ²	42,4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4년 10월 : 국가산업단지 지정 2005년 06월 : 부지조성공사 착공 2010년 01월 : 부지조성공사 및 지원시설 준공 2016년 12월 : 133개 기업 입주(시설용지 100%분양)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2014~2020년)	1,385억원 848천 m ²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4년 05월 : 개발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시행 2015년 06월 :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2016년 12월 :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국가산업단지 지정승인
서귀포미항 진입도로 (2006~2016년)	2,223억원 232천 m ²	26,2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6년 05월 : 문화재청 기본계획 승인 2007년 12월 : 기반시설공사 착공 2009년 10월 : 1단계사업 준공 2012년 04월 :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지정

제6절 농산어업 경쟁력 강화

1.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6차산업화 및 일자리 창출

(1) 농식품ICT융복합추진

우리농업이 가진 개방화와 고령화, 영세한 영농규모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ICT를 농업에 융복합하여 농산업을 첨단화·과학화하여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10년부터 농업·농촌분야에 현장 적용이 가능한 ICT 융복합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생산, 유통, 소비, 농촌분야 등에 다양한 과제를 추진하여 왔다. 농업·농촌분야의 ICT 융복합 모델개발은 지자체와 농업경영체, 관련기업, 연구기관이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지역에서 ICT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여왔다.

또한, 기 추진한 과제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확산이 가능한 모델을 발굴하였으며, 2014년부터는 시설원예·과수·축산분야에 ICT를 융복합하여 농장을 PC나 모바일을 통해 원격으로 자동 조절하여 최적의 생산환경을 조성하는 스마트 팜 확산사업을 추진하여왔다. 스마트 팜은 농가에서 ICT 장비를 통해 축적된 농장의 환경정보와 생육정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자기 농장에 맞게 적용하여 생산량 증가, 품질향상 및 노동력 절감 등의 성과를 통해 농가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였다. 2016년에 스마트 팜 도입농가에 대한 성과를 분석한 결과, 도입 후 생산량이 27.9% 증가하고 고용노동비가 15.9% 감소하였으며 1인당 생산량도 40.4% 증가하였으며 스마트 팜 운영기간이 늘어날수록 생산성이 추가로 향상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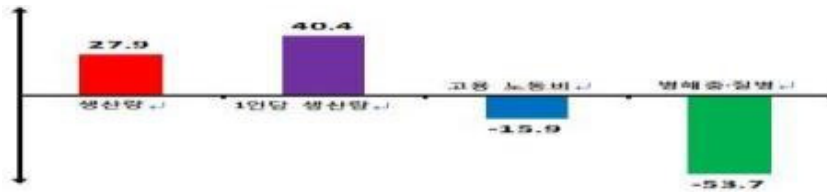
표 2-2-59 농식품 ICT 결합형 모델

(단위: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ICT 결합형 모델 개발	5	8	8	9

그림 2-2-25 스마트팜 도입농가 생산성 분석('16.11월)

(단위 : %)



(2)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시장개방 등으로 농어업 분야의 '생산 위축→일자리 축소→농어촌 활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단순한 농외소득 증대 차원을 넘어 지역의 다양한 부존자원을 산업화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농어촌 지역 부존자원의 융복합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2010년부터 종전에 개별사업으로 시행하던 13개사업(①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②농어촌테마공원조성, ③농공단지조성, ④어촌관광개발, ⑤복합농시공원조성, ⑥완전미브랜드파워현대화시설, ⑦한우명품화, ⑧FTA대비 축산업경쟁력제고, ⑨전통발효식품전용공장건립, ⑩향토산업육성사업, ⑪특화품목육성사업, ⑫김육상채묘 및 냉동망 보관, ⑬고효율 어류사료생산 공장건립)을 1개의 포괄보조사업으로 통합하여 농어촌의 다양한 부존자원을 기반으로 한 1·2·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을 다각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3년에는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수산분야는 해양수산부로 이관하고 사업명칭을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에서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으로 변경하였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은 농업인 조직, 생산자 단체, 농산물가공업체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하여 국고에서 50%, 지방비와 자부담을 합하여 5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사업비는 농촌 자원의 융복합화를 위한 농산물의 생산·유통·제조·가공 기반 구축은 물론, 농촌 체험·관광기반 구축 및 농공단지 조성 등 농촌 산업 집적화 기반 조성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은 재원 용도를 포괄적으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부여된 재원 한도 내에서 자체실정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설계하는 포괄보조사업으로서, 사업계획 수립, 사업시행 등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중앙부처는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포괄보조금 통합 첫해인 2010년에는 16개 내역사업에 대하여 2,359억원, 2011년에는 17개 내역사업에 대하여 2,435억원, 2012년에는 13개 내역사업에 대해 2,031억원, 2013년에는 6개 내역사업(유형)에 2,280억원(수산물야 174억원 포함), 2014년에는 1,763억원을 각각 지원하였다. 그리고 2015년에는 6차산업화지원이란 유형을 추가하여 7개 내역사업(유형)에 1,578억원, 2016년에는 1,567억원을 지원하여 총 매출액 2조 762억원, 총 고용인원 11,623명 등 농촌지역 소득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였다. 다만 종전의 여러 개별사업을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일부사업은 목표와 내용이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일부 존재하고 있다.

표 2-2-60 2016년도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주요 추진 성과

구 분	총 매출액	총 고용인원
2016년 실적	2,076,242백만원	11,623명

*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참여한 업체에 대한 매출액과 고용인원임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2011년에는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의 취지 및 사업목표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지원가능한 사업내용을 ①농수산물 생산·유통 기반 구축 지원, ②농수산물 제조·가공 지원, ③체험·전시 지원, ④농어촌체험·관광지원, ⑤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 지원 등 5개의 사업 유형으로 재구성하여 사업의 정체성 확립을 기하였다. 2012년에는 지역별 산업화 대상 부존자원의 유형을 고려하여 지역에서 실제로 사업화가 가능한 다양한 산업화 사업모델(모형)을 개발·보급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역량 강화에 노력하였다.

2013년에는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이 해양수산부의 수산부문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농촌부문으로 분리되어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과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으로 이원화되었다. 2013년부터 ①농촌산업화기획·평가체계 구축 지원, ②농산물생산유통기반구축 지원, ③농산물제조가공지원, ④농산물 체험·전시지원, ⑤농촌 체험·관광지원, ⑥특화농공단지 조성 및 개보수 지원 등 6

개의 사업 유형으로 재구성하여 지자체에 대한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사업추진 역량 제고와 사업비 집행의 책임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도 단위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컨설팅·모니터링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였다. 2014년에는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시행지침 및 모니터링 지침 등을 개정하여 지자체 사업담당자 교육을 하였고, 예산집행 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분석하여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다. 그리고 2015년에는 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 우수사례(12개) 선정 및 사례집을 발간하여 지자체의 성공적인 사업모델을 공유함으로써 포괄보조사업의 조기 정착을 유도 하였다.

(3)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우리 농촌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1995년 957만명→2010년 879만명) 농가소득 수준이 정체(2005년 31백만원→2014년 35백만원)되며, 도농간 소득격차가 13.7%p로 확대(2003년 76.2%→2014년 61.5%) 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휴양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을 도모하며, 농업의 6차 산업을 중심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을 하고 있다.

농촌관광은 그동안 양적 성장 단계(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현황 : 2011년(549개소)→2016년(953개소))에서 질적 발전단계로 접어들면서,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농촌관광자원의 서비스 품질수준을 제고하고 특색 있는 농촌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농촌관광사업 등급제를 통한 농촌관광 사업주체들의 자발적인 서비스 수준 제고를 도모하고, 계절별·테마별 홍보콘텐츠 발굴로 저변을 확대하였으며, 체험마을 공동협의체 중심으로 한 지역단위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통해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달성하게 되었다. 이로서 농촌체험휴양마을의 방문객은 (2015년 8.7백만명→2016년 10백만명) 연평균 1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농촌관광사업 등급제는 농촌 관광사업을 표준화된 기준에 따라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시설 및 서비스 등 수준을 차별화하여, 사업자의 자발적인 품질개선 유도를 통한 수익창출을 도모하고 소비자에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을 위해 도입되었다. 2013년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정에 따라 2013년 118개, 2014년 286개소, 2015년 350개소, 2016년 453개소의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해 등급을

결정하였다. 경관·서비스, 체험, 숙박, 음식 등 4개 부문에 대해 1~3등급과 등급 외를 부여하며, 4개 부문 1등급인 마을에 대해 으뜸촌(2014년 15개소, 2015년 8개소, 2016년 28개소)으로 지정하여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농촌체험관광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2007년 웰촌포털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모바일 시대에 적합한 수요자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해 주요 SNS채널(카카오톡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등)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지역자원과 연계된 농촌관광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트렌드 분석을 통해 월별로 테마를 정하여 매월 10개의 농촌관광자원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였다.

2006년부터 역량 있는 지역인재를 활용한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경영을 통한 농촌체험휴양마을 발전을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제도를 운영(국비·지방비 각각 50%)하고 있으며,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05년부터 역량강화 교육(2016년 1,328명 대상)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농촌체험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 및 배포하고 체험 및 화재 보험 등에 대해 지원(국비·지방비 각 50%·30%, 자부담 20%, 2014년 체험 432개소·화재 304개소→2015년 체험 774개소·화재 709개소→2016년 체험 820개소·화재 791개소)하고 있다. 농촌체험관광에 대한 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코레일 및 민간여행사와 협업하여 철도 인프라와 지역 관광자원, 농촌관광을 연계한 여행 상품을 개발(2016년 65종)하여 운영하였다.

농촌관광 경험 정도가 2004년 7.7%에서 2014년에는 14.8%로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은 17.7%에 달하고 있으며, 체험형 관광 및 환경친화적 관광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농촌관광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농촌자원과 융복합한 패키지 상품 개발과 지역주도의 발전체계 구축, 온라인 예약결제 서비스 제공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표 2-2-61 농촌관광 방문객 현황

(단위:만명,개소)

구 분	2013	2014	2015	2016
농촌관광 방문객 수(만 명)	1,052	829	870	1001
농촌관광 등급평가 개소수(개소)	200	300	350	450

(4) 농촌축제지원사업

문화관광축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촌 마을·권역단위의 축제를 지원하여 농촌지역 활력 증진 등을 도모하고자 2008년부터 농촌축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농촌의 생활·전통·경관·체험 등을 소재로 한 마을·권역단위 축제 지원을 통해 도농 교류 촉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을 유도하고 있으며, 축제 개최를 위한 기획, 프로그램 개발, 운영·홍보·컨설팅 및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3년 38개, 2014년 41개, 2015년 42개, 2016년에는 54개 선정하여 매년 농촌축제 10억원(국고 50%, 지방비 50%)을 지원하여 개최하였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축제에 대해 농촌축제자문단 등의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여 축제 콘텐츠를 보완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였으며, 축제 전반에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하였으나, 일반 주민의 참여도는 기대보다 낮게 나타났다.

앞으로도 전문가 컨설팅 및 타 사업 연계·협력 등을 통해 축제의 품질을 높이고, 기획·준비·실행 등 축제 전반에 가급적 많은 주민이 참여하여 즐길 수 있도록 주민 중심의 농촌축제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표 2-2-62 농촌축제지원 현황

(단위:개소)

구 분	2013	2014	2015	2016
농촌축제지원 사업량(개소수)	38	39	41	52

(5)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최근 어촌은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차, 2차, 3차 산업을 연계한 패키지 형태의 복합(6차)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기회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2013년도부터 지자체 포괄보조사업으로 해양수산부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을 편성, 지자체에 교부하여 지자체 사업으로 집행하고 있다. 어촌체험관광지원, 수산물생산유통기반구축, 수산물유통시설건립, 6차산업화지원 등 2013년부터 2016년까지 726억원을 지원하여 어촌 지역의 부존자원 발굴과 산업화에 필요한 생산, 유통, 제조, 가공, R&D, 유통, 마케팅 등의 기반 구축과 향토기업의 집적화를 통한 기반 조성을 하고자 한다.

사업지원을 통해 2011년도 35,686백만원이던 매출액은 2015년도 74,063백만원으로 108% 증가했으며 고용인원은 2011년 177명에서 2015년 644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매년 20명 내외의 순 일자리 증가를 달성하였으며, 2017년까지 누적 일자리 증가가 166명에 달할 예정이다.

표 2-2-63 연도별 예산 지원액(제주포함)

(단위 : 백만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7,463	17,329	16,819	20,979

향후 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명회 개최 및 포괄보조사업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사업자의 집행률을 제고하고, 침체된 어촌경제에 새로운 활력과 어촌자원의 다양한 산업화를 통해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6) 특화어항 개발사업

기존 수산 기능 중심의 단순어항 개발에서 벗어나 보다 가치 있는 어항을 개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어항을 지역경제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들을 담은 「제2차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2014년)」을 수립하였다.

2차 기본계획에 따라 어항의 부가가치를 창출시키고 어촌 지역발전 및 어촌 소득증대 기반 마련을 위해 관광레저 및 편의시설 확충이 우선적으로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해양안전 대비책 마련 또한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시책으로 나타났다. 동 사업은 수산업 지원 중심 기능을 주로 수행하고 있는 어항에, 관광·레저, 휴식 기능 등을 추가하여 어업인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어업 외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4년에는 어항의 어메니티 창출을 위한 아름다운 어항(4개소) 개발, 해양레저활동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촌 마리나역(驛) 조성 사업(16개항) 및 지역 특성과 연계한 다기능어항 개발계획(10개항)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어항 레저관광 개발계획을 마련했다.

2016년까지 아름다운어항과 다기능어항 사업에 국비 약 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설계용역과 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고 다기능어항인 위도항, 능포항에 대해 공사를 발주했다.

특화어항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어항이 지역경제의 중심지로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7)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1)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

산업화 도시화 등 경제성장과 삶의 질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고속철도 확충 등 시간 및 공간 이용 패턴의 변화로 야외휴양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산림휴양·치유, 숲 체험, 산림교육 등 다양한 영역으로 복합적인 산림휴양서비스에 대한 국민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1988년 자연휴양림을 최초 개장한 이래 2016년까지 165개소의 자연휴양림이 조성되었으며, 2016년에는 전 국민의 30%가 넘는 1천 5백만명 이상이 자연휴양림을 방문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민여가 활용의 대표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2017년에는 13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5개소의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한편 다양화되는 국민수요에 대응하여 숲속야영장,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등 다양한 유형의

산림휴양시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표 2-2-64 자연휴양림 이용객 추이 (2007~2016년)

(단위 : 만명)

연 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용객	626	763	869	944	1,060	1,161	1,278	1,359	1,562	1,524

2) 지자체 도시숲 조성

도시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녹색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05년부터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숲은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정화 및 기후 조절, 소음감소, 정서함양, 도시생태계 보전 등의 효과가 있다. 2016년에는 1,224억원을 투입하여 녹색쌈지숲(151개소, 58ha), 산림공원(34개소, 154ha), 생활환경숲(122개소, 83ha)과 가로수(763km), 명상숲(119개소) 등을 조성하였으며, 2017년도에도 1,244억원을 투입하여 전국에 녹색쌈지숲, 산림공원, 생활환경숲 등 184개소 330ha, 가로수 553km, 명상숲 81개소 등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그림 2-2-26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례



3)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산림 식물자원의 체계적

인 수집·보존·증식 및 연구·이용 촉진을 위해 지방수목원과 산림박물관을 육성·지원하고 있다. 2016년에는 127억원을 투입하여 지방수목원 32개소(조성 14, 보완 18) 및 산림박물관 7개소(보완 7)에 대한 연차별 사업을 지원하였고, 2017년에는 9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4) 지역 생태숲 조성

산림생태계가 안정되어 있거나 산림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 생태숲으로 지정하여 산림식물자원의 자생지내 보전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의 자연학습 및 생태 교육의 장으로 제공하고 있다. 2016년에는 22억원을 투입하여 총 5개소에 대해 지원하였으며, 2017년에는 14억원을 투입하여 5개소를 지원, 산림생태계의 안정과 산림생물다양성의 유지·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5) 지자체 치유의 숲 조성

현대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만성질환 및 아토피·천식 등 환경질환이 증가하여 건강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산림환경이 각종 질병의 원인인 스트레스를 해소함으로써 심리안정 및 각종 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사례들이 소개되면서 잘 가꾸어진 산림자원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대안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산림치유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09년 산음 치유의 숲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9개소의 국·공립 치유의 숲이 조성되어 운영 중이며, 2016년 한해에만 전국적으로 1,144천명이 방문하였고, 최초 운영을 시작한 이래 8년간 4,807천명이 치유의 숲을 방문하였다. 2016년에는 전국 31개소 치유의 숲 조성과 2개소 보완 사업에 170억원을 투입하였고, 2017년에는 2016년에 비해 5개소가 늘어난 36개소의 조성과 3개소의 보완을 위해 233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표 2-2-65 치유의 숲 이용객 추이 (2009~2016년)

(단위 : 천명)

연 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용객	4,807	1	76	158	315	787	1,153	1,173	1,144

현재, 질 높은 산림치유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산림치유지도사 제도를 운영 중이며, 국립 치유의 숲의 경우 배치기준에 따라 1개소 당 3명을 배치하고 있다. 또한 「산림복지법」 제정에 따라 전문업 등록제¹⁷⁾ 운영 등 산림치유지도사의 장기일자리 전환을 통한 전문성 확보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8) 숲길네트워크 구축

1) 등산로 정비

여가시간 증가 및 소득수준 향상으로 증가하는 국민의 등산수요에 부응하고 산악사고 예방 및 산림생태계 보호를 위해 훼손 등산로를 자연 친화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산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6년에는 국고 47억원을 투입하여 등산객 증가로 훼손이 심화되고 있는 백두대간·정맥 등산로 정비사업 158km를 지원하였으며, 2017년도에도 15억원을 투입하여 훼손 등산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국민의 등산수요에 부응할 계획이다.

2) 트레킹길 조성

등정(登頂) 및 주능선 종주에서 탈피하여 수평적 개념의 새로운 산행문화 변화에 따라 등산로에 집중되는 이용자 분산을 통한 산림생태계 훼손 완화와 지역의 역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마을과 마을을 잇는 트레킹길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

17) 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산림복지 전문업으로 등록된 단체를 통해 산림치유지도사 등 산림복지 전문가를 상시 고용하도록 유도하고 프로그램 운영 용역 등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장기일자리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코자 도입하는 제도

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숲길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2016년에는 국고 19억원을 투입하여 백두대간 트레일, 한라산둘레길 등 국가 트레킹길 21km 조성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도에도 19억원을 투입하여 농·산촌 경제 활성화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체험중심의 건전한 산행문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국가 트레킹길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표 2-2-66 숲길조성관리 투자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총계
숲길조성관리 투자액	8,599	5,090	3,362	6,643	23,694

2.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1)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우리나라는 칠레(2004년 4월 1일), EU(2011년 7월 1일), 미국(2012년 3월 15) 등과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었으며, 캐나다, 호주, 콜롬비아, 중국과는 협상이 타결되어 세계 50개국과 FTA를 체결하였다. 이처럼 FTA확대로 RCEP(중국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16개국 중 우리나라는 일본을 제외한 15개국과 모두 FTA발효 또는 체결한 상황으로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있으며 국산 과실과 수입산 과실과의 경쟁은 가속화되고 있다. 더불어 국내 과수 생산·유통구조는 소비자 지향적으로 개편되고 있어 정부의 과수산업 발전 방향도 국내외 여건을 반영하고 있다.

정부는 개방 하에서도 지속 가능한 과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2004년부터 2010년까지 FTA 과수경쟁력제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1년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와 앞으로 진행될 각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등에 대응하여 과수농가에 대한 FTA 보완대책을 수립(과수산업발전대책, 2011년 5월)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수 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외국산과 품질경쟁이 가능하도록 과수농가의 생산시설을 현대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경쟁력 확보와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기반을 구축해 왔다.

특히, 고품질의 과실생산과 유통체계 정착 등 과수 생산·유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 여건반영, 투융자 효율성 제고 등 사업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자체가 수립한 과수산업발전계획을 엄격히 심사하여 패키지로 지원하는 지방자율계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산·학·연 전문가로 「민간평가단」을 구성하고, 2단계 평가를 통해 성공가능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다.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사업의 지원조건에 따라 우량품종갱신, 지주시설, 비가림시설 등 고품질생산, 생산비·에너지절감 시설 및 장비, 방풍·관수 등 재해예방 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2013년에는 65,232백만원, 2014년에는 53,741백만원, 2015년에는 53,624백만원, 2016년에는 51,822백만원을 연도별로 지원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 2025년까지 고품질시설현대화 83,000ha(2016년까지 65,000ha지원), 유통시설현대화 50개소(2016년까지 32개소 지원) 설치를 목표로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표 2-2-67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성과

(단위 : 천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10a당 생산액 및 증가율(%)	- (신규)	- (신규)	2,818 70%	2,813 42%

(2)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우리나라의 과수농가 호당 경영규모는 0.8ha 수준으로 1ha미만이 81.2%를 차지하며, 전체농가 중 61%(122천호)가 60세 이상 고령농가로 기술개발이나 자본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에 비해 경영규모가 적어 기계화가 어렵고, 경사지 경작로 등 기반정비가 미흡하여 노동력 소요가 많은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다.

개방에 대비한 경쟁력 있는 과수 생산단지 육성을 목적으로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 조성사업을 통해 용수 개발, 농작업로 확·포장 등 과수 생산·유통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품목별 생산성 향상과 품질 고급화에 필요한 핵심 재배법을 확대하고 적정규모의 영농규모를 갖추고 기술농업을 실천하며, 생산조직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업농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사업은 과수주산지 중 집단화된 지구(30ha 이상)를 대상으로 관정, 양수정 등 용수원을 개발하고, 진입로 및 경작농로 확·포장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한·미 FTA 등 시장개방 대응 및 과수산업 기반유지를 위해 2015년도부터 사업지원범위를 최소 10ha이상으로 확대하였다. 사업시행주체는 시·도지사(시장·군수)로 기반조성비는 국고 80%, 지방비 20%이며, 사업기간은 2년으로 1년차에 30%, 2년차 70%를 지원한다. 연차별로는 2013년 119억(567ha), 2014년 137억원(413ha), 2015년 141억원(604ha), 2016년에는 143억원(603ha)을 지원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는 2025년까지 과실전문생산단지 11,600ha(2016년까지 6,457ha) 기반조성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표 2-2-68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추진성과

(단위 : 천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10a당 생산액 및 증가율(%)	- (신규)	- (신규)	2,818 70%	2,813 42%

(3) 과실브랜드 육성지원사업

다국적기업(Sunkist, Dole 등)과 경쟁할 수 있는 국내 대표과실브랜드를 육성하고 지역단위 군소브랜드를 통합한 과실주산지 중심의 지역 공동브랜드를 육성하여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07년부터 과실브랜드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브랜드 품질관리, 마케팅 운영지원, 브랜드 홍보지원 등을 통해 생산자를 조직화·규모화 하여 계획적인 생산과 품질 관리로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갖춘 과실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합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및 마케팅 능력과 시장 교섭력을 증대하여 농가소득 향상은 물론 과수 소비확대 등을 도모하고 있다.

사업대상자는 사업시작 전년도에 전문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 브랜드 경영체의 적합성, 생산·유통 혁신 실적 및 계획 등을 평가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평가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은 사업비 조정 등 사업계획에 반영함으로써 과실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이 시작된 2007년에는 전국공동브랜드(Sunplus) 1개와 7개의 지역공동브랜드 지원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3개 브랜드경영체(전국, 밀양, 김천)에 975백만원, 2014년에도 3개 브랜드경영체(전국, 밀양, 김천)에 905백만원, 2015년에는 3개 브랜드경영체(전국, 전북, 김천)에 875백만원, 2016년에는 4개 브랜드경영체(전국, 전북, 전남, 경북)에 1,145백만원 지원하였다. 2016년까지 20개 과실브랜드를 육성하였으며, 과실브랜드 경영체의 유통비율이 18.4%까지 증가하였다. 2025년까지 브랜드경영체 28개소를 육성하고, 과실 유통량 중 브랜드경영체의 유통비율을 30%까지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난립하고 있는 과실 브랜드를 개선하고 경쟁력 있는 브랜드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 2015년부터 광역 또는 시·도단위 브랜드경영체에 한해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표 2-2-69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추진성과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브랜드 유통비중(%)	-	-	18.3	18.4

표 2-2-70 과실브랜드 육성지원사업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개)

구 분	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사업비(국고)	15,447	2,227	2,507	2,256	1,847	1,375	1,335	975	905	875	1,145
브랜드경영체 수	20	8	3	1	2	1	1	1	-	1	2
(당해연도 국고 지원)		(8)	(11)	(12)	(7)	(5)	(5)	(3)	(3)	(3)	(4)

(4)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과수 생산과 유통을 주도할 품목 조직을 육성하고, 산지유통체계를 개선하는 등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4년부터 과수 주산지에 규모화·현대화된 거점산지유통센터(APC) 건립을 지원해왔다. 특히, 한·미 FTA 등 추가 시장개방에 따라 국내 피해 과수농가의 안정된 영농보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과수 주산지에 집하, 선별, 포장, 저장 등이 가능한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산지농가 조직화와 유통 규모화 및 시장교섭력 제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사업은 산지의 마케팅 경쟁력과 교섭력을 높이고, 상품화 시설 및 위생시설을 일괄 지원함으로써 상품성 향상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에 국고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기간은 2년으로 1년차 40%, 2년차 60%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존 지원 사업 규모를 현행 APC규모(처리물량 1~2만톤)와 병행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중형 규모(5천톤~1만톤)의 APC 건립 지원으로 확대하여 사업을 활성화 하였고, 공공유형보다 일반유형(생산자단체 등) 위주로 지원하여 책임 경영을 유도하고 있다.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총 24개소를 선정하여 1,458억 원을 지원, 건립하여 산지유통의 중심축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013년 66억원, 2014년 62억원, 2015년 67억원,

2016년 69억원을 각각 지원하여 총 24개소 건립을 추진 중(준공 22개소, 공사 중 2개소)이며, 중장기적으로는 2025년까지 거점산지유통센터 35개소 건설하여 주요과실 전체 유통량의 30%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표 2-2-71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추진성과

(단위 : 억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매출액 및 증가율(%)	-	-	239 76.5%	240 80.0%

(5) 농업기반정비

농업기반정비사업은 개발 여건이 양호한 논,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 및 안전·편의영농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국제 곡물가 상승에 대응하고 국내 곡물 자급률 제고를 위한 일환으로 논에서의 밭작물 재배를 유도하기 위한 기반시설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재해에 취약한 시·군 관리 노후 수리시설을 보수·보강하고, 상습 침수 농경지에 대한 방재시설을 설치하여 자연재해를 예방하여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농업기반정비사업은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2010년부터 광특회계 시·도 자율편성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다. 재원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지정하여 지자체별로 부여된 재원의 한도 내에서 지자체 특성에 따라 농업 생산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사업을 기획·설계·시공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부여하고 있는 포괄보조제도의 취지에 따라 최소한의 사업추진 모니터링 및 법정 계획 수립 등 행정적 지원을 통해 지자체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비 지원조건은 국고 80%, 지방비 20%로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 포괄보조사업으로 지원하기 전에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던 개별사업은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 보조율을 적용하고, 새로이 추진하는 사업부터 변경된 보조율(국비 80%)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표 2-2-72 농업기반정비사업 내역사업별 주요내용

내역사업명	사업 주요내용
밭기반 정비	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등 주산단지 및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 생산기반 구축, 밭작물 생산성 향상, 품질개선으로 소득증대
대구획 경지정리	농로, 용·배수로 시설이 취약한 우량농지를 재정비하여 대형기계화 영농 기반 조성으로 토지 및 노동의 생산성 증대와 농지 및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보전, 관리기반 조성
논의밭작물 재배기반지 원	기존 용·배수체계 활용이 가능한 집단화된 논을 대상으로 압거배수, 송수관로, 농로개선 등을 정비, 논에 밭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국제곡물가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곡물자급률 제고
시·군수리시 설개보수	노후·손괴 등으로 기능상실 및 재해취약한 시·군관리 수리시설의 보수·보강을 통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영농편의 제공
소규모 배수개선	50ha 미만의 상습 침수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로, 배수문 등의 방재시설을 설치하여 침수피해 방지

밭기반정비,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2009년까지는 개별사업으로 추진해오다 2010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라 수산분야를 포함한 광특회계 농어업기반정비사업으로 추진하였다. 2012년에는 농어업기반정비사업에 논에 밭작물 재배유도를 위한 논의밭작물 재배기반지원사업을 신설하였다. 2013년에는 재해예방을 위한 시·군관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을 새로이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부처 조직개편에 따라 제주도를 제외한 시·도에서는 수산 분야를 제외하여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에는 50ha 미만 상습 침수 농경지에 대해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여 침수피해 예방으로 안전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6년에는 9개 내역사업에 국고 1,723억원을 지원하였다. 계정별로 분류해 보면, 지역개발계정(일반 시·도)으로 밭기반정비, 대구획경지정리, 논의밭작물재배기반지원, 시·군수리시설개보수, 소규모배수개선 등 5개 내역사업에 국고 1,519억원을 지원하였고, 제주계정(제주특별자치도)으로 밭기반정비, 소규모배수개선, 농업인교육훈련, 농업경영 컨설팅지원, 가축분뇨처리지원, 원원종 및 원종생산 등 6개 내역사업에 19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세종계정(세종특별자치시)으로 시·군수리시설개보수 등 1개 내역사업에 10억원을 지원하였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총 6,394억원(국비)을 투자하여 농업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영농을 할 수 있도록 농업생산기반을 정비하였다. 이를 통해 생

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농가 소득 증가에 크게 기여하였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발기반정비사업은 집단화된 밭 180천ha를 대상으로 1994년도부터 2016년까지 112.6천ha(62.6%)를 추진하여 가뭄에 대응한 안정적인 용수 공급, 기계화 영농 기반 구축 및 농산물 운송을 위한 접근성 제고 등 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바가 크다.

한편, 농업기반정비사업은 생산기반 지원을 통해 소득 증대 측면도 있지만, 가뭄, 태풍, 집중호우, 해일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목적도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따른 안전하고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모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표 2-2-73 농업기반정비사업 추진성과

(단위 : 천ha, %)

구 분	총계획	2013	2014	2015	2016	2017이후
발기반정비 실적(누계, 천ha)	180	101.2	105.9	109.4	112.6	67.4
발기반정비율(%)	100	56.2	58.8	60.8	62.6	37.4

(6) 친환경농업기반구축

1)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사업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사업은 토양·생산·인증·유통과 소비 부문으로 세분화되어 이루어지는 정부차원 친환경농업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다. 본 사업은 정책추진의 세부분야 중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목적을 갖는 생산부문에 해당한다. 사업의 목적은 친환경 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으로 농업환경 유지·보전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이다.

사업대상자는 친환경농업지구사업을 희망하는 지역(마을)에서 사업을 원하는 생산자 단체로 하고 있으며, 지원자격 및 요건은 농경지가 10ha 이상 집단화 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장비, 친환경 농산물 생산시설·장비 지원, 친환경 농산물 유통시설, 친환경농업 교육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조건은 사업규모에 따라 지구당 1~30억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국고

30%, 지방비 50%, 자부담 20%)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건강한 자연경관과 농업환경을 유지·보전하며,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도록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5년부터 미생물배양시설, 퇴비장,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시설 등의 주요시설을 설치하며 마을 단위 10ha 규모의 친환경농업지구를 조성해왔고, 2016년에는 지구 19개소 84억원(국고)을 지원하여 2016년말 지구내 친환경 인증면적이 60.8%로 전국 평균(4.8%) 보다 13배 정도 높게 나타나는 등 친환경농업기반구축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등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및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크게 기여 하는 등 사업대상이 아닌 인근지역 및 전국에 대한 파급효과도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6년말 현재 1,174개소를 설치·완료하였으며, 2020년까지 매년 20여개소 이상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2-2-74 친환경농업지구 신규조성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2013	2014	2015	2016
친환경농업지구 신규조성	35	28	18	16

2)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은 농업환경개선과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경종(耕種)과 축산을 연계하여 친환경농업 확산과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단지화·규모화하여 단지 내에서 물질순환이 이루어지도록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저탄소 자원순환형 모델 구축을 하기 위함이다.

사업대상자는 지역 농·축협 또는 농업법인으로 사업면적 200ha 이상 확보가 가능한 조직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대상 품목은 벼, 채소, 과수, 축산 등 친환경 농산물 인증이 가능한 모든 작물이다. 또한 지원대상은 친환경농자재생산시설·장비,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시설·장비, 농축순환자원화시설 등을 지원하며 개소 당 20~100억원(국고 30%, 지방비 40%, 자부담 30%)을 지원하며, 사업기간은 3개년(1년차 10%, 2년차 50%, 3년차 40%)간 연차별로 지원하고 있다. 1년차에는 사업계획 수립, 설계, 장비구입, 시설 착공

등을 지원하고, 2년차에는 주요시설·장비의 설치, 3년차에는 사업 마무리를 통해 완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목표를 위해 본 사업에서는 200ha 이상의 경지에서 친환경농업 실천이 가능하며 효과를 최대화시킬 수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사업대상을 선정하여, 향후 국내 친환경 농업의 이상적 모델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있다. 특히,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원순환형 농업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 중이며, 2016년에는 광역단지 2개소 5억원을 지원하여 농업환경 개선, 친환경 농업육성, 자원순환형 농업단지조성 등을 통해 친환경 농업 정착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단지내 친환경 인증면적이 23.5%로 전국 평균(4.8%)보다 5배 정도 높고, 가축 분뇨자원화를 통한 농업환경 보전 등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반조성에 크게 기여하는 등 친환경 농업 인프라 구축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환경보전, 생태계 개선 및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에 노력할 것이다. 2016년말 현재 48개소를 선정·지원하였으며, 민원 등의 이유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농축순환자원화센터는 2014년부터 신규지원을 중단 하였다.

아울러,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내실화를 위해 2015년부터 광역단지·마을단위지구사업의 유사성, 사업성 등을 감안하여 '지구사업'으로 통합, 중·소규모지구(곡류는 50ha이상, 원예 등 10ha이상 집단화된 농지구역을 우선 선정) 집중 육성을 위한 사업구조 개편을 실시하였고,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등 사업성결과 우수한 단지에 대하여 시설·장비 확충 및 노후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인센티브'사업으로 3개소 17억원을 지원하였다. 이와 같이 본 사업은 친환경농업기반구축을 지속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표 2-2-75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신규조성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2013	2014	2015	2016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신규조성	2	4	-	-

(7) 농기계임대사업

농업기계 공동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밭농업 기계화 추진을 위해 2013년 294개소에서 2016년 410개소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지속 확대하였으며, 2016년부터 밭작물 주산지에는 파종(이식)부터 수확까지의 농작업을 기계화 할 수 있도록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을 20개소 지원하였고 2025년까지 총 200개소에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농업인이 증가에 따라 여성농업인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여성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도 98개소를 지원하였고 향후 5년간 전국의 임대사업소에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보급할 계획이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확대로 이용농가수도 2013년 135천호에서 2016년 236천호로 증가하였으며 농기계당 이용일수도 9.5일에서 12.0일로 이용효율이 증가하여 기계화가 미흡한 분야의 기계화를 촉진시켜 기계화영농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생산에 투입되는 비용과 노력을 절감하는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아울러 농기계 이용으로 힘든 농작업에서 벗어나게 하여 농업인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후생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었다.

표 2-2-76 임대농기계 이용률 현황

(단위 : 일/대)

구 분	2013	2014	2015	2016
임대농기계이용률(일/대)	9.5	10.5	11.5	12.0

(8)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 건립

1990년대 중반부터 친환경농업육성 정책의 본격적 추진으로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¹⁸⁾과 생산량¹⁹⁾이 증가하였고, 전체 경지면적에서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이 차지하는 비중²⁰⁾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06년 ‘제2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

18) 2015년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83천ha (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9) 2015년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577천톤 (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획(2006~2010년)'을 수립하면서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의 유통경로를 분리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상시거래 장소로서 가격형성, 수집분산, 유통정보 제공, 친환경인증 및 안전성 관리, 통합물류, 상품화 등의 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권역별 종합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우선적으로 수도권 지역에 1개소를 건립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에 총사업비 480억원(국비 50%, 지방비 50%), 부지 68,972㎡, 건축연면적 25,927㎡(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여, 2012년 9월에 완공하고 현재 8개 친환경법인인 입주하여 수도권의 친환경농산물 물류의 허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표 2-2-77 경기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연차별 예산투입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48,000	1,686	12,618	22,712	10,984
국 비	22,900	843	6,309	11,356	4,392
도 비	25,100	843	6,309	11,356	6,592

아울러 2012년부터 전남 나주에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278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을 투자하여 2017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이다.

표 2-2-78 전남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연차별 예산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27,816	1,152	9,440	5,944	-	11,280
국 비	13,908	576	4,720	2,972	-	5,640
도 비	13,908	576	4,720	2,972	-	5,640

* 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으로 당초 2015년도 예산을 2016년도에 편성, 사업부지 연약지 반 보강 등 사업순연으로 2017년 하반기 완공예정

위와 같이 2017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전용 종합물류센터를 2개소(경기, 전남) 조성하여 친환경농산물의 대표가격 형성, 안정적 판로확대 및 소비자 신뢰구축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기존 친환경농산물의 제한적 유통구조를 개방적 유통구조로 점차 확대하여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20) 2015년 전체 경지면적 대비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비중 4.9% (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9) 인삼생산유통시설현대화

인삼은 역사적으로 왕실이나 국가의 중요한 재원으로 국가가 전매제도를 통해서 독점 관리한 중요한 농작물이었다. 1899년 대한제국 궁내부 내장원에 삼정과를 설치하여 관리하였으며, 1908년 홍삼전매법(대한제국 법률 제14호)을 제정하여 국가에서 직접 경작, 홍삼을 제조하여 유통·판매한 이후로, 오랫동안 정부에서 직접 산업을 관리하여 오다가 1996년 농림수산부로 이관되면서 홍삼전매제를 폐지하고, 인삼산업은 자율 경쟁체제로 산업이 전환되었다. 이후 산업 자율화의 영향으로 인삼 생산 및 수출이 크게 증가되는 등 국내 인삼산업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삼산업은 오랜 전매제 실시의 영향으로 생산·유통구조가 크게 낙후되어 있는데, 인삼은 포전매매, 자가출하 형태로 금산군 인삼시장을 통해 위탁판매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가공용 인삼은 계약재배를 통해 인삼공사 등 가공업체로 유통되고 있다. 또한 인삼의 종류별로 홍삼은 인삼공사 또는 인삼농협으로, 백삼은 금산제조업체 중심으로 생산·유통되는 등 다양하고 복잡한 단계를 거치는 유통형태를 보이고 있다. 제조·가공업체는 대다수가 영세업체 중심으로 낙후된 시설과 브랜드로 개별업체의 수출시장 개척 및 제품개발 등에 한계가 있어 산업적 경쟁력이 낮다.

한·미 FTA협상 결과 현행 고율관세(222.8~754.3%)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는 등 시장 개방 가속화에 따른 인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인삼 생산부터 가공, 유통까지의 조직화·전문화를 통한 대외 경쟁력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 인삼산업의 규모화 및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일관된 산업체계 구축을 통해 조직화·규모화·브랜드화를 도모할 수 있는 인삼 전문 생산단지조성 조성을 추진하게 되었다.

사업대상자는 경작규모 200ha 이상 규모의 조직화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인삼 전문생산단지로 기존의 농식품사업, 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농업법인·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선별기, 증삼기, 건조기 등 인삼 생산·유통시설을 현대화 하고 지역의 인삼 브랜드 육성, 사업추진·운영 계획의 수립, 수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등 관련 마케팅·경영전략컨설팅을 위해 개소당 21억원(생산·유통시설현대화 : 국고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마케팅·경영전략컨설팅지원 : 국고 30%, 지방비 60%, 자부담 10%)의 규모로 2년간 연차별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인삼류는 「인삼산업법」

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정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국정검사기관인 농협경제지주 한국인삼검사소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5년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인삼류에 대한 검사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국정검사기관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 노후화된 검사장비 교체하고 검사항목의 다양화에 대응하여 분석장비 등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선정은 인삼 주산지 지역의 인삼 산업여건 및 전망, 사업별 목표 설정, 농가조직화 및 조직원에 대한 교육, 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추진 방안 등 지자체의 종합적인 인삼산업 육성전략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의 심사·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더불어 사업대상자가 투명하게 운영하고,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경영 및 기술지도, 현장으로 사항 해결 등을 위하여 마케팅·컨설팅과 관련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표 2-2-79 인삼 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 지원 현황

(단위:백만원)

연 도	개소수	사업 대상자		예산액(국비)
2010년	4개소	신규 4 (1년차)	경기 화성시(화성인삼영농조합법인)	420
			강원 홍천군(강원인삼농협)	420
			충남 금산군(금산인삼농협)	420
			충남 부여군(백제인삼농협)	420
2011년	5개소	계속 4 (2년차)	경기 화성시(화성인삼영농조합법인)	420
			강원 홍천군(강원인삼농협)	420
			충남 금산군(금산인삼농협)	420
			충남 부여군(백제인삼농협)	420
		신규 1	충남 금산군(농협중앙회 인삼검사소)	415
2012년	3개소	신규 3 (1년차)	경기 안성시(안성인삼농협) *단년사업	630
			충남 서산군(서산인삼농협)	315
			경북 영주시(중앙인삼영농조합)	315
2013년	6개소	계속 2 (2년차)	충남 서산군(서산인삼농협)	315
			경북 영주시(중앙인삼영농조합)	315
		신규 3 (1년차)	경기 포천시(포천홍삼영농조합법인)	315
			충북 괴산군(괴산홍삼영농조합법인)	315
			충남 금산군(농협중앙회 인삼검사소)	407
2014년	3개소	계속 2 (2년차)	경기 포천시(포천홍삼영농조합법인)	630
			충북 괴산군(괴산홍삼영농조합법인)	630
		신규 1	충남 금산군(농협중앙회 인삼검사소)	500
2015년	3개소	신규 3 (1년차)	경기 이천시(경기동부인삼농협)	630
			경북 영주시(풍기인삼영농조합법인)	630
			충남 금산군(농협중앙회 인삼검사소)	-
2016년	2개소	계속 2 (2년차)	경기 이천시(경기동부인삼농협)	630
			경북 영주시(풍기인삼영농조합법인)	630

인삼생산유통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생산권역별 생산자단체가 주체가 되어, 단순 허낙후된 시설 개선이 아닌 지역 인삼 농업인에 대한 교육 및 농가를 조직화하고 해당 지역의 인삼산업 여건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과 차별화 방안, 소비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함으로써 인삼의 대내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더불어 지자체에서 인삼자원을 연계한 지역 발전의 좋은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주요 인삼 거점지역의 사업추진은 완료되었으나, 기존 생산유통시설이 노후화, 시설보완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10)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종자는 농산물의 생산성 및 시장성 등을 좌우하는 핵심 소재로 국가의 농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이다. 또한, 종자산업은 종자주권 및 식량안보 확보와 직결된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육성이 필요한 산업이다.

현재 다국간 FTA 체결로 국가 간 무역 개방이 확대되고 있으며, 세계 종자시장의 약 70%를 장악하고 있는 다국적 종자 기업들의 국내시장 진출에 따라 농업인들의 로열티 지급액 증가 등 국내 종자산업 타격이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2009년도부터 주산지 지자체 위주로 우량종자 증식·보급시설을 지원하여 종자생산 단가를 낮추고 지역에서 자급할 수 있는 기반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씨감자, 벼쫄종근, 약용작물, 마늘종구, 종묘삼, 딸기원묘 등 12개 분야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 7개소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총 89개소 지원을 통해 지자체 종자산업기반 구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2년 1,150톤 규모로 생산되던 씨감자 보급량이 매년 증가('13년 1,300톤 → '14년 1,900톤 → '15년 2,094톤 → '16년 2,259톤)하였으며, 딸기의 국산품종 점유율('13년 75% → '14년 86.1% → '15년 90.8% → '16년 92.9%), 화훼분야(국화) 국산품종 점유율('13년 24.5% → '14년 27.9% → '15년 29.7% → '16년 30.6%), 장미 국산품종 점유율('13년 26.9% → '14년 29.0% → '15년 28.8% → '16년 29.5%) 등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었다. 또한, 종자가격 안정을 통한 농업 생산비 절감으로 농산물 가격 경쟁력 확보와 종자확보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있으며, 우수종자 보급을 통해 면적당 생산량이 증가하여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 안정적 농산물의 공급으로 물가 불안 해

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향후 종자공급이 필요한 품목에 대한 지원 확대 및 현장 요구에 맞는 사업내역 조정(보조비율, 지원품목 등) 등을 통해 국내 농업 및 종자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표 2-2-80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추진성과

(단위:톤,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기반구축사업지구의 씨감자 생산량(톤)	1,300	1,900	2,094	2,100
국산품종 점유율(딸기)(%)	75.0	86.1	90.8	92.9
국산품종 점유율(화훼)(%)	25.7	28.4	29.3	30.1

(11)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FTA/DDA 등 시장개방 가속화에 따른 농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농업경영체 및 지역농산업의 잠재력, 내생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에 특화된 농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과 경영이 조화롭게 융합된 시스템농업을 구축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새로운 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새로운 농업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2004년 ‘농업·농촌 종합대책’ 수립 시 지역농업 발전계획의 하나로 지역농업 클러스터를 포함하였고, 이후 지역 전문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의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해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05년에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시범사업 첫해인 2005년에는 20개 사업단을 선정하여 2007년까지 3년간 지원하였고, 2008년에는 22개 본 사업단을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이런 가운데 지역단위의 분산·중복투자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역간 연계를 통하여 사업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단위 클러스터는 향토산업 육성사업에서 추진하고 둘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광역클러스터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도록 역할을 정립하여 2009년에 12개 사업단, 2011년에 13개, 2014년에 10개, 2015년에 2개 사업단을 선정하였다.

그 동안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사업단의 매출액이 사업추진 첫 해와 비교하여 각각 2.64배(2005년선정), 5.27배(2008년선정), 2.24배(2009년선정), 1.8배(2011년선정), 5.4배

(2014년선정)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생산 위주의 농산업 정책에서 벗어나 2, 3차 산업으로 폭넓게 성장한 결과로 평가된다.

표 2-2-81 지역전략식품산업 사업단 매출액 조사결과

(단위 : 억원, %)

구분	2005년	2006~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 2013년	2014년	2015년 (B)	비율 (B/A)
'05년선정 사업단	1,081(A)	3,659	2,779	2,969	2,661	2,119	4,539	2,670	2,863	2.64
'08년선정 사업단			250(A)	515	731	1,195	2,823	1,418	1,319	5.27
'09년선정 사업단					519(A)	1,220	3,407	2,123	1,162	2.24
'11년선정 사업단							34.8(A)	47.6	62.7	1.8
'14년선정 사업단								5(A)	27	5.4

그간 '클러스터사업단'의 명칭은 참여주체와 시설의 지리적 집중을 특징으로 하고 있었으나, 지리적 집적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어, 2010년 4월 미래 농산업을 주도할 전략적 농수산물 관련 주체(산·학·연·관)가 협력하여 식품산업을 육성한다는 의미로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으로 개칭함과 아울러, 사업단 선정시 단순 생산 및 유통 위주의 사업단은 선정을 배제하는 등 사업추진 개선 방안을 수립·시행하였다. 2011년 사업단 선정부터 산·학·연·관, 생산-유통-가공-판매-소비 등 관련 주체간 네트워크 및 R&D, 마케팅 등의 시너지 효과 창출 이외에 식품산업과의 연계강화를 통해 지역 식품산업의 중심축이 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려하였고, 그 결과 13개소가 선정되었다.

2013년까지는 지원 전년도 하반기에 사업단이 선정되어 사업단 구성, 사업방향 설정 등에 1차년도를 소비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2014년 선정 사업단부터는 지원 전전년도에 예비사업단을 선정하여, 1년 동안 컨설팅 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하고, 농업과 연계한 농식품경영체 육성을 목적으로 10개소를 선정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지자체 자율편성사업(포괄보조사업)으로 이관하여 신규사업 선정, 예산편성 권한 등을 지자체로 이관하면서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강화하여 지역별 특성화 모델을 구축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사업시행 등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추진방식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상향식으로 채택하였다. 중앙부처는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 농산업의 혁신모델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건설한 농업경영체를 육성할 계획이다.

(12) 향토산업육성사업

농촌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향토자원을 개발하고 다양한 1·2·3차 산업으로 연계·발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지역특화사업 내의 세부사업 형태로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신설하였다. 2005년 제1차, 2006년 제2차 향토자원 발굴조사를 통해 선정한 49개(2005년 19개, 2006년 30개) 자원에 대해 ‘시·군별 향토자원개발 기본계획’에 제시된 연차별 계획에 따라 2007년부터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9년부터는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향토자원 발굴 형태의 사업에서 공모형태의 사업(정부편성)으로 변경하였으며, 신규 선정한 사업대상 30개 향토자원에 대한 산업화 지원을 위해 사업설명회, 세부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통해 지역의 사업추진 역량 강화와 사업추진 마인드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또한 사업 효과 제고를 위해 사업평가를 통해 피드백이 되도록 하였고, 사업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페널티 통해 성과관리도 강화하였다. 또한 2012년, 2013년도에는 농촌 부존자원에 대한 가치 및 산업화 가능성 등의 분석에 기초한 향토산업 등 농촌 산업화 지원을 위해 161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원일제조사 및 보완조사를 실시하여 1,011개의 자원을 발굴하였다.

향토산업육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현 정부 국정과제로 중점 추진 중인 6차산업화를 위해 농촌의 향토자원을 지역 핵심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내 향토자원의 산업화에 필요한 소프트웨어(홍보·마케팅, 디자인·브랜드 개발 등), 하드웨어(생산시설, 판매시설 등) 분야를 포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면 및 현장 평가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지자체 자율편성사업(포괄보조사업)으로 이관하여 신규지구 선정정부 예산편성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하면서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강화하여 지역별 특성화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사업시행 등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추진방식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상향식으로 채택하였다. 중앙부처는 모니터링 및 컨설팅 등 지원을 통해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2014년도 도입한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추진되는 R&D분야에 대해 외부로부터 사전 사업성 평가를 받도록 조치하는 등 제품 등의 연구개발이 사업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지역의 부존 향토자원 229개를 발굴하여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고, 2016년 현재 추진중인 향토산업육성사업 48개 지구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동안 농업 생산 위주의 1차산업 중심에서 벗어나 산·학·관·연의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상품화 기술개발, 농업의 융복합 산업화를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등 1·2·3차산업 연계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과 연계를 강화하여 광역사업단위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표 2-2-82 향토산업육성사업 선정·지원현황

(단위:개소, 억)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지원대상(개소) (최종사업지구)	229	18	28	28	28	29	26	24	19	14	15
예산 (억원,국비)	2,965 (322)	43 (43)	90 (90)	286 (136)	344 (53)	406 (0)	409 (0)	438 (0)	397 (0)	328 (0)	224 (0)

* 2007~2008년도 선정지구에 대한 마무리 사업비까지는 군특회계 지역개발사업계정(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에서 지원하고, 2009년도 신규 선정 분부터는 군특회계 지역혁신사업계정(광특회계 광역발전계정)에서 지원, 2015년부터 지특회계 생활기반계정 및 제주계정에서 지원

** ()는 군특 또는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 지원액

표 2-2-83 2016년도 향토산업육성사업 주요 추진 성과

(단위:억, 명)

구 분	사업참여기업매출액 (사업지구당)	일자리 창출실적 (사업지구당)
2016년 실적	314억원	23명

* 2014~2016년 착수지구(48개소)를 대상으로 조사

(13) 국가어항(제주)

제주지역 국가어항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어선의 안전정박·수용으로 어업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수산물 생산, 유통 등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사회발전 핵심기반 조성을 위해 2007년부터 시행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해양수산부의 지원(국비 100%)을 받아 직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은 신양항, 모슬포항, 도두항, 김녕항, 위미항에 223억원을 투입하여 방파제(보강 포함) 및 물양장을 건설하였으며, 2016년 말까지 제주 국가어항에 총 2,238억원을 투자하였다. 2017년에도 신양항 등 5개항에 21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표 2-2-84 제주지역 국가어항 기반 조성 실적

구 분	‘13	‘14	‘15	‘16
예산(억원)	131	182	223	223
지원 항	신양항, 모슬포항, 하효항	신양항, 모슬포항,	신양항, 도두항, 위미항, 하효항	신양항, 모슬포항, 도두항, 김녕항, 위미항

(14) 수산자원조성사업 지원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수산자원관리법」에 근거하여 남획, 지구온난화 등으로 고갈되어가는 수산자원을 회복·증강시키고 갯녹음(바다사막화) 등으로 황폐해져가는 연안 생태계를 복원함으로써 우리 바다를 풍요롭고 건강하게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11년 1월에 설립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 시

행하고 있다.

수산자원조성사업은 갯녹음 개선을 위한 바다숲 조성(2030년까지 54,000ha 조성), 수산자원 증대를 위한 연안바다목장 조성(2020년까지 50개소 조성) 등의 적극적 자원조성과 TAC 대상종에 대한 총허용 어획량 조사사업 등이 있다.

2013년에는 총 695억원을 지원하여 바다숲 1,388ha, 바다목장 20개소 조성, 연어 등 건강종자 7,695천 마리를 생산·방류하였고, 2014년에는 총 632억원을 지원하여 바다숲 2,574ha, 바다목장 24개소 조성, 연어 등 건강종자 22,517천 마리를 생산·방류하였다. 2015년에는 총 700억원을 지원하여 바다숲 3,236ha, 바다목장 19개소 조성, 연어 등 건강종자 16,847천 마리를 생산·방류하였다. 2016년에는 총 689억원을 지원하여 바다숲 3,064ha, 바다목장 19개소 조성, 연어 등 건강종자를 18,763천 마리 생산·방류하였다.

표 2-2-85 연도별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 실적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바다숲(ha)	1,388	2,574	3,236	3,064
바다목장(개소)	20	24	19	19

주요성과로는 최근 3년 이상의 바다목장 조성사업지를 대상으로 단위노력당어획량(CPUE)은 2015년 3.2kg/폭에서 2016년 3.76g/폭으로 전년 대비 17.5% 상승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감소하고 있는 수산자원을 회복시키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표 2-2-86 단위노력당 어획량(CPUE)

(단위:kg/폭)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12	2.72	3.11	3.2	3.76

2017년에는 766억원을 지원하여 바다숲 3,043ha, 바다목장 19개소 조성, 연어 등 12,030천마리 생산·방류, 수산자원의 서식장·산란장 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15)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영세한 지역 수산가공업체의 설비 개선, 위생시설 확충 등을 통한 수산물의 고부가

치 산업화와 수산식품의 안정성 확보 도모를 위해 본 사업은 1987년부터 추진되었다.

수산물 가공산업의 육성을 위해 2013년에 116개소의 수산물 가공시설에 31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산지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고부가가치의 수산식품으로 가공하여 지역 가공업체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였다. 2014년에는 71개소에 283억원, 2015년에는 84개소에 248억원, 2016년에는 77개소에 224억원을 지원하여 지역 수산가공 인프라 등을 확충을 통한 수산식품의 수출확대 및 어업인의 소득 향상을 견인하였다.

2017년에는 총 95개소의 수산물 가공시설에 239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산지가공시설사업 91개소에 223억원을, 수산물처리·저장시설사업 4개소에 16억원을 지원하여 수산 가공시설의 확충 및 시설 현대화를 통해 수산물의 고부가가치를 통한 경쟁력 강화로 수출확대는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표 2-2-87 수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 연도별 국고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합 계	116	31,046	71	28,310	84	24,758	77	22,426
수산물산지가공시설	103	21,516	52	19,117	73	18,607	72	18,343
수산물처리저장시설	11	7,930	10	6,143	4	1,751	5	4,083
수산물공동가공시설현대화	2	1,600	9	3,050	7	4,400	-	-

(16)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지역별로 풍부한 수산자원을 활용한 고품질의 수산식품개발, 브랜드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역특화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을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2013년까지 총 665억원을 지원하여 부산 수산식품가공산업산학연구센터, 목포 고기능수산물지원센터, 여수 수산물종합센터, 부안 수산물종합유통물류기반시설 4개소가 완공되었다. 2014년에는 영광 염산향화도바다매체타워, 2015년에는 군산 수산물연구가공단지, 영덕 로하스수산식품거점단지가 완공되어 총 7개소가 조성되었다.

2016년에는 공모를 통해 남해, 화순 신규 2개소를 포함한 총 4개소의 거점단지 조성을 위해 국비 12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고창 풍천장어웰빙센터, 포항 과메기산업 화가공단지 2개소가 추가로 완공되어 총 9개소가 조성되었다. 또한 기존 거점단지의 시설 활용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고부가가치 식품개발 및 상품화 사업 1개소에 5억원을 지원하였다. 2017년부터 사업목적에 부합한 사업 추진을 위해 총 사업비의 60% 이상을 연구·가공시설에 투자하는 것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하여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산업 육성을 위한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기대된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가 조성되면 지역특화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수산물가공업과 지역의 문화·관광산업의 연계 발전이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표 2-2-88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연도별 국고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지역	사업개요	'09까지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이후
합계	9개소	11,256	8,759	14,360	16,750	15,400	14,235	15,496	12,548	37,460
부산	수산식품가공산업산업연구센터('09~'10)	500	1,150	-	-	-	-	-	-	-
목포	고기능수산식품지원센터('08~'11)	4,772	1,000	5,350	-	-	-	-	-	-
여수	수산물종합센터('09~'13)	1,984	2,000	2,000	5,000	3,516	-	-	-	-
영광	염산항화도바다매체타워('09~'13)	500	1,000	1,000	1,500	1,000	-	-	-	-
부안	수산물종합유통물류기반시설('09~'12)	500	1,000	1,000	2,450	-	-	-	-	-
고창	풍천장어웰빙센터('10~'15)	-	250	1,760	1,000	1,100	100	3,290	-	-
군산	수산물연구가공거점단지('12~'14)	-	-	-	300	4,484	4,966	-	-	-
영덕	로하스수산식품거점단지('11~'14)	-	-	250	4,500	2,500	5,250	-	-	-
포항	과메기산업화가공단지('09~'15)	3,000	2,359	3,000	2,000	2,100	2,144	4,300	-	-
울진	붉은대게식품산업단지('13~'16)	-	-	-	-	300	700	3,406	3,273	-
충북	충북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13~'16)	-	-	-	-	400	700	3,050	4,060	-
속초	속초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14~'17)	-	-	-	-	-	375	1,000	-	6,125
보령	보령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15~'17)	-	-	-	-	-	-	450	3,965	4,585
남해	남해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16~'18)	-	-	-	-	-	-	-	375	7,125
화순	화순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16~'18)	-	-	-	-	-	-	-	375	6,625
화성	화성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17~'19)	-	-	-	-	-	-	-	-	7,500
태안	태안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17~'19)	-	-	-	-	-	-	-	-	5,000
포항	고부가가치 식품개발 및 상품화('16~'17)	-	-	-	-	-	-	-	500	500

(17) 수산어업행정지원

2008년 2월 정부조직개편 이후, 수산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어업인 교육 및 어업경영 지도, 수산물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한 양식어장 항생제 및 위해물질 안전관리, 수산물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수산자원회복을 위한 자율관리공동체 육성, 수산종묘 방류, 인공어초사업, 면세유류공급 지도·점검, 안전조업지도, 양식어장 관리 및 적조대응을 위한 주산단지 어장관리, 적조예찰, 자연재해예방 지도, 양식어장 질병관리, 수산업육성을 위한 연구교습어장 운영, 기술개발 연찬회, 원격영상 정보교류, 어촌정보화 및 어촌관광사업 지원을 위한 어업인인 정보화 교육, 어촌정보화사랑방 운영, 정보화능력경진대회 개최, 어촌관광활성화, 수산물소비촉진 지원 등 수산어업지원 업무를 추진하는 수산사무소의 업무, 조직(30개 사무소) 등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2009년 5월)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이관된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기본경비, 청사·지도선 운영비 및 행정정보화 비용을 2010년부터 지원하였다.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는 매년 22,871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수산사무소 청사 신축 1개소를 추가하여 23,521백만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는 수산사무소 청사 신축 3개소를 추가하여 25,521백만원을 지원하고, 향후로도 수산어업지원 업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표 2-2-89 수산어업 행정지원 실적

(단위: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총계
합 계	22,871	22,871	22,871	23,521	92,134
인건비	18,944	18,944	18,944	18,944	75,776
기본경비	2,206	2,265	2,265	2,265	9,001
청사·지도선운영	1,324	1,263	1,263	1,913	5,763
행정정보화	397	399	399	399	1,594

(18) 어업인교육훈련(제주)

1981년부터 선진수산기술 전파와 수산전문인력 육성,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확산 등

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제주지역의 어업인이 전문경영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구축 마련을 위해 어업 인후계자 및 자율관리공동체의 역량강화 교육의 체계적인 추진과 자율관리공동체 확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매년 12백만원을 지원하여, 2013년에 65명, 2014년에 60명, 2015년에 79명, 2016년에 95명의 어업인 교육을 실시하였다. 2017년에는 100명의 어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향후에도 제주지역 어업 전문인력 육성과 선진수산물 기술 전파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표 2-2-90 어업인교육훈련(제주) 지원실적

(단위: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총계
어업인교육훈련(제주)	12	12	12	12	48
교육인원	65	60	79	95	100

(19) 농식품가공체험기술보급

농식품가공체험기술보급은 지역농산물 가공 및 농업인 창업 등 소득활동을 지원하여 농산물 부가가치 증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농산물종합가공기술보급, 농업인소규모창업기술지원, 향토음식자원화, 농촌교육농장육성, 6차산업수익모델시범사업 등이고 2016년 사업비는 1,4091백만원이다.

농업인의 농외소득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자가 생산 또는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외식·체험·마케팅기술 등을 지원하여 시범사업 참여 경영체의 매출액 증가 및 농업인 창업,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표 2-2-91 농식품가공체험기술보급사업의 주요 성과

2016년도 주요성과

- * 시범사업 경영체 매출액 증가 : (2015년) 103,591천원 → (2016년) 148,193, 43.1%
- *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한 창업 증가 : (2015년) 435개소 → (2016년) 460개소
- * 지역 일자리 창출 : (2015년) 356명(상시182, 비상시 174) → (2016년) 535명(74명, 461명)

사업별 주요성과를 보면, 시군농업기술센터의 가공창업 역량을 강화하여 농업인 창업교육의 전진기지로 육성하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조성하여 창업희망 농업인 대상 창업교육(40과정 602회, 연인원 22,000명), 예비/창업사업장 코칭(31개소, 240명 154회)을 실시하였다. 가공상품 개발(68건), 특허등록·출원(5건), 상표등록·(20건), 홍보(153건)을 지원하였다.

국내산 원료를 기반으로 한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 및 소규모 창업사업을 지원하여 상표 및 특허 출원·등록 15건을 하였고 창업 후 3년차 사업장 평균 매출액은 13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0.4% 증가하였다. 향토음식 자원화 지원을 통해 농가맛집 조성을 지원한 결과 향토음식 발굴·개발 15종, 식자재를 지역 및 국내산(자가생산 45%, 지역+인근 농산물 55%)으로만 활용하고 있었고 사업 참여자는 36명(개소당 3.6명)이고, 사업지원 3년차 농가맛집 평균매출액이 107백만원으로(전년대비 30.8% 증가) 나타나 공동사업의 취지를 잘 살리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농촌 체험활동을 교과과정과 연계한 농촌체험기반 조성,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하여 방문인원 41,171명(농장평균 857명), 평균소득 54,292천원, 고용창출 상시 64명, 임시 56명이고 체험프로그램 만족도가 95.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신뢰받는 농촌교육농장을 육성하기 위한 품질인증제를 운영하여 2013년 48개소, 2014년 74개소, 2015년 78개소, 2016년 43개소를 인증하였다. 한편 6차산업수익모델시범은 지역 자원과 농업생산, 가공 및 체험 등을 연계 지원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 참여농가 자체교육(212회), 컨설팅(69회)으로 조직역량을 강화하였고 지역 농산물 가공상품(196종) 및 브랜드 개발(13건), 지역 내 상인 등 관련 경영체간 연대·협력체계 구축을 강화하였다.

지역단위 농업 생산기반 확대 및 가공·체험 등 2·3차산업과의 융복합산업 육성이 가속화 되면서 농업인의 기초 역량을 강화하는 지역농특산물 가공기술, 향토음식 및 농촌체험 상품화 지원에 농촌진흥기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조성, 가공상품 개발 및 농업인 소규모 창업 지원을 확대하여 교육, 현장기술지원,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등을 통한 사업 내실화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예정이다.

(20)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사업은 시·군 여건에 맞는 주요품목(사업)을 소득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교육·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사업은 시군 자원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사업연차별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세부사업은 지역농업특성화 및 비교우위품목경쟁력제고사업으로 주요내용은 지역 특화품목 육성 기반조성, 사업추진 전담조직 및 지역협의체 운영, 사업 참여 농업인단체 교육 및 생산·가공·유통·체험분야 연구성과 현장기술지원 등 1·2·3차 산업 연계 지원으로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지역농업 특성화 역량강화를 지원하여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활성화 촉진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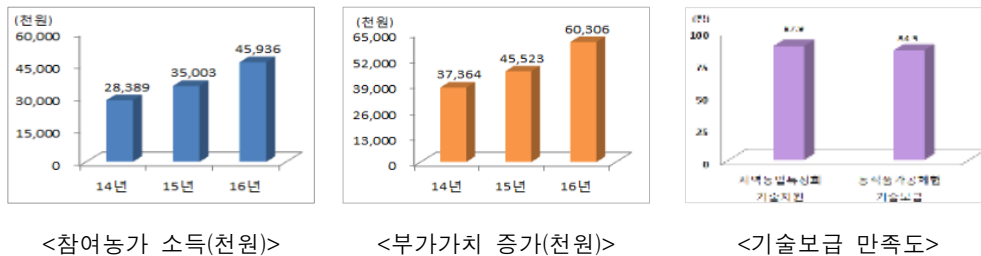
2016년 지역농업특성화시범사업의 사업량은 81개소(광역계정 1년차 30, 2년차 45, 제주계정 6)이며 사업비(국비)는 총 13,390백만 원으로 시군별 사업계획 및 결과 평가에 따라 개소 당 130~218백만 원씩 차등 배분하였다. 비교우위품목경쟁력제고사업의 사업량은 9개소이며 사업비(국비)는 총 900백만 원으로 지역별 비교우위 품목을 육성하기 위하여 품질인증, 생력화기술, 상품화 및 품질유지 기술 등을 집중 투입하였다.

사업단계별(계획-실행-성과) 성과점검 및 평가를 통하여 2016년 신규시군 공모('15. 8~9) 및 사업 중간단계의 추진현황 모니터링(연중) 및 중간평가('16. 9) 결과를 통해 차년도 사업비 차등배정, 시군별 사업계획서 1:1 컨설팅('16.12), 우수시군 시상('16.12)으로 사업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사업 참여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 협의체 구성·운영(380회)으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군농업기술센터 중심의 사업추진 결과 특화품목 재배, 상품성 향상을 위한 기술보급 등 R&D 연구개발 기술투입(139건), 지자체·정책사업 연계 및 유관기관(단체)와의 대내외협력 추진(121건), 지역 농산물 활용 가공상품 개발(155건), GAP, HACCP 등 품질인증(32건)의 성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지역 협의체 구성·운영(734회) 및 참여농업인 교육·컨설팅(610회)를 통해 사업 참여조직 인력화를 구성하고 지역 특산물 육성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사례집으로 발간(1천부)하여 특성화 사업 조기 정착에 기여하였다. 사업 추진결과 농가소득이 전년대비 31.2% 증가한 것으로 시군농

업기술센터가 지자체 역점사업의 추진체계 구축으로 농업인의 고품질 재배기술 수준 향상, 특화품목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및 체험상품 개발 등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 농업 육성에 기여하여 지역 농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였다.

그림 2-2-27 2016년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추진성과



2017년도에는 지역농업특성화·비교우위품목경쟁력제고사업으로 67개소에 10,514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6차산업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시군 담당자 연찬회, 기술지원 컨설팅 등을 지속 추진하여 새로운 일자리와 농업인 실질 소득을 창출하고 우수 경영체 육성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21) 지역농촌지도활성화지원

1)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농작업과 관련된 작업자세 개선, 중량물 운반작업의 개선, 작업능률 향상, 특정 신체 부위에 의한 반복 및 과도한 힘이 필요한 작업의 개선 및 생물학적·화학적 유해요인의 개선 등을 위한 농작업 편이장비 보급을 통해 농업인의 작업부하 경감, 작업능률 향상 그리고 인간공학적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수행하였다.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여성화로 농작업 재해 증가 및 건강관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인의 만성질환 중에서도 농작업과 관련이 깊은 근골격계 질환에 있어서 농업인 종사자가 비농업인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나 농업활동으로 인한 작업 위험요인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2008년부터 기계화되기 어렵고 신체에 무리가 오는 농작업을 안전하고 능률적으로 개선하는데 목적을 둔 농작업 환

경개선 편이장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 개소당 50백만원(국비·지방비 각각 50%)을 지원하여 해당 작목의 농작업 여건 파악과 필요 편이장비의 조사, 선정, 보완 및 개발, 평가 등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편이장비의 운영과 평가, 분석 및 관리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6년 전국 164개소에서 48개 마을, 116개 단체(작목반 등)가 참여하여 4,502(남성 2,949, 여성 1,553)명이 편이장비 지원사업에 참여하였으며 근골격계 질환 및 각종 농부중 등을 예방하기 위한 근골격계질환 예방 스트레칭, 농작업 피로회복 교육과 선진지 견학 및 농작업 편이장비 관련 박람회 관람 등 총 730회(13,720명)의 교육과 위원회 및 관련 전문가 활용 등 총 1,890회의 컨설팅을 수행하였다. 한편 처음으로 실시한 농작업 편이장비 작목별 맞춤형 종합 컨설팅은 4개 분야로 나눠 실시하였다. 과수(5.12, 거창), 채소(5.19, 당진), 화훼(5.27, 이천), 벼(6.2, 완주)분야로 실시한 종합컨설팅은 중앙·도/시군 관련공무원, 편이장비 관심농가 등 296명이 참여하여 작목별로 편이장비의 개선방안 모색 및 사업 애로사항을 토론하여 현장 참여형 컨설팅을 추진하였다.

표 2-2-92 2016년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시범사업 추진실적

도별	사업량 (개소)	사업참여 인원(명)	위원회 및 전문가 등 활용실적(횟수)	교육실적		보급 장비(점)
				횟수	인원	
계	164	3,905	1,890	730	13,720	25,779
경기	8	121	99	46	766	367
강원	16	281	217	120	1,565	935
충북	13	217	134	42	675	440
충남	16	663	279	104	2,115	1,296
전북	10	131	103	44	642	131
전남	34	827	306	117	2,381	4,145
경북	22	570	281	103	2,591	15,243
경남	32	795	324	113	2,200	2,752
제주	8	222	93	16	334	342
광역시	5	78	54	25	451	128

편이장비 지원사업 추진성과는 전국 평균 4.52점(5점 척도)으로 나타났다. 작업자세(OWAS)의 경우 편이장비 도입 전 전국 평균 3.43에서 도입 후 1.21로 전국 평균 64.9% 감소하였고 피로증상 호소율과 통증호소율은 각각 67.8%와 65.7% 감소하였으며 연간 표준작업시간은 도입 전 421.54시간에서 도입 후 169.74시간으로 평균 60.2%가

단축되어 편이장비 개선을 통해 농업노동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농작업 경제적 이익에도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전국 138개소를 대상으로 농가·건설턴트·관련업체가 참여하는 실질적 종합컨설팅을 실시하고 그동안의 사업추진 과정 중 개선된 최종 기종을 선정하여 농작업 환경개선에 이바지하는 편이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2)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농촌 고령화에 대응한 건강관리, 학습·사회활동, 안전생활·환경정비, 소득·경제활동 등 4개 사업 영역을 적극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당당하며 활기찬 노년 생활 문화를 영위할 수 있는 생활기반, 건강장수 마을을 조성하는데 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은 고령화된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인들 스스로 자신의 삶을 당당하고 건강하게 개척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마을단위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농촌노인의 건강관리, 학습·사회활동, 환경정비, 소득활동 등 4개 영역에 대한 과제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까지 833개소 마을을 지원하였다. 2016년에는 1년차 64개소, 2년차 32개소, 3년차 78개소 총 174개소에 개소당 40~50 백 원씩 을 지원하여 87억 원을 지원하였다.

2016년 174개 마을에서 건강관리, 학습사회활동, 환경정비, 소득활동 4개 영역으로 추진되었다. 영역별 주요 활동을 보면 건강관리 영역에서는 경기지역은 건강체조, 옷음치료, 몸살리기 체조, 수족요법, 요가, 경락마사지, 스포츠 댄스, 탁구교실운영, 게이트볼 등을 하였고 학습사회활동 영역의 강원지역을 보면 목공예목관 그림수업, 농악동아리, 노래교실, 만학공부방 운영, 풍물교실, 천연비누 및 공예, 민요교실, 국선도, 수지침, 문화탐방, 독거노인 돌봄, 원예활동, 체육대회, 경로잔치 등이었다. 환경정비 영역의 충북지역은 야생화 화단 조성, 꽃길 및 산책로 정비, 텃밭식물터널, 등산로 조성, 정자설치 등을 하였고, 소득활동 영역의 전남북지역은 절임배추사업, 메주만들기, 싸래기 빻자루 만들기, 산약초 재배, 엿기름 기르기, 감말랭이 상품화, 메일 공동재배 등이 있었다.

2016년 사업 대상으로 외부전문기관 평가를 실시한 결과 사업에 대한 종합만족도가 89.1점으로 '매우 만족'하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1인당 평균 참여 횟수는 19.5회로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하고 있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에서 추진 중인 4가지 영역

에서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참여횟수가 25.0회로 가장 많이 참여했고, 학습사회활동은 23.4회, 마을환경정비와 경제활동 프로그램은 13.7과 16.0회였다.

그림 2-2-28 2016년 사업 생활 만족도 및 프로그램 참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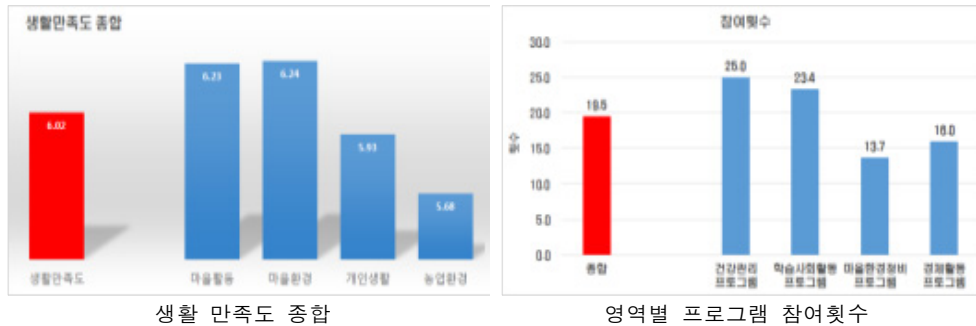


표 2-2-93 2016년 생활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 점)

구 분	생활만족도	마을활동	마을환경	개인생활	농업환경
사업마을 만족도(점)	6.02	6.23	6.24	5.93	5.68
사업마을 환산 점수	86.0		89.1	84.7	81.1

농촌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립적인 공동생활의 터전을 만들고, 농촌지역주민 간 협동심과 마을활기를 되찾는 계기가 되었다. 사업마을(n+700)과 일반마을(n=300)의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실태 및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사업마을의 종합적인 생활 만족도는 “매우 만족”하는 수준인 86.0으로 지난해 80.7점보다 7%가 높게 나타났으며, 요인별 만족도 또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사업으로 인한 농촌노인의 생활 활력에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더욱 가속화 되어가고 있고 특히 고령화는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농촌 환경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하여 체감하는 정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2017년에는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농촌어르신 복지실천사업과 연계하여 농촌노인들이 생산적인 여가활동으로 지역에서 존재감과 경제활동을 돕고 「농촌노인의 생활서비스 지원단」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농촌노인 SMS(Short Message Service) 활용 교육 현장 컨설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3)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

우량종자 및 종묘, 생산기술개발 및 지역실증시험 등 기초기술의 중점보급으로 지역전략작목의 규모화·명품화를 추진하고,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품목의 우량종자 보급과 작부체계 개선을 통한 생산기반조성과 농업인이 개발한 우수과제(농업인개발과제)의 확대보급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2016년도 시·도에서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지도기관별 사업계획을 심의하여 최종 113개사업에 14,152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주로 우량종자보급과 지역의 중점적으로 육성코자 하는 작목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주요 성과로는,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육성코자 하는 작목을 중심으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품목별 우량종자 보급과 작부체계 개선을 통한 생산기반을 조성하였다. 2016년도 사업 추진 시·군 중 소득조사가 가능한 43개 사업을 대상으로 성과를 종합한 결과 사업전 대비 소득은 26.4% 높아졌으며, 매출은 23.0%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시·군별 추진사례를 살펴보면, 강원 춘천은 과채류 2줄기 재배 기술 확대를 통해 육묘비 등 생산비용이 10% 절감되고, 소득은 34% 향상 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충북 옥천은 최고품질 복숭아 안정생산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우산식지주재배와 다기능 방풍벽 설치로 병 발생이 기존보다 30% 경감되었으며 품질이 43% 향상되는 효과를 보였다. 전남 보성은 참다래 대체 만감류(레드향) 등 새로운 유망 아열대 과수 재배 단지 조성으로 소득이 기존대비 4배이상 증가되었다. 전북 무주는 우리품종 고랭지과수단지 조성으로 농가소득은 사업전 대비 33.7% 증가하였으며, 매출은 18%이상 향상되는 효과를 보였다.

앞으로도 지역별 농업인이 개발한 우수한 과제를 확대 보급토록 하여, 지역의 중점기술을 투입하여 대농민 교육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 작부 체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표 2-2-94 지역별 2016년 사업예산

단위 : 백만원(국비기준)

시도별	시군별	2016년 사업내역	사업비
계		113개 사업	14,152
경기 (6)	평택	체리생산기반조성	100
	김포	가공용특수미품질향상기반조성	100
	포천	사과안정생산기반조성	100
	양평	생대추과원조성사업	100
	여주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	100
	파주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	100
강원 (14)	평창	사과종묘보급지원사업	70
	원주	토종과실다래특산단지생산기반조성	80
	철원	사과국내육성신품종재배 단지조성사업	80
		신품종토마토 명품화단지조성	70
	홍천	대홍복숭아 Y형지주재배시범단지조성	70
		신육성푸도생산단지조성	70
	강릉	3배체시설포도단지 조성	70
	고성	기능성자영감자특산단지조성	100
	인제	지역전략작목종묘센터설치	100
	양양	버섯재배공동활용센터설치	70
	춘천	과채류2줄기재배단지조성	70
	횡성	특수미 및 신육성종자채종사업	100
	영월	새로운 고소득 약용작물단지육성	70
	화천	수출토마토 명품화단지조성	150
충북 (7)	청주	시설과채류 직거래단지조성 관광 상품화	180
	보은	명품대추전국 제일특화작목 육성	100
	옥천	최고품질 복숭아 안정생산기반조성	100
	영동	농가복지형 시설포도 병해충방제환경 개선	100
	괴산	친환경 블루베리 특화생산기반조성	70
	음성	과수 재배생력화 조성사업	150
	제천	지역의 농가소득을 위해 개발된 기술을 종합적으로 투입, 육성	200
충남 (17)	보령	블루베리 안정생산기반조성	50
	서산	서산달래명품 브랜드 육성	100
	당진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	100
	부여	기후변화대응 아열대과수 실증재배 시범	50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	100
	서천	기능성 산채류재배단지조성	100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	100
	홍성	로컬푸드 확대를 위한 친환경원예작물단지조성	50

시도별	시군별	2016년 사업내역	사업비
	예산	사과배결실안정 및 품질향상기반조성	50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	50
	천안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	100
	서산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	100
	계룡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	40
	당진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	100
	청양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	100
	태안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	100
	금산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	200
전북 (18)	도원	선도농업경영체우수모델화 사업	150
		신기술접목창조농업 젊은영농인 육성	450
		지역맞춤형 농식품가공표준화 지원	390
		에너지절감형시설하우스 재배기술시범	200
		경축순환자원활용 기술개발사업	210
		동부산악권 신소득작목발굴 및 재배기술	300
		친환경 천마신기술시범농가 조성	100
		기후변화대응 녹색농업기술개발사업	600
		주년생산체계구축 시설수박환경개선	60
		친환경인삼신기술 시범단지조성	200
		고소득지역특색벤처농업육성	700
		삼락농정 농가접목을 통한 경쟁력 제고	62
	정읍	블랙베리활력화 증진 기반시설	250
	김제	복숭아단경기 생산을 위한 시설하우스 기술지원	100
	무주	우리품종고랭지과수단지 조성	100
	임실	감고소득 상품화 기반구축	150
		친환경약초재배단지 조성	50
	순창	곤충생산기반조성사업	100
전남 (8)	담양	딸기복합형 고설식수경재배기술	150
	곡성	기능성소과류 체리특화단지 조성	100
	보성	아열대과수 재배단지조성	200
	장흥	아열대작목 생산단지 기반조성	100
	해남	친환경유기축산단지 조성	200
	장성	기능성 고품질 딸기 생산단지 조성	200
	신안	구지뽕신품종대품 확대재배	125
	함평	신소득전략특화작목 육성	150
경북 (8)	경주	토마토수경재배 기술보급	125
	안동	온난화대응대체 작물생산판매기반조성	100
	상주	햇순나물생산기반 조성사업	250
		백두대간 포도신품종명품화단지조성	250
	경산	우량건전종묘연구기반조성	50
	군위	기존하우스활용한 딸기양액재배	150
	고령	원예작물 스마트팜농업실현	50

시도별	시군별	2016년 사업내역	사업비
경남 (26)	예천	곤충식품6차산업화기반조성	250
	창원	부바르디아연중안정생산 단지조성	65
		친환경쌈채소 인삼수경재배기반조성	50
		수출파리고추전문생산단지 조성	50
		신소득원개발 천혜향 시설재배단지조성	100
	진주	수출작목활력화지원사업	100
	사천	과학적인 연재배를 통한 연근생산성 극대화 시범	100
		약용들깨의 시범단지조성	100
	김해	단감가공유통활성화 사업	50
		친환경 최고품질쌀생산·가공·유통연계 시범	60
	양산	고품질돈육생산기반조성	50
	의령	새로운비가림고추관비재배사업	100
		새로운 소득작목블랙베리시범사업	100
		토요애한우품질고급화 기반조성사업	100
	함안	용도별 맞춤형 특수미생산·유통기술사업	100
		고품질토마토 지역특화전락작목육성	35
		LED광을 활용한 점목활착실이용 수출우량묘생산	75
	남해	참다래품질향상시범	100
		남해마늘 활용한 한우사료 첨가제급여 시범	100
	하동	친환경하동쌀과 농산물을 활용한 쌀빵생산기반조성사업	100
		기능성콩활용 6차산업화기반조성	100
		로열티경감 국내품종수출딸기 단지조성	100
	함양	고종시단지조성사업	100
	함양	유가공체험농장 육성	100
	거창	온새미로농법에 의한 기능성 사과생산시범	100
	합천	향노화과채류생산기반구축	100
		향노화신백화고단지조성	200
제주(6)	-	시설원에 친환경 안정생산 등 6개사업	810
특광역시 (3)	인천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50
	강화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	75
	부산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	100

앞으로도 지역별 농업인이 개발한 우수한 과제를 확대 보급토록 하여, 지역의 중점 기술을 투입하여 대농민 교육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 작부 체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4)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지방농촌진흥기관의 기술개발 촉진과 기술보급 시설확충으로 농업기술센터를 지역 농업기술 보급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농업인 교육시설과 장비를 보강하여 농업인의 만족도 제고는 물론 최첨단 농업과학기술을 현장에 적용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하는 사업이다.

1997년부터 추진한 본 사업은 지난 2005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개발계정)로 전환하여 지원하였으며, 2010년부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지역개발계정)로 전환하였고 2015년부터 지역발전특별회계(생활기반계정)으로 전환하였다.

주요사업내용은 도심소재 지방농촌진흥기관의 교외이전에 따른 청사건축, 과학영농시설, 농업인교육관, 다목적 농업인 교육시설, 농촌생활과학관 등 시설비 지원과 지역 특수시설 기자재 구입 및 현지 지도활동 강화를 위한 순회지도 및 상담 차량지원, 교육 및 홍보활동을 위한 장비 지원, 농산물가공기술교육장비, 종합검정장비 및 조직배양장비 지원, 기타 도농교류를 위한 체험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도 농촌지도기반조성을 위한 농촌지도시설 지원 사업은 총 84개소로 청사 시설지원, 과학영농시설, 농업인 교육시설을 지원하였다. 2016년까지 추진한 농촌지도기반시설은 984건 289,137백만원의 국비를 지원하여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하였다.

표 2-2-95 2015년 농촌지도기반시설 지원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업비(국비)
계	81	22,445
청사시설지원	13	8,170
농업인교육시설	38	8,723
과학영농시설	27	4,896
테마파크조성	-	-
농업 체험관	2	540
기타	1	116

농촌지도장비는 순회지도 및 상담차량 지원 44대, 농기계차량 5대, 교육 등 홍보 60조, 가공교육장비 74대, 종합검정장비 63대, 가축질병진단장비 2대, 조직배양장비 21대, 기타 미생물배양장비 등 73대 총 342종 6,007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사업추진결과 사업참여 방문자 증가율 23.4%로 시설확충 및 개선으로 고객인 농민

의 활용도를 증가 및 농촌지도사업 전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요 시·도별 지원(배정)기준을 보면,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사업계획에 의거 신청 후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를 결정하여 통보하고 있다.

표 2-2-96 2016년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추진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지원금액(국비)
농촌지도 기반조성	계	427	22,297
	지역개발계정	372	20,292
	제 주 계 정	46	1,725
	세 증 계 정	9	280

본 사업은 앞으로 지방농촌진흥기관을 지역 농업인의 현장 실증교육장으로 활용하여 농업기술 수준향상 및 지역특화작목 개발보급을 촉진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17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2)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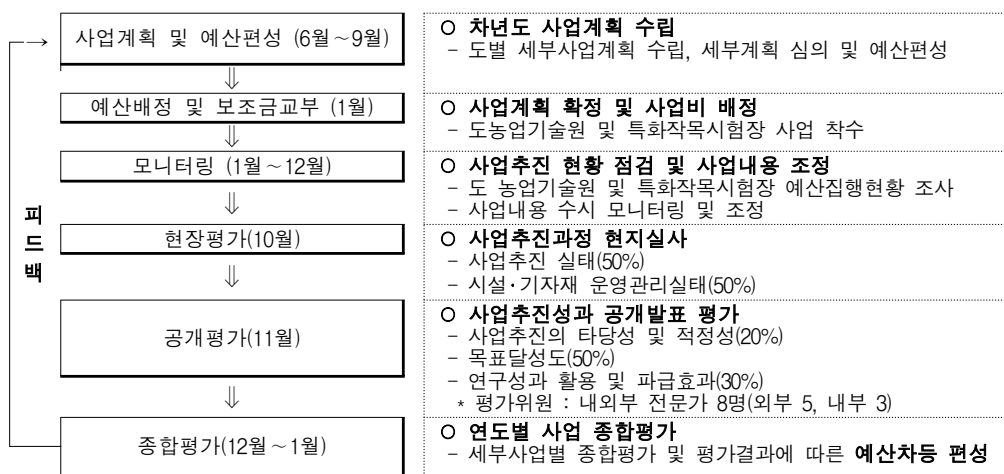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 사업은 농촌진흥법 제3조(지방농촌기관)와 제25조(국가의 재정적인 지원),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의 “광역경제권의 지역산업 육성”, 제4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녹색성장 및 지역밀착형 R&D 사업 추진” 등에 근거하여 지자체의 농업연구기반(시설·장비) 현대화 지원을 통해 각 도 농업기술원 및 지역특화작목연구소를 지역농업연구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원된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하여 생산기술, 6차 산업화 등 핵심기술을 개발하며, 개발된 기술을 보급·확산시켜 지역전략작목의 부가가치 증진과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 농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1991년부터 시작된 국고보조사업으로 2014년 지역발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역농업 활성화 관련 3개 유사 사업을 통폐합하여 2015년부터 현재의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 사업으로 재편하였으며, 내역사업으로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국비 50%, 지방비 50%)’, ‘지역전략작목 산학연사업 광역화(국비 100%)’, ‘지역특화작목기술

개발(국비 10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까지 국비가 총 4,238억 원이 투입되어 도 농업기술원(9개소) 및 지역특화작목연구소(42개소)를 대상으로 노후 연구기반 교체 및 신규 연구기반 구축, 29개 산학협력단 운영 및 현장 컨설팅, 그리고 지역 특화작목의 안정생산 기술 개발 및 농업현장 애로 해결기술 개발을 지원하였다.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 사업의 계획수립, 평가 등 사업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2-2-29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 사업 추진 절차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 사업을 통해 2016년에는 총 110억 원을 지원하여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천적곤충 등 유용곤충자원 개발을 위한 연구기반 구축, 강원도농업기술원의 산채 연구·실험실 및 시설환경 현대화, 충북농업기술원의 와인연구소 시험장비 보강, 충남농업기술원의 약용작물 품질분석실 및 관리조사동 신축, 전북농업기술원의 농식품 가공식품개발 분석장비 구축, 전남농업기술원의 돌발 병해충진단·연구장비 현대화, 경북농업기술원의 지역농산물 영양·기능성분 분석 및 분리 장치 구축, 경남농업기술원의 수출형 버섯 신제품 개발 장비 구축, 제주도농업기술원의 감자 수경재배 하우스 시설 보완 등 총 118건의 노후 연구기반 교체/보강 및 신규 연구기반을 구축하였다. 지역 산·학·관·연과의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율은 8.0%로 목표치(8.0) 대비 100%를 달성하였다.

표 2-2-97

2016년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 사업 예산 및 연구기반 구축 건수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정	예산액	비고
계		11,006	118건
지역농업 연구기반 조성	경제	10,287	노후 연구기반 교체 60건 (시설 32, 장비 28) 신규 연구기반 구축 47건 (시설 21, 장비 26)
	제주	719	노후 연구기반 교체 7건 (시설 7) 신규 연구기반 구축 4건 (장비 4)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 사업을 통해 구축된 연구기반을 활용하여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 사업으로 총 60억 원을 지원하여 71개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로 논문게재 11건, 학술발표 112건,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10건, 영농활용 기술개발 105건, 신제품 출원/등록 100건, 사업화/기술이전 108건 등의 과학적·사회적 성과를 도출하였다.

표 2-2-98

2016년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 및 지역농업연구기반 조성 사업을 통한 주요 성과

(단위: 건, %)

구분	논문게재	학술발표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영농활용 (기관채택)	신제품 출원/등록	사업화/ 기술이전	시설·장비 공동활용율(%)
성과	11	112	10	105	100	108	8.0

정량적 성과 외에도 구축된 연구기반을 활용하여 갈색팽이버섯 신제품 개발·보급으로 로열티 절감 및 생산비 절감 등 사업화 효과 142억원, 마늘, 강황 등 농산물의 천연 향미오일 추출기술 개발 및 산업화 연계로 경제적 파급효과 250억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 본 사업을 통해 신제품을 육성·보급함으로써 수출 및 농가소득 증대, 로열티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성과를 거두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감자 수경재배생산 시스템 구축으로 미니씨감자 증식 완전 자급화 성공 및 증식비용 절감, 감자 ‘탐나’ 신제품 개발로 생산성 20% 증가 및 농가소득 증대 등 다양한 지역특화작목의 안정생산기술을 개발하고 생산체계를 확립하였다.

지역전략작목 산학연사업 광역화 사업으로 2016년도에 총 60억 원을 지원하여 지역전략작목의 생산성 및 부가가치 향상, 농산물의 6차 산업화, 농가 컨설팅을 통한 조직화 개선 등 농업현장의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지역농업 활성화로 연결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우 수 사 례	아스파라거스 생산·유통체계 확립 및 농가보급
<p>□ 병해충진단·방제법 및 단경기 생산작형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 신규농가 육성 및 생산자 연합회 창립('15) ○ 생산성 증대기술, 방제시기 설정, 동계 단경기 생산작형 개발 ○ 수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내수시장 가격안정 효과 <p>☞ 경제적 파급효과 : 연간 신규재배농가 18.5억원 소득 창출, 82.5% 생산성 증가로 51.9억원 소득 증대</p>	  

본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업추진에 따르는 회원농가의 2016년 평균 소득은 12.9%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에 대한 회원농가 만족도도 91.7점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016, 지역농업네트워크).

표 2-2-99

2016년 지역전략작목 산학연사업 광역화 성과분석

사업명	투입액(2016년)	회원농가 소득증가율	회원농가 만족도
지역전략작목 산학연사업 광역화	60억 원	12.9%	91.7점

출처 : 2016년 「지역전략작목 산학연사업 광역화」 사업 성과분석(2016, 지역농업네트워크)

앞으로 지역농업연구기관의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공동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구축된 연구시설·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특화작목과 관련한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컨설팅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23)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6개 도, 32개 시·군, 108개 읍·면·동에 분포하고 있다. 이 지역의 대부분은 보호지역 지정 이전에도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이었으나, 백두대간보호 지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해 지역의 개발이 제한되어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주민은 백두대간의 구성요소인 동시에 백두대간보호의 주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백두대간보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백두대간 주민의 역할이 매우 크며, 백두대간의 보호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경제적인 안정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백두대간의 임산자원을 바탕으로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임산물 부가가치 증대에 필수적인 저온저장고,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등의 구입·설치 등을 위해 2016년 41억원을 지원하였다.

(24) 산림경영자원육성

1) 임산물수출 촉진

임산물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을 촉진하여 영세한 임산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수출용 포장용기, 수출상품 선별기 등 장비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2016년도에는 밤 수출 확대를 위해 포장용기, 장비 구입비 3.9억원을 충남 공주·논산·부여·아산·청양 등 5개소에 지원하였으며, 2017년에도 충남 공주·논산·부여 등 3개소에 3.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 목재이용가공 지원

친환경 소재이자 탄소저장고 역할을 하는 목재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목재의 이용 촉진·확대를 위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목재문화를 접할 수 있는 체험 중심형 행사와 초·중·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목공 체험교육을 실시하고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경기 용인, 강원 화천 등 18개소에서 목재문화체험장이 운영 중이며, 2016년에는 인천, 대전, 경기 남양주·이천 등 20개소에 165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2017년도에도 대구, 충북 음성, 전북 장수 등 19개소에 14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산재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목재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목재이용·가공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경남 진주에 3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2-2-100 목재문화체험장 이용객 (2013~2016년)

(단위 : 명)

연 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목재문화체험장 이용객 현황	431,009	437,341	552,970	1,403,242

표 2-2-101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현황 (2013~2016년)

(단위 : 개소)

연 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현황	6	6	10	18

3) 나무은행

숲가꾸기 및 각종 산림개발지에서 발생하는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을 가로수 식재, 공원 조성 등 공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나무은행 조성·운영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6년도에는 전국 105개소(126ha)에서 나무은행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약 55천본의 조경수를 수집하여 44천본(가로수 4천본, 도시숲 24천본, 기타 공공용 16천본)을 식재하여 약 8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창출하였다. 2017년에도 강원 정선, 전남 나주 등 43개소에 3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림 2-2-30 전남 순천시 나무은행 운영 사례



(25) 임도시설

임도(Forest Road)는 산림 내 도로로서 임산물의 운반, 조림·숲가꾸기, 목재생산 등의 산림경영은 물론 산림보호·관리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이며, 임업 기계화를 통한 경영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시설이다. 또한 산림병해충, 산불 등 산림재해

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반시설이면서, 농산촌의 마을을 연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산길 걷기, 산악자전거, 산악마라톤, 산악승마 등 산림 레포츠 장소로서 지역경제와 사회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등 다목적 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에 따르면 기본산림관리에 필요한 임도밀도는 ha당 8.5m이나 현재 전국 임도밀도는 3.2m로 37.6%에 불과하여 선진 임업국과 비교하면 매우 빈약한 실정으로 임도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다.

2016년도에는 1,419억원을 투자하여 616km의 임도를 신설하였으며 그 중 민유임도는 407km를 시설하여 총거리는 14,102km로 임도밀도 2.92m/ha이며, 국유림은 209km를 시설하여 총거리 6,242km로 임도밀도 4.05m로 국유임도가 민유임도보다 1.13m가 더 높은 실정이다.

또한, 집중호우에 의한 재해 안전성 강화와 산림사업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369km의 노후임도에 대하여는 대형차량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선형변경 등 구조개량사업과 시설임도 4,021km에 대하여 항시 임도가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실행하였다. 2017년에는 1,503억원을 투자하여 임도신설 774km, 구조개량 341km, 유지·보수 3,951km를 실행 할 계획이다.

표 2-2-102 2017년 임도신설 추진계획

(단위 : km, 백만원)

구 분	계 획 량	사 업 비				비 고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774 (341)	185,994	150,332	23,783	11,879	()내는 구조개량
국유임도	300 (109)	67,100	67,100	-	-	간선임도 187km 작업임도 113km
민유임도	474 (232)	118,894	83,232	23,783	11,879	간선임도 308km 작업임도 166km

(26)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사업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은 지역별로 특성 있고 수준 높은 외식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외식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나아가 국내산 식재료의 소비를 확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사업시행 이후 2015년까지 전주 한옥마을·함양 건강100세 음식지구 등 19개의 지구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우수외식업지구로 선정받기 위해선 「외식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지구 내 외식업체 비중(50% 이상), 우수 식재료 사용비중(40% 이상) 등 여러 지정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추진 기본계획에 따라 각 시·도지사가 지정한 우수 외식업 지구 중에서 지구별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매년 사업대상 지구를 선정한다. 선정된 지구는 개소당 2억원(국고 50%, 지방비 50%), 2년간 총 4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사업내용은 우수식재료 소비촉진·지역특화 메뉴개발·서비스 개선·교육·컨설팅·홍보 등으로 구성된다.

우수외식업지구 선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운영 내실화 작업이 추진된다. 매년 우수 외식업지구 방문객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각 지구별 운영상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가 우수한 지구는 ‘올해의 우수 외식업지구’로 선정·시상하게 된다. 2016년도 올해의 우수외식업지구로 ‘부산 명륜1번가’가 선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이 시상된 바 있다.

2016년도 우수외식업지구 운영상황 평가결과 우수 식재료 구매비용은 전년대비 8.2% 증가하고 전체 평균 매출액은 4.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우수외식업 지구는 농촌관광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앞으로 우수 식재료의 소비촉진 뿐만 아니라 지구 인근의 관광사업과도 연계한 다양한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표 2-2-103 국산식재료 직거래 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국산식재료 직거래 금액(백만원)	1,163	1,354	1,463	-

표 2-2-104 우수 외식업지구 지정 현황('12~'15)

년도	지자체	지구명	소재지
2012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	전북 전주 완산구 풍남동, 교동, 전동 일원(36개 업소)
	대구 수성구	들안길 먹거리타운	대구시 수성구 상동, 두산동 일원(98개 업소)
	경남 함양군	건강100세 음식특구	경남 함양군 함양읍 상림공원 일원(23개 업소)
	강원 평창군	효석문화예술큐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원길리 일원(60개 업소)
	경기 안산시	전통음식거리 댕이골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347-1352번지 일원(34개 업소)
2013	부산 동래구	명륜1번가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 112번가길 일원(177개 업소)
	제주 제주시	용두암 어영마을	제주 제주시 용담2동 어영마을 일대(41개 업소)
	제주 서귀포	아랑조을거리	제주 서귀포시 천지동 일대(55개 업소)
	전북 고창군	선운산 풍천장어거리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산도립공원 일원(40개 업소)
2014	대구 달서구	수밭골 웰빙음식거리	대구시 달서구 도원동 일원(33개 업소)
	경기 안산	대부도 방아머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방아머리 일대(38개 업소)
	강원 평창	오대산 산채마을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동산리 일원(32개 업소)
	강원 인제	용대리 황태마을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182번지 일원 (30개 업소)
2015	경기 안양시	삼막마을 먹거리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막로 일대 (40개 업소)
	강원 평창군	자연밥상마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일대 (59개 업소)
	광주 동구	무등산 보리밥지구	광주 동구 지산유원지, 증심사 일대 (43개 업소)
	경남 남해	보물섬 800리길 미조항 음식특구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항 일대 (72개 업소)
	전남 강진	오감만족 한정식 맛길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동명길 일대 (25개 업소)
	경북 포항	설머리 물회지구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안로 일원 (25개 업소)

※ '16년 기 지정지구('15년 지정 6개소)에 대한 2차년도 사업만 진행하였으며, 신규지정 없음

(27) 해양 및 수자원관리(연안정비)

연안정비사업은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연안의 지표가 깎이거나 모래 등이 유실되는 등 훼손된 연안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고 보전·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연안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연안침식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이상 고파랑의 내습 증가, 연안개발에 따른 인공구조물 설치 증가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그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적 공통현상이기도 하다. 연안정비사업은 이러한 연안침식의 심각성이 다각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국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자 관광자원인 연안을 보전하고 국민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0년도부터 꾸준히 시행하여 왔다.

연안정비사업에 대한 수요예측 및 조정, 지역별 사업계획 검토 및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수립된 제2차 연안정비기본계획(2010~2019년) 및 제2차 연안정비(변경)기본계획

(2010~2019년)에 근거하여, 2013년도에는 301억원(지특회계)의 예산을 투입하여 영덕 군 강구항 등 47개소, 2014년도에는 321억원(지특회계)의 예산을 투입하여 부산 다대포해수욕장 등 47개소, 2015년도에는 270억원(지특회계)의 예산을 투입하여 영광 상하낙월지구 등 46개소, 2016년도에는 291억원(지특회계)의 예산을 투입하여 울진 월송지구 등 55개소에 대한 지자체시행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2016년도까지 77개소(부산 미포항1지구 등)에 대한 지자체시행 연안정비사업이 완료되어 대형 태풍 등 이상기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유실을 방지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표 2-2-105 연안정비사업 추진(지자체 보조)

(단위: 억원, 개소)

구 분	2013	2014	2015	2016
예산	301	321	270	291
정비사업	47	47	46	55

연안정비사업은 통상 수년에 걸쳐 비교적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17년에도 291억원(지특회계)의 예산을 투입하여 해운대 미포항2지구 등 53개소에 대한 지자체시행 연안정비사업이 진행 될 예정이다. 면밀한 연안침식 원인분석과 적절한 대응방안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연안정비사업을 통하여 연안침식 피해가 최소화되고 연안공간의 유실이 방지되어 국민이 소중한 연안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8) 해양 및 수자원관리(해양관광 기반시설 조성지원)

해양관광 기반시설조성지원 사업은 소득변화와 주5일제 등 휴일문화 정착에 따른 다양한 해양관광 수요변화에 대응하여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육성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2005년부터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국비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22개 사업에 175억원(지특회계)을 지원하였고, 2014년에는 20개 사업에 124억원, 2015년에는 23개 사업에 137억원을 지원하여 해양관광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2016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영목항 해양관광거점조성' 등 22개 사업을 포함한 36개

사업에 199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각 시·도별 2016년 사업으로는 충남도 '보령머드 멀티랜드마트 조성' 등 5개 사업 42억원, 전남도 '완도 해양생태체험관건립' 등 9개 사업 44억원, 경남도 '거제 해양스포츠아카데미센터조성' 등 3개 사업 14억원, 경북도 '울릉 남양해양관광 친수공간 조성' 등 9개 사업 66억원, 강원도 '강릉 해중공원 레저전용 Zone 조성' 등 2개 사업 9억원, 제주도 '4계절명품해변조성' 등 3개 사업 8억원, 부산시 '송도 구름다리 복원' 등 2개 사업 5억원 등이다.

2017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부산남항유람선선착장구축사업 등 9개 사업을 포함한 36개 사업에 239억원을 투입하여 해양관광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표 2-2-106 최근 5년간 해양관광 기반시설 조성사업 지원 예산 현황(국비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사업수	18	22	20	23	36
예산액	15,569	17,482	12,338	13,746	19,923

(29) 해양 및 수자원관리(마리나시설 조성)

마리나시설 조성사업은 소득수준 향상, 주5일제 근무, 교통여건의 개선 등으로 해양 레저·스포츠 참여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마리나사업 지원 등 해양레저 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해양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해양레저·스포츠 진흥과 관광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하여 해양관광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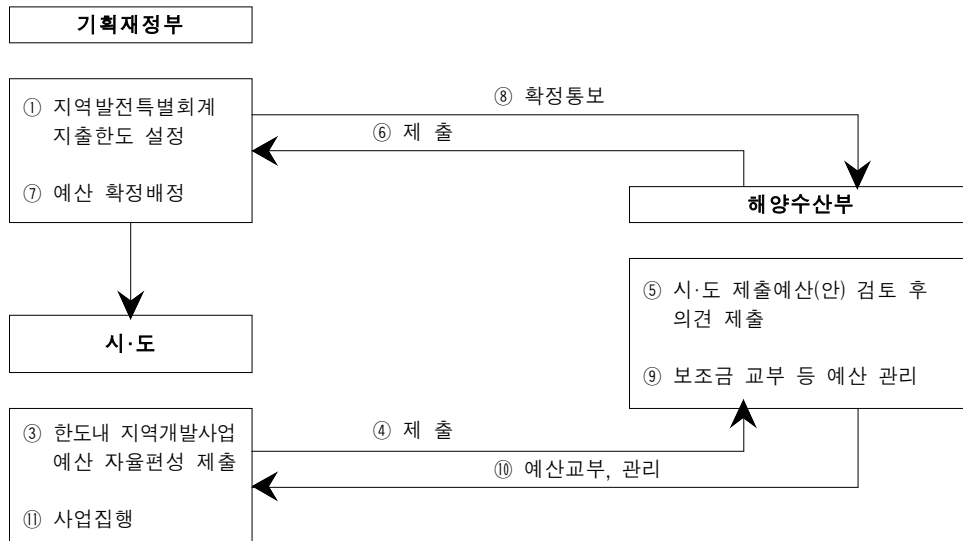
2013년부터 2014년까지는 해양관광과 관련된 여러 사업에 예산을 지원, 2013년에는 21개 사업을 선정하여 17,839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20개 사업에 13,358백만원을 지원하여 마리나, 낚시공원, 친수공간 등 해양과 관련된 다양한 관광자원시설사업을 지원하였다. 2015년부터는 해양관광과 관련된 여러 기반시설 사업 중 마리나시설 조성사업을 별도로 분리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3개 사업에 747백만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에는 4개 사업에 7,600백만원을 지원하였다. 2017년에는 5개 사업을 선정하여 9,666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해양레저·스포츠 진흥을 통한 저변확대 및 해양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리나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표 2-2-107 연도별 예산 지원액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13,819	17,839	13,358	747	7,600

표 2-2-108 사업시행체계



(30) 해양 및 수자원관리(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매년 반복적으로 해안가에 각종 쓰레기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신속한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해안경관을 저해함은 물론 해양 생태계 교란, 어족자원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바닷가에 산재되어 있는 해양쓰레기를 신속히 수거 처리하여 청정 해양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도에 4,092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의 사업비로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해양쓰레기 2,540톤을 수거 처리하였으며, 2014년에는 3,192백만원으로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4,424톤, 2015년에는 6,812백만원으로 12,110톤, 2016년에는 10,682백만원으로 8개 광역지자체에서 16,139톤을 수거하였다. 또한, 2017년도에는 8,728백만원을 투입하여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향후 도서, 벽지 등 바닷가에 산재되어 있는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처리 추진으

로 아름답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연중 수시 해양쓰레기 수거체계 구축방안을 연구·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표 2-2-109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실적(2013 ~ 2016년)

(단위 : 백만원, 톤)

	2013		2014		2015		2016	
	사업비	수거량	사업비	수거량	사업비	수거량	사업비	수거량
합 계	4,092	2,540	3,192	4,424	6,812	12,110	10,682	16,139
부 산	-	-	-	-	-	-	15	283
울 산	-	-	-	-	-	-	120	126
충 남	450	750	110	272	220	520	220	761
경 북	-	-	-	-	-	-	100	240
경 남	350	574	350	720	300	539	300	218
전 북	-	-	-	-	-	-	350	787
전 남	1,246	1,216	936	3,138	2,686	10,771	3,336	12,514
제 주	-	-	200	294	200	280	900	1,210

(31) 해양 및 수자원관리(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

쓰레기의 해양 재투기를 방지하여 해양 정화 비용을 절감하고 어업인 스스로 해양 환경 보전 활동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도에 3,582백만원(국비 60%, 지방비 40%)의 사업비로 10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조업중 인양쓰레기 5,243톤을 수매 처리하였으며, 2014년에는 4,434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으로 6,597톤을, 2015년에는 4,512백만원으로 6,158톤, 2016년에는 4,456백만원으로 6,296톤을 수매 처리하였다. 2017년에는 4,568백만원을 투입하여 10개 광역지자체에서 조업중 인양쓰레기를 수매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을 확대하여 어업인에 대한 해양환경 보전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해양환경 보호 의식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표 2-2-110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처리 실적(2013~2016년)

(단위 : 백만원, 톤)

구 분	계	2013	2014	2015	2016
사업비	16,984	3,582	4,434	4,512	4,456
처리실적	24,294	5,243	6,597	6,158	6,296

(32) 선상집하장 설치

어선이 많은 항·포구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을 설치하여 조업중 발생한 해양쓰레기의 재투기를 방지하고,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효율성 제고를 통한 청정 바다환경 유지를 위하여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도에 90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의 사업비로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5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2014년에는 62개소, 2015년에는 57개소, 2016년에는 47개소를 설치하였다. 2017년도에는 66개소를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를 통하여 해양쓰레기 퇴거처리 생활화로 어업인 스스로 바다를 깨끗이 유지해 나간다는 의식을 높여 해양환경 보전 활동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표 2-2-111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현황(2013~2016년)

(단위 : 백만원, 개소)

구 분	계	2013	2014	2015	2016
사업비	3,794	900	1,051	961	882
설치개소	218	52	62	57	47

(33) 어업기반정비

어촌지역의 수산업 생산활동에 필요한 어업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어촌의 생산성 향상과 어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지자체관리 어항건설, 수산종묘 관리, 인공어초사업, 소형어선인양기 설치 등 12개 내역사업에 646억을 지원하여 어업기반정비를 통한 어촌 생산기반 조성에 기여하였다.

표 2-2-112 연도별 예산 지원액(제주포함)

(단위 : 백만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43,872	165,038	170,856	166,807

향후,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설명회 개최 및 포괄보조사업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사업자의 집행률을 제고하고, 수산업 생산활동에 필요한 기초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보강하여 어업기반 및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어촌경제 활성화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34) 서남권 친환경수산물종합지원단지 조성

목포 남항의 어항기능이 북항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그 배후부지에 수산물 위판·가공·유통기능 등을 포함한 수산지원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서남권 친환경수산물종합지원단지 조성사업을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2010년 사업타당성 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예산은 '14년부터 반영되었으며, 2015년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용역을 완료하고, 2016년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및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 공사발주 및 계획을 완료하였다. 또한, 2016년에는 총사업비 조정을 위한 협의를 2차례 추진하여 사업추진 과정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다.

2017년에는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여 2018년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조하고 사업 추진상황 점검 등 철저한 사업관리에 노력할 것이다. 동 사업이 완료되면 수산업의 대외적 환경변화와 사회·경제적 수요를 반영한 어항의 다기능화를 선도하고 바다문화 체험·교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양륙·가공공간, 판매공간, 친수·교류공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35) 수산물 안전검사체계 구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라 생산·저장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중금속, 항생물질 등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패류독소에 대해서는 국립수산물과학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1996년부터 「농수산물 안전성조사 업무처리 요령」을 마련하여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공급을 위한 본격적인 수산물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다. 2001년 「수산물품질관리법」 제정으로 조사 근거 법령을 변경하고 2005년 7월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자체에서 수행

하던 저장 및 거래 전단계 안전성조사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하여 2006년부터 시행하여 왔다.

2013년 7월 일본 원전 오염수 유출 사고 등 식품의 안전성과 품질관리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고조되면서 국내에서도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조사를 수행하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안전성조사 기관은 검역, 소금 수입검사 등 신규업무 폭주로 안전성조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수산물 안전성조사 대상(약 1만7천여 개소)이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어 중앙 단위에서의 안전성조사에 대한 한계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자체에서도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분석장비 구축 지원방안(2009년 7월)을 마련하여 지자체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고, 2009년에 전남도 1개소를 시작으로 2010년 부산시·경남도 2개소, 2013년 경북 1개소에 각 국비 10억 원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2012년 8월부터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안전성조사 업무를 공동수행 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분석 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2016년까지 33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여 관내 생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업무를 추진하였다.

또한 일본 원전사고와 관련하여 방사능에 대한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내산 수산물은 주 1회, 원양산 수산물은 주 2회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검사결과를 주 2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그리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내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과정을 공개하는 등 방사능 오염 수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정부에서는 수산물 생산 지자체 10개소에 대한 수산물 안전성조사 장비 구축 등을 연차적으로 지원하여 수산물 안전성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여 국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한편 일본 방사능 유출로 인한 국민의 먹을거리 불안감 해소를 위해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검사품종 및 검사횟수 등을 확대하여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 등 관련 기관과 방사능 안전관리에 대한 협의를 수시로 실시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범정부적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들이 즐겨 먹는 다소비 품종과 오염 이력이 있는 부적합 품종·양식장 등

에 대해서는 검사를 지속 확대하여 실시하는 등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3. 도농상생 및 귀농·귀어·귀촌을 통한 농어촌 활력 증진

(1) 로컬푸드직매장 설치 지원

로컬푸드직매장 설치 지원은 2013년 5월 농산물 유통구조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유통경로간 경쟁을 촉진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행복한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해 도입되었다.

2014년 기존 소비자유��활성화지원사업에서 소비자참여형직거래활성화 별도사업으로 분리되어 직거래장터 설치 지원, 소비자교류 지원 등과 함께 동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직매장 설치 및 생산자교육, 홍보 등을 보조 30~100%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까지 4년간 총 93개소가 지원을 받았다.

이러한 정책지원에 힘입어 로컬푸드직매장은 전국적으로 2013년 32개소에서 2016년에 148개소로 확대되었으며 매출액 또한 동 기간 317억원에서 2,560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여 직거래의 대표적인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로컬푸드직매장은 판로가 부족한 영세농, 고령농, 귀농인구에 적합한 다품종 소량 유통방식으로서 일반 마트 출하와 비교할 때 농가수취가격이 20.0%p 높아 생산자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규모화·조직화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산자유통정책에서 소외된 반면 직매장에 참여하면서 가격을 직접 결정하고 유통·판매과정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농업에 대한 자부심과 소비자와의 애착이 형성되어 심리적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매장 판매단가 또한 일반마트 대비 17.2%p 낮고 당일 수확 당일 유통 원칙의 적용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합리적 가격에 만나게 된 소비자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2-113 전국 로컬푸드직매장 운영현황

(단위 : 개소수, 매출액)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개소수	32개소	71개소	103개소	148개소
매출액	317억원	950억원	1,659억원	2,560억원

그림 2-2-31 직거래 일반 및 로컬푸드직매장 생산자·소비자 효용



자료 : 직거래 활성화 소비자 만족도 및 생산자 기대 효과 조사분석 연구, '14.12),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제3장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

제1절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

1. 특성화를 통한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1)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CK)

지방대학 특성화사업(CK, university for Creative Korea)은 2014년 2월 지방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특성화 방향을 설정하고, 2014년 7월 지방대학 79개교(264개 사업단)를 선정하여 연간 1,925억원을 지원하였다. 이는 지방의 일반대학 126개 대학 중 약 63%에 해당된다. 2016년 9월에는 성과 관리를 위해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지방대학 77개교(258개 사업단)가 참여하게 되었다. 이들 대학은 2018년까지 3년간 총 약 5,250억원을 지원받는다.

동 사업은 지역사회 및 산업과 연계한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유도하고자 지역 산업(동남권 영상/해양, 충청권 국방/디스플레이/바이오, 호남·제주권 농식품/관광, 대경·강원권 IT·SW/환경 등) 및 지역전략과 밀접히 연계한 특성화를 추진하여 지역사회와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운영 방식은 학생수, 학교수 및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충청권, 호남·제주권, 대경·강원권, 동남권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하였으며, 대학 및 사업단이 자율적으로 특성화 분야를 선정·지원하도록 하여 개별대학 및 지역여건에 맞는 대학특성화를 건인하도록 하였다. 지방대학 특성화의 큰 틀은 정부가 제시(Top Down)하였으나, 구체적인 특성화 분야와 추진계획은 대학이 스스로 결정하는 방식(Bottom Up)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였다. 대학에서 자체적인 중장기 발전방향을 세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여 대학이 더욱 특화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운영 성과로는 학문간 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학문 분야의 특성화를 유도하여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및 프로그램 개편으로 사회수요에 부합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지역사회 수요에 기반한 특성화 분야의 교육과정(전공과목 5,670건) 개편 및 신규 교과목 개설 등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의 질적 제고에 기여하였다. 또한 급변하는 사회 수요에 대응해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융복합 사업단(168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학사제도(34개 대학 68개 사업단)를 개편하는 등 단기간에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표 2-3-1 지방대학 특성화사업(CK) 특성화분야 여건 개선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사업시작)	2015	2016	증감률, %p
전임교원 강의비율	76.0	81.2	83.2	+ 7.2
전임교원 확보율	68.1	74.8	79.2	+11.1
취업률	73.4	74.1	77.0	+ 3.6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	12.0	13.4	13.4	+ 1.4
해외파견 학생 비율	2.2	2.3	5.8	+ 3.6
국내 유치학생 비율	0.9	1.4	2.9	+ 2.0

특히, 특성화사업의 교육성과 창출 및 관리를 위해 ‘교수-학습 역량 진단기준(NASEL)’을 적용하여 교육과정 현 수준을 진단하고, 대학별 특성을 반영하여 대학에 환류함으로써 교원-학생간 상호작용을 강화하였다.

표 2-3-2 NASEL을 활용한 교수-학습 역량 진단 (교육개발원 측정)

(단위 : 점)

구분	능동적 협력적 학습활동 PCL	전공 교수·학습 만족도 M-STL	교수-학생 상호작용 SFI	교수·학습 성과 TLO	학생지원의 질 QSS	평균	비고
CK사업 참여대학(지방)	2.41	2.92	1.83	2.44	2.99	2.52	* 4점 척도
비참여대학	2.33	2.86	1.72	2.37	2.90	2.44	

* NASEL(National Assessment of Student Engagement in Learning) : 구성원과의 상호작용, 전공 교수-학습 만족도, 교양 교수-학습만족도, 교수-학습 성과, 자기주도적 학습활동, 학생 지원의 질 등 7개 영역의 교육성과 측정 도구

(2)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SCK)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SCK, Specialized College of Korea)은 전문대학을 고등 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하여 사회·산업 현장 수요 맞춤형 핵심 전문인력 양성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 학령인구 저하에 따른 대학 구조 조정이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구조개혁과 연계한 특성화’로 방향을 정하였다. 정책 연구와 권역별 공청회 등을 통한 전문대학 의견수렴을 거쳐 전문대학 육성사업 시행 계획('14.2)을 발표하였다.

동 사업은 2주기 총 5년(2+3년)으로 운영되며 1주기는 2014~2015년, 2주기는 2016~ 2018년으로 구분된다. 2014년 78개교를 시작으로 2015년 79개교가 참여하였고, 2016년까지 92개교를 선정하였으며, 2017년은 83개교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중간평가를 통해 성과 미흡대학을 사업에서 배제하고 신규 대학을 참여시킴으로서, 엄격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추가 동력을 확보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본 사업을 통해 전문대학은 기존 백화점식 학과 운영에서 탈피하여 특성화 계열에 대학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하여, 학과수를 기준으로 특성화계열내 학과가 2013년 819개에서 2016년 948개로 사업 시행 이전보다 15.8% 증가하였고, 비특성화계열 학과는 2013년 460개에서 2016년 344개로 25.2% 감소하였다. 입학 정원을 기준으로도 특성화 성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구조조정으로 입학 정원은 특성화계열 5.4%, 비특성화계열 35.3%로 모두 감소하였다. 이는 비특성화 계열 입학정원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특성화계열에 입학정원이 집중되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산업수요를 반영한 현장직무 중심 교육과정을 강화하였다. 특히 국가직무 능력표준(NCS)을 교육과정에 도입하여 2014년 632개 학과, 8,002개 교과목 대비 2016년 1,060개 학과, 18,029개 교과목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렇듯 학교 현장의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교수 중심, 강의 중심 교육과정에 현장 중심, 실습 중심 교육과정이 가미되면서 교육의 현장성이 크게 강화되었다. NCS 기반 교육과정의 필요성에 대한 대학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운영 성과로는 강화된 역량을 기반으로 전문대학의 주요 성과 지표가 지속적으로 상승

했다. 사업 추진기간 동안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수행 대학의 취업률이 2016년에 70.8%로 취업교육 역량을 바탕으로 청년고용 절벽해소 및 국가 고용률 70% 달성에 기여하였다.

표 2-1-3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SCK) 주요성과

구분	2014년(사업시작)		2016년	
취업률	64.8%		70.8%(6.0%p ↑)	
충원율	98.9%		99.4%(0.5%p ↑)	
학과수	특성화 계열	819개(2013년)	특성화 계열	948개(15.8% ↑)
	비특성화계열	460개(2013년)	비특성화계열	344개(25.2% ↓)
입학정원	특성화 계열	73,766명(2013년)	특성화 계열	69,744명(5.4% ↓)
	비특성화 계열	30,266명(2013년)	비특성화계열	19,570명(35.3% ↓)
NCS 운영	도입 학과	632개	도입 학과	1,060개(67.7% ↑, 2015년)
	도입 교과목	8,002개	도입 교과목	18,029개(125.3% ↑, 2015년)
교직원 역량 강화	산업체 연수	773건	산업체 연수	1,189건(53.8% ↑, 2015년)
	자체 연수	669건	자체 연수	1,182건(76.6% ↑, 2015년)

표 2-1-4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SCK) 지원 현황

(단위 : 개교, 백만원)

지원 년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대학 수	-	78	79	83
예산액	-	269,575	296,924	297,184

(3) BK21플러스 사업을 통한 지방 대학원 연구역량 강화

BK21(Brain Korea21) 사업은 1단계('99~'05년)와 2단계('06~'12년)를 거쳐 BK21 플러스(Program for Leading Universities and Student) 사업('13.9월~'20.8월)까지 19년째 추진 중이다. 특히, BK21 플러스 사업은 2단계 대비 지방대지원 사업비를 24%에서 33%로, 지방대 선정 사업단(팀) 비중을 35%에서 44%로 상향 조정하여 지역 우수 대학원 지원을 확대하였다. 매년 약 9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방 36개 대학, 239개 사업단(팀)을 지원하고 있다.

표 2-3-5 BK21 플러스 사업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지원 연도	2013년(6개월분)	2014년	2015년	2016년
예산액	44,179	87,415	87,444	91,026

추진 결과는 2015년 중간평가를 통하여 2016년 이후 4년간 지원할 사업단(팀)을 재선정하였다. 지난 2년간('13.9월~'15.8월)의 실적 및 계획을 평가하되, 사업구조를 전면 개편하여 기존 2개 분야를 9개 학문분야로 세분화하였다. 또한 학문분야별 특성화된 지표를 개발하여 맞춤형 평가를 실시하였다.

표 2-3-6 BK21 플러스 평가구조 개편

구분	분야								
(‘13년) 선정평가	과학기술					인문사회			
(‘15년) 중간평가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생명 수산업	과학기술 융복합	인문학	사회 과학	인문사회 융복합	디자인 영상

2015년 중간평가 결과 연구성과(논문, 저서)와 산학협력(특허, 기술이전) 부문에서 강점을 가진 우수 사업단(팀)이 다수 선정되었다. 특히 지방대학 사업단(팀)의 24.7%(59개)가 신규 사업단(팀)으로 교체되었으며, 지방대학원의 ‘지역 산학협력 연구 및 산학 간 인적·물적 교류의 우수성’을 비중 있게 평가하여 지역 산업 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고급인력 양성 기반을 강화하였다.

표 2-3-7 BK21 플러스 참여인력 연구역량 향상

(단위 : 편)

구분	선정 당시(2013)	2016	증가율(%)
참여대학원생 1인당 학술대회 발표실적 (논문 실적)	1.35	1.5	+10%
대학원생 1인당 논문 IF	1.36	1.8	+32%
교수 1인당 논문 IF	16.5	17.9	+8%

추진 성과로는 지방대학의 경우 박사진학 후 높은 취업률을 보였으며 석사졸업생의 경우에도 BK21 미참여 대학원생보다 약 6.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8 지방대학원 BK21 참여와 미참여 사업단(팀) 소속 대학원생 취업률 비교 (단위 : %)

구분	BK21참여 박사졸업생	BK21참여 석사졸업생 (A)	BK21미참여 석사졸업생 (B)	차이 (A-B)
취업률	81.36	25.32	18.86	6.46

표 2-3-9 지방대학원 BK21 참여와 미참여 사업단(팀) 소속 대학원생의 사업 효과 인식 (단위 : %)

사업 효과	졸업 기간 단축	국외유출 인력감소 (연구인프라)	전공에 맞는 구직	국내 신진인력양 성 환경조성	연구에 필요한 경제적 여건마련	역량있는 인재유입	합계
비중	0.9	3.4	1.4	18.9	69.6	5.8	100

또한 BK21 참여 대학원생 인식 조사 결과, 지방대학원생의 경우 BK21 참여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연구에 필요한 경제적 여건 마련과 국내 신진인력 양성을 위한 환경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사업단(팀)별 사업계획서 및 성과 등을 개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BK21 플러스 웹진(<http://bkplus.nrf.re.kr>)을 발간하여 우수사업단(팀) 성과 및 사례 소개, 사업 주요 소식을 전함으로써 우수성과 발굴 및 공유·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분야별 사업단(팀)간 정보교류와 협업을 활성화하여 의미있는 결과물을 창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4)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ACE(Advancement of College Education) 사업은 대학 본연의 기능인 ‘교육’에 초점을 두고, 대학들의 자발적인 교육과정 개발·운영 혁신 노력을 촉진하고 교육목표 실현을 위한 교육지원 시스템의 총체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동 사업은 2010년에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신설된 교육부의 대표적

학부교육 지원사업으로, 2014년부터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분리되어 개별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매년 신규 대학을 선정하여 4년(2+2)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에는 3개 대학을 신규 선정하고, 기 선정 대학(29개교)을 포함하여 총 32개 대학(수도권 12개교, 지방 20개교)에 평균 20억원씩, 총 594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2-3-10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지원 현황

(단위 : 개교, 백만원)

지원 년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선정 대학 수	11	11	3	-	13	16	3
지원 대학 수 (예산액)	11 (30,000)	22 (60,000)	25 (60,000)	25 (60,000)	27 (57,272)	32 (59,400)	32 (59,400)

예산은 대학 본부에 총액교부방식(Block Grant)으로 지원하며, 지원대학은 각 대학의 비전과 인재상에 맞는 교육목표를 설정하였다. 대학의 특성에 맞게 수립한 성과목표와 사업계획서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대학은 학부교육 발전 계획에 대해 자발적으로 고민하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 개선해왔으며 대학에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교양교육 전담기구 신설·확충을 통한 기초 교양교육 강화, 창의성 함양과 융복합 교육 실현을 위한 전공 교육과정의 다양화 및 체계화 하였다. 교양 및 전공 교과와 연계한 내실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등 대학의 특성, 여건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 및 운영 하였다.

둘째, 학생들의 역량 관리 및 대학생활 적응 등을 돕는 학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 교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교수-학습법 지원 시스템 구축하였다. 교육 분석 전담기구를 통하여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학부교육 질 관리 실시 등 교육지원시스템을 구축·개선하였다.

동 사업은 이러한 대학의 전반적인 학부교육 시스템 개선을 통해 다양하고 우수한 학부교육 모델을 창출·확산함에 기여하였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학습 참여도와 핵심역량이 눈에 띄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11 2014년도 ACE 선정 대학 대학생 핵심역량 향상도(K-CESA)

(단위 : 점, %)

측정 항목	2014년	2015년	2016년	향상률(%)
의사소통역량	44.2	45.8	47.6	7.7
글로벌역량	48.1	51.3	51.7	7.5
대인관계	50.7	49.7	54.7	7.9
종합적 사고력	48.4	49.2	48.7	0.6
자원정보기술	49.0	51.9	50.8	3.7
자기관리역량	49.6	49.7	53.3	7.5

ACE 지원 대학들은 대학별 사업계획서 및 사업결과 보고서를 ACE 홈페이지(<http://eduup.kcue.or.kr>)에 게재하고 있다. 매년 ACE 포럼 개최(2회), ACE 소식지 발간, 행복교육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 성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ACE 사업은 ‘잘 가르치는 대학’, ‘작지만 강한 대학’이라는 고유의 브랜드를 창출하였다.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중 사업목적 달성도와 사업의 필요성이 가장 높은 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대학 현장에서 유효한 성과를 거둔 사업으로 교육계 안팎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동 사업은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방향('16.7월 발표)에 따라 2017년부터 기존 ACE 사업을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으로 고도화하여 다양하고 우수한 학부교육 모델의 공유·확산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였다. 전체 대학 교육의 질적 개선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핵심 기초사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2019년까지 4년제 대학의 약 40%인 80개교 지원을 목표로 지원 규모 및 지원 대학 수를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 지역산업과 연계한 산학협력 강화

(1)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4년제 대학)

LINC 사업(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은 지역(기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산학협력 선도모델 창출·확산으로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인력 양성과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2012~2016년까지 총 5년간 지원하였다. 2012년 3월에 1단계로 51개교를 선정·지원하였으며, 2014년 5월에 기존 학교에 대한 단계평가와 함께 신규 선정평가를 통해 2단계 사업을 진행하였다. 1단계 단계평가 결과, 기존 대학 10개가 탈락되고 15개 대학이 신규 선정되어 엄정하고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사업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1단계 사업('12~'13년)은 주로 산학협력 선도모델 기반 조성 및 내실화에 초점을 맞춘 반면, 2단계 사업('14~'16년)은 1단계 사업을 통해 구축된 산학협력활동 기반을 바탕으로 산학협력의 성과를 보다 확산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특히 5차년도('16년)에는 57개 대학에 2,240억원(대학 평균 39억원)을 지원하였다.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제도 확대,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역기업 지원 등 다양한 산학협력 활동을 추진하였다.

표 2-3-12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4년제) 지원 현황

(단위 : 개교, 백만원)

지원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대학 수	51	51	56	57	57
예산액	166,600	216,900	238,832	223,982	224,000

사업비 지원은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총괄 지원하였다. 대학은 지역사회의 여건과 해당 지역소재 기업체의 수요를 반영하여 대학별 산학협력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설정한 LINC 성과지표에 따라 학내 산학협력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육과정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지역 산학협력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5차년도('16년) 사업에서는 1단계를 통해 구축된 산학협력활동 기반을 바탕으로 대학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산학협력 특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대학은 자체 산학협력 대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산학협력모델 브랜드화를 추진하여 산학협력성과 창출과 확산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산학협력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각 대학별 강점 분야를 살려 취·창업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창업 강좌 및 재정 지원 등을 통해 학생의 취·창업활동을 장려하여 (주)피에로네트(건양대학교), (주)링크솔루션(한국산업기술대) 지원 등 우수한 학생 창업 기업이 나오는데 기여하였다.

아울러 인프라 구축 관련 성과도 지속적으로 상향세를 보이고 있다. 먼저 취업 관련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인 현장실습 및 캡스톤디자인 이수학생은 각각 38,718명, 104,727명으로 이는 사업 시행 전 대비 연평균 35%, 26%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창업과 관련하여 전년 대비 강좌 시수 14%, 재정 지원 13% 지원 인력 6%가 증가하였다. 교원 재임용·승진·승급 시 연구 실적물 대체 가능 비율도 평균 92.5% 수준까지 높아졌다.

표 2-3-13 2016년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4년제) 주요 성과

구분 년도	현장실습 이수학생수(명)	캡스톤디자인 이수학생수(명)	산학연계 교육 과정 운영(건)	창업강좌 (평균시간)	기술이전 실적(건)	기술이전 수입료(백만원)
1차년도 (‘13.2)	19,616	42,744	872	53	992	15,144
2차년도 (‘14.2)	27,618	70,145	1,484	79	1,583	17,496
3차년도 (‘15.2)	35,757	81,858	1,650	94	2,000	25,887
4차년도 (‘16.2)	39,675	94,240	1,906	108	2,578	29,547
5차년도 (‘17.2)	38,718	104,727	2,197	123	2,551	30,927
구분 년도	산학협력 중점교수(명)	산학협력 가족회사(개)	공동연구장비 운영수입(천원)	특성화분야 인력양성(명)	특성화분야 기술개발(건)	기술사업화 실적(건)
1차년도 (‘13.2)	2,808	31,135	27,259	54,862	4,942	1,949
2차년도 (‘14.2)	3,561	40,663	30,513	89,417	7,392	3,014
3차년도 (‘15.2)	4,107	48,992	32,330	99,834	8,931	3,906
4차년도 (‘16.2)	4,587	57,463	34,392	115,575	10,478	4,705
5차년도 (‘17.2)	4,939	64,142	35,188	131,802	11,650	5,304

(2)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

동 사업은 2012년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총 5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차년도(‘16년)에는 총 30개 전문대학(산학협력 선도형 10개, 현장실습 집중형 20개)에 195억원(대학 평균 6.5억원)을 지원하였다. 참여대학은 교원인사, 학사관리 등 대학의

교육시스템을 개편하고, 산업체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기업연계 지원 등을 통해 산학협력친화형 대학체질로 개선하였다.

1단계 및 2단계 LINC(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사업을 통해 산학협력 가족회사수를 2차년도('13년) 17,241개에서 5차년도('16년) 23,575개로 지역(기업)과 협력을 장려하고 질적 관리에 노력하였다. 산학협력 중점교수는 4차년도('15년) 358명, 5차년도('16년) 367명으로 전년대비 2.51% 증가하였다. 재임용·승진·승급 등 교수업적 평가시 산학협력 실적 반영 등을 통해 산학간 네트워크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전체 30개 산학협력 선도대학에 현장실습 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산업체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에 기여토록 하였다.

특히,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원을 활발히 추진하여 지역 산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대학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역량강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창업 강좌 운영, 창업동아리·창업기업 지원 등 산학연계 교육과정을 적극 수행하고 있다.

표 2-3-14 2016년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주요성과

구분 년도	산학협력 가족회사 (개)	산학협력 중점교수 (명)	현장실습 참여학생 비율(%)	기술지도 (건)	창업 강좌시수 (시간)	창업 재정지원 (천원)	창업공간 지원(㎡)
1차년도('13.2)	14,751	215	62.9	1,381	1,232	766,450	3,658
2차년도('14.2)	17,241	296	72.6	2,126	1,307	944,000	4,254
3차년도('15.2)	16,991	330	70.6	2,170	1,456	1,059,000	5,095
4차년도('16.2)	20,648	358	80.7	2,368	1,869	1,201,000	5,669
5차년도('17.2)	23,575	367	78.3	2,544	2,126	1,063,000	6,156

LINC 참여대학과 비참여대학간 취업률을 비교해 보면 2015년도 기준 LINC 참여 대학 평균 취업률은 59.1%, 비참여대학 평균 취업률은 55.1%로 참여대학의 취업률이 4%p 높게 나타났다(대학알리미 시스템). 또한 대학 보유 취업지원센터 및 현장실습 지원센터 등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으로 고용 연계 확대를 도모하였다. 특히 현장실습과 캡스톤디자인 및 기술지도 등의 가족회사 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지속적 협력 강화를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사업시작 1차년도와 비교하여 산학협력 가족회사수는 1.6배, 산학협력 중점교수 수는 1.7배 증가하는 등 산학협력 친화형으로 대학의 체질이 개선되었다. 학생 교육측면에서는 현장실습 이수 학생 비율은 1.2배, 창업강좌 시수는 1.7배 증가하는 등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이 높아지고 창업교육의 저변이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중소기업 지원 측면에서도 기술지도 건수는 1.8배 증가하는 등 전문대학의 역할이 중소기업의 기술 지도로까지 확대되는 성과를 보였다.

제2절 일과 학습 병행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1.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

(1) 학교기업 지원사업 추진

학교기업(School-Based Enterprise)은 학생들에게 체계적 현장실습과 창업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교원의 연구 활용 및 개발된 기술 등의 민간부문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과정 또는 특정 전공학과와 연계하여 기업활동(물품의 제조·판매·가공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학교 소속 부서이다. 학교기업 지원사업은 학교기업 운영 지원을 통해 학교기업이 실무적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생산된 재화(제품)와 용역서비스를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육성함으로써 학교기업의 자생적 운영 기틀을 갖추고, 더 나아가 운영 수익금을 교육재정에 재투자하는 선순환적 구조를 구축(자립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 사업은 2003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학교기업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산학협력 활성화의 일환으로 2004년 학교기업 지원사업이 시작되었다. 2004~2009년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되던 학교기업 지원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하여 2010년부터는 5년 단위 사업(중간평가를 통한 계속 지원, 2+3년제 운영)으로 확대하여, 1단계 학교기업 지원사업('10~'14년)을 추진하였다. 1단계 지원사업의 후반부인 2013~2014년은 학교기업을 4개 유형(자립형, 자립화 준비형, 기반구축기형, 현장실습 준비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한 결과 5개 학교기업이 자립하였다. 또한, 학교기업의 매출액이 평균 229억원에서 302억원으로 증가하였고, 현장실습 참여학생 수는 22,176명에서 31,641명으로 크게 늘어나는 등 학교기업의 지속적인 운영과 자립화의 기반이 마련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표 2-3-15 학교기업 지원사업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개)

연도		2013	2014	2015	2016
예산액		12,250	11,045	10,493	9,968
학교기업수	대 학	18	15	24	23
	전문대 학	18	15	23	23
	고 등 학 교	16	16	14	14
	계	52	46	61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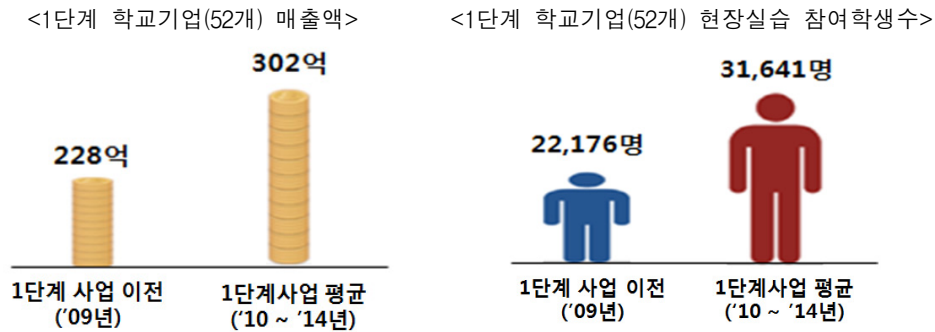
2015년에는 2단계사업('15~'19년)으로 학교급, 성장 정도 등 학교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규·성장·자립형으로 총 61개 학교기업을 선정하여 2년간 205억원을 지원하였다. 유형 및 학교급, 선정 및 연차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차등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였다. 2단계 지원사업의 전반부인 2015~2016년에는 학교기업의 운영성과를 위해 수요조사를 통한 개별 학교기업에 직무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지원과 우수사례 공모 및 국회 포럼 개최, 산학협력 EXPO 참여를 통해 우수성과 확산을 추진하였다. 산학연협력을 위해서는 학교기업 연구개발 성과의 상용화 활용, 창업교육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대학 내 창업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2단계 지원사업의 후반부('17~'19년) 지원을 위해 2017년 3월 중간 평가를 실시하여 하위 30% 지원 중단 및 자립형 학교기업의 자립화를 추진하였고, 4월 현재 현장실습 중점형(5개)과 창업실습 중점형(8개)으로 신규 학교기업 선정 평가를 진행 중이다.

2단계 지원사업의 후반부인 2017~2019년에는 학교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학내 다양한 창업 지원, 산업수요 맞춤형 현장실습 등의 발전에 집중할 계획이다. 창업실습형 학교기업 육성과 학년·단계별 맞춤형 창업실습, 대학창업펀드 연계 등 대학 내 다양한 창업을 지원하고, 기업경영 실습과 산업체와 연계협력 체계를 통한 산업 수요 맞춤형 현장실습 등 학교기업의 특성에 맞는 현장실습으로 내실화하여 학교기업을 통한 대학의 취업·창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동 사업은 학교급별 체계적인 현장실습운영과 학교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한 창업교육·실습 및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통해 학교기업의 교육역량을 강화하였다. 또한, 학교기업 수요 맞춤형 컨설팅과 세부 심화 직무교육을 하며 기업 운영역량을 높였다. 학교기업의 단계별 발전(신규-성장-자립)뿐 아니라 학교기업이 산업 수요를 반영한

실무적합형 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기술사업화, 지역산업체와의 연계협력 등의 산학연협력 활성화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림 2-3-1 학교기업 지원사업 1단계('10~'14) 사업 성과



(2) 지역혁신창의인력 양성사업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은 R&D연계형 석·박사양성 사업으로 지방대학의 교수 연구실(Lab 단위)과 지역소재 기업(연구실)이 사업단을 구성하여 기업이 필요한 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4년제 대학의 이공계학과이며 150여 과제에 대하여 과제당 매년 150백만원에서 250백만원 내외의 연구비를 3년간 지원하고 있다. 사업비는 석·박사생의 인건비가 30~60%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연구장비·재료비 및 연구활동비에 사용된다.

사업의 구체적인 성과로는 첫째, 석·박사 연구인력 양성 및 일자리를 창출한 점이다. 연평균 155건의 연구과제 수행으로 849명의 석·박사 인력을 양성하였고, 그중에 총 320명이 취업하였으며, 180명(56%)이 지역 내 기업으로 취업하여 지역 인재의 정주율 제고에 기여하였다. 둘째, 학술활동 및 기술개발 성과이다. 연평균 SCI급 논문 277건과 120건의 특허 등록이 이루어졌다. 셋째, 기술 이전을 통한 기업지원이다. 대학은 연평균 기술이전 98건과 기술료 593백만원의 수익을 얻었고 기업은 37건의 사업화를 통하여 2,584백만원의 매출을 창출하였다.

이렇듯 석·박사생의 학업을 위한 경비 지원을 통해 지역의 우수 인재가 지방대학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고 지역의 중소기업은 부족한 연구 인력을 확보하여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연구소 운영 여건이 좋지 않은 지방의 중소기업은 소액의 대응투자(정부출연금의 5%)로 대학의 연구역량을 활용하여 애로 기술을 해결한 점도 큰 성과로 나타났다.

표 2-3-16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연구인력양성 현황

(단위 : 명, %)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석박사	810	858	686	1,003
취업자수	236	280	350	329
지역내 취업자수 (지역내 취업률)	120 (50.8)	151 (53.9)	200 (57.1)	188 (57.1)

표 2-3-17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주요성과

(단위 : 개, 백만원)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SCI 논문수	271	274	257	300
특허출원수 (등록건수)	68 (289)	282 (140)	291 (143)	304 (77)
기술이전수 (기술료)	4 (25)	73 (383)	88 (333)	133 (1,063)
사업화수 (매출액)	-	19 (1,843)	25 (4,767)	68 (1,143)

아울러, 성과 우수사례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산학협력 EXPO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지역희망박람회 전시하여 다른 대학 및 기업 등에서 벤치마칭 하도록 홍보하였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형성됨으로서 2015년도 사업에 참여한 교수, 학생, 기업 등 사업수요자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 86% 이상 만족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었다.

표 2-3-18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연도별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개)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예산	276	276	262	169
과제 수 (신규 / 계속)	165 (42 / 123)	156 (51 / 105)	143 (54 / 89)	99 (0 / 99)

제3절 100세 시대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

1.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1)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인생 100세 시대에 대비하여 지역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전 생애에 걸친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의 행복 증진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국가-시·도-시·군·구-읍·면·동으로 이어지는 국가 평생교육 추진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를 반영한 생활 맞춤형 평생학습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세부사업은 시·도의 평생교육진흥원 설치·운영을 지원하는 ‘시·도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사업’, 시·도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정보를 수집·제공하여 주민의 평생학습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구축 사업’이 있다. 시·군·구 단위의 평생 교육 서비스를 통해 지역 단위 학습공동체 형성 및 일자리 확대를 지원하는 ‘평생학습 도시 조성 사업’,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과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한 근거리 학습 접근성 제고를 위한 ‘행복학습센터 운영 사업’ 등 총 4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5년 사업을 통해 전체 17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운영을 지원하였다. 3개 시·도가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을 새롭게 구축함으로써 17개 시·도 전체의 온라인 평생교육기반이 마련되었다. 7개의 신규 평생학습도시를 선정·지원하여 총 136개의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하였다. 평생학습도시 지정 이후 지역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지원 해주는 기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사업은 13개 시·군·구를 지원하였다. 또한 평생교육 추진 기반 및 관심이 미약한 곳이나 시·군·구의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평생학습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일반도시 특성화 지원사업은 총 14개의 시·군·구를 선정·운영하였다.

2016년 17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운영을 지원하였고, 17개 시·도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지원을 통해 온라인 평생교육기반 구축 토대를 마련하였다. 7개의 신규

평생학습도시를 선정·지원하여 총 143개의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하였으며 평생학습도시 지정 이후 지역 특화사업을 발굴·지원해주는 기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사업은 22개 시·군·구를 지원하였다. 또한 평생교육 추진 기반 및 관심이 저조한 시·군·구의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평생학습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일반도시 특성화 지원사업은 6개의 시·군·구를 선정·운영하여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도시, 행복학습센터 지속 확산을 통해 ‘시·도-시·군·구-읍·면·동’으로 이어지는 평생교육 운영기반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지역 평생학습 추진 체제 구축이 공고화됨에 따라 평생학습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지역 평생교육 정책 시행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표 2-3-19 지역 평생교육 추진체제 구축현황

(단위 : 개(누계))

사업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10	14	15	17
신규 평생학습도시 조성	118	129	136	143
행복학습센터 운영	-	60	92	92
다도아 평생교육정보망 구축	11	14	17	17

주민의 평생교육 요구를 가장 근거리에서 제공하고자 운영되고 있는 행복학습센터 운영사업은 92개의 시·군·구 거점센터를 선정하고 지원하였다.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마을 회관, 경로당 등 다양한 공공·유흥시설을 활용하는 형태로 670개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행복학습센터에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학습 수요를 조사하고 학습상담 및 학습지원 등의 역할을 하는 행복학습 매니저 1,091명을 배치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였다.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도시, 행복학습센터 지속 확산을 통해 ‘시·도-시·군·구-읍·면·동’으로 이어지는 평생교육 운영기반이 조성되었고 이러한 지역 평생학습 추진 체제가 구축됨에 따라 평생학습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지역 평생교육 정책의 시너지를 창출하였다.

2016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결과 다양한 기관에서 진행하는 근거리 생활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확대 등으로 학습참여자 수가 전년도 보다 51,673명 증가하였고, 만족도도 90점으로 향상되었다. 학습자들이 교육과정 이수 후 교육결과를

활용하여 소득창출로 연계되는 학습형 일자리 창출 및 재능기부 활동인원은 2015년 5,424명, 2016년 11,815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17% 증가되어 본 사업이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성과를 가져오고 있다.

2016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결과 다양한 기관에서 진행하는 근거리 생활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확대 등으로 학습참여자 수가 전년도 보다 51,673명 증가하였다. 만족도도 90점으로 향상되었다. 학습자들이 교육과정 이수 후 교육결과를 활용하여 소득창출로 연계되는 학습형 일자리 창출 및 재능기부 활동인원은 2015년 5,424명, 2016년 11,815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17% 증가되어 지역사회에 호응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3-20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성과 조사 결과

연도	프로그램(개)	학습자(명)	만족도(점)	사회참여자(명)		
				일자리	재능기부	합계
2013년	1,041	83,872	87	3,322	12,908	16,150
2014년	1,371	70,985	88	924	10,014	10,938
2015년	2,317	129,366	89	1,356	4,068	5,424
2016년	4,856	181,039	90	1,820	9,995	11,815

(2)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 사업은 2008년에 도입되어 성인 전담 학과 개설, 성인에게 적합한 현장실무중심 교육과정 개발, 학습자 접근성 및 프로그램 수월성이 확보된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초기에는 대학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중심이었으나, 2012년부터는 성인 학습자의 교육 수요 유형과 지역 특색을 고려하여 성인학습자들이 본격적인 학위과정 입학에 위한 지원에 초점을 두었다.

2013년부터는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5배 이상 증액되어 4050 세대 성인학습자들의 취업·창업 역량증진을 위한 비학위과정이 새로 개설되었다.

2014년에는 운영 모델을 다양화하여 재직자 등 성인학습자의 계속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창업 맞춤 특화프로그램 등 단기 집중 전문교육을 통해 중장년층의

직업교육을 지원하는 등 사회·경제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후진학 지원체제 구축 및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였다. 2015년부터는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유사사업인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학위, 비학위과정), 전문·희소분야 대표대학 운영 및 재직자특별전형 운영대학 지원사업을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사업으로 통합 운영하여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와 대학의 성인 친화형 체제 개편을 가속화하였다.

한편, 대학은 여전히 학령기 학생 위주의 교육체제를 운영하고 있어 성인의 다양한 고등교육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2016년에 성인학습자만을 전담하는 단과대학을 대학 내에 신설하는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 사업을 발표하고 전국 권역별 9개 대학을 선정하여 총 250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2-3-21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 사업 추진 경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구조	지원대학	예산액
2010년	평생학습중심대학, 평생교육원활성화	20개교	2,500
2011년	대학전체체제개편, 평생교육원체제개편	24개교	4,040
2012년	선취업후진학, 4050제도약형	25개교	5,508
2013년	학위과정, 비학위전문가과정	47개교(비학위 13개교)	27,508
2014년	학위과정, 비학위전문가과정	45개교(비학위 10개교)	10,233
2015년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47개교(비학위 17개교)	10,733
2016년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37개교(비학위 15개교)	13,133

표 2-3-22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 전환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내용	지원대학	예산액
201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위과정(학령기 학생→평생학습자 정원)으로 전환 평생학습자 대상 전담조직 신설 또는 전환 	9개교	25,000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사업의 비학위 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성인학습자들이 100세 시대 인생 재도약·재설계를 할 수 있도록 후진학 및 평생경력개발을 하고, 대학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고용 연계가 가능한 과정을 운영하여 고용 창출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학위과정 지원 및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성인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학사과정 운영하고 있다. 평생 학습자 전형도입과 학비 부담 완화 및 전담 조직 구성 등 후진학자들이 직면하는 일과 학업 병행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하였다.

표 2-3-23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 사업 성과

(단위 : 개, 명,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예산	27,508	10,233	10,733	13,133
대학 수	47교(비 학위 13교)	45교(비 학위 10교)	47교(비 학위 17교)	37교(비 학위 15교)
학과 개편 수	139	164	153	102
학위과정 학습자	3,209	2,762	2,405	1,679
비학위프로그램 수	64	10	52	67

표 2-3-24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 사업 성과

(단위 : 개, 명)

구 분	참여대학	정원이동	학과 개편	전담교원	전담직원
2016년	9교 (전담조직 구성 완료)	406	42	142	146

2. 인문학 진흥 강화

(1) 인문학 대중화(전국화)

인문학 대중화의 세부사업으로는 시민인문강좌, 인문주간, 석학인문강좌, 세계인문학 포럼, 인문도시, 한·중인문학포럼 등이 추진되고 있다. 먼저, 시민인문강좌사업('06)은 인문학계와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10년 간 전국 각지에서 일반시민, 학생, 소외계층(노숙자, 교도소 재소자 등)을 대상으로 각종 인문학 단체 주관의 다양한 인문강좌를 개설하였다.

인문주간('06)은 매년 10월의 마지막 주를 인문강조주간으로 설정하고, 학술지원 사업의 다양한 성과를 인문학 관련 강연, 토론, 공연, 전시 및 각종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기획하여 전 국민이 인문학을 즐기고 체험하게 함으로써 인문학적 효용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석학인문강좌사업('07)은 학문적 성과를 인정 받은 인문학 분야의 석학을 초청하여 수준 높은 인문학 강의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열린 강연'으로 운영되고 있다. 매주 토요일 동일 장소에서 개최되어 인문학에 관심이 높은 중장년·노년층의 고정 청중을 확보하고 있다. 세계인문학포럼('11)은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제1회 세계인문학 포럼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한 이후 2016년까지 총 4회의 포럼을 개최하여 대규모 국제학술행사로서 세계 석학의 담론의 장이자 세계-한국 인문학계간의 지속적인 교류·협력 장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인문도시사업('12)은 대학지자체가 연계·협력하여 지역 인문 공동체를 구축하고, 지역의 인문·역사·문화 자산을 발굴·활용하여 도시전체에 인문체험의 장이 형성되도록 하였다. 2012년 2개의 인문도시를 시작으로 그 규모를 점차 확대하여 2016년 31개의 인문도시를 지역인문거점으로 육성·지원하고 있다. 한·중 인문학포럼('15)은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13.6.27)을 통한 정상회담 교육분야 후속조치로 2014년 '중국학자 초청 인문학 포럼'이 시범적으로 개최된 이후 2015년부터 상호 번갈아가며 정례 개최됨에 따라 중국과 인문유대 강화 및 네트워크 협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 2013~2016년도 인문학대중화사업 세부 사업별 지원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3-25 연도별 인문학대중화 세부사업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석학인문강좌	684	800	800	800	2,284
시민인문강좌	1,500	1,200	700	100	3,400
인문도시	-	1,500	2,500	3,100	4,000
인문주간 등	716	1,642	1,600	1,300	7,216
합계	2,900	6,000	6,700	5,300	15,600

인문학 대중화사업에 해마다 참여하는 일반국민 참여자수는 연평균 약 18만명에 이르고 있다. 석학인문강좌는 탄탄한 기획력과 강연 구성이 뒷받침되어 연간 고정 청중만 약 530명에 이르며, 최근 4년 간 총 67,088명(연평균 16,772명)이 참여하였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으로 수강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석학강좌 동영상을 제작하고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석학강연 자료를 집대성하여 석학총서로 강연지식을 습득·공유할 수 있도록 제작·보급하고 있다.

지역 인문학 활성화를 위한 인문도시의 전국화('13년 5개 → '14년 17개 → '15년 25개 → '16년 31개)를 추진한 결과, 전국에서 시민이 동참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인문도시 프로그램(강연, 공연 등)이 연평균 280개 이상 운영되고 있고, 참여하는 일반 시민 수 역시 2014년 13,300명에서 2015년 47,118명, 2016년 57,000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문주간에는 인문도시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다채롭고 풍부한 콘텐츠의 인문학 행사가 개최되어 2016년에 전국적으로 95,935명이 참여했다.

세계인문학포럼은 세계적 석학들의 초청 강연 및 심층토론을 통해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인문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한국 인문학의 세계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한·중 인문학포럼의 개최로 한·중 양국 학계의 관심과 확산을 거쳐 한국의 인문학 분야 교류가 활발해졌을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중국의 인문학에 대해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 밖에도 해마다 인문사회 분야 우수성과 교류회를 개최하여 연구 성과 사례 발표, 각종 성과물 전시, 사업분야별 새로운 연구의 시도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급속히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인문학 진흥을 위한 성과 교류 및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2013~2016년도 인문학 대중화 사업 일반시민 참여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3-26 연도별 인문사회분야 성과확산을 위한 일반시민 참여자 수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석학인문강좌	14,715	21,188	14,096	17,089	67,088
시민인문강좌	49,114	76,169	39,169	35,000	199,452
인문도시	-	13,300	47,118	57,000	117,418
인문주간 등	66,237	67,491	82,028	95,935	311,691
합계	130,066	178,148	182,411	205,024	695,649

제4장 지역 문화 육성, 생태 복원

제1절 지역 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 발전 지원

1. 지역문화체계 특화지역 조성

(1)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

1)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은 지역의 특화된 문화자원을 창조적으로 발굴, 활용하여 지역의 대표브랜드로 육성하고 국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동 사업은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한 상향식 지역문화정책으로서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문화도시·문화마을 자체가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은 지특회계로 2014년부터 새로이 추진한 사업으로 문화도시 조성의 경우 매년 3억원씩 5년간, 문화마을의 경우 매년 0.8억원씩 3년간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4년 남원 문화도시 조성, 공주(상신마을) 및 부여(규암마을) 문화마을 조성 등 문화도시 1개소, 문화마을 2개소를 시작으로 2016년도에는 문화도시 17개소, 문화마을 29개소를 지원하였으며 매년 지원개소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표 2-4-1 2016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지원 현황

구분	지자체명		지원규모(개)		국비지원액 (백만원)	비고
	광역	기초	문화도시	문화마을		
1	부산	수영구	-	1	80	계속
2		해운대구	-	1	80	
3	대구	본청	1	-	300	계속
4		중구	-	1	80	계속
5		달성군	-	1	80	

구분	지자체명		지원규모(개)		국비지원액 (백만원)	비고
	광역시	기초	문화도시	문화마을		
6	인천	부평구	1	-	300	
7	울산	본청	-	1	80	
8	경기	성남시	-	1	80	계속
9		양평군	-	1	80	계속
10		수원시	-	2	240	
11		파주시	-	1	80	
12		부천시	1	-	100	
13		가평군	1	-	200	
14	강원	원주시	1	-	300	
15		강릉시	-	1	200	
16		평창군	-	1	200	
17	충북	청주시	1	-	300	
18		영동군	-	1	80	
19	충남	공주시	-	1	40	계속
20		부여군	-	1	60	계속
21		천안시	1	-	300	계속
22		당진시	-	1	80	계속
23		홍성군	-	1	380	계속
24		예산군	-	1	80	계속
25		서산시	1	-	300	
26	전북	군산시	1	-	120	계속
27		남원시	1	-	300	계속
28		진안군	-	1	80	
29	전남	여수시	1	1	380	계속
30		나주시	1	-	300	
31		담양군	1	-	300	
32	경북	구미시	1	-	300	계속
33		포항시	1	-	300	
34		영천시	-	1	80	
35		문경시	-	1	80	
36		영양군	-	1	80	
37		고령군	-	1	80	
38		성주군	-	1	80	
39	경남	양산시	-	1	80	계속
40		하동군	-	1	80	
41	제주	서귀포	1	-	300	계속
42		제주시	1	1	380	
43	세종	세종	-	1	80	계속
합 계			17	29	7,500	

2. 지역 고유자원의 재발견 및 재창조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1) 지방문화산업 기반 조성

1) 지역 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

지역 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사업은 전국 14개 지방 문화산업지원기관(또는 문화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해당지역 산·학·연으로 이루어진 구성체가 연구개발(R&D)을 통하여 지역문화에 기반한 특화상품을 기획·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문화에 기반한 특화상품은 문화상품 시장 형성을 가능하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오며, 기업체·대학·연구소 간 협력체계 구축과 대학의 인력과 지역 문화산업 핵심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 문화산업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한다.

2005년부터 연구개발 과제 지원을 시작하여, 2015년까지 총 83개 과제를 지원하였으며, 2016년에는 인천, 전남, 제주 등 총 3개 지역 과제를 지원하였다. 과제당 지원규모는 3억원 이내(총사업비의 50% 이내)이며, 2016년 국비 지원규모는 9.85억원이다.

2) 대구 디자인패션산업 육성지원

대구 디자인패션산업 육성지원 사업은 대구지역의 특화된 섬유패션업계에 고부가가치 디자인 경쟁력 향상과 패션문화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패션문화 콘텐츠 확산과 지역 브랜드 경쟁력 강화 및 매출 상승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2016년에는 ‘글로벌 패션디자인 개발’ 패션업체 5개사, 소재업체 4개사를 선정하여 디자인 및 상품개발을 지원하여 글로벌 브랜드 육성을 위한 컨설팅 및 마케팅을 추진하여 텍스타일 디자인 167점, 소재/완제품 206점을 개발하였다. 총 87건의 디자인 등록 완료와 업체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문 박람회 등 마케팅 지원을 통해 170만 달러의 해외 수주액을 달성하였다. 특히 ‘수우, Designed By Jaewoo Kim, D’ moment ‘ 3개 브랜드가 중국 상해에 위치한 글로벌 편집샵 X-Showroom 매장에 입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함께 신진 디자이너의 글로벌 브랜드 성장을 위한 ‘Pre-글로벌 패션브랜드 육성’ 사업을 통해 10명 디자이너를 선정, 지원하여 110점의 전략상품 개발을 완료

하여 브랜드 역량 및 인지도를 강화시켰다.

패션 신생기업 지원을 위한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창작 스튜디오’를 운영하여 입주 디자이너 18명의 디자인 개발 및 마케팅 지원, 789점 시제품을 제작하였다. 입주 디자이너 중 ‘소잉바운더리스’의 하동호는 서울패션위크 및 런던컬렉션 맨즈 등의 전시참가와 온/오프라인 유통을 통해 2016년 매출액이 약 5억원으로 전년대비 8.4%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패션창업인큐베이터’를 개최해 패션 및 텍스타일 제품 12개팀의 창업을 추진하였고, 패션체험 프로그램인 ‘패션문화캠프’를 개최해 패션관련 직업군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에게 직업에 대한 가치관 형성 및 진로 체험기회를 제공하였다.

패션의 영역을 라이프스타일 분야로 확대하여 D.GROUND라는 명칭으로 섬유패션 도시 대구를 대표할 수 있는 분야별 TOP 브랜드 배출을 위해 여성의류, 홈침장류의 2개 분야 9개 업체를 브랜딩하여 집중 육성하였다. D.GROUND 브랜드는 국내외 전문 전시회 참가를 통해 계약액 80만 달러를 달성하였다.

이러한 지원사업을 통해 섬유산업도시의 인프라를 갖춘 대구의 강점을 살려 젊고 창의적인 패션 브랜드의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K-패션을 대표하는 지속 가능한 패션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3)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 건립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는 대구출판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구출판산업단지 활성화 및 지방출판산업의 주요 거점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는 대구 달서구 출판산업단지 내에 위치하며 부지 6,040㎡, 건축연면적 8,600㎡로서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2016년 9월에 건립되었다.

동 센터는 2012년부터 추진하여 2016년 9월에 완공되었으며 국비 88억원, 지방비 137.1억원(용지비 49.1억원 포함) 등 총 225.1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 주요 시설로는 대구 출판산업단지의 업무 지원시설과, 기업입주시설, 생산지원시설로 구분되며, 세부적으로는 창작 레지던스, 전문 창작자 커뮤니티룸, 공동장비센터, 공동물류창고, 교육실, 지식정보지원실, 전자출판공동 제작공간, 회의실, 비즈니스 상담실 등이다.

대구는 센터 용지비 49.1억원을 확보, 2013년 말에 용지 구입을 완료하였으며, 2013

년에 건축설계를 공모하여 2014년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다.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가 국고 45억원을 지원하고 대구시는 자체예산 45억원을 확보하여 2014년 12월에 센터 건설 시공업체를 선정 발주하였다. 2014년 12월부터 2016년까지 센터를 건립하고 대구출판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출판제작을 지원할 공동장비 구입 등을 구입하였다.

표 2-4-2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 주요시설

구 분	시 설 배 치
생산지원시설	공동장비센터, 공동물류창고, 교육실(컴퓨터실, 강의실), POD센터, 지식정보지원실, 전자출판공동제작공간 및 아카데미
기업입주시설	출판콘텐츠업체 사무실, 1인 창조기업 공동사무실, 창작 레지던스, 전문창작자 커뮤니티 룸, 휴게실
업무지원시설	센터 사무실, 유관기관 사무실, 소회의실, 대회의실, 비즈니스 상담실
기 타 시 설	은행, 편의점,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가 건립되는 대구출판산업단지는 영남권 출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되는 일반산업단지로 총면적은 245,413㎡(74천평)으로 1,248억원의 예산으로 조성되고 있다. 출판업, 인쇄업, 영상·정보서비스업이 주요 입주업종이며,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는 2010년에 대구출판산업단지 계획을 승인, 고시하였으며, 2012년 12월에 단지 기반조성공사를 완료하였다. 2014년 6월에 93개 산업시설 필지를 93개 업체에 분양을 완료하였고 2016년 5월 현재 94개사가 입주완료하였다. 대구출판산업단지 조성과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 건립으로 취약한 지방 출판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대구지역의 구미공단과 연계하여 전자출판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구시는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영남권 지역출판산업 발전과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4) 지역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지역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사업은 영상문화 향유권 제고 및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하여 2005년부터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설립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2016년까

지 23개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총 국고지원액은 195억원에 이른다.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지역 미디어에 대한 이해, 미디어 활용 능력 제고와 영상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창작 지원사업, 영상물 상영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표 2-4-3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전국 설립 현황

구분	'05 년	'06 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 년	'14 년	'15 년	'16년				
지역	경남 김해	제주	대구	인천 남구	충남 천안	충북 제천	경북 안동	강원 원주	전북 익산	경기 부천	강원 강릉	경기 고양	전남 순천	경기 성남	경기 수원	인천 강화	광주 동구	경남 합천	경기 화성
개관	'05.11	'06.7	'07.4	'07.9	'08.9	'08.11	'08.12	'09.4	'09.7	'10.2	'10.4	'11.4	'11.11	'12.12	'14.3	'15.2	'16.4	'16.11	'16.12

5) 국제영화제 지원

국제영화제 지원사업은 국제경쟁력 있는 국제영화제의 육성을 통해 우리나라 영화 문화 및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1998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며, 2016년에는 부산국제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DMZ국제다큐영화제,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등 총 6개의 국제영화제를 지원하였다. 이들 6개 영화제는 부분 경쟁을 도입한 비경쟁 영화제로 각기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 부산, 전주, 부천, DMZ 그리고 제천 영화제는 지역영상산업의 성장을 고려한 지자체 주최 행사이다.

표 2-4-4 2016년 국제영화제 지원현황

영 화 제 명	개최내역		사업추진		예산(억원)			
	기간	장소	상영편수	참가인원	계	영발 기금	지방비	기타
부산국제	2016.10.6.~10.15.	부산	69국 299편	165,149	108.0	9.5	61.0	0.3
전주국제	2016.4.28.~5.7.	전주	45국 211편	71,093	43.8	5.1	26.0	0.2
서울국제여성	2016.6.2.~6.8.	서울	27국 118편	21,522	13.60	3.1	4.2	0.4
부천국제판타스틱	2016.7.21.~7.31.	부천	49국 320편	70,911	49.9	5.4	34.0	0.1
제천국제음악	2016.8.11.~8.16.	제천	36국 105편	27,769	21.9	3.1	14.3	0.1
DMZ국제다큐	2016.9.22.~9.29.	파주, 고양	36국 116편	18,909	16.6	0.9	12.6	0.1
계			1,169편	375,353	253.8	27.1	152.1	1.2

(2)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 재생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은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로 인해 폐기 또는 방치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유휴공간을 문화예술 창작 및 체험 등을 위한 문화예술 융복합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공동체 구성원과 함께 노후 산업단지 및 폐 산업시설에 새로운 활력과 활기를 불어넣어 지역발전 및 사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4년 12개 사업(콘텐츠 지원 2개 사업 포함)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대구, 경기 등 6개 사업지에 215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지자체 및 지역주민, 각 산업단지, 예술단체, 관광산업 등 분야별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 연계와 협업을 유도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였으며, 장소 가치를 기반으로 삶의 현장에서 재창조되는 새로운 문화지대 안에서 직접 문화를 실현하고 함께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문화융성의 핵심가치를 인식하고 그 효과를 발현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표 2-4-5 2016년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지 역	사 업 명	사업비(국비)
	계	(6개 사업)	21,504(10,972)
폐산업 시설 (6개소)	대구	대구 문화체험교육공간 조성	3,000 (1,500)
	경기(본청, 수원)	청년문화공간 조성	6,000(3,000)
		수원 eco_newseum 고색	2,000(1,000)
	전북(전주, 완주)	전주 팔복문화예술공장 조성	5,000(2,500)
		완주 로컬디자인: art & craft	3,300(1,650)
	전남 담양	문화를 빛다 “해동술공장”	2,204(1,322)

제2절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

1. 생활문화 및 공동체 지원

(1)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2009년부터 시행된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문화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의 역사·사회적 현상과 문제에 대한 문화예술적 접근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문화예술 창작 활동의 주체가 되어 개인의 삶을 풍부히 하고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여 지역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다. 동 사업은 국민들의 문화향수권을 신장시키고 지역의 주체적 문화역량 및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하였다. 기초생활권 내 임대아파트 단지, 서민 단독주택 밀집지역, 농산어촌 등 문화적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171개 지역을 선발하여 지원하였다. 2016년에는 27개 지역을 선발, 11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총 4만여 명의 주민들이 본 사업을 통해 다양한 공동체 문화 활동에 참여하였다.

(2) 체육진흥 인프라 확충

1) 체육진흥시설 지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쾌적한 체육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녹지공간 속에 각종 생활체육시설을 집중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6년에는 26개소에 14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에는 30개소에 18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인건강체육시설 조성사업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노인들의 건강 및 여가선용을 위해 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 휴게공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에는 11개소에 4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에는 9개소에 19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체육시설 지원사업은 지방체육 진흥 및 국내외 경기대회 개최 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운동장, 체육관, 종목별 체육시설 등 각종 체육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에는 172개소에 858억원을 지

원하였으며, 2017년에는 123개소에 85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운동장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은 초·중·고등학교 및 지자체가 보유한 운동장에 인조 잔디·천연잔디·마사토 구장 및 우레탄 트랙, 야간 조명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에 77개소 25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에는 83개소 246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레저스포츠시설 지원사업은 서바이벌 게임장, 래프팅장 등 레저스포츠 활동을 즐기기 위해 필요한 시설의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 4개소 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 전국체전시설 건립 지원

전국체전시설 건립 사업은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시·도의 미 보유 시설 및 규격 미달 경기장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에는 27개소(충남 22개소, 충북 3개소, 전북 2개소)에 26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에는 24개소(충북 1개소, 전북 21개소, 서울 2개소)에 22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3)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지원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10년 이상 경과된 생활·전문체육시설의 개·보수, 체육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한 영향을 끼치는 시설의 긴급한 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109개소 29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에는 133개소 27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3) 지역문화컨설팅 지원

2005년부터 시행된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은 지역의 문화재단·대학과 문화예술전문가(단체)가 참여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정책 현안에 대한 종합 컨설팅을 통해 그 결과가 실질적인 지역문화 정책 수립에 활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다. 동 사업

은 2005년 ~ 2016년까지 총 179개 과제 51억을 지원하였다. 매년 지자체 공모를 통해 컨설팅 과제를 선정하며 지특회계로 과제당 3천만원 내외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정률 50%)하고 있다.

2.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1)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1)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사업은 선진국 수준의 공공도서관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18년까지 1,100개의 공공도서관을 확충하여 인구 4.5만명당 1관 수준을 목표로 삼고 있다. 2016년 공공도서관 건립에 507억원 지원한 것을 포함하여 지난 1991년부터 2016년까지 총 941개관에 총 6,181억원을 지원하였다.

특히 행정구역상 읍면지역에 건립하는 도서관의 건립비에 대해서는 80%, 최대 16억원까지 특별 지원(일반 공공도서관은 40%)하여 지역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 소외지역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도서관 건립의 내실을 기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도서관 건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규 건립 예정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설계·시공·운영 전반에 관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문 인력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하여 지자체 담당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사업은 1996년부터 문화기반시설 확충계획에 따라 지원하기 시작하였는데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존,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6년까지 총 153개관, 2,549억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에도 120억원을 투입하여

부산박물관 전시관 리모델링 등 10개(계속 8개, 신규 2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3) 공립미술관 건립 지원

공립미술관 건립 지원사업은 미술인구의 저변 확대와 미술에 대한 감상기회 확대를 통한 국민들의 문화 향수권 신장 및 미술문화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1999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지원으로 2016년까지 총 107개관, 1,127억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에는 3개관 6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4) 문예회관 건립 지원

문화예술회관 건립지원 사업은 1997년 이후 지역 간 균형 있는 문화공간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 향수권 신장을 도모하고자 1지자체당 1개관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노후화된 문화예술회관이 늘어남에 따라 개·보수도 2005년부터 지원하고 있다(건립 및 개보수 1관당 20억원 이내 지원). 2016년에 22개관 160억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에는 15개관에 11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5)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사업은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낙후된 지방문화원의 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하는 사업으로 1989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최근 2014년도에는 5개 시·도 8개 문화원(계속 2개, 신규 6개), 2015년도에는 7개 시·도 9개 문화원(계속 6개, 신규 3개), 2016년도에는 8개 시·도 14개 문화원(계속 6개, 신규 8개)을 지원하였다.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문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문화원이 지역주민 문화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설 건립지원이 필요하며 2017년도에는 5개 시·도 9개 문화원(계속 7개, 신규 2개)을 지원할 계획이다.

(2)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지원 사업은 전국 17개 시·도 및 231개 시·군·구에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참여 동기 부여 및 체계적인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으로 2014년, 2015년에는 2,480명의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30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에도 2,600명을 배치하여 321억원을 지원하였다.

(3) 종합형 스포츠클럽 육성

종합형 스포츠클럽 육성사업은 폐쇄적인 동호인 클럽의 구조 개선과 체육 시설·프로그램·지도자 연계를 통한 생활체육의 효율성 및 공공체육시설 활용도 제고를 위해 2013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동 사업으로 2015년까지 공모를 통해 37개 종합형 스포츠클럽을 육성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스포츠클럽을 통한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 등을 목적으로 거점 종합형 스포츠클럽 육성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였다. 또한 종합형 스포츠클럽은 학교-생활-전문체육 간의 연계 강화, 은퇴 선수 및 지도자 일자리 창출 등 안정적인 생활체육 선순환 생태계 마련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표 2-4-6 종합형 스포츠클럽 공모요건

구 분		거점형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세 부 기 준	지역인구	광역단위	20만 이상 시군구 지역	20만 미만 시군구 지역
	회 원 수	600명 이상	600명 이상	400명 이상
	종 목 수	엘리트 체육 3 종목, 생활체육 3종목	5종목	3종목
	시 설	엘리트운영종목 당 1개이상 사용가능 시설 확보	규모있는 복합체육시설 보유	일반적인 체육시설 보유
지원예산		8억원	3억원	2억원

그림 2-4-1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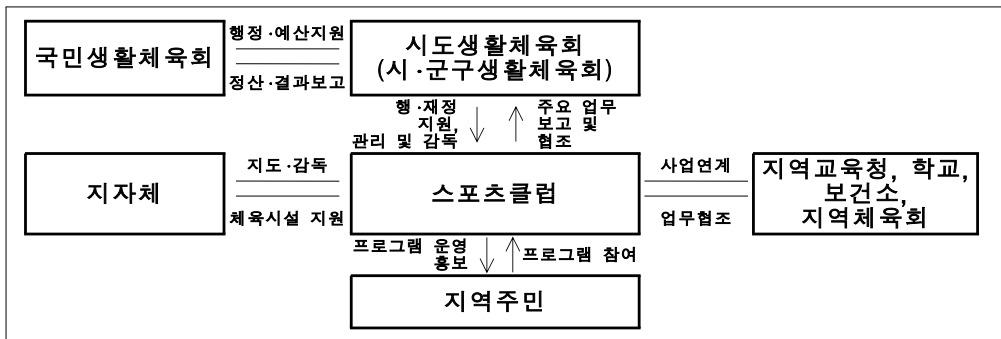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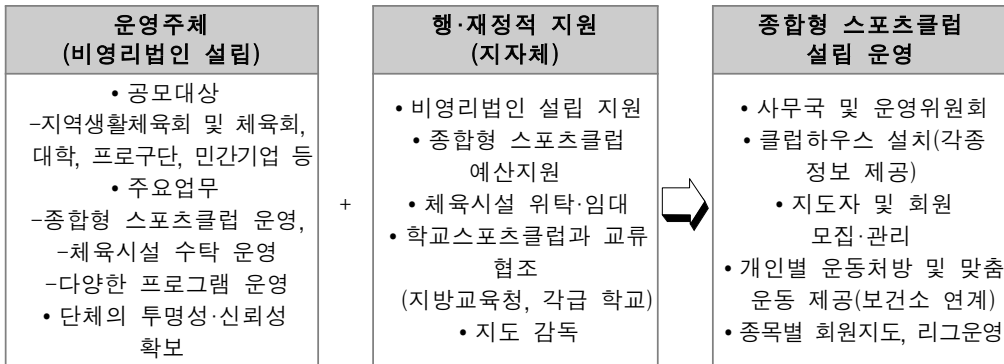


표 2-4-7 클럽운영과정



(4) 생활체육 광장 조성

생활체육 광장조성사업은 1993년부터 아침 또는 저녁 시간대 지역주민 생활체육 모임 현장에 전문 지도자를 배치하여 마을단위 생활체육 참여환경 제공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림2-4-2 사업추진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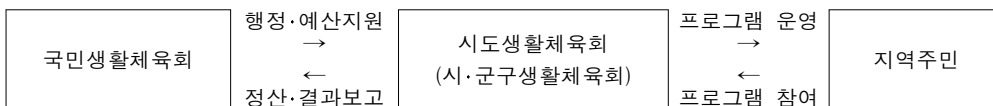


표 2-4-8 생활체육 광장 운영장소 : 전국 434개소

지역	개소	지역	개소	지역	개소
서울	35	울산	14	전북	31
부산	32	세종	2	전남	36
대구	35	경기	30	경북	30
인천	20	강원	30	경남	37
광주	21	충북	25	제주	10
대전	22	충남	24	계	434

* 행정구역 시·군·구 단위에 1개소 이상 운영

표 2-4-9 생활체육 광장 연도별 실적

구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개소	256	381	404	402	500	500	500	500	500	500	500
횟수	95,285	146,737	162,009	148,412	149,012	145,148	140,016	142,816	137,074	140,892	142,672
인원	3,848,978	6,163,892	6,614,786	5,629,935	7,008,138	5,500,018	6,024,524	5,370,996	4,703,464	4,943,438	5,029,846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개소	500	500	520	520	520	518	434	434	434	434	434
횟수	157,322	166,180	88,609	86,363	74,924	56,644	60,981	60,971	59,774	59,020	59,477
인원	5,452,284	5,955,670	4,818,484	4,750,232	2,822,325	1,803,503	1,857,131	1,805,937	1,721,924	1,693,118	1,763,938

3. 문화소외 및 취약지역 문화접근성 향상

(1) 작은영화관 조성 지원

작은영화관 조성 지원사업은 지역민의 영화 향유권 강화 및 지역 간 영상문화 격차 해소를 위하여 극장 부재 지역에 대도시와 동시에 최신 영화를 볼 수 있는 소규모 상설 상영관 설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에는 14개 지역(경기 가평, 강원 양구, 양양, 인제, 횡성, 충북 옥천, 충남 금산, 태안, 전남 곡성, 보성, 진도, 경북 영천, 울진, 칠곡)에 55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2-4-10 연도별 작은영화관 지원 현황

지원연도	지원지역	
2014년	9개	강원(삼척, 철원, 평창), 전남(장흥, 고흥), 충남(예산, 서천), 경남(남해), 인천(강화)
2015년	7개	강원(정선), 경북(영양, 고령), 경남(합천), 전남(완도), 충북(영동), 울산(울주)
2016년	14개	경기(가평), 강원(양구, 양양, 인제, 횡성), 충북(옥천), 충남(금산, 태안), 전남(곡성, 보성, 진도), 경북(영천, 울진, 칠곡)

(2) 소외계층문화순회 사업

소외계층 문화순회 사업은 문화 인프라 시설이 부재한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향유권 신장 및 문화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2016년에는 200억의 예산으로 227개의 예술단체가 전국 3,100회 순회공연을 펼쳐 약 72만명이 관람하였으며, 2017년에는 212억의 예산으로 250개 예술단체가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가지고 문화경제적 소외계층을 찾아갈 예정이다.

제3절 지역 관광산업 육성

1.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관광거점 육성

(1) 산업관광활성화

정부는 산업관광 인프라 조성 및 산업관광 수용태세 개선, 산업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지자체 공모를 통해 2012년부터 산업관광 육성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동 사업은 2012년 6개 시범사업 추진 이후, 매년 3개소~6개소 내외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2012년~2017년간 지원되는 사업은 24개 지자체, 27개 사업으로, 2012년 15억원 지원 이후 매년 10억원 내외의 예산 지원 중이다. 또한, 지자체 공모사업과 별개로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산업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 강화 등 산업관광 기반 및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2-4-11 산업관광 육성 사업 지원 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지자체 공모사업	선정사업수	6개 사업	5개 사업	6개 사업	4개 사업	3개 사업	3개 사업
	지원 예산	1,000	1,720	1,320	1,320	1,200	1,200
산업관광 기반조성 (한국관광공사)		400	280	260	260	200	140
계		1,400	2,000	1,580	1,580	1,400	1,340

(2)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 육성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육성사업은 광역·시·도 단위 「지역방문의 해(2004년~2013년)」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 있는 사업 발굴·추진 필요를 위해 2014년부터 시작되었다. 동 사업은 관광의 잠재성이 큰 중소도시를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 콘텐츠·상품개발, 컨설팅 등 체계적 지원을 통해 매력적인 관광목적지로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모를 통해 매년 3개 도시를 지정 3년간 최대 25억원(관광기

금 50:50 매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내실 있는 행사 실행을 유도하고 있다.

지원 분야로는 i)숙박 등 환경·시설개선, 유휴공간 재생·재활용, 정보 및 안내체계 개선 등 환경개선, ii)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가진 자원의 활용과 상품화, iii)관광 관련 인적자원의 효과적인 네트워킹 및 활용, 전문인력 양성 등 주민·지자체 역량강화, iv)이벤트·축제 등 문화관광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마케팅 등이다. 2014년도에 제천시, 무주군, 통영시를 ‘2016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하였고, 2015년도에 광주 남구, 강릉시, 고령군을 ‘2017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하였으며, 2016년도에 인천 강화, 공주시를 ‘2018 올해의 관광도시’로, 2017년도에 울산 중구, 안산시, 강진군을 ‘2019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하여 3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3) 동계올림픽특구 개발

동계올림픽특구 개발 사업은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대회 이후에도 개최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동 사업은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평창과 강릉, 정선 지역만의 독창적 관광콘텐츠를 발굴하고 이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올림픽 이후에도 관광수요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지역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한다.

올림픽 개최지역의 고유한 생활문화, 향토음식, 특산물, 지역축제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발굴 및 관광프로그램 운영, 관광콘텐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시설 조성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정비를 위해 2016년에 3개 지역(평창, 강릉, 정선)에 188억원을 지원하였다.

지원사업으로는 효석문화예술촌 조성, 올림픽도시 종합관광안내시스템 구축, 전통숙박시설 및 기반시설 조성, 강원전통음식 관광상품화, 지역문화관광 체험프로그램 운영, 한류 K-컬처 이벤트 개최, 삼로 트레킹 관광코스 개발, 올림픽 아트센터 건립 등 8개 사업이 있다.

(4) 동북아 해양관광 레저특구 조성사업

동북아 해양관광 레저특구 조성 사업은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 지역공약사업으로서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계기로 기 구축된 SOC와 Big-0, 아쿠아리움 등 박람회가 남긴 핵심자산을 재활용하고,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박람회장을 동북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해양관광리조트로 조성하여 남해안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동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여수박람회법 제14조에 따라 ‘2012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 사업을 전담하고 있다. 동 사업의 대상지는 여수박람회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해양박람회특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박람회장 및 주변 입지를 고려하여 크게 3개 구역으로 구분하고, 휴양시설과 상업시설 등을 유치하여 해양관광리조트로 조성하는 것이 기본 구상이며, 개발계획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위치 : 전남 여수시 덕충동, 수정동 일원
- 면적 : 해양박람회특구 약 798천㎡
- 개발 구상 : 엔터테인먼트리조트·복합콘텐츠·해양레저구역으로 구분 개발
- 개발 방안 : 부지는 매각, 시설·건물은 매각·임대 병행방식으로 민간참여

먼저 동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사후활용계획을 수립(‘12.9)한데 이어 여수박람회법 개정(‘12.12)을 통해 해양박람회특구의 지정(‘13.1)과 재단을 설립(‘13.2)하고,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박람회 사후활용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업추진 체계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여수박람회 폐막이후 박람회장을 새로이 단장하고, Big-0, Sky-Tower 등 특화시설 콘텐츠를 보강하여 재개장(‘13.4.10.)함으로써 박람회장을 시민공원화하는 한편, 박람회 기념관 조성(‘14.5)과 한국관·국제관 컨벤션시설을 활용한 국내외 회의·행사유치(연중) 등을 통해 박람회장 활성화에 주력한 결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박람회장 방문객 731만명, 운영수입 137억원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재개장 4년째인 2016년에는 방문객 304만명·운영수입 57억원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표 2-4-12 박람회장 방문객 및 수익

(단위 : 만명, 억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방문객	190	223	318	304
수익	25	48	64	57

이와 같은 박람회장 활성화 성과는 해양수산부가 박람회장 개장 이후 정부 출연금 형식으로 2014년~2016년 196억원을 지원하여 박람회시설을 쾌적한 해양 힐링공간으로 유지관리하고, 박람회장 방문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집객프로그램 운영 및 마케팅을 차질 없이 추진한 결과로 보인다.

한편, 민간의 주도적 참여를 통해 박람회장을 동북아해양관광레저특구로 조성하고자 세 차례('12.9/'13.7/'14.6)에 걸친 민간투자유치를 추진하였으나 박람회장 일괄 매각 조건에 따른 초기 투자 부담 등을 이유로 성사되지 못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박람회장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여수시와 공동으로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계획 변경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14.7~'15.1)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박람회장 토지이용계획 변경, 박람회장 민간참여조건 완화(박람회시설 임대 전환, 매각대금 5년 분할상환 등)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사후활용계획을 변경·고시하였다. 또한 변경된 사후활용계획을 근간으로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과 함께 민간제안 사업 공모를 재추진('15.6/'15.11)하여 3개 사(매각 2, 임대 1), 1,132억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함으로써 민간참여를 통한 박람회장 개발의 물꼬를 트는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 사후활용계획의 목적인 박람회장 세계적 해양관광리조트로 조성하여 남해안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투자 기업의 사업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해당지자체·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 공동으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하는 한편, 박람회장을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국내외 유망기업 유치를 위해 박람회장 주변의 관광콘텐츠와 연계한 다각적인 집객대책 및 민간투자유치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5) 크루즈 관광 활성화 지원

크루즈 산업은 해운·조선·관광 등 연관 산업이 집적화된 대표적인 융·복합 산업으로

로 2016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크루즈 관광객(195만명)이 소비 지출한 금액으로만 추정하더라도 약 2조원(1인 평균 102만원)의 경제효과가 있는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최근 세계 크루즈 시장은 연평균 매년 5% 이상 성장하여 2016년 기준 2,360만 명으로 2020년 3,110만 명 이상으로 성장이 예상되며,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크루즈 시장은 2015년 209만명, 시장규모 2조 4천억원(운임기준)으로 2020년까지 500만 명 이상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출처 : 해양수산개발원).

국내시장의 경우 2015년은 메르스로 인해 크루즈 관광객(기항지기준)이 88만명(2014년 대비 16%)으로 감소하였으나, 2016년 195만명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300만명 이상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2-4-13 연도별 기항지 크루즈 관광객 입항 현황

(단위 : 만명)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5	28	80	106	88	195

우리나라는 한·중·일 크루즈 항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동·서·남해 연안에 인접한 도시와 항만인프라, 풍부한 관광자원이 존재하여 중국 및 일본 크루즈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기항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나, 국적 크루즈선의 부재로 국내 크루즈 수요는 4만명 수준에 불과하며, 연관산업의 기반 및 전문인력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국적크루즈 선사 육성, 외국 크루즈 관광객 유치 확대 등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13년 7월 해수부·문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크루즈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2015년 2월 ‘크루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이어 2016년 3월 ‘제1차(2016~2020)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정부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015년도에는 2억원을 투입하여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의 절반 이상이 출항하는 상해에서 외국 선사 및 중국 여행사, 정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국내 기항지 홍보 마케팅을 최초로 추진하였고, 2016년도부터는 3억원으로 증액하여 마케팅을 강화하였다. 또한, 메르스로 인해 국내 기항 크루즈 관광객이 감소함에 따라 10억원을 투입하여 지자체, 항만공사, 지방관광공사 등과 범정부 합동유치단을 구성, 북경·상해·

오사카에서 우리나라의 안전과 관광자원을 집중 홍보하여 2016년도 기항지 크루즈 관광객 195만명을 유치하여 목표 150만명을 초과 달성하였다.

정부는 국내 부족한 크루즈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여 제1기 과정(2015.10~2016.3) 이수인원 70명 중 56명이 국내외 크루즈선사 등에 취업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합격한 이들은 순차적으로 크루즈선에 승선하여 승무원으로서 기본을 탄탄히 다질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예산 3억원과 지방비 3억원 등 총 6억원을 투입하여 2013년 이후 매년 제주국제크루즈포럼을 개최, 약 1,200여명의 국내외 크루즈 관계자가 참석하고 아시아 크루즈산업의 공동번영을 위한 학술 포럼을 진행함과 동시에 선용품, 여행사, 기항지 지자체 등 연관 업·단체의 전시부스 운영으로 국내 크루즈산업을 대외에 알리는 초석을 다졌으며, 계속해서 그 규모를 확대하여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 크루즈 행사로 발돋움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 크루즈 기항지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외국 크루즈 선사 및 여행사 대상 범정부 합동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시장을 다변화하는 한편, 2020년까지 크루즈 전문 인력 2천여 명을 양성하고, 제주국제크루즈포럼을 아시아 최대 크루즈 박람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연관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여 명실상부한 크루즈 강국으로 도약하고, 해양 분야의 신성장 동력 산업이자 국가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중추 산업으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6)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은 21세기의 화두로 등장한 녹색관광 실현에 따른 선도적 권역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충북의 남한강과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생태·휴양 중심의 녹색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동 사업은 2009년에 기본계획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충북, 강원, 경북의 3개 도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총사업비 77억원 규모의 3개 부문 75개의 세부사업을 구상하였다. 동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사업추진을 확정하고 2012년 9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총 사업비 3,970억원, 39개 세부사업으로 총사업규모를 확정하였다.

총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개년으로, 2013년에는 간현 녹색충전지대 조성 등 11개 사업에 55억원을, 2014년에는 국제 수변레포츠단지 조성 등 11개 사업에 10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에는 백두대간 곤충놀이나라 등 16개 사업에 14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에는 간현 녹색충전지대 조성 등 16개 사업에 147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에는 고구려 수변테마마을 조성 등 4개 사업을 신규로 반영하여 총 16개 사업에 14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 창조적 지역문화관광 활성화

(1) 관광두레 육성사업

관광두레 육성사업은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 관광두레 PD(지역관광매개자)와 함께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식음·여행기획·체험·기념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성공 창업하고 자립 발전하도록 지원한다. 2013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6년 현재 37개 기초 지자체에서 154개의 주민사업체를 발굴·육성하고 있으며, 52개 주민사업체가 월 평균 1,493만원의 안정적인 매출을 창출하고 있다.

표 2-4-14 관광두레 조성사업 지원 현황 (2016.12월 현재)

구 분	지 역	P D	주민사업체	참여주민
계	37개	34명	154개	1,199명
1기(2013년)	3개	1명	13개	91명
2기(2014년)	15개	10명	55개	620명
3기(2015년)	11개	12명	49개	298명
4기(2016년)	8개	11명	37개	190명

(2) 해안누리길 활성화 사업

웰빙과 힐링문화가 확산되고 삶과 자신을 돌아보는 걷기여행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

리때김하면서 바다를 더욱 가까운 곳에서 느끼고, 공감하고 싶어 하는 수요가 증가하였다. 이에 ‘해안길 걷기’라는 새로운 여행문화 정착과 연안지역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도모라는 취지에서 2010년 국토해양부는 ‘아름다운 해양경관, 걷고 싶은 해안순례길’ 사업을 시작하였고, 해안지역의 35개 시·군·구 6,000Km 해안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산책길, 마을길 등을 대상으로 시설 설치 없이 친환경적 여행길로 지정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해안누리길이라는 명칭은 대국민공모를 실시한 결과 2,504건의 명칭이 제안되었으며, 전문가 심의를 거쳐 아라길, 아랑길, 해솔길 3개의 후보명칭을 선정하였으나, 국내 해안길을 대표하기 위한 대표성과 신선함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해안누리길’로 최종 확정되었다.

그림 2-4-3 해안누리길 BI



노선 선정은 도보여행에 적합한 168개의 노선을 지자체로부터 추천받아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정위원회의 심의 및 현장조사를 통해 11개 시·도 36개 시·군·구에 있는 52개 노선을 선정하였으며, 2015년 인천삼형제섬길을 추가하여 현재는 53개 노선 508.2Km의 해안누리길이 지정, 운영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종합안내판 설치 등을 통한 안내체계 구축,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보급, 스토리북 제작, 팸투어 등 걷기 행사와 걷기 축제 개최,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등이 있다.

연도별 주요 실적은 2013년 진도 웰빙등산로 등 5개 노선에 해설판 등 8종, 22개의 시설물 설치 및 보수와 2회의 팸투어를 진행하였고, 2014년에는 해안누리길 소개책자인 이야기 따라 걷는 길, 해안누리길 5,000부를 발간하고, 완도 신지명사길 등에서 걷

기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 특산물 판매, 주민소득 창출에 기여하였다. 2015년에는 현장 체험학습 교재 발간과 공개수업을 진행하고, 주요 일간지 등을 대상으로 노선을 소개하고, 출입기자 대상 팸투어를 개최하여 해안누리길의 홍보를 강화하였다. 2016년에는 해안누리길의 관광자원 가치 제고를 위해 요트체험, 어촌체험마을 숙박 등을 포함한 1박 2일 패키지 상품을 시범 출시하였고, 판매 하루만에 약 100여명의 참가자 모집이 끝났다. 여행 이후 설문조사결과에서도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였다. 향후에는 해안누리길과 섬, 마리나, 해수욕장 등 주변 해양관광자원을 연계하는 여행상품의 개발과 출시를 통해 해안누리길의 이용 활성화와 국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해양관광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표 2-4-15 최근 5년간 해안누리길 활성화 사업 지원 현황(국비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예산액	200	300	295	200	200

(3) 레고랜드코리아 기반시설 조성

레고랜드 코리아 기반시설 조성 사업은 강원도 춘천시 하중도에 건립되는 테마파크(레고랜드 코리아)의 성공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해 기반시설(관광지 연결 진입교량)을 조성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광 접근·편의성 향상, 외국인 투자유치 기반 마련 등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레고랜드 코리아에는 테마파크, 레고호텔, 콘도, 워터파크, 상가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동 사업은 2014년에는 국가재정법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을 통해 기반시설 국비 지원의 타당성을 인정받았고, 2015년에는 설계 및 공사 계약을 완료하여 6월경 공사 착공하였으며, 2016년 말 기준 공정률은 약 70%로, 2017년 10월경 준공될 예정이다. 사업개요는 다음과 같다.

- 사업기간 : 2014년 ~ 2017년

- 사업위치 : 춘천시 근화동 ~ 중도동(하중도)
- 사업내용 : 진입교량 설치 L=1,055m(교량 L=935m, 접속도로 L=120m, B=25m)
- 총사업비 : 85,842백만원(국고 42,543백만원 / 지방비 43,299백만원)

표 2-4-16 연차별 투자금액 현황(국비기준)

(단위: 백만원)

연도별	2015	2016	2017
예산액	19,920	11,547	11,076

3. 생태·역사·문화 콘텐츠 중심의 고품격 관광자원 개발

(1) 관광자원개발 사업

1) 관광지 개발

관광지 개발은 국민의 건전 여가활동 및 다양한 관광활동을 위한 휴식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52조(관광지등의 지정 등)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에 대하여 관광지 내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오수처리장, 화장실, 공원, 광장 등 공공편익시설 및 노후 시설 리모델링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역의 관광 매력도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6년에는 경기 동두천 소요산 관광지, 강원 고성 화진포 관광지 등 총 37개소에 20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에는 경기도 평택 내리 관광지, 강원 강릉 대관령 어흘리 관광지 등 총 36개소에 30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 문화관광자원개발

문화관광자원 개발은 「관광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관광지나 관광단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사적지,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광역권 개발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에 소재한 독특한 역사·문화, 레저·스포츠자원 등을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다양한 관광수요에 대응하고자 1999년부터 지원한 사업이다. 정부는 2016년에는 임계면에 코케어치유센터 조성 등 192개 사업에 1,28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에는 하동호 주변 힐링공원 조성사업 등 236개 사업에 1,58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지역의 독특한 역사문화자원을 테마로 한 관광자원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각 지역마다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보유하고 관광객들의 다양한 관광수요에 부응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발전 및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3) 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

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습지, 옛길, 강, 호수 등 생태자원을 보호하는 동시에 이를 활용하여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개념의 관람·체험관광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역 식생 확대, 체험·관람시설 확충 등 인프라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생태자원의 중요성을 관광객들에게 인식시키고 건전한 체험형 관광문화를 활성화 한다는 점에서 추진 필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다.

2016년에는 대원사계곡 관광자원생태탐방로 조성 등 32개 사업에 18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에는 감악산 수변생태공원 등 35개 사업에 197억원을 지원하였다.

4) 광역 관광자원개발

광역 관광자원개발사업은 동·서·남해안 및 지리산권 등 권역별로 특색있는 관광자원(자연·문화·역사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 및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 관광개발의 효과 제고는 물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정기적인 사업평가 및 환류를 통해 사업을 재구성하여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6년에는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사업 4개에 11억원,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사업 9개에 88억원,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 8개에 92억원,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사업 40개에 8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에는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사업 3개에 41억원,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사업 5개에 47억원,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 3개에 26억원,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사업 38개에 9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5)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은 주 5일 근무제 정착, 대체공휴일제 시행 등으로 국민의 여가가 확대되고 국내관광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이에 부응하고자 주요 관광지와 연계하여 캠핑장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국민여가캠핑장이 야영장 및 화장실·취사장·샤워장 등의 위생시설, 운동장·놀이시설 등의 체육시설, 주차장·야영용 트

레일러 등의 편익시설을 갖춘 쾌적하고 저렴하며 안전한 곳으로 조성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6년까지 총 94개소 조성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 12월말 기준 56개소가 완공되어 운영 중에 있어 국민의 여가수요 충족은 물론 국내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6)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운영지원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 발전할 수 있는 전통한옥을 한국 고유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체험숙박시설로 육성하기 위하여 이미 조성되어 운영 중인 명품고택 등 전통한옥에 대하여 시설 개보수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설 개보수 등 지원을 통해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매력적인 숙박시설로서의 한옥의 가치 보존·제고 및 대체숙박시설 확충으로 국내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7) 관광안내체계구축

관광안내체계란 관광정보의 공급자가 관광정보 수요자에게 관광정보를 전달하는 제반 매개수단 및 운영체계를 말하며, 관광안내체계의 구성요소는 관광안내소, 관광안내표지판, 등 관광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전달매체, 시설물 및 인적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관광안내소는 각 지자체 등의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약 410여 곳에서 운영 중이다. 관광안내표지는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매뉴얼과 표준 디자인이 수록된 한국 관광안내표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전국 각 지자체에 보급하였다. 관광안내표지판은 한류의 영향 등으로 2015년 전체외래객 약 1,323만 명 중 중국인(홍콩 포함) 및 일본인이 약 59%를 차지하는 등 중화권 및 일본 관광객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관광안내표지판의 다국어 표기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매년 1천여 건의 설치 및 개보수를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다.

8) 탐방로안내체계구축

탐방로안내체계구축 사업은 길 자원을 중심으로 지역의 관광 자원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관리 하는 사업으로, 점형으로 분포된 관광자원을 선형으로 네트워크화하고 도보관광 수요증가에 따른 새로운 여행문화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다. 또한 올레길, 해파랑길, 가람길, 구불길, 강화나들길 등 탐방로 조성은 지역단위로 산재되어 있는 탐방로를 융합하여 관광객의 지역 간 이동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등 관광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6년에는 기존 조성된 걷기여행길의 노선의 정비 및 안내판 정비, 걷기길 안내, 편의제공 등을 지원하였다. 2016년에는 한양도성 안내판 개선 및 확충 등 총 30개소 15개 광역시도에 10.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 횡성호수길 안내체계 사업 등 총 10개소 6개 광역시도에 5.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

1) 생태녹색 관광자원화

2016년도에는 사업초기부터 지속적인 국고지원으로 일정 수준의 자생력이 확보되고, 사업목표가 일정부분 달성된 기존의 생태관광 10대 모델과 슬로시티 11개 지역에 대한 지원을 종료하고, 우수한 생태관광자원을 보유한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여 지역별 예산지원을 차등화하고, 향후 국고지원이 없어도 자생력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총 13개 지역에 29억원을 지원하였다.

2) 야생화 관광자원화

야생화 관광자원화 사업은 야생화를 지역의 특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 관광산업 경쟁력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한 사업지를 공모하여 야생화 군락지 발굴, 조성 및 스토리텔링형 야생화체험 프

로그래 개발·운영 등의 내용으로 ‘16년도에 경남 남해 등 5개 지역에 7.5억을 지원하였다.

3)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관광시설 재생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관광시설 재생 사업은 관광목적지로서의 자원성은 있으나 시설노후화 및 관광콘텐츠 등이 미흡하여 매력도를 상실한 기존 관광지에 대한 재생을 추진한 사업으로 ‘16년도에 강원 양구 등 3개 지역에 5억을 지원하였다.

(3) 등대 해양문화공간 조성

해양문화예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국민들의 여가활동 욕구가 증가됨에 따라 해양경관이 수려한 곳에 위치한 등대를 다양한 해양문화의 장(場)으로 활용함으로써 해양 르네상스 창달에 노력하고자 하였다.

1999년부터 유인등대 정비계획에 따라 등대 건축물을 개량하면서 전시실, 방문객 이용시설 등 기본적인 하드웨어 구축을 완료하였다. 해양관광지와 근접하고 경관이 수려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부산시 영도등대, 인천시 팔미도등대, 울산시 간절곶등대, 제주시 우도등대, 동해시 묵호등대, 속초시 속초등대, 여수시 오동도등대 및 통영시 소매물도등대를 해양문화공간으로 지정하여 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방문객을 대상으로 해양 안전교육, 등대체험, 미술전시, 음악공연 및 세미나 개최 등 적극적인 해양문화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등대가 단순히 뱃길을 안내하는 전통적인 기능뿐 아니라 해양문화공간으로서의 부가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하였으며, 이는 등대 및 해양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많은 기여를 하게 하였다. 또한, 부산시 영도등대, 여수시 오동도등대, 동해시 속초등대 및 울산시 간절곶등대에는 등대문화 해설사를 배치하여 방문객들에게 등대 해양문화공간 및 주변관광시설에 대한 설명을 돕고 있다. 다만, 육지와 도서, 접근성 및 방문객 수 등 각기 다른 여건에 따라 문화 콘텐츠의 차별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 실정이다.

표 2-4-17 등대 해양문화공간 조성 실적

사 업 명	2013	2014	2015	2016
등대해양문화공간 정비 실적(억원)	24	19	20	23
등대해양문화 행사비(억원)	3.7	3.7	3.7	3.7
등대해양문화공간 방문객(명)	2,811,609	2,875,814	2,971,433	3,944,708

현재 등대외부 구조물 등 커다란 하드웨어 중심으로 추진된 유인등대 정비사업이 완료되고 전시물의 변화, 행사의 다양화 등 방문객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변모하고 있는 시기로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다른 해양관련 사업에 비해 예산확보가 녹록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2016년에는 23억원을 투입하여 시설물 정비를 추진하였으며, 3.7억원으로 등대장 체험, 등대 음악회, 전시회 등 특색 있고 다양한 69회의 해양문화행사를 개최하였다. 그 결과 지난해 등대해양문화공간 방문객은 전년대비 32%가 증가한 394만 명을 기록하였다.

등대에 진행되는 각종 해양문화행사 및 시설물 정비 등은 역사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다른 해양문화행사와 차별화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콘텐츠의 지속적인 개발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방문객이 등대해양문화 공간을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속적인 홍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4)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전국에 소재한 각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집중적·체계적으로 발굴·보존·정비하고 관람·편의시설 등을 확충하여 역사교육의 장 및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05년부터 매년 약 10여개 사업을 선정, 100여 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적·역사적 특성을 지닌 대표적 역사문화유적에 대하여 발굴·보존·정비, 편의시설 확충 등을 지원해 왔다. 특히, 2016년에는 양주 회암사지 종합정비, 연천 전곡리 선사문화체험 관광벨트 조성 사업, 내포 보부상촌 조성 등 계속사업 이외에 죽주산성 테마역사공원 조성, 함안 말이산 고분군 노출전시관 건립 등을 새롭게 추진하면서 지역유산

의 테마별 관광자원화 개발로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유산의 가치를 확산하여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에 기여하였다.

(5)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 조성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 조성사업은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30대 선도사업 중 대구·경북권 사업으로, 해당 지역을 유교, 신라, 가야의 3대 문화권과 백두대간, 낙동강의 생태 축을 기반으로 하는 독창적 지역 문화공간, 대단위 관광산업 기반, 생태 자연의 보고로 만들기 위한 종합 관광개발사업이다.

2009년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2010년 3월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0년 12월 선도사업(9개 사업), 2011년 4월 전략사업(26개 사업)에 대한 간이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총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2개년으로, 2010년에는 세계 유교선비문화공원 등 13개 사업에 250억원, 2011년도에는 녹색문화 상생벨트 사업 등 28개 사업에 600억원, 2012년도에는 유림 문학 유토피아 사업 등 42개 사업에 917억원을 지원하였다. 2013년도에는 신화랑풍류체험벨트 등 40개 사업에 958억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도에는 31개 사업 80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36개 사업에 1,745억원을 지원하였다. 2016년도에는 40개 사업에 1,66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30개 사업 1,69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6)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한반도생태평화벨트 조성은 DMZ 인접지역 3개 시·도 10개 시·군 지역의 생태 및 역사, 문화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2009년 ‘평화생명지대 광역관광개발계획’에 대한 연구용역(2008년 8월~2009년 10월, 3.6억원)을 통해 테마 횡단코스 개발 등 37개 사업(총사업비 5,516억원)이 구상되었으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제20차 보고(2010년 3월)에서 사업명을 ‘한반도생태평화벨트 조성계획’으로 변경하였다.

행안부, 산림청,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44개 세부 사업을 확정하고 2013

년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2013년부터 2022년까지 3개 시·도 10개 시·군, 총 44개 세부 사업에 총사업비 국비 2,097억원을 포함하여 총 4,610억원 규모로 추진되었다.

현재는 '16년 8월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중간평가 연구용역을 통해 전반적인 사업계획 조정을 실시하여 총 29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 국비 1,120억원을 포함하여 총 2,466억원 사업 규모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다.

2014년도에는 '애기봉 평화생태공원(경기 김포)' 등 6개 사업에 85억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도에는 '연평도 평화기원 등대언덕 조성(인천 옹진)' 등 6개 사업에 120억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도에는 '연평도 평화기원 등대언덕 조성(인천 옹진)' 등 8개 사업에 15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궁예 태봉국 테마파크 조성(강원도 철원) 등 5개 사업을 신규로 반영하여 총 10개 사업에 11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의 정책여건 및 지역관광 환경변화를 분석하고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사업 추진계획을 재검토하기 위해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중간평가 연구용역('16.8월)'을 실시하여 조정된 사업계획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4절 생태·자연환경 보존·활용

1. 도시 생태자원의 복원·확충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1) 자연마당 조성

자연마당 조성사업은 2012년부터 추진하여 2016년까지 부산, 대구, 서울, 익산, 인천, 대전, 군산, 경산 등 총 8개소의 자연마당을 조성하였으며, 2017년에는 인허가를 받아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4개소가 완공될 예정이다. 또한, 실시설계가 완료된 2개소는 2018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동 사업은 자연마당을 조성하여 녹지 및 생태공간이 취약한 도시지역에 다양한 생태휴식공간을 확충함으로써 도시생태계의 건전성을 증진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였다.

(2) 생태놀이터 조성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 54개소의 생태놀이터를 조성하여 아이들이 접근처 도심에서, 보다 쉽고 가깝게 자연생태 학습과 체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아이들의 정서발달은 물론 도시민에게 휴식과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였다.

(3) 자연환경보전 및 관리

최근 3년동안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사업에 대해 국고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253개 사업(138,679백만원)에 대하여 국고 지원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체험·전시시설, 탐방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태탐방 장려로 지역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궁극적으로 자연생태 복원을 통한 대국민 환경복지 향상에 기여하였다.

2. 하천-산림생태 보전·복원으로 융합적 가치 창출

(1) 생태하천 복원

환경부는 1987년부터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여 2016년까지 오염·훼손된 하천 1,369km를 복원하였다. 그 결과 BOD 평균 6.9→2.6mg/L('07~'14년 준공 100개 하천 조사결과)로 수질이 개선되었으며 생물다양성 증가와 주민만족도 측면에서도 향상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추진체계를 정비하였다. 국토부와 환경부 합동으로 부처간 중복 문제 해소를 위한 '지방하천정비사업 및 생태하천복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지침'을 제정(2014.2.17)하였으며, 생태하천복원사업 계정을 광역발전특별회계 광역계정(2014년까지)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계정(2015년~)으로 전환하였다.

아울러, 생태하천복원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2015년 신규사업 선정 시부터 지자체에서 생태하천 복원계획 수립한 후 환경부 심의를 거치도록하고, 생태하천복원사업 준공 이후 5년간 보조사업자에 의한 사후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생태하천복원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2012년부터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수사례 발굴 콘테스트를 개최하고 있으며, 생태하천복원 사례집 '천생인생', 생태하천복원 매뉴얼, 미국 환경보호청(EPA) 수생태복원원칙 재해석본(2014.10.17), 홍보 동영상 등을 제작·배포하여 하천복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표 2-4-18 생태하천복원 조성사업 추진성과

(단위:%)

성과지표	구분	2013	2014	2015	2016	측정산식
생태하천복원 비율	목표	49.2	54.6	59.3	64.0	[복원하천 구간누계/복원목표구간(2,077km)]×100
	실적	49.8	55.3	60.2	65.9	

(2)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국가생태문화탐방로는 2008년부터 추진된 국고보조사업 결과 2016년까지 55개 사업

에 약 2,009km가 조성완료 또는 조성 중이다.

(3) 생태탐방체험시설 및 에코촌 조성

생태탐방체험시설은 2016년 현재 북한산(2011년) 및 지리산(2015년) 생태탐방연수원이 운영 중에 있다. 생태탐방연수원은 가족단위나 소규모 단체를 대상으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사회에 보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생태관광 프로그램 구성시에도 국립공원 인근지역의 다양한 생태·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하여 지역사회가 생태관광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해설사·자연환경해설사 등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중이다.

에코촌은 2016년 현재 순천만 에코촌과, 우포늪 에코촌이 운영 중에 있으며, 에코촌은 조성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며 그 수익이 지역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국가하천 정비

국가하천정비사업 총 사업비 6조 7,927억원 중 2016년말 현재 5조 5,592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016년 이후 1조 2,335억원을 투자하여 2020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표 2-4-19 국가하천정비사업 투자현황

(단위 : 억원)

사업명	전체	2013년 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비고
국가하천정비	67,927	38,940	4,281	4,338	3,900	3,900	8,435	

(5) 지방하천 정비

그 동안 전국 지방하천 총 3,773개, 하천연장 26,789km에 대한 하천연장기준 82.3%(3,177개, 22,045km)의 수리률을 달성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하천정비를 통해 하천 개수율은 48.6%를 달성하였다.

(6)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연결복원

백두대간 등의 훼손된 산림을 훼손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산림복원사업을 통하여 한반도 핵심생태축 등 주요산림을 보존하고 생물다양성 증진 등 산림의 고유기능 회복과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연속성을 증진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도로 개설 등으로 단절된 백두대간 및 정맥 마루금에 친환경 터널 설치 후 그 위에 원지형과 식생을 복원하여 산줄기를 연결하는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복원은 백두대간을 끊어짐 없이 연결된 하나의 선 개념으로서의 연속성을 강화하고 민족정기 회복 등 백두대간 고유의 상징성을 회복하였으며, 연결된 산줄기를 통하여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보전 및 안전한 산행유도 등 보존과 이용이라는 상충적 개념을 조화롭게 실현하는 정책성과를 보이고 있다.

3. 자연자원을 활용한 지역의 경제적 기반 및 환경 개선

(1) 경관보전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는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 및 마을경관보전활동을 통해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형성하여 이를 지역축제, 농촌관광 등 도농교류와 연계하는 사업이다. 경관보전직불 지원단가는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마을경관보전활동비 15만원/ha(17년부터 국고50%, 지방비50%)를 지급하고 있다. 농업인 삶의 질 특별법 제정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05년부터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2008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2-4-20 경관직불보전제 연차별 사업추진 내역

(단위 : ha, 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 시행면적	470	470	800	5,814	16,171	16,600	13,741	13,786	12,796	12,696	12,160	11,702
-경관작물	시범사업			502	600	1,000	5,928	5,796	7,483	7,648	8,116	8,300
-준경관작물	(구분없음)			5,312	15,571	15,600	7,813	7,990	5,313	5,048	4,044	3,402
○ 예 산	600	600	1,000	2,646	9,640	15,679	13,903	7,579	14,072	14,072	13,870	13,591
- 직불금	560	560	952	2,596	9,590	15,596	13,853	7,475	13,968	13,968	13,766	13,487
- 행정비	40	40	48	50	50	83	50	104	104	104	104	104
○ 마 을 수	45	44	60	412	939	795	788	796	527	525	491	476
○ 농 가 수	763	641	1,216	6,549	16,287	17,632	15,660	18,386	12,778	10,572	9,942	9,677

표 2-4-21 경관보전직불제를 통한 지역축제 등 방문객 현황

(단위:천명,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측정산식
방문객 수(천명)	2,528	2,599	2,733	2,878	방문객증가율 = 당년도 방문객수 - 전년도 방문객수 / 전년도 방문객수 × 100
방문객 증가율(%)	3.3	2.8	5.2	5.3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꽃을 활용한 지역축제로 지역 이미지 제고뿐만 아니라 지역 대표 축제로 발전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휴경지 상태로 농촌의 미관을 저해하는 농지의 기능회복과 깨끗한 마을경관 형성에 기여하였다.

(2) 농촌다원적자원활용사업

농촌다원적자원활용사업은 농촌의 토지이용을 통하여 오랫동안 형성되어온 경관 및 전통생태농법 등 전통문화가 깃든 농촌 고유의 자원을 복원·발굴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12년 3월에 농업유산제도를 도입한 이래 2016년까지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총 7개 지역의 유산이 등재되어 사업완료 지구의 방문자 증가로 농업의 가치증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2013년도에 지정한 국가중요농업유산(청산도 구들장논,

제주 발담)이 FAO GIAHS(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2014년 4월)됨에 따라 우리나라 농업유산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성과를 거두었으며 2015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하동 전통차 농업, 금산 고려인삼농업을 FAO GIAHS(세계중요농업유산)에 2016년도에 등재 신청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등재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표 2-4-22 방문객 현황

(단위:명,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방문객 수(명)	-	-	-	18,438	지역브랜드 이미지 및
방문객 증가율(%)	-	-	-	5.5	가치 제고에 기여

표 2-4-23 국가농업유산지정 및 다원적자원활용사업지구 현황

지정번호	명칭	지정범위	주요 특징
농업유산 제1호	청산도 구들장 논	청산도 전역 (5.0ha)	○ 전통온돌 방식인 구들장 방식의 통수로가 논바닥 밑에 설치된 논
농업유산 제2호	제주 발담	제주도 전역 (22,108km)	○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발을 둘러싼 돌담
농업유산 제3호	구례 산수유농업	구례군 산동면 일원(228ha)	○ 전국 생산의 63%, 천년된 산수유나무 보유, 산수유 군락 및 낮은 돌담 등 경관우수, 지역고유의 재배기술 보유
농업유산 제4호	담양 대나무밭	담양읍 삼다리, 향교리 일원(56.2ha)	○ 전국 죽림면적의 26%, 경관적가치우수, 생물다양성 및 죽순생산, 농기구이옹 및 전통죽제품 생산
농업유산 제5호	금산 인삼농업	근삼군 금성면 양전리 등 14개리(297ha)	○ 임야, 밭, 논에 걸쳐 다양한 인삼재배 기술을 확립하였고, 가공기술의 발달로 국내 인삼의 70%가 금산에서 유통
농업유산 제6호	하동 전통차농업	하동군 화개면 일원(597.8ha)	○ 차 군락지의 조성부터 재배까지 자연을 훼손되지 않았고, 차와 관련된 차 민요, 채다가(採茶歌), 차 품앗이 등 많은 문화유산자원이 형성
농업유산 제7호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	금강송면, 북면 일원(14,188ha)	○ 왕실의 황장봉산으로 지정, 주민들이 송계를 조직하여 숲을 관리하면서 생계를 유지, 기암괴석과 어우러져 독특한 경관 형성

표 2-4-24 농촌다원적자원활용사업지구 현황

사업지역	자원명칭	주요 특징
전북 부안	유유동 양잠농업	○ 54가구 중 47가구가 양잠 종사, 전통잠사 유지 보전 ○ 부안군은 조선시대에 양잠을 하였다는 기록 존재
전남 보성	계단식 차밭	○ 전국 차밭의 34%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차 생산지 ○ 산비탈에 식재한 계단식 차밭이 독특한 경관을 형성, 관광자원으로 활용

(3)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 정책은 2010년 ‘한국형 10대 생태관광 모델사업’, 2011~2012년 생태관광지 핵심모델개발사업, 2013년 생태관광지역 시범사업을 거쳐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2013.3)하여 본격적인 ‘생태관광지역 지정제도’가 추진되고 있다. 생태관광지는 2014년 12개소, 2015년 5개소, 2016년 3개소의 총 20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표 2-4-25 생태관광지역 지정 현황

구 분	생태관광지역 지정현황
개 념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
근 거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
생태관광 지역 지정	① 부산-낙동강하구, ② 울산-태화강, ③ 강원 양구-DMZ, ④ 강원 인제-생태마을, ⑤ 강원 평창-백룡동굴 일원, ⑥ 충남 서산-천수만철새도래지, ⑦ 충남 서천-금강하구 및 유부도, ⑧ 전남 순천-순천만, ⑨ 경북 울진-왕피천계곡, ⑩ 경남 창녕-우포늪, ⑪ 경남 남해-앵강만, ⑫ 제주 제주시-동백동산습지, ⑬ 경기 안산-대부도, ⑭ 강원 강릉-가시연습지와 경포호, ⑮ 충북 괴산-산막이옛길과 괴산호, ⑯ 전북 고창-고인돌·운곡습지, ⑰ 제주 서귀포-효돈천과 하례리 마을, ⑱ 신안 영산도(명품마을), ⑲ 완도 상서마을(명품마을), ⑳ 광주 평촌마을(명품마을)

(4)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지원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는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 및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위하여

2016년까지 틈새환경기술 및 조사연구 3,110개의 연구과제, 기업환경기술지원(컨설팅) 12,583개 업체, 누적인원 42만 2,181명에 대한 환경교육을 수행하였다.

또한, 2011년부터는 영세중소기업 환경기술지원 사업비로(환경시설 개선비 지원, 업체당 최고 2천만원) 연간 약 13억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성하여 354개(2011년 77개, 2012년 77개, 2013년 68개, 2014년 69개, 2015년 63개) 업체의 노후된 환경오염 방지 시설을 개선하였다.

표 2-4-26 추진성과

구 분	2013	2014	2015	2016	총계
기업환경 기술지원 (업체 수)	884	1,058	1,123	1,006	4,071
조사·연구사업 (연구사업 수)	192	185	161	171	709
환경교육 (교육인원 수)	4,553	3,505	3,705	4,181	15,944

제5장 사각 없는 지역복지·의료

제1절 지역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1. 주민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1)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저출산과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사회서비스 욕구가 지역·계층별로 다양하게 분출되었다. 아동의 정서·심리·행동 문제, 가족 기능의 지원, 고령자 소외 예방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해 적극적인 맞춤형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신규 개발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지역 주민의 욕구(needs)에 따라 예방적 복지서비스를 구현하고, 지자체 신규서비스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진단을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며, 사회서비스 산업화·시장 활성화를 유도하여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서 매칭비율은 국고 7 대 지방비 3의 비율로 지원되고 있으며, 세부 내역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표 2-5-1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세부내용

세부 사업명	사업 내용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직접 기획한 사회서비스 지원 (아동재활, 아동역량개발, 노인장애인 사회참여, 가족역량관리, 신체·정신건강관리)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의 산후조리 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저소득 취약계층에 재가간병·가사지원

별개의 단위사업으로 존재하던 3개의 사업을 2013년부터는 지역수요에 민감한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사회서비스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로 재정배분 방식을 전환하여 시·도가 사업 기획 및 운영의 자율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효율적 관리체계를 도입하였다. 2015년부터는 포괄보조를 제도화하여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전환하였다.

포괄보조로 전환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중앙정부(복지부)는 사업의 성과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시·도가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의 계획→집행→성과→환류의 단계에 따라 성과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연중 평가방식으로 상반기(계획, 서면평가), 하반기(성과, 현장평가)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결과에 입각하여 차년도 시·도별 사업 예산에 반영하는 환류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사회가 지역별 특성과 주민욕구를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개발·제공토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인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동, 노인 등에 대한 인적자본 형성, 건강투자 활성화,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 고령근로 촉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등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성과가 있었고, 특히, 세부 내역사업 중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원대상을 2016년에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확대하였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을 2016년에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 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로 확대한 바 있다.

아울러 지속적인 재정 투자 확대를 통해 영유아,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성인, 가족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해 생애주기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도하는 등 제공기관의 양적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 복지공동체 활성화 (민관협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15년 7월 「사회보장급여법」이 시행되면서 지역 내 사각지대 발굴 및 사회보장급여의 효과적인 제공, 그리고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명칭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하고, 협의체 참여범주를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등 사회보장영역으로 확대하여 참여 위원 수 확대와 함께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근거가 법적으로 마련되었다.

이외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구조로 확립되고, 민관연계와 협력을 통한 지역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체계로 확립될 수 있도록 위원 선출방법이나 임기, 조직·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변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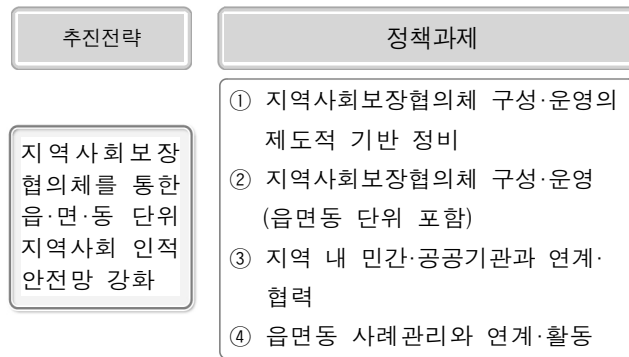
그리고 사회보장급여 제공자·이용자·관리자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지역여건에 부합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개발·발굴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권역별 지역·전국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우수사례 공모로 포상수여를 하고 있다.

표 2-5-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지원 추진성과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비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229	228	228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	3,224	3,467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전국대회 개최지원	240	220	220	

그림 2-5-1 지자체와의 협력 추진체계 구축



2016년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전국 229개 시·군·구, 3,467개 읍·면·동에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대표·실무협의체를 두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실무협의체 내에 노인, 고용, 주거 등 복지대상자별·기능별 실무분과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 심의·자문과 지역 내 복지자원의 연계·발굴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당수의 지자체가 민관협력을 위한 체계발굴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및 민관협력 활성화 시범사업을 통해 읍면동복지허브 화모델이 도출되고, 2016년 연두보고를 시작으로 관련부처와 합동 추진되어 선도지역 33개소 전담팀 구성완료 및 2016년도 1,094개소로 확산되면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이 강화되어 지역 민관 거버넌스로서 주체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3)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전달체계 구축(인력확충)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7,000명 확충을 추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인력을 지속적으로 증원하여 오고 있으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관리 대상자수는 2014년 6월 기준, 읍면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기초수급자수는 99명으로 여전히 부족하였다. 이에 따라, 찾아가는 서비스나 위기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에는 한계가 있고 복지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도 미흡하여 인력충원 효과가 반감되었다.

아울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처우개선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업무 부담, 악성 민원인의 폭행·폭언, 승진기회 부족, 행정직을 복지업무에 배치하였으나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복지인력 유지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및 관리방안(2014년 10월, 제9차 사회보장위원회 의결)」을 마련하여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과 인력확충의 효과성·지속성 제고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먼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총 6,000명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충원하기로 하였고, 이중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시행을 위한 신규 복지직 공무원 1,177명은 2014년 7월 시·군구에 우선 선발 배치하였으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복지직 3,360명(70%), 행정직 1,463명(30%) 등 4,823명을 매년 1,600명씩 충원하기로 하였다.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순증되는 복지직 공무원에 대하여 관계부처 합의로 3년간 인건비(1인당 3천만원의 서울 50%, 기타 70%)를 지자체에 국고 지원하기로 하였다.

표 2-5-3 연도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계획

(단위 : 명)

구 분	계	2014년	3개년 계획		
			2015년	2016년	2017년
계	6,000	1,177	1,600	1,600	1,623
사회 복지직	소 계	4,537	1,177	1,120	1,120
	정원 순증	4,057	1,177	960	960
	자연결원 대체	480	-	160	160
	소 계	1,463	-	480	480
행정직 등	행정직 순증	983	-	320	320
	행정직 등 재배치	480	-	160	160
	소 계	1,463	-	480	480

또한, 사회복지 인력관리 강화를 위해 기 확충인력을 포함한 신규 증원인력에 대하여 전보제한을 강화하고 시·군·구별로 복지업무 수행 행정직 정원을 정원규칙에 별도 표기토록 하여 이탈을 방지하였다. 시도 정부업무 합동평가 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운용관련 지표 신설·평가를 추진하고 복지담당공무원의 장기재직 유도 및 사기진작을 위한 인사우대를 실시하며 교육훈련 강화를 통해 복지업무 역량 강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사회복지담당공무원 6,000명 확충대책에 따라 2015년에는 신규 복지직 1,615명, 행정직 422명 등 총 2,037명을 임용·배치하였고, 2016년에는 신규 복지직 2,224명, 행정직 354명 등 2,578명을 임용·배치 완료하여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필요한 인력을 대폭 확충하였다. 2017년에는 신규 사회복지직 채용(2017년 목표 1,120명)을 위한 시험을 4월 8일(서울 3월 18일)에 실시하여 7월중 임용·배치 완료할 계획이며, 행정직의 경우 연내 신규 채용 및 재배치(목표 503명)하여 확충할 계획이다. 순증하는 복지직 공무원의 인건비 국고보조는 2012년 272억에 이어, 2013년 572억, 2014년 792억, 2015년 735억, 2016년 626억을 교부하였다.

복지인력 관리 및 교육훈련 강화를 위하여 2년 이상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직에 대해 장기재직 가산금(월 3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완료(2015년 1월)하였고,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상시학습 시간(연간 80시간) 중 사회복지 관련 교육을 연 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의 개정을 완료(2015년 1월)하였다. 그 밖에도 복지업무 담당자의 전보제한 기간 연장을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완료(2015년 11월)하였고, 복지업무 담당 경력에 대한 평정가산점 부여 근거 신설을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2015년 11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도 완료(2016년 5월)하였다.

아울러, 지자체 정부업무 합동평가시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복지수급자수’ 평가지표(역순위 평가)를 신설(2015년 7월)하여, 2016년 평가(2015년 실적)부터 적용하는 등 지자체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였다.

2. 지역수요를 반영한 주민체감형 건강증진사업 강화

(1)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199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추진해오던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은 2000년대 초반에 본격적으로 증가하면서 60여개의 사업으로 확대되었으나, 사업별 예산의 규모가 작고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지침과 평가지표 설정으로 지자체의 자율성이 제한되어 왔다. 여러 서비스가 상호연계 없이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건강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채 수동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를 자체적으로 개발·집행하도록 2013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도입하였다.

기존의 획일적 지침과 일방적 예산·사업량 통보방식에서 벗어나,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별 연간 예산배분액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건강문제 분석을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인력운용과 서비스제공 방식을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추어 능동적·자율적으로 기획·실행토록 전환하였다.

또한, 보건소 업무 추진방식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건강증진사업 평가체계를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정성적 평가로 구축하고, 평가지표 또한 지자체의 주도적 사업추진이라는 큰 틀의 변화에 적응하고 분절적 사업을 통합·연계하는 방향성을 제시하도록 지역 건강문제 분석·평가,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계획, 지역자원의 발굴·연계, 사업의 모니터링·환류 등 과정상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2015년에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보건소에서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이 참여하고 관심을 높여 주민이 체감하는 건강증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건소가 리더십을 발휘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조정함으로써 건강증진사업 외연 확장에 주안점을 두고 지원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실행역량 강화를 위하여 보건소 직급별 교육체계를 유지하고, 지역유형별 사업추진 우수사례 공유 및 미흡한 보건소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지역보건기관의 건강증진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16년에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핵심 성과지표를 선정하였다. 해당지역 내에서의 건강수준 향상도 또는 건강행태 변화도를 보여줄 수 있는 정량지표를 통해 사업과정에 대한 질 평가와 함께 종합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보건소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만성질환 위험군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2016년에는 1차 시범사업으로 전국 10개 보건소에서 천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보건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의 외연을 확대하고 다양한 건강관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2) 주민 정신건강 지원 확대

급격한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성인의 평생 정신장애 유병률이 25.4%에 달하며(2016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삼성서울병원),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 수가 2014년 기준 27.3명으로 OECD 국가 평균(12.0명)의 2.3배에 달하는 등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재활 중심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체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 조기 발견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주민 정신건강 지원 사업은 지역의 정신건강증진센터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이를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복귀를 돕는 등 국민의 정신건강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정신보건법 제13조(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 및 제13조의2(정신보건센터의 설치)를 근거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주민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 정신보건 전문기관이다. 각 시·도 단위에 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 시·군·구 단위에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증진사업·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자살예방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는 주로 전반적인 지역정신보건사업의 기획·조정·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 업무는 ① 해당지역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지역 정신보건사업 기본(시행)계획 마련, 기초조사 등 수행, ② 광역 및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효과성 평가, ③ 정신질환 인식개선, 정신보건서비스 인지도 향상 등을 위한 광고·홍보 및 캠페인 등 수행, ④ 지역 정신보건전문요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자살예방 게이트 키퍼 등 양성, 정신질환자 당사자 및 가족 인권교육, ⑤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및 업무조정, 위급상황에 대한 응급대응체계 구축 등이며, 정신건강 상담전화(1577-0199) 24시간 핫라인 운영 및 응급위기대응, 광역 정신보건심판위원회 평가 업무 지원 등의 업무도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는 주로 직접서비스 제공 중심으로 해당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문제 상담, 사례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①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 사례관리, 병원연계, 위기개입, ②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 병원연계, 상담 프로그램, 사례관리 등 자살예방 사업, ③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질환 조기발견, 정서행동특성화 검사(교육청) 사후관리, 병원연계 및 치료비 지원, 바우처연계, ④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일반상담, 심리검사, 정신 관련 행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98년 정신건강증진센터 4개소를 설치하여 개소수를 점차 확대, 2016년말 현재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22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2012년부터는 통합정신건강증진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광주광역시에 광역 및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사회 정신건강 전달체계의 중심기관으로서 통합적 정신건강증진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130개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을 위해 스트레스, 우울증, ADHD 등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전문 상담 및 치료비 지원 등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학생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교육부와 공동으로 ‘학생 정신건강 지역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학교 및 정신의료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조성하였는데, 2013년 6개 지역으로 시작하여 2015년 17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취약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정신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5년에는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2개소,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10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고, 국립서울병원 내 ‘심리위기지원단’을 중심으로 광역 및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와 함께 메르스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우울,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을 극복하기 위한 심리지원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제2차 정신건강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2016년에는 정신건강 5개년 계획인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2016년 2월)하고, 그 법적 근거인 「정신보건법」을 전면 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경남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개소(2016년 7월)로 광역단위 정신건강증진센터 확충을 완료하였다.

표 2-5-4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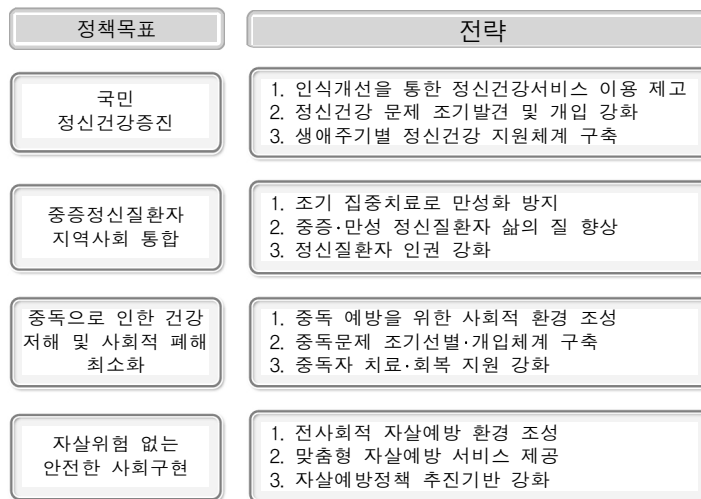
(단위 : 개소, 백만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광역센터	개소	5	7	9	11	13	14	14
	단가	768.8	768.8	768.8	768.8	768.8	768.8	792
기초센터	개소	133	149	159	169	179	179	195
	단가	152.6	152.6	152.6	160	160	165.85	170.8

*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자살예방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은 기초 센터에 지원되는 사업비임

* 단가(예산)는 국비(50%), 지방비(50%) 포함한 금액임

그림 2-5-2 정신건강 종합대책(2016.2.25)



제2절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

1. 수혜자 특성을 고려한 주민지원 시책 확대

(1) 드림스타트 지원사업

드림스타트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여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고, 나아가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정책이다. 기존의 아동복지서비스가 문제 발생 후 단편적이고 치료적인 면에 초점을 두었다면 드림스타트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탈피,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통합적인 사례관리를 통하여 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사전적이고 능동적인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

기초수급 또는 차상위 계층 등의 아동(0세~12세)과 그 가족, 임산부를 대상으로, 아동에게는 건강·복지·보육·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부모에게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및 직업훈련·고용촉진서비스 등을 연계·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동시에 가족기능 회복을 통해 안정적이고 공평한 양육여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그림 2-5-3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체계 및 서비스지원 절차 등



보건복지부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총괄하고 시·군·구가 드림스타트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통합사례관리로서, 드림스타트는 지원이 필요한 대상아동을 발굴하고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과 그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고 지역 자원(서비스)과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학교, 보육시설, 보건소 및 민간 의료기관 등 다양한 지역 내 아동 복지자원을 연계하여 경제적 후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후원 효과까지 도모하고 있다.

2007년 이후 시·군·구 드림스타트 사업을 실시하여 2007년 16개 시·군·구에서 2008년에는 32개, 2009년에는 75개로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101개, 2011년에는 131개, 2012년에는 181개, 2013년에는 211개, 그리고 2015년부터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드림스타트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드림스타트 사업을 실시하는 시·군·구가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중요성과 효과성이 인정되면서 사업초기에는 일부지역 아동(2~3개 동, 3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시·군·구에 따라서 시·군·구 내 전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였거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드림스타트 사업의 지원대상도 2007년 3,700여 명에서 2016년에는 약 36배가 증가한 134,853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양적인 확대 뿐만 아니라 드림스타트 사업의 핵심기능인 사례관리 체계의 내실화를 통해 아동 통합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대상아동 및 부모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아동과 양육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었다. 특히 아동이 어릴수록 서비스 수혜의 효과가 다른 연령대보다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2)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홀로 방치될 수 있는 지역 내 아동들에게 사회적 안전 보호망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설치 가능한 소

규모 아동이용시설로서 아동의 집에서 근거리 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 내 인적·물적 자원을 통해 홀로 방치되는 학령기 아동(18세 미만)에게 학습능력 제고, 정서지원, 문화체험 등 다양한 경험 제공으로 취약계층 아동에게 사회의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1985년부터 빈곤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해 자생적으로 설립·운영해 온 '민간 공부방'은 IMF 이후의 사회현상과 맞물려 방과 후 방임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그 수가 급증하였다.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맞벌이 가족의 증가, 근로빈곤층의 확대 등으로 인해 방과 후에 홀로 있는 아동에 대한 돌봄이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되면서, 정부는 민간 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법제화(『아동복지법』 개정 2004년 1월 29일)하여 공적 전달체제로 제도화하고 운영비 지원을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 뿐 아니라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아동의 종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아동센터의 기능 강화와 타 부처에서 시행 중인 방과후 돌봄서비스와의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부처 간 연계협력 업무협약 체결(2012년 10월) 이후, 2013년에 지역아동센터(보건복지부), 초등돌봄교실(교육부), 방과후아카데미(여성가족부) 등 부처별로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연계하였고, 전국적으로 지역아동센터 4,107개, 초등돌봄교실 11,920실, 방과후아카데미 250개소가 연계하여 범정부 방과후 돌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하여 전국 단위 시·군·구·교육지원청에서 방과후 돌봄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범정부 통합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2016년 기준).

표 2-5-5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지원 규모(편성기준)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편성 개소	500	902	1,800	2,088	2,788	2,946	3,260	3,500	3,742	3,989	4,113	4,113
지원단가 (만 원/월, 개소)	200	200	200	220	상반기 220 하반기 320	320	370	395	420	433	443	453

표 2-5-6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내용

프로그램명	내 용
보호프로그램	일상생활관리, 위생건강관리, 급식지도, 생활안전지도, 안전귀가지도, 5대 안전의무교육
교육프로그램	숙제지도, 교과학습지도, 예체능활동(미술/음악/체육), 적성교육(진로/독서/요리/과학등), 인성·사회성 교육, 자치회의 및 동아리 활동
문화프로그램	관람·견학, 캠프·여행, 공연, 행사(문화/체육 등)
정서지원	연고자 상담, 아동 상담, 보호자교육, 행사·모임
지역사회연계	기관홍보, 인적연계, 기관연계

표 2-5-7 연령별 이용아동 현황(2016.12월말 기준)

(단위 : 명)

계	미취학	초등학생 저학년	초등학생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탈학교 등
106,668 (100%)	1,872 (1.8)	41,750 (39.1)	40,390 (37.9)	18,156 (17.0)	4,377 (4.1)	123 (0.1)

자료 : 2016년 12월 기준

(3)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을 위한 요양제도 도입 추진(2008년 100대 국정과제) 및 VIP 주재 국민경제 대책회의 서민희망과제 채택(2010년)에 따라 기존 활동보조사업을 확대하여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행(2011년 10월)되었다. 동 제도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장애인의 활동지원 인정조사결과와 생활환경에 따라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급여액을 매월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제공함으로써(기본급여(1~4등급) 43.5~109.1만원, 독거 등 생활환경에 따라 추가급여(9.3~252.3만원))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토대로 장애인활동지원이 본격 제도화(시행 2011년 10월 5일)됨에 따라 대상자 수를 확대(30천명→65천명)하였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가족수발자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고,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서비스 내용 확대로 활동보조인(방문간호사 등) 등 유휴인력에 대한 추가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19천명→62천명)을 확대하였다. 위탁사업기관으로 국민연금관리 조직 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운영부서인 '장애인활동지원부'를 신설하고 292명의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인정조사 전문화는 물론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신청 안내와 제도의 인지도 제고 및 정책 홍보를 실시하였다.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의 욕구에 부응하는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였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정부 재정지원에 의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저소득층 중년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되었다.

또한 2013년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시범평가를 거쳐 2014년부터 활동지원기관에 대해 유형별로 3개년 평가를 실시하여, 장애인에게는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평가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였다. 또한 활동보조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활동보조인 교육시간을 늘리고 실기 및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하였다. 활동지원기관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우수 상위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등 포상을 실시하였다. 또한 전년도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역량강화를 지원하여 양적 팽창 뿐 아니라 질적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였다.

아울러, 국정과제(50-2, 중증장애인 상시 돌봄체계 구축) 추진을 위한 조치사항으로 활동지원 신청자격을 중증장애인 전체(장애1~3급, 2015년 6월)로 확대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성인 발달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주간활동서비스(가칭) 등 활동지원급여 다양화를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상시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보호체계의 일환으로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시스템을 구축(2013년 10월~)하였으며, 응급안전서비스 제공지역 및 대상 확대와 독거노인 사업과의 전달체계 통합을 통해 화재·가스사고 등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소방서와 신속히 연계하고, 시군구별 지역센터를 중심으로 안전확인 등 오프라인 안전망체계를 구축하여 2014년 32개 지역, 3,500명을 2016년에 92개 지역, 10,000여명으로 확대 제공하는 등 중증장애인 상시보호를 위한 통합 돌봄 제공 체계 마련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4)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사업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건강관리, 상담 등의 종합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청소년 기본법」 제48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관내 청소년 공공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저소득맞벌이·한부모 등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들이 방과후 홀로 방치되지 않도록 활동·복지·보호·지도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함으로써, 취약계층 가정의 사교육비 절감 및 방과후 비행 노출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학교와 가정·지역사회·민간기업 등을 연계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공적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2012년부터 전면 시행된 주5일 수업에 따른 다양한 복지 서비스 수요에 부응하여 계층 간 격차 완화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표 2-5-8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개요

구분	내 용						
사업목적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초4~중3)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건강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성장 및 자립역량 배양						
사업대상	저소득·맞벌이·한부모·장애·3자녀이상·조부모·다문화가정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4~중3)						
	연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개소수	46	100	150	185	178	161
	인원	2,350	4,200	6,300	7,680	7,245	6,645
	연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개소수	200	200	200	200	244	250
	인원	8,200	8,200	8,200	8,043	9,490	9,745
시행주체	여성가족부, 17개 시·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설치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관내 청소년 공공시설						
사업기간	2016. 1. ~ 12월 연중 상시 실시(토요일, 방학 중에도 운영)						
사업	250개소 운영						
예산	개소당 1.5억원(국비지원율 : 서울 30%, 지방 50%)						

(5) 청소년시설 확충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사업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건전한 활동 공간 제공을 위해 전국적으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 청소년수련관 1개소 이상,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집 1개소 이상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수련시설 건립 및 기능보강을 지원하며, 자유학기제, 주5일 수업제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청소년 여가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2016년도에는 건립지원 37개소, 기능보강 65개소를 지원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건립지원 51개소, 기능보강 79개소를 지원 중에 있으며 그 결과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이 2013년 505개소에서 2016년말 537개소로 32개소가 증가하였다.

청소년수련시설은 2016년 말 현재 청소년수련관 185개소, 청소년문화의집 248개소, 청소년수련원 191개소, 청소년야영장 45개소, 유스호스텔 120개소, 청소년특화시설 10개소 등 전국에 799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표 2-5-9 청소년수련시설 현황(2016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계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 호 스텔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계	799	185	248	191	45	120	10
	공공	537	183	243	62	19	20	10
	민간	262	2	5	129	26	100	0

표 2-5-10 2016년도 청소년시설 확충사업 지원현황

(단위 : 개소, 억원(국고))

구 분		계	건립지원			기능보강 지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시설 확충	지원개소	102	5	31	1	65
	지원액	481	35	253	20	173

2.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1) 어린이집 확충

국공립어린이집은 부모의 선호도가 높으나 전체 어린이집의 7.0%(2016년 말)에 불과하여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다.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하여 공공보육인프라 확대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대상 선정은 농어촌 및 저소득자 밀집지역, 산업단지, 군 관사 인근지역,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다문화가구 밀집 지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시설 접근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은 개소당 330㎡까지 지원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396㎡까지 지원하여 최대 3억 2,702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내 의무어린이집 중 지자체가 무상임대 받아 국공립으로 운영하려는 시설에는 최대 2,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2016년 말 기준 2,859개소가 설치·운영되어 175,929명의 아동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2014년 150개소, 2015년 150개소, 2016년 201개소를 선정·지원하였으며, 제3차 저출산·고령화 시행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매년 150개소씩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을 기부채납한 기업 근로자의 자녀 및 공동주택 입주민 자녀에게 입소우선권을 부여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지·건물을 매입하거나 기부채납 받은 경우 단독·공동주택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2015년 1월)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 등 민간 기부채납 활성화, 가정어린이집·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등의 국공립 전환을 적극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추진할 예정이다.

(2)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언어발달 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

로 성장하고 나아가 글로벌 인재로 활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언어발달지도사를 배치하거나 센터 인근 보육시설로 파견하여, 보육시설 원아인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언어발달지원서비스는 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교육이 필요한 아동에게 어휘·구문 발달 촉진, 대화·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 발달 촉진을 위한 적절한 언어교육을 실시하여 원만한 언어발달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아동의 부모에게는 상담과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도 아동의 언어발달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2009년 87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100명의 언어발달지도사를 배치하기 시작하여 2016년에는 205개 센터에 300명으로 확대 배치하였다.

표 2-5-11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도서비스 운영 실적(2013~2016)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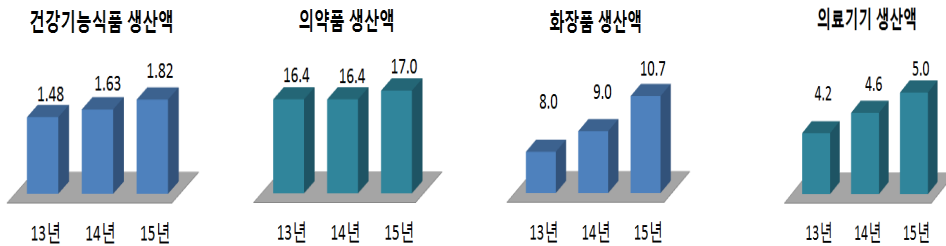
구 분	계		진단아동 수		교육아동 수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2013년	185,436	14,316	23,976	8,864	161,460	5,452
2014년	212,790	14,602	25,272	9,101	187,518	5,501
2015년	225,359	15,253	28,147	9,643	197,212	5,610
2016년	232,847	15,379	28,520	9,731	204,327	5,648

(3) 식의약품 안전감시 및 대응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먹고 사용하는 식품, 의약품 등 고품질 제품 선호와 안전과 좋은 제품의 사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2015년 식품산업 생산규모는 123조원으로 2011년 105조원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 또한 화장품 산업은 최근 5년 평균 성장률이 13.5%로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림 2-5-4 연도별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생산액

(단위 :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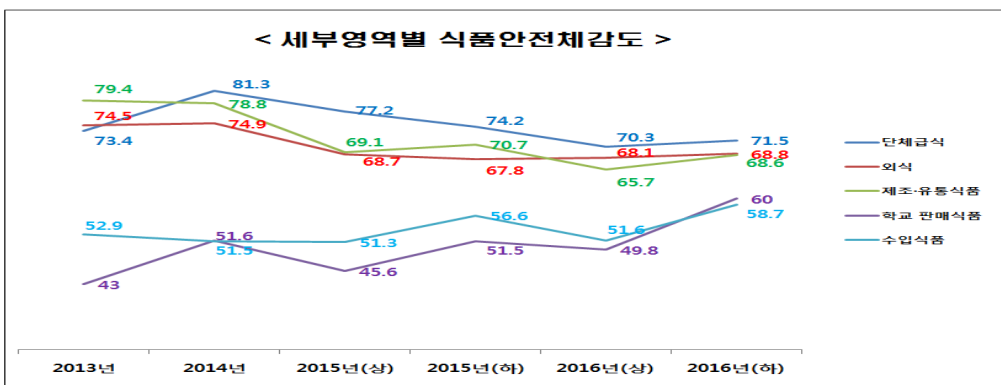


이러한 사회적인 메가트렌드 분위기에서 식약처의 정책목표를 안전한 식의약,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로 정하고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16개 시도와 협력하여 유통중인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식의약품 안전 감시 및 대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매년 16개 시도와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50여 억원의 국고 투자를 실시하여 제품을 수거하고 수거된 제품에 대한 시험분석을 하여 안전한 제품이 유통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2016년에는 서울, 부산 등 16개 시도에 4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식품수거검사 5,000건 의약품 및 화장품, 한약재 등 2,880건에 대하여 제품을 수거검사하여 16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험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부적합 제품은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조치등을 취하여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림 2-5-5 세부영역별 식품안전체감도

(단위 : %)



제3절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1.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통한 의료취약지 해소

(1)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육성

농어촌 취약지는 인구가 적고 면적은 넓은 반면, 의료 인프라는 부족하여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이러한 문제는 응급상황에서 더 심각하게 부각된다. 취약지의 일반적인 환자는 먼 도심지 병원으로 이동하는 경우 불편이 발생하지만, 응급환자는 일정 시간 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하거나 예후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취약지에서는 환자수가 적어 수익이 나지 않아 의료인력이 근무를 기피하여 더 많은 인센티브가 필요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응급의료기관을 유지하는 것이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와 지자체는 농어촌 취약지의 응급의료기관이 구축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응급환자가 적정 시간 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안전망을 운영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있다.

응급의료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6년부터 응급의료 취약지역 내 의료기관에 당직운영비를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2010년 응급의료기금이 500억원 규모에서 2,000억원 규모로 확충되고 2010~2012년 응급의료선진화 계획에 중점추진사업으로 채택되면서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군 지역에 응급의료기관을 새로 구축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농어촌의 인구가 감소하는 등 사회경제적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경영난을 이유로 기존 군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문을 닫거나 응급의료기관을 반납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도부터는 군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이 1개소 밖에 없어 문을 닫을 경우 응급의료 사각지대가 되는 지역의 기관까지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2013년도부터는 모든 군 지역 응급의료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응급의료 안전망을 운영하였다. 2015년부터는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 대상을

현재 행정구역상 군(郡)지역(83개)에서 응급의료취약도가 높은 도·농 복합시(19개)까지 확대하여 지원하였다.

표 2-5-12 연도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연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기관수	28	37	44	48	45	52	71	87	103	115	108
지원액	3,667	3,275	4,305	5,950	21,549	18,558	18,511	23,372	22,866	23,908	24,891

군 지역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2006년 37억원에서 2016년 249억원까지 늘어나고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군이 2006년 43개에서 2016년 16개까지 감소함에 따라, 보조금을 응급의료 안전망 유지에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관리·감독 하는 것이 중요해졌으며 양적인 인프라 확충에서 질적인 의료 질 개선으로 정책목표를 이동할 조건이 충족되었다.

따라서 매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급하고 있으며, 시설·장비·인력에 대한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삼진아우제를 시행하여 질적 수준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모든 응급의료기금 사용에 대해 회계법인의 감사를 실시하여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담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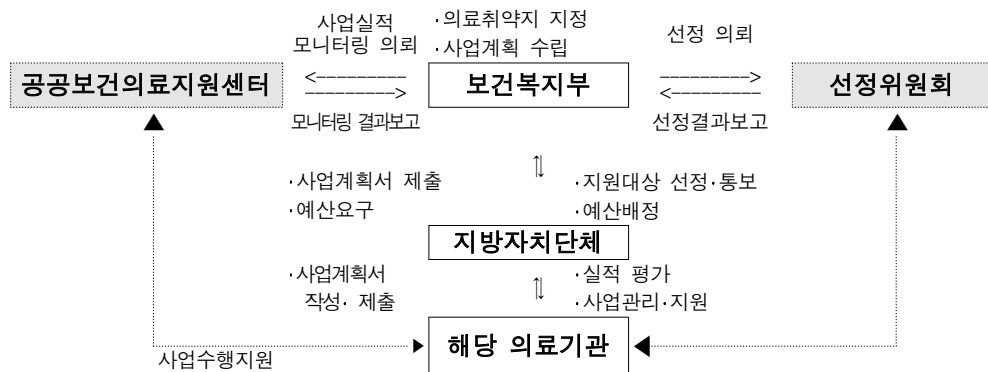
그간의 노력으로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군은 16개까지 감소하였으나 이 지역에 추가적인 응급의료기관을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응급의료기관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담인력 이외에도 야간·휴일 진료를 분담할 당직의사들이 필요하기에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 또는 종합병원이 지역 내 존재하여야 한다. 하지만 지역 내 의료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는 이런 의료기관이 없어 지원금만으로 응급의료기관을 구축하기 어렵다.

이에 응급의료기관을 구축할 의료 인프라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접근방식을 바꿔 인근 대도시의 거점병원에서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응급실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거점병원과 취약지 병원 간 원격협진을 통해 의료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2) 필수의료 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원

의료자원 분포의 불균형으로 일부농어촌 군 지역은 필수의료서비스를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받는 등 의료접근성이 현저히 낮다. 이런 지역 간 의료서비스 접근성의 격차는 취약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어렵게 하여 결과적으로 건강 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약지 주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하고 지역 내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시설·장비·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림 2-5-6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원 사업 추진체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개정(2013년 2월 시행)으로 의료공급이 부족한 의료취약지 지정, 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의료취약지의 지정·고시) 및 제13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취약지에 대하여 보건의료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 및 인력의 공급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의료취약지 지정·지원을 위해 ‘지역별 의료실태 분석을 통한 의료취약지 도출 방안 연구(2012년 12월~2013년 6월, 주관: 건보공단, 연구: 국립중앙의료원)’ 및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모델 및 관리방안 연구’(2013년 9월~12월, 국립중앙의료원)를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의료취약지 유형별 거점의료기관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연구를 통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부족한 필수 진료 과가 부족한 지역을 필수의료취약지역으로 도출하고, 필수의료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 의료기관을 선정한다. 1차 연도에는 국고지원 한도 내에서 시설·장비비와 인건비(최대 6개월분), 2차 연도 이후부터는 연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현재 병원급 소아청소년과를 2014년 1개소, 2015년 1개소, 2016년 2개소, 2017년 1개소에 대하여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표 2-5-13 연도별 의료취약지 사업 선정 및 지원 현황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 고
기관수	1	2	4	5	
예산(국비)	222	284	568	659	

(3)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지원

의료기관의 대도시 쏠림 현상으로 농어촌 의료공백, 저출산에 따른 출산 인프라 감소 등으로 분만취약지역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분만취약지가 증가하여 농어촌 산모는 산전산후 진찰 및 분만을 위해 원거리 이동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동 사업은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취약지역에 산부인과가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장비비 등을 지원하여 분만취약지를 해소하고, 분만의료기관까지의 치료접근성을 향상하여 적절히 산전관리를 받도록 하고 안전한 분만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2011년부터 분만취약지역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분만산부인과 설치 가능여부(분만·외래·순회진료산부인과)로 구분하여 시설·장비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매년 취약지로 도출된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고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분만 취약지에 대한 체계적 분석 및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부내 관련과 및 외부 전문가로 T/F팀을 구성·운영(2009년 11월~2010년 4월)하여 국비지원 규모를 검토하였고, 산부인과 분만실 유무의 평면적 접근에서 탈피하여 취약지 기준을 선정하고 특성에 맞는 지원방향 도출(2010년 5월) 등 분만취약지 개선방안을 추진하였다.

2011년 시범사업을 통해 분만산부인과 3개소를 시작으로 2012년 분만산부인과 2개소, 외래산부인과 2개소, 2013년 분만산부인과 4개소, 2014년 분만산부인과 2개소, 외래산부인과 7개소, 순회진료산부인과 5개소, 2015년 분만산부인과 1개소, 외래산부인과 5개소, 2016년 분만산부인과 2개소, 외래산부인과 2개소, 2017년에는 기존 외래산부인과를 분만산부인과로 2개소 전환하여 지원하였다.

표 2-5-14 연도별 분만취약지 사업 선정 및 지원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기관수	3	7	11	25	31	35	35(외래→분만전환, 2개소)
예산(국비)	1,875	2,200	3,950	4,875	5,525	5,725	6,850

제6장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

제1절 추진배경 및 현황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노무현정부에서 수도권 과밀과 지방의 과소를 해결하고, 국토의 다핵구조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및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추진하였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현재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명칭이 변경됨)를 통해 재원이양과 권한의 지방분권을 통해 자립형 지방화 역량을 제고하고, 중추관리기능의 지방분산을 통하여 지역에 고급일자리를 확보하여 인재의 지방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해 민간 경제활동의 지방이전 촉진, 지역의 혁신 역량 제고, 지방세수 증가 및 지역경제활성화, 고학력 취업기회의 확대로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 유도, 국제교류 확대로 지역의 국제화에 기여, 지역 홍보 및 정체성 향상 등을 기대하였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건설교통부,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방안, 2005.4). 특히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은 민간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유발할 뿐 아니라 민간기업의 이전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국가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의 이전이 선행되어야만 기업 본사의 이전이 촉진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건설교통부, 2005.4).

이를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 발표(2005.6, 국무회의) 이후 혁신도시특별법 제정(2007.1), 개발·실시계획 수립(2007.5) 등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에 따라 10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하여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부지조성 등은 거의 완료되고, 공공기관 이전도 본궤도에 돌입하여 혁신도시 115개, 세종 20개, 개별이전 19개 등 총 154개 기관이 이전 완료 및 추진중에 있다.

혁신도시 건설의 1단계(2007~2014)가 혁신도시의 인프라 구축과 공공기관의 이전이라면 2단계(2015~2020)에는 종사자 및 그 가족의 정착과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이

며, 3단계(2021~2030)는 혁신 확산으로 설정하였다. 현재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 도시 건설 3단계 중 2단계 진입시점에서 1단계의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함으로써 혁신도시 건설의 목표를 달성하고 국토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에 따라, 이하에서는 기 이전한 공공기관과 종사자가 지역경제에 미친 유·무형적 효과를 점검한다.

표 2-6-1 광역지자체별 이전대상 공공기관 수 및 직원 수

(단위 : 개소, 명)

지역 명	이전대상 공공기관 수	이전대상 직원 수	지역 명	이전대상 공공기관 수	이전대상 인원 수
세종특별자치시	20	3,854	전라북도	12	5,559
부산광역시	13	3,126	광주·전남	16	6,569
대구광역시	11	3,469	경상북도	12	5,447
울산광역시	9	3,142	경상남도	11	4,004
강원도	12	6,060	제주도	8	798
충청북도	11	3,116	개별 이전	19	5,447

자료 : 지역발전위원회(2017.4), 『경남 혁신도시 관리카드』

제2절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분야별 추진효과

1. 개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유·무형적 지역발전효과는 크게 인구적 효과, 경제적 효과, 사회문화적 효과, 지역사회연계효과 등으로 구분 가능하다. 첫째, 인구적 효과는 인구유입, 인구증가, 지역의 고학력 인구 취업기회 확대(고용증가)로 파악할 수 있다. 둘째, 경제적 효과는 이전할 공공기관이 납부할 지방세수 증가효과,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집행효과(물품구입비 및 용역비 지출 등), 건물관리비 및 보수비 지출효과, 직원들이 지출할 소비지출효과, 지역산업발전효과 등이 있다. 셋째, 사회문화적 효과는 지방교육·문화수준 향상효과, 관광객 증가효과, 지역홍보 및 정체성 확보로 인한 지역이미지 제고효과, 국제화 효과 등이 있다. 넷째, 지역사회연계효과는 이전공공기관과 대학과의 산학연계(교수-연구용역, 학생-인턴십, 취업 등), 이전공공기관과 기업과의 산-산연계(지식이전으로 인한 지역기업의 역량제고, 이전공공기관과 연계한 지역산업육성, 스핀오프 등), 지역인재의 채용으로 인한 고급인력의 역외 유출 방지, 지역의 산학연 클러스터 및 지역혁신체제 구축 효과 등이 있다.

2.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인구증가효과

10개 혁신도시에 계획목표(2030년 약27만명) 대비 약 30%(78,973명)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5년 6월말 기준). 지역별로는 계획목표 대비 최고 112%(부산)~최저 14%(충북)까지 분포하였다. 이전인구가 부산에서 계획목표를 상회한 것은 첫째, 이전정책 추진 당시 공공기관 이전인원에 비해서 2015년 6월 말 기준 종사자가 증가하였다는 점, 둘째, 도시여건이 종사자가 거주하기 유리한 도시내 지구형으로 이전하여 타 지역에 비해 건축·이전이 빨랐다는 점, 셋째, 토지수용 및 공공주택건설이 빨랐다는 점, 넷째, 지역내 공동 주택수요가 많았다는 점 등이 작용하였다.

표 2-6-2 혁신도시 인구 현황

(단위 : 명, %)

구분	계	부산	대구	광주 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계 획	271,000	7,000	22,000	50,000	20,000	31,000	42,000	29,000	27,000	38,000	5,000
'15년 9월	78,973	7,819	4,110	8,396	16,582	5,775	5,783	17,698	4,797	6,870	1,143
'16년 12월	149,570	7,699	12,151	21,406	19,920	17,802	11,685	25,161	16,332	13,468	3,946
계 획 대 비 비 율	55.2	110.0	55.2	42.8	99.6	57.4	27.8	86.8	60.5	35.4	78.9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5.9, 지역발전위원회 『경남 혁신도시 관리카드』 2017.4

주요 혁신도시의 인구 변화를 보면, 강원도 원주시 인구는 2013년 1,056명, 2014년 2,750명 증가하였으며, 특히 혁신도시가 위치한 반곡관설동 인구는 2014년 3,464명 증가하였다. 또한 전라북도 완주군 인구는 2012년~2014년 3년 사이 3,000여명 증가하였다. 전라남도 나주시 빚가람동은 2015년 5월 기준 3,011가구 7,456명을 기록하였으며, 2014년 12월 기준 전체 전입자 중 40세 미만은 2,325명으로 70.5% 차지하는 등 중년층 중심으로 유입되었다. 제주도 서귀포시 인구는 2012년~2014년 3년간 7,244명의 인구가 증가하였다.

2015년 6월 30일 기준 충북 혁신도시의 세대수 및 인구를 보면 2,264세대, 5,819명이 전입신고를 마쳤다. 전입신고 세대중 59.5%는 충청북도 내에서, 40.5%는 충청북도의 지역에서 이동하였다. 전입신고 인구중 62.7%는 충청북도 내에서, 37.3%는 충청북도 외 지역에서 이동하였다.

2015년 6월 30일 기준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세대수 및 인구를 보면 3,390세대, 8,396명이 전입신고를 마쳤다. 전입신고 세대중 52.8%는 광주·전남 내, 47.2%는 광주·전남 외 지역에서 이동하였다. 전입신고 인구중 59.2%는 광주·전남 내, 40.8%는 광주·전남 외 지역에서 이동하였다.

2015년 6월 30일 기준 경북·김천 혁신도시의 세대수 및 인구를 보면 1,662세대, 4,576명이 전입신고를 마쳤다. 전입신고 세대중 63.5%는 경북·김천 내, 36.5%는 경북·김천 외 지역에서 이동하였고, 전입신고 인구중 72.1%는 경북·김천 내, 27.9%는 경북·김천 외 지역에서 이동하였다. 타 지역 인구유입 비중이 낮은 이유는 KTX역 인근입지, 수도권과 거리, 중소도시, 나홀로(단신, 단독)이주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5년 6월 30일 기준 경남·진주 혁신도시의 세대수 및 인구를 보면 2,258세대, 6,870명이 전입신고를 마쳤다. 전입신고 세대중 84.0%는 경남·진주 내, 15.9%는 경남·진주외 지역에서 이동, 전입신고 인구중 85.4%는 경남·진주 내, 14.6%는 경남·진주외 지역에서 이동하였다. 타 지역 세대 및 인구 유입비중이 낮은 이유는 중소도시, 타 지역과 진주의 거리, 기관이전시기와 주택 특별분양 시기의 불일치, 기관의 인사이동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2-6-3 혁신도시 내 전입 세대 및 인구 현황

(단위 : 세대, 명, %)

구분	전입	총계	시 또는 도 내부	시 또는 도 외부 (타 지역)
충북	세대수(세대,%)	2,264(100.0)	1,348(59.5)	916(40.5)
	인원수(명,%)	5,819(100.0)	3,648(62.7)	2,171(37.3)
광주 전남	세대수(세대,%)	3,390(100.0)	1,789(52.8)	1,601(47.2)
	인원수(명,%)	8,396(100.0)	4,973(59.2)	3,423(40.8)
경북 김천	세대수(세대,%)	1,662(100.0)	1,054(63.5)	608(36.5)
	인원수(명,%)	4,576(100.0)	3,299(72.1)	1,277(27.9)
경남 진주	세대수(세대,%)	2,258(100.0)	1,898(84.0)	360(15.9)
	인원수(명,%)	6,870(100.0)	5,870(85.4)	1,000(14.6)

자료: 각 시도 혁신도시 담당부서 내부자료(2015.6월말 기준)

기타 다른 혁신도시는 전입인구의 전출지를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내 외부 인구유입률이 높을수록 지역이 개방성을 갖게 되며 인구적 측면과 소비지출 측면에서 지역발전효과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광주·전남 빛가람 혁신도시가 경북 혁신도시에 비해 타 지역에서 혁신도시로의 전입 비율과 전 가족 동반 이주율이 높은 이유는 공동혁신도시로 도시규모가 2배라는 점, 대도시(광주)와 가깝다는 점 외에도, 아파트 건설 진척도가 빠르고, 혁신도시 입지여건이 양호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경남혁신도시가 경북 혁신도시에 비해 전가족 동반이주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 내로의 전입인구 비중이 낮은 것은 아파트 건설 진척도 및 공급문제, 진주시내의 양호한 거주여건 등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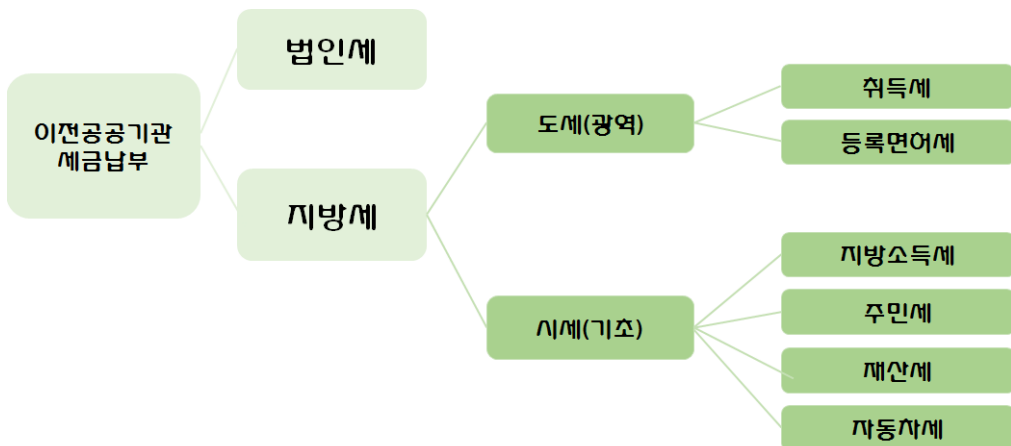
3.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세수증대효과

혁신도시특별법 제 62조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로 법인세를 산정하여 5년 동안 감면 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2015년 1월부터 혁신도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에 대한 부분을 조례로 정하였다. 이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재정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세금의 종류에는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되며, 이중 이전공공기관과 주로 관련되는 세금으로는 국세중 법인세, 지방세로는 다시 도세(광역)와 시세(기초)로 구분 가능하며 주로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하게 될 세금은 아래 그림과 같다.

도세(광역)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가 있으나(지자체 마다 등록면허세를 하나의 세목으로 합친 곳도 있음) 아직 대부분 납기가 도래 하지 않았다. 시세(기초)에는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있다.

그림 2-6-1 이전 공공기관 법인세 및 지방세 종류



이전공공기관들은 법인세를 감면받고 있으며 이전지역에 따라 감면률이 상이한데, 예컨대 전남, 전북(완주), 경북, 충남 제주로의 이전기관들은 7년 100%, 3년 50% 감면

혜택을 받고, 부산, 대구, 울산, 강원, 전북(전주), 경남, 충북은 5년 100%, 2년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이전공공기관들은 취득세는 100%감면, 재산세는 5년 100%, 3년 50% 감면된다.

이외에도 이전공공기관 차원에서는 국세 중 규모가 큰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고, 지자체 차원에서는 규모가 작은 자동차세(기관보유) 등 다양한 세금이 있다.

이전공공기관의 이러한 세금납부 현황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의해 살펴보면 2014년 이전공공기관의 법인세 납부액은 48개 기관 약 3,500억원으로 나타났다. 2014년 현재 이전공공기관의 법인세 납부 실적을 지역별로 보면 울산이 약 120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도가 약 87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

표 2-6-4 이전공공기관 법인세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13년		2014년		계
	기관수	납부액	기관수	납부액	
부산	3	0	9	111,568,849	111,568,849
대구	2	36,010,834	7	7,541,387	43,552,221
광주·전남	-	0	10	60,966,599	60,966,599
울산	-	0	6	122,657,188	122,657,188
강원	1	0	4	870,633	870,633
충북	1	1,219,674	5	10,499,649	11,719,323
전북	1	4,912,575	1	4,234,496	9,147,071
경북	-	0	3	257,922	257,922
경남	-	0	3	32,092,972	32,092,972
계	8	42,143,083	48	350,689,695	392,832,778

자료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http://www.alio.go.kr>)

법인세 납부기관은 2013년 8개 기관에서 2014년 48개 기관으로 6배 증가, 납부액은 약 8배 증가하였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은 0개에서 10개로 증가하였으며, 법인세 액수는 울산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처럼 공공기관의 이전추이에 따라 법인세 납부는 향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이전공공기관들의 지방세 납부 실적을 보면, 2014년도 197,625백만원이었는데, 이는 전년대비 약 4배 가량 증가한 금액이다. 이전기관들이 2012년까지 13개,

2013년까지 22개, 2014년까지 60개 기관이 이전함에 따라 지방세 납부액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전공공기관들은 도세(광역시)를 면제받고 재산세 또한 납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전 전에 비해 이전 후 30% 정도의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다.

2015년 이후의 지방세 유형별, 지역별 납부 현황을 보면, 이전 초기에는 취득세를 중심으로 한 광역지자체 세수가 많았으나, 점차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 기초지자체의 세수원이 확대되고 있어 열악한 지방소재 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6-5 지역별·유형별 지방세 납부 현황 (2016.12월 말 기준)

(단위 : 천원)

혁신 도시	구 분	'15년② ('15.12월말)	'16년② ('16.12월말)	증감 (②-①)
합계	합계	744,210,422	471,355,677	-272,854,745
	취득세(부동산, 차량 등)	251,697,940	259,539,631	7,841,691
	등록면허세(등록 및 면허세)	13,701,324	10,452,880	-3,248,444
	주민세(균등분, 종업원분, 재산분)	6,880,744	9,385,863	2,505,119
	지방소득세	389,927,228	100,375,665	-289,551,563
	재산세(토지, 건축물, 주택 등)	37,551,122	40,178,895	2,627,773
	자동차세	10,393,107	14,901,844	4,508,737
	지역자원시설세	6,737,966	8,100,016	1,362,050
	지방교육세	27,320,991	28,420,884	1,099,893
부산	소계	405,583,446	36,728,510	-368,854,936
	취득세(부동산, 차량 등)	29,265,459	2,670,886	-26,594,573
	등록면허세(등록 및 면허세)	3,265,739	122,534	-3,143,205
	주민세(균등분, 종업원분, 재산분)	649,802	836,458	186,656
	지방소득세	363,035,868	28,730,421	-334,305,447
	재산세(토지, 건축물, 주택 등)	3,787,303	2,352,480	-1,434,823
	자동차세	696,600	513,491	-183,109
	지역자원시설세	1,212,557	859,371	-353,186
	지방교육세	3,670,118	642,869	-3,027,249
대구	소계	38,414,872	48,682,839	10,267,967
	취득세(부동산, 차량 등)	25,040,380	26,633,443	1,593,063
	등록면허세(등록 및 면허세)	1,838,902	1,200,296	-638,606
	주민세(균등분, 종업원분, 재산분)	1,016,316	1,266,649	250,333

	지방소득세	2,834,290	8,986,594	6,152,304
	재산세(토지, 건축물, 주택 등)	2,959,880	5,030,843	2,070,963
	자동차세	299,519	586,421	286,902
	지역자원시설세	1,478,797	1,803,639	324,842
	지방교육세	2,946,788	3,174,954	228,166
광주 전남	소계	85,060,953	96,172,893	11,111,940
	취득세(부동산, 차량 등)	61,754,810	60,688,631	-1,066,179
	등록면허세(등록 및 면허세)	2,560,103	2,428,102	-132,001
	주민세(균등분, 종업원분, 재산분)	1,877,601	2,339,640	462,039
	지방소득세	6,177,379	14,609,709	8,432,330
	재산세(토지, 건축물, 주택 등)	4,405,427	6,966,791	2,561,364
	자동차세	714,417	1,348,001	633,584
	지역자원시설세	1,243,226	1,740,712	497,486
	지방교육세	6,327,990	6,051,307	-276,683
울산	소계	23,343,000	38,584,200	15,241,200
	취득세(부동산, 차량 등)	8,904,000	14,313,000	5,409,000
	등록면허세(등록 및 면허세)	289,000	481,200	192,200
	주민세(균등분, 종업원분, 재산분)	898,000	1,358,000	460,000
	지방소득세	5,726,000	11,912,000	6,186,000
	재산세(토지, 건축물, 주택 등)	3,927,000	4,396,000	469,000
	자동차세	1,091,000	2,479,000	1,388,000
	지역자원시설세	448,000	668,000	220,000
	지방교육세	2,060,000	2,977,000	917,000
강원	소계	49,285,250	50,311,839	1,026,589
	취득세(부동산, 차량 등)	28,990,571	30,151,985	1,161,414
	등록면허세(등록 및 면허세)	1,891,146	1,456,940	-434,206
	주민세(균등분, 종업원분, 재산분)	637,961	727,001	89,040
	지방소득세	4,359,379	4,181,477	-177,902
	재산세(토지, 건축물, 주택 등)	6,877,969	6,901,461	23,492
	자동차세	4,438,378	4,571,520	133,142
	지역자원시설세	0	0	0
	지방교육세	2,089,846	2,321,455	231,609
충북	소계	25,070,854	37,998,604	12,927,750
	취득세(부동산, 차량 등)	18,300,508	27,994,467	9,693,959
	등록면허세(등록 및 면허세)	680,823	1,129,574	448,751

	주민세(균등분, 종업원분, 재산분)	401,667	639,050	237,383
	지방소득세	1,473,908	2,676,554	1,202,646
	재산세(토지, 건축물, 주택 등)	1,898,363	1,898,363	-
	자동차세	297,760	863,613	565,853
	지역자원시설세	264,417	265,910	1,493
	지방교육세	1,753,408	2,531,073	777,665
전북	소계	29,812,611	38,697,000	8,884,389
	취득세(부동산, 차량 등)	19,219,873	24,929,000	5,709,127
	등록면허세(등록 및 면허세)	951,800	817,000	-134,800
	주민세(균등분, 종업원분, 재산분)	262,258	596,000	333,742
	지방소득세	1,444,813	3,733,000	2,288,187
	재산세(토지, 건축물, 주택 등)	3,098,563	3,184,000	85,437
	자동차세	1,629,422	1,963,000	333,578
	지역자원시설세	696,506	776,000	79,494
	지방교육세	2,509,376	2,699,000	189,624
경북	소계	31,911,564	47,471,677	15,560,113
	취득세(부동산, 차량 등)	23,390,895	32,602,492	9,211,597
	등록면허세(등록 및 면허세)	889,524	1,156,070	266,546
	주민세(균등분, 종업원분, 재산분)	26,897	69,442	42,545
	지방소득세	1,406,110	4,756,852	3,350,742
	재산세(토지, 건축물, 주택 등)	2,784,106	3,440,622	656,516
	자동차세	522,249	1,100,793	578,544
	지역자원시설세	642,607	1,001,362	358,755
	지방교육세	2,249,176	3,344,045	1,094,869
경남	소계	47,230,559	71,226,279	23,995,720
	취득세(부동산, 차량 등)	29,640,452	36,686,368	7,045,916
	등록면허세(등록 및 면허세)	1,332,367	1,651,374	319,007
	주민세(균등분, 종업원분, 재산분)	1,075,984	1,445,619	369,635
	지방소득세	3,247,864	19,832,862	16,584,998
	재산세(토지, 건축물, 주택 등)	7,443,254	5,214,767	-2,228,487
	자동차세	701,858	1,210,439	508,581
	지역자원시설세	703,921	865,315	161,394
	지방교육세	3,084,859	4,319,535	1,234,676
제주	소계	8,497,313	5,481,836	-3,015,477
	취득세(부동산, 차량 등)	7,190,992	2,869,359	-4,321,633

	등록면허세(등록 및 면허세)	1,920	9,790	7,870
	주민세(균등분, 종업원분, 재산분)	34,258	108,004	73,746
	지방소득세	221,617	956,196	734,579
	재산세(토지, 건축물, 주택 등)	369,257	793,568	424,311
	자동차세	1,904	265,566	263,662
	지역자원시설세	47,935	119,707	71,772
	지방교육세	629,430	359,646	-269,784

자료 : 지역발전위원회(2017.4), 『경남 혁신도시 관리카드』

4.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사회문화적 효과

(1) 교육여건 개선효과

공공기관, 관련 연구소, 관련기업 등은 우수한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역대학과 교육기관은 필요한 전문인력의 공급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방에서의 인력수요를 증가시키며, 이로 인해 지역내 고급일자리를 창출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전공공기관은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전 지역 대학과 각종 연구개발 관련 연계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전기관과 지방 대학의 연구개발 관련 연계를 위해 대학교 내 신규학과(울산대 전기에너지공학과) 및 연구소(전북대 농생명식품연구개발원)를 개설한 곳도 있다. 이와 함께, 10개 혁신도시의 이전기관 58개와 지방대학 88개가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표 2-6-6 이전공공기관과 지역대학 MOU체결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부산	대구·경북	울산	광주·전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계
이전기관(개소)	10	8	7	4	9	4	5	8	3	58
대학교(개소)	14	14	2	7	16	12	6	13	4	88

자료 :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통계, 2015.6

기관과 대학 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충북 내 비즈니스 데이터 융합학과와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석사과정을 운영 중인데 이처럼 계약학과 설치 등을 통해 지역 교육여건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표 2-6-7 기관별 지방대학 연계·인재 양성 및 MOU 체결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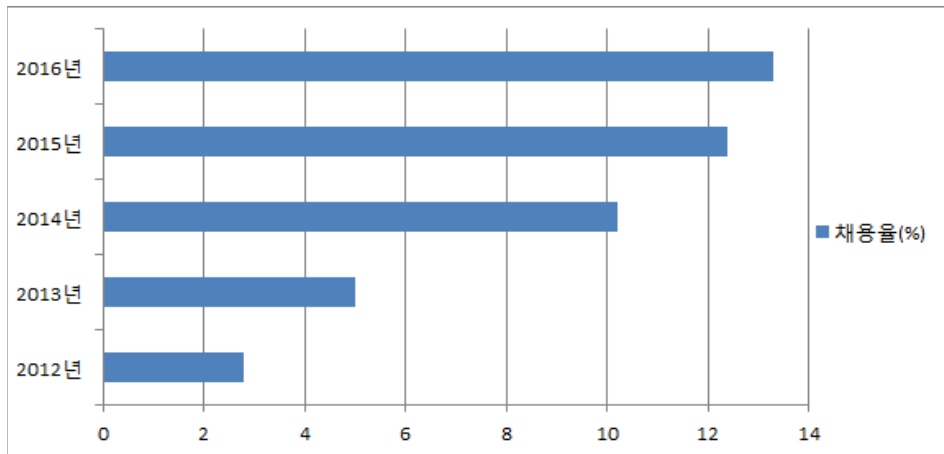
지역	기관명	내용
부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부산소재대학 대상 상담복지인력 전문성강화업무협약 체결 (2015년)
대구	한국가스공사	영남대학교, 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와 산학협력 체결 (2014년)
	한국사학진흥재단	대구공업대학교, 유휴부동산 개발 업무협약 체결(2014년)
경남	중앙관세분석소	경상대학교, 경남과기대 MOU 체결 (2014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부경대학교, LED 융합산업의 기술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2015년)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전문인력 양성 및 정보공유협약(2015년)
경북	한국도로공사	금오공대, 정규학점과정(도로설계,유지관리)운영, e러닝과정 (2015년)
		김천대학교, 사내AMP 공동운영, 심폐소생교육위탁, e러닝과정 무상기부, 기타 자문활동협약(2015년)
울산	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업무협약 (2015년)
강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연세대학교, 인재양성 인적교류 연구 및 교육기자재 및 시설 공동 활용협약('14)
전북	농촌진흥청	전북대학교 농생명식품연구 개발원 개원 전북지역17개 기관 및 7개 대학과 '농생명 연구 협의체' 구성
	국민연금공단	우석대학교 공단 어린이집 위탁 운영자 선정
광주 전남	한국콘텐츠진흥원	동신대학교 문화콘텐츠 기획인력 양성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대학교와 공동연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전력거래소	전남대학교에 직원 위탁 MBA 개설

자료 : 2014.1.1.~2015.5.30. 지역신문(부산일보, 경남일보, 대구신문, 경상일보, 전북일보, 광주일보, 전남일보, 강원신문, 원주투데이, 충북일보, 제주신문) 참조.

국토연구원 이전공공기관 설문조사 (2015.7.10.~11.10)결과

이처럼 지방 대학과의 교류 활성화 및 인재 양성 등으로 이전지역의 인재 채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2012년 2.8%에 불과하던 이전지역 인재채용률은 2014년 10.2%, 2016년 13.3%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그림 2-6-2 이전지역 인재 채용률 변화 추이(2016.12월 말 기준)



자료 : 지역발전위원회(2017.4), 『경남 혁신도시 관리카드』

주: '12(2.8%) → '13(5.0%) → '14(10.2%) → '15(12.4%) → '16(13.3%)

이를 지역별로 보면 2016년 현재 부산이 27.0%로 가장 높고, 대구도 21.3%로 높은 편이다. 그러나 울산(7.3%), 충북(8.5%) 등은 10%를 하회하고 있다.

표 2-6-8 지자체별 지역인재 채용 현황

(단위 : 명)

지역	조사 기관수	2015년도			2016년도			증감
		전체	지역	%	전체	지역	%	
합 계	109	8,934	1,109	12.4	10,018	1,333	13.3	0.9
부산	11	361	85	23.5	366	99	27.0	3.5
대구	9	430	78	18.1	527	112	21.3	3.2
광주·전남	13	2,077	296	14.2	2,316	264	11.4	△2.8
울산	7	297	30	10.1	797	58	7.3	△2.8
강원	11	1,434	157	10.9	1,806	205	11.4	0.5
충북	10	261	25	9.6	318	27	8.5	△1.1
전북	6	472	73	15.5	765	100	13.1	△2.4
경북	8	1,970	192	9.7	1,449	252	17.4	7.7
경남	10	735	80	10.9	881	99	11.2	0.3
제주	3	39	4	10.3	53	8	15.1	4.8
충남	2	219	32	14.6	342	59	17.3	2.7
세종	19	639	57	8.9	398	50	12.6	3.7

자료 : 지역발전위원회(2017.4), 『경남 혁신도시 관리카드』

(2) 지역매력도 제고효과

공공기관은 전국적 인지도가 높고, 문화 복지 등의 측면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자주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이를 통해 지역이 홍보됨에 따라 지역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해 이전 전·후 표준지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곳도 나타나고 있다. 원주시의 경우 1년 만에 주택가격이 3.07% 상승하였고 나주시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1년 새 27% 상승하였다.

각 공공기관이 수행하던 국내외 행사, 포럼, 심포지엄 등이 이전지역에서 개최되어, 해당 지역의 국제적 홍보효과가 커졌다. 예컨대 부산의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국제영화등급포럼을 개최하고, 대구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교육 관련 교류를 위해 연평균 60개국에서 600여명의 교육관계자가 방문하였다.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기관들 중 한국교육개발원은 연간 5,000명이상의 해외교육생 등이 방문하며, 한국고용정보원은 기업 박람회에 2011년 기준 45,000명이 방문하였다. 경남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남동발전(주)는 해외 6대 수출거점지역 KOTRA 무역관 초청 중소수출유망기업 수출촉진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표 2-6-9 지방자치단체별 부동산 가격 관련 현황

지역	내용
강원	한국관광공사 관광수용태세 개선 컨설팅 대상지로 원주 선정
	2015년 5월 작년대비 원주시 개별주택가격 3.07% 상승
광주 전남	혁신도시 신규분양 및 임대 2013년 대비 25% 증가
	2015년 5월 기준 33주 연속 주택가격 상승
	나주시 표준지 공시지가 2014년 비해 27% 상승
	2014년 5월 기준 나주시 땅값 한달만에 0.47% 상승
제주	2014년 제주도 땅값 3.73% 증가로 전국 2위

자료 : 2014.1.1.~2015.5.30. 지역신문(부산일보, 경남일보, 대구신문, 경상일보, 전북일보, 광주일보, 전남일보, 강원신문, 원주투데이, 충북일보, 제주신문) 참조

이처럼 기관별·이전지역별 국내외 많은 행사 개최를 통해 해당기관들이 이전한 지역

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규모가 큰 국제행사의 경우 대부분 서울에서 개최되고 있는 실정이다.

(3) 지역특화도 향상효과

이전공공기관과 연계된 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의 산업 정체성이 확보됨에 따라 민간기업의 지방이전의 계기가 되는 등 지역이미지가 개선되고 있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다양한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업무 관련 외국인들의 내방이 잦은 편으로, 이들을 통해 지역의 국제적 홍보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장기적으로 지역이 특정 산업에 특화되는 효과를 갖게 되고 관련 클러스터가 형성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예를 보면, 영화진흥위원회 유관기관인 글로벌 영상센터와 한국영화 아카데미가 부산으로 이전하였다. 충청북도 혁신도시 내 태양광 기술지원센터, 건물에너지 기술센터, 소방장비검사·검수 센터가 준공되었다. 나주시로 이전한 한국전력공사는 KT와 공동으로 에너지 ICT 융합센터를 설립하였을 뿐 아니라 에너지 밸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이전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및 협력기업들의 동반 이주는 추후 새로 유치되는 기업과 클러스터를 형성함과 동시에 지역특화를 공고히 할 수 있다. 예컨대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주요 고객층이 수도권에 있는 연구소이지만, 진주로 이전 후 규모가 작은 창업기업뿐 아니라 동반이주기업들을 유치하였다. 한전KDN도 기관이전과 더불어 16개 기업이 타 지역에서 동반이주하였다.

5.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사회 연계효과

(1) 업무협약 체결

2014년~2015년 사이 기관별 업무협약 체결은 총 44건으로 지자체와의 협약 체결이 16건으로 가장 많고, 대학 및 학교와의 협약 체결이 14건, 기타 공공기관, 민간기관 및 지역마을과의 협약체결이 14건이다. 경상북도 이전기관은 경상북도청과 총 13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지자체와의 업무협약은 지역발전을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공공기관과는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이 다수이다. 이전기관과 각 지역 대학교 사이의 인재양성 및 연구교류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은 부산과 제주를 제외한 혁신도시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표 2-6-10 기관별 업무협약 체결기관 현황

(단위 : 개소)

지역	업무협약 체결기관					
	지자체	대학/학교	공공기관	민간기관	마을	계
부산	-	-	1	1	-	2
경남	-	3	-	-	-	3
대구	-	1	-	-	2	3
경북	13	1	-	-	-	14
울산	-	1	2	-	-	3
강원	1	4	-	-	-	5
전북	1	3	2	1	-	7
광주전남	-	1	-	-	-	1
제주	1	-	3	1	1	6
계	16	14	8	3	3	44

출처 : 2014.1.1.~2015.5.30. 지역신문(부산일보, 경남일보, 대구신문, 경상일보, 전북일보, 광주일보, 전남일보, 강원신문, 원주투데이, 충북일보, 제주신문) 참조

(2) 지역사회 기여효과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사회기여는 경제적 기여 및 사업이나 기술전수 등으로 인한 직접기여도 있으나, 이전 기업의 정책이나 구성원들의 지역친화 및 적응을 목적으로 한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같은 기여도 있다. 이전기관 사회기여 활동으로 인한 지역과 이전기관간의 유대관계 형성이 가능하다. 이전기관과 지역사회의 연계·유대관계는 후원·성금 등 경제적 지원, 단순봉사활동, 전문봉사활동 및 기타로 분류된다.

단순봉사는 기관이나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로 예컨대, 지역 환경정화를 위한 쓰레기 줍기, 지역주민들을 위한 배식활동, 지역농산물 구매 등이 해당한다. 전문봉사는 해당 기관이나 구성원들만이 할 수 있는 일로 예컨대, 상담복지기관의 지역주민 대상 상담, 주택보증공사의 임차자금 지원 등 기관의 업무특성과 관련이 있는 봉사활동을 의미한

다.

2014년~2015년 사이 조사결과 총 37건의 사회기여 활동 중 단순봉사활동이 17건으로 가장 많고, 경제적 지원이 13건, 전문봉사활동 5건, 기타 2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 이전기관이 총 11건으로 가장 많은 활동을 하였다.

표 2-6-11 기관별 경제적 지원 및 봉사활동 현황

(단위 : 건)

구분		부산	경남	경북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광주 전남	제주	계
경제적 지원		2	1	-	1	1	1	2	3	2	13
봉사 활동	단순 봉사	-	3	2	-	2	3	2	5	-	17
	전문 봉사	-	-	-	-	1	1	2	1	-	5
기타		-	-	-	-	-	-	-	2	-	2
계		2	4	2	1	4	5	6	11	2	37

자료 : 2014.1.1.~2015.5.30. 지역신문(부산일보, 경남일보, 대구신문, 경상일보, 전북일보, 광주일보, 전남일보, 강원신문, 원주투데이, 충북일보, 제주신문) 참조

(3) 공공기관의 지역업체 및 중소·창업기업 지원

공공기관의 이전과 관련하여 용역발주, 위탁, 물품구매 등을 제외한 지역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 현황을 파악하면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의 중소기업 및 창업 기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 수 있다. 현재(2015년 6월 기준)는 공공기관들의 이주 초기단계이므로 조사결과 지원을 검토 중(한전KDN)이거나, 고려하지 않는 기관들이 많으나 기관들의 이주가 마무리 되고 정착하는 단계에서는 지역의 중소 업체 및 창업 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표 2-6-12 지역 업체 및 중소·창업 기업 지원

지역	기관명	대상기업	내용	지원액수 (단위: 천원)
경남	한국세라믹 기술원	서진정공(주)	시제품제작지원	18,000
		금광도기(주)	시제품제작 및 장비지원	18,000
		산청토기와(주)	시제품제작 및 특허지원	25,500
		악셀(주)	입주기업 사업화지원	16,400
대구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대구지역 125개 산학연('14)	평가위원회 심사기준에 의한 R&D 지원	30,246,000
	한국가스공사	문경미소 등 40개 여성기업	물품구매상담회 및 생산성 향상 지원	100,000
전북	한국국토 정보공사	한일(주) 7개 기업	공간정보 협력기업 펀드 조성 및 지원(전북기업)	700,000
		엘시스(주) 4개 기업	국토정보공사 협력기업 대출자금 및 이자 지원	300,000
강원	한국관광공사	하립골 외 4개 기업	예비창조관광사업 공모지원	100,000
계		184		31,523,900

자료 : 국토연구원, 공공기관 이전의 지역발전효과 기관 조사(2015.7.10.~11.10) 결과

제3절 기대효과 및 향후과제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건설정책 추진당시 정부가 기대했던 예상효과와 현 단계에서의 효과를 비교해 봄으로써 정책의 달성도를 측정해 볼 수 있다. 아직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이지만 현 단계에서 효과를 평가하면 긍정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 근거로는 첫째, 지방세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2014년에는 약 2,000억원이 납부되어 정부가 당초 기대한 지방세수 증가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2015년 6월말 기준 지역인재채용률이 약 12%로 고학력 취업기회가 확대되고 있으며, 2012년과 비교해 볼 때 급증하여 향후로도 인력공급에 문제가 없다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동반이주기업 및 이주 희망기업이 각각 21개사, 47개사(32개 응답기관 조사결과)로 정부가 당초 기대한 민간경제활동의 지방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²¹⁾. 그러나 동반이주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간지원 등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공공기관 부설연구소 입지, 공공연구기관 입지로 지역의 혁신역량이 양적으로 확보되고 있고 향후 질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국제회의, 연수 등 국제교류로 지역의 전문성 있는 국제교류가 추진되고 있고 향후 대폭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이 국제회의를 개최할 만한 여건이 조성되어야 서울에서 개최되던 국제회의가 본사가 입지한 지방도시에서 개최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공공기관의 활동으로 매스컴에 공공기관의 명칭과 더불어 지역이 홍보되며, 정체성이 확보되어 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곱째, 공공기관들은 대부분 지식기반서비스산업에 속하며 지역 내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일자리를 증가시켜 지역산업구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이전 공공기관별로 타 기관이 수행하지 못하는 특화사업, 특히 지역발전효과가 높은 사업이 존재하므로 맞춤형 사업 추진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한국교육개발원은 세계교

21) 2015년 6월말 기준 이전공공기관을 조사한 32개 기관에서는 12,917명을 직접고용하고 있는데, 이외에 지역 내 동반이주 기업으로 인한 간접고용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음. 공공기관의 이전 초기단계라 동반이주 기업의 경우 조사대상기관 중 2개 기관에서만 집계되었으며 총 21개 기업, 매출액 3167.7억원, 총 고용직원 수 722명의 간접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희망하는 동반이주기업의 경우 추후 47개 기관이 공공기관과 함께 이전할 예정이며 이들 기업은 현재 3,167.7억원의 매출과 1,303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음. 따라서 이전공공기관과 함께 동반 이주하는 기관의 매출액과 직원임금을 산정한다면 공공기관의 이전에 따른 직접효과와 더불어 간접효과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육포럼 개최 등 국제교육연수 수요(연간 약 5,000명)가 많은 바 단기적으로 국제연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중기적으로 국제연수타운 조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수타운의 입지는 혁신도시 내 가용 토지가 없을 경우 주변지역으로 확장형, 분산 입지형 두 가지 방안으로 추진 가능하다.

이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공공기관이 추진 중이거나 또는 추진 희망하는 지역 개발효과가 높은 사업을 혁신도시별로 1~2개씩 공모하여 “혁신도시 특화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지역발전효과 증대가 예상된다. 예컨대, 이전공공기관 특성, 혁신도시 특성, 지역특성과 정합성이 높으며 지역개발효과(매출액 증대, 고용창출 등)가 높은 사업의 경우 혁신도시 특화사업비를 마련하여 추진토록 지원한다.

혁신도시 특화사업의 기대되는 지역발전효과로는 고학력 청년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공공기관은 고학력 일자리를 제공할 뿐 아니라 선호되는 일자리이므로 이전 공공기관은 인재채용규모 확충, 관련 영역확대 및 기관의 위상 제고가 이루어질 것이다. 혁신도시는 이전공공기관을 활용한 특화, 조속한 정착, 브랜드 네임 확보가 가능하고, 지역에서는 고학력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건설, 음식료·숙박업 등 관련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는 일자리 미스매치를 줄여 청년 고용창출 효과를 높이고, 이전 공공기관의 정착지원 및 지역발전효과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3부

지역별 시책

제1장 서울특별시

제2장 부산광역시

제3장 대구광역시

제4장 인천광역시

제5장 광주광역시

제6장 대전광역시

제7장 울산광역시

제8장 세종특별자치시

제9장 경기도

제10장 강원도

제11장 충청북도

제12장 충청남도

제13장 전라북도

제14장 전라남도

제15장 경상북도

제16장 경상남도

제17장 제주특별자치도

제1장 서울특별시

제1절 서울특별시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서울특별시의 인구는 2000년대 들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6년 기준 993만명으로 1,000만명 이하가 되었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연평균 4.0% 이상 증가하여 2015년 기준 345조원을 기록하였으나, 전국 연평균 성장률에 비해 다소 낮았다. 반면, 1인당 GRDP는 3,50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성장률도 4.4%로 전국 성장률을 상회하였다. 수출액은 2013년 이래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2015년도에 비해 68억 달러 감소한 534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재정자립도는 84.7%로 2013년 88.8%에 비해 4.1%p 낮아졌으나, 전국 재정자립도인 52.5%를 크게 상회하여 17개 시·도에서 가장 높았다.

표 3-1-1 서울특별시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서울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증가율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증가율
지역내총생산 (십억원)	1,430,255	1,485,505	1,563,668	-	4.6	318,607	328,661	345,138	-	4.1
인구(천명)	51,141	51,328	51,529	51,696	0.4	10,144	10,103	10,022	9,931	-0.7
1인당 GRDP(만원)	2,848	2,946	3,089	-	4.1	3,210	3,323	3,500	-	4.4
수출액 (백만달러)	559,632	572,665	526,757	495,466	-4.0	60,316	62,329	60,273	53,445	-4.0
취업자(천명)	25,066	25,599	25,936	26,235	1.5	5,097	5,146	5,135	5,124	0.2
재정자립도 (%)	51.1	50.3	50.6	52.5	0.9	88.8	84.2	84.3	84.7	-1.6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이며, 2015년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 산업 현황

서울특별시의 산업구조는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93.6%, 제조업 6.3%, 광업·농림어업 0.2%로 서비스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14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은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이 각각 34.4%, 35.7% 44.2%로 나타나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전기장비’ 등의 업종 비중이 높았다.

2013년과 비교해서,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이 증가한 반면,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이 감소하였고, 종사자수 기준은 큰 변화가 없었다. 생산액은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의 생산액 비중이 다소 감소하였으며, 다른 업종의 비중변화는 크지 않았다.

표 3-1-2 서울특별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3년			2014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2.4	2.7	3.3	2.8	3.2	3.6
섬유제품	4.5	3.5	4.2	4.7	3.4	4.2
의복, 의복액세서리	32.8	35.0	44.7	34.4	35.7	44.2
가죽, 가방 및 신발	4.6	3.6	4.2	4.5	3.6	4.7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9.7	8.2	4.2	8.5	7.8	4.6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8.2	11.3	11.3	8.1	11.0	9.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7.1	6.7	4.8	7.0	6.6	4.4
전기장비	6.3	5.7	4.3	5.8	5.4	4.6
기타 기계 및 장비	6.7	6.9	5.1	6.7	6.5	4.9

주 : 2015년, 2016년 자료는 없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2014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 ‘기타 개인 서비스업’과 ‘부동산 및 임대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사업

지원 서비스업'이 25.3%, 매출액 기준은 '출판, 방송통신업'이 39.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경우 종사자 수 및 매출액 비중이 높았는데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의료·복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3년과 비교해서,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출판, 방송통신업'이 증가한 반면,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다소 감소하였다. 출판, 방송통신업의 경우 방송·정보서비스 관련 시장의 확대에 의한 현상으로 판단된다. 종사자수, 매출액 기준으로는 비중변화가 크지 않았다.

표 3-1-3 서울특별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3년			2014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0.2	0.5	0.6	0.2	0.5	0.6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9.3	19.9	39.5	10.6	20.0	39.4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6	9.8	12.4	17.8	10.3	12.6
사업지원 서비스업	6.4	25.4	11.4	6.7	25.3	11.4
교육 서비스업	15.1	9.2	5.9	14.9	9.0	5.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2.7	19.7	17.0	12.8	19.9	17.4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10.7	5.5	8.3	10.2	5.2	8.1
기타 개인 서비스업	28.0	10.0	4.9	26.7	9.7	4.8

주 : 2015년, 2016년 자료는 없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3. 혁신활동 현황

서울특별시의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 연구개발비 10.0조원, 연구개발인력 144,830명, 연구개발조직수 9,116개로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인력은 2013년에 비해 감소한 반면, 연구개발조직수는 연평균 13.6%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2년 전에 비해 2,047개

증가하였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3년에 비해 연구개발비, 인력, 조직수 모두 감소하였다. 연구개발비의 경우 2.84%p, 연구개발인력은 2.5%p, 연구개발조직수는 1.23%p 감소하여 서울시 이외 지역의 연구개발 활동이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현황을 보면, 출원 및 등록 모두 전국대비 비중이 30% 수준을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48,030건이며, 등록은 22,305건으로 전국대비 비중은 각각 28.7%, 29.2%였다. 2013년에 비해 특허 출원은 소폭 증가한 반면, 등록건수는 크게 감소하였으며, 특히 2014년과 비교할 때, 6,010건이 감소하였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3년에 비해 특허 출원건수 1.13%p, 등록건수 1.4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4 서울특별시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연평균증가율
연구개발	연구개발비	10,702,663 (18.05)	9,635,558 (15.12)	10,030,638 (15.21)	-3.2
	연구개발인력	147,228 (25.86)	151,835 (25.07)	144,830 (23.36)	-0.8
	연구개발조직수	7,069 (25.62)	8,017 (25.04)	9,116 (24.39)	13.6
특허	출원	47,737 (29.84)	48,969 (29.85)	48,030 (28.71)	0.3
	등록	29,369 (30.70)	28,315 (29.10)	22,305 (29.23)	-12.9

주 : ()는 전국대비 비율임. 2016년 자료는 없음.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서울특별시는 600년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4대 궁을 포함한 다양한 역사문화자원과 한강, 남산 등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를 중심

으로 전국의 철도, 도로 등 간선교통망이 발달되어 있으며, 전국 대학의 약 35.6%가 집중되어 있어 인적자원이 풍부하다. 이처럼 서울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과학기술 등의 다양한 분야가 집적되어 4차 혁명 도래시기를 맞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 및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동북아 경제권역의 핵심지역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저출산·고령사회 및 1~2인 가구의 급증으로 주택시장, 교통, 문화, 복지 등 각 분야에서의 수요 전환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응한 다양한 정책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저성장 및 소득양극화 심화에 따라 지역균형발전과 노약자·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주거·사회복지서비스 정책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안전 불감증 및 기상이변으로 수해,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개발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도시 재생의 개념을 접목시켜 환경가치 및 에너지절약을 중시하는 스마트·생태도시로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서울시는 주요 정책이슈 및 향후 발전과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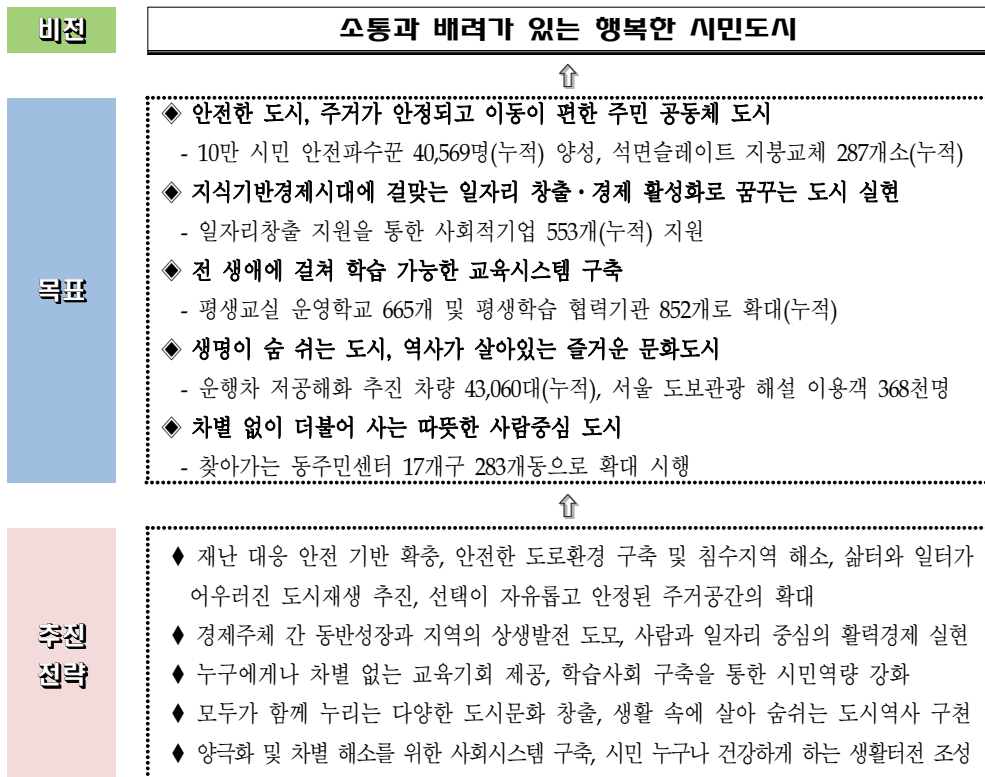
첫째,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전의 총량적 양적 성장을 추구하기 보다는 질적 성장과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한 더 나은 주거 및 생활환경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자연자원 관리와 역사자원의 보전 및 활용을 통해 서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서울만이 가진 매력과 장점을 살리는 동시에 과밀로 인한 집적 불경제 요인을 점차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전 지구적 기후변화와 이에 대응한 환경협약에 따라 환경오염 및 에너지 낭비요인을 줄이고 녹색산업의 발굴 및 육성을 적극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노후한 도시기반시설의 체계적 관리와 개발로 인한 첨단화로 도시의 안전성 확보 및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중소도시와 대도시 등 이분법적인 경쟁구도는 지양하고 서울시와 주변도시 그리고 비수도권의 상호 특·장점을 살려 지역 상생적 연계협력관계를 형성하여 국가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서울특별시는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도시’를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의 발전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관련 계획 중 최상위계획인 「서울도시기본계획(2030 서울플랜)」에서 제시한 미래상을 수용하여 반영한 것으로, 소통과 배려를 통해 ‘안전한 도시, 주거가 안정되고 이동이 편리한 주민공동체 도시’, ‘지식기반경제시대에 걸맞는 일자리 창출·경제 활성화로 꿈꾸는 도시 실현’, ‘전 생애 걸쳐 학습 가능한 교육시스템 구축’, ‘생명이 숨 쉬는 도시, 역사가 살아있는 즐거운 문화도시’, ‘차별 없이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람 중심 도시’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림 3-1-1 서울특별시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2. 추진전략

서울특별시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의 세부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은 정부에서 제시한 5대 분야, 21개 실천과제에 따라 서울도시기본계획 및 서울 시정 4개년 계획 내용을 고려하여 수립하였다.

첫째, 지역생활권 활성화 분야의 세부 정책목표는 ‘안전한 도시, 주거가 안정되고 이동이 편리한 주민 공동체 도시’로 설정하고, 추진전략으로는 ‘재난 대응 안전 기반 확충, 안전한 도로 환경 구축 및 침수지역 해소’, ‘위험과 폭력으로부터 여성과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조성’, ‘삶터와 일터가 어우러진 도시재생 추진’, ‘승용차에 의존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녹색교통환경 조성’, ‘선택이 자유롭고 안정된 주거공간의 확대’를 내세우고 있다.

둘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분야의 세부 정책목표는 ‘지식기반경제 시대에 걸 맞는 일자리 창출·경제 활성화로 꿈꾸는 도시 실현’으로 설정하고, 추진 전략으로는 ‘창의와 혁신에 기반한 글로벌 창조경제도시 도약’, ‘경제주체간 동반성장과 지역의 상생발전 도모’, ‘사람과 일자리 중심의 활력경제 실현’, ‘전통문화유산 및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내세우고 있다.

셋째,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분야의 세부 정책목표는 ‘전 생애에 걸쳐 학습 가능한 교육 시스템 구축’으로 설정하고, 추진전략으로는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교육기회 제공’, ‘학습사회 구축을 통한 시민역량 강화’, ‘전인교육을 위한 학교 기능 회복’, ‘지역자원을 활용한 교육공동체 실현’을 내세우고 있다.

넷째,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분야의 세부 정책목표는 ‘생명이 숨 쉬는 도시, 역사가 살아있는 즐거운 문화도시’로 설정하고, 추진전략으로는 ‘도시 내 자연생태계 보전·회복과 공익기능 증대’, ‘모두가 함께 누리는 다양한 도시문화 창출’, ‘생활 속에 살아 숨 쉬는 도시역사 구현’, ‘에너지 효율적인 자원순환도시 실현’을 내세우고 있다.

다섯째, 사각없는 지역 복지·의료 분야의 세부 정책목표는 ‘차별 없이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람중심 도시’로 설정하고, 추진전략으로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복지시스템 마련’, ‘시민 누구나 건강하게 사는 생활터전 조성’, ‘양극화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사회 시스템 구축’, ‘성평등과 사회적 돌봄의 실천’을 내세우고 있다.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서울특별시시는 2014년 1월, 경기 동북부 지역(의정부, 남양주, 양주)과 일부 자치구(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성북구)를 포함하는 ‘수도권 동북부 시범생활권’을 구성하였다. 서울시 및 인근 경기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인근 경기지역을 포함하는 생활권 구성이 필요하였으며, 이에 기존 생활권을 확대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 인근 경기도 10개 시(성남, 고양, 부천, 의정부, 구리, 하남, 남양주, 파주, 양주, 수원)와 함께 ‘서경지역생활권’을 새롭게 구성(2014년 12월)하였다.

‘서경지역생활권’은 「서울과 이웃지역의 상생발전 협력의 틀 조성」을 비전으로, 친환경·문화관광 네트워크 구축과 광역 교통수요 대응, 자족기능 강화 및 수려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 산업단지 연계 일자리 창출 및 자연자원 활용 네트워크 구축, 창조문화산업 육성 및 지역 공동시설 연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림 3-1-2 서울특별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서경지역생활권의 주요 사업으로는 구리시가 주관하고, 서울 노원구, 성북구와 경기도 남양주시가 참여하는 ‘조선왕릉 문화벨트 조성사업’이 추진 중이다. 해당 사업은 2016년 지역생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21.5억 원(총사업비 30.7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조선왕릉과 연계한 문화·관광산업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 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조선왕릉 홈페이지 구축 등 공동운영체계 구축, 창작 지원 및 인재육성 지원 사업, 콘텐츠 실현의 장 마련 사업, 지역민의 일상 행복증진을 위한 콘텐츠 활용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5년도에 연계협력사업으로 선정된 ‘아차산 문화벨트 조성사업’도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2014년도에 선정된 ‘중랑천 녹색문화벨트 조성사업’은 2016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하였다.

(2) 서울시 추진현황 및 성과

서울특별시시는 지역중심지 활력 증진을 위해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과 ‘주민참여 골목길 가꾸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은 본격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앞서 5개 시범지구에 대해 활성화계획 수립고시 완료(1개소) 및 나머지 4개소에서 계획수립을 추진 중에 있고, 주민역량강화와 공동체 활성화 관련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주민참여 골목길 가꾸기 사업’은 종로구 충신4길 21일대 등 11개소 사업 완료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 확대로 도시녹화 공동체 형성 기반을 마련하였다.

주민체감 생활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노후 주택 ‘석면 슬레이트 지붕교체사업’을 68개소에서 추진하여 생활주변 유해물질 제거와 시민건강피해 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성과를 가져왔으며, ‘공공 원룸주택 매입·건설 및 공급 사업’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실현하였다.

그 외에도 지역주도 협력사업인 ‘귀농 종합 지원’으로 귀농정보 제공 및 영농교육을 통한 우수 인력의 귀농 정착 유도 및 농촌 활력을 도모한 효과를 가져왔으며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신규 마을기업 발굴 및 우수 마을기업 선정 등을 통하여 지역의 활력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1)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대표산업 육성

서울특별시시는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 대표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어르신 일자리사업’등을 추진하였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은 지역특성에 기초한 지역고용사업을 발굴·지원하여 지역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였으며, 공연, 봉제, IT 등 다양한 영역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통해 청년 및 여성 등 지역주민의 직업기회 확대에 기여하였다. 또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다문화 가정,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 1,455명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어르신 일자리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 56,177명이 참여하여 자활능력 향상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그 밖에 청년들이 자유롭게 상상·활동 할 수 있는 청년공간 ‘무중력지대’를 2개소(금천구 G밸리, 동작구 대방동) 조성하여 청년들의 네트워크 구축, 일자리 역량강화, 창의·문화·학습활동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통해 청년들의 활력제고 및 복지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시설별로 살펴보면 G밸리 무중력지대는 직업역량 및 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방동 무중력지대는 지역기반의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종합활동공간인 청년청을 운영하여 54개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다.

(2) 산업단지 고도화로 창조경제 구현

서울특별시시는 지역내 유일한 국가산업단지인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열악한 기업환경 개선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통해 산업단지 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G밸리 활성화 추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에는 G밸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6년에는 舊정수장부지 MOU 체결 및 G밸리 기업 투자펀드(111억 원) 조성 및 운영을 하였고 G밸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였다. 2017년 하반기에는 G-SQUARE 개발공사가 착공되고, 연말에는 G밸리 근로자 문화·복지센터 설계를 완료하여 착공 예정 및 G밸리 상징가로 1단계 착수와 테마역을 조성할 계획이다.

(3) 지역기반 연구 활성화로 창조경제 지역 확산

지역기반 연구 활성화로 지역경제 확산을 위한 주요사업으로는 ‘홍릉 바이오·의료 R&D 클러스터 조성’, ‘서울형 R&D 지원’사업 등이 있다. ‘홍릉 바이오·의료 R&D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홍릉 바이오·의료 R&D 앵커를 중심으로 바이오·의료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산업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부흥 및 동북권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5년에는 관계기관별(성북구, 동대문구, KIST, 고려대 등) 간담회 및 지역주민 간담회 개최를 통한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하였고, 홍릉 관련 기관(7개 기관)과 공동협약을 체결하여 홍릉 바이오·의료 R&D 클러스터 조성 방안의 지속적 논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2016년에는 홍릉 바이오 의료 R&D 앵커시설 조성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본관 설계 완료 및 공사 착공을 추진하였다.

서울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 및 도시문제 해결 등 서울시와 시민에게 필요한 R&D 지원을 위해 ‘서울형 R&D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85개 과제에 대해 총 17,054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이에 따라 논문게재(12건), 특허출원(76건), 특허등록(22건), 기술이전(37건) 등 전년대비 46% 증가한 양적 성장과 중소기업 매출 증대 및 비용 절감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4) 농산어업 경쟁력 강화

서울특별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사업’을 통해 다양한 도시농업 모델 제시 및 도시문화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세부적으로 학교농장 조성 및 운영 지원(177개소), 실버·다둥이·다문화 농장 운영(7개소, 1,264구획), 민영텃밭 활성화 지원(15,397구획), 시민자연학습장 운영(1개소, 6,311㎡) 등 도시농업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강동 친환경 도시텃밭 운영사업’을 통해 제초제, 농약, 화학비료, 비닐 등을 사용하지 않는 7,000구좌의 친환경 도시텃밭을 보급·운영하여 한강 수질 개선과 안전한 유기농 먹거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시민 참여의식을 고취하는데 기여하였다.

그 외에도 한강상수원보호구역 내 ‘함께 서울 친환경 농장(7,200구획, 118,800㎡) 운영’을 통해 7,200구획을 분양 및 운영하여 친환경 농업 실천,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제공, 도농교류 촉진을 도모하였다.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1)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서울시는 '대학 특성화를 통한 서울시립대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였다. 2014년은 사업 운영 첫 해로 학과 특성화 사업(4개 참여 학과 선정, 30백만 원 지원, 학과별 특수성 및 사회적 인력수요에 기반한 특화교육 운영), 계산물리 특화 교육과정 운영(연구교수 1명 채용, 27개 교과목 실습 모듈 개발), 학생 장학금 지원(5백만 원 지원) 등 세부사업을 통해 특성화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2015년에는 2014년 사업과의 연계성 확보 및 사업성과의 교내 공유·확산을 통해 지속적인 대학 전체 특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였다. 2016년에는 대학 전체 특성화 경쟁력 강화 및 계산물리 특화교육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 능력을 갖춘 도시전문가를 양성하였고, 성과지표인 사업단 소속 재학생의 창의·공공역량지수 2.3점을 각각 2.5점, 2.3점으로 달성하였고, 사업단 소속 재학생의 사업 만족도 측정을 통해 목표점수 90점을 초과 달성한 93점을 나타냈다. 이는 기존 사업을 계승하되 발전적 운영을 도모하였고 2016년 신설된 자유·융합 대학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한 대학의 융·복합적인 특성화 강화를 추구하였다.

(2) 일과 학습 병행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일과 학습 병행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서울시의 주요사업으로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지원 확대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특성화고교 교육과정 내실화를 통해 산업수요에 적합한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2014년에는 특성화고 체제개편 28교, 실험실습기자재 77교, 실험실습재료비 79교, 취업역량 강화사업 49교, 산학협력 30교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2015년에는 특성화고 체제개편 21교, 실험실습기자재 79교, 실험실습재료비 79교, 취업역량 강화사업 46교, 산학협력 24교 지원사업을, 2016년에는 특성화고 체제개편 16교, 실험실습기자재 79교, 취업역량강화사업 52교, 취업기능강화지원 사업 27교를 지원하였다.

(3) 100세 시대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

서울특별시시는 2014년 4월, 서울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을 지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서울시 평생교육정책 및 사업 등을 보다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2015년에는 독립재단을 출범하여 (2015년 3월) 평생교육 발전계획 및 전략과제 수립, 행복학습센터 운영, 네트워크 기반 특성화 모델 발굴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2016년에는 평생학습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1천여명이 참석하였고, 문해교육교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초등, 중등 70명을 양성하였다.

또한 학교 자원을 활용한 시민 평생학습 기회 제공 및 지역 평생교육기반 조성을 위해 ‘학교 중심 지역평생학습공동체 구축’,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의 평생학습협력망 구축사업’을 추진하였다. ‘학교 중심 지역평생학습공동체 구축사업’을 통해 216개 학교가 학부모가 운영하는 평생교실을 운영하였고, 이는 평생학습 성과를 학교 및 지역사회에 교육봉사 등으로 환원하여 지역평생교육기반 조성에 기여하였다. 학습-복지-고용이 순환하는 평생교육실현으로 개인 및 지역사회의 통합적 평생학습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의 평생학습협력망 구축사업’으로 평생학습 협력기관이 2015년 284관, 2016년 288관으로 확대되었다. 거점기관 소외계층 운영지원을 통해 40개 프로그램이 운행되었고 7,257명이 참여하였으며, 협력기관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통해 99개 프로그램 운영 및 20,936명이 참여하였다. 이는 협력기관을 확대 구축하여 평생교육기관간 협력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평생학습공동체를 형성하였고,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한 소외계층 프로그램 운영으로 평생학습 양극화를 해소하였다. 또한 협력기관의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가 확대되었다.

4. 지역 문화 육성, 생태복원

(1) 지역 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 발전 지원

서울특별시시는 홍인지문 복측의 멸실된 성곽복원을 통한 역사문화경관 회복을 위해 '한양도성 보존 정비사업'을 추진하였다. 2014년에는 원형고증 연구를 통하여 성곽복원 설계안을 마련하였다. 2015년에는 관할 자치구와 협력하여 성곽 주변 노점상 등 가로시설을 정비하고 성곽복원 공사를 추진하였고, 2016년에는 성벽 변형이 심한 구간의 정밀계측 및 풍화성동 보존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는 변형구간 계측관리를 통해 위험 우려구간을 사전에 예측하여 탐방로 우회·폐쇄조치를 통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서울 어디서나 걸어서 10분 이내에 도서관 이용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코자 매년 공공도서관 8개소 확충을 목표로 '공공도서관 확충사업'과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에는 이보다 1개소 많은 9개소의 공공도서관을 개관하였으며 2015년에는 6개, 2016년에는 2개관으로 처음 계획에 다소 미흡한 추진실적을 나타냈다. 작은 도서관은 2015년 27개, 2016년 16개로 누적 905개의 작은 도서관을 조성 지원하여 지역의 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 발전에 기여하였다.

(2)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

서울특별시시는 지역의 문화격차 및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왔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은 시민의 체육시설 이용 수요 및 증가 대비 생활체육시설의 부족으로 이용률이 높고 확충이 시급한 종목부터 연차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2014년 39개, 2015년 44개, 2016년 113개로 체육시설 확대가 일어나고 있다.

그 외에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2015년 35개 프로그램 운영·연간 25천명 참여, 2016년 60개 프로그램 운영·연간 34천명 참가), 서울시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지원(2015년 160명, 2016년 160명 지원), 등 문화예술 관련 사업을 통해 문화예술 참여기회 확대, 문화예술을 통한 삶의 질 제고 및 자아실현 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다.

(3) 지역 관광산업 육성

지역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서울시는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명소 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명소 개발사업’은 서울 전역에 숨겨져 있는 스토리를 시민과 함께 발굴하고 스토리텔링을 통해 관광자원화하여 매력 있는 관광지로 명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2015년에는 5대 대표 명소(한강, 한양도성, 동대문, 세종대로, 한성 백제문화 유적), 6개 투어 코스(외국인 대상 투어 프로그램 운영)를 개발하였다. 명동, 이태원 등 세계문화 담긴 지역 거점 설정 및 관광명소화, 신촌 플레이버스 조성, 전통사찰(58개) 이야기 발굴 등 다수의 스토리 발굴(2,500여건)로 스토리텔링 사업의 초기 기반을 구축하였고, 2016년에는 홍대 걷고싶은거리 문화관광 명소화 추진 중에 있고, 6개 자치구(동대문구, 노원구, 서대문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마을관광상품 ‘서울 속 마을여행’ 개발 및 운영을 하고 있다. 이는 서울의 숨겨진 마을 관광자원 발굴 및 주민참여를 통해 서울의 다양한 관광 매력도를 향상시키고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4) 생태·자연환경 보존·활용

서울특별시시는 생태·자연환경 보존·활용을 위한 주요사업으로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추진하였다. ‘운행차 저공해 사업’은 노후 경유차·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PM2.5, PM-10) 및 질소산화물(NOx) 등 인체 위해성 오염물질을 저감하여 대기질 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에는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12,152대, 질소산화물 저감 353대를 통해 미세먼지를 개선하였고, 2015년에는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13,639대, 2016년에는 16,916대를 추진하여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다.

또한 ‘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용자지원 사업’,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지원 사업’을 통해 시민이 초기비용 부담 없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저금리로 용자를 지원하여 햇빛도시 서울 만들기에 기여코자 하였다. 배란다·주택옥상 등에 설치하는 태양광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시민이 에너지 소비주체에서 생산주체로 전환하도록 지원하였다.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1) 지역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지역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서울시의 주요사업으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이 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은 2015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기존의 행정중심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복지와 마을공동체중심으로 변경하는 사업이다. 2015년에는 1단계 본격 시행으로 13개구 80개동, 사회복지인력 60명을 충원하였고, 2016년에는 2단계로 17개구 283개동으로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였다.

(2)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

서울특별시시는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서울형 방문건강증진사업’을 진행해왔다. 동 사업은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기반 구축 및 지원을 하였다. 2014년에는 허약노인 집중사례가 6,670건, 2015년에는 14,000건, 2016년에는 15,500건으로 점차 증가하여 어르신들의 예방적 건강실현에 큰 도움을 주었다. 또한 ‘서울시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사업’을 통해 발달장애 어린이 치료시설을 확충하게 되어 치료대기 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

(3)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서울시의 주요사업으로 ‘서울형 공공의료망 50 구축사업’이 있다. 세부적으로는 2015년에 북부병원 1개소를 시범기관으로 지정,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의료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의료보건복지 통합서비스망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2016년에는 9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의료장비 및 의료인력 지원 등 시립병원과 민간의료기관간 협력을 바탕으로 소외계층에게 공공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시 안전망 병원 사업을 추진하여 2015년에는 275명, 2016년에는 340명에게 진료 및 검사를 지원하였다.

제4절 향후 추진계획 및 과제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도시’를 만들기 위한 서울특별시의 2017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주민 주도 및 협력기관과 연계한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시행’, ‘안정되고 편안한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미리 대비하고 즉각 대처하는 안전도시 구현’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5개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참여 골목길 가꾸기 사업, 공공원룸주택 공급, 석면슬레이트 지붕교체 사업, 10만 시민안전 파수꾼 양성 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제고 분야는 ‘경제주체 간 상생을 통해 동반 성장을 이루는 혁신환경 구축’, ‘지역 및 산업정책을 통한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홍릉 바이오·의료 R&D 클러스터 단계별 조성, 서울형 R&D 사업, 중소기업 산학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 일자리창출 지원을 통한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 어르신 일자리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셋째,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분야는 ‘창의적 사고 및 직업능력 향상을 통한 전문 인재 육성’,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통해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맞춤형 교육 제공’을 목표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육과정 내실화 및 지원 확대, 평생교육 종합발전계획 추진, 다양한 기관과의 평생교육 네트워크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넷째, 지역문화 육성, 생태복원 분야는 ‘모든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적 여건 조성 및 문화격차 해소’, ‘다양한 K-culture 육성을 위한 문화플랫폼 구축’, ‘힐링과 레저가 공존할 수 있는 녹색복지 추진’을 목표로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등 문화·체육 기반 시설 확충 및 역사·문화·자연자원을 활용한 매력적인 관광콘텐츠 발굴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운행차 저공해 사업,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및 설치비 융자지원 범위 확대 등을 통해 환경정책에 초점을 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섯째, 사각없는 지역 복지·의료 분야는 ‘복지인력 확충 및 전달체계 혁신을 통한 찾아가는 복지 실현’, ‘응급의료체제 구축을 통해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는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건강증진사업을 통한 사각지대 문제 해소 및 서울형 공공의료망 참여 의료기관 확대,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건립 등을 통해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계획이다.

제2장 부산광역시

제1절 부산광역시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부산광역시의 인구는 2013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2016년 기준 350만명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국 연평균 성장률을 상회한 연평균 5.6%로 증가하여 2015년 기준 78조원을 기록하였다. 1인당 GRDP도 2,306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성장률도 6.0%로 전국 성장률을 상회하였다. 수출액은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에 156억 달러를 기록한 뒤 2016년에는 15억 달러 감소한 14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재정자립도는 60.1%로 2013년의 56.6%에 비해 3.5%p 높아졌으며, 전국 재정자립도인 52.5%보다 높았다.

표 3-2-1 부산광역시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부산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증가율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증가율
지역내총생산 (십억원)	1,430,255	1,485,505	1,563,668	-	4.6	70,338	73,674	78,392	-	5.6
인구(천명)	51,141	51,328	51,529	51,696	0.4	3,528	3,519	3,514	3,499	-0.3
1인당 GRDP(만원)	2,848	2,946	3,089	-	4.1	2,053	2,159	2,306	-	6.0
수출액 (백만달러)	559,632	572,665	526,757	495,466	-4.0	13,263	14,702	15,579	14,081	2.0
취업자(천명)	25,066	25,599	25,936	26,235	1.5	1,644	1,667	1,657	1,660	0.3
재정자립도 (%)	51.1	50.3	50.6	52.5	0.9	56.6	57.4	56.8	60.1	2.0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이며, 2015년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 산업 현황

부산광역시의 산업구조는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79.4%, 제조업 19.8%, 광업·농림어업 0.8%로 서비스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14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 및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기타 기계 및 장비'가 각각 16.7%, 14.9%로 가장 높았다. 생산액 기준으로 '자동차 및 트레일러'가 15.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13년에 비해 비중이 다소 감소하였다. 이 외에도 '금속가공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등의 업종 비중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았다.

2013년과 비교해서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전반적으로 큰 비중 변화가 없는 가운데 '식료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가 다소 증가하였다. 종사자수 기준은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기타 기계 및 장비'가 증가하였으며, 생산액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가 증가한 반면, '1차 금속 제조업'의 생산액 비중은 감소하였다.

표 3-2-2 부산광역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3년			2014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6.3	6.3	6.2	6.7	6.4	6.1
의복, 의복액세서리	0.1	0.1	2.3	0.3	0.1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7.2	7.2	5.2	7.3	7.6	5.6
1차 금속 제조업	7.1	7.8	18.8	7.2	7.9	16.7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 제외)	16.1	12.7	11.3	16.7	13.0	11.7
전기장비	5.9	5.7	5.0	5.9	5.8	5.2
기타 기계 및 장비	16.3	14.5	12.4	16.7	14.9	12.6
자동차 및 트레일러	6.3	8.9	13.2	6.2	8.7	15.1
기타 운송장비	0.2	0.3	5.4	0.2	0.3	5.0

주 : 2015년, 2016년 자료는 없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2014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 기준 '기타 개인 서비스업'과 '교육 서비스업'이 각각 37.6%, 16.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부동산 및 임대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순으로 높았다. 반면 종사자수 및 매출액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30.0%, 31.2%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의 비중이 높았다.

2013년과 비교할 때, 사업체수 기준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이 다소 증가한 반면, ‘교육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감소하였다. 종사자수 기준은 업종별 비중 변화가 크지 않았으며, 매출액 기준은 ‘기타 개인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이 증가하였다.

표 3-2-3 부산광역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3년			2014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0.6	1.5	3.0	0.6	1.5	3.1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9	2.8	5.6	2.1	3.0	6.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4.5	10.6	21.0	15.3	10.3	20.0
사업지원 서비스업	6.0	22.5	13.3	6.2	21.9	13.7
교육 서비스업	16.6	9.9	6.1	16.2	9.8	5.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9	29.1	30.6	12.1	30.0	31.2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10.3	6.5	9.6	9.9	6.4	8.5
기타 개인 서비스업	38.3	17.1	10.8	37.6	17.0	11.7

주 : 2015년, 2016년 자료는 없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3. 혁신활동 현황

부산광역시의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 연구개발비 1.3조원, 연구개발인력 24,124명, 연구개발조직수 1,580개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인력, 연구개발조직수 모두 2013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는데, 특히 연구개발조직수는 연평균 25.6%, 연구개발비는 연평균 15.4%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3년에 비해 연구개발비, 인력, 조직수 모두 증가하였다. 연구개발비의 경우 0.32%p, 연구개발인력은 0.19%p, 연구개발조직수는 0.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부산의 혁신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5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5,786건이며, 등록은 2,281건으로 2013년에 비해 특허 출원은 증가한 반면, 등록건수의 감소 폭은 컸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3년에 비해 특허 출원건수 0.5%p, 등록건수 0.01%p가 증가하여 각각 3.46%, 2.99%로 나타났다.

표 3-2-4 부산광역시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연평균증가율
연구 개발	연구개발비	965,470 (1.63)	1,104,845 (1.73)	1,286,165 (1.95)	15.4
	연구개발인력	21,162 (3.72)	21,441 (3.54)	24,124 (3.91)	6.8
	연구개발조직수	1,001 (3.63)	1,254 (3.92)	1,580 (4.23)	25.6
특허	출원	4,738 (2.96)	5,337 (3.25)	5,786 (3.46)	10.5
	등록	2,850 (2.98)	2,790 (2.87)	2,281 (2.99)	-10.5

주 : ()는 전국대비 비율임. 2016년 자료는 없음.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부산광역시는 대륙과 해양을 잇는 동북아시아의 거점도시이자 세계로 통하는 관문으로 온난한 기후와 수려한 환경 속에서 열정적이면서도 따뜻한 기질을 길러온 시민들이 가꾸어온 도시이다.

1950년 한국전쟁기 부산은 임시수도가 되어 위기를 극복하는 중심에 있었고 엄청난 피란민을 수용하면서 전후 국가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우리나라 민주화의 성지이다. 부산은 한국전쟁 이후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지금은 우리나라 제일의 항만·관광·국제회의·금융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은 물론 우리나라 컨테이너 물동량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세계적인 슈퍼항만을 가진 해양물류의 중심도시이자 세계로 통하는 유라시아의 관문도시로써 동북아의 중추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각종 대규모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로 세계 속의 부산으로 발돋움하여 세계적인 도시와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세계인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관광도시로 명성을 더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심화가 원도심 공동화를 야기하고, 중심상권의 활력 침체가 고용 및 세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어 정부의 도시재생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원도심 중심기능을 회복시키는 한편 도시 활력을 적극적으로 제고시킬 필요가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선 사업 등을 비롯한 다양한 도시 재생 사업은 도시 재창조를 통한 골고루 함께 균형 발전하는 도시 건설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세계경제의 낮은 성장률 지속과 불확실성 요인이 본격화 되면서 국내 여건 또한 정국 불안 장기화 속에 경제침체와 위기가 상존하고 있으나 부산은 민선 6기 출범 후 위대한 부산의 새시대를 열기 위하여 준비한 밑그림과 전략체계 위에 비전과 정책과제들의 성과 창출로 도시활력을 회복하고 더 큰 발전으로 “변화와 희망”을 위한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조선·해운업 위기의 지역경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부산 경제 체질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 중심 시정’과 ‘지역경제 체질 강화’에 더욱 초점을 두면서도 지진대책, 원전위험 해소 등 시민불안과 갈등 해소에도 전 행정력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지역내 격차 해소를 위한 서부산권 개발 가속화를 위해 낙동강 횡단교량 신설 등 서부산권 도로망 확충과 함께 취약한 동·서간의 연결 도로망에 대한 사업투자와 지원을 확대하고 신공항 공항개발기본계획 수립 및 사상스마트시티 본격 착수, 에코델타시티 등 시정 숙원사업을 지속 추진하면서 서부산 발전의 상징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세계적인 이벤트 2030 등록엑스포의 부산유치와 낙동강 중심의 서부산 발전 촉매 역할을 하게 될 낙동강 하굿둑 개방 등으로 위대한 낙동강 시대를 열어갈 서부산 그랜드 플랜이 본격 실현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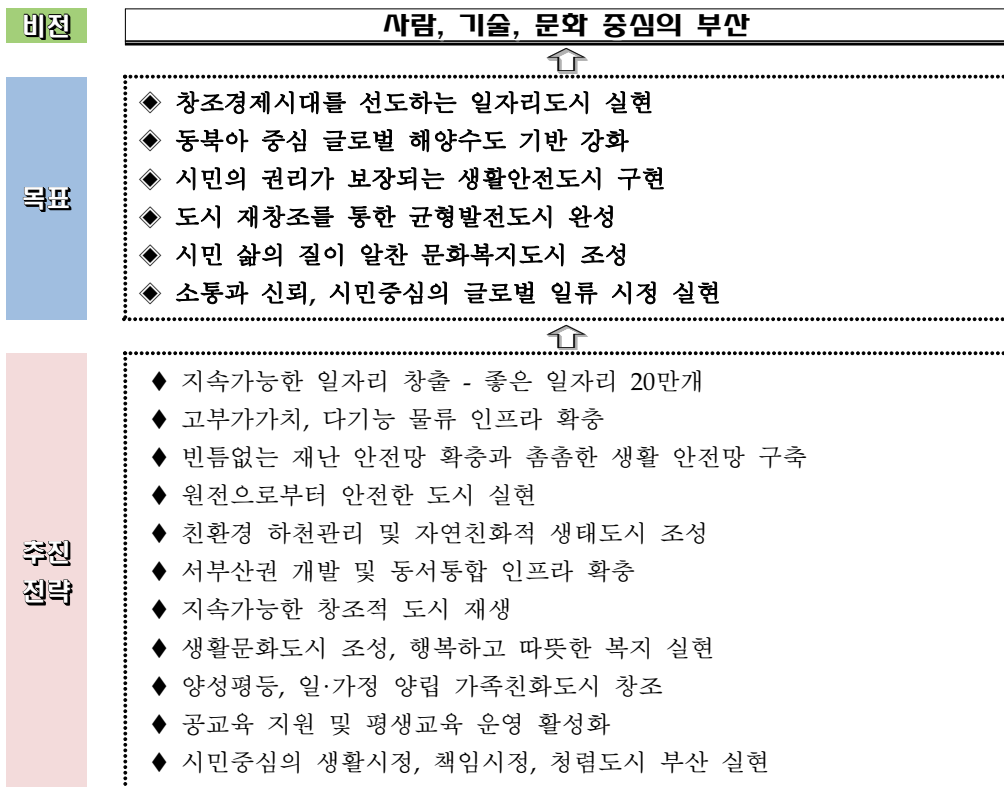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부산광역시시는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이라는 도시비전을 설정하여 세계경제의 흐름에 적절히 대응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인재를 키우며, 기술을 혁신하고, 문화로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체계적 추진을 위해 ‘창조경제시대를 선도하는 일자리도시 실현’, ‘동북아 중심 글로벌 해양수도 기반 강화’, ‘시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생활안전도시 구현’, ‘도시 재창조를 통한 균형발전도시 완성’, ‘시민 삶의 질이 알찬 문화복지도시 조성’, ‘소통과 신뢰, 시민중심의 글로벌 일류시정 실현’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림 3-2-1 부산광역시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2. 추진전략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일자리도시 실현’을 위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기업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성장건인, 산업단지 확충 및 투자유치 확대, 주력산업 고도화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과학기술기반 신성장산업 육성 및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 강점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 등의 실행사업을 선정하고 특히, 해운대 글로벌 스마트시티 구축으로 IoT 전문인력 1,500명 양성, 창조기업 150개 및 글로벌 강소기업 15개 육성 등을 통해 창조경제 선도에 앞장선다.

‘동북아 중심 글로벌 해양수도 기반강화’는 항만 접근성 향상 및 배후시설 확충, 글로벌 해양허브 도시 위상제고, 해양·수산 클러스터 구축 등의 사업을 통해 고부가 가치, 다기능 물류 인프라 확충에 전념한다.

‘시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생활안전도시 구현’은 빈틈없는 재난 안전망 확충, 촘촘한 생활안전망 구축,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실현, 친환경 하천관리 및 자연친화적 생태도시 조성,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도시 정착을 통해 원칙과 기본을 충실히 이행하는 안전제일 도시로 거듭난다.

‘도시재창조를 통한 균형발전도시 완성’은 서부산권 개발 및 동서통합 인프라 확충, 시민이 타고 싶은 대중교통 환경개선, 지속가능한 창조적 도시재생 실현, 도시경쟁력 기반을 강화하고 도시정비사업 활력을 제고하여 부산을 일상의 즐거움과 삶의 활력이 충만한, 골고루 잘사는 행복한 도시로 만든다.

‘시민 삶의 질이 알찬 문화·복지도시 조성’은 시민에게 다가가는 생활문화도시 조성, 모두가 더불어 사는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실현, 장애인 생활능력 향상과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 정립,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 가족친화도시 창조, 활력과 행복이 가득한 건강도시 구현, 튼튼하고 알찬 시민친화형 레포츠 육성, 공교육 지원 및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로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문화가 풍족한 부산을 만든다.

‘소통과 신뢰, 시민중심의 글로벌 일류 시정 실현’을 위해서는 시민이 만족하는 시민중심의 생활시정 구현, 성과창출과 보답하는 책임시정 확립, 재정운영 혁신을 통한 재정 건전화 도모로 시민과 함께하는 눈높이 시정, 신뢰와 존중받는 공직사회로 거듭나고자 한다.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부산광역시는 지역행복생활권으로 김해·양산·울주와 연계하여 부산중추도시생활권을 구성하였다. 현재 생활권 4개 지자체간 상생협력을 위해 낙동강벚길복원 관광자원화 사업, 사회적 약자 스마트 위치관리 시스템 구축, 폐기물 처리시설 공동이용, 화장시설 공동 이용, 상수원 공동 이용, 광역 도시철도 노선 연장, 광역도로 연장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림 3-2-2 부산광역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특히, 2016년에는 ‘사회적 약자 스마트 위치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이 선도사업에 선정되어 부산중추도시생활권의 주민행복 실현에 기여할 예정이다. ‘사회적 약자 스마트 위치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은 부산중추도시생활권 4개 지자체가 모두 함께하는 사업으로 2016~2017년 2년 동안 27.55억 원(국비 22.04억 원 확보)의 예산으로 추진된다. 이 사업은 초등학생, 장애인 등의 위치정보를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주는 공동 사회 안전망으로 주민의 행복한 삶의 질과 직결된다. 그 외, 영락공원 화장시설 공동 활용, 범기수원지 상수원 공동 이용,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 공동 활용 등 생활권 자체 연계협력사업을 지속 발굴·추진하여 지역 간 상생협력을 적극 도모하고 있다.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부산광역시시는 서부산 시대 개막의 주춧돌을 마련하고, 동북아 중심의 글로벌 해양수도로 거듭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실현하였다. 그 결과 낙동강 횡단대교, 해안순환도로망, 제3차 대도시권 교통혼잡 도로 지정 등 동·서 연결 및 내부간선도로망 확충에 주력하여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광역 경제권 도로망을 구축하였다. 또한 부산을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대중교통 중심도시 부산’을 선언하고 2020년까지 대중교통 수송부담률 60% 달성을 위해 캠페인, 언론보도, 시민토론회 등으로 시민공감대를 확산하였다. 과밀노선 집중배차, 2층 버스 시범운영, 전기버스 도입 등 ‘부산행복버스 만들기’ 실현과 BRT(원동교차로~올림픽교차로) 준공 및 산단 밀집지역 가변차로 설치 등 대중교통 체계 개선에 나섰다. 또한 동해남부선 부산~일광구간 준공과 부전~마산 복선전철사업 추진 등을 통한 철도 교통 인프라 확충, 승강장 안전문 100% 설치 완료 등 도시철도의 안전성을 제고하여 시민을 위한 교통인프라 확충에 주력하였다.

특히, 부산형 도시재생 확산 및 서민과 청년을 위한 새로운 부산형 주거정책으로 국가지원 도시재생사업 추진, 부산역 일원 원도심 경제기반형 국가선도사업 설계용역 완료, 청년창조발전소 조성 등 지속가능한 도시재생발전의 기반을 구축하였고, 행복마을 만들기, 복합커뮤니케이션센터, 마을지기사무소, 깡깡이 예술상상마을 조성 등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산복도로 활력을 위한 만디버스 운영,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청자빌딩 근대건조물 지정 용역 완료 등 지역자산 활용 맞춤형 도시재생을 실현하였다.

부산광역시시는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빈곤 해소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임대료 안정화 등 새로운 부산형 주거정책으로 2022년까지 신규 공공임대주택 7만3천호 공급이라는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참여형 부산 미래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 시민아카데미를 운영하고 도시계획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시민참여형 도시계획을 활성화시키고, 도시공간정보시스템과 부산 생활지리 정보 통합 포털 구축, 도로명주소 명품 특화 거리 조성, 지적 불부합지 정리 및 지적 재조사 등 시민 중심의 토지정책으로 부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기반 확충에 주력하였다.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부산광역시시는 명실상부한 일자리 중심도시로서 기업유치와 창업, 미래 먹거리 창출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하였다. ‘일자리 창출’을 시정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전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최고의 성과를 나타낸 한해로 4,800명의 직접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는 국내외 글로벌 기업 40개사를 유치하였고, 국내 최대 ‘센텀2지구 도시첨단 산업단지’ 지정계획의 국토부 승인을 이끌어내는 한편 지속적인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노력으로 지역 고용률 안정화 기반을 확보하였다.

‘조선해운 위기사태’로 촉발된 불황 극복을 위해 위기업종 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을 강화하고,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서민금융 지원 등 서민경제 안정화에 주력한 결과 중기청 ‘월드클래스 300프로젝트’에 지자체 최대인 23개사가 선정되었고, 글로벌 강소기업 36개사, 부산형 히든챔피언 12개사를 선정·지원하였다.

창업중심 도시를 위한 창업생태계 구축 및 지역의 R&D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산형 창업지원 플랫폼과 혁신형 창업기반을 마련하여 창업카페에는 42,000명이 방문하고 창업지원센터에는 386명이 지원하였다. 대학 중심의 R&D 역량 강화와 기술사업화 추진의 플랫폼을 마련하여 동남권 첫 SW 중심대학으로 부산대학교를 선정하고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을 유치하여 전문, 고급리더 과정 등 4개 과정 97명이 SW 전문교육에 참여하였고, SW 융합특강에 100명이 참여하였다. SW 캠프 40명, 해카톤대회 30명, SW 코딩 페스티벌 600명, 재능나눔봉사 40명, SW 심화교육 90명, 전공체험 150명, 방과후 교사양성 60명 등 SW 가치확산에 기여하였다. 연구개발특구육성(R&D) 사업으로 연구성과 사업화와 연구소기업·창업성장지원분야에 120건 110억 원을 지원하여 41개의 기업 연구소 설립, 유망기술 발굴 118건, 고용 149명, 매출액 86.7억 원, 창업 25개의 실적을 거양하였다.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인 사회적기업 육성 부문에서는 11개의 사회적기업과 19개의 예비사회적 기업 등 30개의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였고, 판로개척과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2016 부산 사회적 경제 한마당’을 개최하는 한편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지역 부품소재 기업이 대부분 영세하고 낮은 투자비로 운영되고 있어 기업의 R&D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의 기업지원이 필요하였고 이에 부산시는 부산지역 부품소재 종합기술 근접지원 사업으로 14개 기업이 12.5억 원의 매출증대를 일으켰고, 3개 기업이 3.3억 원의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12개 기업에서 16명의 고용창출효과를 나타냈다. 하이테크 부품소재 중소기업 연구기반 구축사업으로는 33개사에서 48억 원의 매출증대와 8개사에서 10억 원의 수출증가를, 8개사에서 23명의 고용이 창출되는 등 원천기술개발에 취약한 지역 영세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였다. 미래성장 동력산업육성으로 16개 기업을 지원하여 신규고용 37명, 산업재산권 26건과 112%의 매출 증대를 나타내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였으며 지역과학기술인협의체 등의 운영 활성화에도 기여하였다.

국제금융 중심도시로서의 위상강화와 글로벌 선도형 스마트 시티로의 도약을 위해 금융전문대학원 설립 국비 확보,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 교육연구원 개원, 2018년 아프리카 연차총회를 유치하여 글로벌 금융중심지로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과학기술 기반 R&D 역량강화와 부산형 창업생태계 활성화로 파워반도체 상용화 사업 유치, 대학산학연 연구단지 확대 2개소, 기초과학연구단지 및 FAU유체역학연구소 유치 등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였으며, 부산형 TIPS타운 ‘센탑’ 개소로 기술창업지원을 본격화하여 창업카페를 2개소로 확대하고 14개 펀드 1,870억 원의 창업자금 조성 및 지원 등으로 부산을 아시아 제1의 창업도시로 만들었다.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부산광역시시는 행복한 미래를 실현하는 글로벌 지식도시 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동·서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공교육 지원을 내실화 하는 등 교육하기 좋은 도시 구현에 앞장 서고 있다.

우수대학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부산지역 대학의 특성화 분야 육성을 위하여 산학협력 관련 재정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BB 21(Brain Busan 21)을 통해 고급 연구 인력을 꾸준히 양성하고 있으며, 그 결과 고급연구인력 203명 양성, 논문발표 331건, 경영 및 기술지도 99건, 상품화 실적 6건, 기술이전 25건, 사업수주 57건 36.5억 원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전문화, 고도화되고 있는 산업환경에 대응 가능한 수준별, 단계별 현장 중간 리더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기술사관 육성사업으로 433명의 중간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등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한 인력양성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마이스티고를 육성하여 약 90%의 졸업생 취업률을 달성하였다.

국립부산과학관에서 부산과학축전을 개최하여 3일간 부스 120개 운영으로 3만명이 참가하였고, 과학문화 확산 및 과학대중화를 위하여 74개소의 생활과학교실을 2,732회 운영하여 41,210명이 참여하였고, 89개소의 찾아가는 생활과학교실은 1,800회 운영으로 34,700명이 참여하였다. 9개소의 fun&fun 과학관 해설 및 체험프로그램은 5,344회 운영으로 75,960명이 모였고 W-Science 페스티벌은 4회 개최로 2,400명의 서부산권 학생들에게 과학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자유학기제 이공계 진로체험 프로그램인 과학잡고 진로잡고는 7개 학교 163회 운영으로 3,469명이 참여하였다. 또한 대학(원)생, 고교생 45명의 과학 논문 제출자에게 부산 미래과학자상을 시상하였고, 우장춘 추모식, 우장춘 생명공학캠프 등 과학선현 기념사업을 벌였으며 과학총서 등을 발간하였다.

어린이, 학생 및 가족 단위의 학습활동을 지원하고 나아가 시민의 교육·문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운대 인문학도서관을 건립키로 하고 인문학 도서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건립에 대한 회의와 학무모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인구밀집지역 내 생활밀착형·자연친화적 공공도서관 건립으로 시민의 복지 증진에 주력하고 있다.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부산광역시시는 부산다운 문화도시 조성 및 하천생태계 복원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주도적으로 지역 문화역량을 선도하고 강화시키는 시책을 추진하였다.

주민 주도적 문화마을을 조성하고자 수영팔도 문화마을에서는 ‘난장, 느리게 걷기’라는 마을 브랜드를 만들어 주민코디네이터를 도입하였고, 「수영강은 흐른다」, 「수영을 걷다」 등 마을 책자를 발간하였으며, 주민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사랑방 개최 9회, 느리게 걷기 지도 제작, 문화 해설사와 단체탐방 등으로 주민의 문화마을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켰다.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 이라는 비전에 부합하는 웰빙형 관광 명소를 만들기 위해

달맞이길 청사포 문화마을 조성사업 컨설팅 용역을 실시하여 각종 지역 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CV갤러리 투어, 벽화로 이루어진 문화예술거리를 조성하였고, 30여회의 언덕음악회 및 어울림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문화와 예술을 바탕으로 한 보고 즐기는 자생적 문화마을 조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달맞이 길” 및 “청사포” 특화 브랜드를 활용하여 전국적 인지도를 향상시켰다.

과거의 공간가치에 동시대적 기능을 살린 장소로 리노베이션하고자 부산시와 고려제강사이에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추진 MOU를 체결하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32억 원을 확보하였다. 이로써 기업 메세나를 활용한 시민·예술인 중심의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부산시는 2016년 9월에서 11월까지 2개월 동안 23개국 56명의 예술가들이 168점의 작품을 전시하는 부산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부산의 기초예술단체 및 개인의 예술창작 활성화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에 대해 복수 심의제 등 심의방식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사업신청, 교부, 정산 등에 전산시스템 사용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문학, 미술, 사진, 영상, 음악, 연극, 무용, 전통 국악 등 9개의 기초예술분야에서 431건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올해의 문학, 다원예술, 공공예술기획, 창작공간 활성화, 국제예술교류, 브랜드콘텐츠제작 등 6개의 기획특화분야에서 29건을 선정하는 등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콘텐츠를 적극 발굴 육성하였다.

부산 원도심의 숨겨진 관광자원 소개를 통한 원도심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6개 코스에서 12,829명이 참가하는 투어를 운영하였고 이야기 할매·할배 66명과 21명의 외국어 안내 인력을 양성하고 1,438명의 스토리텔러를 파견하는 등 원도심 스토리투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여행사와 연계한 원도심 유료 관광상품을 운영한 결과 9월에는 지역발전사업 우수사례 추진기관으로 선정되었고, 12월에는 ‘2016 한국 관광의 별’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또한 부산시는 크루즈 운영 활성화를 위해 총 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국제크루즈 입출항 환영(송)행사, 무료 셔틀버스 운영, 관광안내소, 크루즈버디(자원봉사자) 운영, 관광객 홍보물 제작 배부 등으로 2016년 11월을 기준으로 200회 74만명이 이용하여 전년도 대비 3배 이상의 실적을 거두었다.

생태 복원 분야에서는 초량천, 대리천, 감전천, 부전천, 동천의 생태하천복원, 꽃마을

천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생태도시 기반을 조성하였다. 특히 부산지역 환경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체 환경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환경 인재의 취업을 돕고자 녹색환경지원센터를 운영하여 10건의 환경현안 연구개발과 과제를 수행하고 39개의 중소기업체에 환경사업을 지원하였으며, 18명의 환경사업체 인턴십 연수를 실시하였다.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부산광역시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부산형 복지정책 추진과 100세 안심도시의 기반을 마련하고 양성평등, 일·가정이 양립하는 가족친화도시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전달체계로 다복동 사업을 추진하여 52개의 동 맞춤형복지팀을 설치·운영하여 188명의 공무원과 152명의 민간전문 인력, 131명의 보조인력을 투입하였고 그 결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4배 증가, 방문상담 4배 증가, 사례관리 2.8배 증가, 서비스 연계가 2.7배 증가하였다. 한편 동 운영세칙을 제정하고 민간복지기관 실무책임자와 운영 매니저가 참여하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체제를 정비하였다. 특히, 부산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사업인 ‘다복동 사업’의 안착 및 확산 기반을 조성하여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2016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평가’ 읍면동복지허브화 광역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취약계층 아동의 맞춤형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6개소의 드림스타트 센터를 운영하여 4,688명의 아동이 이용하였고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15개소의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하여 600명의 청소년이 이용하였으며, 205개의 지역아동센터에 168억 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아동발달단계 및 지역여건에 따른 저녁 돌봄과 다문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돌봄 사각지대가 해소되도록 노력하였다.

모두가 더불어 사는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실현을 위해서 중증장애인 4,810명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도모 및 복지증진에 앞장서는 한편 청년 자살률 감소를 위해 23개 대학에서 「청년 safe-zone」 사업을 시행하여 38,855명에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신건강증진교육을 실시하였다. 지역사회 중증정신 질환자 조기발견, 등

록, 사례관리 및 사회복귀 지원으로 정신이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였고 「누구나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부산! 모두를 위한 정신건강」이라는 비전으로 시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아동·청소년, 청장년, 노인으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중증정신질환 관리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제4절 향후 추진계획 및 과제

민선6기 실질적 3년차인 2017년 부산광역시 시정목표의 확실한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해로써 글로벌 도시를 향한 부산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 가도록 시정 역량을 하나로 집중한다. 이를 통해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민선6기 시정비전 실현을 앞당겨 완성하고자 6대 중점분야 29대 주요과제를 추진한다.

첫째, 민선6기 시정운영의 핵심 가치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경제 혁신과 변화의 바람을 일으킨다.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에 관한 범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고, 기업현장 소통 및 민·관 협치를 통해 시정의 일자리 창출 리더십을 더욱 강화한다. 기업현장과 소통과 효율적인 일자리 정보 제공을 위해 공무원 민간기업 근무제도를 운영하고 노사 협력을 통한 근로자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청년 일자리 허브 구축, 맞춤형 일자리 지원, 일자리 미스매치 제로화 등 심각한 청년 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하여 지역 맞춤형 정책인 청년 일자리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둘째, 위대한 낙동강 시대를 열어갈 서부산 그랜드 플랜 실현으로 서부산을 부산 발전의 중심축으로 만들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부산청사 등 이전을 가시화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4시간 안전한 관문공항으로서의 김해신공항을 추진하며 2030 등록엑스포 유치와 낙동강 하굿둑 부분 개방 실현으로 강 생태계 회복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셋째, 부산을 사람 중심의 도시로 재창조하기 위해 단순 주거재생을 뛰어 넘는 도시 전반의 재생을 통해 도시 활력과 지역상권을 살리는 부산형 도시재생 사업의 확산에 주력하는 한편, 원도심 대표 도심하천(복개하천) 생태복원을 통해 친환경 도시 공간을 조성하고 하천 주변의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이끌어 낸다.

넷째,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가는 동시에 도시환경을 쾌적하고 안전한 글로벌 도시수준으로 만든다. 이를 위해 글로벌 해양기구의 유치와 극지 진출 본격화에 대비하는 등 해양 중심도시로 도약할 체계를 마련하고 해양 인프라 확충과 함께 지진, 원전등 시민 우려가 큰 도시 안전문제에 보다 적극 대응한다.

다섯째, 부산의 진정한 문화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시민과 함께 키워나가며, “다함께”의 의미를 살리는 ‘틈새없는 복지’를 실현한다. 이를 통해 삶의 질이 높은 행복도

시, 부산다운 문화·복지도시를 조성하고,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게 문화, 예술 분야의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창의성을 키우며 시민 삶의 질과 가치를 더 높여 '부산형 복지 기준'의 실행을 더욱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시민참여를 이끌어 내는 쌍방향 정책홍보와 뉴미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정책 콘텐츠 홍보와 함께 현장 소통을 위한 정책콘서트 등을 통해 시민중심의 열린 시정을 구현한다. 이는 급변하는 ICT환경과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스마트 시정환경을 구축하여 시민과의 소통과 참여로 '열린 시정' 가치를 실현할 것이다.

제3장 대구광역시

제1절 대구광역시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대구광역시의 인구는 2013년 이후 소폭 감소세를 보이며 2016년 기준 249만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국 연평균 성장률과 비슷한 4.5% 증가하여 2015년 기준 49조원을 기록하였다. 또한 1인당 GRDP도 연평균 4.7%의 성장률을 보이며, 2015년 기준 1,992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연평균 성장률(4.1%)을 상회하는 수치이지만,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수출액은 2014년 78억 달러로 최고점을 찍은 후 점차 감소하여 2016년에는 17.4억 달러 감소한 69억 달러를 기록했다. 대구광역시 재정자립도는 2016년 기준 57.1%로 2013년(51.8%) 대비 5.3%p 높아졌다. 이는 전국 재정자립도(52.5%)보다 높은 수준이다.

표 3-3-1 대구광역시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대구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증가율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증가율
지역내총생산 (십억원)	1,430,255	1,485,505	1,563,668	-	4.6	44,754	46,524	48,889	-	4.5
인구(천명)	51,141	51,328	51,529	51,696	0.4	2,502	2,493	2,488	2,485	-0.2
1인당 GRDP(만원)	2,848	2,946	3,089	-	4.1	1,816	1,891	1,992	-	4.7
수출액 (백만달러)	559,632	572,665	526,757	495,466	-4.0	7,012	7,807	7,090	6,916	-0.5
취업자(천명)	25,066	25,599	25,936	26,235	1.5	1,195	1,215	1,234	1,234	1.1
재정자립도 (%)	51.1	50.3	50.6	52.5	0.9	51.8	51.7	53.1	57.1	3.3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이며, 2015년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 산업 현황

대구광역시의 산업구조는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78.0%, 제조업 21.6%, 광업·농림어업 0.3%로 나타났다.

2014년 대구광역시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종사자수 및 생산액 기준으로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가 각각 17.0% 및 21.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체 수 기준으로는 '금속가공제품'이 21.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두 업종 모두 지속적으로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외 '기타 기계 및 장비',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의 비중도 높게 나타났다.

2013년과 비교할 때,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기준으로 '기타 기계 및 장비'와 '금속가공제품'이 다소 증가하였다. '섬유제품'의 경우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액의 경우 '기타 기계 및 장비', '금속가공제품', '섬유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이 모두 소폭 감소하거나 보합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3-3-2 대구광역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3년			2014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3.4	3.8	5.2	3.4	3.6	4.8
섬유제품	18.9	15.8	11.3	18.2	15.3	11.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2.3	2.5	3.8	2.5	2.7	3.7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7.6	8.2	7.1	7.7	8.1	7.0
1차 금속	2.8	2.2	5.2	2.9	2.3	5.2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 제외)	21.0	15.9	13.5	21.2	16.4	13.7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2.3	7.1	5.2	2.3	6.9	4.8
기타 기계 및 장비	14.8	12.6	13.7	15.2	13.3	13.9
자동차 및 트레일러	9.0	17.2	21.5	8.9	17.0	21.1

주 : 2015년, 2016년 자료는 없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2014년 대구광역시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으로 '기타 개인 서비스업'(36.5%), '교육 서비스업'(19.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2.9%), '부동산업 및 임대업'(12.6%)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수 및 매출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각각 31.4%, 34.0%로 가장 높았으며, '기타 개인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과 비교할 때, 사업체수 기준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다소 증가한 반면, 그 외 '교육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은 감소하였다.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이 다소 증가하였으며, 매출액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다소 증가했다. 그 외 모든 업종이 감소하거나 보합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3-3-3 대구광역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3년			2014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0.6	1.1	4.8	0.6	1.2	4.3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8	3.7	7.4	2.0	3.7	6.5
부동산업 및 임대업	11.8	9.3	18.8	12.6	9.7	18.4
사업지원 서비스업	4.5	18.9	14.4	4.7	18.1	13.4
교육 서비스업	20.3	13.0	8.0	19.6	12.7	7.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2.7	30.6	31.4	12.9	31.4	34.0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11.4	6.9	5.1	11.0	6.6	5.1
기타 개인 서비스업	37.0	16.5	10.1	36.5	16.7	10.6

주 : 2015년, 2016년 자료는 없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3. 혁신활동 현황

대구광역시의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 연구개발비 1.1조원, 연구개발인력 16,923명, 연구개발조직수 1,604개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인력, 연구개발조직수 모두 2013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연구개발조직수와 연구개발비는 각각 연평균 28.7%, 15.9%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전국대비 대구광역시 연구개발 활동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2013년과 비교해 연구개발비(0.29%p), 연구개발인력(0.4%p), 연구개발조직수(0.78%p)의 모든 영역에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대구광역시의 혁신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현황을 보면, 2015년 기준으로 특허출원 4,864건, 등록 2,043건으로 2013년 대비 특허 출원은 증가한 반면, 등록건수는 크게 감소했다.

대구광역시 혁신활동의 전국대비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2013년과 비교해 특허 출원건수는 0.38%p 증가하였으며, 등록건수는 0.08%p가 감소하여 각각 2.91%, 2.68%로 나타났다.

표 3-3-4 대구광역시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연평균증가율
연구개발	연구개발비	821,246 (1.38)	970,544 (1.52)	1,103,985 (1.67)	15.9
	연구개발인력	13,287 (2.33)	15,395 (2.54)	16,923 (2.73)	12.9
	연구개발조직수	969 (3.51)	1,284 (4.01)	1,604 (4.29)	28.7
특허	출원	4,054 (2.53)	4,470 (2.72)	4,864 (2.91)	9.5
	등록	2,641 (2.76)	2,701 (2.78)	2,043 (2.68)	-12.0

주 : ()는 전국대비 비율임. 2016년 자료는 없음.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대구광역시에는 대구테크노폴리스, 대구국가산업단지 등 16개 산업단지를 비롯해 대구 기계부품연구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 다양한 기업지원기관들이 집적하고 있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의 입지로 신성장 동력확보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을 비롯해 다수의 대학교와 한국장학재단, 한국 교육학술정보원 등 교육학술 관련 공공기관들의 집적으로 인한 우수한 교육인프라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인재양성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된다.

또한 팔공산 갯바위, 도동 측백나무 숲 등 우수한 자연자원과 김광석 거리, 근대문화 골목 등의 풍부한 근대도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구국제오페라축제, 대구 국제뮤지컬페스티벌 등 전국 최고 수준의 공연문화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특히 컬러풀 대구페스티벌, 동성로 축제 등 지역의 다양한 축제들이 전국 규모로 확대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는 대표적인 ‘공연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 위주의 취약한 산업구조와 지속적인 인구감소, 글로벌 접근성 취약 등은 대구광역시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R&D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산업 고도화, 지식·기술 기반의 산업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며, 다수의 벤처 집적시설들을 활용한 벤처창업활성화로 우수인력 확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최근 대도시권(MCR) 단위의 글로벌 경쟁체제의 확대와 대구시 내 대규모 이적지(경북도청 이전, 두류정수장 폐쇄 등)는 새로운 성장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구미, 경주, 영천, 포항, 울산 등 주요 제조업도시와 인접하고 있어 연계협력을 통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기업 및 기관 유치, 창의인재 육성, 문화 예술 기능 강화 등 주민행복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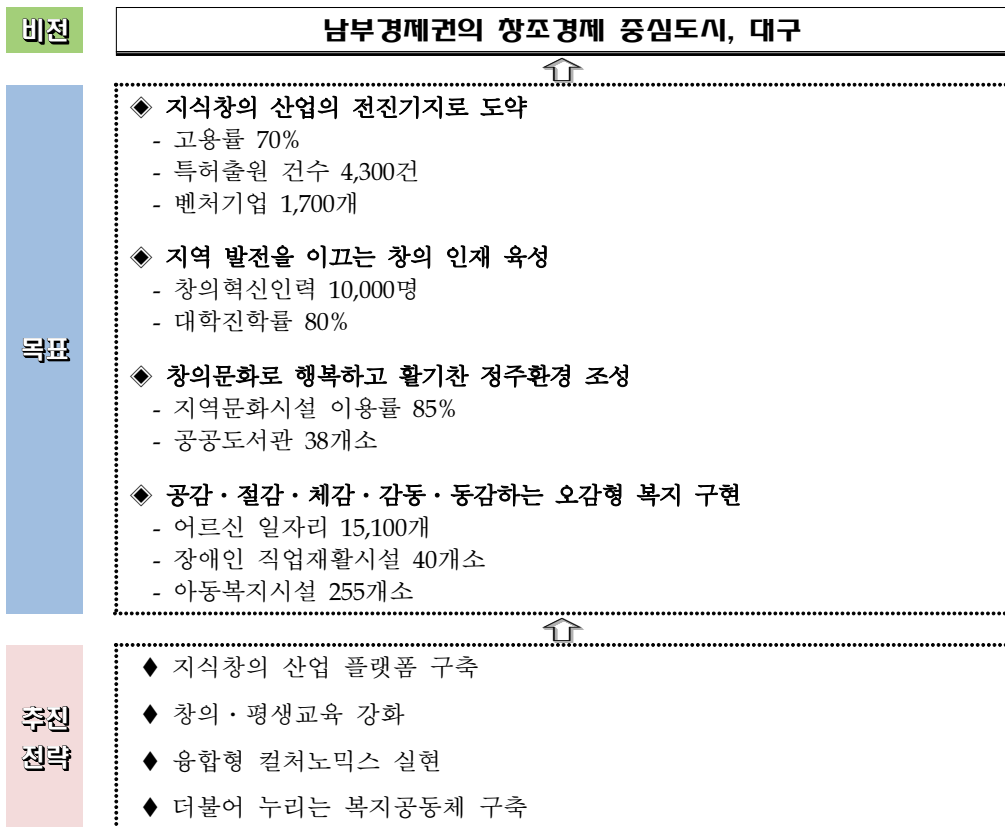
따라서 대구광역시는 강점과 기회요인을 연계하여 역사문화적 동질성, 지역자원의 상호보완성 등을 바탕으로 생활권 내 연계 기능을 활성화하고, 남부경제권의 거점도시로서의 역할 강화에 집중 지원해야 한다.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대구광역시시는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경제패러다임의 변화, 공간적 기능과 위상, 주변 지자체와의 역할관계 및 지역의 정책적 의지 등을 고려하여 '남부경제권의 창조경제 중심도시, 대구'로 발전비전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비전 실현을 위해 크게 경제·산업, 인력양성, 문화 및 생태, 복지의료 분야에 대해 '지식창의 산업의 전진기지', '지역발전을 이끄는 창의적 인재 육성', '창의문화로 행복하고 활기찬 정주환경 조성', '공감·절감·체감·감동·동감하는 오감형 복지 구현'을 각각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림 3-3-1 대구광역시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2. 추진전략

대구광역시시는 발전비전과 4대 분야의 목표 실현을 위해 각각 ‘지식창의 산업 플랫폼 구축’, ‘창의·평생교육 강화’, ‘융합형 컬처노믹스 실현’, ‘더불어 누리는 복지공동체 구축’을 추진전략으로 취하고 있다.

첫째, 지식창의 산업의 전진기지로 도약을 위해 ‘지식창의 산업 플랫폼 구축’을 추진전략으로 실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SW융합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지식창의산업 및 신성장산업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로봇산업 및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중심으로 한 의료부문 R&D역량 강화와 의료관광 활성화, 지역산업 기술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 건강한 벤처생태계 구축을 통한 창업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둘째, 지역 발전을 이끄는 창의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창의·평생교육 강화’를 추진전략으로 취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장 맞춤형 인재육성과 지역기업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대구교육국제화특구 사업, 평생교육진흥원 및 공공도서관 건립 등의 사업을 통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와 평생교육학습체계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셋째, 창의문화로 행복하고 활기찬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융합형 컬처노믹스 실현’을 추진전략으로 설정하고 있다. 지역주력산업 및 문화산업에 ICT융합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콘텐츠 사업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공연콘텐츠 개발과 공연 창작지원·인력양성 등을 통해 ‘공연문화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생활문화센터 등 문화 인프라 확충을 통해 시민 문화향유 증대 및 지역의 문화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넷째, 공감·절감·체감·감동·동감하는 오감형 복지구현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더불어 누리는 복지공동체 구축’을 실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 체감도를 제고하는 효율적 복지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특히 지역민의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과 지역응급의료 협력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역민의 건강 증진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대구광역시의 지역행복생활권은 대구중추도시생활권 1개 권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8개 시·군(경북 7, 경남 1) 모두가 행복한 생활공동체를 조성하고자 ‘영남 중추생활권의 주민행복 기반 향상’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다.

대구중추도시생활권은 4개의 선도사업(한방 MRC 신한류 창조·한방 휴(休) 사업, 약용작물 명품화 지원사업,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힐링푸드밸리 조성사업, 신의 물방울 연계 6차 산업 창출사업)이 이미 완료되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추진 중인 선도사업으로는 대구-경산 간 교육·문화·한방의료를 연계협력하는 ‘수경지역 전통문화·건강체험 자원연계 주민 HI-Up 프로젝트’와 대구광역시, 동구, 경산이 연계한 ICT기술 기반의 정신보건 케어 ‘ICT기반 마음톡톡(Talk Talk) 행복지원 프로젝트’가 있다.

또한 대구광역시는 대구중추도시생활권에 경북 포항, 안동, 경남 창녕을 포함한 대구지역생활권을 자체적으로 확대·발전시킴으로써 지역연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림 3-3-2 대구광역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대구광역시의 지역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중점 추진내용은 크게 균형 있는 도시발전, 전통시장 육성 및 도시농업 활성화, 지역교통망 및 교통 인프라 확충 등으로 구분된다.

먼저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위해 대구광역시는 ‘달성3색 문화창조도시 브랜드 구축 사업’(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5회, 6,000만원), ‘안심창조밸리 조성사업’(안심지역 인구 2,455명 증가), ‘연암 서당골 여행’(주민참여 프로그램 27회) 등 지역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며, 이를 통해 지역 활력 및 주민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증대되었다. 또한 다양한 재정비촉진지구 지원 사업(신암, 평리) 및 대구형 도시재생사업 등 도시기능 회복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민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다음으로 전통시장 육성 및 도시농업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이에 따라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30개 시장에 대해 13개 사업을 추진(추진률 69%)하였으며, 온누리 상품권의 높은 판매율(837억 원)과 회수율(1,153억 원)을 달성했다. 또한 지역에 소재한 전통시장을 고유한 개성과 특색에 따라 특화시장으로 선정하고(서문, 원고개, 복덕신, 칠곡, 신매, 달서, 와룡, 용산, 신평리, 두류종합), 디자인 ICT 융합, 상품개발, 핵심포,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마지막으로 지역교통망 및 교통 인프라 확충이다. 교통 수요가 높은 지역(수성유원지, 동촌유원지 등)에 공영 주차장 조성 및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민들의 불편 해소와 교통사고를 예방했다. 또한 ‘안심~하양 복선전철’(신규고용 170명) 건설, 대구 서북부지역 산업단지와 경북 왜관·구미권을 연결하는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중앙투자심사 완료), ‘대구순환고속도로 다사IC(용지보상률 94%) 및 부동IC(실시설계 공정률 90%) 연결도로 건설’ 등의 사업을 통해 도시 접근성 향상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했다.

이 외에도 ‘소하천 정비사업(12.53억 원)’, ‘성서소각시설 설치사업(환경위원회 개최)’, ‘폭염대응시설 개선·확대(쿨루프 4개소, 물놀이장 2개소, 도심야영장 1개소, 50면)’ 등 생활 편의시설 확충 및 재해예방 사업을 활발히 추진함으로써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대구광역시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제고는 '지식융합산업의 전진 기지'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크게 SW 융합생태계 기반 조성, 신기술 융·복합을 통한 지역 산업의 고도화, 창업활성화를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대구광역시는 'SW융합기술 고도화 기반조성사업'을 통해 SW융합기술지원센터 건립, 테스트베드 장비도입(90종), GS 등 시험인증(167건), 컨설팅(161건), Open Lab 서비스(47건) 등의 추진실적을 거두었으며, SW융합산업 핵심거점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3D프린팅 종합지원센터 구축'사업을 통해 신규고용창출(23명), 장비가동률(82%), 산학연 지역네트워크 구축(3회),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확산(11건), 인력양성(1,559명) 등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창업초기기업 SW제품 상용화 지원사업'으로 지원기업의 매출액 증대(23억 원) 및 신규 고용창출(14명) 효과를 거두었다.

다음으로 신기술 융복합을 통한 주력산업 고도화와 관련하여 '우수기업 성장동력화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내 스타기업을 발굴·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이를 통해 지원 기업은 높은 매출성장률(4.5%)과 고용 증가율(4.1%)을 기록했다. 또한 이업종 기술 융합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업종 융합 비즈니스 기반 조성'사업(개발지원 18건, 전시회 참가 3회 등)을 추진함으로써 152억 원의 매출증대 효과를 거두었다. 특히 '지역중소기업 디자인 지원사업'은 매출(7.73%) 및 고용(3.11%) 측면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원 기업들의 만족도 또한 88.4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업들은 지역 기업들의 고부가가치화와 더불어 기업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했으며, 기술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지역기업과 전문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해 산업 간 동반성장 및 지역산업 저변확대에도 크게 기여했다.

마지막으로 창업활성화를 위한 추진내용으로 '스마트 벤처 창업학교 운영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146명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를 거두었으며, '창업지원센터 지원사업'을 통해 시제품 제작(72건), 특허·인증(94건), 마케팅지원(165건), 전시회(29건), 컨설팅(151건) 등 다양한 성과를 달성했다. 이러한 사업들은 대구광역시 창업기업의 안정적 사업경영 및 성공률 제고에 기여했다.

그 외 대구광역시에는 ‘물산업클러스터 공업용수 취·정수장 건설’, ‘산업융합 연구기반 구축사업’, ‘산학연 협력기술개발 지원사업’ 등 지역의 특화산업 및 네트워크 구축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활동을 활발히 추진했다.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대구광역시는 ‘지역발전을 이끄는 인재육성의 중추도시’를 목표로 지역대학 역량 강화, 산업맞춤형 인력 양성, 평생학습체계 마련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 마이스터고 지원, 평생학습 도시 활성화 사업 등이 있다.

먼저 지역대학 및 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추진실적으로 현장실습생 4,315명, 캡스톤디자인 5,777명, 창업 강좌 180회, 특성화 인력양성 3,065명, 기술이전 91건, 기술사업화 51건, 기술지도 1,340건 등을 달성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고용 및 창업활성화를 제고했다.

산업맞춤형 인력 양성 측면에서는 기술분야 영마이스터(전문가 장인) 양성을 위해 ‘마이스터고 지원사업(137억 원)’을 추진했다. 대구광역시 내 마이스터고 3개교(대구일 마이스터고, 소프트웨어고, 자연과학고)의 실험·실습 가자재 확충 및 영마이스터 프로그램 운영 등이 시행되었으며, 지역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유능한 실무형 인재 양성에 기여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는 지역의 평생학습 체제 구축을 위해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사업’을 추진했다. 구체적으로 55건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이에 대해 55개의 기관 및 2,236명이 참가했다. 이러한 성과는 광역단위 평생교육의 중추기관인 ‘대구평생학습진흥원’의 안정적인 현장 착근과 운영활성화에 기여했으며, 근거리 학습권 확보를 통해 지역민에 대한 평생학습 기회 확대와 참여율을 향상시켰다. 대구평생학습진흥원은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직업연계 평생학습 운영, 성인기초 문해 교육 운영 등 다양한 사업(13건)들을 추진했으며, 지역의 평생학습 활성화 및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소생애에 걸친 지역민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에 기여했다.

4. 지역 문화 육성, 생태복원

대구광역시 지역문화육성, 생태복원을 위해 지역대표 문화공연 육성 및 문화산업 역량 강화, 생활밀착형 문화 공간조성, 지역 생태환경 보전과 자원 활용성 제고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먼저 대구광역시는 ‘대구 공연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통해 19개의 소공연장 구축(집적화)과 20개소의 소공연장에 임차지원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지역의 공연 창작 의욕 및 역량을 제고하였으며, ‘공연문화도시’ 브랜드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대구 국제오페라 축제지원’사업(공연 프로그램 33회, 참가단체 18개, 관람객 수 86,826명), ‘대구생활예술페스티벌’사업(생활예술동호회 참가 수 82개 팀), ‘대구 사진비엔날레’(33개국 530여명 참가, 총 2,721작품 전시), ‘2016 대구아트스퀘어’(관람객 수 39,000명, 매출액 35억 원) 등 다양한 문화예술 지원 사업들을 추진함으로써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문화 생산과 창조형 여가문화를 조성했다. 특히 대표적인 지역축제인 치맥축제, 국제포크축제, 호러연극제, 관악축제 등과 연계하여 전국 규모의 축제로 확대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대구광역시의 노력으로 문화공연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도와 참여율이 향상되었다.

다음으로 생활밀착형 문화공간 조성은 지역민의 문화 향유권 제고와 문화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 문화 낙후지역인 서구 비산5동에 ‘생활문화센터조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민의 문화여가 참여율 및 생활문화예술 참여 접근성을 제고했다. 또한 ‘웃는얼굴아트센터 공연장 리모델링’(이용객 수 19,340명)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양질의 공연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을 통해 구립도서관 2개소(동구 신천도서관, 서구 비산도서관)를 개관함으로써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지식정보 격차 해소 및 지역민의 문화역량 강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 생태환경 보전 및 자원 활용성 제고를 위해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연결교량설치 등 토목공사 30%), ‘팔공산 내 생태통로 조성’(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 100%), ‘대명유수지 땀뽕이 생태학습장 조성’(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 100%) 등 지역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보호하고, 이를 활용한 생태문화 관광지 조성 등 지역민들에게 녹색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대구광역시는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를 위해 맞춤형 복지지원 및 의료 체계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민의 복지체감도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했다.

대구광역시는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581억 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장애아 시설 환경개선(28개소)’,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10개소)’ 등 보육 공공성 확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또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했으며(등록시설 890개, 수혜어린이 30,000여 명), 일자리 창출(71명)과 식품안전 및 영양 교육(6,246회, 54,656명) 측면에서도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10개소 12개 반, 1,395백만 원)은 청소년들의 사교육비 절감 및 비행노출 등을 예방했으며,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새일센터 지정운영’은 종합적인 취업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제고했다. 그 결과 취업(5,437명), 창업(31명), 동행면접(725명) 등 다양한 영역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신축 1, 장비보강 7)’, ‘장애인 단기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29개소, 2,256백만 원)’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가정 및 사회 조기 복귀를 도모했으며,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수혜인원 530여명, 일자리 창출 160명)’,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지원노인 수 2,070명, 981백만 원)’ 등을 통해 노인복지증진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는 예방적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과 네트워크 강화 활동을 활발히 추진함으로써 지역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의료체계의 효율성을 도모했다. 시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은 정신건강박람회(1회, 10,000명), 24시간 위기대응시스템(3,000건), 생명존중문화조성 교육(10,000명), 생명지킴이 및 강사양성(100명) 등의 실적을 거두었다. 또한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운영’(12개소, 480명)은 주간 보호 서비스와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노인건강증진과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일조했다(2,294백만 원). 특히 ‘지역응급의료체계 선진화’ 사업은 중심병원 5개소와 협력병원 44개소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3,060건의 환자전원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응급실 환자 체류시간 감소 등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제4절 향후 추진계획 및 과제

대구광역시시는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따라 생활권 중심의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지역특화사업인 SW융합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7년도에는 전체적인 지역발전의 틀을 유지하면서, 4차 산업혁명과 지역분권 시대를 대비하여 신성장 동력 확보 및 내생적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특히 미래형 자동차, 물, 의료, 에너지, 사물인터넷(IoT)을 5대 핵심 산업으로 선정하고, 낡은 산업 구조를 개편해 첨단산업도시 구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먼저 도시기능의 회복과 지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 자원을 연계한 스토리텔링형 마을 조성, 지역문화개발 등 주민의 정책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지역민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및 다사IC, 부동IC 등의 고속도로 연결도로 건설을 통해 도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다음으로 지역산업의 구조 고도화, 창업생태계 강화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SW융합기술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기업의 기술 고도화 및 이업종 융합 비즈니스 기반 조성, 신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한다. 또한 스마트벤처창업학교와 창업보육센터 활동 강화를 통해 창업을 활성화하고 인재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한다. 교육 측면에서는 지역대학 역량 강화 및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대학-기업 간 인력 미스매치 해소와 실무형 인재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의 우수한 문화콘텐츠와 비즈니스 활동의 조화를 통해 문화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생활 속 문화복지 구현으로 지역민의 문화 향유권 및 문화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생애별/대상별 맞춤형 복지 제공과 의료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지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체감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주변도시와의 연계 강화를 통해 중추도시생활권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한다.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도심권 중심의 성장잠재력 육성과 주변도시의 활력 회복을 추진하여, 다차원적인 광역서비스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제4장 인천광역시

제1절 인천광역시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인천광역시의 인구는 2013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2016년 기준 294만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국 연평균 성장률을 상회한 연평균 8.6%로 증가하여 2015년 기준 76조원을 기록하였다. 1인당 GRDP도 2,64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성장률도 7.4%로 전국 성장률을 상회하였다. 수출액은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에는 2013년 273억 달러보다 85억 달러 31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재정자립도는 67.0%로 2013년의 67.3%에 비해 0.3%p 낮아졌으나, 전국 재정자립도인 52.5%보다 높았다.

표 3-4-1 인천광역시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인천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증가율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증가율
지역내총생산 (십억원)	1,430,255	1,485,505	1,563,668	-	4.6	64,654	69,501	76,206	-	8.6
인구(천명)	51,141	51,328	51,529	51,696	0.4	2,880	2,903	2,926	2,943	0.7
1인당 GRDP(만원)	2,848	2,946	3,089	-	4.1	2,288	2,432	2,640	-	7.4
수출액 (백만달러)	559,632	572,665	526,757	495,466	-4.0	27,288	30,003	31,198	35,821	9.5
취업자(천명)	25,066	25,599	25,936	26,235	1.5	1,442	1,469	1,488	1,522	1.8
재정자립도 (%)	51.1	50.3	50.6	52.5	0.9	67.3	66.9	64.4	67.0	-0.1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이며, 2015년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 산업 현황

인천광역시의 산업구조는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72.0%, 제조업 27.5%, 광업·농림어업 0.5%로 나타났다.

2014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금속가공제품’이 18.5%로 가장 높았다. 종사자수는 ‘기타 기계 및 장비’가 17.2%였으며, 생산액 기준으로 ‘자동차 및 트레일러’가 16.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 외에도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전기장비’ 등의 업종 비중도 높았다.

2013년과 비교할 때, 사업체수 기준으로 ‘기타 기계 및 장비’, ‘금속가공제품’이 다소 감소하였으며, 전반적으로 큰 비중변화는 없었다. 종사자수 기준은 ‘전기장비’, ‘금속가공제품’이 증가한 반면,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가 감소하였다. 생산액은 ‘전기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가 증가한 반면, ‘1차 금속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의 생산액 비중은 감소하였다.

표 3-4-2 인천광역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3년			2014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3.4	3.7	8.0	3.6	3.9	7.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의약품 제외)	4.1	3.6	3.9	4.1	3.7	4.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8.1	8.6	4.6	8.3	8.4	4.6
1차 금속 제조업	5.2	6.9	15.1	5.1	6.7	12.6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 제외)	18.8	12.1	5.8	18.5	12.4	5.7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10.7	12.1	7.9	10.5	11.6	7.0
전기장비	7.4	6.2	4.7	7.5	6.8	5.1
기타 기계 및 장비	18.3	17.6	12.7	17.9	17.2	13.8
자동차 및 트레일러	4.9	12.8	17.1	4.9	12.7	16.4

주 : 2015년, 2016년 자료는 없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2014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33.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수 및 매출액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각 32.4%, 27.9%로 가장 높았다. 인천은 그 외에도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의 업종 비중이 높았다.

2013년과 비교할 때, 사업체수 기준은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다소 증가한 반면,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감소하였다. 종사자수 기준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증가한 반면,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감소하였다. 매출액 기준은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이 증가하였다.

표 3-4-3 인천광역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3년			2014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0.9	2.4	12.0	1.0	2.4	11.2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3	2.1	4.2	1.5	2.2	4.6
부동산업 및 임대업	16.6	9.8	17.0	16.7	9.8	19.3
사업지원 서비스업	4.6	19.7	11.6	4.9	19.1	12.2
교육 서비스업	14.7	11.2	6.5	14.7	10.9	6.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4.1	30.7	30.7	14.7	32.4	27.9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13.8	7.8	7.3	13.1	7.3	7.7
기타 개인 서비스업	33.9	16.3	10.7	33.4	15.9	10.7

주 : 2015년, 2016년 자료는 없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3. 혁신활동 현황

인천광역시의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 연구개발비 2.5조원, 연구개발인력 25,319명, 연구개발조직수 2,088개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인력, 연구개발조직수 모두 2013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는데, 특히 연구개발조직수는 연평균 16.1%, 연구개발비는 연평균 8.3%의 증가율을 보였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3년에 비해 연구개발비, 인력이 증가한 반면, 연구개발조직수 비중은 소폭 감소하였다. 연구개발비의 경우 0.19%p, 연구개발인력은 0.15%p 증가하였으나, 연구개발조직수는 0.02%p 감소하였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5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6,633건이며, 등록은 3,214건으로 2013년에 비해 특허 출원은 증가한 반면, 등록건수의 감소 폭은 컸다.

전국대비 비중의 경우 2013년에 비해 특허 출원건수는 0.1%p 증가한 반면, 등록건수 0.47%p가 감소하여 각각 3.97%, 4.21%로 나타났다.

표 3-4-4 인천광역시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연평균증가율
연구개발	연구개발비	2,132,828 (3.60)	2,282,890 (3.58)	2,499,522 (3.79)	8.3
	연구개발인력	22,370 (3.93)	22,983 (3.80)	25,319 (4.08)	6.4
	연구개발조직수	1,548 (5.61)	1,796 (5.61)	2,088 (5.59)	16.1
특허	출원	6,185 (3.87)	6,438 (3.92)	6,633 (3.97)	3.6
	등록	4,478 (4.68)	4,351 (4.47)	3,214 (4.21)	-15.3

주 : ()는 전국대비 비율임. 2016년 자료는 없음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대한민국에서 36년 만에 인구 300만을 돌파한 도시이자, 우리나라 마지막 300만 대도시가 될 인천광역시에는 세계 최고수준의 공항과 항만, 경제자유구역 등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국제기구 중심도시로서 글로벌 도시브랜드 가치가 점차 증대되고 있다. 여기에 중국 및 신흥시장 등과의 경제·문화 교류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외 투자 마케팅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한중 FTA 효력 발효 이후, 중앙정부 차원의 경제협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인천광역시는 제조업 기반강화는 물론 고용창출 및 유관산업의 성장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문에서는 바이오 의약품 해외 진출 본격화로 인천지역 바이오 산업의 성장 잠재력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제조업은 주력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휴대폰·석유화학정제 등이 소폭 증가할 것이다. 다만 세계경제 회복지연에 따른 수요 부진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당분간 보합 수준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세계경제와 국내경제의 회복세가 아직은 미약하고 경기 전망 또한 불투명한 상태에서 인천경제의 경제성장률 역시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임으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8대 전략산업 등 인천의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통해 인천지역 산업기반을 한층 더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여 인천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선점하기 위한 중국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인차이나 프로젝트(In-China Project) 등 대중국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인천 안의 중국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여기에 원도심의 동반성장을 위해 서민중심의 주거정책에 있어서 예측 가능한 주거정책을 기반으로 기존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뉴스테이(New Stay) 등을 활성화하여 원도심을 살리고, 서민 임대주택 공급 및 사회적 약자 친화형 주거정책 등을 통해 인천형 주거복지 지원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민선6기의 핵심과제인 ‘인천 가치재창조’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안착을 통해 인천의 숨겨진 역사문화관광자원의 재발견을 통한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 문화다양성 확대 등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인천을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행복하고 안전한 인천을 만들기 위하여 인천형 복지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보건의료 서비스를 시민체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추진전략

인천광역시는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이라는 시정목표 하에 ‘지역중심지 활력 증진 및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 ‘인천 지역산업 촉진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구현’,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글로벌 인재육성’, ‘인천만의 가치재창조와 지속가능한 생태환경기반 구축’, ‘인천형 공감복지 실현’ 등 5대 분야별로 세부추진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중심지 활력 증진 및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생활인프라, 교통 등)’과 관련, 우선 인천의 가치재창조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보다 가속화하여 원도심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회적 약자 친화형 주거정책 전개 및 인천형 주거복지 지원을 확대하여 인천 주거복지 주권을 실현할 계획이다. 이에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뉴스테이를 활용한 원도심 개선사업,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등 원도심 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룰 예정이다. 다음으로 시민 행복을 위한 인천중심의 교통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인천발 KTX 직결 사업,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건설 사업,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지하화, 인천중심 고속순환망 구축 등 유관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한다.

둘째, ‘인천 지역산업 촉진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구현(일자리·경제)’과 관련하여 인천의 성장동력이 될 미래 먹거리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인천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자 한다. 이에 인천광역시 8대 전략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고 바이오산업 거점 확보, 영종 복합리조트 집적화, 마이스산업 인프라 확충, 로봇랜드 조성, 민관 공동 뷰티 브랜드 어울(Oull)에 대한 해외 진출 확대, 중소기업 창조기술 경쟁력 제고, 신규 및 혁신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인천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서민 경제안정과 더불어 계층을 아우르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또한 중요하므로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고용을 활성화하고, 지역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를 점진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셋째,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글로벌 인재육성, 시민참여형 행복학습 문화 조성(교육)’ 전략으로 우선 외국어 교육 지원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갖춘 국제도시 인천의 미래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며, 이에 인천영어마을 및 글로벌리더십 스쿨을 운영하고 대학생 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지원코자 한다. 다음으로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인천의 미래 인재 양성코자 하며, 이에 4차 산업혁명 시대 준비를 위한 진로교육 환경 조성, 교육 인프라 확충 및 학교 환경개선 지원,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등을 추진코자 한다. 마지막으로 인생 100세 시대, 평생학습을 통한 시민력 향상 및 시민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으로 행복학습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넷째, ‘인천만의 가치창조와 지속가능한 생태환경기반 구축(문화·관광·환경)’과 관련하여 우선 문화성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인천가치 재창조로 문화주권을 실현하고 창작환경 조성 및 문화 인프라를 확대하며, 생활문화 활성화로 시민들의 문화적 권리 실현을 추진코자 한다. 또한 인천만의 창조적 문화유산 계승·발전을 위해 역사문화공간 조성 및 창출과 인천지역내 주요 역사자산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를 시행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한국관광의 미래를 선도하는 융복합 관광메카 인천 조성을 위해 인천 매력 발굴을 위한 관광기반시설 조성, 가치재창조를 위한 관광콘텐츠 발굴 및 홍보를 추진코자 한다. 마지막으로 녹색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의 추진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며, 시민들이 인접한 생활공간 내에서 녹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숲 및 자연마당 조성, 생활공원 확충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녹지 공간을 제공코자 한다.

다섯째, ‘인천형 공감복지 실현 및 안전한 인천 만들기(보건·복지·안전)’ 위해 인천광역시는 인천형 복지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동(同)복지허브화를 통한 취약계층 발굴 및 공동체지원,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및 근로 빈곤층 자활지원, 복지재정 효율화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시행하여 시민들의 복지서비스 체감도를 한층 더 향상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이 체감하는 보건의료 수준 향상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공공보건의료 추진, 체계적인 응급 의료 대응 시스템 구축, 시민과 밀착된 빈틈없는 감염병 관리 등을 주요 목표로 공공보건의료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 서해5도 심신건강관리 지원사업, 농어촌 등 보건의료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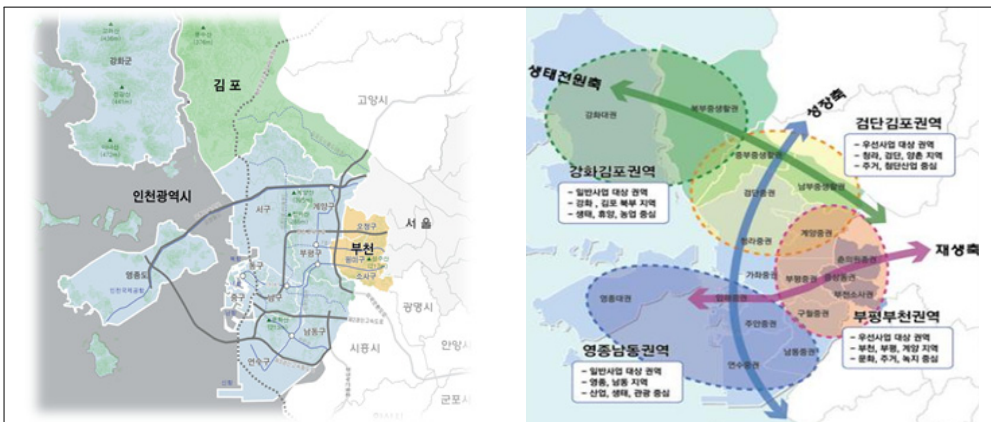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인천·부천·김포 지역행복생활권으로 구성된 3개 지자체의 행정구역은 반경 약 30km범위 내에 있으며, 인천-부천, 인천-김포, 부천-김포 시청 간 거리는 약 7.5km, 18km, 13km로 차로 30분 이내 도달할 수 있는 인접한 생활권 환경이다. 또한, 인천, 부천, 김포는 역사적으로 행정구역의 편입과 분리과정을 거치며, 현재의 경계는 1990년대 들어서 확정되었다. 인천시 10개 군구와 부천시, 김포시는 20년 전부터 행정협의회 구성 및 공동발전협약을 맺고 각종 협력사업을 함께 추진해왔다.

그림 3-4-2 인천광역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인천시 서구, 계양구, 부평구, 남동구, 강화군 등 인접지자체 11개는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1993년 출범)를 심도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강화군, 계양구 등은 강화-김포 공동발전협약(2011년), 계양-김포-부천 공동발전협약(2012년) 등을 체결한 바 있다. 이러한 지자체간 행정협력의 경험이 풍부한 인천, 부천, 김포는 다양한 생활권 정책 현안에 대한 공감대가 기형성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인천·부천·김포 지역행복생활권은 당초 인천·부천 1개 지역으로 구성되었으나, 김포시와의 지속적인 논의와 협의를 통해 2014년 12월 「인천·부천·김포 지역행복생활권 구성·운영」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생활권을 구성하여 정부 재정지원 사업 추진 및 연계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2016년 현재 ‘굴포천 Eco Service 네트워크 구축사업’, ‘아라천 해양생태문화 창조벨트 조성사업’ 등 총 2개의 연계협력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생활권 활력 창출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해당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인천광역시는 지역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중심지 활력 증진 및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인천 중심의 독자적인 교통인프라 구축, 창조적인 중심시가지 재생, 주민체감형 생활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혁신적인 성과를 도출하였다. 우선 인천발 KTX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구축을 본격화하여 광역교통체계구축을 확대하였으며 수인선 인천 전구간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으로 도시철도 인프라가 구축되어 시민의 이동편의 증진과 도로교통난 해소에 기여하였다. 특히 2016년에는 교통주권 회복을 위해 세계 최고의 공항과 항만, 도로를 중심으로 모든 길이 인천으로 통하도록 교통주권 3대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우리시의 위상에 걸맞는 인천 중심 교통체계 구축의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다음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근대문화 자산 등을 연계하는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의 본격 추진하여 개항장 일대(월미도, 인천역, 내항, 개항장 및 동인천역 일원)가 해양·문화·관광이 융합된 지역으로 재탄생되었으며 전국 최초의 뉴스테이를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를 통해 그동안 추진에 난항을 겪던 원도심 개발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주민들의 주거불안 문제와 원도심 정비를 동시에 해결하였다. 이와 더불어 인천광역시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주민밀착형 생활인프라 개선에도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CCTV 설치 사업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보하였고 아울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소비자와 상인 모두가 만족하는 생활경제형 공간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비정상적이었던 수도권 매립지 정책 개선을 통해 수조원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여기에 생활쓰레기로 고통 받는 인천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게 되었다.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인천광역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였다. 우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을 통해 고용률 67.2%로 전국 7대 특·광역시 1위를 차지하였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시장형 우수기관에 2년 연속으로 선정되었고 전국 지자체 대상 지역 일자리목표 공시제 평가에서는 우수상을 받았다. 또한 효과적인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고용노동부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고용·복지·서민금융을 원스톱서비스로 지원하는 광역형 고용복지+센터 전국 최초로 개소하였다.

인천의 성장 동력,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과 지원을 시행하여 국가성장 핵심동력인 인천경제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우선 8대 전략산업의 실효성 있는 육성방안 체계 마련하였으며 첨단자동차·바이오·뷰티 등 선도 벤처·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市 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 창조경제혁신펀드(1,590억 원) 등의 지원하여 전략산업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일조하였다. 또한 바이오 산·학·연 협업 「전문 인력양성 센터」 건립, 바이오 기업 신입·재직자 교육센터 송도에 설치, 로봇산업지원센터 건립 등 8대 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R&D 지원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 외에도 인천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 항공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인천신항 건설 및 항로 중심 등을 통해 공항과 항만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세계물류 중심도시 인천광역시의 지역경쟁력을 보다 강화하였다.

인천광역시는 인차이나(In-China)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인천-중국과의 교류확대 및 대중국 수출역량을 강화하였다. 우선 중국 웨이하이시와 전자상거래 협력 강화 구축 양해 각서를 체결하여 인천내 중소기업들의 중국 수출·입 활성화를 지원하였으며 인천에서 ‘제1회 한·중지사 성장회의’를 개최하여 양국 지방정부간 경제, 문화 활성화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상호 협력을 약속하였다. 이에 인천광역시는 우리나라와 중국간의 수출·문화교류의 선도적인 역할과 중심지로서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서민경제 안정 매진 및 경제활동 촉진을 통한 지역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경제주체의 양적인 확대와 질적인 성장의 동반성장을 도모하여 이에 신기시장연합(신기시장, 남부종합시장) 육성 및 송현시장 야시장 등을 조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별로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 먹거리가 있

는 관광 중심지로 개발하여 주민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여기에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등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해마다 사회적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3.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

인천광역시는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과 유관사업들을 추진하여 다음과 같은 성과를 도출하였다. 우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자유학기제 등 진로체험활동 지원, 장학기금 확충 및 교육 소외계층 멘토링 확대 추진, 중학교 전학년 무상급식 전면 실시 등을 통해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였다.

다음으로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설립 및 북부교육문화센터 건립 지원 등 교육인프라 확충하였으며, 공교육 강화를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코자 장학사업 지속 확대 추진하여 인천지역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다.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인천광역시는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을 위해 ‘인천만의 가치창조와 지속가능한 생태환경기반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인천만의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여 다음과 같은 성과를 도출하였다. 우선 인천가치 재창조로 문화주권 실현, 문화인프라 구축, 생활문화 활성화 등 3대 분야 19개 과제를 추진하는 「문화성시 인천」을 발표하여 문화주권을 실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시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도시 인천을 조성하기 위해 생활문화센터 개관(3개소), 공연예술연습공간 개관, 문화정보 확대, 문화가 있는 날 확산 등 생활 속 「문화」를 실현하여 시민들의 문화행복지수를 높였다. 또한 전국 최초의 문화콘텐츠 창작자 전용공간인 틈문화창작지대를 운영하여 창작자 양성을 지원하였으며, 이야기가 있는 골목길 조성(원도심 문화공간 조성) 등을 통해 낙후된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 넣었다.

관광 활성화와 관련하여 인천만의 가치재창조의 일환으로 「한국최초, 인천최고」

100선 선정·발간하여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 최초 및 유일한 역사와 인천 최고의 사실 재조명 등 체계적 스토리텔링 구축 및 역사문화 콘텐츠를 발굴하였으며, 대외적으로 인천의 역사와 문화 홍보 및 인천 가치제고를 제고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여기에 인천의 168개 섬의 유·무형적 자산을 활용하기 위한 ‘매력 있는 애인(愛仁)섬’ 만들기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접근성, 정주여건, 주민소득, 관광여건 개선 등 4개 분야 27개 과제에 대한 중·단기적 계획을 추진하여 천혜의 섬·해양자원 관광특화를 통한 인천 인지도를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인천을 대표하는 축제를 지속적으로 육성한 결과,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2년 연속-英 Time Out Magazine 세계음악 페스티벌 Best 50선정) 및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 선정) 등을 통해 15만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였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녹색 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강구한 결과, 우선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실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16 대한민국 에너지 효율·친환경 종합대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녹색기후기금(GCF) 지원·협력을 강화하여 2016년 현재 99억을 조성하고, GCF 이사회 등 관련 국제회의를 송도에 유치하였으며 GCF 정규직 직원 증가로 100명 정도의 지역사회 청년고용을 창출하였다. 여기에 석남녹지, 용현녹지, 명상 숲 등 생활권 녹지공간 확대 및 북부권역 공원 조성·관리를 시행하여 자연과 시민이 함께하는 푸르고 쾌적한 생태도시 인천을 조성하고 있다.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사각 없는 지역복지, 의료(보건·복지분야)’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 정비 및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설정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 맞춤형 보건·복지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인천형 복지사업(5개 분야 28개) 추진, 복지정책의 연구·개발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인천복지정책센터 설립·운영, 동복지허브화 시범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 복지공동체 활동 강화,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복지재정의 효율적 관리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등 인천형 복지모델 개발을 통해 복지

체감도 향상과 맞춤형 복지 도시 인천을 구현하였다.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동구 장애인복지관 및 강화군 요한의집 신축 등)으로 장애인의 사회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전국 최초 장애인 자세유지기구 보급사업을 확대 추진하며,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상담으로 복지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복지서비스를 구축하였다. 또한 지역특화형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수요자 체감형 사업 추진 및 외국인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및 시정참여 기회 제공, 사랑의 집고치기 사업 등을 통해 소외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다양성이 존중되는 함께하는 사회를 조성하였다. 여기에 권역응급의료센터 확대(2개소 확대), 인천가치재창조 사업 일환 민관 합동 도서지역 진료 및 원격 화상진료 시스템 구축 사업 등을 통해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의료취약계층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였다. 또한 농어촌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서비스를 시행하여 옹진 5개면 12개 도서 약 2만명의 시민들이 혜택을 받았으며,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및 감염병 감시 강화 등을 통해 시민 모두가 건강한 도시 인천을 만들고 있다.

제4절 향후 추진계획 및 과제

인천광역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행복한 새로운 인천을 만들기 위하여 ‘풍요로운 시민의 삶, 역동적인 세계도시, 인천만의 가치창조, 시민중심 시정실현’의 4대 목표에 부합한 5대 분야별 세부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지역생활권 활성화 분야에서는 인천발KTX 및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추진, 수도권 제2순환도로 개통,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제3연륙교 건설, 인천도시철도 1호선 김단 및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등의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한 사통팔달 인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서해5도 등 접경·도서지역에 대한 생활인프라 개선 및 소득창출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여기에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등 인천지역 고유성과 근대문화 및 역사적 명소를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을 본격화하여 열악한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함께 인천지역 내 취약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활성화를 위해선 인접지자체인 부천, 김포 등 생활권 지자체간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며, 주민 참여 유도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신규사업 발굴을 확대하고자 한다.

둘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분야에서는 인천시는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한 8대 전략산업 육성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에 인천시의 지역적 강점과 여건을 감안하여 경제성, 기술성, 전략성, 입지적합성, 향후 가능성 등을 고려한 산업별 전략을 정립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 1위 도시인 인천을 지속하기 위해 수요자의 요구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좋은 일자리 제공을 위해 다양한 정책발굴과 유관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대중국 협력·상생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인천과 중국과의 경제·문화·관광·교육분야 교류확대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인천시의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중국 시장을 선점코자 한다. 아울러 인천은 8대 광역시 중에서 가장 넓은 농업진흥지역을 지니고 있으며 총 168개의 섬과 해양환경을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강화군과 옹진군 등 인천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농어촌 산업기반을 활성화해 나가고 아울러 농어촌 체험시설 등을 확충하여 지역민의 소득 증대를 지원코자 한다.

셋째,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 분야에서는 우선 공교육 내실화를 통해

학생들에게 형평성 있는 교육기회 및 꿈을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명품 교육도시 인천'을 조성코자 한다. 또한 외국어 교육 지원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갖춘 국제도시 인천의 미래인재와 차세대 리더 육성의 초석을 마련하려 한다. 여기에 인생 100세 시대, 평생학습을 통한 고용증진 및 시민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맞춤형 평생 학습 지원으로 행복학습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넷째,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분야에서는 인천만의 가치재창조를 통해 인천시를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도시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해양, 항공, 경제자유구역, 개항, 근대문화자산 등 인천만이 지닌 가치를 발굴·창조하고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 마케팅, 매력적인 섬 만들기, 축제문화의 브랜드화, 친수와 항만이 조화된 관광산업 육성, 경인아라뱃길 수변공간 개발 등을 통해 인천만의 차별화된 문화·관광콘텐츠 발굴을 지속하고자 한다. 또한 일상 속 문화 소외시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창작환경 지원 등을 통해 시민이 꿈꾸는 행복한 문화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여기에 세계인이 교류하는 창조 국제도시 인천을 위해 21세기 고부가가치 「MICE산업」의 전략적 육성 및 해외관광객 특화 마케팅 강화, 선택적 관광기반시설 조성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저감과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환경오염 방지활동과 미세먼지 저감, 악취관리,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등 GOF 본부도시에 걸맞은 녹색도시 조성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다섯째, 사각 없는 복지, 의료와 관련하여 시민의 미래가 행복한 공감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인천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및 복지 안전망 구축, 사회복지정책 종합 컨트롤 및 복지추진 기능 강화, 저소득층 의료지원 확대, 공공보건인프라 확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이에 잠재적 취약계층 발굴·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맞춤형 고용·복지지원을 통한 탈빈곤 추진을 유도할 계획이며 SOS 복지안전벨트 지원(인천형 긴급복지) 및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돌봄사업추진 등 민관 협력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도 병행코자 한다. 또한 장애인이 행복한 복지도시 인천을 구현하고자 저소득 장애인 안정적 생계보장 및 장애인 자립기반 사업 추진, 장애인 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확충을 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및 어르신 생활안정 지원, 양성평등 실현 등을 통해 사회적 보호계층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구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도서지역 등 의료취약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확대하여 시민 모두가 건강할 수 있는 공공의료서비스를 지원·확대할 계획이다.

제5장 광주광역시

제1절 광주광역시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광주광역시의 인구는 2016년 기준 147만명인 것으로 2013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국 연평균 성장률을 하회한 연평균 4.2%로 증가하여 2015년 기준 32조원을 기록하였다. 1인당 GRDP은 2,13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성장률도 4.1%로 전국 성장률과 같았다. 수출액은 2014년 163억 달러로 정점을 기록한 뒤 2016년에는 16억 달러 감소한 14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재정자립도는 51.5%로 2013년의 45.4%에 비해 6.1%p 높아졌으나, 전국 재정자립도인 52.5%보다 낮았다.

표 3-5-1 광주광역시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광주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증가율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증가율
지역내총생산 (십억원)	1,430,255	1,485,505	1,563,668	-	4.6	29,763	31,295	32,297	-	4.2
인구(천명)	51,141	51,328	51,529	51,696	0.4	1,473	1,476	1,472	1,469	-0.1
1인당 GRDP(만원)	2,848	2,946	3,089	-	4.1	1,966	2,064	2,130	-	4.1
수출액 (백만달러)	559,632	572,665	526,757	495,466	-4.0	15,868	16,258	15,305	14,699	-2.5
취업자(천명)	25,066	25,599	25,936	26,235	1.5	708	736	740	738	1.4
재정자립도 (%)	51.1	50.3	50.6	52.5	0.9	45.4	46.0	49.3	51.5	4.3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이며, 2015년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 산업 현황

광주광역시의 산업구조는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71.5%, 제조업 28.0%, 광업·농림어업 0.5%로 서비스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비중은 광역시 중 울산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 수 기준으로는 '기타 기계 및 장비'가 18.8%로 가장 높았다. 종사자수 및 생산액 기준으로 '자동차 및 트레일러'가 각각 23.8% 및 42.7%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외에도 '전기장비', '금속가공제품' 등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과 비교할 때,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기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가 다소 증가하였다. 종사자수 기준은 '금속가공제품', '전기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가 증가하였으며, 생산액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기계 및 장비'가 증가한 반면, '전기장비'의 생산액 비중은 감소하였다.

표 3-5-2 광주광역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3년			2014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제조업	4.8	2.7	1.9	4.5	2.7	1.8
의복, 의복액세서리	1.7	0.6	0.1	1.7	0.6	0.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11.1	12.7	8.2	11.5	11.8	8.5
1차 금속	4.7	2.4	4.2	4.3	2.4	4.1
금속가공제품(기계·기구 제외)	15.6	8.2	4.4	15.4	8.5	4.7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5.2	11.8	6.1	4.9	11.1	5.9
전기장비	10.8	14.6	19.4	10.9	15.2	16.9
기타 기계 및 장비	18.0	11.8	7.9	18.8	12.6	8.4
자동차 및 트레일러	11.2	23.6	40.8	12.5	23.8	42.7

주 : 2015년, 2016년 자료는 없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2014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 기준 '기타 개인 서비스업'과 '교육 서비스업'이 각각 34.0%, 19.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종사자수 및 매출액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33.4%, 28.6%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도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지원 서비스업'등의 업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013년과 비교할 때, 사업체수 기준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다소 증가한 반면, '교육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감소하였다. 종사자수 기준도 사업체수 기준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매출액 기준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 하였으며, '사업지원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은 감소하였다.

표 3-5-3 광주광역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3년			2014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0.5	1.3	5.7	0.5	1.2	4.6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2	3.4	6.0	2.1	3.2	4.9
부동산업 및 임대업	12.0	9.8	21.8	12.9	10.3	27.7
사업지원 서비스업	4.9	17.4	13.1	5.4	17.3	12.4
교육 서비스업	20.3	12.5	7.3	19.5	11.7	6.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3.3	32.4	29.4	13.7	33.4	28.6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12.6	7.2	7.7	11.9	6.9	6.9
기타 개인 서비스업	34.3	16.1	9.1	34.0	16.0	9.0

주 : 2015년, 2016년 자료는 없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3. 혁신활동 현황

광주광역시의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 연구개발비 73백억 원, 연구개발인력 13,225명, 연구개발조직수 750개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인력, 연구개발조직수 모두 2013년과 비교했을 때, 증가하였는데, 특히 연구개발조직수는 연평균 13.8%, 연구개발비는 연평균 11.1%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3년에 비해 연구개발비, 인력이 증가한 반면 조직수는 감소하여 각각 1.11%, 2.13%, 2.01%를 차지하였다. 연구개발비의 경우 0.11%p, 연구개발인력은 0.06%p 소폭 증가한 반면, 연구개발조직수는 0.09%p 감소하였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5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3,074건이며, 등록은 1,298건으로 2013년에 비해 특허 출원은 증가한 반면, 등록건수의 감소 폭은 컸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3년에 비해 특허 출원건수 0.32%p, 등록건수 0.04%p가 증가하여 각각 1.84%, 1.7%로 나타났다.

표 3-5-4 광주광역시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연평균성장률
연구개발	연구개발비	593,698 (1.00)	679,836 (1.07)	733,169 (1.11)	11.1
	연구개발인력	11,813 (2.07)	12,178 (2.01)	13,225 (2.13)	5.8
	연구개발조직수	579 (2.10)	662 (2.07)	750 (2.01)	13.8
특허	출원	2,436 (1.52)	2,612 (1.59)	3,074 (1.84)	12.3
	등록	1,589 (1.66)	1,626 (1.67)	1,298 (1.70)	-9.6

주 : ()는 전국대비 비율임. 2016년 자료는 없음.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광주광역시시는 서남권 거점의 중심도시로서 풍부한 유·무형의 도시자원이 집적된 상태이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지닌 문화·예술의 도시이다. 이와 더불어 산업간 융합화 및 특성화를 통해 친환경 자동차, 에너지 신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비교우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문화전당을 통해 문화융성을 꾀하고 있으며,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입주한 16개 공공기관의 집적화, 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따른 새로운 경제적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대비 교육·문화시설 및 서비스는 양적·질적 열세이고, 지역의 인재유출로 인해 기술개발 등 핵심 기업 활동에서의 제약을 받고 있다. 또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클러스터 조성과 지역특화프로젝트로 지정된 문화·콘텐츠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다. 특히, 남구 송하동 CGI센터 일원의 '첨단실감 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구축', 중외공원 및 용봉지구 일원에 세계적인 종합예술공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비엔날레상징 국제타운 조성사업',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광주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등 지역현안 과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행·재정지원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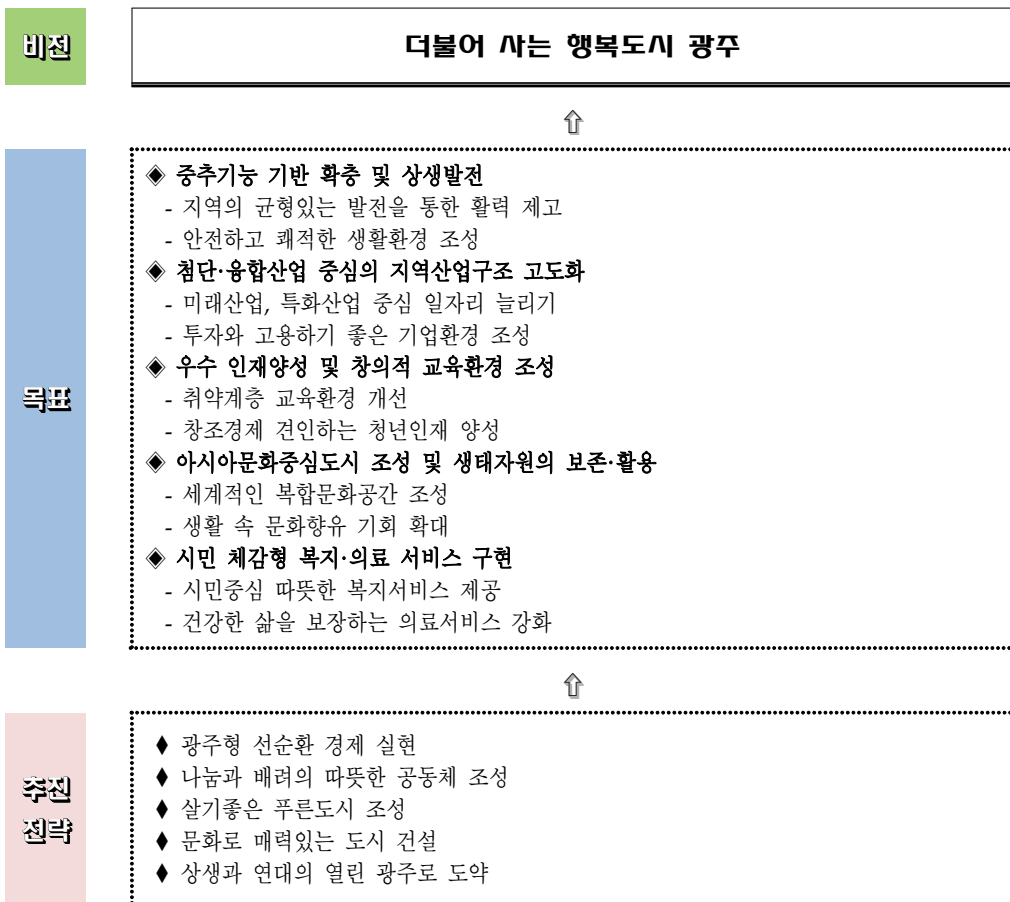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이 깃든 문화·예술의 도시 ▪ 자동차 및 에너지 신산업등의 비교우위 확보 ▪ 세계적인 민주·인권·평화도시로서의 인지도 확보 ▪ 서남권 교통·물류·서비스의 거점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재유출에 따른 우수 인적자원 부족 ▪ 취약한 산업기반과 경쟁력있는 선도기업의 부족 ▪ 배후도시(인접 시군) 경쟁력 취약 및 인구감소 ▪ 특화된 도시브랜드 미흡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 국제행사 성공적 개최에 따른 도시브랜드 상승 ▪ 연구개발특구 및 혁신도시 조성 ▪ 문화콘텐츠 특화도시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령화, 생산인구 감소 등 사회구조 변화 ▪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성장잠재력 저하 ▪ 보편적 복지욕구 증대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 가중 ▪ 도시간 경쟁 심화 및 인구증가의 정체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이라는 비전에 맞추어 중추기능 기반확충 및 상생발전, 첨단·융합산업 중심의 지역산업구조 고도화, 우수 인재양성 및 창의적 교육환경 조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및 생태자원의 보존·활용, 시민 체감형 복지·의료 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3-5-1 광주광역시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특히 지역전략산업(친환경 자동차산업, 에너지 신산업, 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 더불어 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광주형 협치 모델을 구축하여 더 발전된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다. 열린 광주를 위해 생활권 주민 및 지자체간 상생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더불어 사는 행복도시 광주”를 구현하고 있다.

2. 추진전략

광주광역시의 발전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첫째, 광주형 선순환 경제의 실현이다. 이를 위해서 ①청년일자리 창출(청년창업생태계 조성, 청년취업 활성화 기반 강화), ②미래먹거리 산업 집중육성(자동차산업밸리 본격 추진, 차세대 에너지산업 허브도시의 기틀을 마련,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 ③일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선진 노사 문화 정착 및 광주형 일자리 모델구축, 실질적 성과중심의 투자유치), ④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민생경제 활성화로 서민경제 안정, 사회적 경제기업 성장기반 구축)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둘째, 나눔과 배려의 따뜻한 공동체 조성이다. 이를 위해서 ①시민의 인권보호와 돌봄복지 강화(시민의 인권보호 기반강화, 촘촘한 복지 체계 구축, 복지서비스 제고를 위한 기반 정비, 어려운 이웃을 보다 세심하게 살피는 정책 추진, 광주거주 외국인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 지원), ②어르신·여성·청소년이 행복한 도시(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가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일·가정 양립환경 조성, 청소년이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도록 지원), ③참여·협력·나눔의 마을 공동체 확산(마을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공동체 조성지원,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의 삶의 질 개선, 주민 상호간 신뢰와 유대 제고를 위한 장 확대)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셋째, 살기 좋은 푸른도시 조성이다. 이를 위해서 ①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무등산 환경복원 및 가치 세계화,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기반강화, 꽃과 나무와 어우러진 정원도시, 기후변화에 강한 저탄소 선도도시, 하천 및 하수시설 수질개선), ② 활력있고 안전한 미래도시(지속가능한 미래설계, 활력 있는 도시재생, 시민을 보호하는

안전도시), ③시민이 편리한 녹색교통 도시(시민중심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지역 간 경계를 허무는 교통망 확충, 촘촘한 광주권 광역교통·도로망 구축)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넷째, 문화로 매력있는 도시 건설이다. 이를 위해서 ①고품격 문화도시 조성(아시아 문화발전소 문화전당과 협업 강화, 전당 주변을 ‘걷고 싶은 거리, 문화가 살아있는 거리’로 조성, 지역·세계와 문화로 소통), ②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도시(미디어아트 창의도시 ‘빛’이 함께하는 거리 조성, 도심 속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쉼터조성, 발걸음 하고 싶은 매력적인 관광코스 운영), ③문화예술 생산·유통·소비 활성화(문화전당 주변 문화예술공원 육성, 남도인의 예술적 끼가 살아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스포츠 축제)

다섯째, 상생과 연대의 열린 광주로 도약이다. 이를 위해서 ①지역발전을 위한 상생 가속화(한 뿌리 생활권인 광주·전남 상생협력 강화, 인접 지자체간 연대 강화, 광역단위 상생협력 확대), ②남북·국가·도시간 우호협력 강화(남북간 교류협력 활성화, 중국과 친해지기 정책추진, 해외 자매·우호도시와 실질적 교류), ③연대와 협력의 광주정신 실천(인권관련 국제기구 등과 교류협력 강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5·18민주화운동 계승 및 발전적 확산)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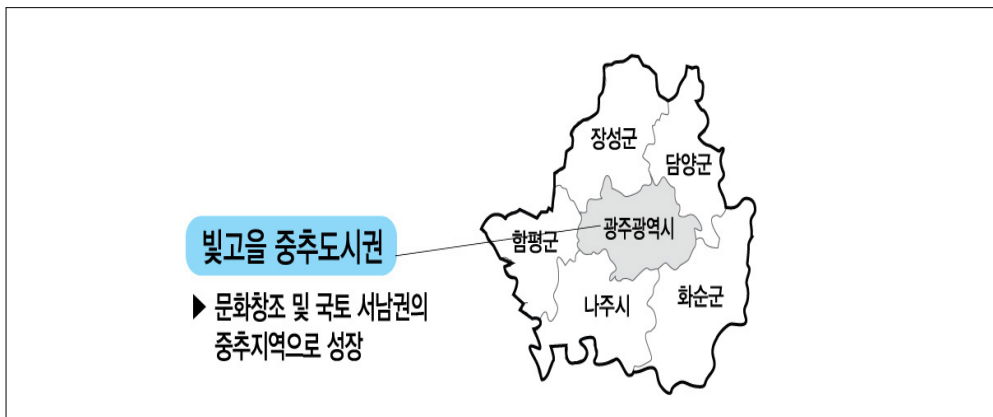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빛고을 중추도시생활권 대상(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장성군)의 ‘공동장사시설 조성사업’의 경우 기존 광주에 거주하던 시민으로만 제한하고 있던 장사시설 사용 대상을 같은 생활권인 5개 시·군의 주민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취약지 응급실 협진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촌지역 의료 질 개선, 생활권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쟁력을 강화했다. 풍류남도 나들이 사업을 통해서 누정문화와 가사문화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체감형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한 성과로 지역발전위원회 평가에서 생활권 운영체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그림 3-5-2 광주광역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은 2014년 2개 사업, 2015년 선정 1개 사업, 2016년 1개

사업 등 총 5개 사업이 추진되었다. 취약지 응급협진시스템 구축사업은 거점병원인 전남대를 중심으로 농촌지역 취약지 주민들에게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한뿌리 생활권 지역경제순환증진 프로젝트 및 생활권 중심의 소·생 상생 로컬푸드 체계 구축사업은 광주 남구, 나주시, 화순군이 공동 추진하는 과제로서 로컬푸드 판매 체계를 구축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을 통하여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거뒀다. 또한, 분야별 협력과제로 ①남도문화융성 및 관광자원화(다정다감 남도탐방, 남도향기가 있는 광역시티 투어, 지역축제 상호 교류 협력, 명품체험마을 연계협력 관광 활성화, 빛가람 문화예술아카데미), ②인프라 구축 및 경제활성화(광주 순환고속도로 건설, 광주 하남~장성 삼계간 광역도로 개설, 지방도 825호선 시설개량사업, 광주~화순 간 광역철도 건설, KTX 장성역 정차 추진), ③자연생태공원 및 휴식공간조성(송춘보 주변 수변테마공원 조성, 구 너릿재 구간 활용 광역자전거길 구축, 황룡강 자전거도로 투어 프로그램 개발, 영산강 자전거길 정비)을 추진하고 있다.

빛고을 남도투어는 총 3코스로 운영했다. ‘선비문화코스’는 담양과 장성의 고즈넉한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죽녹원, 백양사, 환벽당, 소쇄원 등이 주요 관광 코스였다. ‘역사문화코스’는 나주와 함평을 경유하고 국립나주박물관, 황포돛배, 함평 생태공원 등의 관광지였다. 화순은 ‘자연문화코스’로 증심사와 운주사, 화순적벽 등으로 이뤄졌다. 창조적 도시재생 및 생활인프라 확충을 통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도시공원(우치공원 등) 내 노후시설을 교체 또는 정비하고, 수목을 식재하여 공원을 찾는 시민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소하천 정비공사 등 13개 사업)을 통해서 열악한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복지증진에 힘쓰고 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우리시와 함평군을 경유하는 광역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선정되어 버스센터 구축(함평군) 1식, 버스도착안내단말기(BIT) 83대, 운전자단말기(OBE) 42대 등을 설치하여 인근 지자체간 운행하는 버스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했다. 영산강 주변 집단 취약지역의 농촌마을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정화처리하여 영산강 수질개선 및 농촌 생활환경 개선하였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소방시설 설치 및 보수, 아케이드 설치 등으로 화재와 재난에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으로 고객만족을 제고했다. 사회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복지 향상을 통하여 무주택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영구임대 주

택을 마련하고 있다.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을 위하여 형성단계에 (씨앗기-확장기-안정기)따른 맞춤형 추진, 총 221개 마을이 선정(1,027백만 원)되어 마을 현안에 대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구성원간 유대감을 형성하는 동기를 부여, 아울러 마을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인적·물적 자원을 조사하고 마을의제를 발굴하는 마을 코디네이터(11명)를 선발·배치했다. 앞으로 마을공동체 정책을 연속선상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마을지원체계를 더욱 내실화하고, 광주만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마을공동체를 발굴·육성하여 그동안의 성과와 조성된 기반을 토대로 향후 광주의 마을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의 장을 확대하였다.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근로자 고용안정,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수립하고 이를 지역 주력산업인 친환경자동차 산업에 반영하였다.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 통과(3,030억 원)되어 국가사업으로 확정되었다. 향후, 해외 전기자동차 회사 투자유치, 친환경부품 개발 및 부품기업역량강화사업, 현대차와 수소 융합스테이션 플랫폼 실증사업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조이롱 자동차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CJ 대한통운과 전기화물차 보급 3자 협약을 체결했다. 자동차 전용산단 조성은 광주지역의 뛰어난 노동생산성과 지역 기반의 노사간 상생의 일자리 모델을 제시하여 완성차 및 부품기업을 유치하고, 공장 부지, 인프라 시설, 공공시설의 주거, 문화, 에너지 등의 첨단복합산단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한 배후산단인 도시첨단 국가산단 착공하고 LS산전, 효성 등 에너지 관련기업 43개사 투자 유치(2,601억 원) 성과를 거뒀다.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리모델링 구축 완료 및 개소식을 개최하였고, 전국 사회적 경제 박람회(참여 12,405명) 개최를 통하여 협동조합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지역전략산업의 인력양성 및 공급으로 지역 산업의 기술역량강화와 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용창출에 기여했다.

마이크로 의료로봇산업 글로벌 거점센터 구축에 필요한 장비구축(25종, 38억 원), 기업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기술자문 60여건을 수행했다.

광주 지식산업센터는 도시형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복합산업

입지시설로 2015년 5월 기공식을 개최하였다. 2016년 6월까지 공사를 끝마치고 7월 개관, 도시형 산업과 청년 기술창업 육성 거점으로서 지역산업 혁신을 선도했다.

지역특성에 적합한 3D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제품설계·시험생산·성능평가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하였다. 지역 SW기업의 R&D 투자·인력양성·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지역SW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 육성및 지역SW제품 및 프로세스의 경쟁력을 강화하였다. 시·도간 협력형 지원체계 구축으로 지역 대표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의 성장과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였다.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하여 다양한 농업관련 체험활동 등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주산지별로 품목 특성에 맞는 규모화 및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하여 농산물 생산·유통계열화 거점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생산자에게는 소득창출의 기회를 주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간 상생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및 맞벌이 가정 등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마련을 위해서 초등방과후 돌봄교실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건강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277개소 지역아동센터를 지원·운영하고 있다.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돌봄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내 통합적 아동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 학교 부적응 해소, 일상생활 지도,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을 높여주었다.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을 통해서 지역대학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전남대의 경우 현장실습 이수학생 비율(15%), 특성화분야 인력양성(1,100명), 기술개발실적(155건), 기술사업화(15건)이었다. 호남대의 경우 현장실습 이수학생 비율(19%), 특성화분야 인력양성(2,900명), 기술개발실적(10건), 기술사업화(5건)이었다. 광주대의 경우 영어 스피킹 및 리더 교육(교육이수 30명), 기업가 마인드 함양 및 특허출원 교육(교육

이수 102명) 이었다. 조선대의 경우 현장실습 이수학생 비율(9%), 특성화분야 인력양성(640명), 기술개발실적(50건), 기술사업화(25건)이었다.

또한 녹색생활실천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빛고을 초록사랑’(5~6학년군) 학생용 교재 27,103부, 교사용 지도서 1,820부를 시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및 10개 기관에 배부하였다. 에코교실(빛물저금통) 4개 초등학교(풍향초, 태봉초, 하남중앙초, 새별초)에 조성 및 운영하고 있다. 에코교실을 점차 확대하여 학교 내의 체험학습장 조성에 따른 환경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산학협력을 통해 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인력양성과 기술혁신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발전 견인하였다. (전남대) 성장동력 기술지원으로 신기술 역량 강화, 맞춤형 기업지원으로 기업 역량을 강화했다. (호남대) 지역산업체의 기술혁신과 애로기술 지원으로 지역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했다. (광주대) 글로벌 경쟁시대에 필요한 필수적인 영어능력 향상을 거뒀다. (조선대) 공기업, 대기업 등 취업대비를 위한 교육과정을 진행하여 실질적인 역량 강화 기회를 마련했다.

특성화 마이스터고 지원(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 지원)을 위하여 NCS기반 광주전남지역 산업특성 인력양성 유형 개발 계획 수립, NCS기반 실천창의인재 양성 마인드 함양 전교직원 직무연수, NCS기반 인적물리적인 실험실습 교육환경 개선 재구조화 및 학습 모듈개발, NCS기반 교육과정 편성 전문교과 실무과목 1,2학년 편성, 과정평가형 자격 2종목 3과정을 운영하였다.

나노인프라를 활용한 특성화고(광주전자공고, 금파공고, 동일전자정보고, 광주공고, 전남공고)인력양성을 교육을 실시하여 취업률을 제고하였다.

수도권 대학을 다니는 광주·전남출신 대학생들에게 학비부담 절감 및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남과 공동으로 제2남도학숙을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은평구와 공유부지 활용 건립방안에 대한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제2남도학숙 건립을 위한 설계업체를 선정하고 착공에 들어갔다.

4. 지역 문화 융성 · 생태 복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부개관 등 5개원 콘텐츠 운영, 개관축제 기간중 20여만명 관람하여 예술극장의 컨템포러리 작품이 호평을 받았다. 송암동 CGI센터 일원에 침

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또한, 문화콘텐츠 산업 집중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문화콘텐츠 산업의 시장 역할 수행을 위한 ‘광주 ACE Fair’전시회에 세계 37개국 430여 개 기업이 참가해 최첨단 문화콘텐츠를 선보이고 중국, 미국, 독일 등 해외 바이어 381명이 2,156건의 수출상담회를 통해 3억 228만 달러의 수출상담의 성과를 거뒀다.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근대 문화유산 등 관광자원 정비와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문화콘텐츠 발굴 등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역주민, 전문가의 중심으로 사업콘텐츠(역사문화길 조성, 이강하 미술관, 최홍종기념관 건립 등)를 발굴하고 있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은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계, 지역주민, 시의원 등이 포함된 TF에서 개발방안(시설계획변경, 개발방식)을 마련하였다. 향후 민관위원회를 통해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모지침을 마련하여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했고, 청년창업 및 다문화를 통한 외국계 음식점 유치에 추진할 계획이다. 비엔날레상징 국제타운 조성은 비엔날레의 세계화를 위한 종합예술공원 조성사업이 KDI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근·현대 광주시민의 대표적 전망공간인 팔각정이 노후화되어 전망대로서의 의미가 퇴색되어 팔각정의 장소성 및 상징성을 고려하여 사직공원내 전망타워를 건립했다.

아시아문화예술 활성화 거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대인예술시장이 2015 지역문화브랜드 최우수상 수상 선정(인센티브 30백만 원)되어 전국적인 문화브랜드로 성장했다. 예술인, 상인, 시민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문화공간이 되어 세대 간 소통공간 및 문화예술공간으로 발돋움 했다. 앞으로 예술의거리·대인예술야시장의 지속적 운영으로 문화브랜드 확산 및 지역의 외래관광객 유치를 견인하는 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행사일정을 토요일로 일원화하여 문화전당과 연계하여 방문객 증대 시너지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각종 개발로 훼손된 맹꽁이 서식처 복원을 통해 생물다양성 증진 및 도시생태 건전성 확보를 위한 풍암제 양서류 서식처 조성사업을 완료했다. 특히, 유휴 방치된 공간을 생태적으로 복원하여 집 앞마당처럼 누릴 수 있는 생태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월산근린공원 자연마당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광주천에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영산강 하천수를 광주천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2012년에 착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방천 수질개선을 위한 하천유지용수 공급사업은 2014년에 착수하여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다. 도시 경관숲 조성 및 정비 차원에서 가로수(290주), 가로화단정비 (7.1km), 경관숲을 조성하여 가로환경개선에 기여했다. 숲을 복지자원으로 활용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요자 중심의 숲 조성을 위하여 유아숲 체험원을 3개소를 조성하였다.

5. 사각없는 지역 복지 · 의료

가정방문 상담 등 기본서비스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취약계층 아동 적극발굴과 드림스타트 서비스 질 개선 지적으로 추진하였다.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질 제고 및 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돌봄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켰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등 서비스제공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했다. 앞으로 활동지원제도의 발전을 위한 신규서비스 시범사업으로 주간활동급여(광산구)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설입소 장애인에게 임대주택 지원을 통해 자립 생활을 지원했다. 향후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 발굴을 통해 탈시설 중증장애인에게 체계적인 자립 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응급상황 시 현장응급처치(심폐소생술 등)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심폐소생술 등 교육을 141회 14,629명을 실시하였고 응급의료기관 21개소에 대하여 년 2회 평가를 실시, 16억원의 재정지원으로 응급의료선진화를 유도하였다. 재난재해 발생 대비 훈련을 총 6회 실시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시민이 믿을 수 있는 응급의료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다. 앞으로 3대 중증(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 응급환자 관리를 위해 인색개선 및 응급의료자원 홍보를 실시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추가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재난거점병원에 인력을 2인 충원하여 재난 발생을 대비한 응급의료체계를 견고히 할 계획이다.

구강보건센터와 학교 구강보건실 17개소를 설치하고 장애인구강 진료센터(1개소)와 무료 구강진료버스(2대)를 운영하여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보

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방중심의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였다. 향후 구강보건실의 지속 운영을 통해 예방서비스 위주의 구강건강관리서비스를 실시하고 저소득소외계층에 대한 무료 구강진료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으로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구강진료를 실시할 계획이다.

294개 지역아동센터에서 8,151명의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앞으로 301개 지역아동센터에서 8,295명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 일상생활 지도 등을 통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방과후 돌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0세(임산부)~만12세를(초등학생이하)대상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1,153세대 1,774명에게 건강·복지·보육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추후, 가정방문을 통해 인적조사, 욕구조사 등을 통해 사례관리 대상 아동과 그 가족에게 맞춤형 서비스 지원 등 1,146세대 1,821명에게 통합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시아 저개발국가 지역주민의 의료 혜택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캄보디아 광주진료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네팔 대지진여파로 악화된 현지주민들의 보건 환경 개선을 위해, 아시아 광주 제2진료소를 네팔에 건립하였다.

제4절 향후 추진계획 및 과제

친환경자동차 전용산단 및 도시첨단 국가산단을 본격 개발하고 있다. 친환경자동차(수소융합스테이션)육성을 위하여 지역내 500여개 부품업체 및 연관기업, 전자부품연구원 등 친환경차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구축, 자동차 전용산단을 조성하여 완성차-부품기업 협업 시너지효과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수소·전기차 상용화를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선도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에너지신산업(전력변환 및 저장)은 한전·에너지 연구기관과 기존 연관산업 인프라, 에너지밸리 등과 연계하여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먹거리산업 다변화를 위하여 생체재료화 지원센터 구축, 생체의료용 소재부품산업 연구개발 및 기원지원을 통해서 미래 유망사업인 의료기기 분야 시장 선점을 추진하고 있다. 마이크로 의료로봇센터와 헬스케어로봇 실증단지를 구축하여 고부가 가치 로봇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문화콘텐츠 메카도시 기반 구축을 위하여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 비엔날레상징 국제타운 조성 등 매력적이고 머물고 싶은 도시를 구축하고 있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 16개 공공기관의 협력을 통해 지역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교통 인프라의 획기적인 변모를 가져올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창의적 교육환경 조성 및 지역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제2의 남도학숙 건립추진 및 학교기업 육성을 통한 고교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광주호 호수생태원 주변을 남도 풍류 체험의 생태휴양지 '남도피아'로 개발하고 평모들 7만여평에 자운영과 유채꽃을 힐링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관내 김치산업 활성화를 위한 김치산업화 육성사업 및 김치전통발효식품단지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광주세계김치축제를 활성화 계획이다.

수혜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및 취약층 복지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복지인프라 확충 및 취약 계층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회적 약자의 따뜻한 삶 지원을 위해서 저소득층의 기초 생활보장 지원, 취약계층 보호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에너지 복지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철도 2호선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경제적인 효율성과 공사 진행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명품 지하철로 만들 계획이다. 또한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성공적 개최의 경험을 살려서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 대회를 저비용, 고효율의 지구촌 명품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제6장 대전광역시

제1절 대전광역시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대전광역시의 인구는 2013년 이후 소폭 감소세를 보이며 2016년 기준 151만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국 연평균 성장률을 하회한 연평균 3.9%로 증가하여 2015년 기준 34조원을 기록하였다. 1인당 GRDP은 2,212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성장률도 4.1%로 전국 성장률과 동일하였다. 수출액은 2014년 47억 달러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에는 5억 달러 감소한 4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재정자립도는 55.0%로 2013년의 57.5%에 비해 2.5%p 낮아졌으며, 전국 재정자립도인 52.5%보다 다소 높았다.

표 3-6-1 대전광역시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대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증가율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증가율
지역내총생산 (십억원)	1,430,255	1,485,505	1,563,668	-	4.6	31,456	32,799	33,973	-	3.9
인구(천명)	51,141	51,328	51,529	51,696	0.4	1,533	1,532	1,519	1,514	-0.4
1인당 GRDP(만원)	2,848	2,946	3,089	-	4.1	2,042	2,122	2,212	-	4.1
수출액 (백만달러)	559,632	572,665	526,757	495,466	-4.0	4,030	4,732	4,307	4,164	1.1
취업자(천명)	25,066	25,599	25,936	26,235	1.5	736	765	777	775	1.7
재정자립도 (%)	51.1	50.3	50.6	52.5	0.9	57.5	54.9	54.9	55.0	-1.5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이며, 2015년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 산업 현황

대전광역시의 산업구조는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82.3%, 제조업 17.6%, 광업·농림어업 0.1%로 서비스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비중은 5개 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2014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기타 기계 및 장비'는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이 각각 17.2%, 15.4%, 14.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외에는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의 비중도 높았으며,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은 생산액 비중이 11.2%로 높았다.

2013년과 비교해서,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식료품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 장비'가 증가한 반면,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기타 기계 및 장비'가 감소하였다. 종사자수 기준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금속가공제품', '전기장비'가 증가하였으며, 생산액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금속가공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가 증가한 반면,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전기장비'의 생산액 비중은 감소하였다.

표 3-6-2 대전광역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3년			2014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6.8	5.5	5.4	7.2	5.5	5.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5.7	8.8	11.7	5.5	9.1	13.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4.2	9.5	13.3	4.3	9.1	11.2
금속가공제품(기계·기구 제외)	6.8	5.3	4.4	6.8	5.8	4.9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10.8	13.8	10.6	11.2	13.2	10.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2.9	2.8	0.4	2.5	2.7	0.3
전기장비	6.1	3.8	4.1	6.3	4.9	3.8
기타 기계 및 장비	18.7	15.1	13.3	17.2	15.4	14.4
자동차 및 트레일러	4.2	6.4	5.0	4.4	6.3	6.6

주 : 2015년, 2016년 자료는 없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2014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 ‘기타 개인 서비스업’과 ‘교육 서비스업’이 각각 32.4%, 16.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종사자수 및 매출액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29.9%, 31.0%로 가장 높았다.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경우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에 비해 매출액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과 비교할 때, 사업체수 기준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이 다소 증가한 반면, ‘교육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감소하였다. 종사자수 기준은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증가한 반면, ‘교육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의 비중은 감소하였다. 매출액 기준은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 하였으며, ‘사업지원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은 감소하였다.

표 3-6-3 대전광역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3년			2014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0.4	1.0	2.6	0.5	1.0	2.5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9	6.0	11.7	3.3	6.3	12.5
부동산업 및 임대업	13.4	9.6	11.5	13.8	9.3	13.8
사업지원 서비스업	5.5	23.0	16.1	5.7	24.4	15.0
교육 서비스업	17.1	10.6	7.5	16.7	9.9	7.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5.8	29.6	31.5	16.0	29.9	31.0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12.0	6.0	8.8	11.7	5.8	8.0
기타 개인 서비스업	33.0	14.2	10.3	32.4	13.5	10.0

주 : 2015년, 2016년 자료는 없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3. 혁신활동 현황

대전광역시의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 연구개발비 6.7조원, 연구개발인력 48,946명, 연구개발조직수 1,277개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인력은 서울,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와 연구

개발인력, 연구개발조직수 모두 2013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3년에 비해 연구개발비, 인력이 증가한 반면 조직수는 감소하여 각각 10.09%, 7.90%, 3.42%를 차지하였다. 연구개발비의 경우 0.07%p, 연구개발인력은 0.51%p 소폭 증가한 반면, 연구개발조직수는 0.5%p 감소하였다. 대전의 연구개발조직수 비중 감소는 최근 대전 이외 다른 지역에 연구개발조직들이 많이 생겨난 것을 의미한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5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11,283건이며, 등록은 5,238건으로 2013년에 비해 특허 출원은 증가한 반면, 등록건수의 감소하였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3년에 비해 특허 출원건수 0.25%p, 등록건수 1.3%p 감소하여 각각 6.75%, 6.86%로 나타났다.

표 3-6-4 대전광역시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연평균증가율
연구개발	연구개발비	5,940,087 (10.02)	6,333,015 (9.94)	6,655,076 (10.09)	5.8
	연구개발인력	42,076 (7.39)	45,755 (7.56)	48,946 (7.90)	7.9
	연구개발조직수	1,081 (3.92)	1,166 (3.64)	1,277 (3.42)	8.7
특허	출원	11,197 (7.00)	11,118 (6.78)	11,283 (6.75)	0.4
	등록	7,809 (8.16)	7,550 (7.76)	5,238 (6.86)	-18.1

주 : ()는 전국대비 비율임. 2016년 자료는 없음.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대전광역시는 대덕연구단지조성 40년 동안의 풍부한 R&D자원 및 역량 축적과 대덕특구 지정으로 인한 기술사업화 경험과 인프라가 누적되어 있으며, 국토 중앙에 위치한 전통적 국내교통의 중심지라는 발전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전통 제조업의

경직성이 없어 새로운 산업과 이를 육성할 시스템 구축이 용이하다.

하지만 풍부한 연구개발자원에 비해 지역수요에 기반한 기술사업화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지 않고,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며 고용성장 잠재성이 약하고, 영세업체 중심의 낙후된 서비스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약점이다. 한편 인구 50만의 세종시 조성 과 함께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으로 인하여 형성된 대전중추도시생활권 정책은 인접한 중소도시와의 연계 확대로 대전을 중심으로 한 도시권역이 확대될 수 있는 기회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참여 지자체의 제한은 진정한 대전 중심의 생활권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인근의 충북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충남 공주시 등이 추가로 포함되는 G9 협의체의 재출범은 현 생활권 정책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대전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잠재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대전의 강점과 기회를 연계하여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풍부한 연구개발 자원과 역량을 활용한 신성장 모델의 창출지로서의 입지를 공고화하여 미래의 먹거리 사업을 발굴하고, 친환경 도시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국내 최고 수준의 친환경 첨단 도시를 구현하는 것 역시 앞으로의 과제이다. 또한 지역기반의 기술사업화 시스템 정착이 미흡한 약점을 풍부한 R&D 역량을 기반으로 기술사업화와 인큐베이팅 등 기술집약형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등 대전의 약점을 기회 요인과 연계하여 발전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도심 낙후 문제 해결을 위해 문화도시 재생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재창조 사업을 발굴·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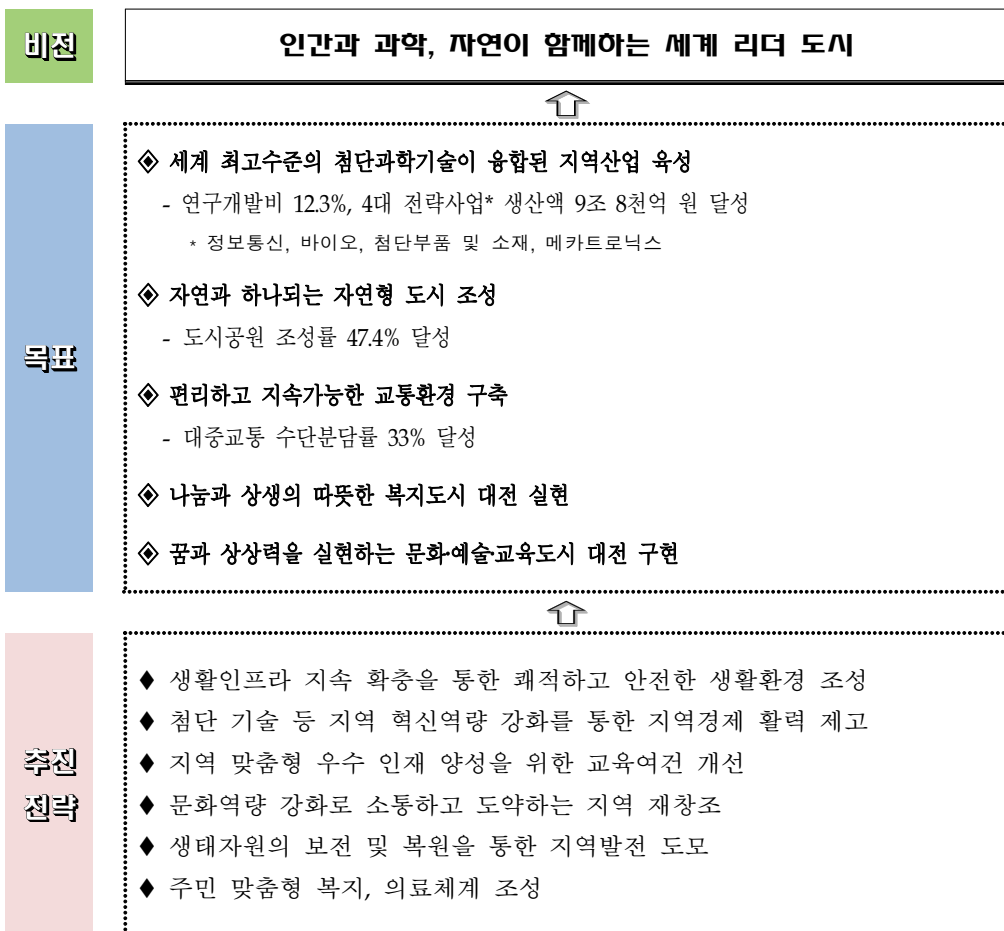
대전의 강점과 위협요인을 연계하여 발전과제는 경제·소득의 양극화 및 실업문제를 연구개발 자원을 활용한 과학기반 사회적 기업의 확대로 극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대전의 약점과 위협을 연계하여 극복할 발전과제로서는 타지역 과학기술 수요 증대에 따라 연구개발 자원 분산 위협과 지역 시민차원의 과학기술 수요에의 대응 체계 미흡 문제를 지역기반형 과학기술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해 극복하는 것과 함께 노령화 증대와 청년 실업문제 등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기업군 창출과 생산적 복지체계 구축을 통해 선순환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대응하여 향후, 5년간(2014년~2018년) 지역발전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고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지역발전 비전을 「인간과 과학, 자연이 함께하는 세계 리더 도시」로 설정하였다.

그림 3-6-1 대전광역시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또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반의 지속성장도시」, 「자연순환적 녹색도시」, 「인간중심의 상생·창의도시」를 추구하면서 5개의 목표를 세웠다. 첫째, 세계 최고수준의 첨단과학기술이 융합된 지역산업 육성, 둘째, 자연과 하나되는 자연형 도시 조성, 셋째, 편리하고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구축, 넷째, 나눔과 상생의 따뜻한 복지도시 대전 실현, 다섯째, 꿈과 상상력을 실현하는 문화·예술·교육도시 대전을 구현하는 것이다.

2. 추진전략

발전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5대 부문별로 각각의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먼저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수송분담률을 2018년까지 33%까지 높이고 범죄취약지역 CCTV를 600여대 추가 설치하는 등 생활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경제활동인구를 2018년까지 957천명 늘리고 4대 전략산업(정보통신, 바이오, 첨단부품 및 소재, 메카트로닉스) 생산액을 9.8조원으로 늘리는 등 지역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다.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창의혁신 인재를 2018년까지 1,000명 양성하는 등 지역 맞춤형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에 힘쓸 것이다.

지역문화 육성 및 생태 복원을 위해서는 2018년까지 54.0km의 3대 하천 생태복원을 하는 등 생태자원의 보전 및 복원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한편으로 문화역량 강화로 소통하고 도약하는 지역 재창조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부문에서는 사회 복지시설을 80개소로 늘리는 등 주민 맞춤형 복지, 의료 체계 구현을 위해 주력할 것이다.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대전광역시시는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에 맞춰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과 함께 대전중추도시생활권을 구성하였다.

대전을 중심으로 하는 중추도시생활권은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융합형 클러스터 구축(계룡, 논산 등과 연계한 첨단국방산업 클러스터 구축), 도농통합형 공생커뮤니티 구축(기호유교문화권, 대청호 등 지역의 역사, 생태자원 등을 활용한 통합 문화·관광지대 구축)을 목표로 설정되어 생활권의 중심이 되는 대전 중심지의 활력증진과 함께 주민 체감 생활 인프라 확충, 지역주도 협력발전체계 구축, 지역 교통물류망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림 3-6-2 대전광역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그 중에서도 특히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의 생활권 선도사업(공모사업)으로 2014년에 “대청호권 생태창조마을 네트워크 구축사업”, 2015년에는 “제대군인의 사회진입 및 정착을 위한 생애전환 프로젝트”, 2016년에는 “소규모 식품파일럿플랜트구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 선정되어 생활권 참여 지자체와 연계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에 선정된 “대청호권 생태창조마을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2016년까지 총사업비 26.4억 원(국비 23.8억 원, 지방비 1.6억 원)이 투입되었는데, 대청호 인근 마을의 노후시설 정비 등 마을환경 개선, 생태체험프로그램 개발, 복합체험시설 개선, 마을 생산품 브랜드 마케팅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대청호 마을 내 관광자원 활성화 등 지역의 소득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으며, 마을별 주민편의시설 및 복합시설을 증축하여 주민편익 개선에 노력하였다.

또한 2015년에 선정된 “제대군인의 사회진입 및 정착을 위한 생애전환 프로젝트”는 2017년까지 총사업비 22.5억 원(국비 18억 원, 지방비 4.5억 원)을 투입하여 제대한 중장기 복무 직업군인을 대상으로 수요 맞춤형 생애전환 프로그램 운영, 지피지기 프로젝트, 행복 Biz-센터 구축·운영, 귀농·귀촌 새희망 프로젝트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5~2016년 동안 생애전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151명이 교육을 받고 그 중 48명이 취업하였다. 또한 행복 Biz-센터 구축·운영 사업을 통해서 대전테크노파크 내 비즈센터 구축 공간(231㎡)을 개소하여, 군과 국방기업 간의 정보공유 커뮤니티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뒷받침 하였다. 한편, 귀농·귀촌 새희망 프로젝트 사업을 위해서 귀농인의 집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역 내 수요조사 및 귀농 정착기술교육, 현장실습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대군인의 귀농·귀촌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

2016년에 선정된 “소규모 식품파일럿플랜트구축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은 2018년까지 총사업비 34억 원(국비 27억 원, 지방비 7억 원)을 투입하여 소규모 식품파일럿플랜트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식품시범생산을 지원하며, 청년 식품분야 창업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 추진에 앞서 2016년에는 식품파일럿플랜트 구축을 위해 유성구 덕명동 155에 건립 대상지 토지를 매입하였다. 2017년에 식품파일럿플랜트 조성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한편, 대덕구 장동 육골지구는 2015년에 도시지역 취약지역 개조 프로젝트(새뜰마을사업)에 선정되어 2018년까지 총 사업비 40억 원(국비 28억 원, 지방비 12억 원)을 투입, 지역의 안전 확보, 인프라 구축, 일자리 및 문화, 지역주민 역량강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5년도에는 사업의 추진방향 및 실시설계를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을 발주하여 2016년 11월에 완료하였다. 이후 대덕구는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골목길 핸드레일 설치사업, 공동홈 조성사업, LPG 배관망 구축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대전광역시시는 '편리하고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였다. 특히 교통수단 간 효율적인 연계를 통해 대중교통이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버스전용차구간을 확대(2014년 40개소→2016년 101개소/누적)하였으며, 유개승강장을 확대 2016년까지 75개소(누적)를 신규 설치하였다. 나아가 2016년에는 교통안전기본계획(2017년~2021년) 및 보행교통개선계획(2017년~2021년)을 수립하여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안전을 우선하는 사람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안전 안심의 도시 대전'을 표방하는 대전광역시시는 '안전·안심 생활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노력하였다. 그 중에서도 사회 취약계층(약자)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는데, 특히, 주택의 30년 이상 된 노후 슬레이트를 처리하였으며(2014년 196동→2016년 594동/누적), 노후 하수관거 정비 보강으로 하천 수질개선을 이루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서민층 가구에 가스시설 금속배관 시설개선을 하였으며(2014년 1,399→2016년 3,921/누적),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를 도입(2014년 175대→2016년 244대/누적)하였다.

또한, 구도심의 활력 증진을 위해 전통시장 경영개선과 시설현대화를 통한 문화와 관광이 있는 생활밀착형 시장을 조성하였으며, 낙후된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였다.

한편,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범죄 위험요소의 사전예방 및 근원적 제거 등 안전도시 기반강화를 위해 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2014년 210대→2016년 729대/누적)하여 안심귀가 등 시민보호활동을 전개하여 살맛나는 대전을 건설하였다.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대전광역시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였다. 특히 2015년부터 5대 주력산업(무선통신융합, 메디바이오, 로봇자동화, 지식재산서비스, 금속가공) 등 지역 대표산업 육성으로 고용창출 및 일자리 안정화에 기여하였는데, 2016년 기준(누적)으로 5대 주력산업 관련 신규고용창출이 698명, 생산증가액이 838억 원, 신규기업 창출 70개사를 달성하였다. 또한 지역 기업의 글로벌 자력생

존 역량강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중장기적으로 지속성장 가능한 지원프로그램을 구축하였으며, 과학, 문화, 쇼핑, 업무 등 공공과 민간이 어우러지는 사이언스 콤플렉스 공공성 강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주요 분야별로 보면,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역특성화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창업, 사업화, 시장개척까지 3단계 지원을 통해 기술기반이 튼튼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 대표기업을 육성하는 기업성장 주기별 3-up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 신규 고용을 확대(2014년 129명→2016년 323명/누적)하여 기업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였다. 또한 기술사업화 종합지원사업을 2016년 처음으로 추진하여 30개 기업을 지원, 고용창출 144명, 매출 157억 원을 달성하는 등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기술개발에서 마케팅까지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시장진입 및 상품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하였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발굴(2014년 55개→2016년 208개/누적)하고, 취약계층 등 일자리 창출을 확대 지원(2014년 299명→2016년 735명/누적)하였으며, 나아가 사회적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사회적기업 장터(프리마켓) 등을 확대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사회적기업의 매출 증가에 기여하였다. 한편 지역 SW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생태계 활성화 및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 SW산업 재직자 및 취업연계 인력양성 운영 교육을 통한 취업을 확대하여(2014년 46명→2016년 82명/누적) 지역SW산업 발전을 도모하였다.

산업단지 고도화로 창의경제를 구현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안산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2021년 조성완료로 목표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2015년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하고 민간 사업자 시행 여건을 마련하였다. 지역의 노후된 산업단지 2,318천㎡를 재생하여 산업단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은 기존의 재생계획을 변경, 실행 가능한 시행계획으로 확정된 후, 행정절차이행을 완료(재생지구계획 변경 및 시행계획 승인고시)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을 정부로부터 승인받았다. 2017년부터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하고 LH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복합용지 개발 투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지역성장 거점도시 조성을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으로 사이언스 콤플렉스 공공성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학, 문화, 쇼핑, 업무 등 공공과 민간이

어우러지는 융·복합시설 건립을 위해 2015년에 (주)신세계 컨소시엄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기본설계를 착수하여 2016년에 완료하였다. 2017년도에는 완벽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이언스센터 건립공사가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엑스포 과학공원을 과학, 비즈니스, 여가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복합공간으로 재구성하여 「시민의 품」으로 전환하기 위해 엑스포 재창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HD 드라마타운 건축공사를 2015년에 착공하고 기초과학연구원을 2016년에 착공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산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사업으로 로컬푸드 복합공간 조성을 추진하여 유성구에 로컬푸드 가공 지원센터(331㎡)를 2015년에 구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6년에는 로컬푸드 활성화 전국 우수사례에 선정되었고,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로컬푸드 기반을 구축하여 18종의 시제품 개발, 9명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산림경영자원육성 사업 일환으로 목재문화에 대한 다양한 체험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하여 건전한 여가문화를 창출하고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을 추진(2017년 조성)하고 있으며,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농작업환경 개선편이장비 시범사업(2014년 3개소, 2015년 2개소)을 진행하여 2년간 77개 농가가 농업노동의 부담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과 농업생산성이 증대하는 수혜를 받았으며,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을 통하여 종합검정실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신규장비(2016년 5종 18대)를 확충하는 등 토양분석과 병해충진단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자동화 및 현대화에 이바지하였다.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꿈과 상상력을 실현하는 교육도시 대전 구현’을 위해 대전광역시에서는 지역 맞춤형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을 추진 전략으로 삼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초중고교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초등 방과 후 돌봄 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돌봄 참여대상을 초등학교 1~2학년 희망자로 확대 운영하였으며, 적기에 시설을 추가 구축하고 운영 내실화를 도모한 바 있다. 또한 특성화고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강화 및 해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을 추진하였는

데, 예산확보의 어려움 속에서도 현장학습에 참여한 학생이 모두 취업(2014년 4분야 37명→2016년 14분야 123명/누적)하는 등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및 취업역량 강화, 특성화 경쟁력 강화 및 홍보 효과 제고, 해외 일자리 창출을 통한 특성화고 취업률 제고에 이바지하였다.

일과 학습의 병행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글로벌 성장사다리 구축·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는 이 사업을 통해 대전형 창의혁신 인재를 양성하였으며(2014년 259명→2016년 774명/누적), 히든챔피언 발굴지원으로 기업성장 지원(2014년 15개사→2016년 50개사/누적) 및 총 5개국으로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였다.

또한 대전시는 100세 시대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 평생학습도시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자치구의 특색 있는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균형 있고 다양한 평생교육 실현을 목적으로 자치구 사업을 지원(2014년 7개 사업→2016년 24개 사업/누적)하여 소외계층, 경력단절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삶의 질 향상 및 취·창업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대전은 문화역량 강화로 소통하고 도약하는 지역 재창조를 추진전략으로 하여 다양한 일들을 진행했다.

먼저, 지역 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 발전 지원을 위해 국제회의 유치촉진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국제행사 개최 2014년 72건→2016년 220건/누적) 도시 이미지 제고와 국제위상 강화를 도모하였으며, 창작문화 예술인 레지던스 조성 사업을 통해 테미예술창작센터 및 파리 이용노 레지던스 운영, 아티언스 랩 운영, 민간레지던스 프로그램운영 지원 등을 추진,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기회를 확대 제공하였다.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서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사업으로 공원 내 작은도서관 조성을 지원하여 지역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문화공간 마련에 힘쓰고 있는데, 2017년까지 사업을 종료하여 연인원 150,000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존 문화시설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와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생활문화센터를 2016년에 개관하였으며, 체육진흥시설지원 사업을 통해 복용실내승마장 건립, 월드컵경기장 노후시설 개보수,

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주민친화형 체육시설을 확충하였다. 또한 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사업을 통해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고(2014년 121명→2016년 365명/누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2014년 511개소→2016년 1,511개소/누적) 시민 1,056,000명(연평균 인원)이 이용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생활체육광장조성 사업을 통해서도 생활체육광장지도자를 연평균 22명 배치하고 22개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83,000명(연평균 인원)이 이용하였고, 생활체육활성화 사업으로 시민건강증진 골든플랜을 시행하여 학교체육시설을 확충하고(2014년 8개소→2016년 28개소/누적)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2014년 511개소→2016년 1,603개소/누적)하였으며, 생활체육 동호인이 연평균 525,000명이 참여하는 등 생활체육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다.

지역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보문산 행평근린공원 관광벨트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대전오월드(동물원+플라워랜드)를 사계절 체험·관광의 꽃단지 테마파크로 확대 조성하였으며, 대전 대표축제육성을 위해 효문화 뿌리축제와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을 지원하여 효문화뿌리축제(2014년 16만명→2016년 33만명),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2014년 7만명→2016년 17만명) 관람객을 유치하는 등 대표 축제의 관광상품화에 성공하였다.

생태·자연환경 보존·활용을 위해 국가하천을 정비하여 자전거도로 야간조명 4.9km를 정비하여 이용자 편의 제공에 노력하였으며, 대전천, 정생천, 탄동천, 유성천, 관평천 등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통해 재해(수해)를 사전 예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구축,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대전녹색환경지원센터를 지원하여 연구사업(2014년 5개 과제→2016년 27개 과제/누적)과 기업체 환경기술지원을 실시(2014년 지원 10개 업체 13회→2016년 지원 92개 업체 102회/누적)하는 등 지역 환경기술개발의 구심점을 형성하게 하였다.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대전광역시시는 '나눔과 상생의 따뜻한 복지도시 대전 실현'을 위해 주민 맞춤형 복지, 의료체계 조성을 추진전략으로 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역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연평균 2,600명(약 1,400백만 원)에게 건강관리사를 파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켰으며,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재가간병·가사지원 등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을 추진해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 466명(누적)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327명(누적)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사회변화에 따라 취약 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돌봄·재활·상담 등의 예방적 복지 실현하고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추진하여 아동·청소년 10개 사업, 노인 7개 사업, 장애인 3개 사업, 취약계층 5개 사업 등 25개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다.

수혜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을 위해서 장애인 활동지원 일자리창출 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2014년 2,369명→2016년 6,780명/누적)하였으며, 취업 취약계층인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2014년 10,905명→2016년 19,878명)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였으며 드림스타트지원사업을 통해서도 취약계층 아동(2014년 2,002명→2016년 5,812명/누적)에게 건강·복지·보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였다. 또한 방과후돌봄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2014년 68개소→2016년 361개소/누적)이외에도 아동복지교사를 배치(2014년 140명→2016년 418명/누적)하여 돌봄서비스의 질을 강화하였다. 어린이집 확충 사업으로 공공형(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 확대 확충하여(2014년 9개소→2016년 62개소/누적)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였다.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대전시는 대전시립의료원 건립을 추진 중이다. 2015년도에는 메르스 사태 등을 통해 정부가 대전의료원 건립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사업승인이 보류되었지만 지속적인 제도적 기반과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마련하여 2016년도에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하고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신청을 완료하였다. 2017년 상반기에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에 선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2018년에 조사가 통과되도록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다. 향후, 대전의료원이 설립되면 공공의료 체계 구축을 통한 시민의 건강권 확보와 의료안전망 구축 및 지역 간의 의료 불균형 해소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

제4절 향후 추진계획 및 과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변화에 맞춰 대전광역시 지역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체험 가능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꾀하였다. 이에 대전광역시는 2016년까지 추진된 사업들을 정리하고 평가하여 그 실적을 바탕으로 미흡한 사업들은 적극 개선하여 대전광역시 발전계획(2014년~2018년)에 맞춰 2017년에도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할 것이다. 특히, 민선 6기의 정책이 성숙기(행복나눔)에 접어드는 시기에 맞춰 지역발전의 초석을 다질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여 기존 사업들과 전략적으로 연계, 성과를 극대화 할 것이다.

‘지역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역사와 문화가 생동하는 원도심 문화재생 및 침체지역 환경개선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이다. 이를 위해 근대문화유산의 가치 재조명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원도심의 새로운 브랜드로 창출 할 것이며, 또한 지역의 역사, 문화 콘텐츠 재생을 통한 원도심의 발전 동력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시민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시민 친화적인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며, 범죄예방을 위한 시민보호활동을 지원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한편 인근 지자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현재의 생활권을 더욱 확대하여 대전 중심의 G9 공동협력체를 만들어 다양한 협력 사업을 발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을 확대하고 청년의 취업, 창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또한 융·복합 기술기반 신성장 산업을 통한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전형 고부가가치 대표산업을 육성할 것이며, 나아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기반을 구축하여 강소·벤처기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생활물가 안정과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활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다. 한편 기술혁신을 토대로 새로운 미래먹거리 사업 발굴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전 세계 이슈로 부상한 4차 산업혁명의 특별시가 되기 위한 과학도시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 대전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먼저, 초·중·고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재능, 희망, 성취, 장학생 등 장학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또한 시민대학의 공성 강화 및 배달강좌 등을 통하여 평생학습 공동체를 조성할 예정인데, 이를 위해

서는 대전 시민대학 및 자치구 평생교육 기간과 협력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하여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협력을 강화 할 예정인데, 이를 위해 지역산업과 전략산업 및 지식재산 서비스 등 지역 기업의 여건에 맞는 지역혁신프로젝트 및 전문교육훈련 과정을 발굴하여 체계화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지역문화 융성, 생태 복원’을 위해 2017년에는 우선 관광인프라 개선으로 관광활성화 기반 마련에 집중할 예정인데,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지역특화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홍보 마케팅 강화로 대전 관광 이미지 제고가 필요하다. 또한 시민 생활환경의 생태적 건전성 증진을 위해 다양한 공원녹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푸르고 아름다운 숲 도시 조성을 통한 녹색 복지도시 구현할 것이다. 한편, 생활체육을 통한 시민의 건강과 행복의 확산을 위해 매진할 예정인데, 이를 위해 생활 밀착형 다양한 체육시설 인프라를 정비하고 생활체육광장조성사업, 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끝으로 ‘사각 없는 지역복지·의료’를 위해 우선적으로는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의 기능 강화를 통한 양성이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꾀할 것이며,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초록펜 학습동아리 운영 등 아동 대상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일자리 지원을 위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확대 운영하고, 유관기관, 기업체, 장애인단체와 연계하여 일자리 박람회 개최하는 등 장애인 일자리 제공 및 생활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제7장 울산광역시

제1절 울산광역시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울산광역시의 인구는 2013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2016년 기준 117만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국 연평균 성장률을 크게 하회한 연평균 1.1%로 증가하여 2015년 기준 70조원을 기록하였다. 1인당 GRDP도 6,117만원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수출액은 2014년 924억 달러로 정점을 기록한 뒤 2016년에는 271억 달러 감소한 65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재정자립도는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72.2%로 2013년의 70.7%에 비해 1.5%p 높아졌으며, 전국 재정자립도인 52.5%를 크게 상회하였다.

표 3-7-1 울산광역시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울산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증가율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증가율
지역내총생산 (십억원)	1,430,255	1,485,505	1,563,668	-	4.6	68,348	67,018	69,881	-	1.1
인구(천명)	51,141	51,328	51,529	51,696	0.4	1,156	1,166	1,174	1,172	0.5
1인당 GRDP(만원)	2,848	2,946	3,089	-	4.1	6,056	5,888	6,117	-	0.5
수출액 (백만달러)	559,632	572,665	526,757	495,426	-5.9	91,513	92,400	72,907	65,259	-10.5
취업자(천명)	25,066	25,599	25,936	26,235	1.5	546	546	561	570	1.4
재정자립도 (%)	51.1	50.3	50.6	52.5	0.9	70.7	70.2	72.0	72.2	0.7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이며, 2015년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 산업 현황

울산광역시의 산업구조는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35.1%, 제조업 64.4%, 광업·농림어업 0.5%로 서비스업보다 제조업 비중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2014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자동차 및 트레일러'가 사업체수, 종사자수 각각 16.6%, 29.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생산액 기준으로는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이 34.9%로 매우 높았다. 그 외에는 '금속가공제품' 및 '기타 기계 및 장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013년과 비교할 때,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전기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 등이 증가한 반면, 다른 업종은 감소하였다. 종사자수 기준의 경우 '전기장비', '기타 운송장비' 등 일부 업종이 증가한 반면 다른 업종은 소폭 감소하였다. 생산액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반면, 대부분 업종은 소폭 감소하였거나 변화가 없었다.

표 3-7-2 울산광역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3년			2014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1.1	2.7	34.9	1.1	2.6	34.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3.0	2.1	21.2	2.7	2.2	19.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3.5	2.7	0.9	3.4	2.6	1.0
1차 금속	1.4	0.5	7.8	1.3	0.6	7.9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 제외)	13.1	5.4	1.2	12.6	5.6	1.3
전기장비	4.5	3.9	1.7	5.1	5.4	2.0
기타 기계 및 장비	11.9	6.2	2.1	12.6	5.8	2.1
자동차 및 트레일러	16.7	29.7	17.4	16.6	29.2	18.6
기타 운송장비	19.2	27.4	10.2	18.1	28.0	10.3

주 : 2015년, 2016년 자료는 없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2014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 '기타 개인 서비스업'과 '교육 서비스업'이 각각 34.0%, 19.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종사자수 및 매출액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27.4%, 27.1%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도 '사업지원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업종 비중이 높았다.

2013년과 비교할 때, 사업체수 기준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다소 증가한 반면,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감소하였다. 종사자수 기준은 '교육 서비스업'이 증가한 반면, 사업체수와 마찬가지로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감소하였다. 매출액 기준은 '교육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등이 증가한 반면 다른 업종은 감소하였다.

표 3-7-3 울산광역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3년			2014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0.9	1.8	7.4	1.0	1.8	6.4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0	2.4	6.3	1.1	2.4	5.4
부동산업 및 임대업	11.9	9.7	15.7	13.1	10.2	13.2
사업지원 서비스업	5.5	21.5	17.2	5.9	21.6	17.3
교육 서비스업	20.0	12.9	8.1	19.7	13.5	13.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2.5	27.7	28.0	12.6	27.4	27.1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13.3	7.6	5.3	12.7	7.2	5.8
기타 개인 서비스업	34.9	16.4	11.9	34.0	15.9	11.7

주 : 2015년, 2016년 자료는 없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3. 혁신활동 현황

울산광역시의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 연구개발비 97백억 원, 연구개발인력 9,796명, 연구개발조직수 460개로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인력, 연구개발조직수 모두 2013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특히 연구개발조직수는 연평균 21.6%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2년 전에 비해 149개가 증가하였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3년에 비해 연구개발비, 인력, 조직수 모두 증가하여 각각 1.47%, 1.58%, 1.23%를 차지하였다. 연구개발비의 경우 0.22%p, 연구개발인력은 0.07%p 소폭 증가한 반면, 연구개발조직수는 0.1%p 감소하였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5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2,553건, 등록은 911건으로 2013년에 비해 특허 출원 및 등록건수 모두 감소하였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3년에 비해 특허 출원건수 0.39%p, 등록건수 0.01%p가 감소하여 각각 1.53%, 1.19%로 나타났다.

표 3-7-4 울산광역시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연평균증가율
연구개발	연구개발비	740,508 (1.25)	815,288 (1.28)	972,318 (1.47)	14.6
	연구개발인력	8,620 (1.51)	9,671 (1.60)	9,796 (1.58)	6.6
	연구개발조직수	311 (1.13)	371 (1.16)	460 (1.23)	21.6
특허	출원	3,072 (1.92)	2,825 (1.72)	2,553 (1.53)	-8.8
	등록	1,149 (1.20)	1,284 (1.32)	911 (1.19)	-11.0

주 : ()는 전국대비 비율임. 2016년 자료는 없음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울산광역시시는 생산·산업도시로서 자동차·석유화학·조선 등 3대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경제기반의 도시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영남알프스’ 산악관광자원과 반구대 암각화 등 풍부한 문화역사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도시화장이 용이한 도심권 외곽의 광활한 배후 부지에 문화창조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는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주력산업의 경쟁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조선해양도장표면처리센터 건립 등 주력산업 고도화 추진과 동시에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3D프린팅 융합산업 기반 구축, 바이오 메디컬 산업 육성 등 신성장 산업으로 경제구조 다변화가 요구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육성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저탄소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환경·에너지 정책의 전환 및 산업의 융복합 ICT, IoT으로 녹색산업 비중이 증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산업 중심의 공간개발로 시민생활의 문화공간이 미흡하여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 등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내 생활권 연계 협력을 도모하며,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복지인력 보강 등 복지 및 사회서비스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으로 도시경쟁력 우위 ▪ 문화관광 분야의 성장기회 및 잠재력 보유 ▪ 동북아오일허브 구축으로 신산업 태동 ▪ 풍부한 미개발 가용지로 토지지원 확보 용이 ▪ 인접지역간 산업연계 활성화로 중심도시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력산업 분야에 대한 높은 의존도 ▪ 문화관광분야의 창조인력 및 인프라 부족 ▪ 에너지원의 변화에 취약한 지역산업 보유 ▪ 산업중심 개발로 시민생활 공간 미흡 ▪ 지역내 생활권역 간의 연계성 취약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정책의 전환 산업융복합 촉진 ▪ 문화예술 소비욕구와 여가시간 증대 ▪ 대외지향적 국가프로젝트의 적극 추진 ▪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 증대 ▪ 혁신도시 건설로 지역역량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의 성장 정체 등 국가경제 성장 둔화 ▪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미진 ▪ 난개발로 인한 자연생태계 및 경관 파괴 ▪ 복지 욕구 증대로 복지정책 급변 ▪ 은퇴자 증가로 인력 역외유출 가능성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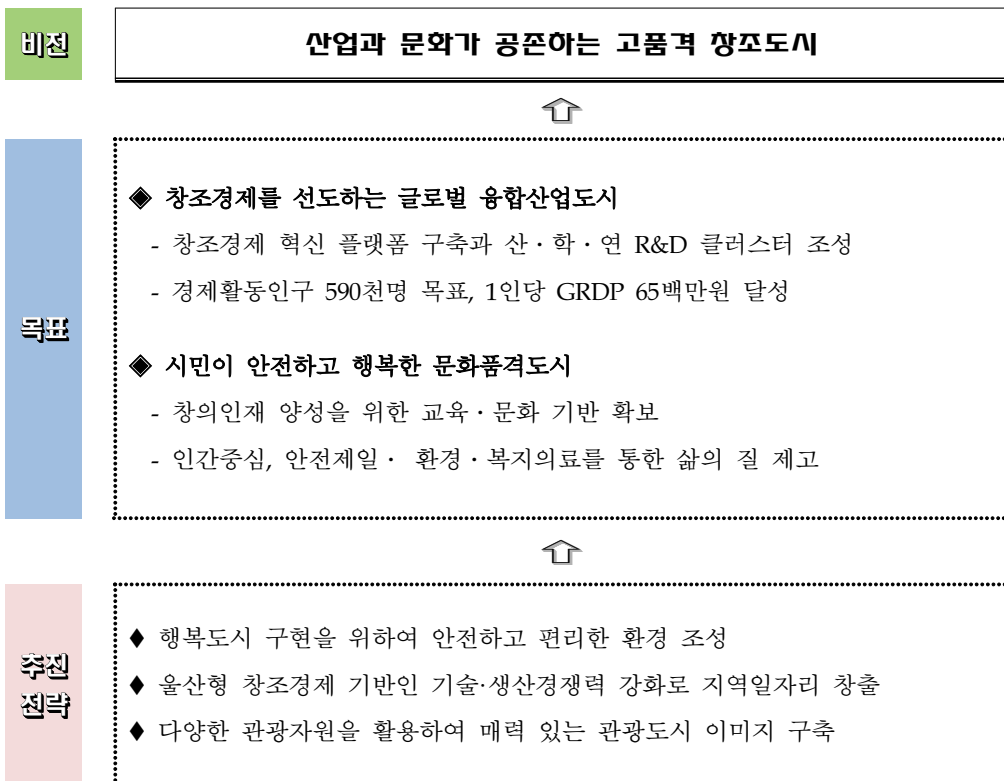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울산광역시의 발전 비전은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고 시민의 삶이 풍요로울 뿐만 아니라(豊) 조화롭고(和) 품격(格) 높은 창조도시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비전은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융합산업도시'와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문화품격도시'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첫째, 행복도시 구현을 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 둘째, 울산형 창조경제 기반인 기술·생산경쟁력 강화로 지역일자리 창출, 셋째,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매력 있는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중점적으로 구축하고자 한다.

그림 3-7-1 울산광역시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2.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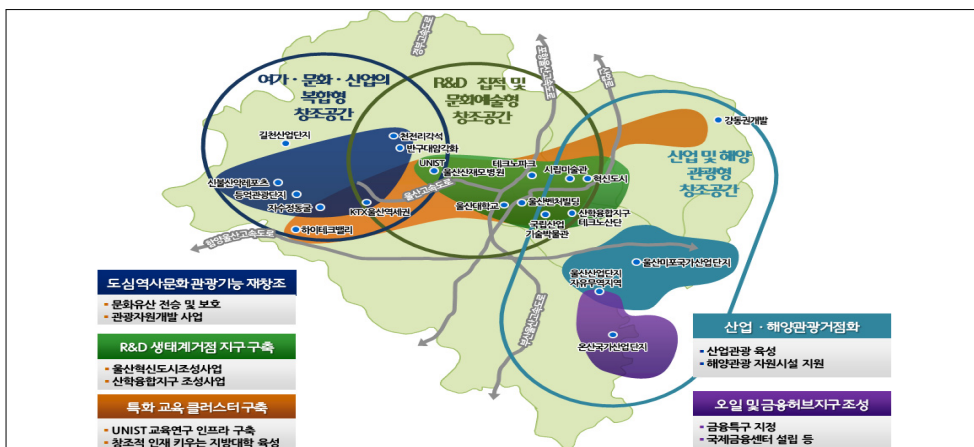
첫째, ‘행복도시 구현을 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과 관련해서는 유해화학 물질 안전대응시스템 및 안전망 구축화를 통해 주민의 안전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내 및 지역 간 도로, 철도 등 교통기반 조기 확충으로 편리한 교통정책 실현, 도시 기반 확충과 도시활력 증진사업으로 쾌적한 환경 개선에 집중한다.

둘째, ‘울산형 창조경제 기반인 기술·생산경쟁력 강화로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ICT융합 미래성장동력 발굴과 주력산업 고도화를 통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여 국가 경제성장의 핵심 사업으로 육성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동북아 오일허브 석유 물류 거래 활성화로 외국인 투자 유치, 지역 내 경제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한 우수한 기술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 지원하여 강소기업을 육성한다.

셋째,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매력 있는 관광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해 회색산업 도시 이미지를 탈피하여 산악·생태·역사·해양·문화·산업 등 다양한 관광자원 보유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관광인프라를 확충한다. 더불어 거점 관광공간조성과 콘텐츠 개발을 통해 차별화된 체류관광지를 조성하고, 지역여건에 걸맞은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통해 지역문화 역량제고와 주민 밀착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고품격 창조도시’를 위한 공간별 추진전략은 서부권을 ‘여가-문화-산업(R&D)의 복합형 창조공간’, 도심권을 ‘R&D 집적 및 문화예술형 창조공간’, 동부권을 ‘산업해양관광형 창조공간’으로 구분하여 조성하는 것이다.

그림 3-7-2 울산광역시 공간별 창조도시 추진전략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울산광역시시는 기능적 연계성 및 지리적 연계성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경북 경주, 경남 밀양·양산 4개 도시를 울산중추도시 생활권으로 구성하였다(2014년 2월 4일). 이에 인근 도시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가고 있으며, 관광 및 교통, 주민건강 등의 선도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먼저, 2014년 영남알프스 마운틴탑 사업(총 32억 원, 국비 29억 원, 지방비 3억 원)으로 영남알프스를 동남내륙지역의 산악관광메카로 육성하고 지역간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였다.

그림 3-7-3 울산광역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연계도시간 교통망 확충을 위하여 2015년에는 울산~경주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사업(총 20억 원, 국비 16억 원, 지방비 4억 원)을 추진하여 인접지역 간 통행자 교통이용 편의증진 및 상호교류를 위해 센터 연계 서버 및 S/W 개발, 센터시스템(DB제공서비스 등) 확충, 버스정보단말기(BIT)를 확대 설치하였다. 2016년에는 밀양시와 연계하여 계능기반 바이오메디컬산업 육성사업(총 31억 원, 국비 25억 원, 지방비 6억 원)을 통해 계능기반 건강정보 리포트를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한국인 맞춤형 건강리포트를 제공하고자 한다. 장기적으로 국가차원의 국민건강관리프로젝트로 추진 할 경우 국민건강향상분야의 국가재정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울산광역시시는 교통기반 및 지능형 교통체계 확충, 안전한 스마트 시정 구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으로 지역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도시 경쟁력 강화에 힘썼다.

광역도로인 울산과 포항간 고속도로가 개통(2016년 6월) 되었다. 이를 단초로 경주, 포항을 잇는 동해안권 시대가 시작되었으며,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해남부권 도시공동체 해오름동맹(상생협력 협약체결, 2016년 6월)을 결성하여 초광역권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지역 내에서는 울산국가산업단지(용연~청량IC) 연결도로 개통(2015년 12월)과 산업로(신답교~경주시계) 및 강동유원지~정자항 입구 도로확장, 옥동~농소1 도로개설로 물류수송의 원활뿐만 아니라 관광기반 조성에도 이바지하였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통사고가 잦은 곳(2014년 194개소→2016년 204개소)을 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2016년 우수지자체 선정)하였고, 버스정보시스템 확대(버스정보단말기 설치 2014년 947대→2016년 1,170대, 차량·승객단말기 2014년 1,504대→2016년 1,597대)와 교통신호 제어시스템 표준보안규격 실증사업 추진을 통해 맞춤형 교통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국가산업단지 지하매설배관 DB 추가 구축(2016년 11월~2017년 11월)과 스마트시티센터 구축 및 시스템 연계·통합을 위한 실시설계 완료,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 고도화와 ICT융합 및 빅데이터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방과 소통 중심의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 안전한 스마트시정 및 시민 공감 정보복지를 실현하였다.

지역특성에 맞는 ‘울산, 중구로다(中具路多) 조성사업’ 등(2016년~2020년, 382억 원) 도시재생사업과 취약지역 개선으로 ‘장생포 새뜰마을 사업’ 등(2015년~2018년, 145억 원), 도시경관개선을 위한 ‘선암지구 생활환경개선’ 등 5개의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2015년~2018년, 214억 원)을 추진하여 지역정체성 확립, 상권활성화, 도시기반시설 정비 및 마을공동체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도시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울산시는 생활 속 규제와 지역 특화규제를 발굴·해결하였으며, 규제개혁 국제 학술대회·우수사례 발표대회 등을 통해 규제개혁에 대한 인식 개선은 물론 불합리한 규제 혁파로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규제개혁 평가에서 3년 연속(2014년~2016년)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또한 법제교육 확대(2014년 1회→2016년 4회)와 무료법률상담 운영 등으로 법무·통계행정 서비스를 확대하여 시민권의 보호에 이바지하였다.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소비 침체, 수출 부진과 조선업 위기 심화 등에 따른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고 있어 지역 경기회복이 불투명함에 따라 일자리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위기극복을 위하여 울산시는 제조업 창업공간인 톡톡팩토리 조성(2016년 3월, 7개팀), 청년희망재단 동남지역본부 설치(2016년 9월), 청년CEO 육성(200여명) 사업인 창업 공간 조성, 청년CEO 역량 강화 등의 제반 구축으로 청년 기술창업 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조선산업 위기대응 일자리 종합지원인 울산조선업 희망센터(구직자 2,789명 중 524명 취업 달성, 18.6%)와 고용·복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울산고용복지+센터 설치·운영(2016년 8월)으로 퇴직자 및 장년층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특히,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마을기업 6개소, 마을기업교육 컨설팅 228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사회적기업)으로 일자리가 1,045명 창출되었으며, 청년 미취업자의 경우는 120명의 인턴이 참여하여 78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울산지방 중소기업청 개청(2016년 3월),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17개사) 및 월드클래스 300기업(2개사)지원으로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통시장지원센터 개소(2016년 3월) 및 야시장(중앙전통시장, 수암상가시장) 등 특성화 시장을 육성했다.

울산시는 조선산업 위기 지속과 신흥국 경기 침체로 인한 자동차 수출 감소, 석유화학산업 부진 등 지역주력산업의 동반 침체 가능성이 우려된다.

선제적 대응을 위해 ICT융합을 통한 성장 동력 발굴 및 주력산업 고도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한다. 먼저, 나노융합산업 기반 확산사업의 기술개발 및 제품화 지원과 그린자동차 부품실용화 및 실증기술개발, 조선해양기자재 국제인증 및 벤더등록 지원(국제 인증 37건, 벤더등록 19건), 산학융합형 하이테크타운 건립(ICT Industry 4.0[®], 중앙투자심사 통과)으로 주력산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바이오화학실용화센터 개소(2016년 3월), 그린카기술센터 개소(2016년 5월), 프라운호퍼 ICT한국분원 개소(2016년 5월), 뿌리산업 ACE기술지원센터 착공(2016년 8월)으로 연구 인프라를 확충하여 울산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에 창의적 기술혁신 역량 강화로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과 울산종합비즈니스센터 개관(2016년 5월), 산학융합지구 조성(95%), 전시컨벤션센터(기

본설계완료)로 글로벌 산업도시 성장기반 확충과 사업구조를 다각화하였다.

에너지 선도도시로서 오일허브 물류 기반을 구축(공정률 91.5%)하고, 친환경 전지 융합 실증화 단지조성 사업 건축공사를 착공(2016년 7월)하였으며, 수소복합충전소 실증사업 조달청 입찰(2016년 7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ESS 4개 기관 7MWh 보급, 태양광 설치 8개소, 그린홈 70가구 등) 확대에 에너지 기반을 구축하였다.

울산은 국제적 위상 제고와 역할 다변화에 따라 우호도시 MOU체결(미얀마 만달레이시, 인도 첸나이시)로 글로벌 시장 진출 발판을 마련하고, 자매·우호도시 방문 및 초청으로 우호 협력 강화를 통해 국제교류를 확대하였다. 수출 역량강화를 위해서 세계한인무역협회 수출상담회 개최(2016년 4월), 해외시장개척 지원(399개사), 중소기업 수출마케팅 지원(295개사), 수출초보 및 유망·강소기업을 육성(61개사)하였다.

특히, 지역특성화산업의 마케팅 지원을 통해 755개사가 참여하여 수출 계약 추진이 1,037건, 355백만 달러의 성과를 창출하였으며, 무역사절단 파견의 경우 29개 도시에 89개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수출상담 951건(43천만 달러), 수출계약 445건(14.7천만 달러) 성과를 냈다. 지역SW산업 진흥지원은 글로벌스타벤처 육성사업 지원(7개사), 중소기업 정보화시스템 구축 지원(27개사), 제어 소프트웨어 개발 등으로 기업 성장 촉진 및 매출 증대에 기여하여 글로벌 울산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시켰다.

또한 FTA 확대에 따른 세계 농업·해양 분야 경제환경 변화,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주력산업 일자리 감소 등 귀농(어)·귀촌 증가에 따라 귀농인 창업비 지원(1,214백만원), 도시텃밭 조성(4개소), 학교농장 조성(26개소), 예비 귀농·귀촌인 팜투어(320명) 등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였으며,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4개소→7개소, 매출액 45억 원→70억 원), 과수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해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와 농산물 유통시스템이 개선되어 농산물 판로 다변화로 농업인 소득이 증대되었다.

더불어 울산시는 울산항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울산신항 건설(민자2-1단계, 북항 및 남항 방파호안 사업), 울산신항 인입철도 개설사업(청량천교 착공)의 차질 없는 진행과 울산항 배후도로 건설(예타 진행 중)로 동남권 물류거점 도시기반을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해양수산업 분야에 있어 인공어초 시설사업(16ha) 추진, 수산종묘 방류(120만 마리), 바다숲 조성(5ha) 및 방어진항이용고도화사업(물량장 신·증설 등), 해양생태계 복원 및 수자원 조성뿐만 아니라 수산업 작업 여건을 개선하여 지역 해양경제 활성화로 어촌산업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지역 특성화에 걸맞은 인력양성으로 울산의 지역인재 육성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초·중교의 교육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춰 교육환경을 개선하였다. 그 중 상북 지역 3개교 통합 후 상북초로 개교(2016년 3월) 하였고, 개발지역 신·중축을 통해 울주군 장검중 개교(2016년 3월)와 화진초 및 청솔초를 증축하였다. 또한 ICT를 활용한 농산어촌 학생 학습여건을 개선하고, 초등방과후 돌봄교실을 11개교 311실 운영(6,140여명)으로 만족도(학부모 97.6%) 높은 내실화 추진에 주력하였다.

특히 울산시는 지역이 보유하고 세계적인 자동차·조선 전자융합기술 연구인력 양성과 연구개발로 BK21플러스 사업을 추진했다. 석·박사 인력을 43명 배출하고, SCI(E) 논문은 78편으로 상위 저널 우수논문과 특허 등록실적 33건으로 자동차·조선 전자융합 분야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인재의 역외 유출을 막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지방대학 지원으로 석·박사 인력을 36명 배출하고, SCI(E) 논문은 84편으로 상위 저널 우수논문 증가뿐만 아니라 특허출원과 등록실적은 총 86건(참여교수 1인당 3.07건)으로 자동차·조선 전자융합 분야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인재의 역외 유출을 막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을 통해 장기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등 13건, 캡스톤 디자인 및 산하기관 협력 연구 활동 지원, 특성화 기술개발과 특허출원 지원으로 인턴 대학생 기업체와 협업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또한 울산과학기술원 연구 교육운영 및 협력 사업으로 기술이전(10건 1,175백만 원)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 도약 발판 마련, 학교 운영 및 R&D 수행으로 지역에 투자, 지역경기 활성화로 대학-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지역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다.

대학과의 연계 지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와의 산학 연계로 인재양성 향상에 이바지하였다. 구체적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학교기업 운영학교인 울산마이스터고와 울산 상업고를 지원하여 학교기업 제품 제작활동을 통해 현장 실무능력을 향상하고 명장 공방 기술이전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성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켰으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지원 확대를 통해 조선해양플랜트부문 기능 인력의 취업률을 2학년 58%, 3학년 47% 수준으로 높이는 등 체계적인 기술인재를 육성하였다.

4. 지역 문화 육성, 생태복원

울산광역시시는 광역시 승격 이후 꾸준히 공공문화예술 자원들을 증가시켜 왔으며, 다양한 계층의 생활 속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이용률 94%, 전국 1위 달성) 추진과 문화예술행사(태화강 국제설치 미술제, 태화강 대숲 낭랑축제, 서머페스티벌, 울산예술제, 처용문화제, 한글문화예술제 등)를 개최하였다. 또한,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2016년 11월)으로 문화공간 확충을 통한 시민의 문화활동 욕구를 충족시켰다. 이에 (재)울산문화재단 설립 추진으로 지역문화 콘텐츠를 발굴·지원하여 울산의 지역문화 진흥기반을 구축하였다.

울산의 문화유산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울산 경상좌도 병영성 및 울주 언양읍성 복원 정비 등 국가지정문화재 복원과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6년 8월 대통령 여름 휴가지인 십리대숲(7월 주중 평균 700명→8월 7,293명, 10배 증가)과 대왕암공원(6월 주중 평균 2,000명→8월 10,750명, 5배 증가)의 방문으로 관광도시 이미지가 확산되었으며, 그 외 울산큰애기 관광안내소(공사 착공), 관광안내표지판 및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완료)으로 국내관광 활성화뿐만 아니라, 영남알프스 입체영상관 건립(착공, 2016년 11월) 차세대 실감콘텐츠 제작지원과 신불산군립공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착공, 2016년 12월) 준비로 가족단위 관광 유치에 힘썼다.

영남알프스 세계화를 위해 2015년 울산 UNWTO 산악관광회의 개최(2015년 10월)하고, 울주 세계산악영화제 프레페스티벌(2015년 8월)을 통해 도시 품격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해양관광은 찾아가는 강동권 투자설명회 개최(2016년 6월, 일산킨텍스), 강동권 해외 홍보관 운영(2016년 11월, 홍콩), 강동권 투자설명회 추진(2016년 12월)으로 관광산업 도약을 위한 시스템 구축기반을 마련했다.

체육진흥에는 실내종합체육관 건립(중앙투자심사 통과)과 문수축구경기장 노후관람석 교체, 염포운동장 조성 및 학교운동장(4개소) 개·보수로 문화·체육 공간을 확충했다.

울산수목원 및 치유의 숲 조성, 장미축제(관람 20만명)로 휴양 공간을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울산도서관 건립(2016년 6월, 기공식)과 작은 도서관 조성(리모델링) 지원으로 지역문화의 지식문화 정보제공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내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 · 의료

고령화 및 장애인가구 증가, 저출산 및 가족해체 등으로 인구형태는 변화하였고, 시민의 복지욕구 증가에 따라 대상별로 복지지원에 효율적으로 추진하였다.

먼저,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노력하였다. 노인 생활안정 지원과 종합복지서비스 기능 제고를 위해 기초연금 67,940명, 노인돌봄서비스 4,724명, 노인 일자리가 제공(2014년 5,167명→2016년 7,688명)하였고, 2016년 노인복지관 1개소를 확충하여 3년 연속(2014년~2016년) 노인복지관 시설평가에서도 최우수를 거두었다. 장애인 활동지원(2014년 1,435명→2016년 1,657명)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2016년 11월)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사업 및 개인별 맞춤형지원서비스를 제공했다. 정보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92명) 보급사업, 사랑의 그린PC(총 257대)를 보급하고, 범죄 발생 시 현장조사 및 보호와 공공후견인 지원으로 권익을 옹호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건전 육성 및 여성 일자리 창출로 가족친화 도시 기반을 마련하였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개관(2016년 12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126명)을 통해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과 구인 및 구직자 발굴(6,587건), 우수기관으로 선정(2016년 2월) 되었다. 이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여성의 자립역량 강화에 이바지하여 가족친화기관 인증(2016년 12월)을 받았다.

시민과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도시 실현에도 힘썼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인 걷기대회(1회, 2,542명), 금연구역 지도단속(위반자 487건), 구강보건사업(노인의치보철 77명, 불소도포 21,621명), 모자보건사업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체감도를 향상시켰다.

특히,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를 위해 울산스마트쉼센터 중심으로 지속적인 예방교육(30,664명) 및 가정방문상담(150명)을 강화하였으며, 시민의 정신질환 예방을 위해 정신보건 관련기관을 11개소 운영하여 시민 정신건강 스트레스 인지율(2014년 25.28% → 2016년 24.9%)이 낮아졌으며, 자살자도 감소(2014년 293명→2016년 283명)되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기존 시설의 개보수(3개소)와 장비보강(3개소)을 하였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부분에서 안전성과 환자 중심성 등 상위등급(A등급)을 달성하여 응급의료 질 향상에 이바지하였다.

제4절 향후 추진계획

울산광역시시는 광역시 승격 20주년을 맞아 2017년을 ‘성년 울산’, 새로운 도약의 해로 설정하여 시민 화합과 경제 재도약의 해를 마련하고자 한다. “성년 울산, 역동과 희망의 동북아 중심도시” 시정방향 추진을 위하여 첫째, 「2017년 울산 방문의 해」 추진으로 관광객 400만명을 달성하여 매력 있는 관광 울산을 구현하고, 둘째, 주력산업과 연계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ICT융합 및 바이오메디컬산업, 수소전기차 및 서비스산업 등을 중점적으로 육성하여 지속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셋째, 시민생활의 안전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IT기술을 이용하여 교통, 방법, 재난 등의 상황을 통합·관리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한다.

‘지역 행복생활권’ 선도연계협력사업과 동해남부권(울산, 포항, 경주) 도시공동체 「해오름동맹」 추진은 도시 간 상생 협력으로 사회경제 및 산업적 발전을 도모하고 도시활력 및 새뜰마을사업으로 도시미관 형성 및 경쟁력을 강화한다. 창조도시를 견인하는 도로망 구축을 위해 간선도로망 확충과 신북로터리 및 국도 24호선 등 교통정체구간 개선,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동서축(구영~과기원~길천)과 호계~강동간(광로 3-5호선) 타당성조사,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2020년까지 수소자동차 실증도시를 구현하고, 지능형 미래자동차 기반구축, ICT 융합 및 바이오메디컬 산업 추진, 울산형 지역경제 생태계 형성 및 에너지산업 선도도시를 조성한다. 또한 컨벤션센터 착공과 광역시 승격 20주년 연계 국제교류 확대를 통해 수출 역량을 강화한다.

교육분야는 기업 채용 인력이 별도의 재교육 과정 없이 현장업무가 가능하도록 산업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개술개발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한다.

특히, 2017년은 울산 방문의 해로 울산문화재단이 본격 출범하여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시민 중심의 관광수용태세 확립과 핵심 관광콘텐츠 육성, 관광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U-관광 플랫폼 조성으로 체류형 관광지 기반을 마련한다.

사각 없는 복지·의료로 위해 현장밀착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복지센터” 전환 읍면동을 확대하고, 아동복지 증진과 저소득층 빈곤 탈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울산시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골든타임 내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가산업단지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 및 대응시스템 구축한다.

제8장 세종특별자치시

제1절 세종특별자치시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세종특별자치시의 2016년 인구는 24.3만명으로 2013년(12.2만명) 이후 연평균 25.8%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는 세종시에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이전과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지속적인 건설이 인구의 급성장에 핵심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인구 증가 외에도 세종시의 수출액은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 기준 10.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2016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전국의 평균 재정자립도(52.5%)보다 높은 59.0%로 2013년의 38.8%에 비해 20.2%p가 높아져, 재정자립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1 세종특별자치시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세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증가율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증가율
지역내총생산 (십억원)	1,430,255	1,485,505	1,563,668	-	4.6	-	-	-	-	-
인구(천명)	51,141	51,328	51,529	51,696	0.4	122	156	211	243	25.8
1인당 GRDP(만원)	2,848	2,946	3,089	-	4.1	-	-	-	-	-
수출액 (백만달러)	559,632	572,665	526,757	495,466	-4.0	904	1,020	929	1,012	3.8
취업자(천명)	25,066	25,599	25,936	26,235	1.5	-	-	-	-	-
재정자립도 (%)	51.1	50.3	50.6	52.5	0.9	38.8	50.6	54.8	59.0	15.0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이며, 2015년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 산업 현황

세종특별자치시의 2014년 기준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비금속 광물제품'이 사업체수 13.2%, 종사자수 18.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외 사업체수 기준으로 '식료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전기장비'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비금속 광물제품'에 이어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가 14.4%로 높았으며, '식료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순으로 높았다.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가 16.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비금속 광물제품', '식료품', '전기장비'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2013년과 비교할 때, 사업체수는 '비금속 광물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등의 부문에서 증가하였으며, '식료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등은 감소하였다. 종사자수는 '비금속 광물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전기장비' 부문은 증가한 반면 다른 부문은 모두 감소하였다. 생산액은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식료품' 부문에서 증가한 반면, 다른 부문은 같거나 감소하였다.

표 3-8-2 세종특별자치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3년			2014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13.3	11.9	11.8	12.0	11.0	11.9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5.1	3.7	7.8	5.3	3.6	7.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의약품 제외)	11.0	8.0	6.2	11.3	7.1	7.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11.8	9.5	9.1	10.2	7.8	9.1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 제외)	5.1	1.8	0.9	4.9	1.5	0.9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3.5	17.2	15.8	3.4	14.4	16.1
비금속 광물제품	11.4	14.6	14.4	13.2	18.6	14.3
전기장비	8.6	9.0	11.1	8.3	9.5	10.6
자동차 및 트레일러	7.5	8.9	7.1	7.9	10.5	6.9

주 : 2015년, 2016년 자료는 없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2014년 기준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각각 31.0%, 25.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1년 사이에 6.1%p 증가하여 신도시라는 특성에 의해 관련 업종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각각 29.1%와 21.0%로 높은 비중을 보였고, 매출액 기준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이 75.5%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과 비교할 때,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출판·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은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모두에서 증가를 보인 반면, '기타 개인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관련 서비스업'은 모두 감소하였다. 매출액의 경우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이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은 비중이 줄어들었다.

표 3-8-3 세종특별자치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3년			2014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1.4	4.1	1.6	1.6	3.4	2.3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2	1.3	0.1	1.6	3.0	1.0
부동산업 및 임대업	24.9	17.8	16.6	31.0	21.0	14.0
사업지원 서비스업	4.9	12.0	1.2	5.0	12.8	1.4
교육 서비스업	11.5	7.7	0.5	11.4	8.4	0.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4.6	31.5	2.5	13.9	29.1	3.7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11.1	9.9	76.3	9.9	8.8	75.5
기타 개인 서비스업	30.5	15.8	1.2	25.6	13.5	1.5

주 : 2015년, 2016년 자료는 없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3. 혁신활동 현황

세종특별자치시의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 연구개발비는 49백억 원, 연구개발인력은 5,065명, 연구개발조직수는 133개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인력, 연구개발조직수 모두 2013년에 비해 매우 빠르게 증가하여, 지난 3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61.2%, 57.6%, 35.0%를 나타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직접적인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3년에 비해 연구개발비, 인력, 연구개발조직수 모두에서 증가하여 2015년에는 각각 0.74%, 0.82%, 0.36%를 차지하였다. 2013년에 비해 연구개발비는 0.42%p, 연구개발인력은 0.46%p 연구개발조직수는 0.1%p 증가하였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5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462건이며, 등록은 198건으로 2013년에 비해 특허 출원 및 등록건수 모두 크게 증가하였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3년에 비해 특허 출원건수 0.11%p, 등록건수 0.08%p가 증가하여 각각 0.28%, 0.26%로 나타났으며, 3년 동안의 연평균증가율은 특허출원이 31.5%, 특허등록이 6.4%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표 3-8-4 세종특별자치시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연평균증가율
연구개발	연구개발비	188,074 (0.32)	392,505 (0.62)	488,716 (0.74)	61.2
	연구개발인력	2,039 (0.36)	4,441 (0.73)	5,065 (0.82)	57.6
	연구개발조직수	73 (0.26)	102 (0.32)	133 (0.36)	35.0
특허	출원	267 (0.17)	326 (0.20)	462 (0.28)	31.5
	등록	175 (0.18)	179 (0.18)	198 (0.26)	6.4

주 : ()는 전국대비 비율임. 2016년 자료는 없음.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세종특별자치시는 기존의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 대전~영덕고속도로, 논산~천안고속도로 외에 최근 건설계획이 확정된 세종~서울 고속도로 등의 도로망과 경부고속철도 및 호남고속철도 등의 철도망을 이용하여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2시간 이내에 접근할 정도로 접근성이 우수하다. 또한, 세종시는 청주 국제공항을 이용하여 국내외 다른 도시 및 국가들로 쉽게 이동할 수 있으며, 취항도시 확충과 같은 공항의 활성화를 통해 국제적인 중심도시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

한편, 최근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의 이전으로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위상이 제고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지정과 첨단 산업단지의 조성을 통해 대전의 과학벨트 거점지구와 주변의 천안·아산 IT 클러스터, 오송·오창 BT 클러스터, 대덕 R&D 특구 등과 연계한 상생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첨단산업도시로 성장이 기대된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명품도시건설을 통하여 세종시의 국내외 위상이 제고되고, 행정·산업·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 증진을 통해 국제도시로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도시성장의 초기단계로서 행정과 연구기능 이외의 다양한 도시기능과 도시의 자족성이 부족한 편이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세종시와 주변 도시 간의 격차 등으로 인해 지역 내 및 지역간 갈등이 예상된다. 따라서 도시의 잠재력은 극대화시키는 반면 약점과 위협요인은 감소시켜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과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을 모색할 수 있는 주요 발전과제로 3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도시의 자족기능 강화이다. 도시의 자족성 확보를 위해 교육·문화·의료시설과 교통·물류망, 산업생태계 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둘째, 세종시 내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세종시와 주변 지자체간의 조화로운 상생발전이다. 이를 위해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세종시와 주변 지자체간의 동반성장을 위한 기능분담 및 협력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친환경도시로 조성하는 것이다. 도농간 상생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성장관리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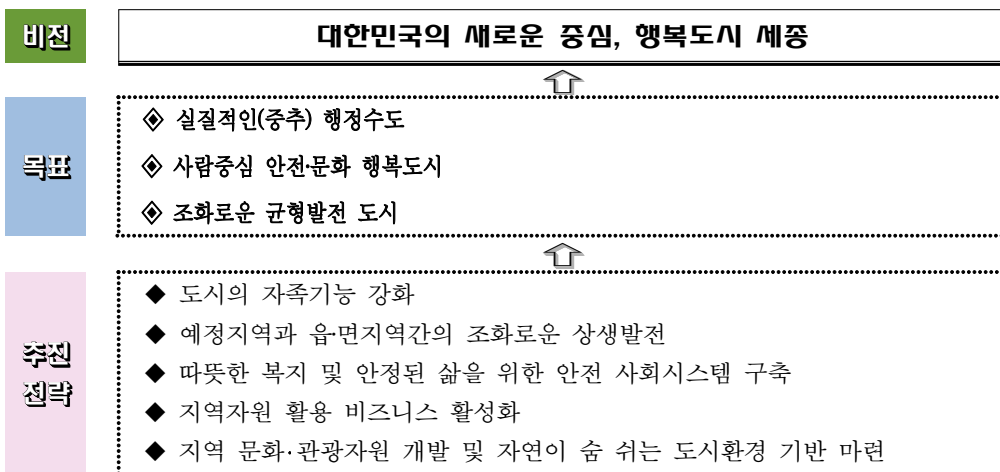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정부가 대내적으로는 지역균형발전을, 대외적으로는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2030년까지 건설하는 신도시로써 중앙행정기능을 중심으로 한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추진하는 매우 특별한 도시이다. 이를 위해 세종시는 지역발전 5개년 계획(2014년~2018년)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 세종’을 시의 발전비전으로 설정하였다. 이 비전은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창조환경을 조성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도시로 조성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비전 실현을 위한 목표는 크게 3가지로 설정하였다. 첫째는 ‘실질적인(중추) 행정수도’로,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에 따라 새로운 행정 거점도시를 조성하는 것이다. 둘째는 ‘사람중심 안전·문화 행복도시’로, 교육·환경·문화·예술 등 창조적 환경과 안전도시 건설을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셋째는 ‘조화로운 균형발전 도시’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간에 격차 없는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림 3-8-1 세종특별자치시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2. 추진전략

세종특별자치시는 대외적으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당초 취지를 살리고 대내적으로는 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시는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해 ‘도시의 자족기능 강화’, ‘예정지역과 읍·면지역간의 조화로운 상생발전’, ‘따뜻한 복지 및 안정된 삶을 위한 안전 사회시스템 구축’, ‘지역자원 활용 비즈니스 활성화’, ‘지역 문화·관광자원 개발 및 자연이 숨 쉬는 도시환경 기반 마련’ 등 5대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첫째, ‘도시의 자족기능 강화’ 전략은 도시의 자족성 확보를 위해서 계획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의 성공적 건립과 이전은 물론 광역 및 지역차원의 교통·물류망과 생활기반 인프라를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적 여건을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 ‘예정지역과 읍·면지역간의 조화로운 상생발전’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간의 격차와 갈등을 해소하고 하나의 세종시로서 동반성장하기 위하여 관광·문화·교통·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능을 분담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 ‘따뜻한 복지 및 안정된 삶을 위한 안전 사회시스템 구축’은 저출산·고령화 등 당면한 사회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협력을 근간으로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여건 개선, 국제수준의 안전도시 인증 및 도시안전심의·감독기준 강화, 재해예방형 도시 조성과 도시재생 등을 추진하여 복지와 안전망이 갖추어진 도시로 조성하는 것이다.

넷째, ‘지역자원 활용 비즈니스 활성화’는 주변 농촌지역이 보유한 다양한 자원의 가치를 제고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세종형 3농(근교, 관광, 식품연계농업) 모델을 구축하고, 농업의 산업화 촉진 및 로컬푸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문화·관광 자원 개발 및 자연이 숨 쉬는 도시환경 기반 마련’은 시민의 문화 및 여가생활 여건을 향상시키고, 창의적인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시의 문화 정체성 함양 및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도시의 어메니티를 증진하는 것이다.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세종특별자치시와 공주시는 두 도시간의 자율적 합의를 바탕으로 중추도시생활권을 구성(2014년 2월 28일)하고 있다. 이들 두 도시는 지리적 접근성과 지역간 동질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보완과 연계협력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생활권 구성에 적합하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의 이전에 따라 고차 서비스 기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공주시는 풍부한 백제문화 유적 및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다.

세종시는 지역행복생활권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생활권발전협의회’를 구성(2014년 10월 1일)·운영하여 연계협력사업의 발굴과 효율적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종시는 세종·공주 중추도시권 시민의 행복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연계협력 사업으로 ‘세종·공주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사업(2015년 선정)’과 ‘금강 르네상스 조성사업(2016년 선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별로 ‘광역BIS 구축사업 실무협의회’와 ‘금강 르네상스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림 3-8-2 세종특별자치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2016년 기준 세종특별자치시의 인구는 약 24만명으로 전년 대비 15.1% 증가하였다. 세종시는 인구성장과 도시의 발전추세를 고려하여 지역생활권의 활성화를 위한 목표를 '도시활력 증진 및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통한 삶의 질이 보장되는 생활권'으로 설정하고 '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 건설', '조화로운 균형발전 실현', '편리한 도시교통체계 구축'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 건설'에 있어서는 2018년 WHO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위하여 국제안전도시 기본조사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정기회의(15회)와 안전점검(11회)을 통해 안전취약지(13건)를 개선하였다. 또한, 재해위험개선지구 4개소 중 1개소는 정비사업을 완료, 2개소는 실시설계 준공 및 공사착공, 1개소는 실시설계를 발주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슬레이트 지붕 130동을 철거하였다.

'조화로운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청춘조치원 사업을 통해 고용복지+센터를 준공하는 등 9개 과제를 완료하였고, 지역역량강화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한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50회)을 통해 69,008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보였다. 또한, 읍·면지역의 마을회관 등 주민공동이용시설(55건)을 신축·보수하고, 마을도로 등 60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정비하였다. 그 외에도 조치원읍 종합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부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사 선정, 구 조치원정수장을 문화공간으로 재생시키기 위한 기본구상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여 지역내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편리한 도시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농어촌도로 등 18개 노선(5.8km)을 개통하였으며, 조치원 공영주차장(41면)과 노상 무인주차기(20대)를 설치하였다. 또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1개)을 마무리하고, 회전교차로(1개소)를 조성하였으며, 생활권의 교통망 개선을 위해 세종-공주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광역 BIS 기본설계를 발주하였다.

그 외에도 기초생활인프라 확충을 통한 삶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해 상수도 신설 및 하수관로 확충사업 추진으로 상수도 보급률과 하수도 보급률을 각각 전년대비 5.3%p, 8.0%p 상승한 87.6%, 89.5%로 향상시켰으며, 체계적인 도시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신도시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였다.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세종특별자치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산업 육성’, ‘지역투자 촉진 기반 확대’, ‘지역기반 연구 활성화를 통한 창조경제 지역 확산’, ‘농산어업 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였다. 먼저,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서 창업보육센터 내 30개 기업에 대해 사업화 지원 등을 추진하여 기업의 기술력 제고와 성장기반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해서도 신규 고용은 전년 대비 143%, (예비)사회적 기업수는 전년 대비 108%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지역맞춤형 일자리 목표 공시제로 일자리 14,711개(공공 9,466개, 민간 5,425개)를 창출하여 전년대비 4,483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이외에 무역사절단을 운영하여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를 지원하였으며, 대전·충남과 합동 수출상담회 개최 등으로 8,272천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역 상품의 해외시장진출과 확대에 기여하였다.

‘지역투자 촉진 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세종전통시장과 금남대평시장 등 읍·면지역 전통시장의 주차장 현대화, 아케이드 보수, 마케팅 지원, 상인조직 역량강화 지원 등 전통시장의 현대화와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자동차부품산업과 바이오소재산업 등 지역주력산업의 육성을 위해 13개 기업, 10개 기관에 대해 국비와 시비 총 42.9억 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지역연고(전통)산업 육성을 위해 3개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의 노력을 하였으며, 지역특성화산업육성 사업을 추진하여 19개 기업에서 총 1,300만 달러의 수출을 계약하였고, 지방투자촉진사업을 통해서도 대기업과 첫 외투기업 포함 총 50개의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보였다.

‘지역기반 연구 활성화를 통한 창조경제 지역 확산’을 위해서는 경제협력권 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여 기계부품 관련 4개 기업, 3개 기관에 기술개발, 기술경영 교육 등을 지원하였으며,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서도 7개 기업이 첫걸음 R&D 관련 7개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로서 과학 및 기술 사업화의 선도거점으로 육성·발돋움하기 위해 추진 중인 SB(Science Biz)플라자 조성과 관련하여서는 설계 용역 진행과 SB플라자 건립비(80억

원) 확보뿐만 아니라 과학벨트 세종기능지구 활성화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수행함으로써 SB플라자 내 기업·연구기관 입주를 위한 유치와 홍보전략, 행·재정적 지원 방안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농산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농산물 제조·가공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6차 산업 인증 4개소를 발굴하였으며, 녹색농촌체험마을 육성 사업을 통해 농촌체험휴양마을 3개소에 대해 체험프로그램 개발, 홍보 마케팅 등 S/W와 체험기반 H/W 구축을 지원하였다. 또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예비)마을기업 6개소를 지정하였으며, 장터를 44회 개최하고, ‘2016 대한민국 마을기업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그 외에도 가축분뇨를 자원으로 활용하여 437ha에 살포하였으며, 재해위험저수지 1개소와 용배수로 25개소 정비를 통해 재해에 대비하는 한편 영농편의를 지원하였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로컬푸드 싱싱문화관 실시계획을 마무리하였다.

3.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지역격차 없는 교육환경 및 평생학습시스템 구축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하여 세종시는 교육여건 및 학교환경 개선, 도시지역과 읍·면지역의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제공, 평생학습체계 지원, 농촌의 소규모학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맞춤형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과후 돌봄 서비스 확대 및 학부모가 자녀를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세종시는 교육여건의 개선과 평생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증가에 대비하고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 ‘일과 학습병행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 ‘100세 시대 지역 평생학습체계 구축’ 등에 역점을 두었다. 먼저,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서 4개 사업에 29억 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창의적인 교육 환경 조성과 인재 양성 그리고 예정지역과 읍·면지역의 교육여건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일과 학습병행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지역혁신 창의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대학 인문·고전강좌 운영, 학습과 고용을 연계한 바리스타 전문가 과정

운영, 인재육성재단 설립,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등을 수행하였다.

‘100세 시대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평생교육 기관간 협의, 업무협약 등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평생학습에 대한 정보공유 및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구축 사업을 통해 평생교육 기관뿐만 아니라 동아리, 강사 등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평생교육 관리를 체계화하였다.

그 외에도 세종형 진로 교육모델을 만들기 위해 진로체험처를 신규로 77개를 추가 발굴하고,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체험장 프로그램을 확보하여 학생들에게 서비스하였으며,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전년 대비 159개 강좌 증가한 386개 강좌로 확대 운영하여 전년 대비 약 3천명이 증가한 8,347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도시의 성장에 따라 증대하는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관심과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종시는 ‘지역 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 발전’,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 ‘지역 관광산업 육성’, ‘생태·자연환경 보존 및 활용’ 등에 역점을 두었다. 먼저, ‘지역 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 발전’을 위해서 조치원읍 소재 평리를 문화마을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협의체 구성 및 주민역량강화사업(골목정원예술학교)을 추진하여 주민 주도의 사업기반을 마련하였다.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한 문화오아시스 작은 도서관 지원 사업을 통해 12개의 작은 도서관에 대해 도서구입비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고, 3개소에 대해서는 순회 사서를 파견 지원, 5개소에 대해서는 도서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여 세종시의 독서문화기반을 확충하였다. 또한 부강면에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면단위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강증진에 기여하였다.

‘지역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관광안내체계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국문(3만부)과 중문(9천부)의 종합 관광안내지도를 간행·보급하고, 주요 관광지의 관광안내표지 문안을 통일·설치함으로써 시의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관광객의 편의를 개선하

였다. 또한,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사업의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캠핑장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생태·자연환경 보존 및 활용’에 있어서는 생태하천복원사업(내창천 하천정비)을 추진하기 위하여 상위계획인 하천기본계획(변경)을 수립·고시하고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재해예방은 물론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연꽃식물원(3,545㎡)과 수변관찰로(342m) 준공을 통해 전년 대비 5천명이 증가한 6만명이 공원을 이용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산림자원의 보존과 녹색휴양공간 제공을 위해 3.21km의 구간에 대해 임도를 신설하고, 구조개량(2km), 보수 및 관리(5.3km)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 70ha에 수목을 식재하였다.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복지에 대한 욕구와 고품격 복지행정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고 도시내 복지환경 차이로 인한 복지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등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를 위하여 세종시는 ‘지역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수혜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인프라 확충’ 등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먼저, ‘지역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서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을 추진하여 취약경로당 140개소에 1,680회 방문하여 간병을 지원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를 1개소 추가 설치·운영하여 방과 후 돌봄 수요에 대응하였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노후도가 심각한 38가구에 대해 주택개량을 지원하고, 1,619가구에 대해서는 월평균 1.55억 원의 임차료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복지 증진에 기여하였다. 그 외에도 현장 중심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보건소 건강생활센터 설립을 통해 전년 대비 방문상담 44%(2,094건), 취약계층 발굴 692%(547건), 서비스연계 399%(3,871건)가 증가하였으며, 복지(1,147건), 보건(447건), 정신(102건) 등 맞춤형 정보제공 및 상담을 수행하여 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하였다.

‘수혜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을 위해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한국어교육 200회기, 방문교육 1,717회기, 취업 연계 및 자격증

프로그램 운영 620회기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교육, 상담 등의 지원사업을 수행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역량강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드림스타트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드림가족봉사단 10가족(30명)과 함께 취약계층 아동 240명에게 김장김치 만들기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그 외에도 산모 303명에 대해 건강관리사 파견, 산후조리 지원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증진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중증장애인 300명에게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추진하여 장애인의 자립·자조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응급의료시설 2개소 및 평일야간 진료기관 1개소를 지정하였으며, 2,000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70대의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는 등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다.

제4절 향후 추진계획 및 과제

2017년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착공 10주년, 세종시 출범 5주년의 해이면서, 행복도시개발계획 2단계(2016년~2020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기로, 자족기능과 인프라 확충 등 지속적인 계획적 성장과 관리가 중요한 시기이다. 시 출범 4년 만에 '2016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할 정도로 도시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으나, 명품도시로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 다음의 부문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사람이 소중한 복지·문화도시 조성이다. 이를 위해서 복지재단 설립과 생활권별 광역복지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시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보육환경 증진,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을 통해 아이와 여성 그리고 가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 24시간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며, 장애인 일자리 확대, 다문화가족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등을 확충하여 세종시를 책 읽는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둘째, 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 건설이다. 2018년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안전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그리고 급경사지 등 취약시설에 대해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선제적 재난 예방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셋째,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환경 조성이다. 이를 위해서 대중교통이 중심이 되는 교통환경 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정비,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 수질개선, 생활폐기물 처리, 무궁화 도시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균형발전이다. 이를 위해서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성과를 가시화하고, 로컬푸드의 수요와 공급기반 확대 등을 통해 세종형 로컬푸드를 지속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농업의 성장 기반 강화, 지역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 등을 추진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활력있는 농촌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다섯째, 일자리가 있고 활력있는 자족도시 실현이다. 이를 위해 특화 산업단지, 벤처밸리, 미니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등 산업단지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세종 고용복지+센터 등을 운영하여 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 알선 등 일자리 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의 대표산업 육성과 미래 신성장산업 발굴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지역내의 기관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들과 상생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해외 도시들과도 테마형 교류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제9장 경기도

제1절 경기도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경기도의 인구는 2013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2016년 기준 1,272만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국 연평균 성장률을 상회한 연평균 5.8%로 증가하여 2015년 기준 351조원을 기록하였다. 1인당 GRDP도 2,831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성장률도 4.7%로 전국 성장률을 상회하였다. 수출액은 2014년 1,116억 달러로 정점을 기록한 뒤 2016년에는 135억 달러 감소한 98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재정자립도는 서울, 울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67.4%로 전국 재정자립도인 52.5%를 크게 상회하였으나, 2013년의 71.6%에 비해 4.2%p 낮아졌다.

표 3-9-1 경기도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경기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증가율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증가율
지역내총생산 (십억원)	1,430,255	1,485,505	1,563,668	-	4.6	313,671	329,559	350,963	-	5.8
인구(천명)	51,141	51,328	51,529	51,696	0.4	12,235	12,358	12,523	12,717	1.3
1인당 GRDP(만원)	2,848	2,946	3,089	-	4.1	2,584	2,684	2,831	-	4.7
수출액 (백만달러)	559,632	572,665	526,757	495,466	-4.0	102,005	111,641	105,908	98,125	-1.3
취업자(천명)	25,066	25,599	25,936	26,235	1.5	5,988	6,226	6,364	6,518	2.9
재정자립도 (%)	51.1	50.3	50.6	52.5	0.9	71.6	67.7	66.6	67.4	-2.0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이며, 2015년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 산업 현황

경기도의 산업구조는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62.0%, 제조업 36.8%, 광업·농림어업 1.3%로 나타났다.

2014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기타 기계 및 장비'가 14.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금속가공제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등 순이었다. 종사자수 및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가 각각 22.6%, 33.9%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기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금속가공제품' 등의 종사자수 및 생산액 비중이 높았다.

2013년과 비교할 때,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전반적으로 큰 비중 변화가 없는 가운데 '금속가공제품', '전기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가 다소 증가하였다. 종사자수 기준도 큰 비중 변화는 없었으며,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가 다소 감소하였다. 생산액은 비중 변화가 거의 없었다.

표 3-9-2 경기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3년			2014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제조업	5.0	5.5	5.0	5.1	5.6	5.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4.0	3.5	4.5	4.0	3.7	4.7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11.1	8.4	5.7	11.1	8.5	5.9
1차 금속	3.3	2.7	4.1	3.3	2.7	4.0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 제외)	13.9	8.7	5.1	14.1	9.0	5.4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9.3	23.8	35.0	9.0	22.6	33.9
전기장비	7.5	6.4	4.9	7.7	6.5	4.9
기타 기계 및 장비	14.9	11.9	8.3	14.8	11.9	8.2
자동차 및 트레일러	3.7	8.2	12.9	3.9	8.4	12.9

주 : 2015년, 2016년 자료는 없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2014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30.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수 및 매출액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27.9%, 21.4%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도 ‘부동산업 및 임대업’, ‘교육 서비스업’의 업종 비중이 높았다.

2013년과 비교할 때, 사업체수 기준은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다소 증가한 반면,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소폭 감소하였다. 종사자수 기준은 업종별 비중 변화가 크지 않은 가운데,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다소 증가하였다. 매출액 기준은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이 증가하였으며, ‘교육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감소 폭이 컸다.

표 3-9-3 경기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3년			2014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0.9	1.9	5.6	0.9	2.0	5.4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3	6.8	19.4	2.6	7.0	20.2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7	11.0	16.6	17.7	10.8	17.7
사업지원 서비스업	4.3	16.9	8.3	4.6	16.6	8.3
교육 서비스업	17.4	12.8	7.5	17.2	12.4	6.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4.8	27.0	21.4	15.1	27.9	21.4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11.6	8.8	11.5	11.2	8.5	11.3
기타 개인 서비스업	31.0	14.9	9.7	30.6	14.7	8.8

주 : 2015년, 2016년 자료는 없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3. 혁신활동 현황

경기도의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 연구개발비 32조원, 연구개발인력 202,267명, 연구개발조직수 12,414개로 나타났다. 다른 시·도에 비해 매우 큰

격차를 보이며,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인력, 연구개발조직수 모두 2013년에 비해 증가하여 경기의 혁신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3년에 비해 연구개발비, 인력이 증가한 반면 조직수는 거의 변화가 없어 각각 48.27%, 32.63%, 33.22%를 차지하였다. 연구개발비의 경우 2.22%p, 연구개발인력은 1.07%p 소폭 증가한 반면, 연구개발조직수는 0.01%p 감소하여 2년 전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5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52,542건이며, 등록은 22,750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2013년과 비교할 때, 특허 출원은 증가한 반면, 등록건수는 감소하였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3년에 비해 특허 출원건수는 0.01%p 증가, 등록건수는 2.05%p가 감소하여 각각 31.41%, 29.81%로 나타났다.

표 3-9-4 경기도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연평균증가율
연구 개발	연구개발비	27,309,456 (46.05)	31,032,952 (48.69)	31,839,012 (48.27)	8.0
	연구개발인력	179,708 (31.56)	193,926 (32.02)	202,267 (32.63)	6.1
	연구개발조직수	9,169 (33.23)	10,616 (33.16)	12,414 (33.22)	16.4
특허	출원	50,234 (31.40)	50,468 (30.76)	52,542 (31.41)	2.3
	등록	26,558 (27.76)	28,275 (29.06)	22,750 (29.81)	-7.4

주 : ()는 전국대비 비율임. 2016년 자료는 없음.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로 경기도의 입지적, 기능적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경기도는 우수한 인적자본을 토대로 벤처기업 수 1위(10,243개 업체, 전국의 30%), 지역 총생산(GRDP) 1위(350조 9,630억 원), 수출액 1위(1.059억 달러) 등 각종 경제활동지표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한다. 경기도의 선제적인 투자계획의 결과물이자 혁신적인 정책시스템 구축의 결과물이다. 혁신적인 도정 운영은 경기도의 가장 큰 성장잠재력이다.

선제적인 투자계획의 결과로 산업구조가 첨단지식산업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다.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기반산업(첨단지식 제조업·서비스업)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판교 테크노밸리(판교제로시티) 등의 조성을 통해 각 산업부문 간 융·복합으로 시너지를 창출하였다. 산업과 지역정책을 패키지로 추진하여 산업과 지역의 성장을 동시에 이루었다. 경쟁력 있는 기업과 인력이 자연스럽게 모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근간이 되었다.

혁신적인 정책시스템 구축의 결과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공공과 민간의 바람직한 역할을 정립하였다. ‘공유적 시장경제’와 ‘경기도 주식회사’는 경기도의 대표 브랜드로 공공자산과 민간의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이다. 혁신적인 정책도전은 도정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을 활용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도정으로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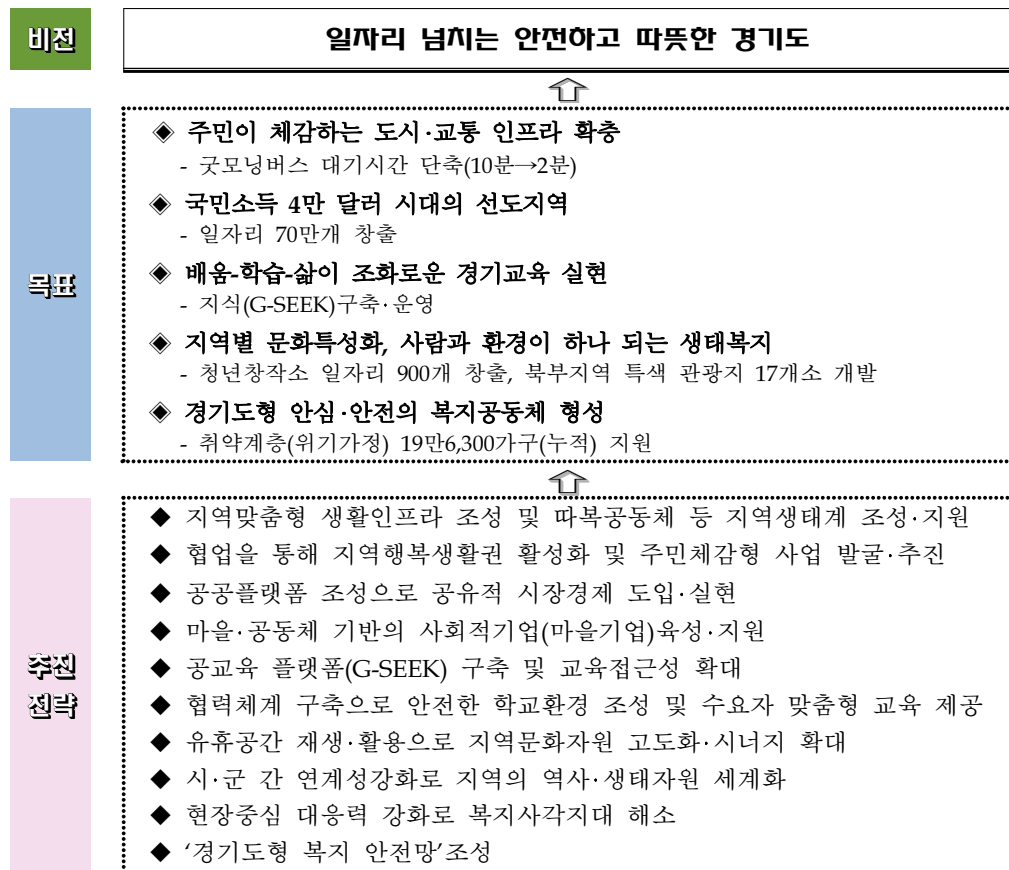
지역불균형과 사회복지지출은 경기도가 당면한 과제이다. 경기 남·북부의 GRDP비중이 각각 81.7%, 18.3%로 격차가 상당하다. 불합리한 규제와 합리화로 지역격차를 해소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경기도 내 사회적 약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아동·65세 이상 노인 등) 증가로(전국대비 경기도 비중 증가: (2010년)18.70%→(2015년)20.48%) 사회복지지출이 증대될 전망이다. 잠재성장률의 저하와 경제 불확실성의 증대, 경기도의 낮은 1인당 부가가치 등은 사회복지지출감소를 초래한다. 경기도는 지역공동체 기반의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내생적 성장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경기도의 성장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경기도는 혁신적인 도정시스템의 운영으로 새로운 시대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사고를 지양하고 경기도의 성장잠재력극대화를 통해 시너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경기도의 발전비전은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이다. 뉴노멀(New-Normal)시대의 도래와 인구구조 변화,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심화 등 거시적 환경과 높은 실업률, 낮은 1인당 GRDP, 중첩규제로 인한 지역성장잠재력 저하, 경기 남·북부 간 지역불균형 등 경기도의 당면과제해결을 위한 정책적 의지를 발전비전으로 설정하였다. 비전실현을 위해 5대 부문(생활권활성화·일자리·교육·문화·복지)의 정책 목표를 설정하여 공동체 기반의 지속가능한 지역생태계 기반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그림 3-9-1 경기도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2. 추진전략

발전비전의 실현을 위해 5대 부문의 정책목표를 설정하였다(지역생활권활성화: 주민이 체감하는 도시·교통 인프라 확충,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제고: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의 선도지역, 교육 여건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 배움-학습-삶이 조화로운 경기교육실현, 지역문화 융성·생태복원: 지역별 문화특성화, 사람과 환경이 하나 되는 생태복지, 사각 없는 지역복지·의료: 경기도형 안심·안전 복지공동체 형성).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경기도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도민의 삶 속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개선하는 문제해결형 정책을 우선 추진하여 도민들의 정책체감도를 높이는 것이다(이후, 정책체감도향상). 둘째, 지역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동체 기반의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이후, 공동체 기반 생태계 조성).

구체적으로는 ‘정책체감도향상’을 위한 전략으로 ‘(생활권)지역맞춤형 생활인프라 조성 및 주민체감형 사업 발굴·추진, (일자리)공유적 시장경제 도입·실현, (교육)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교육접근성 확대, (문화)유희공간 재생으로 지역문화자원 고도화, (복지)현장중심 대응력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한다. 대한민국에서 경기도의 선도지역으로서 역할과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간 공간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이다.

‘공동체 기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으로 ‘(생활권)따·복공동체 조성·지원, (일자리)마을·공동체 기반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교육)협력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및 수요자 맞춤형 교육제공, (문화)시·군 간 연계성장화로 지역의 역사·생태자원 세계화, (복지)경기도형 복지 안전망 조성’을 추진한다. 자생력을 갖춘 지역단위의 성장과 정책효과를 고르게 확산하기 위한 전략이다.

전거한 10대 전략은 각 영역에서 ‘경기도형’ 지역발전사업으로 구체화되었다. 경기도의 대표 브랜드인 ‘따복(따뜻하고 복된)’과 ‘G-SEEK’, ‘공유적 시장경제’등은 경기도정의 핵심가치를 대표하는 사업으로 현장중심 도정 구현, 각 계층 간 소통과 통합,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데이터기반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설계 등 각 부문의 혁신을 기초로 한 정책적 체질개선의 결과물이다.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경기도는 30개 시·군이 13개 생활권을 구성(도농연계: 4, 농어촌: 1, 수도권시범: 6, 타 시·도 연계: 2)하여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생활권을 구성하였다(2016년 12월). 13개 생활권 중 2개 생활권은 서울과 강원 등 타 시·도와 구성하여 광역적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연계·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적극적인 연계협력의 성과는 선도사업(연계협력)과 새뜰마을사업(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창조지역사업의 선정으로 이어졌다.

동북부생활권(이천·광주·여주), 서경생활권(구리·남양주·서울노원구·성북구), 인천생활권(김포·인천 서구·계양구) 등 3개 생활권에서 제안한 사업이 ‘2016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선정되었다. 2016년 생활권 연계협력의 화두는 단연 ‘일자리 창출’이다. 점(點)으로 흩어져 있는 지역자산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하여 루트를 만들고 여기에 활성화 프로그램을 덧입혀 다양한 문화향유 및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주민과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군포-의왕생활권은 넘비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빅딜을 이루어내 ‘윈-윈(Win-Win)행정’의 우수사례로 주목받았다. 군포의 ‘쓰레기처리장’과 의왕의 ‘장사시설’을 상호 개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시설 운영효율을 증대하였다. 군포-의왕생활권의 연계협력은 생활권 내로 국한되지 않고 인근의 안양-과천생활권까지 확대 개방(2016년 4월)하게 됨으로서 연계협력의 시너지를 확산하게 되었다. 생활권 간 연계협력사업의 첫 사례이다.

13개 생활권을 구성하여 생활권 활성화의 양적 확대를 이룬 경기도는 지난 3년 간 선도사업 13건(142억 원), 새뜰마을사업 4건(47억 원), 창조지역사업 6건(35억 원)을 추진하였다. 선도사업을 통해 시·군간 연계협력의 경험을 축적하여 자율적인 연계협력의 토대를 마련하고 새뜰마을과 창조지역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직접적으로 해소하였다.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을 통해 지역발전과 재생의 새로운 모델을 확립하였다.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지역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도민불편해소’, ‘협력체계구축’을 최우선순위에 두었다. 경기도에서 최초로 시행한 ‘굿모닝버스(2층버스)’운영은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입석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되었다. 현재 19개 노선에 26대가 운행하고 있다. 이용객을 대상(300명)으로 만족도 조사를 시행한 결과, 2층 버스 운영이 출퇴근 편의에 기여(79%)하고 있으며 확대 필요성(87%)이 있다고 응답했다. 대중교통 소외(취약)지역에는 ‘수요맞춤형 따복버스(택시)’사업을 추진하였다. 7개 시·군에 12개 노선 운영으로 교통서비스 형평성과 이용만족도 제고에 기여하였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생활 인프라 확충은 ‘특수상황지역 개발 지원’과 ‘개발제한구역관리사업’,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다. 특수상황지역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기반시설설치와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지역소득이 창출되도록 기획하여 현재 42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관리(시·군 1,171km² 관리)를 통해 주민의 생활편익(생활편익사업: 27개소, 환경문화사업: 11개소)과 복지(생활비용보조: 79세대)를 증진하고자 하였다.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으로 기초생활시설을 개선(13개 시·군 36개 사업)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4개 시·군)하여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자원을 융·복합(관광자원화)하여 소득이 증대되도록 하는 등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수혜가 돌아가도록 하였다.

저성장 시대의 성장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와 연계·협력사업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지역사회의 문제와 발전과제를 주민주도로 해결하고 사회적 경제를 실현하는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따복공동체조성’사업을 추진(지원센터 운영: 6대 분야 25개 사업, 따복공동체사업지원: 262개 공동체 지원)하였다. 시·군의 예산을 절감하고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도록 연계·협력 사업 발굴을 지원하였다.

경기도는 연초부터 ‘현장중심, 패키지형 관리, 도의 자문·컨설팅 역할 확대’를 전략으로 도·생활권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하였다. ‘경기도 생활권발전협의체’ 2기 구성에 도내 지역정책 전문가를 위촉하여 경기도의 생활권활성화방안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였다. ‘도·생활권(시·군)-전문가 협업체계 구축’은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이후, 최대 규모 선도사업을 발굴(8건)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경기도는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를 지향한다. 일자리 70만개 창출을 목표로 ‘공유적 시장경제’ 기반을 조성하였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였고 일자리의 양적확대에서부터 질적 개선, 지속가능성까지 담보할 수 있도록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경기도에서 최초로 제안한 ‘공유적 시장경제’는 기업 활동에 필수적인 생산요소(물류, 유통, 마케팅 등)를 공공에서 플랫폼 형태로 제공하고 민간에서 공동 이용하여 생산비용을 낮춤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개념이다.

질 좋은 일자리의 양적 확대를 위해 ‘창직(創職)·창업’이 가능하도록 공공플랫폼을 조성하였다. 아이디어와 열정만 있다면 공간, 정보, 네트워킹 등 고정 비용을 경기도에서 지원하여 초기투자비용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창업지원 플랫폼 ‘꿈마루’와 ‘G-창업허브 조성’사업으로 여성, 청년 등 예비창업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창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각각 102명의 창업자와 686개 창업업체가 탄생하게 되었다.

여성, 청년, 중장년 등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 및 일하는 방식개선을 통해 고용가능성을 제고하고 고용시장의 고질적인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10 to 4 시간제 일자리 만들기’사업과 ‘4050여성 취업 성공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일·가정 양립과 경력단절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목표로 추진된 이 사업으로 각각 9,715개의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승인되었고 5,346명이 취업 또는 창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40-50대 전직 및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참가자 중 59%가 재취업에 성공하였다.

새로운 산업부문을 육성하기 위해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였다. 공공의 자산인 빅데이터와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부가가치창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빅파이(Bic-Fi)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공공빅데이터를 민간의 빅데이터와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 역량과 결합함으로써 정책적·산업적 활용을 고도화하는 방식으로 신규비즈니스모델을 창출하고자 하였다. ‘데이터산업 생

태계 조성'사업을 통해 9개 신규사업체가 출범하였고 475명의 빅데이터 전문인력이 양성되었다.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물류유통센터'를 조성하여 공급하였다. 물류센터 부족과 비용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2016년 7월에 군포시에 개소한 제1호 공공물류유통센터에는 창업초기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57개 업체가 입주하였다. 공공의 자산을 활용하여 민간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돕는 협력적 '공유경제' 기반조성의 대표적 사례이다.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조성을 위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농림어업의 6차 산업화, 융·복합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역자원을 특화한 공동체 기반의 비즈니스로 경기도는 자립기반조성을 지원하고 도민은 자력 선순환을 도모한다.

공동체 기반 사회적 경제(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시장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사회적경제 지원센터(5개소)와 복합지원공간(3개소)을 조성하여 사회적 경제 기업의 창업, 성장, 사후관리까지 기업성장 전 단계에 걸쳐 교육, 컨설팅, 판로확보, 관계 기관과의 네트워킹 등 원스톱 지원을 수행하였다.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지원 사업'을 통해 563개 신규비즈니스가 탄생하였다. '사회적경제 시장 활성화'사업을 통해서 134개 업체가 대형마트 및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하여 판로를 확대하게 되었다.

농림어업 등 지역특화자원을 바탕으로 농림어업의 6차 산업화, 융·복합화(생산·가공·유통·관광 등을 연계)를 도·시·군 협력 사업으로 기획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지역 특화자원의 생산, 가공, 유통 단계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식품가공·체험기술 보급'과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을 시행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5개 6차산업 수익모델(딸기체험모델·푸드투어코스·유가공유통·누에테마파크·인삼명품화)이 개발되었고 농업인 소득 증대를 26%를 달성하였다.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으로 5개 지역(농촌: 4, 어촌: 1)에 유통·관광기반을 조성하였다.

경기도는 일자리 창출의 목적을 단지 지역경제성장에 국한하지 않고 도민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혁신을 통해 새로운 직업, 새로운 상품이 확산되도록 장려하는 사회구조와 시스템에 대한 정책적 기반을 조성하는데 방점을 두었다. 그 결과 2016년 한 해에만 취업자 수가 16만 5천명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경기도는 차세대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공교육을 강화하는 형태로 교육기반을 조성하였다.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재정을 확충하고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확대했다.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평생교육시스템 구축과 수요자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육접근성 확대에 주력하였다. 학교안전망 강화사업으로 안심배움터를 조성하였다.

경기도는 남·북부 간 교육격차가 상당하다. 초·중·고교 수(북부: 경기도의 27.6% 정도) 및 평생교육 기관 수(남부: 4,767개소, 북부: 1,531개소) 등 절대적 지표가 불균등해 교육격차 완화가 교육부문의 주요 이슈이다.

교육격차해소를 위해 '지식(G-SEEK) 캠퍼스 구축·운영'을 추진하였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든 교육을 필요로 하는 도민이라면 시공간의 제약 없이 교육인프라에 접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G-SEEK(G-MOOC의 새 이름)'은 기존 MOOC에서 진일보한 형태로 도민 맞춤형·참여형 콘텐츠를 개발하여 도민의 학습 참여율을 높이고 평생교육 저변을 확대하고자 한다. 2016년은 1단계(구축기)사업 기간으로 신규 콘텐츠 개발(20개)하고 기존 콘텐츠 고도화(56개)하여 G-SEEK사이트를 오픈했다.

수요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인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과 '경기 행복학습마을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각각 757개와 200개의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12만 여명과 3만 여명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두 사업을 통해 평생학습 여건 조성 및 학습만족도를 제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도내 초교 1,215개소 중 536개교(45%) 시설이 노후로 전면보수대상이었다(2016년 2월). 경기도와 교육청이 협업하여 '노후화된 학교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130개교의 학교급식기구 및 시설을 확충하고 학교시설 증개축을 완료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였다. 전술한 사업 사례와 같이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경기도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세대별·계층별 맞춤형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협력국'을 설치하였다. 관계기관과의 협력강화로 인재양성·균등한 교육기회의 비전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4. 지역 문화 육성, 생태복원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새로운 지역문화 거점으로 조성하고 공동체 기반의 문화마을 및 도시 조성, 생활체육 광장운영 등으로 지역문화육성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자 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지역자원인 DMZ를 역사·문화·생태공간으로 조성하여 세계화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舊)서울대 농생대 부지를 문화·예술공간(청년문화창작소·생생문화국·청년상상공작소)으로 조성하여 젊은 예술가들의 작업공간을 마련하고, 문화콘텐츠를 덧입혀 도민들의 문화·예술체험기회를 확대하였다. 물리적 환경을 새롭게 조성하는 것 외에도 청년문화기획자를 양성(40명)하고 청년사회적기업 프로젝트지원(119명) 등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문화 육성 및 시너지 확산에 이바지 하였다.

‘문화특화지역조성’과 ‘마을공동체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은 공동체 기반으로 생활속에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문화마을(7개), 문화도시(2개) 조성, 마을공동체 활성화(55개소), 동아리 활동(47개소), 찾아가는 작가·예술가 파견(80개소), 독서 관련 전문가자격증 취득 교육(89개소), 성과발표회 및 우수 마을 공동체 선정(10개소) 등을 추진하여 지역문화향유도 제고에 기여하였다.

‘생활체육광장운영’으로 도민이 일상적·지속적으로 생활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민의 접근성이 높은 광장을 개방하여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19개 시·군, 30개소 운영)하여 총 4,050회 운영에 9만2,826명이 참여하였다.

경기도에는 역사적·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DMZ가 존재한다. 지난 2010년 지역특화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된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은 생태자원과 경관이 잘 보전되어 있는 DMZ와 그 일원(파주·김포·연천)의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평화·생태라는 주제로 재구성하는 사업이다. 총 6개 세부사업(수리 에코타운 조성, 한반도 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 고랑포구 고호팔경 풍류촌 조성, 은대리 물거미서식지 생태보호센터 조성, 임진강 평화공원 조성)으로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DMZ일원 관광거점화 시너지 확대를 위해 ‘캠프그리브스 활용(미군반환공여지)’사업을 기획하였다. 미군반환공여지로서 역사적 가치를 보존·활용하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

5. 사각없는 지역 복지 · 의료

경기도는 ‘따뜻한 공동체’를 지향한다. ‘경기도형 공동체 복지’ 구현을 위해 복지전달체계를 재구조화 하였다.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지원대상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맞춤형 복지를 구현하기 위함이다.

정부의 복지예산이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6년도 사회복지 예산은 34조로 전년대비 4.7%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정부총지출 증가율이 2.9%인 것을 감안하면 가파른 상승이다. 매년 복지예산이 증가하고 다양한 복지정책이 추진되는 등 복지의 외연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 경기도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한 정책체감도 향상을 위해 ‘무한돌봄+(플러스)’기반의 촘촘한 경기도형 복지안전망을 조성하는데 주력하였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전달체계 구축’사업을 통해 현장대응능력을 제고하였다. 247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맞춤형 복지팀 신설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하였다. 복지인력을 확충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방문상담 강화로 복지체감도를 높였다.

‘드림스타트 지원사업’은 가정방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지원대상가정에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인적조사, 욕구조사,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등 사정 후 대상 아동과 가정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사례관리 대상 1만3,673명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 3만 3,051건을 제공하였다.

‘위기가정 긴급 현금 지원’사업은 실제로 위기를 겪고 있지만 현행 법·제도로 지원받을 수 없는 가정에 ‘선지원 후심사’원칙에 의거 신속하게 위기상황을 극복하도록 지원한다. 일시적 위기가구가 극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경기도형 복지안전망 구축 사업이다.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직접 지원함으로 위기가구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2016년에만 5만 4,582가정(긴급복지지원사업: 49,361가구,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5,221가구)을 지원하였다.

도민들에게 질 좋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사업을 시행하였다. 사회복지사의 직무역량 제고·근무환경 개선·보수격차 해소를 목표로 상해보험비·보수교육비 등을 지원하였고 2,800명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였다.

제4절 향후 추진계획 및 과제

경기도는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혁신적 시도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최대 인구규모인 경기도는 도민의 행복·안전·편의 증진과 4차 산업혁명·통일한국 시대의 선도지역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Fast Follower(추격자)’에서 ‘Fisrt Moover(선도자)’로 전략을 수정하였다.

‘지역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주민의 수요를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저출산·청년실업 등의 해결을 위해 주거복지(따복주택)를 확대한다.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동부지역에 대한 발전전략(동부지역10개년발전계획)을 수립한다.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개선을 통해 지역경제와 주민 삶의 질을 고도화한다. 특히, 북부지역에 ‘현장건설팅 제도’를 도입하여 윈스톱 규제해소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지원한다.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 간 융·복합으로 창작·창업 토대를 마련하고 맞춤형 일자리 조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유적 시장경제 모델 구현(공공물류유통센터, 판교 제로시티 조성)’과 ‘융·복합 산업생태계(미래형 첨단산업 단지 조성)’를 조성한다.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고용지원 플랫폼’ 운영을 고도화하고 지역자원을 연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발굴’노력을 지속 추진한다. 취업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고용시장의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플랫폼 ‘지식(G-SEEK)’콘텐츠를 고도화(신규콘텐츠: 50개)하여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도민 대학생 기숙사(송파학사) 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단순한 거주지 제공을 넘어서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이다.

‘지역문화융성 및 생태복원’에서도 도민밀착형 정책이 중점 추진된다. 공간접근성 향상을 위해 여러 기능이 융·복합된 생활밀착형 복합문화공간(도서관 테마파크, 콘텐츠산업 융·복합형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미세먼지 절감·실내공기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에코복지’를 실현할 계획이다.

‘사각없는 지역복지·의료’를 위해 ‘경기복지거버넌스(민·관합동)’를 활성화하여 현장 대응형·도민맞춤형 복지지원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제10장 강원도

제1절 강원도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강원도의 인구는 2013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2016년 기준 155만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국 연평균 성장률을 상회한 연평균 5.8%로 증가하여 2015년 기준 40조원을 기록하였다. 1인당 GRDP도 2,628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성장률도 5.6%로 전국 성장률을 상회하였다. 수출액은 2013년 22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16년에는 5억 달러 감소한 1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재정자립도는 27.1%로 2013년의 26.6%에 비해 0.5%p 높아졌으며, 전국 재정자립도인 52.5%에 크게 하회하였다.

표 3-10-1 강원도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강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증가율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증가율
지역내총생산 (십억원)	1,430,255	1,485,505	1,563,668	-	4.6	35,357	37,170	39,578	-	5.8
인구(천명)	51,141	51,328	51,529	51,696	0.4	1,542	1,544	1,550	1,551	0.2
1인당 GRDP(만원)	2,848	2,946	3,089	-	4.1	2,358	2,476	2,628	-	5.6
수출액 (백만달러)	559,632	572,665	526,757	495,466	-4.0	2,173	2,070	1,881	1,659	-8.6
취업자(천명)	25,066	25,599	25,936	26,235	1.5	698	711	731	743	2.1
재정자립도 (%)	51.1	50.3	50.6	52.5	0.9	26.6	26.6	25.9	27.1	0.6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이며, 2015년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 산업 현황

강원도의 산업별 비중은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82.7%, 제조업 9.3%, 광업·농림어업 8.0%로 나타나 서울, 제주에 이어 서비스업 비중이 가장 높았다.

2014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등 모든 부문에서 '식료품'의 비중이 각각 33.6%, 27.8%, 20.8%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기타 기계 및 장비' 등이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2013년과 비교해서,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식료품 제조업', '전기장비'가 다소 증가하였으며,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가 감소하였다. 종사자수 기준은 '전기장비'가 증가한 반면, '비금속 광물제품', '1차 금속', '자동차 및 트레일러'가 감소하였다. 생산액은 '음료 제조업'이 증가한 반면, 자동차 및 트레일러, '비금속 광물제품' 등 강원도 내 생산액 비중이 높은 업종 중심으로 감소하였다.

표 3-10-2 강원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3년			2014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32.8	27.7	20.1	33.6	27.8	20.8
음료	2.3	3.2	7.0	2.4	3.1	8.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4.5	4.1	2.7	3.6	4.0	2.5
비금속 광물제품	15.2	15.1	22.7	14.9	14.6	21.5
1차 금속	2.3	2.7	6.2	1.7	2.1	4.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5.0	6.2	5.9	4.9	6.2	5.3
전기장비	3.7	4.2	3.8	4.7	4.9	5.4
기타 기계 및 장비	5.2	5.4	4.2	5.1	5.2	3.8
자동차 및 트레일러	6.2	13.1	16.0	5.7	12.7	14.9

주 : 2015년, 2016년 자료는 없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2014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36.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등의 비중이 높았다. 종사자수 및 매출액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32.2%, 27.8%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도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의 업종 비중이 높았다.

2013년과 비교할 때, 사업체수 기준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다소 증가한 반면, '교육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감소하였다. 종사자수 기준은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기타 개인 서비스업',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비중이 감소하였다. 매출액 기준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이 증가하였다.

표 3-10-3 강원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3년			2014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1.2	2.5	5.7	1.3	2.6	4.5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3	3.4	6.8	1.5	2.9	5.2
부동산업 및 임대업	12.0	8.7	12.2	12.5	8.7	14.2
사업지원 서비스업	4.8	13.7	8.5	5.0	14.1	10.8
교육 서비스업	16.1	9.9	6.0	15.6	9.7	4.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3.9	31.5	27.9	14.1	32.2	27.8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13.7	13.2	22.8	13.7	13.3	22.8
기타 개인 서비스업	37.0	17.2	10.1	36.3	16.5	9.9

주 : 2015년, 2016년 자료는 없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3. 혁신활동 현황

강원도의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 연구개발비 41백억 원, 연구개발인력 10,346명, 연구개발조직수 490개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인력, 연구개발조직수 모두 2013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특히 연구개발조직수는 연평균

14.3%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2013년에 비해 115개 증가하였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3년에 비해 연구개발비, 인력이 증가한 반면 조직수는 감소하여 각각 0.63%, 1.67%, 1.31%를 차지하였다. 연구개발비의 경우 0.03%p, 연구개발 인력은 0.04%p 소폭 증가한 반면, 연구개발조직수는 0.05%p 감소하였으나, 변화폭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5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2,571건이며, 등록은 1,090건으로 2013년에 비해 특허 출원은 증가한 반면, 등록건수는 감소하였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3년에 비해 특허 출원건수 0.17%p, 등록건수 0.06%p가 증가하여 각각 1.54%, 1.43%로 나타났다.

표 3-10-4 강원도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연평균증가율
연구 개발	연구개발비	356,524 (0.60)	370,470 (0.58)	414,232 (0.63)	7.8
	연구개발인력	9,277 (1.63)	10,613 (1.75)	10,346 (1.67)	5.6
	연구개발조직수	375 (1.36)	397 (1.24)	490 (1.31)	14.3
특허	출원	2,186 (1.37)	2,441 (1.49)	2,571 (1.54)	8.4
	등록	1,315 (1.37)	1,381 (1.42)	1,090 (1.43)	-9.0

주 : ()는 전국대비 비율임. 2016년 자료는 없음.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강원도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생명·건강산업(바이오, 의료기기, 관광·문화)의 성숙기 단계로 접어들어 가시적인 성과들을 보이고 있으며 관련 인프라가 집적되어 타 시도 에 비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경제성 있는 지하자원을 바탕으로 한 소재산업의 발전과 함께 지역 대학의 풍부한 연구역량과 인력 등 다양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관광분야에 있어서는 전국 최고의 문화, 관광 환경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 최고의 주거생활 환경과 교육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라고 하는 도 역사상 최대의 빅 이벤트를 맞이하여 올림픽 경기장, 숙박시설, 접근로 확충 등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강원도는 올림픽 관련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수도권 및 전국에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기장, 숙박시설 투자에 따른 경제적 효과 16.4조원, 관광객 소비지출 등 4.7조원 등 직접적인 효과는 21.1조원이며, 이외에도 올림픽 이후 세계적인 관광지 부상에 따른 추가 관광효과 32.2조원, 국가 이미지 제고 효과 11.6조원 등 간접적 효과는 43.8조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원도의 발전 잠재력을 살리기 위한 과제로는 먼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완벽한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이다. 완벽한 준비를 위한 경기장 건설 및 접근도로 개선 등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2018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경기장 등을 비롯한 다양한 올림픽 유산을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운영계획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강원도를 세계 중심으로 도약하는 글로벌 강원경제 실현과 미래 강원을 위한 경제 신동력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강원도를 청정 농수축산물 생산 및 가공기지, 의료기기와 나노 바이오 융합, 비철금속과 신재생 에너지를 비롯한 첨단 기술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동북아시대 중심지 도약을 위한 SOC를 구축하여 확충해야 한다. 동북아 올림픽 개최 도시간 '올림픽로드'를 구축 등 대륙 연결 교통망을 확충하고 미래지향적 사업추진으로 강원도를 동북아 교통망 요충지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춘천~속초 철도, 여주~원주 철도, 원주~강릉 철도 등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동해안 크루즈 관광항 및 물류 전진기지 육성에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지속적인 투자확대와 함께 관심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지역 분권 및 지역 자율성이라고 하는 커다란 지역정책의 흐름 속에 지역발전정책의 일관성 및 지속성 유지를 위해 광역시·도 단위의 공간전략을 바탕으로 재정분권을 통해 지역 자율권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역발전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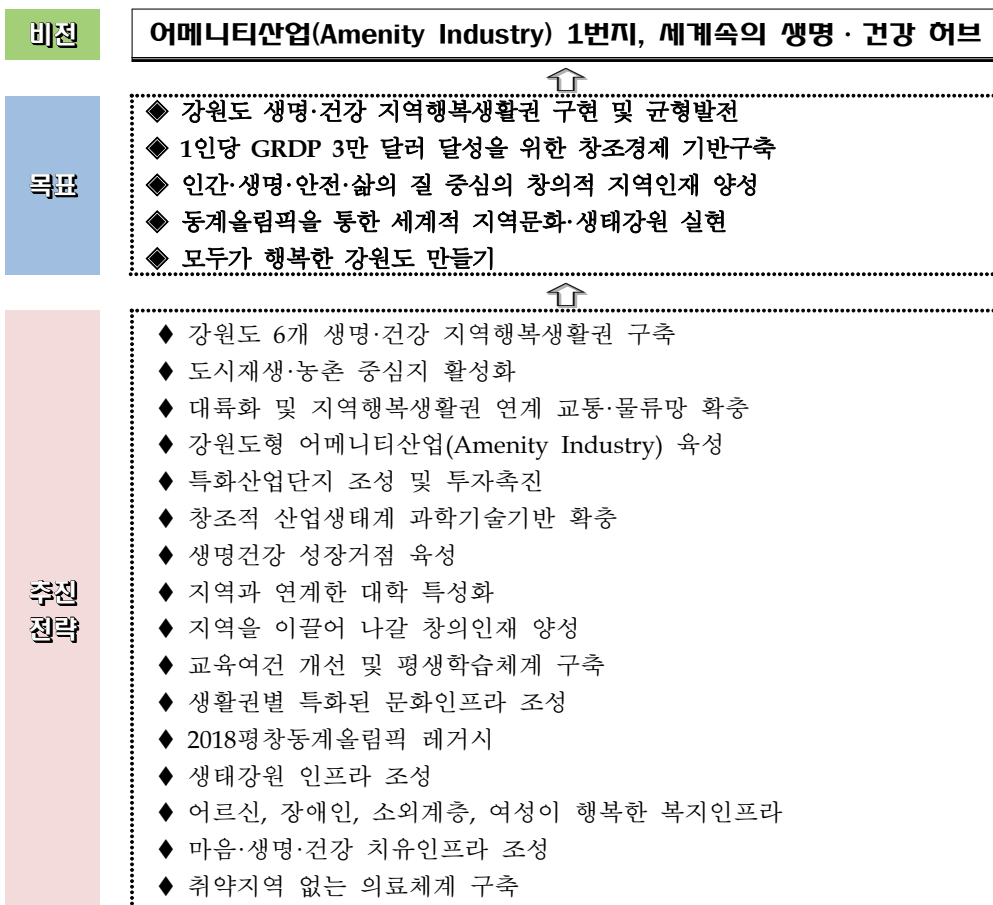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강원도는 ‘어메니티산업 1번지 세계속의 생명·건강 허브’라고 미래 비전을 설정하여 도민의 삶의 질 개선과 모두가 행복한 강원도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생명·건강 지역행복생활권 구현 및 균형발전, 1인당 GRDP 3만 달러 달성을 위한 강원도형 경제 기반 구축, 인간·생명·안전·삶의 질 중심의 창의적 지역인재 양성, 동계올림픽을 통한 세계적 지역문화·생태강원 실현, 모두가 행복한 강원도 만들기 등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림 3-10-1

강원도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2. 추진전략

강원도는 어메니티산업(Amenity Industry) 1번지, 세계 속의 생명·건강 허브라는 발전 비전을 이루기 위해 5대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먼저 지역생활권 활성화 추진전략으로는 생활권별 지역주도 협력사업 확충을 통한 지역행복생활권 구현과 주민 체감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지역중심지 활력 증진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교통·물류망 개선을 통한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 및 지역경제활성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일자리창출 중심의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강원지역 「지역산업 진흥계획」과 연계한 수출지원 및 GTI박람회 개최를 통해 도내기업의 안정적 해외진출 및 수출기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도내 이전기업 및 향토기업의 신·증설 등 투자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통한 지역투자 촉진 및 경제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취약한 기술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 지원,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학, 연구기관과 연계한 기술개발 지원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농산어촌 생산기반 확충으로 농산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을 대표하는 특화된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기업유치 및 우량 향토기업을 중점 육성하고 있다.

셋째,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 추진전략으로는 창의적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전략과 지방 초중고교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인간·생명 중심, 강원도 환경에 특화된 창의적 인재와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통한 국제적 감각향상 및 맞춤형 인재양성 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넷째, 지역문화 융성, 생태복원 추진전략으로는 지역문화 역량강화 및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생태·자연환경 보존·활용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다섯째,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전략으로는 지역밀착형 복지 전달체계 구축과 취약지역 공공의료체계 정비 및 지역 주도형 사업을 통한 취약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 보장에 주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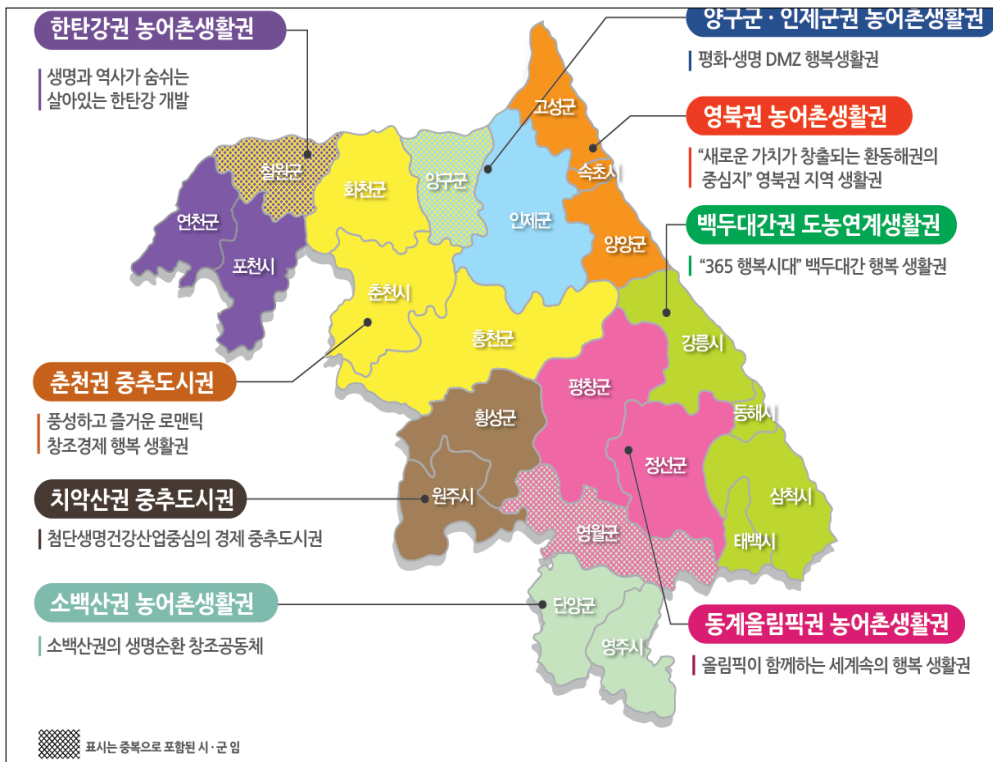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강원도의 지역행복생활권은 중추도시 생활권(춘천권, 치악산권), 도농연계 생활권(백두대간권), 농어촌 생활권(영북권, 올림픽권, 양구-인제권), 시도간 경계를 초월한 농어촌 생활권(한탄강권, 소백산권) 등 8대 생활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성과로는 선도사업(2016년도 3개 사업 52.3억 원) 및 새뜰마을 사업(2016년도 10개 사업 200.4억 원)을 통해 주민 체감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간 연계 및 협력 증진을 위한 도로정비(4개 사업 42억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31개소)등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림 3-10-2 강원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강원도는 선도사업 및 새뜰마을사업의 적극적인 발걸을 통해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권 선도사업을 매년 확대(2013년 4개 사업→2016년 11개 사업) 추진하였으며 2015년부터 추진한 새뜰마을 사업도 매년 사업을 확대(2015년 10개소→2016년 15개소) 추진하고 있다. 2015년도에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분만취약지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의 경우는 분만취약지 고위험 임산부에게 24시간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해당지역의 임산부들에게 커다란 호응을 받고 있으며 강원도의 대표적인 저출산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마을주민 주도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 창출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2013년도 85개소에서 2016년도 105개소로 확대하여 추진하였으며, 예비마을기업도 2016년도에 5개소를 추진하여 주민 주도의 지역공동체 육성을 통한 소득 창출을 도모하였다. 또한 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을 통해서는 2015년도에 32명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추가로 신규 지원자를 선정(23명)하고 총 55명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까지 연간 50명(총 200명)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시 청·장년층을 귀농인으로 적극 유치해 젊은 미래농업인 확보, 농촌인구 고령화 감소 등 근본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사업은 2014년 9개소에서 2016년도 16개소로 사업을 확대하여 상수도 미보급 면단위 시설확충을 통해 안전한 생활용수를 공급하였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2014년 2,319동→2016년 2,712동)을 통해서는 석면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공간을 조성하였다.

강원도의 남북분단 및 각종규제로 인하여 소외·낙후된 접경지역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접경지역 성장기반 조성 사업’을 통해 추진된 ‘동서녹색평화도로’는 접경지역의 열악한 접근성 개선으로 주민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며, 평화누리길 조성을 통해서는 접경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객 유치에 커다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 외에도 ‘재정비촉진사업’을 통해 도로, 공원 등 총 14개소에서 공사가 추진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도로 3개 노선이 완료되었고 8개 노선에서 일부구간 공사가 완료되었다. ‘소하천 정비사업’을 통해서는 2016년까지 1,254억 원을 투자하여 총 67.1km를 완료하여 재해예방 및 도민의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에 기여하였다.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강원도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특화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강원도 특성에 맞는 헬스케어,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도내 이전기업 및 향토기업의 신·증설 등 투자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통한 지역투자 촉진 및 경제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이와 함께 고품질·안전한 농수산물 생산과 생산비 절감, 생산성 향상 기반구축을 통해 강원도의 경쟁력을 제고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력 및 경제협력권사업으로 지역산업을 개편(2014년)하여 통합 집중 지원하여 2014년 매출액 2,950억 원, 신규고용 848명에서 2015년도 매출액 6,906억 원, 신규일자리 970명을 달성하였다. 이와 함께 지역특성화사업(2016년도 수출기업 24개, 수출 증가율 154%), 사회적기업육성사업(2014년 560개→2016년 587개)을 추진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통해 총 8,437명(2014년도 3,497명, 2015년도 2,521명, 2016년도 2,41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산업단지와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도시로 조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사업인 '지역거점조성지원사업'을 통해 입주기업 생존율(2014년도 87.7%→2016년 88%)이 증가하였으며, 혁신도시 이주비율(81%), 용지분양률(98.7%)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농업의 생산기반 확충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는 과수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해 2016년도 29억 원의 취급액을 달성하였고, 농기계 임대사업(2016년 46개소, 이용률 66.9%), 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을 통한 고용창출(2014년 689명, 2015년 676명, 2016년 715명)등을 통해 강원도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이와 함께 향토산업 매출액이 크게 증가(2014년 42,300백만 원→2016년 86,369백만 원)하였으며, 고용창출도(2014년 591명→'16년 607명) 증가하였다.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을 통해 매년 일자리 창출 증가율(2014년 14.2%, '15년 25.5%)이 향상되었으며,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을 통해서도 수산물 생산·가공·전시 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매출액 및 고용인원이 증가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을 통해서도 어촌체험마을 체험객수('14년 86,864명→'16년 174,614명)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어업기반정비사업을 통해 일자리가('16년도 150명) 증가하였다. 이외에도 산림경영자원육성사업('16년도 117% 증가), 산림휴양녹색공간 조성사업 일자리 창출 234명('14년 99명, '15년 68명, '16년 67명)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지역을 위해 공헌하는 인간생명 중심의 창의적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 및 농산어촌 초중학교 학습여건 개선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였다. 또한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강원도 자체사업과 글로벌 마인드 함양 사업을 통해 강원도에 필요한 창의적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였다.

사업별 성과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을 통해 작은학교 특색 교육과정 운영('16년도 초154교, 중 51교), 작은학교 교수 연구회 운영(17개), 지역협의회 구성 및 현장지원 컨설팅단 운영(17청 354명)을 추진하였다.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 지원사업으로 도내 공·사립학교 350교 중 348교에서 오후돌봄교실(326실)을 운영하였으며, 저녁돌봄(11실)과 방과후 학교 연계형 돌봄 교실(292실)을 운영하여 초등학교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자녀의 돌봄 지원을 통한 전인적 성장 발달에 기여하였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 취업역량 강화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 기능인재 육성을 위해 마이스터고 2교에 강원도형 마이스터고 8교를 운영 지원하였으며, 취업지원센터 운영(도교육청 및 특성화고 24센터), 강원인재 취업페스티벌(34교), 기능인재 추천제(34교)등을 운영하였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초·중·고생)를 대상으로 국제문화 이해와 실용영어 습득기회를 제공하는 '글로벌 마인드 함양사업'을 통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240명을 선발하여 필리핀 어학연수 및 어학 봉사활동 참여를 지원하였다.

초·중·고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사업(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432교)을 통해 국제화 시대에 부응한 회화 중심 외국어교육을 확대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제문화에 대한 이해 및 어학능력을 향상시켰다. 이와 함께 2004년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강원청년지도사 과정 운영지원을 통해 지역별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총 751명(2004년~2016년)의 청년지도자를 양성하였으며,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매년 30명)을 통해 행정기관 근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였다.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강원도 자체사업인 도내 고교출신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을 통해서 도내 14개 대학 소득분위 5분위 이하 재학생 7,078명에게 총 3,032백만 원 장학금을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도내 고교 출신 도내 대학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완화를 통하여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도내 고교 출신자의 도내 대학 진학을 확대를 도모하였다.

4. 지역 문화 육성, 생태복원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실현하기 위해 각 시·군이 가지고 있는 특화자원 및 지역 문화자원을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문화격차 해소를 통한 주민 삶의 질 개선에 위해 지역 간 균형 있는 문화시설 조성을 추진하였으며 영화관 및 도서관이 없는 시·군에 작은영화관 및 도서관을 조성하였다. 사업별로 성과를 살펴보면 먼저 지방문화산업 기반 조성사업을 통해 2014년 이후 5개의 작은영화관이 개관하였으며, 방문자수도 2014년 58천명에서 2016년 650천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시·군별 균형 있는 문화시설 확충사업(문예회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을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2014년 5,610명→2016년 5,660명)하였으며 관람객 수도 2016년도에 895천명에 달하였다.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추진된 인제군의 경우 2016년도에 스포츠대회 30개, 인원 39천명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61.4억 원에 달하였으며, 동해시 웰빙스포츠타운 조성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20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관광자원개발 사업을 통해 2016년도 일자리 351명이 창출되었으며, 산업관광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도 신규고용창출(15명)이 이루어졌다. 또한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소재 유·무형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전승·활용으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문화관광자원화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였다.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을 통해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에 생태자원을 연계하는 탐방로 5개소가 구축 완료하였으며 추가로 5개소(화천, 횡성, 동해, 홍천, 정선) 사업이 7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습지 등 환경적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 사업을 통해 총 314천명(2014년 33천명, 2015년 35천명, 2016년 246천명)이 방문하였다. 생태놀이터 조성 사업을 통해서도 녹지공간이 부족한 도심 내 자연생태 및 친환경 놀이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어린이 등 지역주민들에게 자연형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으며(총 3개소),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사업을 통해 철원, 횡성, 양구, 영월, 삼척 등 지금까지 총 7개소의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을 확충하였다.

치수사업 시행이 필요한 하천에 대한 체계적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지금까지 총 102.4km, 3,097억 원을 투자(2014년 989억 원, 2015년 1,101억 원, 2016년 1,007억 원)하여 재해예방 및 도민의 안정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강원도만의 지역밀착형 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취약지역 공공의료체계 정비 및 지역주도형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인프라·서비스 확대 및 농촌고령자를 위한 공동시설지원, 청소년 시설확충,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자활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전달체계구축(동 주민센터, 희망복지지원단) 및 복지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위해 지역별, 가구별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사업(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산모 신생아 도우미사업,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사업) 포괄보조 확대를 실시하였다.

주요 사업에 대한 성과를 보면 지역사회 복지사업의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 지역내 복지 서비스간 민·관 연계·협력을 담당하는 핵심 인프라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복지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해 전 시·군에 사무국 직원 배치 지원되었다.(2013년~2016년 540백만 원, 시·군당 30백만 원). 고용 취약계층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자율성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통해서는 이용자 증가율(24.1%), 제공기관 증가율(18.3%), 제공인력 증가율(7.4%)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주민 정신건강 지원확대사업을 통해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확대(2014년 14개소→2016년 16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건강플러스마을 참여마을 수도(2014년도 5개소→2016년도 13개소) 크게 증가하였다.

국공립·사회복지법인 등 어린이집 증축·개축, 개보수 및 장비비 지원을 통한 보육서비스 제공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확충사업을 통해서는 2016년도까지 어린이집 증개축(2개소), 어린이집 개보수(18개소), 어린이집 장비보강(16개소)이 완료되었다. 이외에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도 (2014년도 10개소→2016년도 16개소)로 확대 추진되고 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의료서비스 강화사업인 의료취약지 인프라 설치 및 지원을 위한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통해서는 매년 분만취약지 1개소를 해소하고 있으며 '16년도에도 분만산부인과(2개소), 외래산부인과(4개소)를 지원하였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을 통해 취약지 지역응급의료기관 법정기준 충족(총 11개소 중 9개소), 취약지 원격협진 추진 참여기관(2015년 7개소→2016년 17개소), 협진건수 총 22건의 성과를 달성하여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다.

제4절 향후 추진계획 및 과제

강원도의 2016년 도정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강원도를 방문할 내·외국인 맞이 준비에 매진하였으며, 미래 100년 강원경제를 위한 경제구조 개편 및 18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발전 시책 추진에 주력한 한해였다. 2017년도는 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한 마지막 기회로 문화올림픽 준비와 세계에 강원도와 평창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 하는 결정적 시기를 맞이하여 강원경제 부흥을 위한 주요 경제정책 추진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할 것이다.

강원도는 2016년도 1인당 GRDP 목표치인 26.7백만 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7년도에도 3.5% 증가한 27.7백만 원을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타 시도와의 차이는 아직 크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2차 산업의 비중확대와 함께 1, 2, 3차 산업이 함께 경쟁력을 갖추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강원도 특성에 맞는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창의적 지역인재를 양성하여 타 지역 유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역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이와 함께 세계적 지역문화·생태강원 실현을 통한 모두가 행복한 지역문화 육성을 위해 도 대표 문화공연 및 문예축제, 도민의식을 국제적 수준으로 육성하고 시·군별로 대표 문화·예술 공연, 문화프로젝트 및 축제·이벤트 등을 개최할 것이다.

강원도 18개 시·군과 연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성 높은 정책을 추진하고 강원도형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이와 함께 1인당 GRDP 3만 달러 달성을 위해서 제조업 비중 확대와 함께 1, 2, 3차 산업이 융·복합된 6차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강원도형 경제 기반을 구축할 것이다.

강원도의 도정 목표인 행복 2배를 달성하기 위해 강원도가 가장 취약한 분야인 의료·복지의 공공서비스를 개선하여 도내 18개 시·군 모두가 행복한 삶의 터전으로 육성하여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저출산 관련 의료·복지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2017년을 저출산 극복 원년의 해'로 정하고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할 것이다.

이와 함께 복지·보건·의료·고용·주거 등을 연계 협력하는 지역밀착형 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공적 서비스 확대 등의 시책을 추진할 것이다. 강원도는 2017년도에도 지역경제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세밀하고 정교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제11장 충청북도

제1절 충청북도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충청북도의 인구는 2013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2016년 기준 159만 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국 연평균 성장률을 상회한 연평균 5.1%로 증가하여 2015년 기준 52조원을 기록하였다. 1인당 GRDP도 3,34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성장률도 4.8%로 전국 성장률을 상회하였다. 수출액은 전국적으로 감소세를 이어나갔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은 160억 달러를 넘어섰다. 재정자립도는 35.2%로 2013년의 34.2%에 비해 1.0%p 높아졌으나, 전국 재정자립도인 52.5%를 크게 하회하였다.

표 3-11-1 충청북도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충북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증가율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증가율
지역내총생산 (십억원)	1,430,255	1,485,505	1,563,668	-	4.6	47,402	49,791	52,364	-	5.1
인구(천명)	51,141	51,328	51,529	51,696	0.4	1,573	1,579	1,584	1,592	0.4
1인당 GRDP(만원)	2,848	2,946	3,089	-	4.1	3,041	3,181	3,340	-	4.8
수출액 (백만달러)	559,632	572,665	526,757	495,466	-4.0	13,735	14,196	15,210	16,004	5.2
취업자(천명)	25,066	25,599	25,936	26,235	1.5	776	810	828	830	2.3
재정자립도 (%)	51.1	50.3	50.6	52.5	0.9	34.2	33.6	34.8	35.2	1.0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이며, 2015년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 지역산업현황

충청북도의 산업구조는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52.3%, 제조업 43.0%, 광업·농림어업 4.7%로 나타났다.

2014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식료품'이 14.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금속가공제품' 등 순이었다. 종사자수 및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가 각각 20.7%, 23.2%로 나타나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식료품',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등 순이었다.

2013년과 비교할 때,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금속가공제품'이 다소 증가한 반면,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비금속 광물제품'은 감소하였다. '전기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는 종사자수 및 생산액 기준 모두 증가하였고, '식료품'은 종사자수 비중은 증가하였으나, 생산액은 감소하였으며, '비금속 광물제품'은 생산액은 큰 변동 없이 종사자수 비중이 감소하였다.

표 3-11-2 충청북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3년			2014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14.2	12.3	12.7	14.4	13.3	12.5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7.6	6.9	9.1	8.0	7.0	8.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2.3	3.3	4.2	2.4	3.4	4.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13.3	9.8	7.2	12.8	9.7	7.2
비금속 광물제품	7.8	5.8	5.3	7.3	5.2	5.2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 제외)	10.5	6.4	4.5	10.9	6.3	4.4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5.9	21.0	23.2	5.6	20.7	23.2
전기장비	6.6	7.4	8.1	6.8	7.9	8.7
자동차 및 트레일러	5.8	7.0	7.4	6.2	7.4	8.2

주 : 2015년, 2016년 자료는 없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2014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는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35.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수 및 매출액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32.8%, 32.2%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교육 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의 업종 비중이 높았다.

2013년과 비교할 때, 사업체수 기준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증가한 반면, '교육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감소하였다. 종사자수 기준은 전반적으로 업종별 비중 변화가 크지 않았으며,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반면, '교육 서비스업'은 감소하였다. 매출액 기준은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이 증가한 반면, '부동산업 및 임대업', '교육 서비스업'은 감소하였다.

표 3-11-3 충청북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3년			2014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1.4	2.9	8.6	1.5	2.9	9.1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3	2.4	4.8	1.3	2.1	4.4
부동산업 및 임대업	12.1	9.3	17.8	12.9	9.3	15.7
사업지원 서비스업	5.6	16.7	10.8	5.8	16.9	11.4
교육 서비스업	16.6	11.2	8.5	16.1	10.4	7.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4.1	31.8	30.0	14.5	32.8	32.2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13.2	9.0	7.5	12.8	8.9	7.4
기타 개인 서비스업	35.6	16.8	11.9	35.2	16.7	11.8

주 : 2015년, 2016년 자료는 없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3. 혁신활동 현황

충청북도의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 연구개발비 1.4조원, 연구개발인력 16,910명, 연구개발조직수 1,233개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조직수 모두 2013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연구개발인력은 큰 변화가 없었으며 2014년과 비교했을 경우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3년에 비해 연구개발비는 증가한 반면, 연구개발인력과 연구개발조직수는 감소하였다. 연구개발비의 경우 0.3%p 증가하였으며, 연구개발인력은 0.23%p, 연구개발조직수는 0.22%p 감소하여 각각 2.09%, 2.73%, 3.30%로 나타났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5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3,440건이며, 등록은 1,431건으로 2013년에 비해 특허 출원은 증가한 반면, 등록건수의 감소하였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3년에 비해 특허 출원건수 0.32%p, 등록건수 0.08%p가 증가하여 각각 2.06%, 1.88%로 나타났다.

표 3-11-4 충청북도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연평균증가율
연구개발	연구개발비	1,059,810 (1.79)	1,253,947 (1.97)	1,379,741 (2.09)	14.1
	연구개발인력	16,868 (2.96)	18,872 (3.12)	16,910 (2.73)	0.1
	연구개발조직수	971 (3.52)	1,052 (3.29)	1,233 (3.30)	12.7
특허	출원	2,776 (1.74)	3,226 (1.97)	3,440 (2.06)	11.3
	등록	1,718 (1.80)	1,854 (1.91)	1,431 (1.88)	-8.7

주 : ()는 전국대비 비율임. 2016년 자료는 없음.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충청북도의 실질경제성장률(2015년 기준)은 4.16%로 전국평균 2.82%에 비해 무려 1.34%p가 높아 전국 2위를 기록하였고, 전국대비 충북경제는 2010년 3.12%에서 2015년 3.43%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제천 한방, 충주 당뇨, 옥천 의료기기, 괴산 유기농 등 지역별로 특성화된 바이오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해 세계 3대 바이오밸리 허브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기반을 통하여 전국대비 충북경제 4% 실현에 다가서고 있어 앞으로도 지역 성장거점을 바탕으로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 및 일자리 창출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국내 5대 공항으로 입지를 굳힌 청주국제공항 및 국내 주요 거점 철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오송역의 발전으로 충북이 글로벌 신교통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최근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청주국제공항의 중국인 이용객 수 급감에 따른 노선 다변화 등 대책 마련 및 세종, 대전, 충남 등 주변 도시와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체계 구축을 통한 상생발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의 전체 인구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여 도민에게 기회와 희망을 안겨주었으나, 청주시의 인구가 충북 전체 인구의 52.5%(2016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어 청주권과 비청주권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창조지역사업 등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생활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전반적으로 농촌생활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관광객수는 2014년 11,505천명, 2015년 18,282천명, 2016년 20,606천명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및 무예올림픽 창건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 대회 등을 추진하면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충북을 명실상부한 세계무예의 성지로 키워나가고,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을 한중 교류의 교두보로 자리매김하는 등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충북의 합계 출산율은 1.41명(2015년 기준)이며,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은 15.12%(2016년 기준)로 나타나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지역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복지지출 부담 증가 및 지역경제 활력 저하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발굴·추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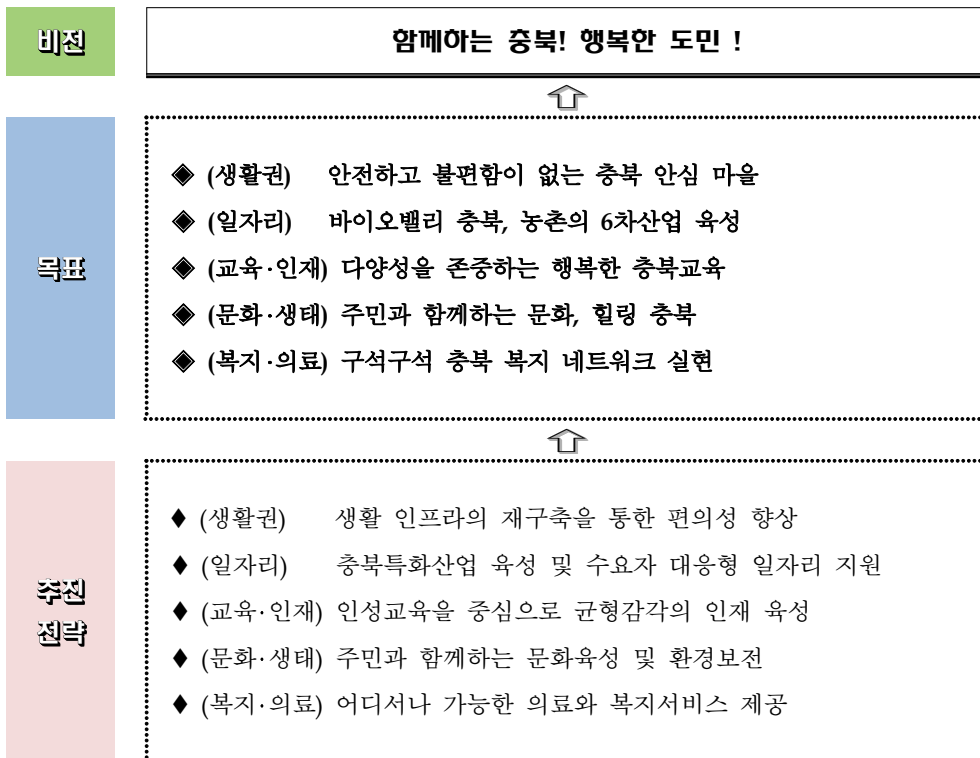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충청북도는 160만 도민과 함께하는 도정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최고의 가치인 도민 행복시대를 실현해 나감은 물론, 신수도권시대, 영충호시대의 리더로서 충북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국민 화합시대를 충북이 선도하고자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발전비전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는 충북 안심 마을’, ‘바이오밸리 충북, 농촌의 6차 산업 육성’,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 힐링 충북’, ‘구석구석 충북 복지 네트워크 실현’이라는 5대 목표와 도정운영방향을 설정하였다.

그림 3-11-1

충청북도의 발전 비전 및 목표



2. 추진전략

충청북도는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이라는 발전 비전 및 5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생활 인프라의 재구축을 통한 편의성 향상', '충북특화산업 육성 및 수요자 대응형 일자리 지원',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균형감각의 인재 육성', '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육성 및 환경보전', '어디서나 가능한 의료와 복지서비스 제공'의 5가지 추진 전략을 마련하였고, '충북경제 전국대비 4%를 통한 영충호 시대의 리더 실현'을 2016년 성과목표로 설정하였다.

첫 번째 전략인 '생활 인프라의 재구축을 통한 편의성 향상'을 위한 세부 시책으로 ①도시 활동의 역동성 제고, ②안전하고 균형 있는 생활 인프라 확충, ③지역 주도의 협력 강화를 통한 상생발전, ④편리한 종합 교통체계의 구축 등을 통해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는 충북 안심 마을을 조성하고자 한다.

두 번째 전략인 '충북특화산업 육성 및 수요자 대응형 일자리 지원'을 위해 ①지역 주도의 일자리 창출 전략 수립, ②기업의 투자유치 여건 개선, ③산업단지의 창조지구로의 진화, ④지역과학기술의 혁신체계 구축, ⑤매력 있고 고급화된 관광인프라 구축, ⑥성장 거점을 이용한 파급효과 창출, ⑦농식품의 6차 산업화를 통해 침체된 농촌의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실현하고자 한다.

세 번째 전략인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균형감각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한 세부시책으로 ①실용교육,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 ②창조경제를 견인할 대학우수인재 육성, ③기업 밀착형의 인재육성 공급, ④평생교육 도시 여건 마련 등을 통해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고자 한다.

네 번째 전략인 다함께 누리는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 육성 및 환경 보전'을 위해 ①지역에 특화된 문화 자원을 이용한 문화기반 구축, ②문화참여기회의 확대, ③인간과 자연환경의 조화 등을 통해 주민 생활 속의 문화·힐링 충북을 조성하고자 한다.

마지막 전략인 사각지대 없는 '어디서나 가능한 의료와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부시책으로 ①주민 맞춤형 복지 추진을 통한 모범적인 충북 건설, ②서비스 개선을 통한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하고자 하며, 이를 통하여 구석구석 충북 복지 네트워크 실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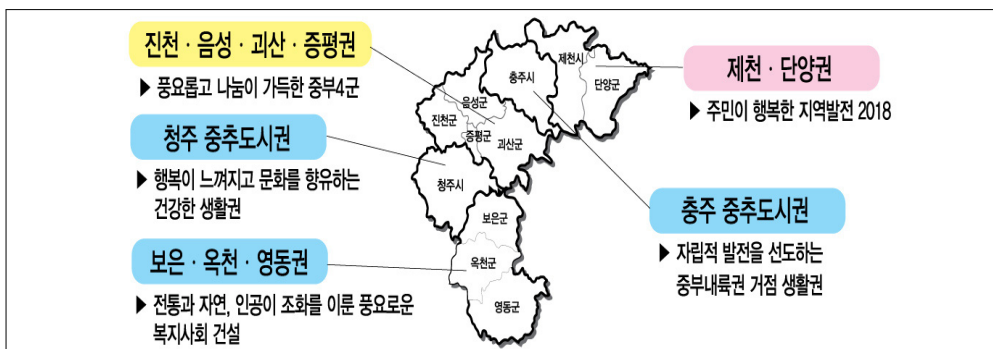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지역행복생활권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5+3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2014년 2월 14일), 청주권 등 5개 생활권별 MOU 체결을 완료(2014년 3월 11일)하고, 충청북도 발전계획 수립(2014년 8월) 및 도내 5개 생활권별 시·군 발전계획 수립(2014년 12월)을 완료하였다. 또한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지역발전, 일자리, 교육·문화, 복지 등 8개 분야 민·관 전문가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 충청북도 생활권발전협의회를 구성(2014년 4월 7일)하여, 도의 발전 및 생활권 관련 협의·조정 기능 및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그리고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 생활권협의체 공동협약식(2015년 6월 25일)을 개최하였다.

그림 3-11-2 충청북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선도사업은 총 18개, 10,208백만 원을 투입하여, 항공인프라 활용 ‘비상의 꿈’ 프로젝트(223백만 원), 당뇨바이오 치유벨트 조성(1,841백만 원), 글로벌 꿈나무 창의공작소(958백만 원) 등을 추진하였으며,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새뜰마을 사업은 총 14개, 5,860백만 원을 투입하여, 보은군 내북면 세촌리(578백만 원), 괴산군 청천면 관평리(651백만 원) 마을에 슬레이트 지붕개량, 상수도 보급, 주택정비 등을 추진하였다.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해 추진하는 창조지역사업은 총 8개, 1,574백만 원을 투입하여, 금강 따라 걷는 삼도삼미삼락(150백만 원), 한국형 창조농업개발사업(160백만 원) 등을 추진하였다.

표 3-11-5 선도사업 연계·협력 프로젝트 현황 및 성과(2016 신규)

(단위 : 백만원)

권역	사업명	사업비(2016년)	주요성과
청주권	항공인프라활용 '비상의 꿈' 프로젝트	223	항공우주체험 프로그램 운영
충주권	당뇨바이오 치유벨트 조성	1,841	당뇨힐링센터 리모델링 설계 및 시스템 구축
충부권	글로벌 꿈나무 창의공작소	958	창의융합교육프로그램 개발
대전권	식품파일럿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818	식품파일럿플랫폼 설계 및 청년창업지원
소백산권	소백산권역 3도접경 상수도 설치사업	1,250	상수도 설치 실시설계용역 추진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충청북도는 지역주도 협력사업 확충 및 지역중심지 활력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귀농귀촌 정착지원을 위해 상생대책 추진단을 운영하여, 귀농귀촌인 31,052명을 유치하였고, 현장포럼 38개소,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평가 A등급 등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통해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를 수행하였다. 또한 지역행복생 활권 협력사업 신규 5건을 포함해 총 18건, 창조지역사업 신규 3건을 포함해 총 11건 추진을 통해, 지역 주도의 협력 강화를 추진하였다.

주민 체감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해 상수도 시설 확충,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슬레이트 지붕 철거지원 등을 실시하였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28,137백만 원을 투입하여 32개소에 사업을 추진하여 하수도 보급률 85.7%를 달성하였고, 상수도 시설 확충 및 관리사업을 통하여 상수도 보급률은 2014년 87.6%에서 2016년 90.2%로 증가하였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지원사업으로 2016년에 2,259동을 지원하였고, 취약지역생활여건개선사업으로 신규 6건 포함 총 14건을 추진하여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집수리 등 주민이 실 거주하는 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편익이 증대될 수 있었다.

아울러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위한 시골마을 행복택시를 150개 마을을 대상으로 총 75,821회를 운행하여 99,928명이 이용하였고, 저상버스 10대, 특별교통수단 6대를 추가 도입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를 증진하였다. 어린이 보호구역 9개소 등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13개소 추진, 위험도로 10개소 구조개선을 통하여 교통사고 취약지역의 근원적인 위험요인 개선으로 보행자 안전성 확보 및 사고 예방에 기여하였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및 생활환경을 조성하였다.

지역 교통·물류망 개선 부문에서는 청주국제공항 이용객수가 2014년 170만 명에서 2016년 273만 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고속철도 오송역 이용객은 503만 명을 돌파하는 등 신수도권 시대의 교통·물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다. 청주국제공항은 중국 닝보 정기노선을 개설하고 일본 삿포로 부정기노선을 운항하는 등 국제선 운항편수 또한 4,409편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개항 19년 만에 첫 흑자를 달성하는 등 중부권 거점공항 및 전국 5위 공항으로 위상을 제고하였다. 고속철도 오송역은 수서고속철도(SRT)가 개통됨에 따라 정차횟수가 66.1% 증가하였고, 앞으로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중부고속도로 확장, 동서 5축(옥산~오창 공사중, 오창~안동 기본조사용역완료), 6축(평택~음성~충주~제천 개통) 고속도로, 세종시 연결도로(세종~청주, 세종~남청주IC 개통),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예비 타당성대상사업 선정), 천안~청주공항복선전철사업 등도 원활히 추진될 예정으로, 충북은 국토교통망 X축 구축을 통한 신수도권 시대의 교통·물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다.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충청북도는 세계적인 바이오밸리 조성 등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통한 충북 경제 전국대비 4% 구현 및 농촌의 6차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농가 소득의 증대 기회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다.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 대표 산업 육성 부문 관련해서는 지역특화산업 육성(주력산업육성) 사업으로 바이오의약, 반도체, 태양광, 전기전자부품, 동력기반기계부품 등을 5대 주력산업으로 선정하여, R&D형 과제 46개, 비R&D형 과제 24개, 거점기관운영지원사업 5개 과제 등 총 75개의 과제를 추진하여 452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였다. 경제협력권사업으로는 화장품뷰티, 이차전지, 의료기기 등 3개 협력분야에

비즈니스협력형 과제 25개, 지역주도형 과제 16개 등 총 41개 과제를 선정하여 145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였고, 그 중 정규직 비중은 94.5%로 나타났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으로는 281명,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통해 90,258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오송화장품 뷰티산업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로 충북이 K-뷰티의 중심지임을 입증하였는데, 2016년에 참가기업 197개사, 바이어 1,080명, 수출상담 2,235건, 수출계약 추진 457건, 1,328억 원을 창출하였다. 그 밖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일자리 456명, 사회적기업육성 사업으로 430명을 창출하고, 인증 기업수는 78개로 증가하였다. 1인당 지역내 총생산(GRDP)은 2014년 31,810천원에서 2015년 33,395천 원(2016년은 집계 중)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수출실적은 2014년 142억 달러에서 2016년 160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산업단지 고도화를 통한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11개 산업단지에 진입도로를 추진하였고, 지역거점조성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산업단지 공업용수 가동률은 2016년 66%, 산업단지 분양대상면적 대비 분양률은 88%를 나타냈다. 진천 산수 산업단지 등은 외국기업과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25개사, 16,604억 원)하였고, 115개소(72,333천 m²)에 투자유치 촉진 산업단지를 조성 중이다. 지역기반 연구 활성화를 통한 창조경제 지역 확산 부문에서는 지역혁신생태계 구축 지원사업으로 정부부처 및 지역 유관기관, 전담기업(LG) 간의 유기적인 협업관계를 완성하는 등 창조적인 산업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였고, 취업박람회, 잡매칭데이, 청년 채용의 날 등의 기획을 통하여 315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등 청년 고용을 촉진하였다. 지역성장 거점도시 조성 부문에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으로 SB플라자는 건립 착공에 들어갔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으로 우수 연구개발기관 7개 업체 유치 및 원형지 개발사업 공정률 97% 달성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바이오인프라 확충 노력을 경주하였다.

농산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으로 충주 송강, 제천 방학, 영동 괴목 등 3개 지구에 87ha 기반정비를 완료하였고,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D등급 저수지를 17개소로 감소시켜 재해위험도를 낮췄다. 친환경농업지구 2개소(3,607ha)를 조성하여, 도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과 농가수는 2015년 대비 각각 18.3%, 23.9% 증가한 3,607ha, 4,018호로 나타났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사업으로 방문객수 381천명, 매출액 4,885백만 원,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으로 향토산업육성 1개소 및 친환경채소 가공식품산업과 사슴산업광역클러스터를 육성하였고, 이를 통하여 참여농가 농산물 매출은 전년대비 36%가 증가하였다.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에 의한 수산식품 생산량은 2,656톤, 판매액은 226억 원, 어업기반 정비사업에 의한 내수면 생산량은 2,606톤, 소득액은 226억 원을 나타내 어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산림 관련해서는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으로 방문객수가 2015년 15,894명, 2016년 13,626명을 나타냈고,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도시숲, 수목원 및 박물관, 생태숲, 숲길 조성 및 관리 등 산림휴양녹색공간 조성사업을 실시하여 수혜인원이 326천명에 이르렀다. 기본 임도밀도는 2015년 2.82m/ha에서 2016년 2.91m/ha로 증가하였고, 임도이용객 수는 목표인 26,348명을 훨씬 초과한 51,210명으로 나타났다.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6개 시·군 96개소에 백두대간 지역 임산물 저장·생산시설 조성을 완료하였고, 산림 관련 사업을 통하여 산림복지공간 확충 및 산림자원을 통한 소득 증대 기회를 확대하였다.

한편 충북은 바이오산업 생산액 증가(2020년 2조 2천억 원), 화장품 산업 생산액 증가(2020년 5조 3천억 원), 바이오 수출 선두 기업 육성(수출액 2020년 5,000억 원), 글로벌 화장품기업 경쟁력 강화(수출액 2020년 1조 3,918억 원)를 주요 목표로 세계적 바이오밸리 조성을 위하여 도정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바이오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오송임상시험센터를 건립(2016~2019년)하고, 고위험병원체특수연구센터(2015년 12월),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2016년 4월) 등 바이오메디컬 시설을 건립하였다.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는 공정률 98%를 나타내고 있고, 바이오밸리 인력양성 산학융합지구는 2015년 3월 준공하였다. 오송 생명과학단지에는 61개 기업이 입주하여 본격 가동 중이고, 제2생명과학단지도 59개 업체가 입주 계약을 한 상태이다.

‘세계적인 바이오밸리 조성’을 위해 충주는 당뇨바이오 특화도시를 선포(2015년 5월)하였고 제천은 글로벌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을 구축 중(공정률 65%)이다. 옥천은 351,661㎡에 의료기기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고, 2017 제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는 2015년 7월 국제행사 승인을 받은 이후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또한 새로운 100년 먹거리를 위하여 화장품 뷰티산업을 육성 중인데 해외 바이어 초청 화장품·뷰티 무역상담회를 개최(3회)하였고, 화장품 임상연구지원센터를 2016년 12월 완공하였다. 화장품 수출 진흥을 목적으로 한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는 매년 개최되고 있는 중이다.

그 밖에 유기농 특화도 위상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는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2015년 9월 108만명, 264개사 참여, 학술행사 19회 개최, 유기농 3.0

괴산 선언)하였고,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4개소, 유기농업단지 26개소를 조성하였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6,499호를 지원하였고, 충북 유기농업연구소 및 유기농생태체험관을 건립하였다.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맞춤형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 학교기업 지원, 대학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도출하였다.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특성화 사업단 기반 구축, 학사구조 개편, 정원 감축 등을 추진하였고,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을 위해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학위, 비학위 통합교육과정 개발, 블록식 다학기제를 도입·운영하였다. 또한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 사업으로 3개 대학에 275백만 원을 지원하여, 산학협력을 통한 기업과 대학 간 맞춤형 인재양성 9,017명, 기술지도 239건, 기술이전 110건을 추진하였다. 우수인재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기업 맞춤형 창의 인재양성을 통한 취업 연계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일과 학습 병행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역특성화고 26개교 중 학교기업 8교를 선정하여 운영비 36,000천원을 지원하였고, 창업동아리 축제에는 6개교가 참가하였다. 기업체험 프로그램 운영면에서는 참여학생 120명을 목표로 계획하여 총 128명이 참여하여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였다. 이를 통하여 지역 여건과 산업수요에 맞는 대학 체질을 개선하고 현장 적합성 높은 전문기술 인재 양성 및 산학협력 선도모델 발굴·확산으로 지역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100세 시대 주민을 위한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대학과 연계된 평생교육지원 4개교, 평생학습중심 대학 4개교 지원을 하였고, 327명 이수, 160명 자격취득, 6명 취업이라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시·군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도내 10개 시·군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을 하였고, 501명 이수, 257명 자격 취득, 30명 취업을 하였다. 이를 통하여 중·장년층의 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및 사회공헌 확대를 위한 제2차 학습기회를 보장하였다.

4. 지역 문화 육성, 생태복원

지역에 특화된 문화·생태 자원을 이용한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및 건강한 생태·자연환경 보존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 관련 사업을 수행하였다. 문화역량 강화 및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영동 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청주 문화도시 조성 등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을 추진하였고,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으로 142명의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였다.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으로 시설 이용률은 29.42%까지 증가하였고, 이벤트 유치는 198건을 추진하였다. 그 밖에 찾아가는 도립교향악단 및 도지정문화예술단 공연 186회, 저소득층 예술공연 무료관람 지원 22,032명, 세종대왕 행궁조성(2015년~2018년)을 추진하였다.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활성화 및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지역관광산업을 육성하였다. 충주 국제수변레포츠 단지 조성 등 중부내륙권 관광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15년 대비 관광객은 232만 명이 증가하였다. 2016년 9월 개최한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은 K-Pop 공연, 한중 대학생가요제, 한중문화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페스티벌 기간 동안 3만여 명이 참석하였고, 2016 청주 세계무예마스터십 대회는 17개 종목, 81개국, 1,940여 명이 참가하였다. 그 밖에 충북 지정축제 6개를 선정하고 지원하여 최우수 축제로 음성품바 축제, 우수로 단양온달문화축제, 영동포도축제 등을 선정하였고, 청남대는 관람객 990만명을 돌파함으로써 세계적인 대통령 테마관광지로 자리매김하였다.

더불어 생태·자연환경 보존 및 활용을 위해 30,409백만 원을 투입하여 6개소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였고, 생태놀이터 2개소를 조성하였다. 충주 동수공원에 자연마당 조성을 위한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 수립하였고, 자연환경보전 및 관리사업으로 옥천 자연생태공원 1개소 및 청주 오창과학산업단지, 괴산 대제산업단지 완충녹지 2개소를 조성하였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26,785백만 원을 투입하여 17지구에 지방하천 수해상습지에 대한 환경개선을 추진하였고, 2,354백만 원을 투입하여 미호천, 달천 등 국가하천 5개소에 310km에 대한 유지 관리를 수행하였다. 그 밖에 백두대간(정맥) 생태축 연결복원사업으로 도로 개설로 훼손, 단절된 말티재 복원을 위한 사업 착공에 들어가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및 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수행하였다.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구석구석 사각지대 없는 주민 맞춤형 복지·의료서비스 실시 및 출산에서 노후까지 모두가 행복한 감동 복지·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역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만성화 예방을 실시하여, 방문건강관리서비스 56,966 가구, 정신질환 사례관리 44,431명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을 일깨워 주었다. 39개 사업, 141개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추진하여, 1,701명에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11개 시·군 24명 신규 복지직 공무원을 충원하고, 시·군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수행 중인 사례관리 업무에 대한 단계적인 읍면동 이관을 시작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노인, 여성,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수혜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시책을 추진하였다. 여성 및 가족을 위해서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으로 37,539명에게 지원하였고, 가족친화 인증기관을 114개소로 확대 지원하였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을 통해 12개 센터에 언어발달지도사 14명, 이중언어지도사 7명을 배치하였다. 노인을 대상으로는 9988 행복나누미 사업으로 56억 원을 투입하여 행복나누미 230명을 구성하였고, 경로당 3,300개소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치매와 중풍을 예방하였다. 장애인 대상으로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여 1,895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아동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1개소를 신설하고, 취약계층 아동 중 40.39%의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를 수행하여, 아동에 대한 문제 해결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청소년 대상으로는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으로, 12개소에 1,861백만 원을 지원하여 490여명의 청소년이 참여하였다. 청소년시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는 3.2%, 이용자 수는 12%가 증가하는 등 청소년 시설 확충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분만취약지역 4개 의료기관에 인건비를 지원하였고, 8,201명의 산모에 대한 진료를 지원하였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육성 사업을 통하여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7개소, 당직의료기관 1개소 지원을 하였고, 이를 통해 취약지역의 의료복지환경 향상에 기여하였다.

제4절 향후 추진계획 및 과제

2016년이 영창호 시대의 리더 충북의 기세를 펼치기 시작하는 원년이었다면, 2017년에는 「미래로(飛天) 세계로(渡海)!」 눈을 크게 돌리고 「더 높이(飛天) 더 멀리(渡海)!」 전진해 나가는 비천도해(飛天渡海)의 정신으로 전국대비 충북경제 4%를 달성하고, 도민행복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실천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하여 첫째, 지역 주도의 협력 강화를 통한 상생 발전을 제고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이다. 귀농귀촌인의 지역민 유대, 맞춤형 지원,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도시활동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마중물사업 및 부처 연계사업 추진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다. 또한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등의 지속 추진을 통한 생활권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상수도 시설 확충, 취약 지역 생활여건 개선 등을 통하여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등을 통하여 교통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하겠다.

둘째, 충북이 신수도권 시대의 중심, 영창호 시대의 리더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 나갈 것이다. 청주 국제공항 거점화 사업 및 지속 홍보, 중부고속도로 확장, 충청내륙고속화 도로 및 천안~청주공항공간 복선전철,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 오송역을 중심으로 한 국토 X축 철도망을 구축하고, 아울러 수도권·영남권·호남권을 아우르는 조정자로 국민 대통합시대를 여는 산파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셋째, 세계적 바이오밸리 조성 등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통하여 충북경제 전국대비 4% 달성을 위해 본격 도약할 것이다. 그동안 추진해온 바이오, 태양광, 화장품·뷰티, ICT, 유기농, 항공산업 등 6대 신성장동력산업 이외에 미래 블루 오션이라 할 수 있는 기후환경산업, 관광 스포츠 무예산업, 첨단형 뿌리기술산업 등 3대 미래유망산업을 추가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어 나갈 것이다. 바이오산업은 생산규모를 3조원까지 확대 생산하여 생산규모 전국 2위가 되도록 하고,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제천 천연물 원료제조거점시설,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괴산 유기농클러스터, 충주 당뇨치유벨트 적극 추진 및 2017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로 세계 3대 바이오밸리로 도약해 나갈 계획이다. 화장품 뷰티진흥센터 설립, 오송화장품뷰티산업 엑스포 확대 개최 등으로 K-Beauty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과학벨트 SB 플라자

건립, 전국대비 57%를 차지하는 태양광 셀·모듈 생산량 60%까지 증가, 태양광기술지원 센터·건물에너지기술센터·자동차연비센터 본격 가동, 기후환경실증센터 및 대용량 ESS시험평가센터 준공으로 충북을 아시아 최고의 솔라벨리로 육성해 나가겠다.

넷째, 농촌의 6차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농가소득의 증대기회를 마련하겠다. 농업기반시설 확충,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향토산업 육성 등을 통한 농촌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내수면 어업 등을 통한 어업 기반 강화 및 백두대간 주민 소득지원, 도시숲,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 산림휴양복지공간 확충 등을 통한 산림분야 소득 증대 기회를 마련하겠다. 또한 유기농 육성에 5,185억 원을 집중 투입하여 유기농 생산비중을 현재 4%에서 15%까지 끌어올리고, 유기농 육성의 전초기지인 괴산유기농산업클러스터 조성, 청주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단지 착공, 유기가공식품 인증 비용 지원, 유기농식품 맞춤형 수출전략식품 육성 등으로 유기농 특화도 충북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

다섯째, 지역에 특화된 문화·생태 자원을 이용한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및 건강한 생태·환경보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 문화도시 조성, 박물관, 도서관 건립 등 다양한 문화시설 건립을 통하여 문화향유 기회 및 만족도를 확대하고, 중부내륙권만의 특화된 광역 관광 브랜드를 구축하고 관광 자원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점 콘텐츠·인프라를 구축하겠다. 또한 국가생태탐방로,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생태놀이터, 자연마당 조성 등을 통하여 생태관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국가 및 지방하천 정비, 생태하천 복원, 백두대간 생태축 연결 복원을 통하여 자연자원의 공익적·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도록 하겠다. 한편 2017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성공 개최,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 지원을 통한 세계무예마스터십의 지속적인 개최 및 활동,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개최, 충청유교문화권 사업 본격 시작 등을 통하여 중원 문화의 명성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다.

여섯째,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이 더 먼저, 더 많이 배려 받는 복지·의료 안전망을 구축하여 출산부터 노후까지 모두가 행복한 감동복지를 구현해 나갈 것이다. 9988 행복나누미 사업 확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률 추가 제고,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언어발달 지원, 청소년 시설 확충 등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업 수행, 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 제공 인력 및 제공기관의 역량강화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 수혜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시책을 추

진하겠다. 또한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3개소), 취약지역 의료기관 지속 지원(9개소),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단 운영 등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다.

일곱째, 도민 중심의 안전한 충북을 구현해 나갈 것이다. 전기자동차와 천연가스 자동차 확대 보급, 충주 기상과학관 건립, 제천 한국환경공단 연수원 건립, 진천 신척·산수산단 폐수 종말처리장 증설 등 환경 안전시설을 적극 추진하고, 충청·강원 119 특수구조대 건립, 제천에 산업안전체험관 건립, 단양수중보 건설, 청주 수곡지구 우수 저류시설 설치 등으로 안전 및 자연재해 예방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

제12장 충청남도

제1절 충청남도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충청남도의 인구는 연기군의 세종시 편입으로 감소하였다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2016년 기준 210만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국 연평균 성장률을 상회한 연평균 5.7%로 증가하여 2015년 기준 111조원을 기록하였다. 1인당 GRDP은 4,863만원으로 17개 시·도 중에서 울산광역시에 이은 두 번째로 높았으며, 연평균 성장률도 4.8%로 전국 성장률을 상회하였다. 수출액은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671억 달러로 정점에 도달한 뒤 2016년은 소폭 감소한 66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재정자립도는 38.7%로 2013년의 36.0%에 비해 2.7%p 높아졌으나, 전국 재정자립도인 52.5%를 크게 하회하였다.

표 3-12-1 충청남도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충남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증가율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증가율
지역내총생산 (십억원)	1,430,255	1,485,505	1,563,668	-	4.6	99,154	105,002	110,857	-	5.7
인구(천명)	51,141	51,328	51,529	51,696	0.4	2,048	2,062	2,078	2,097	0.8
1인당 GRDP(만원)	2,848	2,946	3,089	-	4.1	4,563	4,760	4,863	-	3.2
수출액 (백만달러)	559,632	572,665	526,757	495,466	-4.0	64,282	65,112	67,123	66,212	1.0
취업자(천명)	25,066	25,599	25,936	26,235	1.5	1,137	1,158	1,194	1,228	2.6
재정자립도 (%)	51.1	50.3	50.6	52.5	0.9	36.0	35.6	35.2	38.7	2.4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이며, 2015년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 산업 현황

충청남도의 산업구조는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45.1%, 제조업 50.0%, 광업·농림어업 4.9%로 나타나 17개 시·도 중 울산(64.4%)에 이어 두 번째로 제조업 비중이 높았다.

2014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가 13.5%로 가장 높았다. 종사자수 및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가 각각 18.7%, 21.1%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기타 기계 및 장비', '식료품', '금속가공제품' 등의 업종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2013년과 비교할 때, '자동차 및 트레일러'는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모두 비중이 증가한 반면,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는 비중이 감소하였다.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전기장비'가 다소 증가한 반면, '금속가공제품', '기타 기계 및 장비'는 감소하였다. 종사자수는 '기타 기계 및 장비'가 상대적으로 감소 폭이 컸으며, 생산액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이 증가한 반면, '1차 금속'이 감소하였다.

표 3-12-2 충청남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08년			2014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제조업	11.7	7.6	4.6	11.7	7.4	4.5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5.9	5.4	13.8	6.1	5.5	16.0
비금속 광물제품	6.8	4.7	2.8	6.7	4.3	2.6
1차 금속	4.9	6.5	11.3	4.8	6.5	10.2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 제외)	11.5	6.3	3.2	11.1	6.3	3.2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4.4	19.5	23.2	4.1	18.7	21.1
전기장비	4.8	7.0	5.1	5.2	7.1	5.1
기타 기계 및 장비	12.9	10.0	4.6	12.6	9.6	5.1
자동차 및 트레일러	13.2	15.4	11.9	13.5	16.5	12.7

주 : 2015년, 2016년 자료는 없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2014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로는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36.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수 및 매출액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34.6%, 29.1%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교육 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업종 비중이 높았다.

2013년과 비교할 때, 사업체수 기준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증가한 반면, '교육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감소하였다. 종사자수 기준은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반면, '교육 서비스업'은 감소하였다. 매출액 기준은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이 증가한 반면,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감소하였다.

표 3-12-3 충청남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08년			2014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1.2	3.0	11.6	1.3	3.0	9.0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1	1.6	2.4	1.4	1.5	3.5
부동산업 및 임대업	13.5	8.4	15.2	13.9	8.6	16.4
사업지원 서비스업	5.4	15.8	11.8	5.6	16.2	12.7
교육 서비스업	14.6	10.7	7.3	14.3	10.3	6.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5.9	34.4	29.6	16.1	34.6	29.1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11.7	7.5	8.6	11.5	7.5	8.7
기타 개인 서비스업	36.6	18.6	13.4	36.1	18.4	13.9

주 : 2015년, 2016년 자료는 없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3. 혁신활동 현황

충청남도의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 연구개발비 2.3조원, 연구개발인력 24,353명, 연구개발조직수 1,470개로 나타났다. 연구개발조직수는 2013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연구개발비는 감소, 연구개발인력은 큰 변화가 없었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3년에 비해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연구개발조직수 모두 감소하였다. 연구개발비의 경우 0.97%p 연구개발인력은 0.36%p, 연구개발조직수는 0.21%p 감소하여 각각 3.46%, 3.93%, 3.93%로 나타났으나, 광역도 지역 중에서는 경북, 경남과 함께 높은 혁신활동 수준을 보였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5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6,309건이며, 등록은 2,996건으로 2013년에 비해 특허 출원은 증가한 반면, 등록건수의 감소하였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3년에 비해 특허 출원건수 0.01%p, 등록건수 0.04%p 증가하여 각각 3.77%, 3.93%로 나타났다.

표 3-12-4 충청남도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연평균증가율
연구개발	연구개발비	2,628,163 (4.43)	2,323,791 (3.65)	2,283,743 (3.46)	-6.8
	연구개발인력	24,425 (4.29)	22,828 (3.77)	24,353 (3.93)	-0.1
	연구개발조직수	1,142 (4.14)	1,288 (4.02)	1,470 (3.93)	13.5
특허	출원	6,020 (3.76)	6,473 (3.95)	6,309 (3.77)	2.4
	등록	3,379 (3.53)	3,598 (3.70)	2,996 (3.93)	-5.8

주 : ()는 전국대비 비율임. 2016년 자료는 없음.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충청남도는 지리적, 산업적, 환경·문화적 관점에서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먼저 지리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국가 교통 네트워크의 중심지이며, 대산항·당진항·보령항 등 동아시아 및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네트워크의 중심으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동북아 경제권의 급성장과 중국과의 교역량 증가로 인해 서해안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어 환황해권 교류거점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역이다.

산업적 관점에서 충남은 세계 최대의 디스플레이 집적지이자, 국가 3대 석유화학단지 중 하나인 대산석유화학단지, 일관제철을 갖춘 철강산업집적지 등 국가 주요 기간 산업이 집적화되어 있다. 환경·문화적 관점에서 백제문화, 내포문화 등의 풍부한 지역 문화자원과 경제적 가치가 높은 생태자원(습지, 사구, 갯벌 등)이 분포하고 있다. 또한 서해안 관광자원이 풍부해 문화, 휴양 등 다양한 관광활동이 가능하며,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관광의 중심지로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다.

발전 잠재력을 바탕으로 충남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전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리적 관점에서 세계경제의 주역으로 떠오른 중국 등 신흥아시아국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와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 수출시장 잠식 및 생산설비의 해외 이전 등으로 지역산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충남의 가장 큰 강점인 지리적 중심성을 살려 환황해 경제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항만·내륙 교통체계를 연계하여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진출의 교두보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적 관점에서는 충남의 특화산업 및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다양한 창의적인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발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연구 및 산업근로자를 위한 정주기반을 구축하여 많은 우수한 인적 자원이 이주하여 정착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제조업 중심에서 R&D 중심의 기업으로 변화하여 IT산업의 기술고도화 및 융복합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함으로써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 필요하다.

환경·문화적 관점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백제문화유산을 중심으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충남'을 만들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충남의 문화와 자연환경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함과 동시에 세계적인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한 관광기반 확충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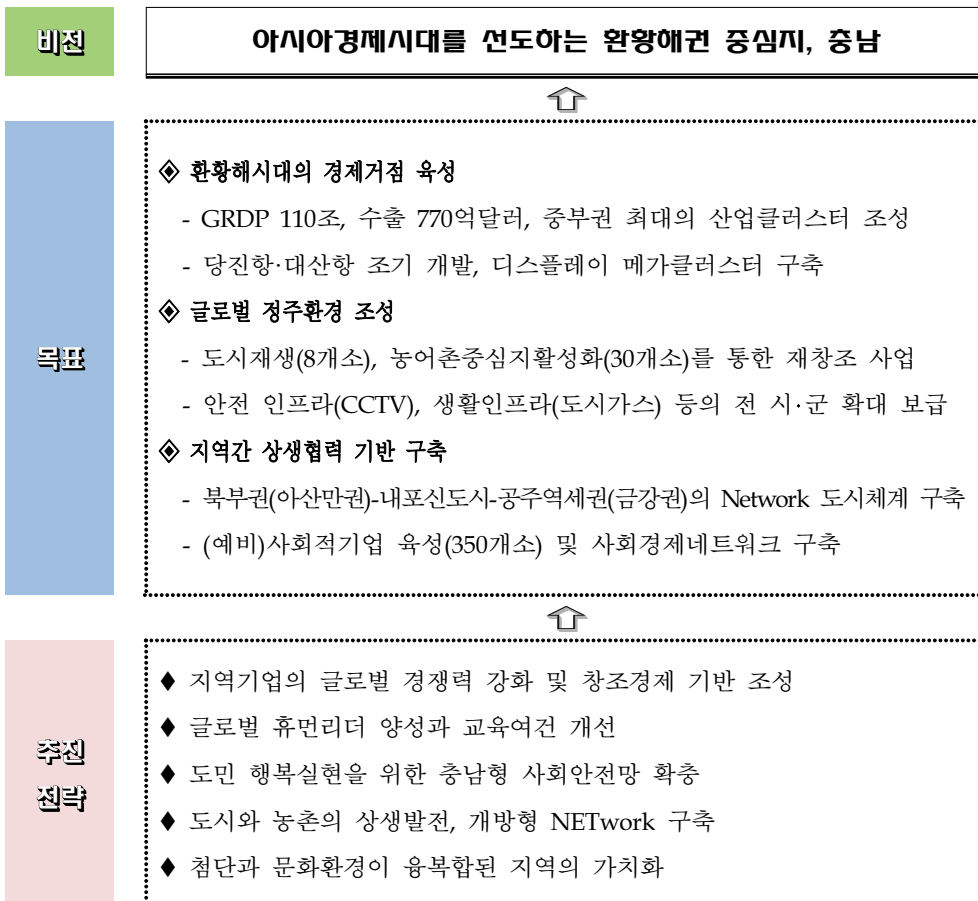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충청남도는 ‘아시아 경제시대를 선도하는 환황해권 중심지, 충남’으로 발전비전을 설정하였다. 발전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충남의 지리적 이점과 산업적인 이점을 고려하여 환황해시대의 경제 거점 육성, 글로벌 정주환경 조성, 지역간 상생협력 기반구축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림 3-12-1

충청남도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2. 추진전략

충청남도의 발전비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은 ‘지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창조경제 기반 조성’, ‘글로벌 휴먼리더 양성과 교육여건 개선’, ‘도민 행복실현을 위한 충남형 사회안전망 확충’,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 개방형 NETwork 구축’, ‘첨단과 문화환경이 융복합된 지역의 가치화’ 등 5가지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창조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서 신성장 동력 및 주력산업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과학기술 연구개발 거점지역으로 충남을 자리매김하여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자원에 기반한 관광 및 문화유산 개발을 추진한다.

‘글로벌 휴먼리더 양성과 교육여건 개선’의 구체적인 세부전략은 지역여건에 맞는 산학협력 선도·특화산업 거점대학 육성 및 특성화를 지원하고, 지역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 및 능력을 강화한다. 또한 충남 소재 대학교육 역량강화를 통한 실용중심의 실력있는 인재를 배출하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기반 확대 및 다양한 평생교육 인프라를 확충한다.

‘도민 행복실현을 위한 충남형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초고령 사회에 대응한 지역사회 복지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을 마련한다. 또한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계층별 복지서비스 구축 및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의료부분에서는 지역거점 의료시설의 원격진료 시스템 확충 및 농촌시설간의 연계를 확대한다.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 개방형 NETwork 구축’의 세부전략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별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통한 경쟁력 있는 도시로 재창조하는 것이다. 두 번째, 생활권별 비전공유와 협력사업 추진을 통한 충남의 발전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지역주도의 생활기반형 사업을 통해 주민체감형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활권 내 또는 생활권 간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통망을 확충한다.

‘첨단과 문화환경이 융복합된 지역의 가치화’ 부문에서의 세부전략은 지역문화관련 시설의 생활권 확충 및 공동이용을 확대하고 농어촌 지역 내 문화·생활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 간 연계형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도 이 부문의 중요한 전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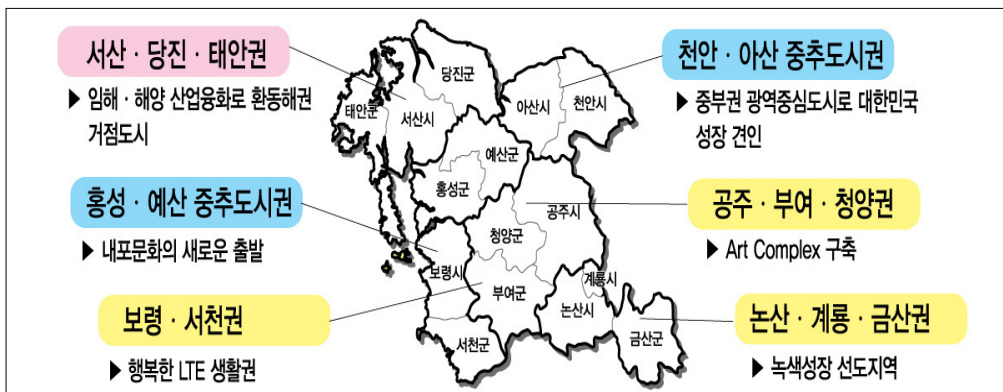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충청남도의 지역행복생활권은 중추도시생활권으로 천안·아산과 홍성·예산, 도농연계생활권으로 서산·당진·태안, 농어촌생활권으로 공주·부여·청양, 논산·계룡·금산과 보령·서천의 6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충남의 지역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2014년 7월 구성된 ‘생활권발전협의회’는 2016년까지 총 12회에 걸쳐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림 3-12-2 충청남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지역행복생활권 주요 선도사업으로 천안·아산 생활권은 동반성장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사업을, 홍성·예산 생활권은 내포 창조관광 기반구축사업, 통하는 생활가로 개선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서산·당진·태안 생활권에서는 서해안안전센터 설치사업, 내포관광 창조지원센터 조성사업 등 연계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공주·부여·청양 생활권은 나래원 화장시설 공동이용사업을, 논산·계룡·금산 생활권은 발효미생물 6차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보령·서천 생활권은 FunFun와바우 체험관광네트워크 구축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어 2017년도부터 추진되고 있다.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충청남도는 농촌마을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창조적 마을만들기 (84개) 및 역량강화(14개 시·군),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및 농촌현장포럼 운영(63개 마을), 마을기업(13개소) 및 농촌공동체회사(4개소) 지원 등을 추진하여 주민 주도로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유도·지원하고 있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방상수도 미공급 지역(면단위)에 수도물 공급을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상수도 보급률 93.6% 달성, 가뭄대비 비상급수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가축사육 밀집 수계지역에 가축분뇨 공동화시설을 확충(아산, 보령 2개소)하여 가축분뇨를 자원화(양질의 퇴·액비화)하고,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를 통해 하수도 보급률 74.3%를 달성하여 위생과 환경오염 최소화에 노력하였다.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47개소)는 2016년도 전국 시도 평가 최우수로 선정되는 등 재해예방 및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새뜰마을 사업은 2015년도에 6개소, 2016년도에 4개소가 선정되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신규로 5개소(도시 2, 농어촌 3)가 지정되었다. 지난 2015년도에 지정된 서천군 장선마을의 경우 사업 선도지역으로 타 지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지역 중심지 활력 증진을 위해서는 천안 '중앙거리 활성화 사업'을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추진함으로써 지역 상권의 중심가로를 특화거리로 조성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지원은 보령·서산·홍성·당진의 12개 도서, 15개 사업에서 진행하였으며,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을 통해 서천·태안의 2개 도서, 2개 사업으로 기초생활기반을 확충하고 있다.

도로이용자 편의 중심의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조성을 위해 홍성~내포신도시 구간, 예산 응봉사거리 2개소의 기본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을 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차량의 운행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역실정과 주차수요에 따라 적재적소에 맞춤형 주차장을 설치하여 공영주차장 확보율은 5.67%를 달성하였다.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충청남도는 2013년 자동차부품, 인쇄전자부품, 동물식의약, 디지털영상, 디스플레이 산업의 5개 주력산업을 선정하고, 1차 58개 과제(R&D 48, 비R&D 10)를, 2차 72개 과제(R&D 47, 비R&D 25)를 지원하여 2015년도 1차 사업 결과 신규 고용창출 463명, 매출액 1,308억 원이 증대되었다(2016년도 결과는 2017년 7월 발표 예정). 또한, (재)충남테크노파크에서는 지역혁신거점 육성사업으로 29개 과제(입주기업 25, 졸업기업 4)를 지원하였으며, 정보영상융합센터를 통해 지역공동마케팅사업(5개사), 개별 마케팅 지원(4개사), 기술 지원(12개사) 등 SW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 및 품질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지역기반 연구 활성화로 R&D DB Book 제작, 충남형 R&D 투입·산출모델 구축, SUMMIT 포럼 개최 등 충남연구개발지원단 지원을 통해 충남의 R&D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5년 5월 출범한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태양광 응용제품 창업 전주기 지원(295건), 신재생에너지 100% 자립 섬 실증, 서산 태양광벤처단지 조성(2016년 7월 준공, 13개 중소기업 입주), 무역존을 통한 원스톱 수출지원(21개사, 580만 달러) 등으로 창업촉진 및 기업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기본계획 수립 및 조성을 통해 SB플라자 건립, 기업주도 공동연구법인 설립 및 4개 과제 수행, 과학비즈니스 융합전문가 양성사업 1단계 종료 및 2단계 추진 등 과학기반 클러스터 확대 추세 속에서 비교우위와 차별성이 있는 혁신 생태계 조성 추진으로 글로벌 기초연구 허브로서의 입지를 확보하였다. 원천기술 도입 및 공동연구개발 추진 등으로 충남도 내 산학연의 과학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베크만(미국) 광 의료기기 연구센터(단국대), 와이즈만(이스라엘) 조직재생 연구소(순천향대) 등 해외우수연구기관을 유치하였다.

산업단지와 대학을 공간적으로 통합하는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 도입을 위해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산학융합지구가 선정(2013년)되어 2016년도에 캠퍼스 설립인가를 신청하였고, 2017년 개교식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업지원을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이 고가의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역혁신센터를 한국기술교육대와 공주대에 설치하여 특허출원(81건), 고용창출(659명), 매출액 증대(1,271억 원)를 달성하였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취약계층 고용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지난 4년간 매년 100여개의 사업을 발굴하여 약 500명의 직접일 자리를 제공하였다. 또한, 우수 사회적 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1,785명, 참여자 만족도 72.3%)함으로써 재능기부, 배당금 환원, 마을소득 증대 등 다양한 형태로 지역 파급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마을사무장 인력채용률 95%(61명)를 달성하여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하고 있다.

충남의 농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고품질의 농업생산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였다. 고품질의 과실 생산성 향상과 유통·물류비용 감소 기반 구축을 위해 과수 주산지에 규모화·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지원(아산원예농협 APC 저온저장고의 시설보완)하였다. 또한, 지역의 향토자원 발굴을 통한 2·3차 산업이 융복합된 6차 산업화 전략으로 천안 배, 공주 베리류, 보령 고구마, 금산 약초 융복합, 금산 흑삼, 태안 소금의 6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식품부 평가에서 우수지구로 금산 약초음식과 흑삼이 선정되었다. 다품목 소량생산과 직거래 공급체계 구축을 위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으로 5개소('13년도 900여명 생산자 참여)에서 총 32개소(3,300여명) 운영으로 2016년도에 227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하였다.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조미김을 전략품목으로 선정하고 생산인프라를 확충·지원하여 안정적인 생산을 통한 내수 및 수출확대를 도모하고, 천북 웰빙특화단지를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토목·건축) 착수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도내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다소비·특별관리 품종 중점 검사 등 안전성 조사를 매년 120건 이상(목표대비 15~20% 초과)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수산물 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양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홍성 어사해양바다낚시공원 조성 실시설계 추진, 태안 해상바다낚시공원 조성 및 안흥항 사업에 착수하였고, 보령, 당진, 서천, 태안 등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매년 1,800만명 이상의 해양관광 레저 체험객이 보통 이상 99%(2016년)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산림경영자원 육성사업(2016년부터 시작)을 통해 친환경 고품질 임산물 생산 및 수출 확대(7.6백만 달러)로 임가소득을 향상하였으며,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생활권 도시림 면적 1,529ha) 및 내포문화숲길과 신규 대상지 발굴(5개소) 등 숲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제공하고 있다.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충청남도의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BK21플러스 사업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방의 고급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학별 사업으로 양성하고 있는 전문인력의 분야로 공주대의 차세대 IT 융합부품용 회소소재, 단국대(천안)의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동물자원 및 글로벌 나노바이오 재생의과학, 운동의과학, 선문대의 제약·화장품산업 기능성 천연소재 및 아시아 문화교류 융합디지털, 한국기술교육대의 창조형 감성기반융합전자기기 등이 있다.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 사업설계 및 추진을 통한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은 공주대, 상명대, 선문대, 순천향대, 중부대, 한서대, 호서대 등의 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다. 공주대는 글로컬 소통 및 교육과정 연구와 학습동아리 및 자아발견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중에 있으며, 상명대는 태양광 자전거·충전기·가로등의 모형제작을 통해 디자인부분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선문대는 제약산업 인력수요 전망과 연관성 분석을 통해 교과과정 체계를 구축, 다문화 통합사회 상담복지인재양성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산업과 연계된 산학협력 모델 창출 및 현장맞춤형 핵심연구 인력 배출을 위한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0개 대학(건양대, 공주대, 단국대, 선문대, 순천향대, 신성대, 아주자동차대, 중부대, 한기대, 호서대)에 총사업비 1,085억 원을 지원하여 대학-기업 간 산학협력을 통하여 대학교육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취업미스매치 해소 및 대학과 지역산업의 공생발전 견인하였다. 대표적으로 건양대의 경우 창의적 인재양성과 지역경제·사회발전 역량구축을 통한 글로컬 경쟁력 배양을 목표로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17건), KY-LINC 전문기업인특강(32건) 등을 진행하였다.

100세 시대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공주대와 순천향대에서 선취업·후진학 평생교육지원사업 및 지역과 대학의 파트너십 프로젝트 등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계된 취업 친화적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도에서 자체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5대 정책목표 19개 핵심과제를 추진,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기반 마련 및 사회적 선순환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지역 문화 육성, 생태 복원

충청남도는 지역 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 발전 지원을 위해 콘텐츠코리아랩 계획 및 운영사업 공모 선정, 지역특화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역기반 대표 다양한 문화 콘텐츠 개발로 충남 문화산업 기반을 확충하였고, 지역문화예술지원을 통해 도민 향유 실적은 71만명, 참여예술가 1만명을 넘어섰다. 문화시설 확충을 위하여 아산 중앙도서관 설계완료 및 착공, 천안 청수도서관 설계 추진, 금산 공립박물관 설계완료, 금강자연비엔날레 지원(자연미술공원 조성), 생활문화센터(아산, 당진) 설계 완료, 공주 버스승강장 지붕 한식 개선, 작은도서관(공주, 예산) 및 작은영화관(예산, 태안, 금산) 조성 등을 추진하여 충남도민의 문화예술활동 참여율은 56.8%(2014년)에서 59%(2016년도 추정)로 향상되었다.

주민들의 체육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생활체육의 체계적인 지도 및 인프라 조성을 통해 국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지도인원 144명, 강습참여인원 1,189천명)을 통해 남녀노소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으로 지속적인 흥미유지 및 참여를 유도하여, 규칙적 생활체육 참여율이 67.6%(2016년도 추정치)에 달하고, 수혜자 만족도가 90%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체육진흥시설을 확충을 통해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 3.41㎡, 공공체육시설수 1,099개소를 달성하였다.

충남의 사계절 관광 및 관광자원 잠재력 극대화를 위해 기존의 관광지를 현재 관광 트렌드 변화 및 지역 개발여건에 따라 재정비하고, 다양한 해양관광자원을 연계·활용한 환황해권의 관광거점을 육성하고자 삼교호 관광지(해안탐방로 및 풋살장), 만리포 해수욕장(운동오락시설 및 경관조명), 임해관광도로(산책로 및 쉼터) 등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추진의 성과로 충남의 관광지 방문객 수는 2016년 22.5백만명으로 2015년도 19.5백만명에서 15.4%가 증가하였다.

또한, 관광산업과 주민 삶의 질의 기반이 되는 생태자원 확충을 위하여 생태하천 복원 사업으로 천안 성정천과 부여 왕포천 사업이 준공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자연생태학습장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 숲길네트워크 구축, 황새고향서식지 환경 조성, 지방하천 정비(국토부 평가 2위 달성) 등이 추진되고 있다.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지역특성과 수요에 따른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이용자 만족도(85.9점)와 제공인력 일자리 만족도(76.1점)가 높게 나타나,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에 기여하고 있다. 주민정신건강 증진과 자살예방, 정신장애인 사회복귀를 위해 우울증 선별검사(172,822명) 및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5,915명) 등과 함께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1개소) 및 기초센터(16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인력,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읍면동 사례관리 및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해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취약계층 아동에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드림스타트 지원사업은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 통합사례관리(2015년 5,424명, 2016년 4,319명), 드림스타트간 멘토-멘티 워크숍 운영(매년 1회)을 추진하였다. 가정과 공교육을 보완하는 공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15개소 2015년 590명, 2016년 624명) 지원을 하였다. 청소년의 문화공간 확충을 위해 홍성, 예산 2개소의 청소년 문화의집을 개원하여 청소년의 건전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또한, 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16년도 현재 국공립어린이집(77개소), 직장어린이집(40개소)을 운영 중에 있다.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통해 3,864명(국비 2,223명, 도비 1,641명)을 지원하였고 장애인연금부담율은 71.9%에 달하고 있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가족자녀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발달을 위한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언어발달지원사업으로 14,247명에게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진단·평가·수업·상담 등을 실시하였으며, 만족도 조사결과(5.0 만점에 4.84점 → 4.89점)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분만 취약지역 부여군의 산부인과 운영지원 및 분만 취약지 해소를 위해 산부인과 외래 지원(건양대 부여병원 인건비 지원) 및 부여군 보건소 현지 점검 등을 추진하여 임신 부를 위한 산전·후 진찰 서비스(연간 진료인원 3,580명)를 제공하였다. 시·군별 1개소 이상의 응급실 운영을 목표로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운영비 지원(10개소) 및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를 도입하여 응급의료 취약지 해소 및 24시간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통한 진료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제4절 향후 추진계획 및 과제

충청남도는 지리적·사회문화적으로 국토 중심부에 위치,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연계하여 국가 균형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이 가능한 지역이다. 또한, 중국과 최단거리에 있어 환황해포럼, 동아시아 3농포럼을 통해 아시아 경제·사회·문화발전 논의의 장을 운영 중에 있다. 충남의 북부지역은 수도권에 인접하여 제조업 위주의 산업발전을 통해 천안·아산 등 중규모 신도시권이 형성된 반면에 남부 내륙·서해안 지역은 농어업과 전통적 상업 질서가 유지되어 고령화가 심각하고 도시 인프라는 취약한 실정이다.

지역·산업 간 균형발전을 위해 충남은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을 하였으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국가정책화가 필요하다. 환황해권의 중심지로서 성장잠재력을 발산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나, 북부지역 중심 4차산업혁명 대응, 내륙권 역사문화·생태자원 가치 발전, 서해안권을 중심으로 한 해양문화 선도 등 충남과 중앙정부의 동반자적 발전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충남에서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2004년)을 제정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세종시 출범으로 충남의 인구·면적·재정력이 줄어든 반면 혁신도시는 없는 실정으로 「내포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에 적극 노력할 것이다. 관광자원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는 서해안을 정원화하여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을 국민여가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관련 인프라로 서해안권 도로망 연결(국도 38호 노선 연장 및 교량 건설, 당진·천안 고속도로 조기 건설) 및 철도망 구축(장항선 복선전철화 조기 시행, 아산석문산단선 및 보령선 건설)도 추진하고자 한다. 이 외에도 화력발전 미세먼지 감축, 난개발된 연안·하구 및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된 하천생태계 복원, 농촌맞춤형 복지서비스 통합체계 구축, 영유아 보육의 공공성 강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급식 질 제고 등 도민의 행복을 위한 관련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계획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충남도는 정부와 긴밀한 연계협력을 통해 보다 나은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제13장 전라북도

제1절 전라북도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전라북도의 인구는 2013년 이후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6년 기준 187만 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연평균 증가율 3.4%로 증가세를 보여 2015년 기준 45조 원을 기록하였다. 1인당 GRDP는 2,526만 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연평균 성장률은 3.4%로 전국 성장률을 하회하였다. 수출액은 전국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북의 경우 2013년 101억 달러와 비교해 2016년은 63억 달러로 크게 하락하였다. 재정자립도는 29.7%로 2013년의 25.7%에 비해 4.0%p 높아졌으나, 전국 재정자립도인 52.5%를 크게 하회하였다.

표 3-13-1 전라북도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전북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증가율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증가율
지역내총생산 (십억원)	1,430,255	1,485,505	1,563,668	-	4.6	42,513	44,243	45,425	-	3.4
인구(천명)	51,141	51,328	51,529	51,696	0.4	1,873	1,872	1,870	1,865	-0.1
1인당 GRDP(만원)	2,848	2,946	3,089	-	4.1	2,364	2,462	2,526	-	3.4
수출액 (백만달러)	559,632	572,665	526,757	495,466	-4.0	10,116	8,556	7,952	6,292	-14.6
취업자(천명)	25,066	25,599	25,936	26,235	1.5	876	875	894	909	1.2
재정자립도 (%)	51.1	50.3	50.6	52.5	0.9	25.7	27.0	27.6	29.7	4.9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이며, 2015년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 산업 현황

전라북도의 산업구조는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63.9%, 제조업 27.2%, 광업·농림어업 8.9%로 나타나,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광업·농림어업 비중이 가장 높았고, 강원도, 제주도를 제외한 광역도 중에서는 제조업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식료품'이 16.6%로 가장 높았다. 종사자수 및 생산액 기준으로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가 각각 21.3%, 25.5%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도 '식료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금속가공제품', '기타 기계 및 장비' 등의 비중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았다.

2013년과 비교할 때, '식료품'은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모두 증가한 반면, '자동차 및 트레일러'는 감소하였다.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이 다소 증가한 반면, 다른 업종들은 변화가 없거나 감소하였다. 종사자수 기준도 대부분 비중변화가 적었으며, '비금속 광물제품'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생산액은 '1차 금속', '금속가공제품', '기타 기계 및 장비' 등이 증가한 반면,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는 감소하였다.

표 3-13-2 전라북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3년			2014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15.5	15.6	15.0	16.6	17.4	15.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5.8	8.6	16.7	6.3	8.6	16.3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0.5	0.9	1.1	0.4	0.8	1.0
비금속 광물제품	8.9	5.3	3.7	8.7	4.9	3.6
1차 금속	4.3	5.3	10.5	4.1	5.5	10.8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 제외)	10.7	6.8	2.3	10.6	6.8	2.6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2.0	4.2	2.9	2.1	4.4	2.5
기타 기계 및 장비	8.3	7.3	6.1	7.8	7.2	6.7
자동차 및 트레일러	12.7	21.9	26.3	11.9	21.3	25.5

주 : 2015년, 2016년 자료는 없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2014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는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35.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수 및 매출액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39.3%, 37.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기타 개인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의 업종 비중이 높았다.

2013년과 비교할 때, 사업체수 기준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증가한 반면, '교육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감소하였다. 종사자수는 전반적으로 업종별 비중 변화가 크지 않았으며,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반면, '교육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은 감소하였다. 매출액 기준은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이 증가한 반면,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교육 서비스업'은 감소하였다.

표 3-13-3 전라북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3년			2014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1.0	2.3	6.7	1.1	2.4	6.3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2	2.0	3.8	1.3	2.2	4.4
부동산업 및 임대업	11.4	8.2	17.6	11.9	8.2	18.1
사업지원 서비스업	4.7	13.7	9.8	5.0	13.8	10.1
교육 서비스업	18.3	11.0	7.1	18.1	10.7	6.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6.5	38.9	37.7	16.6	39.3	37.8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10.4	7.4	6.3	10.3	7.1	6.1
기타 개인 서비스업	36.6	16.4	11.0	35.9	16.3	11.0

주 : 2015년, 2016년 자료는 없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3. 혁신활동 현황

전라북도의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 연구개발비 8천억 원, 연구개발 인력 15,165명, 연구개발조직수 833개로 나타났다. 연구개발 인력과 연구개발 조직수 모두 2013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연구개발비는 2년 전에 비해 7백억 원 감

소하였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3년에 비해 연구개발 인력과 연구개발조직수는 증가한 반면, 연구개발비는 감소하였다. 연구개발비의 경우 0.26%p 감소하였으며, 연구개발 인력은 0.1%p, 연구개발조직수는 0.04%p 감소하여 각각 1.22%, 2.45%, 2.23%로 나타났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5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4,007건이며, 등록은 1,338건으로 2013년에 비해 특허 출원은 증가한 반면, 등록건수가 감소하였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3년에 비해 특허 출원건수 0.03%p, 등록건수 0.06%p 가 증가하여 각각 2.40%, 1.75%로 나타났다.

표 3-13-4 전라북도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연평균증가율
연구 개발	연구개발비	875,085 (1.48)	870,475 (1.37)	804,323 (1.22)	-4.1
	연구개발인력	13,385 (2.35)	14,912 (2.46)	15,165 (2.45)	6.4
	연구개발조직수	603 (2.19)	729 (2.28)	833 (2.23)	17.5
특허	출원	3,789 (2.37)	3,501 (2.13)	4,007 (2.40)	2.8
	등록	1,615 (1.69)	1,777 (1.83)	1,338 (1.75)	-9.0

주 : ()는 전국대비 비율임. 2016년 자료는 없음.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전라북도는 지방 경제 전체의 글로벌화 전진기지로서 새만금 시대의 본격 개막이라는 획기적 기회요인을 갖추고 있으며, 동서 교통축의 대대적인 확충으로 한반도 허리 경제의 서해안권 주역으로 급부상해 가고 있다.

또한, 한국적 장점을 살린 문화육성 및 문화 창조가 세계 속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현실에서, 전북이 비교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전통문화자원과 산업화 기반의 우수성을 기반으로 농생명수도 및 한문화 창조거점 육성을 전북 발전의 구동축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발전 잠재력을 활용하여 ①주력산업 고도화와 문화가치의 사업화, ②성장산업의 육성과 지역 특화자원의 활용, ③신성장 산업 육성과 성장거점 마련, 그리고 ④인적자원 선순환 환경 마련과 글로벌 여건 조성 등을 적용 가능한 전략방향으로 설정하고 4차 산업혁명의 대한민국 프론티어, 미래의 글로벌 혁신 허브, 그리고 지속 가능한 문화·생명 공간 육성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여 발전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전북이 4차 산업혁명의 대한민국 프론티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조업, 서비스업(문화관광, 지식서비스), 농생명·바이오산업 등 성장주도 산업의 스마트 전문화, 산업 특성별 글로벌 프론티어 및 발전벨트 구축, 기업 유치, 창업 촉진 및 경쟁력 등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미래의 글로벌 혁신허브 형성을 위해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인재 양성, 과학기술 연구 개발 역량 강화, 글로벌화 인프라 및 한반도 허리경제권 형성 기반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문화·생명 공간 형성을 위해 해양-산악-농업 자원 연계의 생태관광 활성화, 전통문화와 ICT 융복합, 지덕체 합일의 청정 공간 개발을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와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발전과제를 추진할 것이다.

① 새만금을 대중국 전진기지 및 창조경제의 요람으로 개발, ② 창조경제를 선도할 신산업 육성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 ③ 농식품산업 기반을 활용한 농생명산업을 육성, ④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유산의 세계화, ⑤ 관광산업의 신성장 동력화를 추구하고 연계관광을 육성, ⑥ 안전 및 행복한 복지 구현의 실현 등을 통해 누구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전북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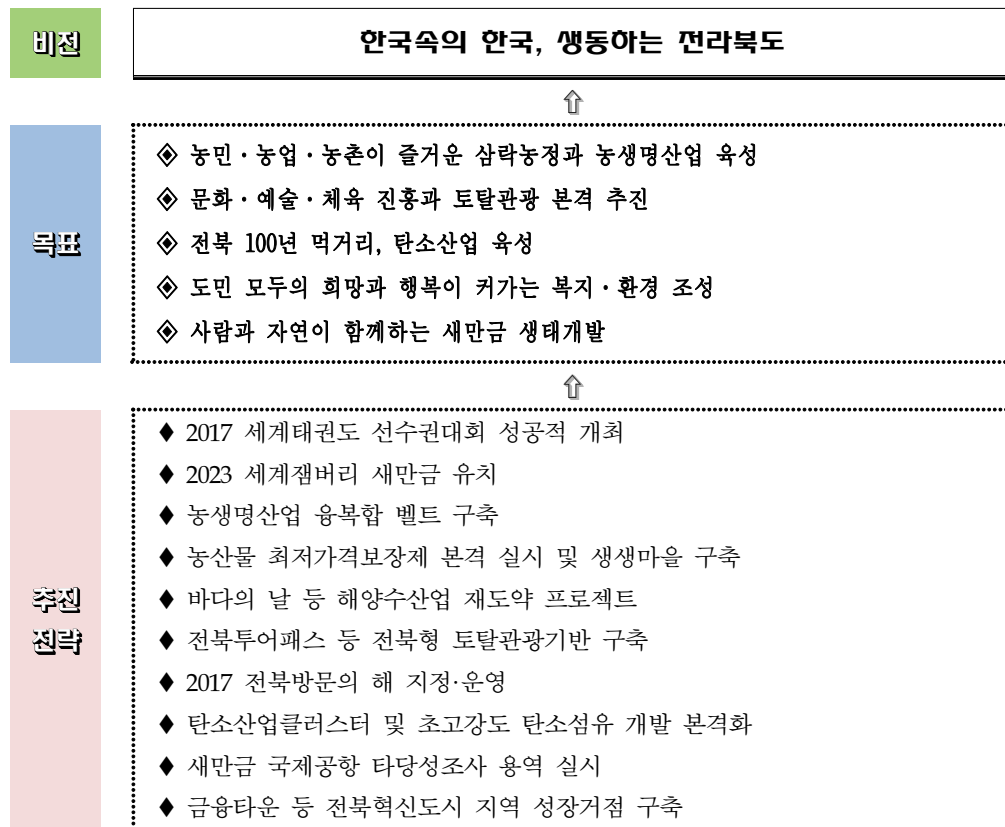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전라북도는 지역이 간직한 고유의 전통문화 자원과 청정 생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가장 한국적인 모습과 가치를 담은 ‘한국속의 한국’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21세기 새로운 전북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 등 도정 3대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생동하는 전라북도’ 실현을 목표로 하여 대한민국 문화융성의 중심지와 국민행복 일번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6년도에는 핵심 과제의 전북만의 차별화된 비전과 탄탄한 미래발전 기반을 만든 한 해였다.

그림 3-13-1 전라북도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2. 추진전략

전라북도는 “한국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의 목표달성을 위해 5대 분야, 10개 추진전략을 충실히 실행하여 도민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먼저, 지역생활권 활성화 분야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공동체 협력강화와 낙후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농촌 활력과 더불어 지역 간 편차를 줄여 나갈 것이고, 전통시장 등 쇠퇴한 구도심 재생을 통해 도시기능 재생 및 농어촌 중심지의 육성 과제를 추진할 것이다. 벽·오지마을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추진을 통해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고, 교통·물류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주민생활 및 도 성장 동력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것이다.

둘째, 일자리 창출 분야는 지역의 내발적 발전역량과 미래 성장 동력인 ‘삼락농정’, ‘도탈관광’, ‘탄소산업’ 등 3대 핵심과제의 완성도를 높여 전북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고용창출효과가 큰 업종 중심으로 지역 특화 산업을 개편하고 지역 주도의 산업기반을 활용한 지역대표산업을 육성할 것이다. 균형 있는 산업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인프라 및 지역주민 밀착형 기반 구축을 달성하고, 산업단지의 혁신역량 강화와 혁신도시 중심의 산업클러스터 조성으로 창조경제의 거점지역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만들 것이다.

셋째,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분야는 취약한 지방 교육여건의 개선을 최우선으로 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고,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여건 개선과 지방대학 육성, 그리고 지역인재·기업 간 선순환 성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인재 유출을 최대한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평생 직업교육대학 육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를 추진하여 공교육 여건 개선 및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넷째, 지역 문화융성 및 생태복원 분야는 전통문화자원을 보유한 한문화 중심지로의 탄탄한 토대를 기초로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 및 문화유산 세계화로서 가치 창출을 확대하고, 아울러 맞춤형 ‘투어패스’ 시행을 도내 전역에 확대 추진하여 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국내 관광객을 유치해 나갈 계획이다.

다섯째, 사각없는 지역 복지·의료 분야는 지역맞춤형 복지 구현 및 농어촌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를 통해 복지서비스의 통합화 및 농촌 통합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농어촌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과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등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해 행복한 복지·의료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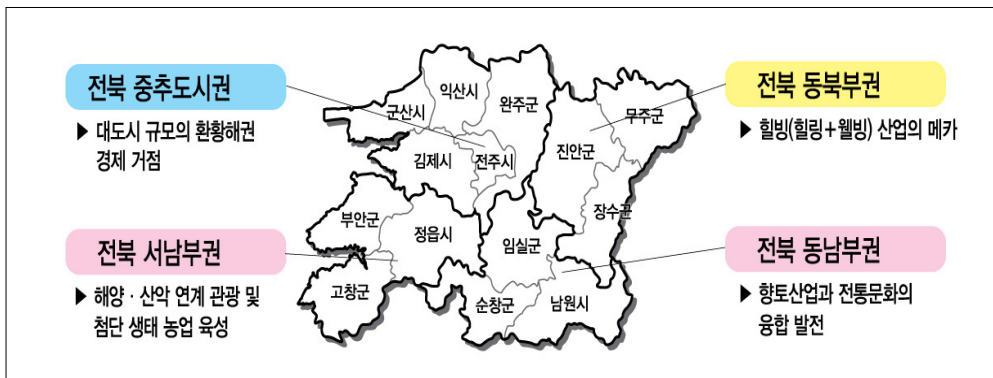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전라북도의 지역행복생활권은 중추도시형 1개, 도농연계형 2개, 농어촌형 1개로 총 4개의 생활권이 구성되어 있으며, 과거의 역사성과 문화·지형의 유사성, 그리고 장래 시·군 간 협력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생활권을 구성하였다. 주요 사업은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 도시재생 사업, 취약지역의 상하수도 시설 확충, 의료서비스 개선, 마을기업육성 및 농촌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그림 3-13-2 전라북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따라 생활권 업무협약(MOU)이 2014년 1월에 완료된 후 생활권행정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규약을 제정하고 의회 승인절차를 거쳤다. 2015년 1월 13일 동북부 생활권을 끝으로 4개 생활권이 행정협의회 구성을 완료하였고 시·군 부서장이 참여한 실무협의회가 구성되어 생활권에서 발생하는 현안사항을 협의해 나가고 있다. 이후 행정협의회회의 시작을 알리는 협의체 발대식이 2015년 6월 2일 남원시 스위트호텔에서 지역발전위원회와 전라북도가 공동 주관하여 지역발전위원장, 도지사, 지역주민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발대

식에서는 지역행복생활권 발전을 위한 협력사항을 공동 대응하는 협약이 체결되었다.

주요 성과는 지역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모사업으로 연계협력(선도) 사업 15건, 새뜰마을사업 26건, 그리고 창조지역사업 10건이 최종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어 생활권의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상당한 기여가 예상된다. 연계협력(선도)의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먼저, 동북부권의 “무진장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 협력사업”으로 시·군 산간·경계지역의 대중교통체계가 경제성이 없어 운영에 차질이 발생한 바,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교통체계를 재구성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고, 이보다 앞서 추진된 ‘진장 경계지역 오지마을 상수도 공급사업’은 진안군과 장수군의 중심지로부터 최외곽 경계지역의 3개 마을주민에게 상수도를 상호 공급하여 사업예산 절감과 함께 지역 칸막이를 허무는 지역발전위원회의 모범사례로 대통령에게 보고된 사업이기도 하다.

동남부권의 “거점 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는 산부인과가 없어 출산이 어려운 문제 해소를 위해 거점 공공병원인 남원의료원에 산부인과를 개설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16년 5월부터 영업을 개시하여 주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새뜰마을사업은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일환으로 주거취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2015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도시 6건 및 농어촌 20건이 추진되고 있고, 이중 2015년 선정된 농어촌 8건의 사업이 금년 말에 완료 예정에 있어 마을의 생활인프라 및 마을경관 개선효과가 매우 큼에 따라 주민의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전북의 지역생활권 활성화 사업은 주민주도형 지역경쟁력 강화, 생활인프라 구축, 일반농산어촌개발, 쇠퇴한 지역중심지 활력 증진, 그리고 농촌 대중교통체계 개선 사업 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 사업이다.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 중에서 생생마을만들기는 농촌 마을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마을 고유의 체험, 관광, 전통, 문화 자원 등 고유한 이야기 거리를 활용하여 출향인, 관광객, 귀농인이 찾아오는 활력과 생기가 넘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업종류는 3단계로 구분하고, 기초단계에 최소한의 지원으로 주민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마을

경관 개선, 공동체 문화 향유, 주민 복지 등을 중점 추진하고, 활성화단계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설, 기반 구축을 지원하며, 사후관리단계는 각종 마을보조사업 이후 운영관리 활성화를 지원한다. 전북은 최근 4년간 국비 54억 원을 포함하여 총 160억 원을 투자하여 농촌 마을에 생생한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산어촌에 대한 기초인프라 투자 및 특화 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 및 공동체 활성화에 목적이 있다. 사업종류는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마을단위 개발, 권역단위 종합개발 등), 시·군 역량강화사업,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사업(농촌생활환경정비, 농촌빈집정비, 농업기반조성 등)이며, 사업내용은 농산어촌에 대한 기초생활 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그리고 지역역량강화 등이 있다. 전북은 최근 4년간 국비 4,145억 원을 포함해 총 5,931억 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경관 개선 및 소득증대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농촌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전북의 건의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수요응답형교통(DRT) 서비스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2015년 1월에 국내 최초로 전라북도 DRT 체계에 대한 시·군의 공모를 추진하였다. 또한, 2015년도 지역발전위원회 연계협력사업 공모에 무진장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되는 등 DRT 교통체계가 주민민원의 개선효과를 인정받아 2015년 12월에 민원개선 행정의 우수사례로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소형승합차를 활용하여 예약에 의한 문전서비스로 지역주민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버스DRT 차량이 최초 2대에서 9대로 확대하여 운행 중이다. 버스 미 운행마을에 대해서는 택시를 활용한 교통서비스 등 농어촌 지역의 교통서비스 개선 노력으로 DRT 체계의 총 이용객이 2016년 말 기준으로 약 9만 명에 달하고 있다. 대부분 접근성 및 편리성 향상에 따른 신규 이동량으로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특색 있게 개발하는 사업으로 도내 6개시 동(洞)지역에 생활환경개선사업 60억 원 이내, 지역역량강화사업 4억 원 이내 예산을 지원하는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국비 50%, 지방비 50%)이다.

2016년까지 4개시(전주, 익산, 정읍, 남원) 9개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331억 원을 확보하였고, 2020년까지 생활환경개선과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전북은 오랜 기간 주력산업으로 이루어온 농업을 1995년부터 제조업이 추월하면서 산업구조의 트렌드에 변화가 있었으며, 이는 기업유치와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한 신 성장 동력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한 결과이다. 자동차·조선·기계, 신재생 에너지, 탄소, LED, 인쇄전자, 방사선융합기술, 그리고 식품·생명산업 등이 전북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1) 지역특성화 산업육성

지역에 특화된 향토자원을 중심으로 기술과 경영이 조화롭게 융합된 지원체계 구축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6개소를 추진하고 있다.

순창군 발효식품, 완주군 소이푸드, 임실군 과수 등 지역 내 특화된 자원의 가공시설 운영, 농촌형 체협·휴양 기반 확대, 그리고 사업단 운영에 따라 2016년도 190명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있다.

(2) 지역공동체 일자리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지역(마을)주민들이 협동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 추진으로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마을기업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였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14개 시·군 일자리부서 주관으로 지난 4년간(2013년~2016년) 국비·지방비(도비, 시·군비) 165억 원을 투입하여 441개 사업을 진행하였고 3,244명에게 직접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마을기업 사업’은 지난 4년간 63억 원을 투입하여 99개 마을기업을 육성하였으며 4년간 350억 원의 매출실적과 일자리 3,671명을 제공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마을기업 사업의 특성상 경영 및 상품개발을 돕기 위하여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을 중간지원조직으로 선정하고 양질의 컨설팅을 제공하여 그 성과를 이루게 된 것이다.

(3) 기업유치 실적

기업유치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시장을 확대할 뿐 아니라 산업구조를 개선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전략산업의 기업유치는 미래 성장의 바로메타로서 늘어가는 산업구조를 지방정부의 비전에 맞도록 탈바꿈하는 좋은 기회이다.

전북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575개 기업을 유치하여 매년 100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하는데 성공하였다. 기업유치는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에 179개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이들 기업의 예상 고용인원이 21,351명으로 지역 노동시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대표적인 유치기업은 하림식품, 다원시스, 도드람 협동조합, 솔베이 등이고, 특히 글로벌 외투기업인 솔베이, 도레이, 삼양화인테크놀로지 등이 새만금산업단지 선도기업으로 터를 잡음으로써 기업유치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전북은 2015년과 2016년에 산업부로부터 지방투자촉진사업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국비 5%를 추가 지원받았으며,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대체투자를 지원하여 인사혁신처로부터 적극 행정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4) 탄소밸리 구축

탄소밸리 구축사업(2011년~2016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데 이어 탄소산업을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2016년 12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탄소 메카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정립했다.

추진성과로는 탄소소재 산업의 초기 산업화 구조를 형성하였고, 효성의 T-700급 탄소섬유 공장 준공, GS 칼텍스의 피치계 탄소섬유 파일럿 시설 건설을 통한 시험 생산 체제를 구축하였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 분원에 탄소 성형·가공 및 시험·분석 연구개발 장비를 구축해 탄소기업 지원 인프라를 구축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 성형·가공장비 19종과 KIST 전북분원에 원천기술(시험·분석) 장비 23종이 구축되었고, 탄소밸리 사업을 통해 상용화기술센터를 건립하여 탄소섬유부터 최종 완제품까지 기술, 제품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대기업 및 중소기업 유치 기반이 마련되었다.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전라북도는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더불어 급속한 노령화로 교육·사회적 여건이 취약한 실정에 있고, 지역발전의 주체인 지방대학이 대학 졸업생의 취업난과 열악한 교육여건, 일자리 등의 경쟁력 저하로 고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 인프라 개선 및 역량강화’와 ‘창의적 인재 양성 및 기업의 선순환 성장체계 구축’ 등에 역점을 두어 총사업비 71,068백만 원을 투입하여 22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1) 지역 으뜸인재 육성

지역 으뜸인재 육성사업은 도내 중고 우수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우수인재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45억 원을 투자하여 11개 시·군 158개교에 지원하여 서울소재 등 주요 대학에 지속적인 합격자를 배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내 중학교 우수학생들의 지역소재 고등학교 진학률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2) 글로벌 해외연수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해외연수 사업은 도내 초·중·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연수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에게 영어권(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과 중국, 그리고 유럽 등의 현지체험을 통해 문화와 언어를 습득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성과는 전라북도와 (재)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이 공동으로 해외 연수생 817명(2016년 기준)을 선발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하였다. 해외연수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1박 2일간 설명회를 갖고 현지 연수국 공립학교에서 4주 동안 ESL를 배우고, 2주 동안은 공립학교에서 현지 아이들과 똑같은 수업을 받는다.

해외연수생들에게 연수전후 영어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연수를 통해 실력이 향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외연수에 대한 글로벌 인적네트워크 형성 및 창의력 향상 등 97% 이상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100세 시대 지역 평생학습체계 구축

시·군 및 기관의 지역특성화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비문해·저학력 성인의 기초생활능력 향상을 위한 문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평생교육 활성화에 이바지 하였다. 평생교육진흥 및 도민의 평생교육 활성화, 도내·외 평생 교육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및 정책연계 등 전라북도 평생학습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2016년 8월 1일에 전라북도평생교육진흥원이 정식 출범하였다.

주요성과로는 교육부 공모사업인 시도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 구축, 행복학습센터 운영 등이 선정되어 국비 222백만 원을 확보하여 평생 학습 촉진기반을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지역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하고, 도와 진흥원, 시·군, 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평생학습 기반조성과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4) 청소년 시설확충 추진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청소년 시설 건립과 기존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능보강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였다. 2013년~2016년에 건립 5개소 7,200백만 원 지원, 기능보강 7개소 1,704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청소년 시설의 실제 사용자인 지역청소년의 의견 반영을 위해 사업계획단계에서 설문조사 실시 및 건립심의위원회 구성에 참여시켜 운영함으로써 시설 수요자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였다.

향후에도 자유학기제, 주5일제 수업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청소년 여가시간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 수련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청소년이 다양한 청소년 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로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전라북도는 한문화(韓文化) 수도로 불릴 만큼 한국적 전통문화자원이 풍부한 지역

으로서 한문화 기반의 기본적인 지역발전의 토대 구축에 구심점을 만들어가고 있다. 지역문화 복원과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지역 간 문화향유의 격차해소에 노력하고 있으며, 전주시로의 집중화를 피하고 외곽지역 주민들도 문화를 골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생활권별 거점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지역의 거점 문화시설 조성을 위하여 혁신도시 주민의 독서문화 향상과 문화체육 향유를 위한 공공도서관(전북혁신도서관) 1개소 건립, 문예회관(전주 덕진예술회관 증축) 1개소, 문학관(익산 가람문학관) 1개소 및 공공도서관과 원거리 지역에 소규모 독서 문화 공간인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남원 품안작은도서관, 완주 용꿈작은도서관) 2개소를 조성하여 지역 지식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등, 도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은 물론 시·군 간 문화 격차 해소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2) 문화특화지역 조성

지역의 특화된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고유의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문화특화 지역(문화도시·문화마을)을 육성하고 지속 성장 가능한 문화공동체 조성을 목표로 2014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북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를 통하여 2014년부터 4개 시·군(남원, 군산, 진안, 익산)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남원은 문화도시 남원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도시문화 경영 등 5개 분야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군산은 군산시민예술촌 운영 활성화 및 문화예술기획프로그램·예술인 창작 공간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진안은 당산제각 등 시설조성 및 마을지도 제작 등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익산은 고도익산 디지털라이브러리·시민참여 커뮤니티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남원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시민 참여형 사업으로 2015년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사업 초기부터 지금까지도 타 시도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손꼽히고 있다.

(3) 전라북도 대표관광지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옥정자, 카페·갤러리, 영화촬영지, 문화재 등 14가지 매력 아이টে을 더하고, 14개 시·군의 대표관광지별 특화된 매력을 곁하여 경쟁력있고 특화된 거점관광지를 집중 육성하고자 시·군의 추천을 받아 대표관광지를 선정하였으며 사업추진을 위해 연간 1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전북대표관광지 연평균 10% 증대를 목표로 관광시장의 다변화에 따른 다양한 관광 소재 콘텐츠 개발과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내발적 발전전략을 통한 지속적인 관광 확대와 시·군별 1명소 육성을 위한 핵심 관광지의 차별화된 매력 강화 등 주변 관광 자원과의 연계·확산으로 전북 토탈관광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사업추진에 따른 새로운 아이টে을 발굴하고 성과분석을 위해 기본계획 추진실태 평가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매년 9월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우수 시·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업 성취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4) 전라북도 투어패스 운영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는 전북 만들기를 위해 민선 6기에 ‘토탈관광’의 일환으로 시작한 전북 투어패스 운영사업은 도내에 산재한 전통문화, 생태, 농산어촌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관광패스라인으로 연계하고, 관광객 체류시간 연장과 방문지역 확대 방안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전북투어패스는 한 장의 카드로 도내 주요 유료 관광지, 시·군 버스 및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과 맛집·숙박·공연(체험) 등 특별할인을 제공하는 자유이용권형 관광패스로 그간 타 지역이나 기관에서 시행했던 차감형 방식을 벗어나 전국 최초로 개발된 자유이용권형 패스이다.

전북은 이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미국의 뉴욕패스 등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 도에 맞는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전북투어패스’를 실시하였다. 2015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전주시, 완주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2017년에는 14개 시·군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판매소, 유료관광지, 특별할인가맹점, 주차장 등을 대폭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패스 디자인 및 권종을 다양화하고 전북투어패스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판매, 정산 통계 시스템을 개발하고 가맹점에 단말기 설치 및 교육을 실시하여 전 시·군으로의 확대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대도시에는 복지시설과 의료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양질의 혜택을 누리는 반면, 농산어촌 지역은 시설의 효율성과 경제성 등의 논리에 밀려 외면되고 있어 도시와 농촌 간 불균형의 격차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도농 간 복지인프라 불균형 및 소득계층 간 복지수혜 불균형, 복지사각지대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운영되고 있는 지역복지 자원 연계로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이 어디에서나 양질의 삶의 질을 누리도록 공공의료 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1) 지역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현 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맞는 지역맞춤형 복지구현을 위해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241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민관협력을 활성화하고 있다.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및 사례관리 추진을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53개 읍면동에 추진 중이며, 2018년까지 모든 읍면동에 확산시킬 예정이다.

최근 4년간(2013년~2016년) 사회복지직 신규인력 279명을 선발하여 배치 완료하였으며, 2017년까지 46명을 추가 채용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적정수준의 복지인력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최근 4년간 742억 원을 투자하여 73,247명이 서비스 제공을 받았고, 2017년에는 247억 원을 투자하여 21,563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도내 응급의료 취약지는 14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포함되는 실정으로 인력수급이 어렵고 재정적 어려움으로 의료취약도가 높아 열악한 응급의료 제공환경을 개선하여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2013년에서 2016년까지 응급의료기관 12개소에 102억 원을 투자하여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응급환자 진료·병상 및 전원정보 관리를 지원하였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응급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 등 법적기준 충족여부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2016년 평가결과 충족률이 80%로 도내 응급의료기관 21개소 중 16개소가 충족하였다. 이는 전국 도 순위 1위로 최상위권이다.

2017년에는 28억 원을 응급의료기관 운영비로 지원하여 응급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3) 장애인생활안정 지원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사업은 경제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연금·수당, 의료비, 등록진단비, 보조기구교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에 예산 64,831백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였다.

장애인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장애수당을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22,375명에게 27억 원을 추가 지급하였고, 장애인연금 지급기준을 2013년부터 17만원에서 2016년 현재 28만원으로 67.7% 인상하여 19,775명에게 7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77%로 전국평균의 67.3%를 훨씬 웃돌게 되어 2015년, 2016년 국정시책 합동평가에서 연속 '가' 등급을 획득하는 등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였다.

제4절 향후 추진계획 및 과제

전라북도는 2015년에 농민 중심으로 출범한 삼락농정위원회를 통해 농민·농업·농촌이 즐거운 삼락농정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시·군별 대표관광지 선정과 전북관광 자유이용권 시범출시로 토탈관광의 마중물이 되었으며, 메가탄소벨리 예타사업 선정을 통해 탄소산업 육성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를 토대로 2016년에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 등 도정 3대 핵심과제에 대한 전북만의 차별화된 비전과 탄탄한 미래발전 기반을 만들어갔다. 전국 최초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하였고, 농민중심의 삼락농정을 추진하여 농림축산 식품부가 주관하는 '2016년 농산시책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민간육종연구단지 완공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유치 성공으로 '동북아 농생명 허브' 실현에 한 발짝 다가가게 되었다.

광역 지자체 최초로 전북투어패스가 전면시행되어 스마트 관광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미래산업의 '쌀'인 탄소산업의 탄소섬유 양산체계 구축, 탄소벨리 1단계 조성사업 완료, 탄소산업클러스터 예타 통과 등으로 탄탄한 미래를 설계하였다.

그리고 2017년에는 '3대 핵심성장 동력'을 본격 추진하여 일자리를 더 만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도민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삼락농정'은 농생명·식품산업을 본격 육성하여 미래 농업을 이끌 스마트 농생명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미생물·종자·식품에 이르는 K-Food 허브를 위해 미래경쟁력의 대표모델을 구축하고 ICT와 융합된 스마트 농생명산업 육성을 위해 삼락농정의 핵심기술을 개발해 나갈 것이다.

'토탈관광'은 전북투어패스 전면시행과 '2017 전북방문의 해' 운영으로 스마트 관광을 발전시켜 시너지 창출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맞춤형 토탈관광 서비스 확산을 위해 ICT 연계 스마트 관광기반을 확충하고 대규모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전북 위상을 향상시킬 것이다.

'탄소산업'은 탄소소재의 양산기술 개발과 연관산업 융·복합을 통해 주도권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탄소소재 상용화 중심의 연구개발을 통해 상용화를 본격 추진하고 연계산업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신산업 성장을 위한 탄소소재의 상품개발을 추진할

것이다.

저출산·기후변화·안전 등 3대 현안과제의 능동적 대응을 통해 ‘살고, 일하고, 돌아 오고 싶은 전북’ 만들기를 실현할 계획이고, 먼저 출산·양육·정주환경을 개선하여 인구증대를 달성하고 저탄소 생활환경의 기반구축을 통해 녹색 생활환경 기반을 마련하며 365일 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안전사고 감축 목표제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동·청년·여성·노인·장애인 등의 맞춤형 시책 추진을 통해 생애주기별 행복도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생활 속 복지서비스를 확대시키고 세대별 행복체감도 향상을 위해 맞춤형 시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만금 핵심기반시설 개발을 앞당기고 SOC 확충으로 지역균형발전 촉진과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조성을 통해 새만금 수질을 개선하는 등 새만금의 핵심기반시설 개발을 앞당기고, SOC 확충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14장 전라남도

제1절 전라남도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전라남도의 인구는 2016년 기준 190만명으로 2013년에 비해 큰 변화가 없었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국 연평균 성장률보다 낮은 연평균 2.7%로 증가하여 2015년 기준 66조원을 기록하였다. 1인당 GRDP는 3,739만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연평균 성장률은 2.8%로 전국 성장률을 하회하였다. 수출액은 전국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남의 경우 2013년 414억 달러와 비교해 2016년은 279억 달러로 크게 하락하였다. 재정자립도는 23.8%로 2013년의 21.7%에 비해 2.1%p 높아졌으나, 전국 재정자립도인 52.5%를 크게 하회하였다.

표 3-14-1 전라남도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전남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증가율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증가율
지역내총생산 (십억원)	1,430,255	1,485,505	1,563,668	-	4.6	62,289	62,457	65,684	-	2.7
인구(천명)	51,141	51,328	51,529	51,696	0.4	1,907	1,906	1,909	1,904	-0.1
1인당 GRDP(만원)	2,848	2,946	3,089	-	4.1	3,537	3,552	3,739	-	2.8
수출액 (백만달러)	559,632	572,665	526,757	495,466	-4.0	41,402	39,112	30,494	27,879	-12.3
취업자(천명)	25,066	25,599	25,936	26,235	1.5	915	909	924	929	0.5
재정자립도 (%)	51.1	50.3	50.6	52.5	0.9	21.7	22.2	22.8	23.8	3.1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이며, 2015년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 산업 현황

전라남도의 산업구조는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57.1%, 제조업 34.1%, 광업·농림어업 8.8%로 나타나, 17개 시·도 중 제주, 전북에 이어 광업·농림어업 비중이 높았다.

2014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으로 '식료품'이 22.5%, 종사자수 기준은 '기타 운송장비' 27.9%, 생산액 기준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35.0%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그 외에는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금속가공제품' 등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과 비교할 때, '기타 운송장비', '금속가공제품'은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모두 증가한 반면,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은 감소하였다.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식료품'이 다소 증가한 반면,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은 감소하였다. 종사자수는 '기타 운송장비', '금속가공제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중이 감소하였다. 생산액은 '식료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1차 금속' 등이 증가한 반면,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은 감소하였다.

표 3-14-2 전라남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3년			2014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21.3	11.5	2.0	22.5	11.3	2.4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0.3	2.2	34.5	0.3	2.0	3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7.5	16.1	36.9	7.2	15.6	35.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5.7	5.3	1.5	5.4	5.2	1.9
비금속 광물제품	11.4	5.5	1.5	10.6	5.4	1.7
1차 금속	5.4	12.6	15.9	5.5	12.5	17.5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 제외)	12.2	8.1	1.4	12.3	8.5	1.6
기타 기계 및 장비	5.3	4.0	0.9	5.2	3.5	0.9
기타 운송장비	17.0	26.0	4.1	17.8	27.9	5.4

주 : 2015년, 2016년 자료는 없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2014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 수로는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40.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수 및 매출액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41.5%, 39.4%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도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의 업종 비중이 높았다.

2013년과 비교할 때, 사업체수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증가한 반면, '교육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감소하였다. 종사자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소폭 증가한 반면, '교육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은 감소하였다. 매출액 기준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은 증가한 반면,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감소하였다.

표 3-14-3 전라남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3년			2014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1.4	3.4	9.3	1.5	3.3	9.5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2	1.6	3.4	1.2	1.4	2.8
부동산업 및 임대업	7.9	6.5	11.2	8.3	6.5	10.0
사업지원 서비스업	4.5	11.6	12.0	4.9	11.6	12.0
교육 서비스업	15.7	8.7	4.9	15.2	8.3	4.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6.3	40.5	38.3	16.7	41.5	39.4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12.2	9.1	7.2	11.8	9.0	7.6
기타 개인 서비스업	40.8	18.7	13.6	40.3	18.4	13.8

주 : 2015년, 2016년 자료는 없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3. 혁신활동 현황

전라남도의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 연구개발비 57백억 원, 연구개발인력 7,069명, 연구개발조직수 573개로 나타났다. 연구개발인력과 연구개발조직수 모두 2013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연구개발비는 2년 전에 비해 7백억 원 감소하

였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3년에 비해 연구개발조직수는 증가한 반면,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인력은 감소하였다. 연구개발비의 경우 0.22%p 연구개발인력은 0.06%p 감소한 반면, 연구개발조직수는 0.15%p 증가하여 각각 0.87%, 1.14%, 1.53%로 전국대비 비중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5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2,660건이며, 등록은 1,079건으로 2013년에 비해 특허 출원은 증가한 반면, 등록건수는 감소하였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3년에 비해 특허 출원건수 0.32%p, 등록건수 0.18%p가 증가하여 각각 1.59%, 1.41%로 나타났다.

표 3-14-4 전라남도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연평균증가율
연구개발	연구개발비	645,637 (1.09)	748,547 (1.17)	573,946 (0.87)	-5.7
	연구개발인력	6,832 (1.20)	7,361 (1.22)	7,069 (1.14)	1.7
	연구개발조직수	381 (1.38)	457 (1.43)	573 (1.53)	22.6
특허	출원	2,026 (1.27)	2,533 (1.54)	2,660 (1.59)	14.6
	등록	1,177 (1.23)	1,445 (1.49)	1,079 (1.41)	-4.3

주 : ()는 전국대비 비율임. 2016년 자료는 없음.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전라남도는 비옥한 땅, 청정 바다, 아름다운 섬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국립공원, 농업진흥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면적이 모두 전국 1위이며, 바다, 섬,

해안선의 전국 비중은 바다 37%, 섬 65%, 해안선 45%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오염되지 않은 땅과 바다를 보유한 전남은 친환경 농수산업 1번지로 도약하고 있다.

또한 전남의 자연환경은 관광자원 및 산업자원으로서의 가치도 높아지고 있다. 2015년 관광객 수는 3,969만명으로 전국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풍력, 조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도 부상하고 있다. 서해안에 5GW 대규모 풍력발전 단지를 조성 중이고, 태양광 발전량은 435GWh로 전국의 27%에 이르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 관광객과 대중국 교역의 증가, 서울-광주 송정 간 호남고속철도 개통 등으로 전남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는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에너지밸리 조성이 본격화되면서 인구가 2만 명을 넘어섰고 새로운 성장거점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다. 에너지신산업의 지원거점이 될 빛가람 창조경제혁신센터가 2017년에 들어서고 에너지 분야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게 된다.

전남이 발전과제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청년 일자리 창출이다. 이를 위해 빛가람혁신도시 이전기관과 협력하여 6년간 기업 700개를 유치할 계획이다. 지역산업 발전의 토대를 튼튼히 하기 위해 석유화학, 철강, 조선 등 주력산업의 활력을 회복하고 생물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지역특성을 살린 신성장동력산업을 지속 지원하며, 창조경제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에너지신산업·드론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농수산업은 FTA 확대에 대응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품질 유기농업 확산, '저비용 고소득' 농어업 구조 정착, 수출망 확대 및 유통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관광 분야는 관광객 5천만명 시대의 조기 실현을 위하여 매력있는 관광 인프라 확충, 서비스 수준 향상 및 홍보 강화, 전남의 역사적 인물 및 전통 문화예술자원 등의 가치 재조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복지 분야에서는 노인인구·취약계층 증가 등에 따른 맞춤형 복지를 위해 출산 친화형 환경 조성,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확대, 취약지역 생활복지 강화, 도민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 과제로는 「가고싶은 섬」 가꾸기와 「숲속의 전남」 만들기를 추진함으로써 섬의 생태·문화자원을 보전·정비하여 매력을 극대화하고, 전남을 공원처럼 가꾸고 매력있는 경관숲과 돈이 되는 소득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라남도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목표는 ‘미래 성장동력산업과 주력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기 제고’, ‘매력 있는 해양·문화관광 거점 조성’, ‘온정 넘치는 정주환경·복지여건 구축’으로 설정하였다.

2. 추진전략

전라남도의 발전비전과 목표 실현을 위해 6대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활기’를 위해 성장동력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기업 맞춤형 창의적 인재 육성을 추진한다. ‘매력’을 위해 글로벌 고품격 관광거점 구축 및 매력있는 해양·문화관광 기반을 조성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정주기반을 구축한다. ‘온정’을 위해 삶의 질 확보를 위한 기본인프라 확충과 온정 있는 복지·교육 공동체 형성을 추진한다.

추진전략별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다. 성장동력 산업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전략의 과제는 기술혁신을 위한 신성장산업 동력화, 지역 연고산업 고도화를 위한 과학기술 분야 지원·육성, 강소형·중견 기업 및 창조경제 거점 육성, 국내·외 투자 유치를 위한 주력산업 고도화,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인적자원 중심 주력산업 육성, 지역자원과 연계한 행복한 농어촌일자리 창출 등이다. 또한 기업 맞춤형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 지역 거점대학을 육성하고, 실용중심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글로벌 고품격 관광거점 구축과 매력있는 해양·문화관광 기반 조성을 위해 해양관광 특화발전 프로젝트 추진, 해양관광 및 미래형 해양레저기반 구축, 남도 고유 전통문화자원 및 관광자원 가치제고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쾌적하고 편리한 정주기반 구축을 위해 활력있고 경쟁력 높은 지역 중심지를 재창조하고, 녹색생태환경 보존으로 정주여건을 강화하며, 유기적인 기능연계를 위한 생활권기반 개발 축을 설정한다.

삶의 질 확보를 위한 기본 인프라 확충의 세부과제는 삶터 복원을 위한 연계협력형 생활인프라 확충, 생활권 중심 문화기반 확충을 통한 도·농간 격차 해소,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기반시설 정비, 행복실현을 위한 교통·물류망 확충 등이다. 온정있는 복지·교육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수요맞춤형 복지지원체계 구축, 취약지역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복지·보건·교육 거점인프라 조성, 생애주기형 창의교육기반 조성, 농산어촌 교육역량 강화 등을 추진한다.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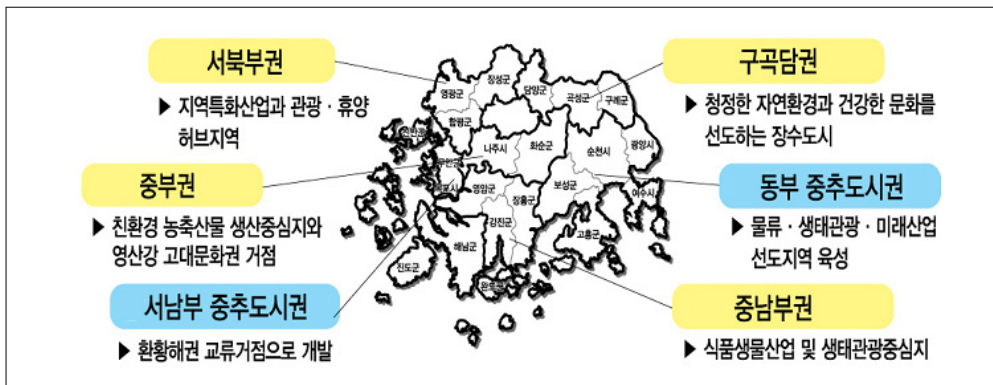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전라남도의 지역행복생활권은 지리적 인접성과 기능적·역사적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중추도시생활권 2개, 농어촌생활권 4개 등 6개 권역으로 구성하였다.

생활권별 비전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중추도시권 가운데 서남부권(목포·해남·무안·진도·신안)은 환황해권 교류거점이고, 동부권(여수·순천·광양·고흥·보성)은 물류·생태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 육성이다.

그림 3-14-2 전라남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농어촌생활권의 경우 구곡담권(담양·곡성·구례)의 비전은 청정한 자연환경과 건강한 문화를 선도하는 장수도시 조성, 중부권(나주·화순)은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중심지와 영산강 고대문화권 거점, 서북부권(함평·영광·장성)은 지역특화산업과 관광·휴양 허브지역, 중남부권(장흥·강진·영암·완도)은 식품생물산업 및 생태관광 중심지 등이다.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은 2014년 8개, 2015년 6개, 2016년 4개 등 총 18개 사업이 선정되어 6개 생활권에서 추진되었다. 서남부권은 취약지역 청소년들이 한 시·군에서 여러 시·군의 박물관·미술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동전시를 하고 있고, 동부권

은 편백림을 비롯한 숲을 활용하여 공동으로 치유 프로그램 전문교육, 진료 봉사단 운영, 숲속 순회 음악회 등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에 인접한 중부권은 도시의 유희인력과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연결시키는 도농 일자리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구곡담권은 농촌지역에 특히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3개 지자체간 협력으로 진로 적성검사와 적성개발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서북부권은 장성에 생활권 치매거점병동을 건립하여 생활권내 모든 시·군의 중증환자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중남부권은 완도 도서 주민들이 육지를 드나들 때 거쳐야 하는 장흥과 협력하여 항로 개설과 편의시설 설치를 공동으로 추진하였다.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지역생활권 활성화 관련 사업은 중심지 기능강화, 주민체감형 생활환경 개선, 지역주도 지역발전, 교통·물류망 개선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중심지 기능강화를 위해 목포, 순천 등 6개 지구의 쇠퇴한 시가지 활성화와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였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18개 시·군, 50개 지구의 생활편익, 문화·복지시설 등을 확충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주민체감형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새뜰마을(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 사업은 23개 지구 주민의 안전 확보, 생활·위생 인프라 확충, 노후·위험주택 정비 등을 추진하였다.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지역 3개 마을을 대상으로 LPG 소형저장탱크 시설을 구축하였고,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은 106개 지구에 수원지 축조, 취수·정수시설, 관로 설치 등을 추진하였다.

지역주도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우수 농촌공동체회사 17개소를 대상으로 영세 농가 소득 증대 및 농촌형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농촌활성화지원센터(목포대)는 마을의 유·무형 자원 및 주민역량을 조사·분석하고 주민주도의 마을 발전과제를 발굴·운영하여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 정책에 대한 인식제고에 기여하였다.

교통·물류망 개선을 위해 목포와 신안 다이아몬드제도를 연결하는 압해-암태 구간 0.9km와 77번 국도를 연결하는 화양-적금 0.6km 등 서남해안 연륙교가 단계적으로 건설되고 있다. 그리고 산업단지와 고속도로 간 자동차 전용도로망 구축을 위한 월전-중군 국도 건설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일자리를 도정의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한 결과, '2016 전국 일자리 종합대상'(전국 1위)을 수상하였다. 투자기업 보조금 대폭 확대 등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279개 기업(2조 9,424억 원)과 투자협약을 체결함으로써 9,113명 고용창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내기업은 포프리(식품가공), 모헤닉게라지스(수제자동차), 엘시스(에너지산업), 썬벨리그룹(관광) 등 277개사(전기전자 85, 철강기계금속 53, 식품가공 55 등)이고, 외국인 투자기업은 바스프(독일, 200억 원), FTA 기반 수출형 제조기업 HAM(중국, 100억 원) 유치와 투자유치 진행 6개사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청년 일자리의 산실인 빛가람 혁신도시는 「에너지 벨리」 조성 착수 2년여 만에 에너지신산업 입주기업 공장 가동과 제품생산, 연구기관 유치 등 기업유치가 가속화되고 있다. LG-CNS, GE코리아, ABB코리아, 누리텔레콤, 보성파워텍, 옴시스시스템 등과 국내·외 에너지신산업 선도 투자협약(협약 177개사, 실현 106개사)이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전남으로 유치한 업체는 132개사(에너지 69, 전력 ICT 30, 전력기자재 31, 기타 2)이다. 에너지신기술실증센터(1,000억 원 투자, 200명 고용창출 기대)는 나주혁신산단으로 유치되었다.

일자리창출을 위해 지역대표산업이 중점 육성되었다. 전남 주력산업(금속소재·가공, 바이오식품, 석유화학기반고분자소재, 에너지설비) 관련 전후방 중소기업지원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미취업자에게 지역산업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틈새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여 인력양성 교육 1,024명, 일자리창출 375명의 실적을 올림으로써 미취업자에 대한 효과적인 취업지원 및 기업 인력난 해소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역특성화산업 육성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 산하 전문 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역량강화, 중소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통해 지역 내 필요한 사업을 발굴·기획하였다.

특화발전 프로젝트로 추진되고 있는 서남해안 해양관광 육성사업 가운데 흑산도 소형공항은 총사업비 1,833억 원이 확정되었고, 2017년 보상비 및 착공을 위한 사업비 208억 원을 확보했다. 순천만 정원산업지원센터는 2017년까지 완공하기 위해 2015년 10억 원, 2016년 55억 원을 투입함으로써 순천만국가정원 일원을 국내 최대 규모의

정원산업단지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여수 정도 해양관광단지에 미래에셋 컨소시엄의 1조 1천억 원 규모의 투자결정으로 서·남해안 관광투자 계기를 확보하였다.

주민과 함께 섬을 아름답게 가꾸어 관광 자원화하는 「가고싶은 섬」가꾸기는 5개년 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하여 명품섬 길 복원, 폐교·마을 창고 리모델링, 꽃·나무 식재, 조형물 제작·설치 등을 추진하였고, 전국 최초로 섬(2,165개 섬) 자원을 데이터 베이스화 하였다. 그 결과 2016년 6개 「가고싶은 섬」에 대한 방문객 수는 597천명에 이르게 되었다.

농림어업 취업자 비율이 23.3%(2016년)에 이르는 전남도는 농산어업 경쟁력 강화가 1차 산업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대내외 농업환경변화에 대해 신속 대응하고 특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비교우위 품목 경쟁력 제고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 및 소득창출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어업기반정비사업은 8개 내역사업 추진을 통해 어촌지역의 수산업 생산 활동에 필요한 어업생산기반시설, 어항기반시설, 수산자원회복시설 설치·정비 등 기초 인프라 기반 확충에 기여하였다.

일자리창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창조경제의 구현 및 확산이다. 산업단지 지정 면적이 전국 2위인 전남에서는 산업단지의 고도화를 통해 창조경제가 구현되고 있다. 대불산업단지는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과 산단 편의시설 확충사업이 추진 중이고, 여수산업단지는 산학융합지구, 혁신지원센터, 클라우드사업 등 3개 혁신사업 시행 계획이 승인되었다.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를 위해 대불산업단지는 기술개발 역량제고를 위한 네트워크 고도화, 특화기자재 및 대중소 공동협력사업 발굴, 글로벌 해외마케팅 영역 확장을 시행하였고, 여수·광양산업단지는 사업화 촉진 프로젝트 그룹 구축 및 운영, 연구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고도화, 발굴과제 사업화 및 자립 역량강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였다.

창조경제의 지역확산은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농수산 생산 및 가공 창업 육성·지원 54회, 국내·해외(K-Food) 농수산 식품 판로 지원 52개사, 관광상품(K-Tour) 판로지원 24건, 바이오화학 기업 육성 : 14개사, 취업 및 위업교육 741명 등의 성과를 거두었고, 이를 통해 농수산 특화 창업·벤처 활성화, 웰빙 관광지 육성, 바이오화학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창조경제를 견인할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 사업은 목포대의 해상풍력, 신해양산업과 동신대의 문화관광, 생명바이오, 에너지 환경산업 등의 분야에서 취업 및 창업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특성화 분야 인력을 양성하였다.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을 통해 산학협력 가족회사가 2016년까지 1,110개 운영되었고, 현장실습 프로그램 지원 3,531명, 국제인증교육 프로그램 등 인력양성 29,007명을 달성하였다.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으로 육성된 전남도립대는 기업체 취업을 전제로 교육트랙을 개설, 운영하여 산·학이 만족도가 높은 취업프로그램을 수행하였다.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은 동신대의 지역문화콘텐츠·웰에이징메디스파, 목포대의 해양레저스포츠·친환경바이오융합, 순천대의 인문고전·광양만권경제특구 등의 분야에서 인재 양성을 위한 기본 인프라를 조성하였다.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전남과학대, 전남도립대, 청암대)은 지역사회 및 산업과 연계한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취업률을 높였고, 지역혁신 창의인력 양성사업(목포대, 순천대) 추진은 대학의 기술정보·인력 활용을 통해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기업 운영 5개교, 창업동아리 10팀 운영으로 학생들의 기업 마인드 함양에 기여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학교기업에 대한 예산 지원에 애로를 겪었다.

또한 농어촌지역 중심 고등학교 22개교에 학력증진 공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력 제고에 기여하였다. 농산어촌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통학불편 해소 등을 위해 초·중교 10개교를 대상으로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 동문회 등이 함께하는 지역협의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학교 살리기’에 대한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하였다.

평생학습은 평생학습도시 지원 12개 시·군, 행복학습센터 지원 39개소 등 지역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고, 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대학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인프라는 지역 수요에 맞춘 특화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활용되었다. 평생학습은 도민의 행복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제인 만큼 도-교육청간 연계 강화와 국가-도-시·군의 긴밀한 협력체제 속에서 추진하고 있다.

4. 지역 문화 육성, 생태복원

지역 문화 육성을 위해 지역문화역량을 강화하고 특성화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이 추진되었다. 3D 프린터를 활용한 학습용 증강현실 앱, 인포테인먼트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컨테이너 상용화, 3D 애니메이션 ‘품바’ 등 문화관광 인포테인먼트 콘텐츠 고도화와 시제품 개발이 이루어지고, 수행기관 종업원 수 증가 29명과 매출액 증가 2,495백만 원을 달성하였다. 이를 통해 콘텐츠의 글로벌화로 지역콘텐츠 업체의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 기반 대표 인포테인먼트 콘텐츠 개발로 지역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은 맞춤형 문화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루어졌다. 영화관이 없는 고흥, 장흥 지역에 작은 영화관 조성으로 도민의 문화 수준 향상에 기여하였다. 작은 도서관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독서공간과 문화사랑방으로 활용되었다. 생활체육광장은 36개소 운영으로 운동을 생활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또한 공공문화 기반시설은 100만명당 94.18개소로 증가하여 지역민의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되었다.

농촌 전통문화가 깃든 고유 농업유산 자원을 발굴·보전·관리하여 농촌의 다원적 가치 증진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다. 세계중요농업유산(완도 청산도 구들장 논) 및 국가중요농업유산(구례 산수유농업, 담양 대나무밭)의 안정적 관리는 전통 농업자원을 활용한 다원적 가치 증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농경지 5,523ha에 경관작물 재배를 통한 농촌경관 개선은 도농 교류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였다.

전남의 우수한 자연경관 가치를 극대화하고 소득·경관수종의 식재와 가꾸기로 공원 같은 「숲속의 전남」을 만들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었다. 「숲속의 전남」만들기 중장기 세부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호두숲 110ha, 동백 100ha, 황칠 410ha, 마을숲·학교숲 등 79개소를 대상으로 소득을 높이며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는 숲으로 조성하였다.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복지 서비스는 수요자에 따라 차별적인 내용과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먼저 고령화되어 있는 농촌 주민에 대한 맞춤형 기초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이 759개소에서 추진되어 여성농업인의 농번기 가사부담을 줄이고 영농참여를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였다. 면단위 공중목욕장 120개소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운동, 목욕, 검진 및 치료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취약 지역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였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의 운영 확대는 맞벌이, 한부모,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 779명의 복지·보호·지도를 강화하고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였다. 방과 후 돌봄서비스는 추진기관간 연계체계 운영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기반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 민간어린이집 매입 전환으로 신축비용을 절감하였다.

청소년시설은 선호하는 기능보완 및 프로그램 제공으로 이용객 만족도를 76.7%로 높이고, 지역내 공사현장 근로자 및 신규시설 내 운영 종사자 채용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다문화가족 자녀에게는 대상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 정도를 평가하고, 언어발달 지도사 23명의 전문성 평가 개선을 통해 서비스 수준을 높였다.

의료취약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의료환경이 개선되도록 하였다. 필수의료서비스인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안정된 출산 및 의료환경이 구축되고 19,163명이 이용하였다. 공공산후조리원 1호점(해남병원)은 이용객 275명으로 도내의 저소득층 가정의 출산과 양육 환경 개선 및 경제적 비용 경감에 기여하였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은 32개소 지원되었고 미충족 응급의료기관 점검 및 정비활동을 통해 시설, 인력기준을 확보하였다. 응급의료기관수는 24개소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많지만, 상대적으로 응급의료기관이 열악한 군 지역 중심으로 응급의료기관 육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제4절 향후 추진계획 및 과제

생활권, 일자리·경제, 교육, 문화·생태, 복지·의료 등 5대 분야별 2017년 중점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다.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분야에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시가스 공급, 상·하수도 시설, 주민 안전,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초점을 맞춰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도서·벽지 등 교통 소외지역 교통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은 연계·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체계를 확립하여 공동 추진함으로써 지역생활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분야에서는 전남의 주력산업인 금속소재·가공, 바이오식품, 석유화학기반 고분자소재, 에너지설비 분야를 중점 육성한다. 또한 주요 정책사업 및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고용친화적 정책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반영하는 일자리 영향평가제를 추진한다. 지역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전남의 비교우위 자원인 바다, 섬, 해안, 갯벌 등 다양한 해양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특화형 해양관광 명소로 조성하고 연안크루즈 등 다도해를 활용해 미래형 해양레저기반을 구축한다.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분야의 경우 통폐합 추진 권장기준에 해당하는 학교의 경우에도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하게 추진하고, 농어촌 우수중학교의 교육 향상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산학협력 선도대학 및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을 통해 취업 및 창업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특성화 분야 인력을 양성한다.

지역문화 육성, 생태 복원 분야에서는 지역이 보유한 전통문화예술자원을 기반으로 관련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영화관이 없는 시·군에 작은 영화관을 조성하는 등 도민의 문화 향유권을 지속적으로 실현한다. 주민과 함께 「가고싶은 섬」 10개를 아름답게 가꾸어 관광 자원화하고, 「숲속의 전남 만들기」를 통해 소득·경관수종의 식재와 가꾸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분야는 지역맞춤형 복지 지원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에게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공동 난방·취사로 경비를 절감한다. 안정적인 분만환경 및 인프라 구축으로 임신·출산 등 사회 친화적 분위기 확산과 농어촌 지역 출산율을 높이고, 지역상황에 맞는 응급의료기관 육성 또는 당직의료·야간진료기관 지정 등으

로 응급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같은 분야별 중점사업과 함께 지역 주민의 행복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분야간 융복합 및 지역간 연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처별 사업의 융복합과 지자체별 사업의 연계가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제15장 경상북도

제1절 경상북도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경상북도의 인구는 2016년 기준 270만명으로 2013년에 비해 변화가 없었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국 연평균 성장률보다 낮은 연평균 3.0%로 증가하여 2015년 기준 66조원을 기록하였다. 1인당 GRDP는 3,581만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연평균 성장률은 3.0%로 전국 성장률을 하회하였다. 수출액은 전국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북의 경우 2013년 538억 달러와 비교해 2016년은 385억 달러로 크게 하락하였다. 재정자립도는 33.3%로 2013년의 28.0%에 비해 5.3%p 높아졌으나, 전국 재정자립도인 52.5%를 크게 하회하였다.

표 3-15-1 경상북도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경북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증가율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증가율
지역내총생산 (십억원)	1,430,255	1,485,505	1,563,668	-	4.6	89,132	92,697	94,617	-	3.0
인구(천명)	51,141	51,328	51,529	51,696	0.4	2,699	2,701	2,703	2,700	0.0
1인당 GRDP(만원)	2,848	2,946	3,089	-	4.1	3,375	3,511	3,581	-	3.0
수출액 (백만달러)	559,632	572,665	526,757	495,466	-4.0	53,765	51,476	43,458	38,521	-10.5
취업자(천명)	25,066	25,599	25,936	26,235	1.5	1,386	1,420	1,412	1,420	0.8
재정자립도 (%)	51.1	50.3	50.6	52.5	0.9	28.0	29.1	30.0	33.3	5.9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이며, 2015년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 산업 현황

경상북도의 산업별 비중은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47.7%, 제조업 46.1%, 광업·농림어업 6.2%로 나타나 17개 시·도 중 울산, 충남에 이어 세 번째로 제조업 비중이 높았다.

2014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금속가공제품’이 13.3%로 가장 높았으며, 종사자수 및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가 각각 20.0%, 39.8%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도 ‘1차 금속’,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기계 및 장비’,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등의 비중이 높았다.

2013년과 비교할 때, ‘금속가공제품’, ‘전기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는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모두 증가한 반면,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비금속 광물제품’은 감소하였다.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의 경우 사업체수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종사자수 및 생산액 비중은 감소하였다. ‘기타 기계 및 장비’의 경우 사업체수는 감소하였으나, 종사자수 및 생산액은 소폭 증가하였다.

표 3-15-2 경상북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3년			2014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5.1	3.9	4.7	4.5	3.8	4.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9.7	8.0	4.0	9.1	7.9	4.4
비금속 광물제품	6.3	5.0	2.9	6.0	4.7	2.7
1차 금속	6.9	11.1	21.6	7.2	11.3	21.6
금속가공제품(기계·기구 제외)	13.0	8.9	4.7	13.3	9.7	5.2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7.1	21.5	39.7	7.2	20.0	37.8
전기장비	4.2	4.8	3.7	4.6	5.2	4.0
기타 기계 및 장비	11.5	6.9	3.0	11.2	7.0	3.1
자동차 및 트레일러	9.6	11.6	6.7	11.0	12.1	7.4

주 : 2015년, 2016년 자료는 없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2014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38.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수 및 매출액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35.5%, 31.6%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의 업종 비중이 높으며,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의 매출액 비중이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것이 특징이다.

2013년과 비교할 때, 사업체수 기준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증가한 반면, '교육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감소하였다. 종사자수 기준은 전반적으로 업종별 비중 변화가 크지 않았으며,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반면,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은 감소하였다. 매출액 기준은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이 증가한 반면,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감소하였다.

표 3-15-3 경상북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3년			2014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1.5	3.4	13.4	1.6	3.5	14.4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3	1.9	5.0	1.4	1.8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9.8	7.2	9.9	10.6	7.4	9.6
사업지원 서비스업	4.5	14.7	11.7	4.9	14.0	12.4
교육 서비스업	16.7	9.7	6.2	16.2	9.3	6.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4.5	34.7	31.5	14.6	35.5	31.6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12.1	8.7	8.5	11.8	8.8	8.3
기타 개인 서비스업	39.7	19.8	14.0	38.9	19.7	13.6

주 : 2015년, 2016년 자료는 없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3. 혁신활동 현황

경상북도의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 연구개발비 2.7조원, 연구개발인력 25,341명, 연구개발조직수 1,456개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인력,

연구개발조직수 모두 2013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특히 연구개발조직수는 연평균 24.9%의 빠른 증가세를 보이며, 2년 전에 비해 523개가 증가하였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3년에 비해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과 연구개발조직수 모두 증가하였다. 연구개발비의 경우 0.44%p, 연구개발인력은 0.12%p, 연구개발조직수는 0.52%p 증가하여 각각 4.04%, 4.09%, 3.90%로 나타나, 광역도 지역 중에서는 연구개발 현황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5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6,858건이며, 등록은 4,491건으로 2013년에 비해 특허 출원 및 등록건수 모두 감소하였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3년에 비해 특허 출원건수 0.67%p, 등록건수 0.34%p가 감소하여 각각 4.10%, 5.88%로 나타났다.

표 3-15-4 경상북도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연평균증가율
연구개발	연구개발비	2,135,540 (3.60)	2,696,556 (4.23)	2,667,983 (4.04)	11.8
	연구개발인력	22,616 (3.97)	24,393 (4.03)	25,341 (4.09)	5.9
	연구개발조직수	933 (3.38)	1,201 (3.75)	1,456 (3.90)	24.9
특허	출원	7,634 (4.77)	7,235 (4.41)	6,858 (4.10)	-5.2
	등록	5,946 (6.22)	5,723 (5.88)	4,491 (5.88)	-13.1

주 : ()는 전국대비 비율임. 2016년 자료는 없음.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경상북도는 찬란한 신라 천년의 불교문화와 신비의 가야문화 그리고 선비정신의 유교문화 등 민족 문화의 본산지이자 한국 문화의 얼굴이다. 또한, 새마을운동과 자연보호운동 등 국민정신운동의 발상지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수려한 자연경관, 335km에 달하는 긴 해안선과 청정 동해 등 다양한 잠재력과 개발수요를 간직하고 있고, 세계적인 철강, 섬유산업의 중심지로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으며, 수도권 다음으로 많은 대학(38개)이 소재하여 풍부한 연구인력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풍부한 문화자원(전국 문화재의 20%)과 천혜의 관광자원, 지역의 높은 문화적 역량을 바탕으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세계적인 문화·관광중심지로 가꾸어 나가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지역이 낙후지역으로서 균형발전이 필요하나 수도권 규제완화, 인력 및 기업의 역외 유출로 성장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북은 지역민이 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선도하여 지역생활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청을 안동으로 이전하였으며, 성공적인 도청신도시 조성을 위해 1단계, 2단계, 3단계 등 단계별로 명품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권역별로 균형발전을 위하여 북부권은 미래농생명산업벨트, 서부권은 스마트 융복합벨트, 동해안권은 환동해 해양신산업벨트, 남부권은 창의지식서비스벨트 구축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사통팔달의 강력한 '동서성장축'인 한반도 허리경제권을 육성하여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에 앞장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경북·포항 두 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주축으로 창조경제의 역량을 강화하고, ICT융복합·로봇·에너지·물융합·첨단의료 및 바이오 등 5대 주력산업 육성과 경북의 미래를 선도할 미래 신성장산업 및 ICT 전진기지 구축에 힘써야 한다.

그리고 신라, 유교, 가야 문화의 풍부한 전통 문화자원을 명품브랜드로 발전시키고, 이를 활용한 경북만의 테마형 관광상품 개발 및 수용태세 개선을 통한 관광객 유치로 경북관광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또한 주민 밀착형 문화서비스 제공 및 문화기반 확충을 통해 도민의 생활 속 문화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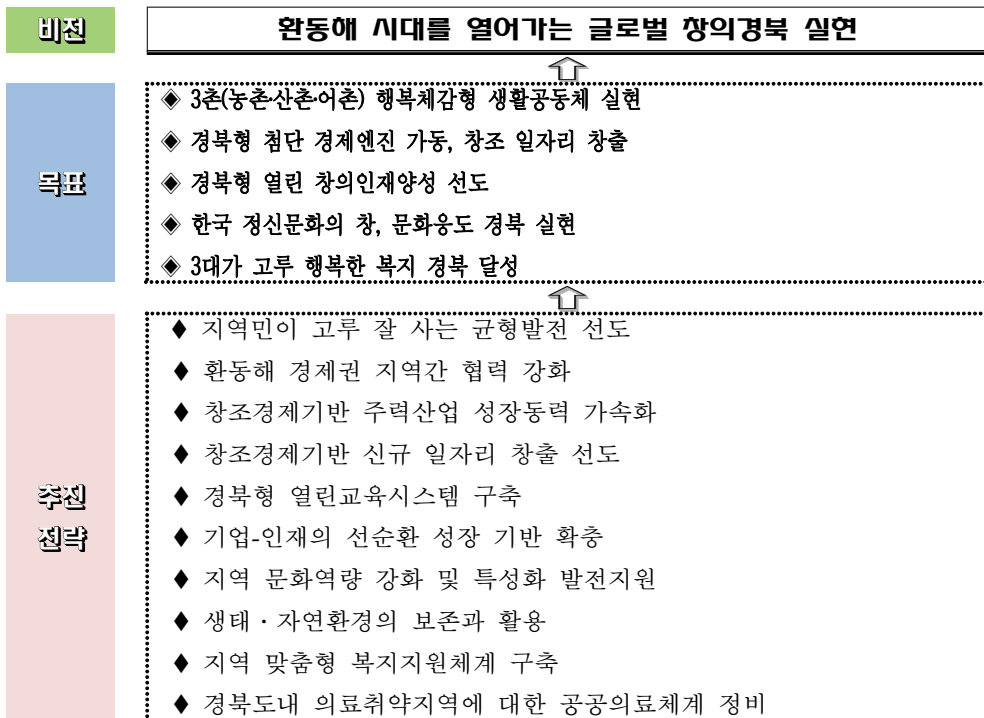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더불어 사는 경북을 위해 현장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강화, 자활사업을 통한 생산적 복지 실현, 어르신을 위한 서비스 기반 강화, 장애인 사회참여 환경 조성 등 취약계층별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경상북도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 우수한 인적자원과 첨단과학·산업기반 구비 등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다. 이와 같은 발전잠재력을 기반으로 설정한 경북지역의 발전계획의 최종목표는 ‘환동해 시대를 열어가는 글로벌 창의경북 실현’이다. 이는 환동해 경제권 국가 간 협력강화 및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도약과 경북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통한 행복한 경북실현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주민체감형 행복 생활 공동체 실현’, ‘경북형 첨단 경제엔진가동, 창조일자리 창출’, ‘경북형 열린 창의인재양성 선도’, ‘한국 정신문화의 창, 문화융도 경북실현’, ‘3대가 고루 행복한 복지 경북 달성’을 5개 목표를 설정하였고, 5대 분야·21개 실천과제 추진을 통한 경북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그림 3-15-1 경상북도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2. 추진전략

경상북도는 지역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안동·예천 도청이전 신도시 중심으로 인구 10만명의 거점도시 조성을 계획하고, 구미·김천권(지식경제 기반), 포항(과학), 경주(역사문화) 등과 연계하여 안동, 구미, 포항 3대 중추도시 생활권 중심 거점도시 조성 및 거점-중소도시 간 상생(Win-Win)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도농연계 생활권 및 농어촌 생활권내 특화사업을 발굴, 주민 실생활 밀착형 기초 인프라 확충 및 특화사업 발굴을 통해 주민 체감형 행복 생활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삼고 있다.

산업경제 측면에서 창조경제에 기반한 지역특화산업 육성으로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구미 IT융합산업 첨단화, 포항 철강 단일산업의 다변화 방안을 모색하고 그린에너지, IT융·복합산업 등을 통한 경북 미래첨단엔진 가동, FTA에 대응한 글로벌 농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기술주도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창조경제 지역생태계 구축, IT융합 창조생태계기반인 바이오, 원자력,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력양성은 창조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사업 및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등을 추진하여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과 대학 간 연계활성화를 통한 실질적 효과 극대화를 추진하고, 지역대학 및 연구소, 기업 등이 상호 연계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지방대학의 경쟁력 제고 및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경북지역의 우수한 문화자원과 산림·해양자원 등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전통적 삶·문화·자연을 연계한 경북만의 킬러 문화콘텐츠 개발로 경북관광 브랜드화를 추진한다. 또한 환동해경제권 형성에 따른 경북 동해안의 역할과 역량을 강화하고 자원개발 산업·해양에너지산업·해양융합산업·해양레저 및 휴양산업 등을 중점 육성하여 신성장 동력 창출을 통한 동해안 미래발전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행복한 복지 경북 달성을 위해 여성, 장애인, 아동, 청소년, 저소득층 스스로가 역량을 키우고 함께 나서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상호 호혜적 공동체를 구축한다. 또한 지역사회구성원이 주도하여 지역기반 공동체를 형성하고, 각종 사회적 위험을 함께 예방하고 해결하는 선순환 복지사회 구현에 힘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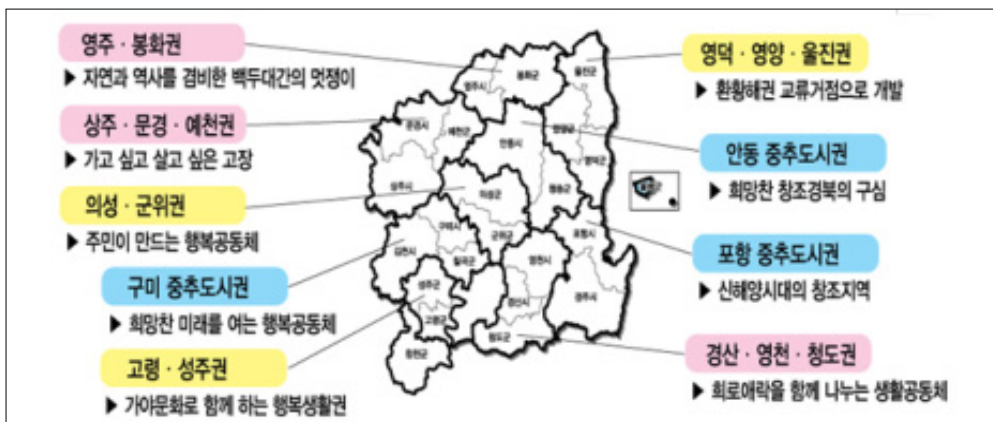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경북지역의 지역행복생활권은 13개 생활권으로 도청 신도시를 중심으로 9개 생활권과 타 시·도 연계 4개 생활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오투어리즘을 활용한 동해안권 친환경 통합관광 활성화사업, 산골 철도역사 문화관광자원화 사업, 낙강선유(落江船遊) 휴(休)벨트 조성 사업, 스포츠를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 사업, 삼도봉 권역 호두 특화산업단지 조성 사업, 백두대간 영서 에코힐링 벨트화 사업이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문화, 관광, 복지,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

그림 3-15-2 경상북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경상북도는 도민 모두가 행복한 생활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3촌(농·산·어촌) 및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기초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해 도시가스망 및 마을 상하수도 보급 확대에 노력하였다. 농어촌마을단위 3개소에 LPG 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하였으며, 도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 슬레이트 해체·처리(3,090동) 및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추진하였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를 통한 농어촌생활용수개발 32개소, 소규모 수도시설개발 67개소, 도서지역식수원개발 1개소, 고도정수처리시설 2개소 등을 확대 설치하였으며, 토지계·축산계 등에서 배출되는 비점오염물질의 저감으로 탁도 50NTU(임하담 말단 지역) 유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4개소 운영)을 통해 가축분뇨 처리율 5% 향상 등 농어촌 등 소외지역의 환경기반시설 확충에 힘썼다.

지역자원 및 자산 기반의 사업으로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창조적 지역개발을 도모하여 2016년 23개 마을기업 육성 등 3년간 총 69개 마을기업을 육성하였으며, 농촌공동체회사 8개소 조성, 마을리더 교육, 현장 포럼을 통해 농촌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생활밀착형 연계사업으로 팔만대장경 이운순례길, 외씨버선길, 낙강선유 휴벨트 등 지역 공유자원 활용을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협의체를 통하여 연계협력을 촉진하였으며, 농촌지역 여성 유희 노동력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주민 수요 맞춤형 사업을 중점 추진하였다.

2016년 6,508가구(10,673명)가 귀농하여 인해 귀농귀촌 7천 가구 도내 유치(11,200명) 목표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농산물의 단순 생산에서 탈피하여 2·3차산업과의 융복합화를 통한 농업의 새로운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였다.

또한 문화·환경·복지가 충족되는 아름다운 농촌중심지 조성을 위하여 79개 읍면을 선도지구로 선발하여 종합 정비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간선도로, 철도 등 생활권 간 통행편의 제고를 위해 양질의 교통 네트워크 구축에 힘썼다. 특히, 2016년에는 울산-포항 고속도로, 상주-영덕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어 지역간 교류 활성화에 이바지하였으며, 2015년에는 다산-화원간 광역도로 역시 송곡교, 월성교, 노강교 건설이 완료되는 등 교통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국가 기간도로망 기능보강 등 교통 인프라 구축 및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L=50.89km의 지방도를 건설하였으며, 대구·경산지역 근로자(13만명) 및 4개 대학 통학생(3.5만명) 교통편의 제공으로 광역교통난 해소를 위해 대구 안심역-경산 하양역까지 L=8.77km 연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경상북도는 지역산업 육성, IT, 자동차부품, 탄소/타이타늄, 3D프린팅, 로봇산업 등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투자유치확대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역량을 경주하였다. 청년실업 극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청년취업과'를 신설해 도내 10개 상공회의소 3천 900개 회원사가 1사(社) 1청년 더 채용하기, 경북청년 CEO양성 프로그램, 공동체 일자리 등 다양한 시책을 운영했으며, 지역산업 등과 연계된 지역 고용정책 토대를 마련하여 고용률 62.1%, 취업자는 142만명으로 전년에 비해 8천명(0.5%)이 증가했다.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일자리 정책인 '경상북도 Smart 두레공동체'는 도시의 취약계층이나 유휴인력들을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연결해 줌으로써 도농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해 주는 사업으로, 교육 1,905명 및 취업 1,347명을 매치하여 고용창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지난해 고용노동부 주관 취약계층 고용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을 가장 잘 육성한 지방자치단체로 경상북도가 선정되었다. 2014년 134개 기업 127명, 2015년 107개 기업 715명, 2016년 97개 기업 71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또한, '사회적기업 종합상사'를 지난 5월 출범시켜 기업의 영업과 마케팅을 지원하였다.

경북은 지역 특성을 살려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성장산업들을 육성하고 있다. 동해안지역의 에너지산업, 남부권의 부품·소재산업, 북부지역의 바이오·생태산업은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자원과 산업의 조화로운 결합을 통해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융합기술산업의 특화와 R&D, 산업화 기반확충을 위해 각 지역과 산업을 연계한 첨단융합산업 벨트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산지역에 국내 최대의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12만2천㎡에 평가·연구·시험·인증기능을 원스톱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융복합센터 조성과 함께 건설기계·부품산업 특화 전용단지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간 9천 151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설계지원센터를 완공하였고, 건설기계부품 융복합센터를 착공하였다.

영천지역은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항공전자 시험평가센터 건립을 2017년까지 37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보잉사의 영천 MRO센터 건립사업

은 2014년 4월에 착공하여 2015년 5월 완공 후 본격 가동 중에 있다. 동 센터는 보잉사가 아시아 지역에는 처음으로 건립하는 항공기수리정비개조센터로서 최대 1억 달러까지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북 서남부지역에는 1차 소재, 조립금속(기계, 자동차) 및 전기, 전자부품, 소재산업이 발달해 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집적된 IT 기반과 기술의 융·복합화를 가속하여 기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있으며, 특히 IT의료 융합기술센터 준공, 생체신호 의료기기 관련 장비 구축(25종 27대) 등 IT기술 기반의 바이오, 메디컬기술을 융합한 신성장 동력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경북 북부지역은 수려한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생태산업의 창출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안동지역에는 지난해 3월 경북도청이 안동지역으로 35년만에 이전함에 따라 낙후된 북부지역에 성장동력이 되었으며, 동서발전 축을 형성하였다. 청정지역의 안동은 국내 백신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여 국가차원의 백신 생산 및 공급 지원을 위한 백신산업 광역클러스터를 구축하여 바이오산업 선진화와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3년 7월 안동에 SK케미칼의 안동백신 제2공장 설립을 유치하였고, 이에 따라 국비 1천 83억 원이 2020년까지 안동 북부권에 투입될 예정이며 2016년 2월에는 우리나라에 본부를 둔 첫 국제기구인 ‘국제백신연구소(IVI)’ 안동분원을 설치하여 다가올 바이오 경제시대에 대비하고 세계 5대 백신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영주지역에는 High Tech 베어링 시험평가센터 착공을 위해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경북이 국내 최대의 원전 현장이라는 강점을 기반으로 하여 경주, 포항, 영덕, 울진 등 경북 동해안을 세계 최고수준의 안전한 원전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인력·산업이 집적된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농산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 유·무형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농어업과 2·3차 산업간 융·복합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였다. 농축산물체험전시 지원, 농축산물생산유통기반 구축, 농업 6차 산업화, 농촌테마공원조성, 농공단지 조성 및 개보수,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등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을 통해 농기업체의 총 매출액이 전년도 대비 5.21%가 증가하였고, 참여농가의 소득액도 1.27%가 증가하였으며, 지역 일자리가 100명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나타냈다. 또한 2014년부터 농

농촌체험 방문객 111만명, 체험마을 보험가입 85개소, 마을사무장 55명 채용으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및 향토산업육성을 통한 농촌지역 일자리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산지가공시설 81개소 조성(460억 원), 수산물 위판장시설 2개소 조성(20억 원)하여 어업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에 노력하였으며, 어초수산물원 어획량 전국대비 4%, 어가소득 42,332천원(목표대비 1,317천원 초과)을 달성하여 어가소득 증대를 이루었다.

또한 사과, 딸기, 화훼, 잡곡 등 4개 산학협력단을 구성 운영하여 수출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여 2016년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하였으며, 통합브랜드(김천앤)를 사용하여 과실출하 17,787톤 달성 등 광역공동브랜드 육성과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 및 붉은대게 식품단지 조성 등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기반 정비에 힘썼다.

자연휴양림 조성(18개소), 도시숲조성(녹색쌈지숲 1.4ha, 산림공원 24.4ha, 가로수 57.7km 등), 산림욕장 조성(20개소),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2개소), 유아숲체험원(10개소)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휴양, 교육, 문화, 치유, 일자리 등 국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경상북도는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의 공생발전 및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사업을 추진하는 8개 대학교에 국비·도비 244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다. 기술이전과 사업화역량이 특화된 ‘기술혁신형’ 대학에는 영남대학교가 선정되었고, ‘현장밀착형’에는 금오공과대학교, 대구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한동대학교가 선정되었으며, 또한 전문대학 지원사업으로 ‘산학협력 선도형’에는 구미대학교가, ‘현장실습 집중형’에는 안동과학대학교가 선정되었다.

취업중심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해 경북권내 12개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기업수요, 특성화고 학사인정 등을 반영하여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글로벌 인재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대학과 선도산업 및 지역특화산업간 산학연 연계를 통한 지역발

전에 필요한 우수 인재를 양성·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도민들이 전 생애에 걸쳐 능력개발을 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등을 확충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학습기회를 제공하였다. 37개 읍면동에 행복학습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전 시·군에 확대 지원(23개소)하였으며, 소외계층 프로그램 지원(10개 시·군, 12개 사업),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개최(포항시),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원 지정·운영(대구대학교) 등을 통해 마을 평생교육 활성화 및 도민의 평생학습 욕구를 충족시켰다.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정부는 문화를 통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문화융성을 국정기조로 제시하였고, 이에 경상북도에서는 풍부한 문화자산을 바탕으로 경북만의 ‘한국 정신문화의 창, 문화융도 경북실현’ 전략을 추진하였다.

지방 최초로 경북형 문화융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3대 역사문화권과 생태문화권을 융합, 역사와 생태의 특화 전략을 추진하였으며, 옛 것을 활용하여 관광자원화하여 문화를 통한 지역 재생에 힘썼다. 또한 실크로드 및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지속적인 발굴로 경북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 조성을 위해 유교문화 글로벌 브랜드화, 신라 천년문화 재현을 통한 정체성 확립, 신비한 가야문화 재발견과 네트워크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경북의 빼어난 녹색자원을 활용한 강·산·바다 녹색관광 상품화를 추진하기 위해 낙동강의 풍부한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리버 관광지구 조성, 해양자원과 산림·휴양자원을 연계한 자연치유 휴양벨트 조성 및 네트워크화, 문화권과 생태자원이 연계된 도시관광 비즈니스 허브기능 강화 등을 추진하였다.

주민의 문화 향수권 확대를 위해 삶의 질을 높이고자, 26개 사업 21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문화시설 건립 및 리모델링 사업 21건(도서관4, 박물관1, 문화예술회관6, 문화원1, 문화예술인 기념시설3, 전통문화시설3)을 추진하였으며 체육진흥시설 지원을 통해 도민이 건전한 체육·여가활동의 장을 마련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다.

지역특화 문화행사 지원으로 추진된 2015경주실크로드 문화대축전은 47개국이 참

여, 146만명이 관람함으로써 경북의 문화를 명실상부한 세계적 문화브랜드로 육성하였으며, 2016년에는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 ‘경북도청 개청식’, ‘경북도민한마음 열린음악회’, ‘2016 중국인 대구경북 방문의 해’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27.5만명을 유치하였다.

최근 생태관광·체험에 대한 지속적 관심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함으로써 생태관광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생태계와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복원 및 자연친화적 생태공간 조성을 위하여 수질개선 및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오염된 퇴적물 제거, 차입관로 정비, 생물서식지 및 산란처 확충 등 생태계복원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으며,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기업환경지원사업, 환경교육,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영천·영덕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안동시 등 9개 시·군에 낙동강 풍경 트레일 조성(126km), 봉화군 등 10개 시·군 낙동정맥 트레일(378km) 조성 등을 통해 백두대간과 낙동정맥을 활용한 휴양 및 녹색공간을 확충하여 지역 연계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경상북도는 2013년부터 복지전달체계를 선도적으로 개편하였다. 동 주민센터를 체감도 높은 맞춤형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해 경북형 복지허브로 만들기 위하여 10개 시, 2개 군에 도 자체 시범 동 주민센터를 선정하였다. 23개 시·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인적안전망을 구축하였으며 읍면동 기능강화를 위한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199개 읍면동) 설치운영 및 신규 복지인력을 확충(169명)하였다. 또한 주민에게 직접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복지행정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좋은 이웃들’을 구성하고 이동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다.

기초수급자, 노인, 장애인, 결혼이민여성 등 취약 계층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산적 복지, 일자리 지원 등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였다. 안전에 취약한 독거노인·중증장애인가구를 대상으로 안전 모니터링 실시 및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응급센서(활동·출입감지, 화재감지, 가스유출감지 등)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으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독거노인에게 주1회 직접방문, 주 2회 유선전화로 복지사각지대의 틈새를 메워주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행복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고 도민들의 인식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2012년부터 추진한 ‘찾아가는 행복병원’ 사업은 포항·김천·안동 3개 의료원별 주 2회 순회 진료를 통해 의료취약계층 38,052명에게 무료 건강검진서비스 제공하여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였다. 오·벽지 응급환자의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2013년 7월부터 닥터헬기를 운영하여 응급환자 1,200명을 이송하였으며, 의료관광 우수병원을 8개소 지정하여 의료관광산업의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지역사회 정신보건 기반구축 및 통합적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경상북도 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동국대 경주병원)하였고,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를 2개소 확대(상주시, 문경시)하였다. 또한 도내 방문건강관리사업이 2014년 265,622건, 2015년 290,962건, 2016년 271,196건 제공되었고, 구강보건실을 76개소 운영하여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분만 취약지 12개 시·군에 순회·외래·분만 산부인과 운영으로 121,850명이 이용하였으며 553명이 분만하여 사각지대 없는 의료혜택을 제공하였다.

또한 청소년 교육 및 복리증진을 위한 활동지원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연계하여 노후화된 시·군·구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하여 준공년도, 시설안전도,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보수를 하였다. 경쟁 고용이 어려운 지역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자립기반 조성 및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고하였으며,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손주와 조부모간의 만남을 통하여 세대 간의 공감과 소통을 증대하고, 격대(인성)교육을 통한 인성회복과 가족공동체 복원을 위해 2014년 10월 ‘할매·할배의 날’을 선포하고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을 ‘할매·할배의 날’로 지정하여 가족공동체 회복 100일 프로젝트, 길거리캠페인, 연극단 운영, 손주맞이 조부모교육 시범마을 지정·운영 등을 통해 세대 간의 소통과 공감확산에 힘썼다.

제4절 향후 추진계획 및 과제

경상북도는 2016년 3월 도청이 안동으로 이전하여 세종시와 더불어 ‘한반도 허리경제권’을 구축하여 국토의 통합적 발전의 핵심이 될 것이다. 경북은 기업의 투자가 지역의 일자리로 연결되는 선순환의 경제생태계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앞으로 IT, 항공, 자동차 부품, 레저서비스 등 고용효과가 큰 유망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과 기술, 인력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경북·포항 두 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제조업을 대혁신하고 전통문화자산의 문화산업화, 농어업의 6차 산업화를 실현하고, 꿈의 소재라 일컫는 탄소섬유와 미래 신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3D프린팅을 경북의 2대 신산업으로 발전시키고 ICT융복합, 로봇, 에너지, 물 융합, 첨단의료 및 바이오를 5대 주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여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안동의 경북바이오산업단지를 중심으로 SK케미칼 안동백신공장 및 혈액제제공장, 국제백신연구소 안동분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경북바이오벤처프라자) 등 국내 최대의 바이오 백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가는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도가 심혈을 기울여 유치한 포항의 ‘4세대 방사광가속기’의 완공을 계기로 녹십자, 신풍제약, 제넥신 등 국내외 제약기업과 지역의 산·학·연이 함께 가속기 기반 신약 개발 및 산업육성을 위한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협의체’를 구성했다. 포항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경북신약개발지원센터, 신약개발디자인연구소 등을 만들어 신약개발 관련 클러스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동해안을 국가차원의 원자력 R&D 허브로 조성하여 국제원자력인력양성원, 원자력기술표준원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원전 해체기술 종합 연구센터를 유치하여 국내 유일 전주기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며, 세계 유일의 3대 가속기 클러스터, 과학벨트 DUP 연합캠퍼스를 기반으로 한 첨단 과학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그 밖에 정부 지역발전 정책의 핵심인 행복생활권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도청 이전으로 인해 낙후된 북부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추진하여 23개 시·군 간 발전의 격차

를 줄일 계획이다. 또한 3대 문화권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신라왕경 복원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시키고, 작은도서관·작은영화관·작은음악회와 같은 생활 속에서 쉽게 누릴 수 있는 알찬 문화적 서비스를 다양하게 확충할 계획이다.

FTA 대응전략으로 경북 농산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민사관학교를 통한 농업 CEO양성·유통구조 개선·품질 고급화로 경북 농업의 명성을 지키고, 바다목장 확대·붉은 대게 식품단지 조성·수산물 복합유통센터 건립, 해양관광 활성화로 어업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계획이다. 그리고 국가 산채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산림약용 자원을 산업화하여 백두대간과 낙동정맥을 산지부농의 새로운 터전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노인·여성·장애인이 행복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어렵고 힘든 이웃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찾아가는 행복병원, 닥터헬기 운영을 통해 현장중심의 보건의료를 강화하고, 장애인의 자활기반과 여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제16장 경상남도

제1절 경상남도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경상남도의 인구는 2013년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며 2016년 기준 337만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국 연평균 성장률보다 낮은 연평균 2.2%로 증가하여 2015년 기준 104조원을 기록하였다. 1인당 GRDP은 3,165만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연평균 성장률도 1.7%로 전국 성장률을 하회하였다. 수출액은 2013년 519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은 45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재정자립도는 43.5%로 2013년의 41.7%에 비해 1.8%p 높아졌으나, 전국 재정자립도 52.5%를 하회하였다.

표 3-16-1 경상남도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경남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증가율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증가율
지역내총생산 (십억원)	1,430,255	1,485,505	1,563,668	-	4.6	99,619	101,028	103,973	-	2.2
인구(천명)	51,141	51,328	51,529	51,696	0.4	3,334	3,350	3,365	3,374	0.4
1인당 GRDP(만원)	2,848	2,946	3,089	-	4.1	3,061	3,087	3,165	-	1.7
수출액 (백만달러)	559,632	572,665	526,757	495,466	-4.0	51,859	51,142	47,020	45,280	-4.4
취업자(천명)	25,066	25,599	25,936	26,235	1.5	1,619	1,632	1,663	1,682	1.3
재정자립도 (%)	51.1	50.3	50.6	52.5	0.9	41.7	42.4	43.3	43.5	1.4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이며, 2015년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 산업 현황

경상남도의 산업구조는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53.0%, 제조업 48.2%, 광업·농림어업 3.8%로 나타났다.

2014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기타 기계 및 장비'가 사업체수, 종사자수의 업종 비중이 각각 19.8%, 16.7%로 가장 높았으며, 생산액은 '기타 운송장비'가 29.0%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도 '금속가공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기계 및 장비' 등 업종의 비중이 높았다.

2013년과 비교할 때,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전기장비'의 경우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의 비중 모두 증가하였다.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식료품', '금속가공제품', '기타 운송장비'가 다소 증가한 반면, '1차 금속', '기타 기계 및 장비'는 감소하였다. 종사자수 기준은 대부분 업종이 소폭 하락 또는 변동이 없었다. 생산액 기준은 '식료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이 다소 증가한 반면, '금속가공제품',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기타 운송장비'는 감소하였다.

표 3-16-2 경상남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3년			2014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5.3	4.7	4.2	5.5	4.5	4.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7.3	7.6	5.2	7.3	7.5	5.3
1차 금속	5.6	5.5	6.8	5.4	5.5	6.8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 제외)	18.5	13.7	11.5	18.7	13.6	10.9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1.7	2.0	1.6	1.7	2.0	1.2
전기장비	4.7	5.7	5.8	4.9	5.8	6.1
기타 기계 및 장비	20.4	17.3	16.9	19.8	16.7	16.9
자동차 및 트레일러	10.4	10.0	10.2	10.8	11.0	10.8
기타 운송장비	10.0	23.2	29.3	10.3	23.3	29.0

주 : 2015년, 2016년 자료는 없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2014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35.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비중이 높았다. 종사자수 및 매출액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34.8%, 32.3%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기타 개인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업종 비중이 높았다.

2013년과 비교할 때, 사업체수 기준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증가한 반면, ‘교육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감소하였다. 종사자수 기준은 전반적으로 업종별 비중 변화가 크지 않았으며,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반면, ‘교육 서비스업’은 감소하였다. 매출액 기준은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이 증가한 반면,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교육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관련 서비스업’은 감소하였다.

표 3-16-3 경상남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3년			2014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1.2	2.8	8.3	1.3	2.8	7.4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1	2.2	4.7	1.2	2.2	4.5
부동산업 및 임대업	13.1	9.4	17.6	13.9	9.4	17.8
사업지원 서비스업	4.2	13.3	11.8	4.5	13.1	12.2
교육 서비스업	18.7	12.0	6.5	18.3	11.6	6.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4.7	33.9	30.8	14.7	34.8	32.3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10.9	8.2	8.1	10.6	8.0	7.7
기타 개인 서비스업	36.2	18.2	12.2	35.7	18.1	12.0

주 : 2015년, 2016년 자료는 없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3. 혁신활동 현황

경상남도의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 연구개발비 2.1조원, 연구개발인력 27,718명, 연구개발조직수 1,782개로 나타났다. 연구개발인력 및 연구개발조직수 모두 2013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연구개발비는 큰 변화가 없었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3년에 비해 연구개발비는 감소한 반면, 연구개발인력과 연구개발조직수는 증가하였다. 연구개발비의 경우 0.32%p 감소하였으며, 연구개발인력은 0.05%p, 연구개발조직수는 0.15%p 감소하여 각각 3.18%, 4.47%, 4.77%로 나타났지만, 광역도 지역 중에서는 연구개발 현황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5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5,548건이며, 등록은 2,840건으로 2013년에 비해 특허 출원은 증가한 반면, 등록건수는 감소하였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3년에 비해 특허 출원건수 0.18%p, 등록건수 0.5%p가 증가하여 각각 3.32%, 3.72%로 나타났다.

표 3-16-4 경상남도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연평균증가율
연구개발	연구개발비	2,074,905 (3.50)	2,062,025 (3.24)	2,094,806 (3.18)	0.5
	연구개발인력	25,189 (4.42)	26,507 (4.38)	27,718 (4.47)	4.9
	연구개발조직수	1,275 (4.62)	1,500 (4.69)	1,782 (4.77)	18.2
특허	출원	5,017 (3.14)	5,502 (3.35)	5,548 (3.32)	5.2
	등록	3,076 (3.22)	3,465 (3.56)	2,840 (3.72)	-3.9

주 : ()는 전국대비 비율임. 2016년 자료는 없음.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경상남도는 환태평양 경제권의 경제, 물류의 중심지이면서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신항만,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등과 인접해 있어 해외로부터 개방거점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지역주력산업기반을 바탕으로 높은 발전 잠재력을 가진 지역이다. 또한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의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세계적 산업지대로 발전해 왔으며, 굳건한 제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기계, 조선, 로봇산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이끌어 왔다. 이러한 기반산업은 해양플랜트, 항공우주산업, 나노융합산업과 항노화산업 등과 같은 미래 대응형 산업구조로 전환되고 있어 향후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미래의 지역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리고 남해의 수려한 해양자원과 지리산, 덕유산, 가야산, 영남알프스 등의 산악자원, 낙동강과 섬진강 등의 수환경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관광산업 및 해양산업을 개발 중이며, 세계적인 역사문화자원인 대장경, 가야문화를 토대로 한 역사문화관광 등은 향후 문화관광산업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하지만 창원, 김해 등 경남의 동부지역에 편중된 산업단지에 비해 진주, 사천 등 서부지역은 경제적 성장의 기반이 취약하여 지역불균형의 성장을 이루어 왔다. 거제를 비롯한 경남의 남부 산업지역은 세계적인 경기불황의 여파로 조선업이 침체되면서 지역경제의 성장이 감소하고 있어 새로운 방향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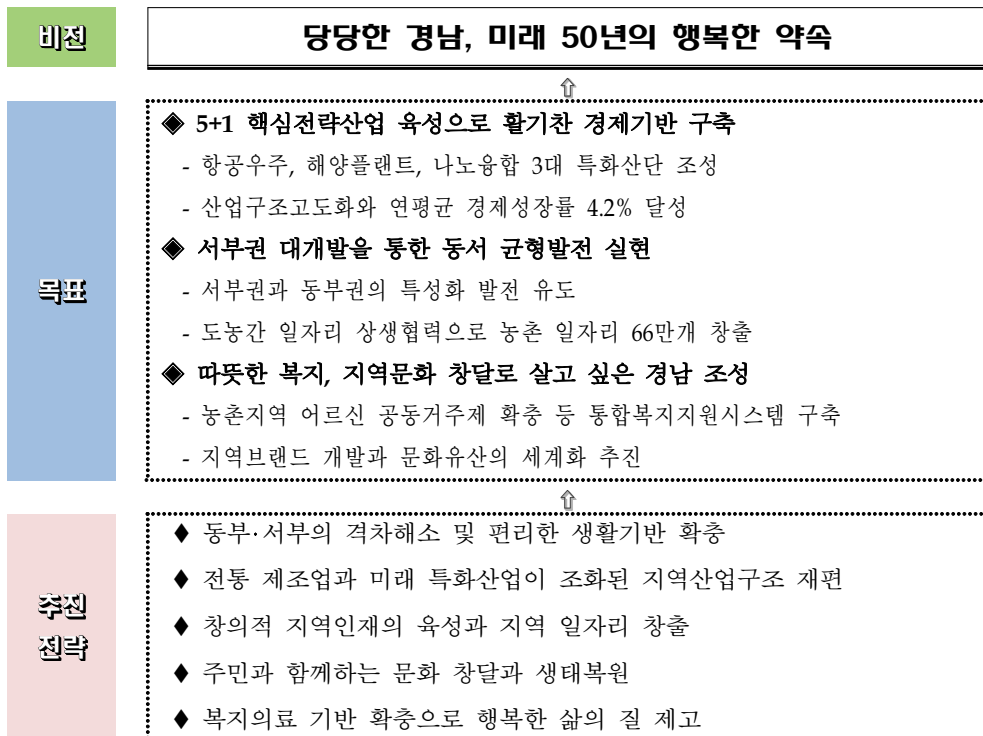
경상남도의 발전과제는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맞추어 기존의 기계, 조선, 항공 등의 제조업과 이를 바탕으로 한 IT, BT, CT와 같은 신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해 지역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항만과 경제자유구역 등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통해 항만·물류산업을 발전시켜 동북아 물류중심으로 재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풍부한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자원을 근간으로 한 관광산업의 구축과 함께 해양레저스포츠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건강과 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경남 서북부지역은 항노화산업의 메카로서 체계적으로 개발·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 간 연계협력을 통해 상생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협력과제를 도출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발전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경상남도는 ‘당당한 경남, 미래 50년의 행복한 약속’이라는 발전비전을 설정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지역별 신산업 육성과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문화를 창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경남은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해 온 산업지대였지만 미래의 산업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국제경쟁력을 보유한 기계, 조선 등 기반산업의 구조고도화와 함께 미래 성장동력인 로봇, 항공우주, 해양플랜트, 나노, 항노화 등의 첨단 제조업과 융복합산업의 창조적 혁신을 이루도록 산업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경남도의 소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서부대개발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도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림 3-16-1 경상남도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경상남도의 발전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5+1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활기찬 경제 기반 구축’, ‘서부권 대개발을 통한 동서 균형발전 실현’, ‘따뜻한 복지, 지역문화 창달로 살고 싶은 경남 조성’의 3대 목표를 설정하였다.

2. 추진전략

경상남도의 발전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부와 서부지역의 격차해소 및 편리한 생활기반 확충’, ‘전통 제조업과 미래 특화산업이 조화된 지역산업구조 재편’, ‘창의적 지역인재의 육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 창달과 생태복원’, ‘복지의료 기반 확충으로 행복한 삶의 질 제고’의 5대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첫째, 경상남도는 동부지역에 산업 및 행정의 집중되어 있는 반면 서부지역 농어촌 지역의 개발이 지체되어 동서지역간 발전격차가 심화되어 왔다. 이에 따라 서부지역 대개발의 추진과 함께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를 통해 경제·문화·생활 등 지역간 불균형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둘째, 기계·조선산업 등 제조업의 구조고도화를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유지함과 동시에 새로운 첨단산업과 융복합산업인 항공우주·해양플랜트·나노융합·항노화산업 등을 집중 지원하여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셋째,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지역의 사회·경제를 이끌 수 있는 지역대학을 육성하여 미래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지역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도록 다각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농산어촌 및 취약지역의 학습환경을 개선하여 인재양성이 가능한 교육여건을 널리 구축하고자 한다.

넷째, 지역문화 융성을 위해 주민참여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기반을 강화하여 지역민의 문화향유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며, 지역특화 콘텐츠를 발굴하여 지역의 문화산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광역생태축, 광역녹지축 복원과 보전을 통한 지역의 환경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환경보호 인식을 높이고자 한다.

다섯째, 지역별·이용자별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를 개편하여 도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도록 하며, 생애주기별 전문적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급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한다. 또한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의 강화 및 공공보건의료 거점 육성으로 사각지대 없는 지역복지의료를 보급·확산시키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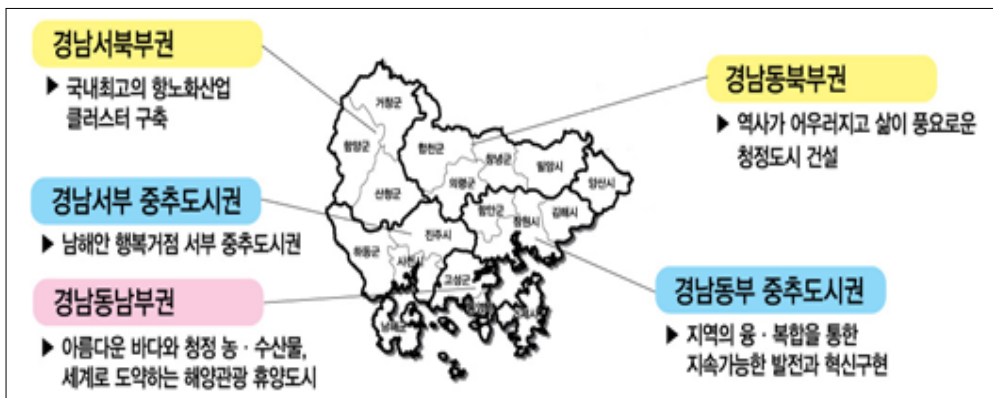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경상남도의 지역행복생활권은 총 5개로 구성되어 있다. 중추도시권 2개권은 경남 동부중추도시권(창원시·김해시·합안군), 경남 서부중추도시권(진주시·사천시·남해군·하동군)이 있다. 도농연계권은 경남 동남부권(통영시·거제시·고성군)이 있고, 농어촌연계권 2개권은 경남 서북부권(거창군·함양군·산청군), 경남 동북부권(합천군·밀양시·창녕군·의령군)이 있다. 인접한 광역시의 생활권인 부산중추도시생활권에는 김해시와 양산시, 울산중추도시생활권에 양산시가 각각 포함되어 있다.

그림 3-16-2 경상남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2016년 경남도의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은 총 5건(인접 중추도시권 2건 포함)이 선정되었다. 현재 함안·창원·김해의 도농한마음 일자리 창출, 산청·함양·거창의 거합산 곤충산업 친환경 산업화, 합천·밀양·의령·창녕의 다미다색 상생일자리 창출, 산청·함양·거창의 거합산 약용식물 상품화, 밀양·울산의 게놈기반 바이오메디컬산업 육성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고, 2015년에 선정된 3개 사업도 계속 추진 중이다. 생활권 내 시·군간 연계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의 기반이 조성되어 있어, 최근 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시·군간 연계협력의 기대감은 크게 높아진 상태이다.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경상남도는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올해 선정된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에 힘쓸 것이며, 앞으로도 도내 시·군이 공모사업에 더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포괄보조금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도내 취약지역 및 농어촌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정주여건을 향상시켜 도내 지역간 균형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상남도의 2016년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은 계속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을 합하여 새뜰마을사업 총 18건(도시 5, 농어촌 13), 선도사업 총 15건, 창조지역사업 총 8건에 217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는 지속적인 예산확보를 통해 매년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도시민의 농촌유치 및 성공정착(귀농귀촌)을 위해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농업창업박람회, 체류형 농업창업지원, 귀농인의 집 운영의 4개 사업에 54.3억 원을 지원하여 3,535가구를 유치하여 전년(3,367가구) 대비 4.8%의 증가를 보였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63개 지구가 준공되었고, 특수상황지역사업은 25건이 추진되고 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56개 지구에 817억 원을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도시활력증진사업은 창원, 김해, 사천 등에서 12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도시 및 농어촌지역의 중심지활력 증진 및 기능 강화를 통해 지역발전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창원시를 비롯한 5개 시·군 10개 사업에 122억 원을 지원하여 매립시설 2개소를 준공하였다. 비점오염저감사업에는 김해시청사를 비롯한 계속사업 4개소가 준공되었고, 합천 등 신규사업 4개소가 추진되었다.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어촌마을 하수도 6개소를 설치하여 전체 88.1%의 보급률을 이루었으며, 상수도시설 28개소를 설치하여 전체 92.8%의 보급률을 이루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서 마을회관건립, 공원조성, 도로정비 등 20건에 60억 원을 지원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였다. 소하천정비사업에 473억 원을 투입으로 옥곡천 등 63개소 정비하여 재해예방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였다. 또한 광역교통망 인프라 구축사업에서 고속도로 2건, 국도 1건, 철도 2건 등에 국비, 지방비와 민자를 투입하여 지역균형발전 촉진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경상남도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대표산업 육성’, ‘산업단지 고도화로 지역거점조성 지원’, ‘지역기반연구 활성화로 창조경제 지역확산’, ‘농산어업 경쟁력 강화’, ‘농산어업 경쟁력 강화’의 항목을 마련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역일자리 중심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일환으로 지역특화산업 국내외 마케팅지원에 전체 28.9억 원을 투입하여 국내(기계, 로봇 등) 5회, 해외 26회, 중국 6회 전시회 지원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R&D 연평균 35개 기업과 비R&D 10개 기관 등을 선정하여 기술개발 및 기업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사업에 1조 2,764억 원을 투입하여 재정지원일자리 128개 사업에서 92,649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에 25.1억 원을 투입하여 10개 사업, 57명 취업, 6명 창업으로 지역고용 네트워크 활성화를 이루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64.3억 원을 투입하여 73개 기업 선정, 447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산업단지 고도화로 지역거점조성을 위한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에는 김해 등 4건 사업장 54.2억 원을 지원하여 공업용수 보급 기반구축을 위한 관로 24.52km를 매설하여 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을 확장하였다. 또한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지원사업에 양산일반산업단지가 대상지로 선정되어 일반산업단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재생계획 수립용역이 발주되어 첨단 산업단지로 재정비 중이다.

지역기반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에 2억 원을 지원하여 10개의 지역맞춤형 연구회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지역혁신생태계 구축지원사업에 30억 원을 투입하여 메카트로닉스 및 물산업 분야 100개 벤처·중소기업 육성, 38개 항노화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여 지역 혁신기관간 지역거점경제의 저변을 확대하였다. 과학기술진흥센터 활성화사업에 1억 원을 지원하여 신규 공모사업을 3건 발굴하였고, 산·학·연 클러스터화를 통해 세미나 및 포럼을 3회 개최하여 신산업을 발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농산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에 73.2억 원을 투입하여 총면적 152ha를 확장하여 생산비절감 및 생산성향상 기반을 구축하였다. 과실전문생

산단지기반조성사업에 사업비 20.4억 원을 투입하여 삼양2지구 65ha와 임고2지구 37ha의 조성으로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거점을 구축하였다. 또한 농기계구입이 어려운 농가를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에 98.5억 원을 지원하여 6개의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새롭게 증설했으며 2개소에 기계화를 이루었다. 농식품 ICT 융복합 추진사업에는 4.2억 원을 투입하여 시·군간담회 2회, 스마트 팜 9.2ha를 확장하여 재배환경의 최적화를 이루고 농산물 품질향상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에 26억 원을 지원하여 합천군 청덕 양진지구의 사업이 100% 추진되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사업에는 263.5억 원의 투입과 '혁신, 경남농정 2050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생산유통, 제조·가공, 6차 산업화의 사업방향 제시로 306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활력을 높였다. 농업기반정비사업에는 199.9억 원을 투입하여 수리시설개보수율 100%, 수혜민 만족도 91.6%를 보이는 등 농업생산활동에 필요한 기초 인프라 확충으로 농업경쟁력을 높였다. 농촌축제지원사업에 창원 다호리 고분군마을 축제 등 8개소에 1.4억 원을 투입하여 시·군의 농촌체험마을 인지도 및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켰다.

어업분야에서 수산물가공육성사업에 149.7억 원을 투입하여 수산물산지가공시설 19개소, 수산물처리저장시설 2개소를 지원하였고, 매출증가율 28.5% 및 1인당 일 생산성 향상률 8.2%를 달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사업에 42.3억 원을 투입하여 어촌체험관광지 4개소, 수산물유통시설 1개소를 조성하였으며, 이용자 증가율 2.9%를 달성하였다. 이를 통해 어촌의 1·2·3차 산업의 복합산업화를 유도하여 지역의 소득 및 고용기회를 증대하도록 하였다. 해양 및 수자원 관리사업에 162.5억 원을 투입하여 마리나시설 2개소, 연안정비 5개소, 해양관광자원시설 4개소,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 7개 시·군, 해양쓰레기선상집하장설치 4개 시·군, 해양쓰레기정화사업 7개 시·군을 지원하여, 사업 후 방문자 증가율 7.7% 상승, 지역일자리 창출 138명 등 쾌적한 연안조성과 해양관광산업의 기반조성을 이루었다. 어업기반정비사업에는 329.2억 원을 투입하여 지방어항 10개소,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 10개소, 양식어장 정화사업 7개 시·군, 양식어장자동화 시설장비 52개소, 인공어초 사업, 수산종묘 및 해삼 방류 13개 시·군, 소형어선 인양기 29개소를 지원하여 지역의 어획량 2.1% 및 가구소득 증가율 2.2% 달성으로 어촌 정주생활 및 지역사회발전의 기반을 조성했고 수산자원 회복을 도모하였다.

농식품가공 체험기술보급사업에 35.6억 원을 지원하여 농산물종합기공센터 육성 중

합적 서비스 9개소, 생산·가공·체험 6차 산업 수익모델 발굴 2개소, 학교교육과 연계한 농촌교육농장 확대 육성 93개소를 지원하였고, 농가소득증가율 120% 달성으로 농가소득의 다각화를 이루었다.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사업에 38.4억 원을 지원하여 29농가가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를 취득했으며, 천연염색 체험프로그램 및 스토리 개발로 특허출원 6건, 등록 4건, 저작권 1건을 획득했고, 150명의 지역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농산물 경쟁력을 강화하였다. 지역특성에 적합한 농업기술보급을 위한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사업에 180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일자리 창출 111명, 농가소득 증대율 25%를 이루어 지역의 소득증대 및 활력강화를 촉진하였다.

3.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경상남도는 ‘농산어촌 학습여건 개선’, ‘돌봄의 질 향상과 고교취업 지원확대’, ‘서민 자녀 교육지원사업의 지속적 추진기반 마련’, ‘100세 시대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역점을 두고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을 추진하였다.

농산어촌 학습여건 개선을 위해 남해, 합천, 밀양, 산청에 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화 4개교를 설립하였다. 또한 ICT활용으로 연평균 250개교의 농산어촌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습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산어촌 거점학교 우수학교의 설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농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돌봄의 질 향상과 고교취업 지원확대를 위해 매년 900여개의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여 학부모 만족도 95%를 나타내었다. 도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연 40여개 학교를 지원하여 취업률 60% 이상 달성했다.

일과 학습 병행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에 535억 원을 투입하여 실적 70,788명(목표 57,758명)으로 122.5%를 달성하여 도내 서민자녀들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학력향상을 도모하였다. 100세 시대 지역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생애단계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24개 평생학습관에 평균 10만명이 참여했다. 지역평생교육 활성화지원사업에 218.8억 원을 투입하여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였고, 광역단위 평생교육 네트워크의 구축으로 모든 도민이 평생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4. 지역문화 육성, 생태복원

경상남도는 ‘지역문화역량강화 및 특성화발전 지원’,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 ‘지역관광산업육성’, ‘생태·자연환경 보존·활용’의 중점 추진내용을 마련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먼저, 지역 문화역량을 강화하고 특성화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문화산업 기반조성 20개 사업에 33.5억 원을 투입하여 도내 문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문화콘텐츠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산을 통해 문화적 공간을 마련하였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노동자와 주민들이 문화적 접촉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통한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으로 도내 시·군에 269.7억 원을 지원하였고, 이를 통해 밀양문화재단 직원을 30명 고용하는 등 78%의 주민만족도를 이루면서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 및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였다. 작은영화관조성지원사업은 남해군과 합천군 2개소가 개관하여 운영 중이다. 문화우물사업에 2.5억 원을 투자하여 35개 마을의 지역실정에 적합한 각종 행사개최를 통해 주민주도형 생활권 문화공동체를 육성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였다. 생활체육사업부문에서 생활체육지도사 활동지원사업을 통해 217명의 생활체육지도자를 도내에 배치하여 지역생활체육 활성화 및 노인체육활동을 강화하였다. 셋째, 지역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서 문화관광자원개발, 남해안관광클러스터 등 5개 사업, 35개소에 545.5억 원을 투입하여 착수율 100%를 달성하여 지역의 관광인프라 확충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였다.

마지막으로, 생태·자연환경 보존·활용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322.6억 원을 지원하여 7.78km를 복원하였다. 지역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산·학·연·관 공조체제를 통한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8.2억 원을 투입하여 10건의 연구사업, 50개 업체의 기업환경 지원사업, 15명의 환경인턴십의 성과를 이루어 기업의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자문과 기술지원으로 지역환경개선을 도모하였다. 또한 사천, 의령 2개소의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에 68억 원을 투자하여 지역주민 만족도 73.5%를 나타내었다.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3개소를 완료했으며,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사업에 20억 원을 지원하여 관광프로그램 개발과 생태관광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였다.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경상남도는 저출산·고령화, 다문화가족 등 가족구성변화에 따라 ‘지역밀착형 복지 전달체계 구축,’ ‘수혜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의 항목을 마련하여 복지·의료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역밀착형 복지전달체계구축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184.7억 원을 투입하여 심뇌혈관 예방관리 및 건강강화 3,790회 및 건강생활실천 5,004회 홍보, 구강보건센터 7개소와 구강보건실 64개소 지원, 보건소 14개소에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의 운영·지원,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102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45.2억 원을 지원하여 800여 제공기관에 이용자수 16,480명, 제공인력 1,885명이 등록하여 주민수요에 적합한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수혜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드림스타트지원사업에 54억 원을 투자하여 5,452명의 아동을 관리하였다. 방과후 돌봄(지역아동센터사업)에 144.5억 원을 투입하여 도내 252개소의 시설확대 및 운영비를 지원하였다. 또한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도내 5개소에 19.7억 원을 지원하여 2개소 민간매입 및 리모델링을 완료하였다.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언어발달지원사업에 7.2억 원을 투자하여 언어발달지도사 26명을 채용하였고, 700여명의 다문화자녀의 이용으로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사업에는 19개소에 28.8억 원을 투자하여 청소년 760명(초등 540, 중등 220)에게 방과후 활동·복지·보호 등의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475.3억 원을 지원하여 86개 제공기관을 통해 연 4,300여명에게 서비스를 제공, 일자리 창출 4,538명, 신규활동보조인 2,183명을 양성하였다.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육성사업은 도내 8개 시·군에 11.2억 원과 22.6억 원을 투입하여 5개소의 시설개선과 211점의 장비보강으로 취약지역주민들의 의료격차해소와 함께 24시간 기초적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였다.

제4절 향후 추진계획 및 과제

경남도의 지역발전사업은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부문과 주민생활 환경개선 부문으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부문은 주요경제지표인 GRDP, 고용률, 실업률, 수출액 등을 전년대비 전체 평균 10%이상 성장을 목표로 경제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주민생활환경개선 부문에서 상수도보급률, 도로, 생활문화시설 확충 등을 통해 전년대비 2%이상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고자 한다.

5대 분야의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지역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행복생활권사업과 지역발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활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확충하여 전년대비 2%이상 개선하고자 한다. 둘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5+1핵심전략산업(기계·조선·항공우주·해양플랜트·나노융합·항노화산업)의 특성화와 융복합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미래성장동력을 발굴·육성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기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마케팅지원으로 산업경쟁력을 확보하여 평균 10%이상 성장시키고자 한다. 또한 농어업기반의 확충과 다각적인 사업추진으로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확대하고자 한다. 셋째,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농어촌 및 취약지역 자녀에게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서민자녀의 학력향상을 꾀하고, 광역단위 지역평생교육 추진체계의 마련과 네트워크의 구축으로 지역평생교육을 추진하고자 한다. 넷째, 지역문화 육성 및 생태복원을 위해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생태하천복원·자연환경 보전시설을 정비하여 도민을 위한 친환경시설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자 한다. 다섯째, 사각없는 지역 복지·의료를 위해 취약계층, 아동, 장애인 등에 대한 지역맞춤형 복지 및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고, 건강증진센터 등의 확대 운영을 통해 도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경남 미래 50년 전략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지역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추진할 계획이며, 생활권내 시·군의 연계협력을 통해 각종 공모사업의 선정에서 추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문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발전성과를 공유하여 지역 간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상생발전의 계기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제17장 제주특별자치도

제1절 제주특별자치도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는 2013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2016년 기준 64만 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국 연평균 성장률보다 높은 연평균 8.1%로 증가하여 2015년 기준 15조원을 기록하였다. 1인당 GRDP는 2,628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성장률도 6.5%로 전국 성장률을 하회하였다. 수출액은 전국적으로 감소세를 이어나갔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은 1.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재정자립도는 38.2%로 2013년의 30.6%에 비해 7.6%p 높아져 재정자립이 크게 개선되었으나, 전국 재정자립도인 52.5%를 하회하였다.

표 3-17-1 제주특별자치도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제주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증가율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증가율
지역내총생산 (십억원)	1,430,255	1,485,505	1,563,668	-	4.6	13,198	14,087	15,432	-	8.1
인구(천명)	51,141	51,328	51,529	51,696	0.4	594	607	624	642	2.6
1인당 GRDP(만원)	2,848	2,946	3,089	-	4.1	2,317	2,424	2,628	-	6.5
수출액 (백만달러)	559,632	572,665	526,757	495,466	-4.0	103	106	121	129	7.8
취업자(천명)	25,066	25,599	25,936	26,235	1.5	305	316	333	353	5.0
재정자립도 (%)	51.1	50.3	50.6	52.5	0.9	30.6	34	36.4	38.2	7.7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이며, 2015년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 산업 현황

제주특별자치도의 산업별 비중은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85.0%, 제조업 3.2%, 광업·농림어업 11.8%로 나타났으며, 다른 시·도에 비해 광업·농림어업의 비중이 높고, 제조업의 비중은 낮았다. 특히 서비스업은 17개 시·도 중 서울(93.6%)에 이은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014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식료품'이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비중이 각각 42.9%, 45.5%, 41.0%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비금속 광물제품', '음료',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이 높았으며, 그 외 다른 제조업의 비중은 미약한 수준이었다.

2013년과 비교할 때, '음료',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금속가공제품'의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비중이 증가한 반면, '식료품', '목재 및 나무제품,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등은 비중이 감소하였다. 제주의 제조업 비중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식료품', '비금속 광물제품'은 비중이 소폭 감소한 반면, 제조업 비중이 낮은 '음료',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금속가공제품'이 증가하였다.

표 3-17-2 제주특별자치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3년			2014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45.6	47.8	42.0	42.9	45.5	41.0
음료	4.7	12.0	19.8	5.4	13.6	19.9
목재 및 나무제품	1.6	0.8	0.2	0.5	0.0	0.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5.2	6.7	4.9	4.9	5.9	4.1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0.0	0.0	0.0	1.5	0.7	0.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3.1	2.9	2.9	5.4	4.3	2.9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5.7	4.2	3.0	6.3	4.8	4.0
비금속 광물제품	22.3	15.8	20.7	22.4	15.3	21.0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 제외)	1.0	0.0	0.0	1.5	1.1	0.7

주 : 2015년, 2016년 자료는 없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2014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32.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높았다. 종사자수 및 매출액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31.1%, 20.5%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의 업종 비중이 높았다.

2013년과 비교할 때, 사업체수 기준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증가한 반면, ‘교육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감소하였다. 종사자수 기준은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반면,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감소하였다. 매출액 기준의 경우,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이 19.5%로 1년 전에 비해 10.5%나 증가하여 제주의 서비스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표 3-17-3 제주특별자치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3년			2014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서비스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0.1	0.3	1.2	0.1	0.3	0.5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7	4.8	9.0	1.9	5.6	19.5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1	6.1	17.1	11.7	6.9	15.9
사업지원 서비스업	9.0	15.3	8.9	9.6	13.7	7.3
교육 서비스업	18.3	10.3	5.1	17.7	10.1	4.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4.2	30.6	22.6	14.3	31.1	20.5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12.6	17.9	29.7	12.1	17.9	25.2
기타 개인 서비스업	34.0	14.9	7.5	32.8	14.8	7.0

주 : 2015년, 2016년 자료는 없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3. 혁신활동 현황

제주특별자치도의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 연구개발비 13백억 원, 연구개발인력 2,420명, 연구개발조직수 114개로 나타났다. 2013년과 비교할 때, 연

구개발비는 큰 변화는 없었으며, 연구개발인력은 소폭 감소, 연구개발조직은 증가하였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3년에 비해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연구개발조직수 모두 소폭 감소하였다. 연구개발비의 경우 0.02%p, 연구개발인력은 0.04%p, 연구개발조직수는 0.09%p 감소하여 각각 0.20%, 0.39%, 0.31%로 나타났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5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630건이며, 등록은 290건으로 2013년에 비해 특허 출원은 증가한 반면, 등록건수의 감소하였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3년에 비해 특허 출원건수 0.02%p, 등록건수 0.04%p가 증가하여 각각 0.38%로 나타났다.

표 3-17-4 제주특별자치도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연평균증가율
연구개발	연구개발비	131,256 (0.22)	160,882 (0.25)	131,968 (0.20)	0.3
	연구개발인력	2,488 (0.43)	2,493 (0.41)	2,420 (0.39)	-1.4
	연구개발조직수	109 (0.40)	122 (0.38)	114 (0.31)	2.3
특허	출원	582 (0.36)	574 (0.35)	630 (0.38)	4.0
	등록	323 (0.34)	413 (0.42)	290 (0.38)	-5.2

주 : ()는 전국대비 비율임. 2016년 자료는 없음.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 잠재력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볼 때 천혜의 청정 자연환경,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자연유산의 섬이자 해녀무형문화유산 등재, 지리적으로 동북아중심으로서의 용이한 접근성과 인프라, 대한민국 최고의 세계가 찾는 휴양관광지, 국내 휴양회의산업(MICE)의 최적지, 생물종다양성의 보고 등 다양한 자원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잠재력을 활용하여 범국가적 차원에서 제주를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세부적으로 우선 제주는 세계가 학술적·경관적 가치를 인정하는 청정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지난 2002년 제주도 주요지역(전체면적의 44%)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2007년 한라산, 성산일출봉 및 검은오름 용암동굴계를 세계자연유산으로, 2010년 산방산과 용머리해안, 수월봉, 만장굴, 우도 등을 세계지질공원으로 각각 지정·인증한 바 있다. 특히 한라산, 영천·효돈천, 문섬, 섭섬, 범섬 등은 생물종다양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생물권보전지역이다.

제주는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하여 지정학적으로 매우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다. 접근성이 뛰어나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용이하다. 이에 제주는 사람·상품·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기업 친화적으로 활동이 최대로 보장되는 동북아 중심 도시를 지향하는 비전을 갖고 있다. 아울러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제주의 유·무형 인적·물적 자원을 보다 효과적·효율적으로 활용·보전하기 위해 향후 제주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위상에 걸맞게 2016년 기준 제주의 경제성장률은 4.5%(전국평균 2.8%)이고 민간소비 증가율 5.1%(전국평균 2.2%)로 각각 전국 1위를 보이고 있다.

2016년 말 기준 제주를 찾은 방문객수는 약 1,580만명(외국인 360만명)으로 전년대비 16%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제주관광의 이러한 양적 성장을 질적 성장으로 체계를 전환하기 위하여 체류일수, 지출비용, 만족도 등 제주관광 질적 성장 주요지표와 추진과제가 포함된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패러다임 전환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제주에서 개최되었던 국제협회연합(UIA) 인정 국제회의는 2013년 82건, 2014년 85건, 2015년 112건을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10년 연속 아시아 10위권에 드는 기록으로 휴양형 마이스(MICE)도시로서의 제주의 위상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이와 같은 제주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제주는 2017년 ‘건강한 제주실현’을 도정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천적 발전과제를 도출하였다. 우선 경제일자리 분야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한 대비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우선과제로 선정되었다. 둘째 환경분야에서는 제주환경자산 보존이, 셋째로 관광분야는 지역주도 생태관광 등 관광의 질적 성장이 각각 선정되었다. 넷째로 문화예술분야는 제주문화의 정체성 공유가, 복지분야는 제주형 복지정책 확대가 각각 선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생활인프라분야는 인구 100만시대를 대비한 인프라 확충이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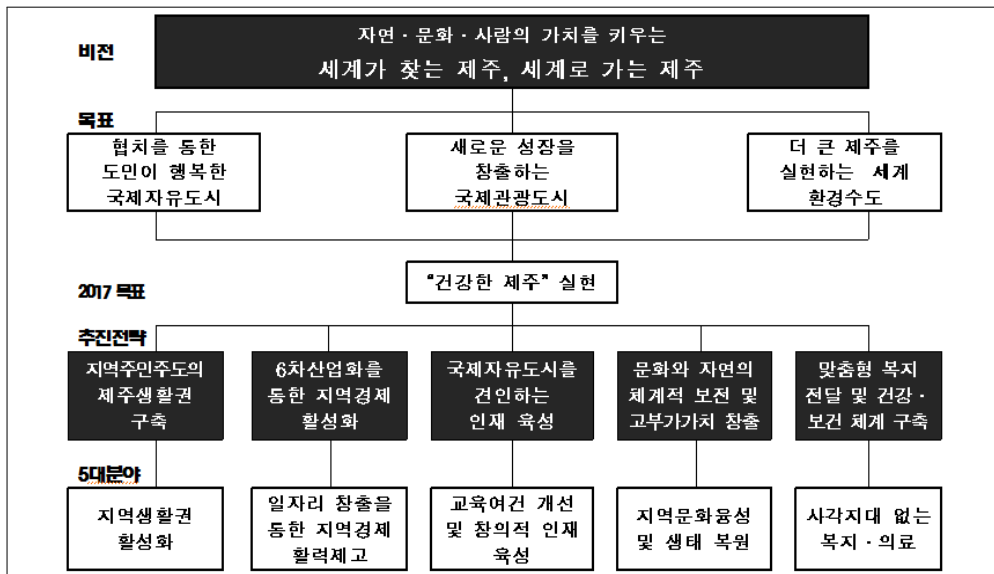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제주특별자치도는 사람과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기 위하여 ‘자연, 문화,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라는 비전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제주의 바람직한 미래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제자유도시, 국제관광도시 및 환경수도라는 3가지 목표를 설정하였다. 단기적으로는 건강한 제주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의 비전은 제주도정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청정과 공존’이라는 핵심가치에 기반하고 있다. ‘청정’은 자연, 치유, 휴양, 건강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고, ‘공존’은 문화, 사람, 평화, 세계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의 비전은 내용적으로 국제자유도시, 친환경도시, 관광휴양도시 실현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제주비전을 통해 도민이 행복한 지역발전과 통합적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그림 3-17-1 제주특별자치도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2. 추진전략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주민주도의 제주생활권 구축’, ‘6차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국제자유도시를 견인하는 인재육성’, ‘문화와 자연의 체계적 보전 및 고부가가치 창출’, ‘맞춤형 복지전달 및 건강·보건 체계구축’ 등 크게 5가지 추진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이 추진전략에 따라 5대 분야를 설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5개년 발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생활권 5대 분야별 정책추진방향은 우선 제주생활권 활성화정책의 일환으로 지역주도 협력사업 확충, 주민체감 생활 인프라 확충, 지역중심지 활력증진, 지역 교통·물류망 개선 등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둘째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제주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정책은 일자리 창출중심의 지역대표산업 육성, 산업단지 고도화, 지역기반 연구 활성화, 농산어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셋째로 교육여건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은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육성, 100세 시대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넷째로 제주문화융성 및 생태복원을 위한 정책은 제주지역 문화역량강화 및 특성화 발전지원,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 지역관광산업육성 및 생태·자연환경 보존·활용 등을 위한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각 없는 지역복지·의료를 위한 제주생활권 정책은 지역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수혜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세부분야별 주요정책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경제일자리분야는 고용의 질 상승, 안전은 제주의 제1원칙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문화 분야는 제주의 문화정체성을 공유하는데 정책방향을 두고 있다. 복지는 평등과 가족 친화적 정책 및 취약계층지원제도 마련에 역점을 두고 있다. 농정은 과학영농기반을 구축하는데 정책방향을 두고 있고, 생활 인프라는 인구 100만 시대를 대비 확충에 노력하고 있으며, 관광 정책은 질적 성장을 견인하는데 그 방향을 두고 있다. 환경정책은 제주환경자산 보존과 관광문화 품격상승을 위한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종합적으로는 일자리와 도민의 주도권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과 행복향상을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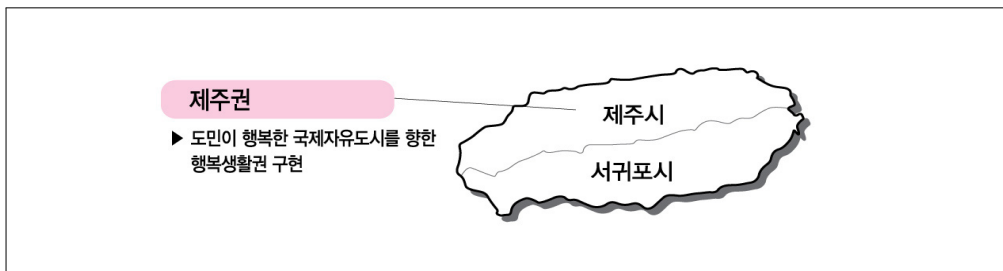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행복생활권은 제주시·서귀포시간 연계된 생활권 1개 지역으로 구성된 제주행복생활권이다. 제주시는 생활인프라, 인구, 교통, 경제, 의료 서비스 등 중심도시로서, 서귀포시는 향토산업 육성, 도시재생, 도시활력증진, 관광활동 중심지로서 각각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생활인프라, 일자리 및 경제활동, 교육·문화·의료·복지 등 5대 분야 기반으로 행복생활권 사업 추진을 통해 ‘제주행복 Dream’의 완성을 생활권의 비전으로 설정하여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제주행복생활권 활성화와 관련하여 도농연계 지역생활권 중 주민 삶의 질 만족도 1위(동아일보, 2015년 9월 2일)를 차지하였다.

그림 3-17-2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지역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도 협력사업 확충, 주민체감 생활인프라 구축, 지역중심지 활력증진 및 지역교통물류망개선 등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였다. 특히 지역주도 협력사업 확충의 일환으로 추진한 주민주도 마을 만들기 사업은 농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하였고,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인 주민행복 드림 Job프로젝트는 창업·창직교육 153명 수료, 농촌융복합 상품개발 10건, 지역해설사 87명 양성 등의 성과를 이루어내었다. 또한 제주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귀농·귀촌인 지원을 2014년에 2,300명, 2015년에 8,000명, 2016년 9,923명 등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2016년 주민체감 생활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슬레이트지붕 철거지원은 932동을 철거 완료하여 목표대비 110%를 달성하였고, 농어촌상수도시설확충사업은 배수지 및 관로지 계획대비 100%의 실적을 이루어냈다. 한림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과 상수도시설 설치도 100% 완료하였다. 광역버스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구형버스 정보단말기 187대를 교체하였고, 해양환경 개선률은 177.4%를 달성하였다.

지역중심지 활력증진을 위해 추진한 2016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한림읍 올레길 정비, 금오를 진입로 확포장공사 등을 완료하였다.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추신촌 문화의집 신축공사, 조천리 지하수관정 개발공사, 애월읍 복지센터 조성공사 등을 완료하였다. 2016년 도시 활력증진사업으로는 이호동 도시활력증진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다. 2017년 도시 활력증진 신규사업으로 '해피바이러스 만개한 봉개공동체 만들기'사업을 공모 및 선정 완료한바 있다. 제주 구 국도건설을 위해 구국도 대체우회도로, 헬스케어타운과 영어교육도시 진입도로 등을 건설하였다.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제주시 지역의 주요 추진현황 및 성과는 다음과 같다. 지역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농촌(한림3리)현장포럼을 운영하여 농림부장관상을 수상하였고, 세계유산권역(선홍2리)을 지정하여 생태공원을 조성하였다. 월령선인장마을, 와흘메밀마을 등을 권역단위 종합개발로, 평대리와 조수1리를 마을단위 종합개발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각각 추진하였다.

제주시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활력제고를 위해 산학융합지구구성사업,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물 응용산업 등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여왔다. 교육여건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기술사관육성사업,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서귀포시 지역의 주요 추진현황 및 성과는 다음과 같다. 지역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농촌현장포럼 14개소 마을에서 운영하였고, 신평리의 폐교를 리모델링하는 등 어멍아방권역사업을 추진하였다.

서귀포시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활력제고를 위해 기계화 경작로 등 농작물 유통여건개선사업,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교육여건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서귀포 여성대학 운영, 행복학습관 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제고

2016년 주요 추진실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중심의 지역대표산업을 육성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지원, 지역특화산업육성을 위한 R&D과제 37개 및 비R&D과제 19개의 선정, 제주 무성분 및 효능분석 14건, 산학협력 기술개발 24개 업체(626백만 원) 등으로 신규 고용창출, 매출극대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산업단지 고도화로 지역 내 산업 선순환구조 조성을 위해 제주가 산학융합지구조성 사업 공모에 응모(2016년)하여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어 2017년부터 53개월 간 약 24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사업의 유치로 지역 내 연구개발-인재양성-고용창출의 선순환구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기반 연구 활성화를 통해 지역혁신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에는 스마트관광, 전기차 인프라 구축, 고부가가치 식품개발연구개발 등을 추진하였다. 특히 지역 내 전기차 보급대수는 최근 3년 간 목표대비 100%를 달성하였다. 세부적으로 2014년 500대, 2015년 1,513대, 2016년 4,000대를 각각 보급하였다.

농산어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690ha),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150ha) 등을 추진하여 FTA체결에 따른 개방화에 대응하여 지역 과실경쟁력제고에 기여하였다. 농작물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제주시 및 서귀포시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을 완료하였고, 순도 높은 우량종자(콩, 맥주보리) 안정적 생산·공급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다.

최근 3년 간 제주지역 내 고용률은 평균 68.6%를 달성하였고, 실업율도 전국 대비 낮은 수준('15년 기준 1.9%)으로 나타났다. 고용률은 연도별로 2014년 67.2%, 2015년 68.9%, 2016년 69.8%를 각각 달성하였다. '15년 기준 경제활동 참가율은 69.2%로 전국평균 62.6%보다 6.6%p 높게 나타났다. 직업이 있는 제주도민의 현재 직업에 대한 만족도 비율은 44.5%로 전년 대비 11% 상승하였고,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제주지역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2년 22.69백만 원, 2013년 23.17백만 원, 2014년 24.24백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소득은 2013년 41.64백만 원, 2014년 42.70백만 원, 2015년 43.81백만 원으로 각각 나타나 전국평균(2013년 34.52백만 원, 2014년 34.95백 원, 2015년 37.21백만 원)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

2016년에는 산학네트워킹 강화를 통해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을 육성하였다. 제주관광대는 모든 학과가 NCS기반 및 현장중심형 교육과정으로 100% 개편하였고, LINK사업 운영에 따른 취업률 67.7%, 해외취업 36명 등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제주한라대는 지역맞춤형 인력양성사업으로 목표대비 122%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제주대학교는 4년 연속 LINK사업평가에서 '매우 우수'를 달성하였다.

일과 학습병행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인재 양성에도 2016년에는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지역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제주관광대는 양성과정 4개 및 향상과정 7개를 개설하였고 양성과정 이수실적은 76.9%, 향상과정 이수실적은 110.1%를 각각 달성하였다. 제주한라대의 경우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17개 정규훈련과정을 개설하였고 1,079명의 훈련실적과 목표대비 122%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100세 시대 지역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위하여 2016년에 행복학습센터 거점 2개소, 읍면 8개소, 프로그램 51개 과정 등을 운영하였다. 서귀포시 여성대학(24주 과정) 운영으로 만족도 88%, 수료율 73%를 각각 달성하였다.

교육과 관련하여 설정한 주요 지표인 지역주민 평생교육경험률은 최근 3년 간 평균 14.1%를 달성하였다. 연도별로는 2014년 15.8%, 2015년 14.7%, 2016년 11.9%를 각각 달성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교육 환경만족도는 5점 척도기준으로 비용측면에서 3.22점, 수준 및 질 측면에서 3.21점, 접근성 측면에서 3.11점으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만족도는 교사와의 관계측면에서 3.37점, 학교시설 및 설비측면에서 3.27점, 학교주변 환경측면에서 3.23점, 전반적인 학교생활에서 3.37점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초중고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을 보여 교육여건이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초등학교는 2013년 14.9명, 2014년 14.5명, 2015년 14.4명이었고, 중학교는 2013년 16.4명, 2014년 15.9명, 2015년 15.1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고등학교는 2013년 16.3명, 2014년 15.9명, 2015년 15.4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4. 지역문화 육성, 생태복원

2016년에는 문화예술예산을 총예산의 3%로 확대 편성하였다. 지역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발전 지원을 위해 문화도시·문화마을조성사업으로 문화플랫폼 조성, 실용적인 콘텐츠 상품개발 사업으로 애니메이션 23편 제작, 동화책 및 봉제인형 5종 등을 제작하였다. 특히 제주해녀문화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킨 것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작가의 산책길은 방문객이 201만명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34%의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2016년도 사업으로 작은도서관 1개소, 생활문화센터 3개소 조성하였다. 생활체육광장 프로그램 운영을 10개소(41,205명)에서 실시하였고, 생활체육지도자 52명을 배치하여 23,593회에 걸쳐 지도하고 종합스포츠클럽 육성으로 9개 종목에 9,331명이 참가하는 실적을 이루어냈다.

2016년도 말 제주방문 관광객 수는 15,800천명으로 전년대비 15.6%가 증가하였다. 그 간 양적 성장을 토대로 2016년부터는 관광의 질적 성장으로 체계를 전환하기 위하여 5개 지표 14개 중점과제를 포함한 질적 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지역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용머리관광지 매립공사 등을 착공하였고, 새별오름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완료하였다.

제주의 생태와 자연환경을 보존·활용하기 위하여 2016년에는 제주다운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 환경자산의 보전관리방안 마련, 제주의 자연가치보전과 관광문화 품격향상을 위한 기반마련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수자원보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하수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였고,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체계를 개선하였다. 자연마당사업으로 쉼터 6개소, 가로수 생육환경조성 5개소(목표대비 137%달성)를 조성하였다.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으로 선흘1리 생태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회의를 5회 실시하였고, 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사업으로 12과제를 수행하였으며, 환경전문기술 인력양성으로 10개 과정을 운영하였다.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제주의 문화환경 만족도는 3년 간 평균 2.93점(5점 척도 기준)을 보이고 있다. 2014~2015년 모두 2.91점, 2016년 2.97점 등 다소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제주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2015년에는 보육 인프라 확충으로 어린이집 신축·매입 2개소, 기자재구입, 장애아 장비구입 등을 추진하였다. 주민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제공, 동사무소를 복지 서비스 제공의 중심으로 그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역 자율형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였다. 농촌고령자 위생여건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급식시설 지원, 복지·문화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등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2016년에는 지역밀착형 복지전달체계구축, 수혜자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시책추진, 취약지역 공공의료체계구축 및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우선 지역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복지의료서비스 만족도 85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정교육대상자 교육 81회(3,504명)를 실시하였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제공의 일환으로 전년(10,291명)대비 8.29%의 증가한 11,135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다음으로 수혜자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시책추진으로는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공공형 어린이집운영,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언어발달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9개소, 360명)에 따른 만족도 85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제공 953명,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언어발달지원 상담지원 217명, 공공형 어린이집운영 114개소 등의 실적을 각각 달성하였다.

세 번째로 취약지역 공공의료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16년에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비 330백만 원 지원, 가상복지관운영, 광역치매센터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등의 성과도 이루어냈다.

사각 없는 지역복지·의료사업 일환의 포괄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 청소년시설확충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자원봉사 등록자수 132,835명, 자원봉사 참여인원 84,667명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의 결과로 이용자 만족도 94%, 가사간병 서비스 6.4%증가, 산모신생아 지원인원 18%의 성과를 각각 이루어 내었다.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으로 프로그램 참가자 증가를 1.8%, 참가자 만족도 93%의 성과가 나타났다.

제4절 향후 추진계획 및 과제

2017년 주요 제주생활권 활성화정책으로는 지역주도 협력사업 확충, 주민체감 생활 인프라 확충, 지역중심지 활력증진, 지역 교통·물류망 개선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지역주도 협력사업 확충을 위해 제주행복생활권 공간발전과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지원체계구축, 자생능력제고 및 마을전문가 육성을 위한 지역주민역량강화, 권역단위 종합개발을 통한 지역주민공동체 활성화 구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과 연계한 지역주도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주민체감 생활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지역주민맞춤형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주민수요조사, 현장탐방 및 지역주민 민원 등에 기반한 주민불편 해소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중심지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소도읍을 중심으로 농어촌지역의 발전거점 공간 육성, 읍면지역 주민들의 정주서비스 기능제공 확대, 선도사업과 연계한 도시재생 추진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제주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중심의 지역대표산업육성, 산업단지 고도화로 지역 내 산업 선순환구조 조성, 지역기반 연구활성화로 지역혁신 산업생태계조성, 농산어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지역대표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내 주요 전략산업과 ICT 및 SW융합을 통한 기술고도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산업 선순환구조를 조성하기 위해 6차 산업형 비즈니스 네트워킹 허브구축 및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셋째로 지역혁신 산업생태계조성을 위해 지역 연구개발 지원 전담조직 운영을 통한 지역연구개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농산어업 경쟁력강화를 위해 FTA 체결에 따른 개방화에 대응하여 산업경쟁력제고, 제주형 친환경 농수산업육성, 농업생산성 향상, 우량종자 전략적 생산·보급, 명품축산물 공급기반 구축, 향토산업 브랜드화, 농업의 관광과 연계한 6차 산업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여건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주요정책으로 산학네트워킹 강화를 통해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육성, 일과 학습병행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평생학습체계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지역 내 대학원 연구역량강화, 산업현장수요 맞춤형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청년

취업률 향상을 위한 사회맞춤형 지역 내 선도사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일과 학습병행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재직자 및 미취업자 대상의 맞춤형 양성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평생교육시설의 접근성강화, 여성대학, 평생교육단과대학 운영활성화, 제주형 평생교육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문화융성 및 생태복원을 위한 주요정책으로 지역문화역량강화 및 특성화 발전 지원, 문화격차해소, 지역관광산업육성, 생태·자연경관 보존·활용 등에 초점을 맞춰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지역문화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관련 예산을 집중(총예산의 2.86%)하고 문화예술보조금 지원체계를 개선하며 디지털콘텐츠를 활용한 지역문화콘텐츠산업활성화 사업, 지역문화기반 실용적 콘텐츠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문화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다접점 문화향유 공간확대, 문화취약계층 접근성 확대, 창의적 융합문화개발 등을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사각 없는 지역복지·의료를 위한 제주생활권 주요정책으로 지역밀착형 복지전달체계구축, 맞춤형 복지시책추진, 공공의료체계구축 등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지역밀착형 복지전달체계구축을 위해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설확충, 주민정신건강지원확대사업, 주민통합건강증진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맞춤형 복지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장애인의 개별 맞춤형 복지서비스제공,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언어발달 서비스제공, 청소년 자립역량배양,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의료체계구축을 위해 의료서비스 접근성증진, 응급의료체계구축, 공공의료체계정비, 주민통합건강증진, 주민정신건강지원 확대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7년 주요정책 추진방향을 산업분야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경제일자리 분야는 도민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상승에 중점을 두고자하며, 문화예술분야는 제주의 문화정체성을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다음으로 복지분야는 평등과 가축친화적 정책,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개선을 발굴하고자 한다. 셋째, 농정분야는 과학영농기반구축, 수산분야는 조수입 1.5조원(2020년)시대를 개막하고자 한다. 넷째, 생활인프라는 인구 100만 시대를 대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한다. 다섯째, 환경분야는 제주환경자산 보존 및 관광문화품격상승에 방향을 맞추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관광분야는 생태관광, 마을연계 농촌관광 등 질적 성장전인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